



새로운 희망, 담대한 비전

경 기 비 전

2040

GYEONGGI VISION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는 긴 터널에서 탈출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는 2034년을 정점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주력 산업과 도내 글로벌 기업들의 위기 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도민들의 생각과 가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족과 경제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가치, 기회가 균등한 사회, 삶의 여유와 행복한 삶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새로운 통신기술과 디지털화된 에너지, 운송 수단 등이 결합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초래될 3차 산업 혁명”을 강조하며, “2040년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인류 전체가 공유를 통해 글로벌화 된 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래사회는 경제와 생산, 소비, 이동 등 모든 면에서 큰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정책과 시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비전 2040」은 향후 25년 후의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가올 10년, 2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기존의 계획이 주로 전문가가 주도한 미래비전이었다면, 이번 비전은 도민들의 생각과 가치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탁에 둘러앉아 함께 고민, 진단하고 토론했으며, 그 결과 도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만들고, 도민의 희망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의회 의원, 도·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등 새로운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표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비전 2040」이 미래비전이라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생각과 아이디어가 더 큰 희망을 열 수 있습니다. 도민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한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경기비전 2040」을 수립하기까지 많은 도움과 깊은 열정을 보내주신 도민, 도의회, 각 분야 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과 경기연구원 연구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편 개요	1
제1절 왜 2040 비전인가?	3
제2절 무엇을 담을 것인가?	7
제3절 어떻게 만들 것인가?	10
제2편 총론편	13
제1장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15
제1절 경기도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15
제2절 경기도 미래에 대한 전망	18
제3절 경기도의 미래 위기요인	27
제2장 도민의 여망과 도민이 보는 미래	28
제1절 도민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도민의 미래의식	28
제2절 도민·사회단체 참여단을 통해 나타난 경기도 미래상	31
제3절 핵심집단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 미래상	33
제4절 도의회, 도 실·국, 도의회, 시·군 워크숍에서 나타난 경기도 미래상	34
제3장 미래 시나리오	35
제1절 시나리오 설정	35
제2절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 시나리오	38
제4장 총론 비전과 전략	39
제1절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	39
제2절 총론 비전과 전략	41
제5장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50
제1절 지역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한 GRDP N+1% 전략	50
제2절 경기도형 사회통합모형을 통한 사회통합의 행복공동체 형성 전략	57
제3절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하여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63
제3편 부문편	67
제1장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69
제1절 경제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71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75
제3절 혁신경제 비전과 전략	84
제4절 경제 부문 아젠다별 추진 전략	89
제2장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	119
제1절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121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135
제3절 사회통합과 복지 비전과 전략	143
제4절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149

목 차

제3장 교육혁신·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	179
제1절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181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196
제3절 교육·문화·관광의 비전과 전략	204
제4절 교육·문화·관광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209
제4장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235
제1절 공간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237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241
제3절 공간 비전과 전략	250
제4절 공간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254
제5장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285
제1절 교통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287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293
제3절 교통 비전과 전략	306
제4절 교통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311
제6장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333
제1절 환경·에너지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335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341
제3절 환경·에너지 비전과 전략	351
제4절 환경·에너지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356
제7장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383
제1절 남북관계 및 북부접경지역의 여건과 제약점	385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391
제3절 통일과 북부발전 비전과 전략	405
제4절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의 아젠다별 추진전략	410
제8장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423
제1절 지방행정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425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431
제3절 지방행정 부문의 비전과 전략	434
제4절 지방행정 부문의 아젠다별 추진전략	438

제4편 실천전략 453

제1장 비전의 실행체제 구축	455
제1절 2040 비전의 실행을 위한 추진방향	455
제2절 비전의 실행을 위한 조직 및 평가체제 구축	457
제2장 추진 일정	458
제3장 소요자원 추계	467

그림 목차

[그림 1-1-1]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추이와 전망	3
[그림 1-1-2] 주력기업에 의존적인 지역경제와 대도시의 비중이 큰 재정	4
[그림 1-1-3] 경기비전 수립의 필요성과 의의	6
[그림 1-2-1] 미래비전 설정과 중장기 전략 준비	7
[그림 1-3-1] 참여형 미래비전 만들기를 위한 연구진행 연혁	11
[그림 2-1-1] 경기도의 인구 피크 도달과 노령인구 전망	18
[그림 2-1-2] 경기도 잠재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19
[그림 2-1-3]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전망	19
[그림 2-1-4] 경기도의 집단별 고용률 추이	21
[그림 2-1-5] 수도권과 경기도의 표준화 사망률	21
[그림 2-1-6] 수도권의 교통접근성의 시뮬레이션과 장래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형성	21
[그림 2-1-7] 2013~2040 기간 인구증감전망	22
[그림 2-1-8] 중국경제추세	23
[그림 2-1-9] 경기도를 둘러싼 3가지 대외 전망	23
[그림 2-1-10] 민선6기에서 추진되는 공동체 관련 사업의 영향	26
[그림 2-1-11] 경기도의 미래 위기요인	27
[그림 2-2-1] 경기도가 직면하게 될 문제	29
[그림 2-2-2] 도민이 생각하는 2040년의 가장 중요한 가치	29
[그림 2-2-3]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2040년 경기도의 미래상	30
[그림 2-2-4]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2030년과 2040년 경기도의 미래상 비교	30
[그림 2-2-5]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 결과에서 나온 도민들의 소망	31
[그림 2-2-6]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 모습	32
[그림 2-2-7] 차세대 청소년 핵심집단인터뷰 결과	33
[그림 2-2-8] 도의회, 경기도 실·국, 시·군 워크숍 논의 결과	34
[그림 2-3-1] 경기도 미래의 4가지 시나리오	37
[그림 2-3-2] 경기비전 2040의 미래 희망 시나리오	38
[그림 2-4-1]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	40
[그림 2-4-2] 단계별 미래상과 2040 비전 설정	42
[그림 2-4-3] 경기비전 2040의 총론 비전과 전략	44
[그림 2-4-4] 총론 비전의 미래상	45
[그림 2-4-4] 공간 부문, 교통 부문, 환경·에너지 부문의 2040 미래상	48
[그림 2-4-5] 경제 부문의 2040 미래상	49
[그림 2-5-1]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추이와 전망	50
[그림 2-5-2]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구상	51
[그림 2-5-3] 스타트업 시티 건설의 기본방향	52
[그림 2-5-4] 공유적 시장경제의 접근 방식	53
[그림 2-5-5] 경기순환철도망 건설 구상	54

그림 목차

[그림 2-5-6] 도시의 미래상 구상	55
[그림 2-5-7] 우리나라의 빈곤율과 소득격차 추이	57
[그림 2-5-8] 가구 월평균 소득 현황과 소득 배분지표	57
[그림 2-5-9]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모형	58
[그림 2-5-10] 평생교육 기회균등 실현 체계	59
[그림 2-5-11] 건강장수도시 지표분석 (수도권 3개 시·도 비교)	60
[그림 2-5-12] 에너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62
[그림 2-5-13] 고령화 추세 비교(남·북한, 기개발국과 저개발국, 세계)	63
[그림 2-5-14] 임진강 수계 종합 수자원이용체계 구상도	64
[그림 2-5-15] 금강산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및 개발 구상도	65
[그림 2-5-16]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66
[그림 3-1-1] 경기도 경제성장 추이	71
[그림 3-1-2] 경기도 민간소비 및 고정자본형성 추이	71
[그림 3-1-3] 경기도 시·군별 GRDP(2010~2012)	73
[그림 3-1-4] 경기도 시·군별 1인당 부가가치생산(2010~2012)	73
[그림 3-1-5] 경기도 고용탄력성 추이	74
[그림 3-1-6] 전국 시·도 고용탄력성 현황(2013년)	74
[그림 3-1-7]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천 명)	74
[그림 3-1-8] 경기도 청년층 고용률	74
[그림 3-1-9]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전망(천 명)	77
[그림 3-1-10]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비중(%)	77
[그림 3-1-11] 생산구조 전망	79
[그림 3-1-12] 부가가치생산구조 전망	79
[그림 3-1-13] 고용구조 전망	79
[그림 3-1-14] 경기도 중장기 과제	83
[그림 3-1-15] 경제 부문 미래 시나리오	84
[그림 3-1-16]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85
[그림 3-1-17] 경제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86
[그림 3-1-18] 경제 부문 비전·목표·전략	87
[그림 3-1-19] 전국 및 경기도 GRDP 성장률	89
[그림 3-1-2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지원 내용 및 성과	91
[그림 3-1-21] 스타트업 성장단계	93
[그림 3-1-22] 창업플랫폼의 기능	94
[그림 3-1-23] 스타트업시티 개념도	95
[그림 3-1-24] 디지털 방송문화 클러스터 구상도	97
[그림 3-1-25] 섬유·패션 산업클러스터 구상도	98
[그림 3-1-26]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례	102
[그림 3-1-27] 관광농원 사례	102
[그림 3-1-28]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노동생산성 격차(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103
[그림 3-1-29] 대기업 리더십을 통한 경기도 동반성장 협의체(안)	105
[그림 3-1-30] 우수 노사관계 모델 구축 및 확산 지원	107

그림 목차

[그림 3-1-31] 경기북부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109
[그림 3-1-32]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안)	110
[그림 3-1-33] 주요 목표 계획	111
[그림 3-1-34] 공공-민간부문의 공공서비스 공동창조 과정	112
[그림 3-1-35] 경기도-중국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확대방안 개념도	116
[그림 3-1-36]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방안	118
[그림 3-2-1] 경기도 여성의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121
[그림 3-2-2] 한국의 1인 가구 추이	122
[그림 3-2-3] 경기도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추세	123
[그림 3-2-4] 경기도 거주 등록외국인 추이, 2005~2014	123
[그림 3-2-5] 경기도의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정 자녀수 추세	124
[그림 3-2-6]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와 경력단절 요인	128
[그림 3-2-7] 비정규직 비율의 남녀 차이 (단위: %)	128
[그림 3-2-8] 한국의 기형아 및 저체중 출산 추이	129
[그림 3-2-9] 경기도 고령인구 비율	130
[그림 3-2-10]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직업 분포 추세	131
[그림 3-2-11] 경기도민의 다문화의식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태도	131
[그림 3-2-12] 경기도 공공분쟁 유형, 1990~2012	132
[그림 3-2-13] 경기도의 인구구성 변화 및 향후 전망	135
[그림 3-2-14] 한국인 기대수명 예측 변화, 1990~2030	136
[그림 3-2-15] 65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	137
[그림 3-2-16]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전망	137
[그림 3-2-17] 시·군·구별 가구당 인구수의 커널밀도합수	138
[그림 3-2-18] 2010년 출생자의 예상되는 결혼지위 변화 (단위: %)	139
[그림 3-2-19] 지역화폐로 연결되는 지역순환체계 모형	140
[그림 3-2-20]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미래 시나리오	143
[그림 3-2-21]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145
[그림 3-3-22]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비전·목표·전략	147
[그림 3-2-23] 노인 경제활동 장려 캠페인	152
[그림 3-2-24] 같음과 차이를 인정한 성평등 실현	154
[그림 3-2-25] 성별 고용 격차 해소	154
[그림 3-2-26] 경기도 외국인 인구 비중 추세와 전망(2009~2040)	157
[그림 3-2-27] 다문화인식개선사업	158
[그림 3-2-28] 경기도 공동체의 설립연도별 현황 및 예상 누적 공동체	163
[그림 3-2-29] 커뮤니티센터 중심의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모형	164
[그림 3-2-30]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형태 및 현황	165
[그림 3-2-31] 통영시 독거노인 대상 지능형 홈 U-건강복지센터	171
[그림 3-3-1] 경기도 합계출산율 및 학령인구 변화 추이	182
[그림 3-3-2]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현황(좌), 권역별 현황(우)	182
[그림 3-3-3] 경기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84

그림 목차

[그림 3-3-4] 2014년 경기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185
[그림 3-3-5] 중고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185
[그림 3-3-6]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186
[그림 3-3-7]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187
[그림 3-3-8] 경기도 평생교육기관 현황	188
[그림 3-3-9] 평생교육참여율 비교	188
[그림 3-3-10] 경기도 주요 문화시설 현황	189
[그림 3-3-11] 지역 간 교육격차 전개 과정	193
[그림 3-3-12] 미래형 교실 및 전자칠판	198
[그림 3-3-13] 교육·문화·관광 부문 중장기 과제	203
[그림 3-3-14] 교육 부문 미래변화 시나리오	204
[그림 3-3-15] 패러다임 변화	205
[그림 3-3-16]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206
[그림 3-3-17]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비전·목표·전략	207
[그림 3-3-18] 평생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및 전면 무상화 구축전략	215
[그림 3-3-19] 세종테마파크 구상	223
[그림 3-3-20] 감성서비스 및 스마트 관광 지원 강화 추진전략	229
[그림 3-3-21] 국내·외 관광객 목표현황	232
[그림 3-3-22] K-Culture Valley 조성 기본전략	233
[그림 3-3-23] 휴먼웨어 인프라 구축 기본전략	234
[그림 3-4-1] 표준화된 사망률	239
[그림 3-4-2] 건강도시 지수	239
[그림 3-4-3] 간판 및 도시건축물	240
[그림 3-4-4] 지역유형별 인구 변화	241
[그림 3-4-5] 수도권의 시·군·구별 창조산업 종사자수의 집적 현황과 분포	242
[그림 3-4-6] 2020 서울시청 출발 도착시간 분포	243
[그림 3-4-7] 전화 통화량	243
[그림 3-4-8] 미래공간 형성의 영향변수들	247
[그림 3-4-9] 경기도 공간의 미래변화 시나리오	248
[그림 3-4-10] 긍정적인 도시미래상과 비관적인 도시미래상	249
[그림 3-4-11]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50
[그림 3-4-12] 공간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251
[그림 3-4-13] 공간 부문 비전·목표·전략	252
[그림 3-4-14] 바르셀로나의 22@Barcelona 프로젝트 구상	256
[그림 3-4-15]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도시거점과 통일미래도시 건설 제안	262
[그림 3-4-16] 건강·장수도시 인프라의 구축	264
[그림 3-4-17] 경기도 범죄 발생지와 전체 범죄 및 범죄예방형설계 관련 범죄 건수	268
[그림 3-4-18] 안전대동여지도의 개념도	269
[그림 3-4-19] 시흥시 셉테드 로드맵(예시)	270
[그림 3-4-20] 거주민의 범죄예방시설 인식도 조사	270
[그림 3-4-21] 주동 및 보행로 표준설계(안)	270

그림 목차

[그림 3-4-22] 도·농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272
[그림 3-4-23]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 사례	273
[그림 3-4-24] 경기도 도시디자인 관리 기본방향	274
[그림 3-4-25] 따복마을 공급 체계도	279
[그림 3-4-26] MDB 조달사업 구조	283
[그림 3-5-1]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287
[그림 3-5-2] 광역버스 차내 혼잡 현황	288
[그림 3-5-3] 버스관련 민원 건수 추이	288
[그림 3-5-4] 경기도 철도역 접근시간(분) 비교	292
[그림 3-5-5] 서울시와 경기도의 순이동인구수 변화	293
[그림 3-5-6] 수도권 가구 구성의 전망	294
[그림 3-5-7]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만 대)	295
[그림 3-5-8] 자가용 이용 전망(일반인)	295
[그림 3-5-9] 자가용 이용 전망(전문가)	295
[그림 3-5-10] 수송 부문 이산화탄소(CO ₂) 배출량	296
[그림 3-5-11] 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CO ₂) 배출량	296
[그림 3-5-12] 경기도 종합계획의 교통부문 목표	296
[그림 3-5-13] 경기도 교통약자 추세 및 구성비	298
[그림 3-5-14]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298
[그림 3-5-15]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및 유형	298
[그림 3-5-16]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변화	299
[그림 3-5-17] 통행목적별 점유율(%)	299
[그림 3-5-18]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99
[그림 3-5-19]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99
[그림 3-5-20] 연도별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현황	300
[그림 3-5-21] OECD 주요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300
[그림 3-5-22] 현대·기아차의 무인자동차	300
[그림 3-5-23]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 전망	301
[그림 3-5-24] 스마트 하이웨이 구상도	301
[그림 3-5-25] 스마트 하이웨이 시범구간	301
[그림 3-5-26] 접경지역 도로망 현황	305
[그림 3-5-27] 교통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08
[그림 3-5-28] 교통 부문 비전·목표·전략	309
[그림 3-5-2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및 연장(안)	312
[그림 3-5-30] 수도권 KTX 서비스 확대 사업	312
[그림 3-5-31] 경기 순환철도망 개념도	314
[그림 3-5-32]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315
[그림 3-5-3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316
[그림 3-5-34]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316
[그림 3-5-35] 경기도 굿모닝 버스 정책	317
[그림 3-5-36] 미래의 대중교통 모습	318

그림 목차

[그림 3-5-37] 현대차 자율자동차 기술동향	319
[그림 3-5-38] 무인자동차로 인한 미래	320
[그림 3-5-39] 경기도 저상버스, 장애인 택시 도입 계획	321
[그림 3-5-40]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개념도	322
[그림 3-5-41] 경기도 북부 고속도로망 사업	324
[그림 3-5-42] 경기도 북부 철도망 사업	324
[그림 3-5-43] 동서 평화고속화도로 건설	325
[그림 3-5-44] 경기도 남북철도 네트워크 연결	326
[그림 3-5-45] 김포~개성 도로 연결 사업	326
[그림 3-5-46] 경기도 공유 교통 서비스의 도입	328
[그림 3-5-47] 경기도 스마트워크의 미래 모습	330
[그림 3-5-48] 소형 개인 이동수단 도입	331
[그림 3-5-49] 물류 서비스의 미래	332
[그림 3-6-1] 우리나라 환경성과지수 및 삶의 질 지수	335
[그림 3-6-2]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환경성 질환	336
[그림 3-6-3] 경기도의 환경자원 소비량	337
[그림 3-6-4] 경기도의 전력자립도와 전력소비량	337
[그림 3-6-5] 경기도 연평균 기온 변화 추이 및 극한기후 현상 체감 인식	338
[그림 3-6-6] 경기도 환경서비스의 지역 간 분포	339
[그림 3-6-7] 경기도 환경서비스의 지역 간 분포	340
[그림 3-6-8] 구글 검색어 통계로 본 대한민국 환경 관심도	341
[그림 3-6-9] 증가하는 환경 규제와 다변화하는 환경 관심사	342
[그림 3-6-10] 경기도 기후변화 전망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도민 인식	343
[그림 3-6-11] 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시장 규모 전망	345
[그림 3-6-12] 경기도 에너지 수요 전망	345
[그림 3-6-13]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346
[그림 3-6-14] 수소경제사회의 패러다임	347
[그림 3-6-15]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의제와 실행을 위한 핵심 요인	348
[그림 3-6-16] 환경·에너지 부문 미래변화 시나리오	352
[그림 3-6-17] 환경·에너지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53
[그림 3-6-18] 환경·에너지 부문 비전·목표·전략	354
[그림 3-6-19] 대기오염 취약지역	357
[그림 3-6-20]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략	359
[그림 3-6-21] 미국 플로리다주 지반함몰 위험지도	359
[그림 3-6-22] 미국 커뮤니티 지원 농업 분포, 영국 쿡킹 버스(cooking bus)	361
[그림 3-6-23] 일본 방재공원 조성 개념도	362
[그림 3-6-24] 경기도 생물산업지원센터 조성방안	365
[그림 3-6-25] 주요지표 목표현황	366
[그림 3-6-26] 자원순환 초록마을 현황도	367
[그림 3-6-27] 경기도 폐자원 에너지 활용도	367
[그림 3-6-28] 네덜란드 태양광 자전거 도로	372

그림 목차

[그림 3-6-29] 시화호 에너지 클러스터 구상(안)	372
[그림 3-6-30] 스마트그리드	373
[그림 3-6-31] ICT 기술기반 수재해 대응체계	375
[그림 3-6-32] 규제 순응을 위한 인터넷 기반 지원시스템	378
[그림 3-6-33] 국가 기반시설과 하위부문 (예)	380
[그림 3-6-34] 대체재 시스템 수립방안(안)	380
[그림 3-7-1] 남북교역 규모 추이	385
[그림 3-7-2]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 규모 추이	385
[그림 3-7-3] 남북교역과 북중교역 규모 비교	386
[그림 3-7-4]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386
[그림 3-7-5] 통일의 필요성	387
[그림 3-7-6]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387
[그림 3-7-7] 독일주민의 독일통일 20년 평가	388
[그림 3-7-8] 독일주민의 통일 이후 개별적 경제 상황 평가	388
[그림 3-7-9] 독일 주민의 소득동일화 시점 예상	388
[그림 3-7-10] 독일 주민이 보는 통일 이후 독일	388
[그림 3-7-11] 대륙과의 육상연계 및 에너지망 연계	389
[그림 3-7-1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390
[그림 3-7-13] 통일의 시급성	390
[그림 3-7-14] 중·일 무역규모 추이	391
[그림 3-7-15] 아시아 국가 국방비 추이	391
[그림 3-7-16] 중국 동북진흥계획	392
[그림 3-7-17]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진출전략	392
[그림 3-7-18] 2025 극동개발계획 개요 및 부문별 투자액	393
[그림 3-7-19] 남북한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구성(2013년)	394
[그림 3-7-20] 생산가능인구 비중	394
[그림 3-7-21] 65세 이상 인구 비중	394
[그림 3-7-22]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유형과 북한	395
[그림 3-7-23] 통일 시나리오	396
[그림 3-7-24]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	397
[그림 3-7-25] 아시아 고속도로망	398
[그림 3-7-26]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노선도	398
[그림 3-7-27] 한반도 초고속 간선교통망 구축 개념	399
[그림 3-7-28]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400
[그림 3-7-29] 한반도 인프라 회랑 예상도 및 경기 북부 연계(개성-해주 프로젝트) 구상도	400
[그림 3-7-30] 한반도 중심부 발전 구상	401
[그림 3-7-31] 한반도 서해안권 공간적 발전구도	402
[그림 3-7-32] 동북아 발전축	402
[그림 3-7-33] 통일시대 한반도 환경골격	403
[그림 3-7-34] 남북 한강·임진강댐	403
[그림 3-7-35] 한반도경제통합으로 인한 국토 변화 전망	404

그림 목차

[그림 3-7-36] 한반도경제통합 시 북한주민 체류 예상지역 전망	404
[그림 3-7-37] 통일 부문 미래변화 시나리오	405
[그림 3-7-38]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 준비	406
[그림 3-7-39] 통일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407
[그림 3-7-40] 통일 시나리오와 비전·전략 수립의 전제	408
[그림 3-7-41] 통일준비를 위한 시나리오와 경기도의 비전·목표·전략	409
[그림 3-7-42] 경기북부-북한 거점지역 연계 개념도	414
[그림 3-7-43] 통일경제특구에서 경제통합특별지대로의 발전모형	415
[그림 3-7-44] 접경지역 남북 산업연계 개념도	416
[그림 3-7-45] DMZ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요구와 전망	417
[그림 3-7-46] 비무장지대 활용을 위한 통일 전후의 단계적 접근	418
[그림 3-7-47] 휴양·관광·생태·체험 벨트	419
[그림 3-7-48] 연천 태풍전망대 일원의 철조망과 순찰로	419
[그림 3-7-49] 접경지역관리협의회 단계적 발전 구상	422
[그림 3-7-50] 공공외교의 진행과정	422
[그림 3-8-1] 국가와 지방의 사무 구분	426
[그림 3-8-2] 지방이양 추이	427
[그림 3-8-3] 통합재정 수입 현황(2014년)	427
[그림 3-8-4] 통합재정 지출 현황(2014년)	427
[그림 3-8-5] 지방세 증가율(전년 대비)	428
[그림 3-8-6] 지방교부세 증가율(전년 대비)	428
[그림 3-8-7]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각 연도 결산 기준)	428
[그림 3-8-8] 국세,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428
[그림 3-8-9]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부담률	429
[그림 3-8-10] 자체사업 대 보조사업 비중	429
[그림 3-8-11] 사회복지 비중	429
[그림 3-8-12] 분권교부세 사업 지방부담	429
[그림 3-8-13] 지방세제 개편 추이	430
[그림 3-8-14] 경기도 재정 수입 지출 현황(2014년)	432
[그림 3-8-15] 경기도 보조사업 비중	433
[그림 3-8-16] 경기도 사회복지사업 비중	433
[그림 3-8-17] 경기도 세출요인 변화 추이	433
[그림 3-8-18] 중앙과 지방 간 협의기구	434
[그림 3-8-19] 지방행정 부문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436
[그림 3-8-20] 지방행정 부문 비전·목표·전략	437
[그림 3-8-21] 도민-지방의회-집행기관의 상생모델	452
[그림 4-1-1] 미래전략 수립과 추진체제 구축 프레임	456

표 목차

[표 1-1-1]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과 성과분석	5
[표 1-1-2]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동북아의 선택 경기-」의 주요 내용과 성과분석	5
[표 2-1-1] 기간별 실질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전망	15
[표 2-1-2] 경기도를 둘러싼 경제, 사회, 공간 트렌드와 영향	16
[표 2-1-3] 경기도를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	17
[표 2-1-4] 경기도 인구 및 연령별 구조 전망	18
[표 2-1-5] 경기도 잠재성장률 전망	19
[표 2-1-6]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와 전망	19
[표 2-1-7]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	20
[표 2-1-8]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 추진현황	24
[표 2-1-9] 민선6기 핵심사업의 기반구축 투자비와 생산·운영효과	25
[표 2-3-1] 경기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유형화	35
[표 2-3-2]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할 4가지의 동인과 그 영향변수들	36
[표 2-4-1]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점과 모니터링 지표로서 미래지표 설정	46
[표 2-5-1] 남북 경제통합 특별지대 조성 방안.....	64
[표 3-1-1] 경기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10대 업종 변화.....	72
[표 3-1-2] 경기도 산업별 노동생산성 및 전국 순위	72
[표 3-1-3]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77
[표 3-1-4] 한국의 GDP 및 1인당 GDP 전망	77
[표 3-1-5] 전국 및 경기도 잠재성장률 전망(%)	78
[표 3-1-6] 2040년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핵심기술.....	80
[표 3-1-7] 미래 신성장산업 성과지표 및 목표.....	90
[표 3-1-8] 경기도 10대 미래 유망산업 및 특화권역	90
[표 3-1-9]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 목표	96
[표 3-1-10] 농업의 6차 산업화 목표 지표	101
[표 3-1-11] 노사 파트너십 목표 지표	106
[표 3-1-12] 균형발전 목표 지표.....	108
[표 3-1-13] 경기북부 넥스트 산단과 일반 산단 비교.....	109
[표 3-2-1] 경기도민의 기대수명, 2005~2011 (단위: 년).....	122
[표 3-2-2]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유형과 추세	125
[표 3-2-3] 경기도민의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125
[표 3-2-4] 경기도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 출산율, 1997~2013	127
[표 3-2-5] 경기도 주요 입지갈등 사례	133
[표 3-2-6] 남양주시의 주요 지역사회 문제	133
[표 3-2-7] 경기도의 정체성 부재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경기도민의 의견	134
[표 3-2-8]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미래 경기도의 모습	162
[표 3-2-9] 복지역량 강화 지표	172

표 목차

[표 3-3-1] 전국 학령인구 변화 추이	181
[표 3-3-2] 교원 1인당 학생 수	183
[표 3-3-3] 어린이집 설치현황	183
[표 3-3-4]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184
[표 3-3-5]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186
[표 3-3-6]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의사소통만족도	186
[표 3-3-7] 외래 관광객의 한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94
[표 3-3-8] 외래 관광객의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195
[표 3-3-9]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197
[표 3-3-10] 교육·문화·관광 부문 미래지표의 설정	208
[표 3-3-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표	209
[표 3-3-12]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지표	211
[표 3-3-13] 평생교육 지표	213
[표 3-3-14] 인성교육 강화 지표	216
[표 3-3-15] 존중력 교육 지표	218
[표 3-3-16] 문화예술 지표	220
[표 3-3-17] 생활·문화·체육 지표	222
[표 3-3-18] 실버관광 지표	226
[표 3-3-19] 감성 서비스와 스마트 관광 지표	228
[표 3-3-20] 문화유산 지표	230
[표 3-3-21] 문화 및 관광 지표	233
[표 3-4-1] 경기도 인구 및 연령별 구조 전망	237
[표 3-4-2] 도시재생사업단(2010)의 도시규모별 쇠퇴 유형 분석 결과	238
[표 3-4-3] 지역별 주택유형비율 추세	238
[표 3-4-4] 경기도 이사 희망 주택유형	244
[표 3-4-5] 공간 부문 미래지표의 설정	253
[표 3-4-6] 창조도시 지표	254
[표 3-4-7] 창조산업 허브 개념을 통한 창조도시 육성 전략	255
[표 3-4-8]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 형성전략 추진	258
[표 3-4-9] 2014년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266
[표 3-4-10] 여성친화 공간조성 사업표	267
[표 3-4-11] 동북부 특화발전 지표	271
[표 3-4-12] K-디자인 빌리지 조성 사업비	275
[표 3-4-13] 주거 지표	278
[표 3-4-14] 광역생활권 지표	280
[표 3-4-15] 생활권별 필요시설의 배치 기준 사례	281
[표 3-4-16] 해외개발협력 지표	282
[표 3-5-1] 수도권 교통수단별 분담률(2013)	288
[표 3-5-2] 전기차 보급 현황(2014년 9월)	289
[표 3-5-3] 2013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	289

표 목차

[표 3-5-4] 지역별 도로 인프라 현황	290
[표 3-5-5] 국외 대도시권과 국내 수도권 철도시설 비교	291
[표 3-5-6] 경기도 지역별 도로 연장	291
[표 3-5-7] 수도권 광역통행 현황	293
[표 3-5-8] 미국 가구소득별 통행발생 현황	294
[표 3-5-9] 수도권 인구와 통행발생량 비교	294
[표 3-5-10] 자동차 보유대수 비교('13년 12월)	295
[표 3-5-1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목표치	296
[표 3-5-12] 도시 근로가구 소득수준별 대중교통 이용 현황	297
[표 3-5-13] 전국 교통약자 현황	297
[표 3-5-14] 자율주행차 시장 예측	301
[표 3-5-15] 경기도민 지역별 평균 출근 시간	302
[표 3-5-16] 경기도민 수단별 평균 출근 시간	302
[표 3-5-17] 이용자 버스서비스 평가결과	303
[표 3-5-18] 전국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2013년 말 기준)	303
[표 3-5-19] 전국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2013년 말 기준)	303
[표 3-5-20] 경기도 공영 및 벽지노선 운행손실액 보전비율(2012)	304
[표 3-5-21] 충전인프라 지역별 현황(2014년 9월 말 기준)	304
[표 3-5-22] 교통 부문 미래 시나리오 전망	306
[표 3-5-23] 연도별 고속철도 개통사업	311
[표 3-5-24] 연도별 순환철도망 관련 노선	313
[표 3-5-25] 연도별 고속도로 관련 노선	315
[표 3-5-26]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	317
[표 3-5-27] 대중교통의 패러다임 전환	318
[표 3-5-28] 자율주행차 비율	319
[표 3-5-29] 이동편의공사 사업 대상	321
[표 3-5-30] 경기 북부 신규 철도 및 도로 연장	323
[표 3-5-31] 통일 대비 교통 인프라 확보	325
[표 3-5-32] 카셰어링 분담률	327
[표 3-5-33] 스마트워크 비중	329
[표 3-5-34]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331
[표 3-6-1] 환경서비스 지표	356
[표 3-6-2] 환경 안전 지표	358
[표 3-6-3] 생활환경 조성 지표	360
[표 3-6-4]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지표	363
[표 3-6-5]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국내 생물자원산업 파급효과 (환경부 발표)	364
[표 3-6-6] 자원순환 지표	366
[표 3-6-7] 수생태계 관리 지표	369
[표 3-6-8] 유럽물관리지침(WFD)의 지표수 감시모니터링 주기 규정	370
[표 3-6-9] 에너지 자립 지표	371
[표 3-6-10] 기후변화 대비 지표	374

표 목차

[표 3-6-11] 환경관리 지표	377
[표 3-7-1]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	387
[표 3-7-2] 기관별 통일비용 추정	390
[표 3-7-3] 고령화 속도 비교	394
[표 3-7-4] 수도와 경제중심지, 인구최대도시의 다양한 형태	411
[표 3-7-5] 남북 경제통합 특별지대(안).....	413
[표 3-7-6] 시기 구분에 따른 단계 설정.....	415
[표 3-8-1] 중앙과 지방사무의 비율	425
[표 3-8-2] 중앙정부의 사무이양 추이	426
[표 3-8-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예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추진사항(2015)	439
[표 3-8-4] 지방분권형 개헌안 예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 연구용역 결과(2015) ...	440
[표 3-8-5] 우리나라 대도시 행정특례의 기준	441
[표 3-8-6] 사무배분기준 보완.....	443
[표 4-1-1] 비전 2040 실천을 위한 실·국별 실행계획 수립 예	455

제 1 편 개 요

제1절 | 왜 2040 비전인가?

제2절 |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3절 |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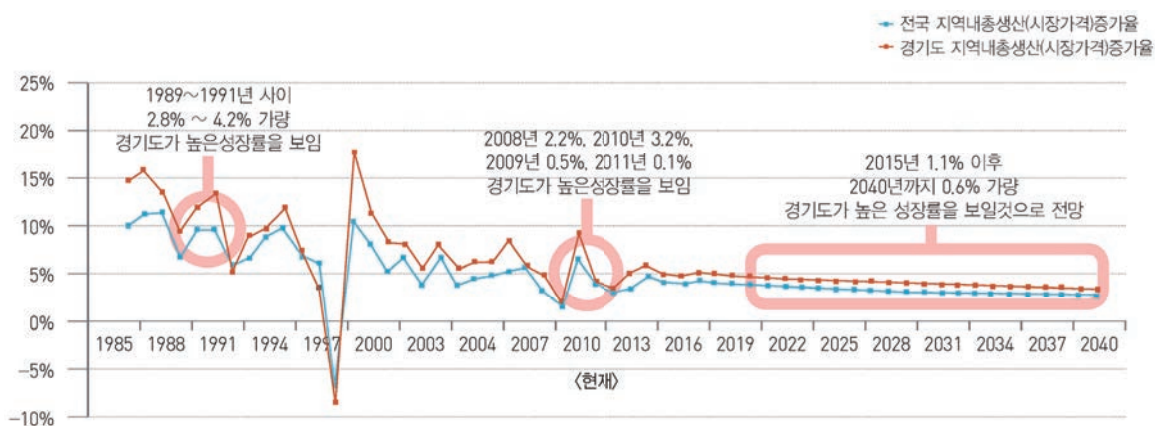
왜 2040 비전인가?

“너희들이 발 밑만 보고 걸을 때 나는 먼 길을 보고 걸었을 뿐이야” - 하르세 윌슨 (미국 작가)

1. 현 시점에서의 문제인식

❏ 저성장시대 진입, 인구피크 도달과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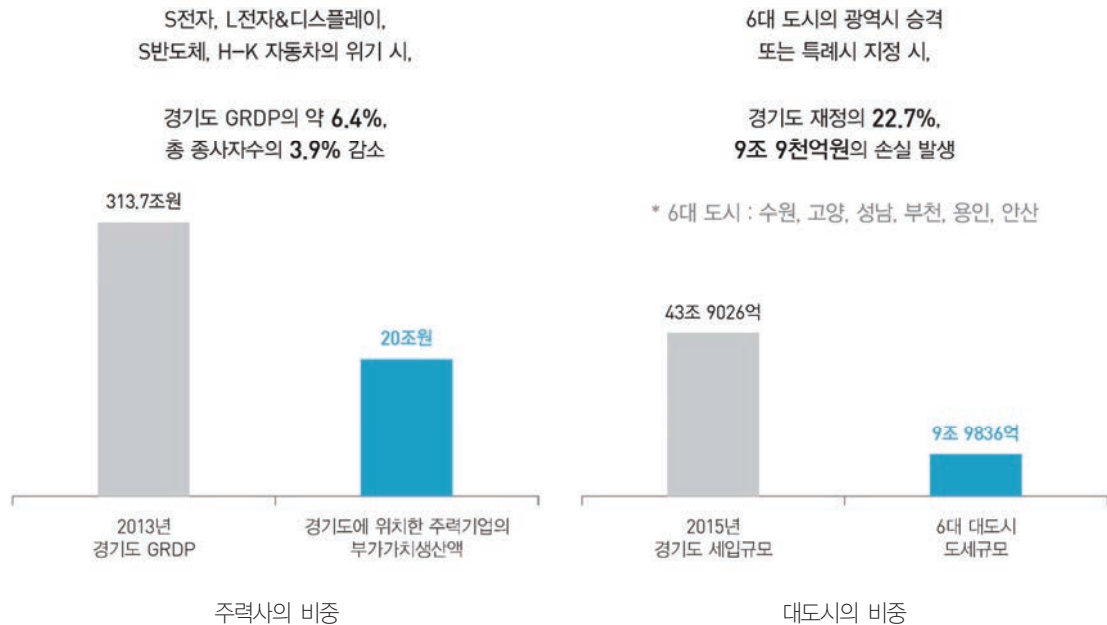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 저하, 인구 고령화와 인구피크 도달, 압축성장에 따른 피로도 증가로 기존 정책 및 전략의 유효성이 점점 약화
- 삶의 질 중시, 웰빙(well-being)가치 선호 등 도민과 시민이 지향하는 가치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전략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림 1-1-1]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추이와 전망

❏ 주력산업 위기, 광역시 추진 등 돌발요소의 위험이 점차 증대

- 경기도는 도내 주력산업 붕괴(노키아 붕괴에 따른 핀란드 경제침체와 유사한 상황), 수원 등 대도시의 광역시 또는 특례시 추진 등 돌발요소의 위험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아울러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는 등 정책환경의 불리함이 지속



[그림 1-1-2] 주력기업에 의존적인 지역경제와 대도시의 비중이 큰 재정

공약실천계획이나 법정 종합계획으로 중장기적, 구조적 과제 해결에 한계

- 중·단기 공약실천계획이나 법정계획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해결 대안을 찾기 때문에 중장기적, 구조적 과제 해결에 한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미래비전 부재로 국가-광역정부-기초정부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부재

2. 지금까지 수립된 경기도 비전의 성과 평가

경기도 비전은 1997년 및 2002년에 수립

-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경기도는 2회에 걸쳐 비전 수립
 - 민선 1기 이인제 도정 때인 1997년 1월에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수립
 - 민선 3기 손학규 도정 때인 2002년 12월에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동북아의 선택 경기-」 수립
 - 비전은 아니지만 2012년 2월에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 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임

비전의 성과 평가 결과, 산업과 정책사업은 달성했으나, 대규모 철도 인프라 구상은 미실현

- 1997년의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과 성과
 - 주요 전략으로 △ 산업경제구조의 개편과 고도화 △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 도시·농촌의 발전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 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 발전 △ 삶의 질 제고와 문화복지사회의 실현을 추진
 - 성과를 보면 핵심 구상인 환상철도 구상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여 실현되지 않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공장총량제로 전환, 외투기업 입지허용 등으로 부분 달성

[표 1-1-1]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과 성과분석

명칭	비전 내용	전략 내용	주요 프로젝트 구상	
경기2020: 비전과 전략	국가 발전의 견인차 통일 한국의 심장부	• 산업경제구조의 개편과 고도화 •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 도시·농촌의 발전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 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 발전 • 삶의 질 제고와 문화 복지사회의 실현	- 환상 급행순환철도 건설 - 경기만 개발 - 한강하구 항만 구상 - 광역녹지축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 미반영 • 반영(민선4기 때 서해안 골드코스트 전략에) • 미반영 • 반영(정부/경기도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 부분 반영(공장총량제, 외투기업 입지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부분 개정) • 반영(2012.2 경기도 종합계획 최초 수립)

- 2002년의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동북아의 선택 경기-」의 주요 내용과 성과분석
 - 주요 전략으로 △ 4 x 4 경기공간구조축 형성 △ 통일순환철도(평택-이천-원주-춘천-연천-개성) 건설 △ 통일에 대비하는 경기북부권 개발과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
 - 성과를 보면 핵심 구상인 경기만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전략은 이후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등에 반영되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으나, 통일순환철도와 K-클러스터 전략은 실현되지 못함

[표 1-1-2]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동북아의 선택 경기-」의 주요 내용과 성과분석

명칭	비전 내용	전략 내용	주요 프로젝트 구상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동북아의 선택 경기	국가발전의 견인차 통일 한국의 심장부	• 4 x 4 경기공간구조축 • 통일순환철도(평택-이천-원주-춘천-연천-개성) • 통일에 대비하는 경기북부권 개발과 접경지역 개발	- 경기만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 - 통일순환철도 건설 - 경기 K-클러스터 전략 - 지식기반 공간구조 형성 - 남북교류 및 통일 전진기지 경기북부권 개발 -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 네트워크형 도시정비	• 부분 반영(평택항, 시화호 주변 개발) • 미반영 • 미반영 • 부분 반영(8개 클러스터 중 소프트웨어, 반도체, 문화출판, 도예 클러스터) • 미반영 • 부분 반영 •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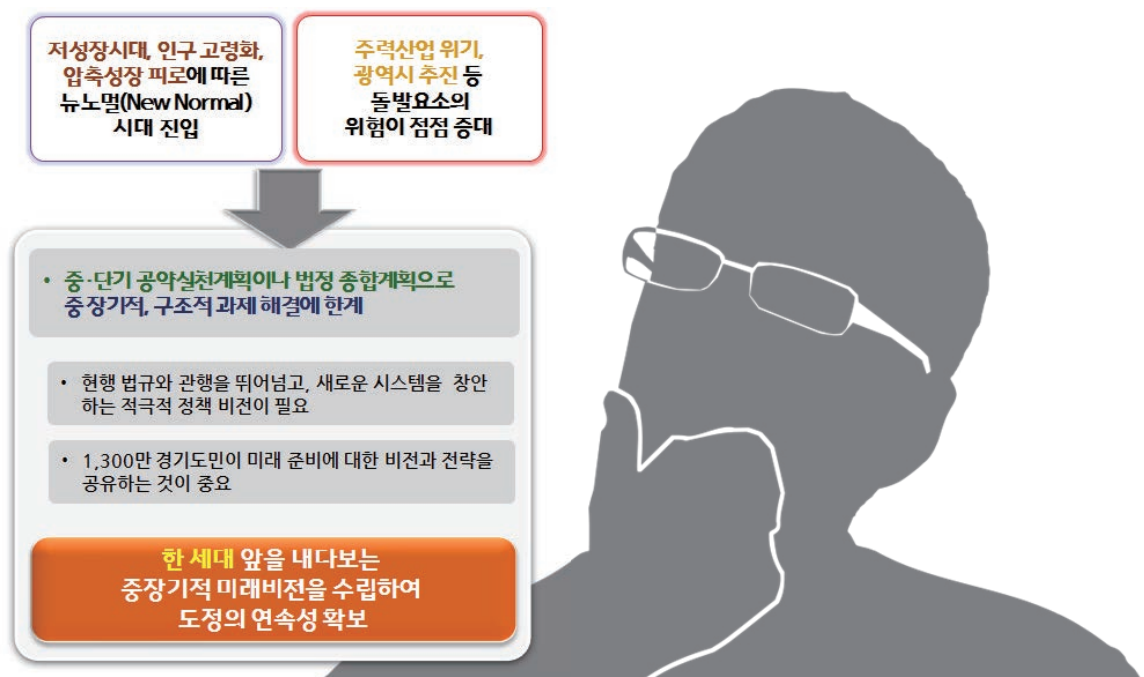
3.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이전 비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전 수립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미래과제 연구와 비전 및 전략 제시가 필요

- 현행 법규와 관행을 뛰어넘고, 새로운 시스템을 창안하여 경기도가 성공사례를 만듦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새로운 사고, 적극적 접근’의 정책비전이 필요

1,300만 명 도민이 공유하는 비전을 수립

- 경기도민이 미래에 대한 준비와 비전을 공유하여 경기도의 구조적 과제 해결과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정의 연속성 확보
- 수도권 규제개선 등 장기 미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전 공유와 도민 정체성 확립이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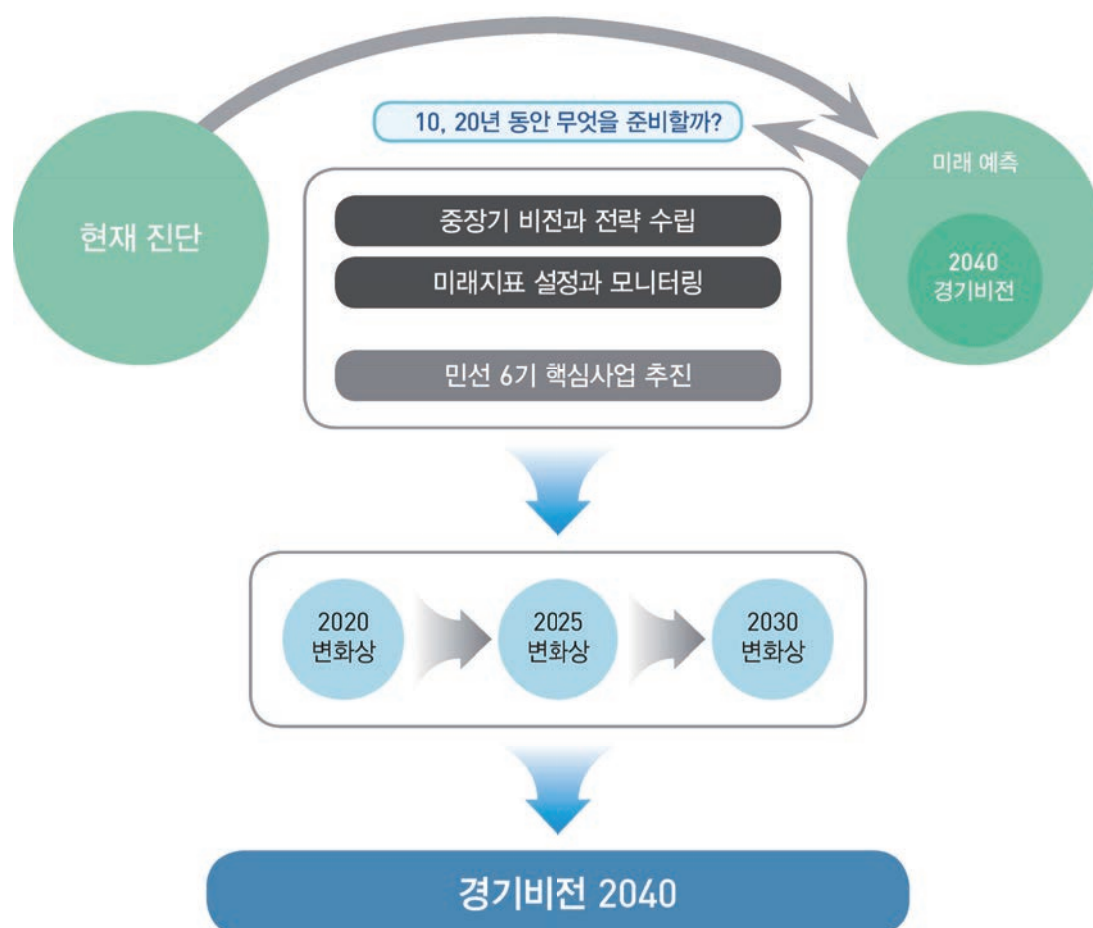
[그림 1-1-3] 경기비전 수립의 필요성과 의의

제2절

무엇을 담을 것인가?

📌 10년, 20년을 준비하는 미래 아젠다와 중장기 전략을 제시

- 미래비전은 ‘멀리 내다보고, 전략과 정책의 지향점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미래 시점에서의 예측과 전망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바라는 미래, 희망하는 미래를 담은 비전을 제시함
 - 선진국가 및 선진지역은 미래 과제와 중장기 비전 수립 → 부처별 및 실국별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사업 및 프로그램 시행 등의 체계화된 정책추진체제를 구축
 - 가장 선진적인 사례로는 핀란드의 「미래비전 2030 (Finland Tulevaisuus 2030)」을 들 수 있음
- ‘경기비전 2040’은 한 세대인 25년 후의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미래상 달성을 목표로 하여, 10년 및 20년을 미리 준비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
 - 목표시점인 2040년까지의 청사진 제시가 아니라 2040년 미래상 실현 위한 사전 준비전략을 제시



[그림 1-2-1] 미래비전 설정과 중장기 전략 준비

※ 주요 선진국의 비전 수립 사례

■ 핀란드 미래비전 2030 (Finland Tulevaisuus 2030)

- 핀란드는 1993년부터 미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1년 출범한 현 핀란드 정부 역시 미래전망 및 국가전략 도출을 위해 주제 선정, 미래 전망, 정책 정의, 정책 이행 등의 4단계로 나누어 비전을 수립
-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미래 이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를 거치며, 설정된 계획지표에 대해 수립 목적, 2030 목표, 중간 목표, 측정방식 등을 명시

■ 스마트 런던계획 (Smart London Plan)

- 2013년 수립된 스마트 런던계획은 다양한 미래 중에서도 ‘스마트 시티’라는 큰 미래상 안에 목표투자액, 계획기 준년도, 계획지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의 향후 운영방식 등을 포함하는 장기 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측정가능한 성과지 표를 설정하고 사전 제시

■ 뉴욕시 장기비전계획 PlanNYC

- 2007년 뉴욕시는 인구 상승, 노후화된 도시구조와 시설, 기후변화와 환경 등 3가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25개 기관이 모여 PlanNYC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30% 감축’ 및 ‘100만인 도시 준비’라는 장기목 표 아래 다양한 세부목표와 실행계획을 추구하고 있음
- 계획의 비전은 ‘더 푸른, 더 거대한 뉴욕(A Greener, Greater New York)’으로 설정하고, 10개 부문의 127개 이니셔티브를 제시. 이후 2011년에 132개 이니셔티브로 확장되었고, 2013년에는 400개 이상의 구체적인 단계 별 목표를 제시하고, 7개 부문에 걸쳐 목표를 제시
- 2014년에는 ‘더 강한, 더 회복력 있는 뉴욕(A Stronger, more Resilient New York)’이라는 계획을 추가하고 기후분석, 보건 등 13개 부문 미래지표를 반영

지역	목표년	비전과 전략	추진 부문과 지표
핀란드 미래비전 2030	2030년	<3대 목표>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생산적 경제 • 지속가능한 환경 • 건강한 웰빙사회	<6대 핵심 주제> 조력자로서 정부/ 시민의 웰빙과 통합/ 미래의 직업과 교육/ 비즈니스 구조 혁신/ 북극해 시대/ 희소자원시대의 기회 창출
스마트 런던 계획	2030년	<4개 부문> • 도시관리 효율성 증대 • 기술혁신산업육성 • 정보공개 및 투명성 • 삶의 질	<7개 전략과 성취측정지표> 혁신선도자 런던시민/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술, 창조역량, 연구 강화/ 스마트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개선/ 시민요구에 복무하는 시장/ 디지털 기술 도입 활성화
뉴욕시 장기비전 계획 PlanNYC	단기 중기 장기 (2030년)	<전략> 더 푸른, 더 거대한 뉴욕 (지속가능성)	<10개 부문과 세부 목표지표> 주택과 근린환경/ 공원과 공공공간/ 노후산업공간/ 수로/ 물 공급/ 교통/ 에너지/ 공기질/ 폐기물/ 기후변화
		<전략> 더 강한, 회복력 있는 뉴욕 (회복탄력성)	<13개 부문과 세부 목표지표> 기후분석/ 해안보호/ 빌딩/ 보험/ 유틸리티/ 액화연료/ 보건/ 통신/ 교통/ 공원/ 식량공급/ 폐기물/ 물과 폐기물

경기비전 2040의 주요 내용

- 앞서 수립한 경기도 비전의 성과와 달성도 평가
 - 민선 1~5기까지 수립된 비전과 2020 종합계획의 성과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도출
- 국내·외 미래비전 연구 및 수립 사례 벤치마킹
 - 국·내외 미래 트렌드 변화 연구
 -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미래비전 수립 내용과 정책반영체제 및 사례분석
-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상 도출을 위한 도민의식 조사
 - 도민의 생각, 도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조사하여 반영
- 경기도 미래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바람직한 시나리오 선정
 - 경기도에 미칠 영향변수와 위기요인 분석
 - 미래 변화의 시나리오 설정
 - 바람직한 시나리오 선정
- 시대에 요구되고, 도민이 바라는 2040 비전 설정
 - 경기도민이 공유할 가치 정립
 - 경기도 2040 미래비전 설정
 - 목표로서의 미래지표 제시
- 비전 달성을 위한 미래 아젠다별 비전과 전략 제시
- 비전 달성을 위한 부문별 비전과 전략 제시
- 비전 2040 달성을 위한 추진체제 제시

제3절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비전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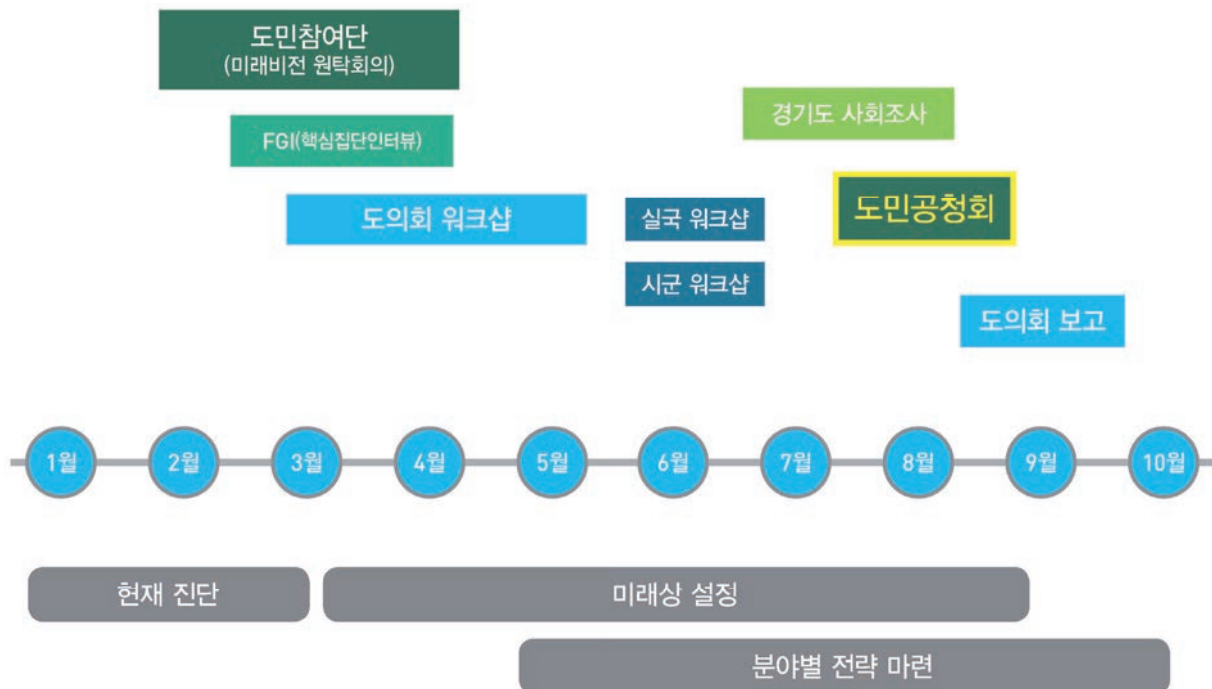
- 도민과 공유하는 비전을 만들기 위해 도민, 차세대 청소년,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과 함께 미래 과제를 진단하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
 - 도민 및 사회단체 참여단을 만들어 '도민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 비전을 고민
 - 지역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추출한 샘플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을 반영
 - 차세대 청소년, 기업인, 언론인에 대한 핵심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의견 반영
 - 도청 실·국 및 31개 시·군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 공공기관의 참여를 추진
 - 국책연구원의 국가비전 수립 참여인력의 경험과 중장기 과제 검토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총괄비전포럼'을 운영

SNS 등 첨단 소통의 방법을 실천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새로운 미디어 SNS를 활용하여 소통과 범위와 통로를 확대
- 도청 및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경기도 비전 수립 의견란을 설치하여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집

도민 참여와 소통의 추진 경과

- 미래학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논의 → 중장기 아젠다 설정 →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 비전 설정 → 전략 마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접근



다양한 도민 의견 청취	01 도민참여단 3/10(토)~3/28(토) 모집 4/11(토) 1차 미래비전 원탁회의 5/30(토) 2차 미래비전 원탁회의 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상시운영	02 FGI(핵심집단인터뷰) 3/30(월) 언론인 8명 5/23(토) 청소년 8명 5/27(수) 기업인 8명	03 경기도 사회조사 경기도 5040가구 8/17(월)~8/31(월) 진행	04 도민공청회 9/21(월) 북부공청회 9/22(화) 남부공청회
	01 도의회 워크숍 4/29(수)~30(목) 1차 개최 6/22(월) 2차 개최 10/6(화) 의회 보고	02 실·국 워크숍 7/2(목) 북부청(북부)실·국 7/6(월) 본청(남부)실·국	03 시·군 워크숍 7/8(수) 북부 시·군 10개 7/15(수) 남부 시·군 21개	
도 관련 기관 의견 청취				
내 외부 전문가 토론	01 총괄비전포럼 5회 개최 정부비전 참여한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 미래예측방법론, 비전수립방식 등 자문	02 자문회의/워크숍 분야별 2~3회, 총 15회 외부 전문가 45명 참여 경제, 교통, 환경, 통일, 문화, 사회통합/복지, 도시/공간, 보건의료 등	03 미래연구네트워킹 시도연구원 미래연구 공유 6월 1차 개최, 9월 2차 개최	

[그림 1-3-1] 참여형 미래비전 만들기를 위한 연구진행 연혁

도시·사회단체 참여단이 설정한 경기도의 2040 비전



G Y E O N G G I V I S I O N 2 0 4 0

제 2 편 총론편

- 제1장 |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 제2장 | 도민의 여망과 도민이 보는 미래
- 제3장 | 미래 시나리오
- 제4장 | 총론 비전과 전략
- 제5장 |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제1장

미래 전망과 위기요인

제1절 경기도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국제적, 국가적 트렌드 변화

- (국제적 트렌드) 중국의 G2 부상과 황해연안지역의 지속적 발전,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경제발전 중시와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북-러 관계 개선과 나진-블라디보스토크 축의 부상
 - 중국경제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로 부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8~10% 범위 내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Global Trends 2030*, NIC 2014)
 - 러시아 푸틴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서울-원산-나선지구-블라디보스토크-연해주의 환동해축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경기도 경원축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북한과 정치통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제통합이 이뤄지며, 중국경제규모는 세계 1위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전지구적 초연결사회가 실현됨
- (국가적 트렌드) 잠재성장률 저하, 인구 고령화, 복지수요 증대, 모바일화와 사물인터넷(IoT) 확대, 온라인쇼핑 및 복합몰(malling)과 같은 쇼핑행태 변화를 가져옴
 - 실질 GDP성장률은 2040년까지 2% 초반대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또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저성장시대의 본격화

[표 2-1-1] 기간별 실질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전망

연도	실질성장률	TFP	요소 투입	(단위: %)	
				자본투입	노동투입
2014~2020	3.8	1.68	2.12	1.34	0.78
2021~2025	3.0	1.51	1.54	1.41	0.13
2026~2030	2.6	1.33	1.22	1.35	-0.13
2031~2035	2.2	1.24	0.97	1.24	-0.27
2036~2040	2.0	1.21	0.77	1.13	-0.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4), pp.11-12

- 의료기술의 발달과 기대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화인구는 2010년 총인구대비 11%, 2030년 24.3%, 2040년 32.6%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고령자계층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각종 세제 및 연금, 사회복지 재정지원은 갈수록 증가하여 적자 폭 및 국가채무 부담률 증가

-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08년 조사 이후 매년 평균 20%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5조 2,440억 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 (지역적 트렌드) 인구 피크 도달, 토지·주택 개발수요 축소,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
 - 수도권은 2030년, 경기도는 2034년에 인구피크에 도달
 - 인구 유출(세종시와 혁신도시 인구가동, 귀농귀촌현상이 원인), 신규주택 수요가 점점 축소
 -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확대로 새로운 경제영역의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경제는 주류가 되지는 않겠지만 일정부분의 경제, 생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표 2-1-2] 경기도를 둘러싼 경제, 사회, 공간 트렌드와 영향

주요 트렌드	세부 이슈	주요 특징 및 영향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 고령화/저출산 - 1-2인 가구증대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 다문화사회 형성	- 노인인구 급증과 노인복지 수요 증가 - 고령인구의 경제사회 활동 및 자아실현 욕구 증가 · 제품형태 변화, 의료/서비스산업 시장 확대 전망 - 독신, 만혼, 비출산 등 가족형태 변화 - Single족, No kids족, 독거노인 증가로 1-2인가구 증대
세계화와 지방화 (Glocalization)	- 글로벌 통합과 함께 다극화도 진행 - 지방자치의식과 자치권 확보	- 글로벌화 심화 ·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 인프라 구축, 지능형 물류 확대 - 인간, 정보, 화물 등 국제간 이동 증가 - 지방자치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도 외교의 주체로 등장 · 인사, 재정, 계획권한의 분권화 · 지방 공공외교 확대
공간, 교통, 환경·에너지	- 도시화의 완성 - 자율운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시제품 개발 - 지구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 자원고갈, 고유가와 함께 재활용 재생/대체에너지	- 전국적으로 92% 도시화로 피크 -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상용화 시도 - 전 세계적 기후변화 가속으로 온실가스규제 강화 - 태양, 수소, 바이오 등 청정에너지 공급과 수요 증가, 비전통 세일가스 비중 확대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 개인주의 심화와 삶의 질 추구 - 분노사회 - 안전/위생, 경험/감성	- 자의식 강화, 가족/집단에 대한 의식 약화 - 1인 미디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증가 - 감성,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 확대 - 테러, 사이버범죄 증가로 개인/사회적 보안(Security)에 대한 관심 확대

수도권과 경기도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 수도권과 경기도는 인구나, 지역경제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인구구조, 경제 산업구조 등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 등 비(非)물질적 의식과 가치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표 2-1-3] 경기도를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변화		변화의 요인
기본	변화	
GDP로 대표되는 양적 성장	행복지수로 대표되는 웰빙 실현사회 실현	시장경제의 한계, 도민의 가치 변화
동질적 지역사회 개발, 수혜적 복지	다계층, 다문화의 포용사회 실현, 생산-소비 복지사회로	도민의 글로벌의식 변화, 재정 한계
도로울 등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개발	공동체사회 개발과 사회적 자본 축적	물신주의 의식 변화, 공동체주의 확산, 과학기술 발달 (신제품 등장)
자원자원의 개발과 석유 기반의 화석연료사회	인공과 자연환경의 공존에 의한 지속가능사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가는 에너지혁명사회로 전환	에너지원 변화, 환경의식 변화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		북한의 변화, 한국의 포용력

- 수도권과 경기도를 둘러싼 연구보고서, 정부보고서 등에 대한 메타분석,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쳐 트렌드를 정리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리한 수도권 경기도를 둘러싼 메가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10개로 정리됨¹⁾

- 교외확산이 진정되고, 도심과 구시가지는 재활성화된다.
- 청년층, 여성층, 고령층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화가 심화되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
- 문화·여가·소비양식이 다양화되고, 관광산업은 문화·레저 중심으로 전환된다.
- 탈석유화되고,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정책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 재해, 위해 환경 노출이 증가, 안전사회에 대한 정책이 강화된다.
- 구도심, 기성시가지, 노후 산업단지 재생으로 전환된다.
- 아파트 건설이 감소되고, 타운하우스, 한옥, 주상복합 등 다양한 주거양식이 확대된다.
- 중앙정치보다 지방정치가 부상하고, 시민정치시대가 실현된다.
- 남북한 통일시대에 접어들고, 북한주민 유입에 따라 인구, 공간구조가 변화된다.

1) 메가트렌드 후보 중 동의도 0.6 이하는 제외.

제2절 경기도 미래에 대한 전망

1. 6대 대내 전망

(인구 피크와 고령화) 인구 피크에 도달하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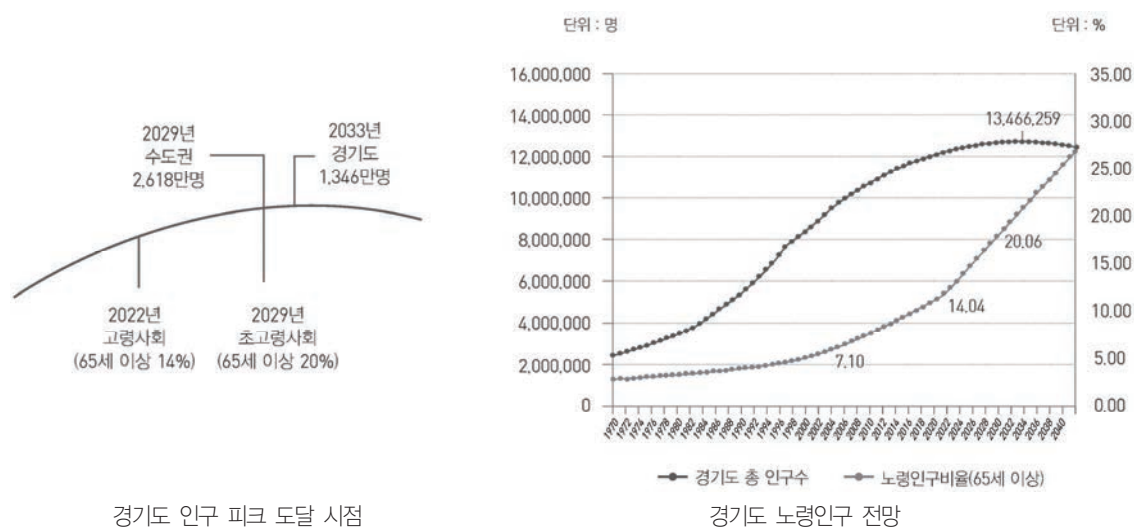
- 인구 피크는 수도권이 2030년 2,669만 명, 경기도는 2033년 1,346만 명으로 전망되어 수도권과 경기도의 인구 보너스도 소멸하게 되고, 소비와 주택 수요도 정점에 도달
- 경기도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어 2022년경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2029년 경에 초고령사회(20% 상회)로 진입할 전망

[표 2-1-4] 경기도 인구 및 연령별 구조 전망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노인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2010	11,379,459(100.0)	999,763(8.8)	2,035,020(17.9)	8,344,676(73.3)
2015	12,220,718(100.0)	1,278,939(10.5)	1,915,026(15.6)	9,026,753(73.9)
2020	12,702,844(100.0)	1,620,509(12.8)	1,838,152(14.4)	9,244,183(72.8)
2025	13,031,604(100.0)	2,186,863(16.8)	1,731,100(13.3)	9,113,641(69.9)
2030	13,198,865(100.0)	2,831,979(21.5)	1,667,722(12.6)	8,699,164(65.9)

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및 당시 출산율을 토대로 각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계함
자료: 경기연구원 내부 추계 자료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그림 2-1-1] 경기도의 인구 피크 도달과 노령인구 전망

❏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성장 체력인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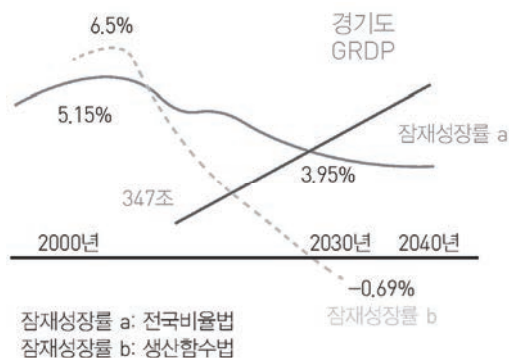
- 수도권 규제, 높은 지가, 우수인력 확보 곤란, 20~49세 경제활동인구 감소(2010년 1.1% 증가 → 2012년 0.4% 감소) 등의 원인으로 GRDP 성장률이 계속 저하됨

[표 2-1-5] 경기도 잠재성장률 전망

기간	전국 잠재성장률	경기도 잠재성장률	
		배율평균값 적용	시변탄력성 평균값 적용
2016-2020	3.4	4.7	4.3
2021-2025	3.0	4.1	3.8
2026-2030	2.5	3.4	3.2
2031-2035	2.2	3.0	2.8
2036-2040	2.1	2.8	2.6
2041-2050	1.8	2.5	2.3
2051-2060	1.5	2.1	1.9

자료: 경기연구원 내부 추정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그림 2-1-2] 경기도 잠재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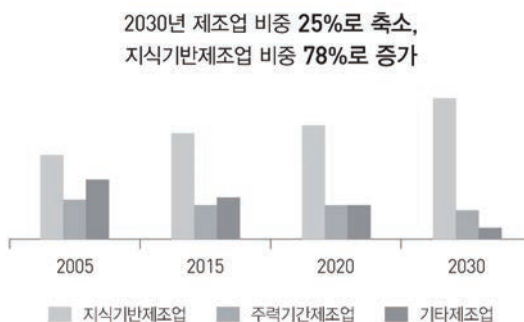
❏ (지식기반산업 확대) 제조업 비중 저하와 지식기반산업 중심 구조 형성

- 수도권과 경기도의 제조업 비중이 감소되고 있음
 - 제조업의 비중은 2005년 20.77% → 2020년 18.66% → 2030년 15.50%로 축소될 전망
 - IT · 반도체산업 이후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불확실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
 -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은 2005년 46.28% → 2020년 62.29% → 2030년 78.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6]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와 전망

	2015	2020	2030
농림어업	0.85	0.63	0.36
광업	0.09	0.08	0.06
제조업	34.78	32.08	25.73
서비스업	64.28	67.21	73.85

주: 산업연구원의 국가산업전망 2020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추세법에 의해 2030년을 전망함



[그림 2-1-3]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전망

(사물인터넷 시대) 과학기술의 상용화와 로봇의 일자리 대체

-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여 네트워크사회화
 - 2012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는 3G/4G 이동통신망, 무선랜 등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이용이 전국적으로 60%를 넘어섰으며, 이들의 약 70%는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정보화 지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을 넘고 서울특별시와 함께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연결사회의 초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

구 분	무선인터넷 (%)	무선랜* (%)	스마트폰 (%)	노트북 (%)	스마트패드 (%)	내비게이션 (%)
서울특별시	69.0	70.8	57.4	35.9	5.3	1.1
인천광역시	64.9	78.9	34.6	24.6	6.4	5.6
대전광역시	82.6	51.7	51.8	18.2	4.9	5.0
경기도	65.5	74.6	67.0	31.5	4.8	3.7
강원도	51.6	70.6	70.6	32.5	7.9	4.2
충청북도	69.5	84.5	84.5	13.1	1.5	0.0
충청남도	73.7	55.2	53.7	21.1	1.4	0.0
전국 평균	65.2	69.2	60.1	27.9	4.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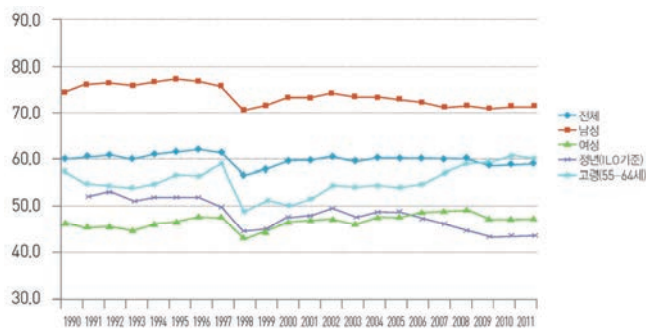
주) *는 무선인터넷 이용자인 2,043명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2 지역정보화백서』(2012년 10월), pp.403-409 (원자료: KISA, 2012년,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과학기술과 신발명품 출시는 기술, 생산, 생활에 전방위로 활용되어 삶의 양식과 직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임
 - 사물인터넷(IoT) 범용화로 이동 없이 화상회의, 원격계측 및 제어, post-SNS 시대가 개막되어 이동패턴과 교통수단 등이 크게 변화할 것임
 - 로봇의 범용화는 현재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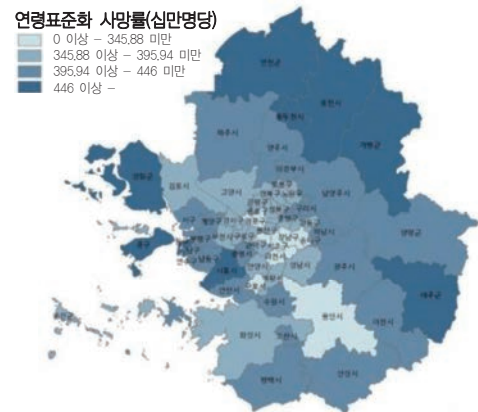
(양극화)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양극화와 파편화

- 경기도민의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양극화와 파편화, 다문화 진행
- 고령층 및 준고령층의 고용률만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1991년 53%에서 2011년 43%로 감소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2-1-4] 경기도의 집단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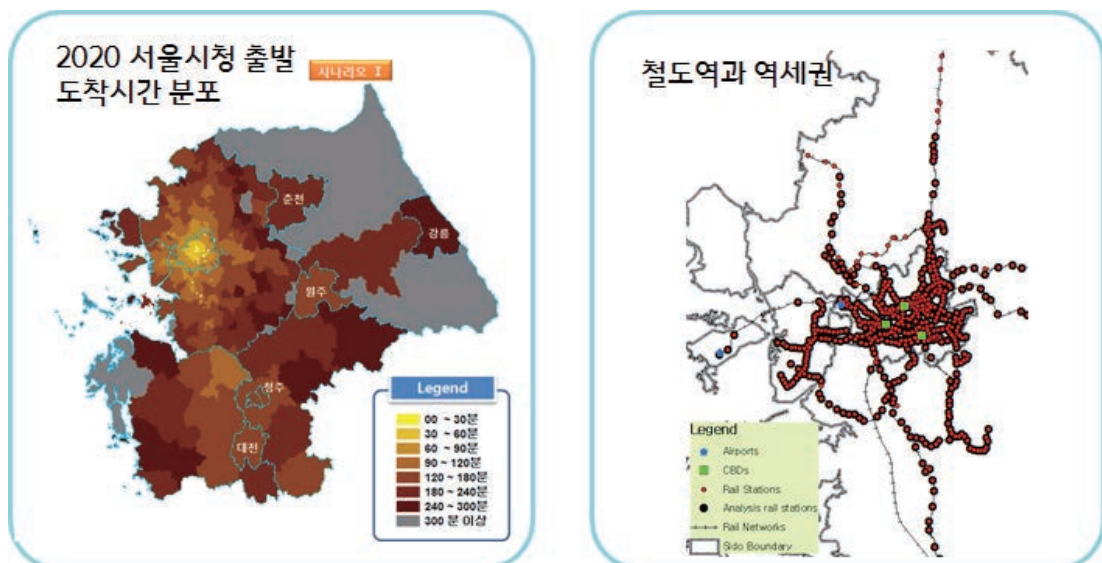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2-1-5] 수도권과 경기도의 표준화 사망률

(공간과 교통) 역세권 구조 형성과 광역교통망 확대

- 현재 및 계획된 도로, 철도 노선이 개통된다는 가정 하에 서울시청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천안, 대전, 청주 등의 경부축과 원주 등 영동고속도로축은 2시간 이내 도달하여 2시간 통행권이 형성
- 장래 수도권과 경기도 공간구조는 KTX, GTX 및 철도노선 확충에 따라 보다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경부, 경의, 서해안, 여주-이천-광주-분당/수서축 등의 성장축을 따라 개발될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는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추세를 변화시킬 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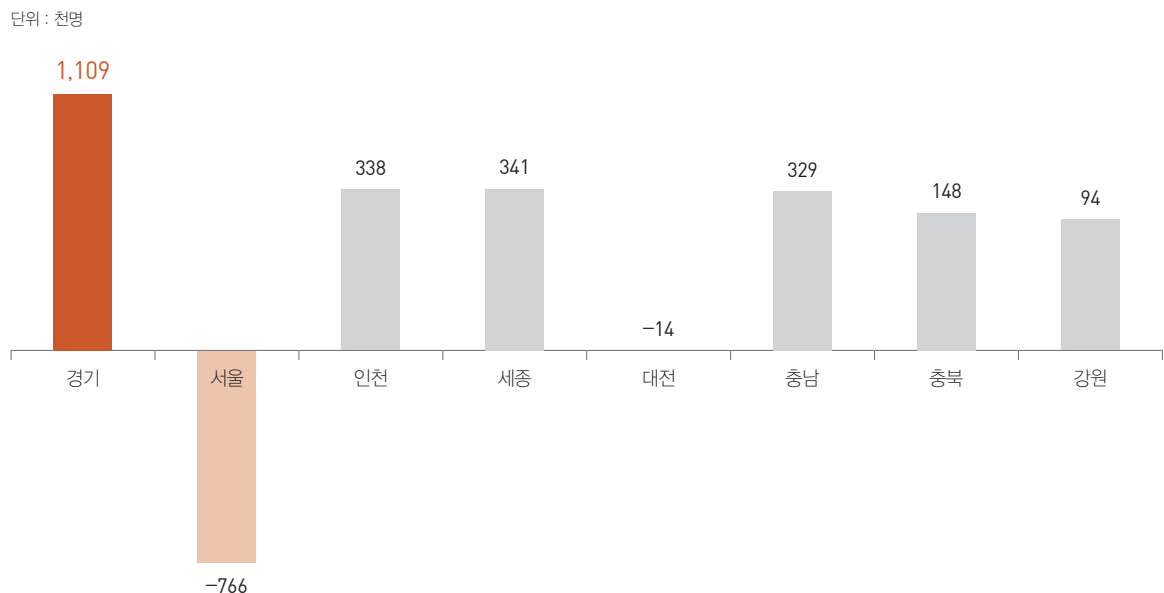
자료: (좌) 이상대(2013),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 (우) 수도권광역철도연구단/태조ENG(2015)

[그림 2-1-6] 수도권의 교통접근성의 시뮬레이션과 장래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형성

2. 3대 대외 전망

📊 (인접지역의 성쇠) 충청권의 성장과 서울시의 인구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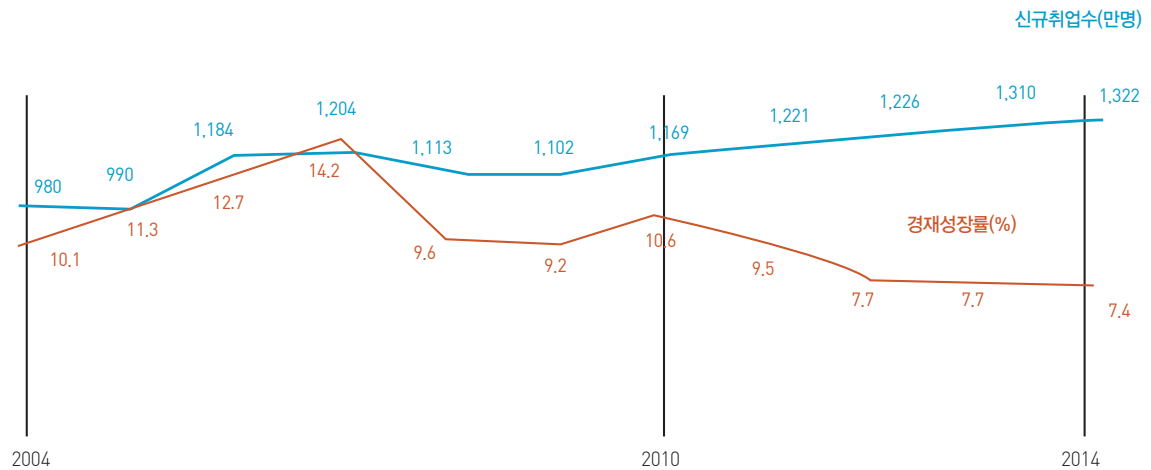
- 경기도 바깥지역의 성장추세를 볼 때 충청권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충청권은 세종시의 정부행정기관 및 산하 국가기관의 이전 효과로 인구와 경제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
- 서울시는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 경기도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
- 인천시는 송도, 청라경제특구의 개발로 인구와 지역경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7] 2013~2040 기간 인구증감전망

📊 (중국경제의 전망) 중국경제는 GDP 7% 성장시대가 종언

- 중국경제의 성장이 계속되어 G2를 넘어 세계최고의 경제규모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
- 그러나 7% 경제성장이 무너지는 중간수준 성장이 불가피하여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의 진입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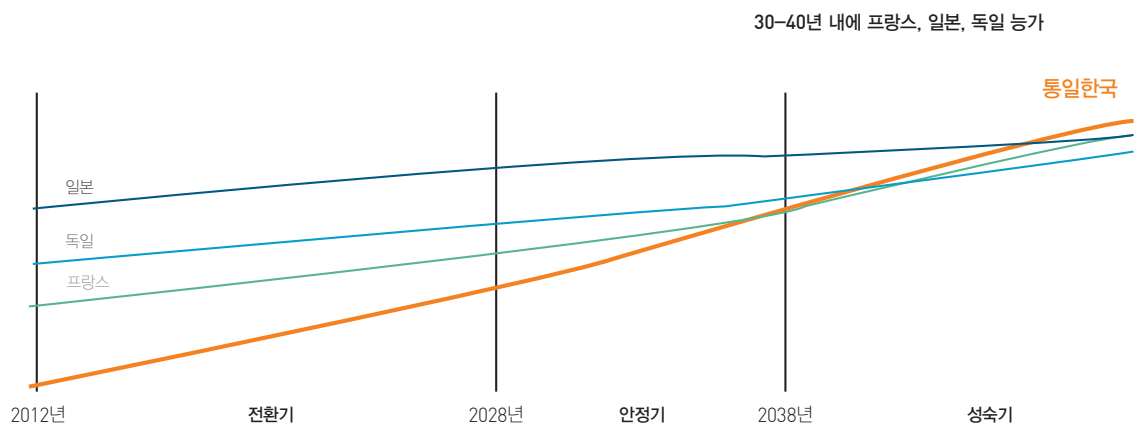


자료 : 중국통계국(CEIC), 한국무역협회, 2015.

[그림 2-1-8] 중국경제추세

☐ (통일과 경제통합) 북한경제의 자본주의화가 시작되어 남북한 경제통합 시대가 개막

- 북한과는 정치통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제통합이 이뤄져 한반도 경제권은 G-7급 규모의 경제규모에 도달할 수 있음
- 골드만삭스는 통일 시 통일한국의 경제규모가 일본, 독일, 프랑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



자료 : Goldman Sachs(2009), Global Economic Report 188

[그림 2-1-9] 경기도를 둘러싼 3가지 대외 전망

3. 민선6기 핵심사업의 추진과 영향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공식의 구축, 균등한 기회, 통일북부발전 기대

- 혁신생태계(start-up city) 조성,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 체제, 공보육 강화, 4대 테마파크 조성, 공정무역, K-디자인 빌리지 등의 사업 추진 중
- 기반구축 투자비 약 5조 4,862억 원, 기반이 구축되면 이후 10년간 22조 1,390억 원의 생산·운영효과 발생

[표 2-1-8]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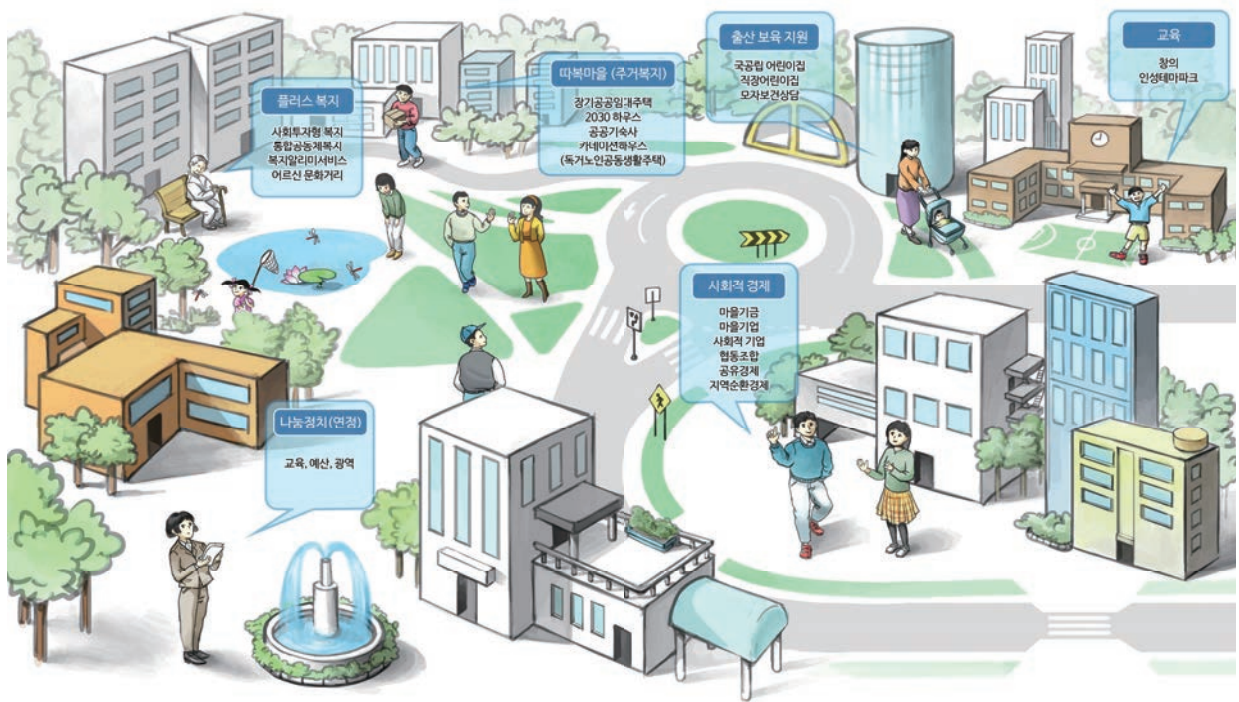
국가적 과제		주요 도정사업		비전
1	저성장/청년실업 ↓ 오픈플랫폼 기반 신성장	→	스타트업시티 - 넥스트판교 - 스타트업캠퍼스 - 슈퍼맨펀드 / 오디션 - g-next - 2030하우스 간편결제 공공물류, 유통 경기도주식회사 경제민주화-동반성장 에너지비전 신농정플랫폼 데이터혁신 광명·시흥R&D클러스터 도민은행	NEXT 경제
2	저출산 고령화/양극화 ↓ 육아 인프라 일자리 복지	→	공보육강화 플러스복지 - 사회투자형복지 - 통합공동체복지 - 복지알리미 서비스 따복공동체, 사회적경제 따복마을, 기숙사 주거복지비전 사회적일자리 확대	NEXT 복지
3	위험/피로사회 ↓ 안전·웰빙사회	→	굿모닝버스 안전대동여지도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 G-mooc 4대 테마파크 - 창의, 인성, 반려동물, 스포츠밸리 서울대농생대 복합문화공간 물관리비전	NEXT 서비스 & 문화
4	분단/낙후 지역격차 갈등정지 ↓ 통일북부발전 지역상생 나눔정지	→	K-디자인빌리지 K-컬처밸리 북부테크노밸리 북부균형발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통일경제특구미래도시 남북교류 미·중·일·러 통일외교 연정(교육예산광역) + 협치(mers 극복 사례)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세원 공유 및 상생기금 마련 지역 간 상생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정무역 ODA	NEXT 통일 & 정치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결과

-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에서 기반구축 소요비용은 산업별 수요를 유발하는 산업연관효과를 보이며, 생산·운영효과는 투자된 자금이 고정자본으로서 투자된 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산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됨
- 분석대상
 -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 총 47개 중 사업량이 정해졌거나, 가정할 수 있는 25개 사업을 대상
 - 부문별로는 NEXT 경제 6, NEXT 복지 5, NEXT 서비스&문화 9, NEXT 통일&정치 5개로 구성
- 분석방법
 - 2015. 11. 한국은행 발표 산업연관분석표(I/O table)로 경제적 효과를 모델링하여 분석
 - 기반구축 투자비 약 5조 4,862억 원, 기반구축 이후 10년간 22조 1,390억 원의 생산·운영효과 발생하여 총 27조 6,252억 원의 재정 투입을 가정
 - 기반구축 소요비용은 산업별 수요를 유발하는 산업연관효과를 보이며, 생산·운영효과는 투자된 자금이 고정자본으로서 투자된 부문의 생산능력을 높이므로 생산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
- 분석결과
 -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53조 5,126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8조 7,426억 원, 취업(고용+자영) 유발효과 60만 2,933명, 고용 유발효과 43만 8,138명 발생
 - 경기도 내부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38조 2,021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4조 340억 원, 취업(고용+자영)유발효과 43만 5,962명, 고용유발효과 32만 4,043명 발생

[표 2-1-9] 민선6기 핵심사업의 기반구축 투자비와 생산·운영효과

구분 \ 부문		NEXT 경제	NEXT 복지	NEXT 서비스문화	NEXT 통일정치	합계
생산	전체효과(억 원)	224,809	183,665	34,372	92,280	535,126
	경기도(억 원)	162,255	135,074	29,920	54,771	382,021
	비중(%)	72.2	73.5	87.0	59.4	71.4
부가가치	전체효과(억 원)	67,338	81,157	9,638	29,293	187,426
	경기도(억 원)	48,314	64,545	8,458	19,023	140,340
	비중(%)	71.7	79.5	87.8	64.9	74.9
취업	전체효과(명)	179,300	302,794	13,967	106,873	602,933
	경기도(명)	116,898	237,418	9,859	71,787	435,962
	비중(%)	65.2	78.4	70.6	67.2	72.3
고용	전체효과(명)	129,810	220,588	11,106	76,633	438,138
	경기도(명)	86,284	177,728	8,197	51,824	324,033
	비중(%)	66.5	80.6	73.8	67.6	74.0



[그림 2-1-10] 민선6기에서 추진되는 공동체 관련 사업의 영향

경기도 따복 공동체

4대 테마파크



제3절 경기도의 미래 위기요인

주력 산업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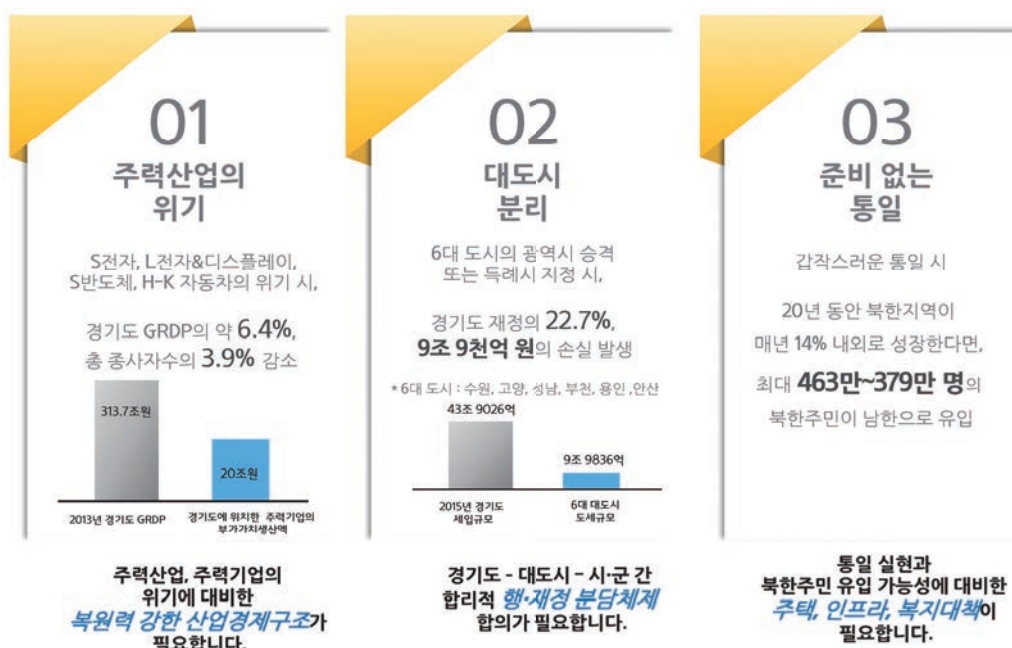
- 도내 지역경제와 고용을 주도하는 주력기업인 경기S전자, L전자&디스플레이, S반도체, H-K 자동차의 위기 시, 2013년 기준 경기도 GRDP의 약 6.4%와 총 종사자수의 3.9%가 감소할 수 있음(1, 2차 밴드 기업을 제외한 데이터임)
- 특히 S전자는 경기도 GRDP의 약 3.3%, 총 종사자수의 2.3%를 점유하고 있음

대도시의 분리

- 6대 도시(수원, 고양, 성남, 부천, 용인, 안산)의 광역시 승격 또는 특례시 지정 시, 경기도 재정 수입의 22.7%, 총 9조 9천억 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됨

준비 없는 통일

- 관련 연구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통일 시 2010~2030년간 북한지역이 매년 13.5% 성장 하더라도 최대 463만 명, 또는 14.3% 성장하더라도 최대 379만 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
- 이주민의 주택, 복지비용 중 상당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실현과 북한주민 유입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그림 2-1-11] 경기도의 미래 위기요인

제2장

도민의 여망과 도민이 보는 미래

제1절 도민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도민의 미래의식

◆ 도민 의견조사 개요

-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민 원탁회의, 심층집단 인터뷰(FGI) 등을 실시함과 더불어 보다 다수의 경기도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경기도가 실시한 2015년 사회조사에 병행하여 시·군별로 읍면동세대 규모에 비례로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활용함
- 시·군별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민 5,8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중 조사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239부의 설문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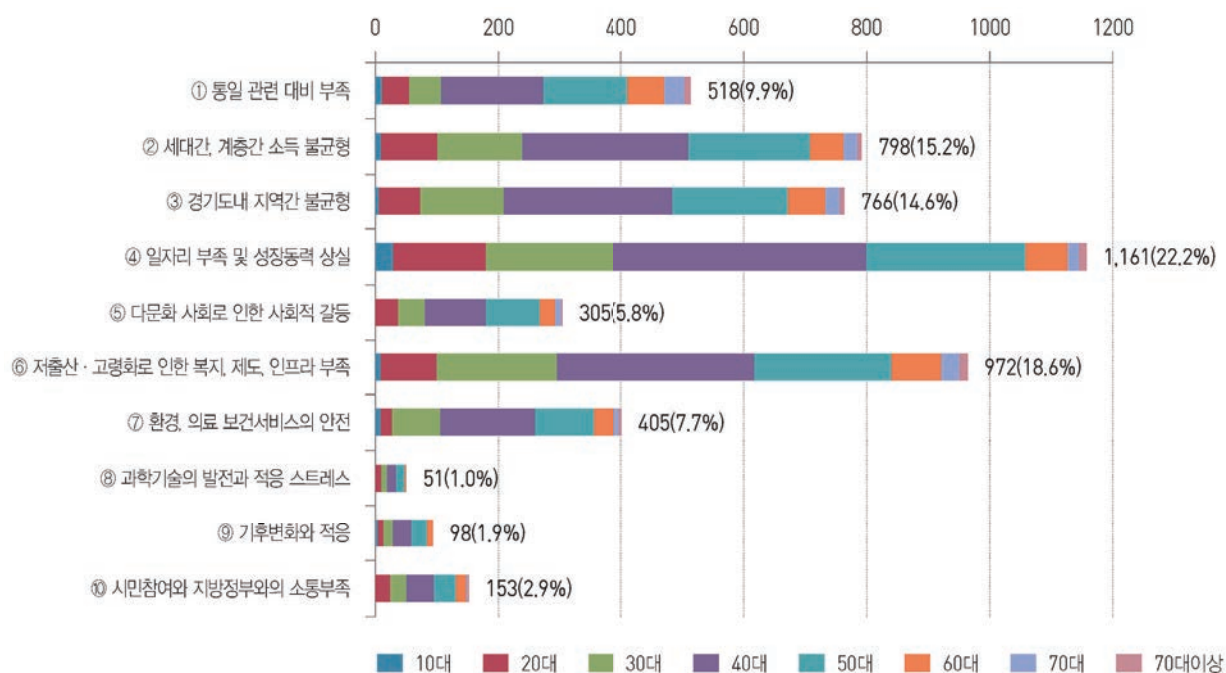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분포〉

성별	남성: 2,180명(41.6%) 여성: 3,059명(58.4%)	
연령	10대: 79명 (1.5%) 20대: 542명 (10.3%) 30대: 908명 (17.3%) 40대: 1,786명 (34.1%) 50대: 1,267명 (24.2%) 60대: 423명 (8.1%) 60대이상: 234명 (4.5%)	직업 ① 관리자 235명 (4.5%)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9명 (10.9%) ③ 사무종사자 758명 (14.5%) ④ 서비스종사자 686명 (13.1%) ⑤ 판매종사자 362명 (6.9%)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2명 (2.1%)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99명 (3.8%)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0명 (2.7%) ⑨ 단순노무 종사자 297명 (5.7%) ⑩ 군인 33명 (0.6%) ⑪ 학생 388명 (7.4%) ⑫ 주부 1041명 (19.9%) ⑬ 기타 419명 (8.0%)

주: 조사대상자중 무응답자는 제외함

 (경기도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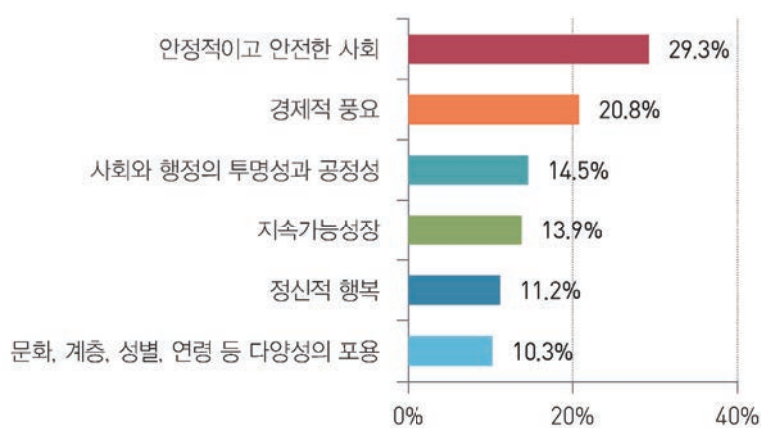
- 25년 후 2040년에 경기도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22%가 '일자리 부족 및 신성장동력 상실'을 꼽았고,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제도, 인프라 부족(18%)', '세대 간, 계층 간 소득 불균형(15%)',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14%)', '통일 관련 대비 부족(9%)', '환경, 보건서비스의 안전(7.7%)' 등의 순



[그림 2-2-1] 경기도가 직면하게 될 문제

☞ (도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가치) ‘안정, ‘풍요’, 투명성과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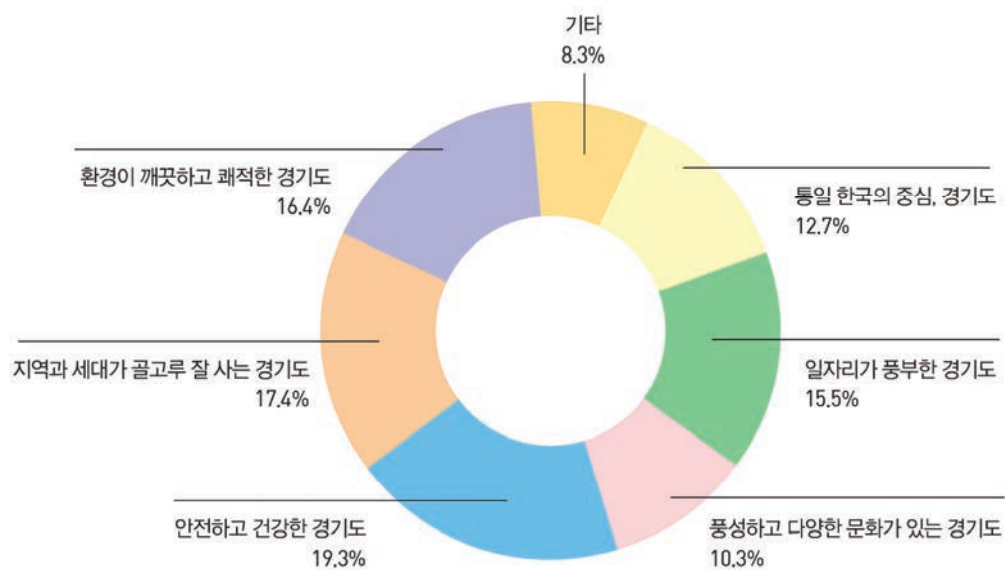
- 25년 후에 중요한 가치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29.3%), 경제적 풍요(20.8%), 사회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14.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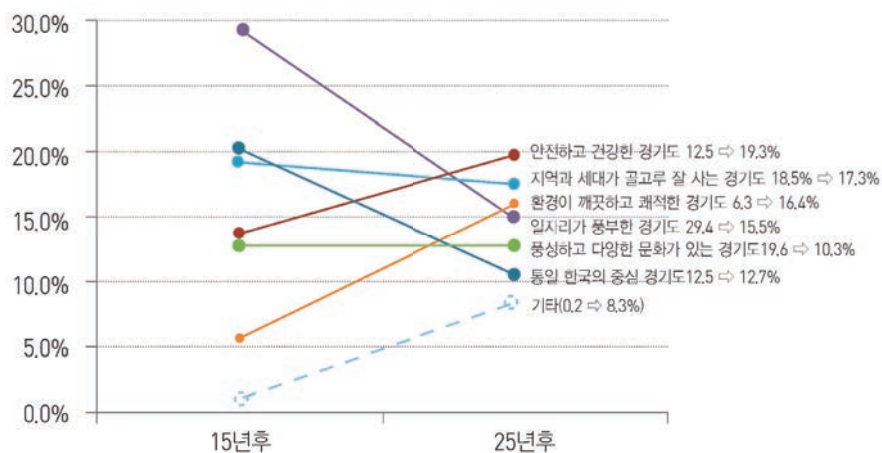
[그림 2-2-2] 도민이 생각하는 2040년의 가장 중요한 가치

(도민이 희망하는 경기도 미래상) 안전하고, 세대와 지역이 균형 잡힌 경기도를 희망

- 15년 뒤, 도민이 희망하는 경기도의 미래상은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도(29.4%),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경기도(19.6%), 지역과 세대가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18.4%),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13.4%) 등으로 나타남
- 25년 뒤, 도민이 희망하는 2040년 경기도의 미래상은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19.3%), 지역과 세대가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17.3%),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16.4%), 통일한국의 중심 경기도(12.7%),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경기도(10.3%) 등임



[그림 2-2-3]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2040년 경기도의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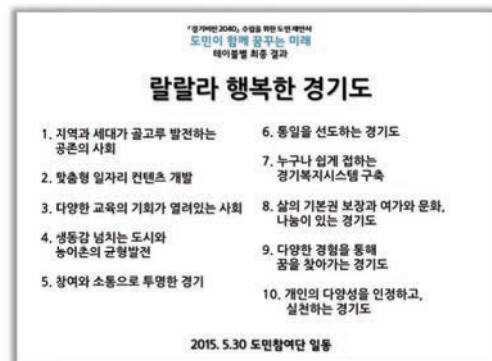
[그림 2-2-4]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2030년과 2040년 경기도의 미래상 비교

제2절 도민·사회단체 참여단을 통해 나타난 경기도 미래상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공동체 의식과 행복한 경기도를 희망

-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 결과 (4.11, 5.30 수원 인재개발원 체육관), 경기도민들은 이전과 달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고, 물질적 성장보다 행복한 경기도를 지향하였고, 차세대 청소년층은 기회를 주는 경기도, 포용하는 경기도를 희망
-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에서 수렴한 경기도 미래상은 “랄랄라 행복한 경기도”로 제시하였고, 세부 미래상으로는 아래와 같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세대가 골고루 발전하는 공존의 사회 ▪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하고 콘텐츠가 있는 사회 ▪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 ▪ 생동감 넘치는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한 경기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선도하는 경기도 ▪ 누구나 쉽게 접하는 경기복지시스템 구축 사회 ▪ 삶의 기본권 보장과 여가와 문화, 나눔이 있는 경기도 ▪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경기도 ▪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경기도 |
|---|--|



[그림 2-2-5]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 결과에서 나온 도민들의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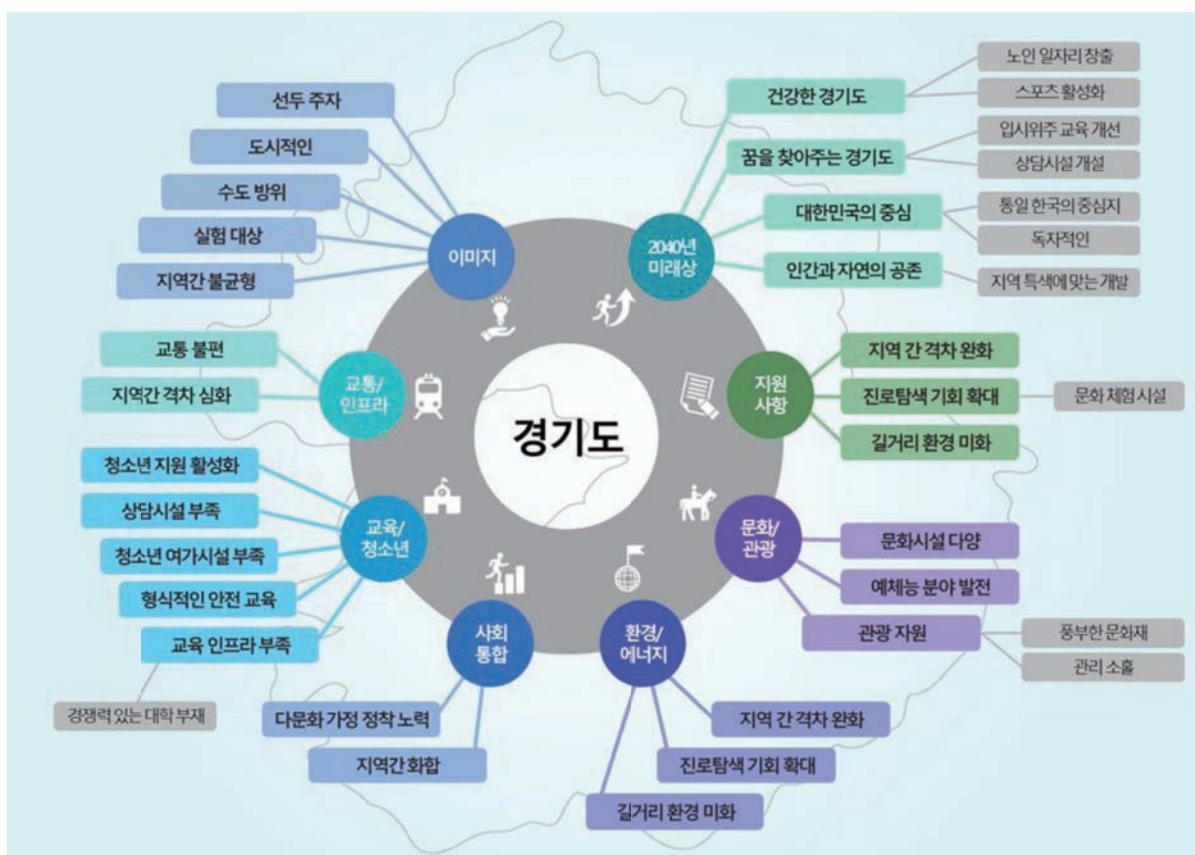


[그림 2-2-6]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 모습

제3절 핵심집단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 미래상

👤 (핵심집단인터뷰 (FGI)) 차세대 청소년, 언론인, 젊은 기업인이 보는 경기도의 미래

- 차세대 청년들은 기회를 주는 사회, 다양과 포용사회, 일자리를 주는 경기도를 기대
- 언론인이 보는 경기도 미래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치분권을 정립하는 경기도를 기대
- 젊은 기업인들이 보는 경기도 미래는 사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기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선 경기도에서 살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평양과 서울과의 길목을 경기도가 차지합니다. 경기도는 한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수도와 수도를 이어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경기도는 지역 차이가 심해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함께 다 같이 발전시키게 해야 비례가 맞고 지역 간의 차이가 없다고 봐요"

"시골과 도시로 나뉘는 데 둘을 아예 섞어버리는 경기도가 됐으면"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좋겠어요. 꿈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일관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보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DMZ나 자연습지, 자연생태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미래를 생각해서 건강하게 자전거 도로도 놓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스포츠를 많이 활성화 시키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추세로 볼 때 다문화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면 경기도의 장점이 될 거 같아요"

"노인에 대한 기초산업도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노인의 거리를 만들어서 노인카페 등 노인일자리 창출할 수 있었으면"

"출산 정책을 활성화시켜서 출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책이 필요해요"

"경기도가 문화의 도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문화의 도시라는 게 퇴화될 수 있잖아요"

[그림 2-2-7] 차세대 청소년 핵심집단인터뷰 결과

제4절 도의회, 도 실·국, 도의회, 시·군 워크숍에서 나타난 경기도 미래상

(도의회 워크숍) 공동체와 일자리 창출을 중시

-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타난 경기도 과제와 미래상은 ‘공동체의 경기도’, ‘통일한국의 중심지’ 등으로 집약
- ‘젊어질 수 있는 도시’, ‘기회의 땅 경기도’ 등의 의견도 제시됨
- 북부지역 도의원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거점도시 육성 및 북부발전이 강조됨

(도청 실·국 워크숍) 통일한국 거점, 맞춤형 신도시를 강조

- 도청 실·국 워크숍에서는 통일한국 거점, 상생 공동체, 맞춤형 신도시, 유라시아 거점 형성을 주문

(시·군 워크숍)

- 시·군 워크숍에서는 균형발전, 동서간 연결도로, 서해안 해양관광거점 형성을 제안
- 공간구조와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시·군 통합 문제는 시·군마다 입장이 달라 나타남

도의회 워크숍	실국 워크숍	시군 워크숍
통일 통일준비보다 왜 통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 필요	통일 통일 한국의 중심지	통일 통일한국의 정치·경제·문화·교육 중심지
일자리 경제 - 공동체 개념의 일자리 - 청년 실업 문제 -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 -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 포용과 상생의 사회공동체 - 먹거리 공동체 - 다문화, 빈부, 노인, 장애인을 포용 - 일-가족 양립 문화 - 갈등 관리	공동체 -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의 땅 경기도 - 농촌 다문화
고령화 고령화 대응	경제 -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지 - 첨단산업의 중심지 - 동북아의 수직·수평적 분업 체제 완성 - 정보화, 기술 발전에 대응	인프라 - 동-서간의 연결 - 보건·의료 인프라
지역개발 경기도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연결 투자	도시 - 시군별 맞춤형 도시모델 - 신도시 노후에 대응 - 맞춤형 신도시	환경 - 개발과 환경보존 4대강 사업지역 관리 방안
공동체 - 있던 공동체를 재편하는 공동체 정책에 대한 재고 - 근면, 자율성, 절약, 민주 등 옛 가치의 재발견	안전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 여성과 아동의 안전	산업 - 서해안 해양 관광 중심지 - 도내 대학 유치
분권 경기도가 다 하기보다는 분권으로 다양해진 요구 대응	환경 동북아 환경 협력	행정 - 서울시와 공동 노력 필요 - 분도, 시군통합 등에 대비한 행정 재정비 - 지방분권, 지역간 규모, 빈부 격차 해결
비전방향 - 다른 연구기관과 협업 - 시군 계획의 조사 -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획 -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정책 추진의 속도 증진	행정 - 북부 계획과의 차별성 - 전국 단위보다 '경기도'의 특성 반영 - 특례시/특별도	

[그림 2-2-8] 도의회, 경기도 실·국, 시·군 워크숍 논의 결과

제3장 미래 시나리오

제1절 시나리오 설정

 (영향변수) 경기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유형화

- 경기도의 경제, 사회, 공간, 환경,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영향변수들을 경기도의 계획, 연구보고서 등의 보고서와 문헌들을 메타분석하고,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쳐 추출함
- 인구구조, 지역경제구조, 기술변화, 자치행정과 지방정치, 남북관계와 북부지역 발전, 시민가치와 공동체 의식, 차세대 청소년의 의식 등의 7개 영향변수 군(群)과 보건의료 수요 증가 등 24개 영향변수로 정리할 수 있음

[표 2-3-1] 경기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유형화

영향변수군(群)	영향변수	
	기회요인	위협요인
인구구조와 이동 (저출산, 고령화)	보건의료수요 증가와 실버산업 인구의 교외화·광역화	생산가능인력 감소 복지비용 증가 서울의 도시밀도 정책
지역경제구조 (대기업, 정보통신)	글로벌기업 주도·자본 인력 정보통신, 게임산업 경쟁력 창업주도 지역경제구조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주력산업 붕괴 내수-수출 이원구조
기술변화 (사물인터넷, 교통, 에너지)	새로운 기술 상품에 따른 시장, 일자리 교통인프라와 교통에너지문제 완화	기술패권과 장벽 기술격차-사람격차
자치행정과 지방정치 (분권화, 중앙집권화)	인사 재정권 강화 공동체 의식 증대	(수원 등) 대도시의 광역시 또는 특례시 승격 국고보조-지방비 부담
남북관계와 북부지역 발전 (남·북부 지역격차)	남북관계 개선	지역갈등 심화 북부 분리
시민가치와 공동체 의식	다문화 포용	배타주의, 국수주의
차세대 청소년의 의식	직업과 꿈 도전의식	장유유서 질서 청년실업

 변화의 동인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설정

- 경기도 미래를 결정할 4가지 주요 동인(key-drivers)을 2개의 동인과 2개의 위기동인으로 분류
- 2개의 동인으로는 지역경제시스템(기존구조 지속 vs. 혁신경제 정착)과 인구와 투자 이동(서울로의 재집중 vs. 유입과 확산)으로 분류함

- 2개의 위기 동인으로는 도내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붕괴와 침체 vs. 생존과 성장)과 대도시의 분리 (분리 vs. 경기도 속에 유지)로 분류함

[표 2-3-2]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할 4가지의 동인과 그 영향변수들

동인과 위기요인 (Drivers & Risks)		관련 있는 영향변수들
지역경제시스템	기존구조 지속	글로벌기업 주도의 일자리, 부가가치 생산 판교, 광교 등의 정보통신, 게임산업 중심지 번성
	혁신경제 정착	창업주도 지역경제구조 정착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확대 북부지역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형성
인구와 투자 이동	서울로의 재집중	경기도민의 서울로의 유출 고급 R&D의 서울 집중
	경기도로의 유입과 확산 (교외화 · 광역화)	경기도 도시들의 경쟁력 향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확대
도내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붕괴와 침체	주력산업 붕괴와 주력기업의 위기
	생존과 성장	신성장산업의 발굴과 수용
대도시의 분리	분리	수원 등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
	경기도 속에 유지	도-대도시-시·군의 분권형 지방행정체제 형성

- 지역경제시스템, 인구와 투자 이동, 도내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대도시의 분리 등 4개의 동인 및 위기요인들 간의 조합에 따라 다수의 미래변화 시나리오가 가능
 -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경기도의 미래는 일반적인 동인과 함께 위기요인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한 영향변수를 설정한 것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 의미가 높은 4가지 시나리오

- 상기 시나리오 중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 의미가 높은 지역경제시스템과 인구와 투자이동 동인과의 조합에 의한 다음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함
-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 현재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게임, 정보통신(ICT), 섬유와 패션, 음식숙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고, 경기도 내로 인구와 투자자본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 상황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시나리오
 - 현재의 주력산업과 경기도로의 인구이동패턴에 돌발상황이 안생기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나리오임
- (삼천포 시나리오) 현재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게임, 정보통신, 섬유와 패션산업에 더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여 혁신경제로의 이행이 이뤄지지만, 서울시의 공격적인

R&D 거점 조성전략에 따라 도내 기업의 고차 R&D나 담세능력 많은 도민들이 유출되는 악재가 나타나는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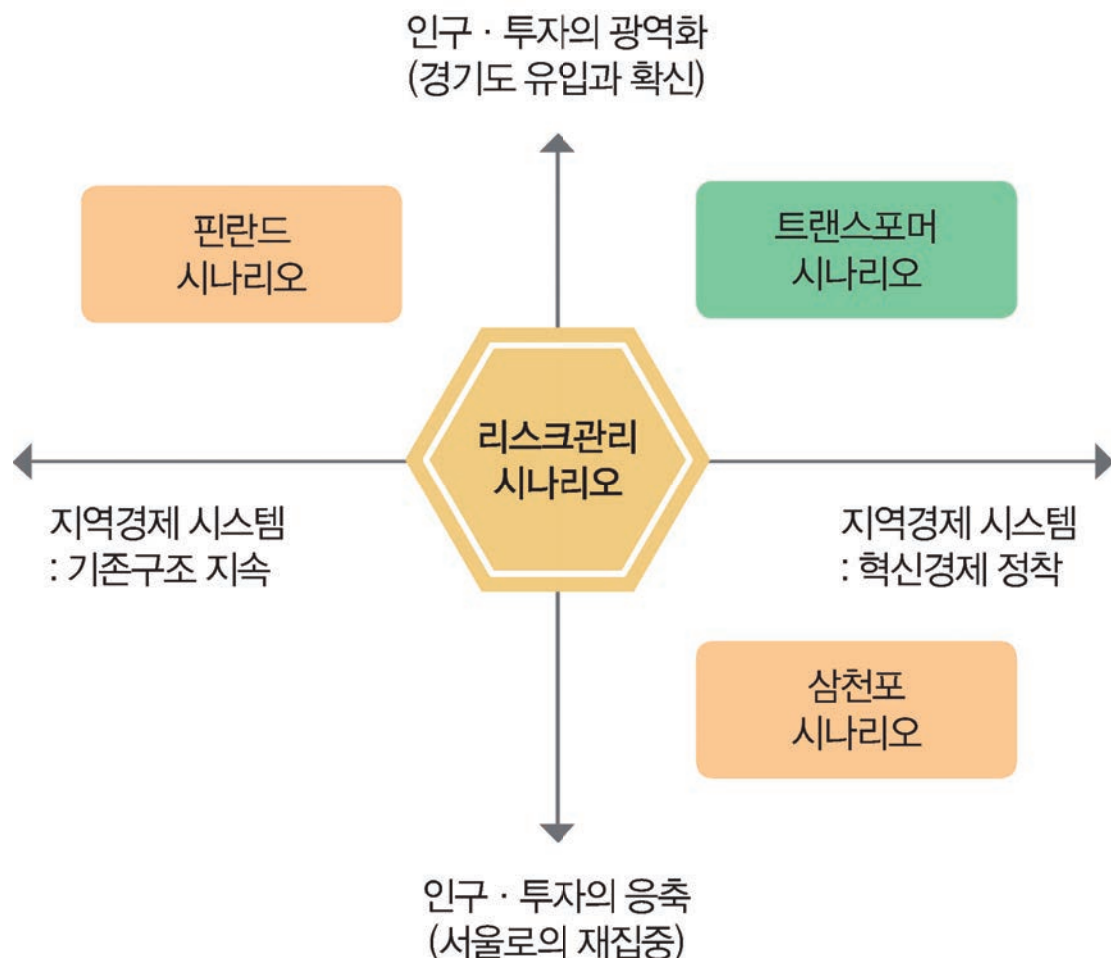
- 최근 삼성의 서초 R&D 캠퍼스, LG의 마곡 R&D 캠퍼스 조성은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변수곡일 수 있음

○ (핀란드 시나리오) 노키아 사례와 같이 경기도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S전자, H-K자동차, L전자, S반도체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 내지 침체 상황에 들어가서 경기도 경제사회구조가 주저앉는 시나리오

- 단·중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2040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고 변화가 많이 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 (트랜스포머 시나리오) 창업사회 DNA를 획득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경제시스템이 정착하고, 고용안정성에 많은 장점이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확대되어 주류 경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구조가 바뀌는 한편, 청년층·소상공인도 도전 의식이 높아지고, 도민의 경제·사회 참여도 역동적으로 바뀌는 시나리오

- 이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젊은 층과 지식 및 기술 있는 이주민들이 찾아오는 경기도가 되는 시나리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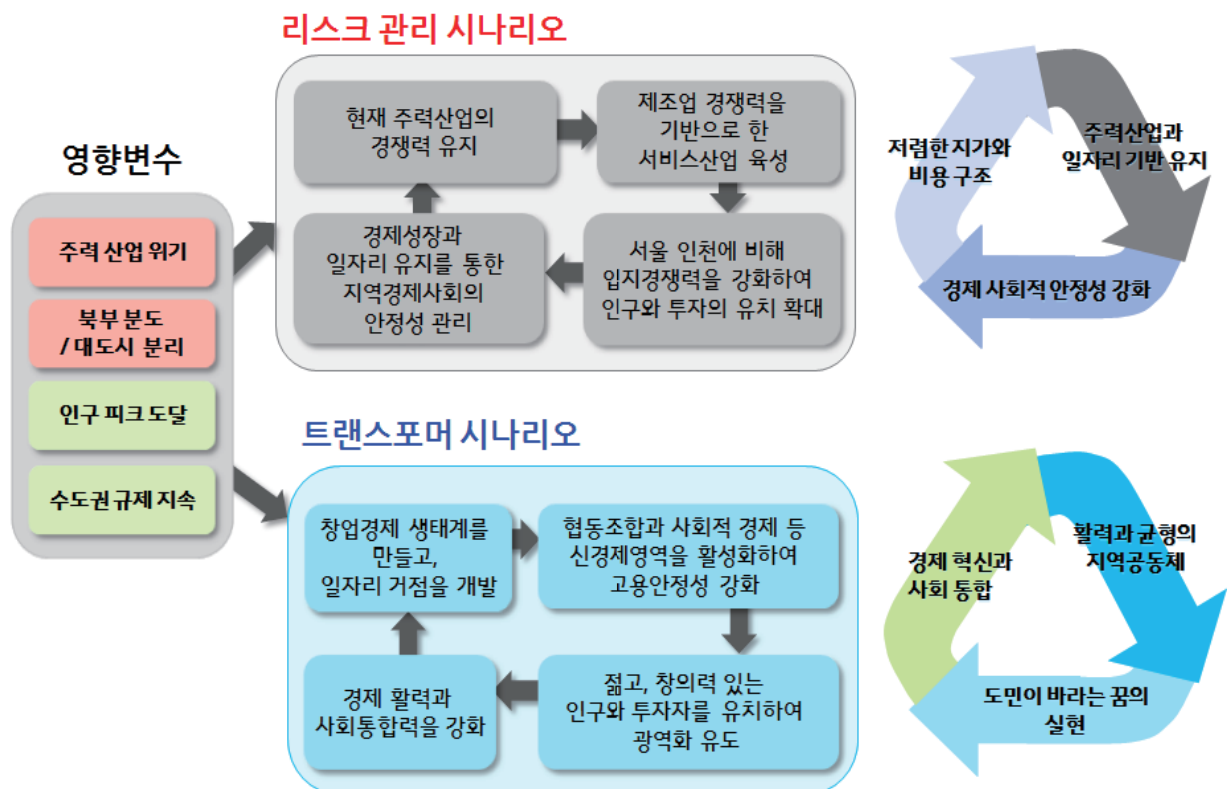


[그림 2-3-1] 경기도 미래의 4가지 시나리오

제2절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 시나리오

도민의 희망과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를 통해 ‘트랜스포머 시나리오’를 지향

- 향후 경기도의 미래는 현실 타파 노력과 혁신 의지가 없을 경우 ‘삼천포 시나리오’나 ‘핀란드 시나리오’로 굴러갈 가능성이 많음
- 우리가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최선이 ‘트랜스포머 시나리오’, 차선은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임
 - 경기도가 현재 경제, 사회, 공간구조를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비전 2040을 세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트랜스포머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으며, 최소한 차선으로서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로도 이행 가능함
- 트랜스포머 시나리오는 창업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일자리 거점을 개발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등 신경제영역을 활성화할 때, 고용안정성이 강화되고 젊고 창의력 있는 인구와 투자자가 유치되며 경기도로 인구와 투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제활력과 사회통합력이 강화된다는 시나리오임



[그림 2-3-2] 경기비전 2040의 미래 희망 시나리오

제4장

총론 비전과 전략

제1절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

 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 미래상

- 이전과 달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고, 물질적 성장보다 행복한 경기도를 지향하였고, 차세대 청소년층은 기회를 주는 경기도, 포용하는 경기도를 희망
- 도민·사회단체 참여단 원탁회의에서는 경기도 미래상으로 “랄랄라 행복한 경기도”를 제시하였음
- 세부 미래상으로는 지역과 세대가 골고루 발전하는 공존의 사회,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하고 콘텐츠가 있는 사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 생동감 넘치는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한 경기도를 희망
- 아울러 통일을 선도하는 경기도, 누구나 쉽게 접하는 경기복지시스템 구축사회, 삶의 기본권 보장과 여가와 문화, 나눔이 있는 경기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경기도,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경기도를 희망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는 비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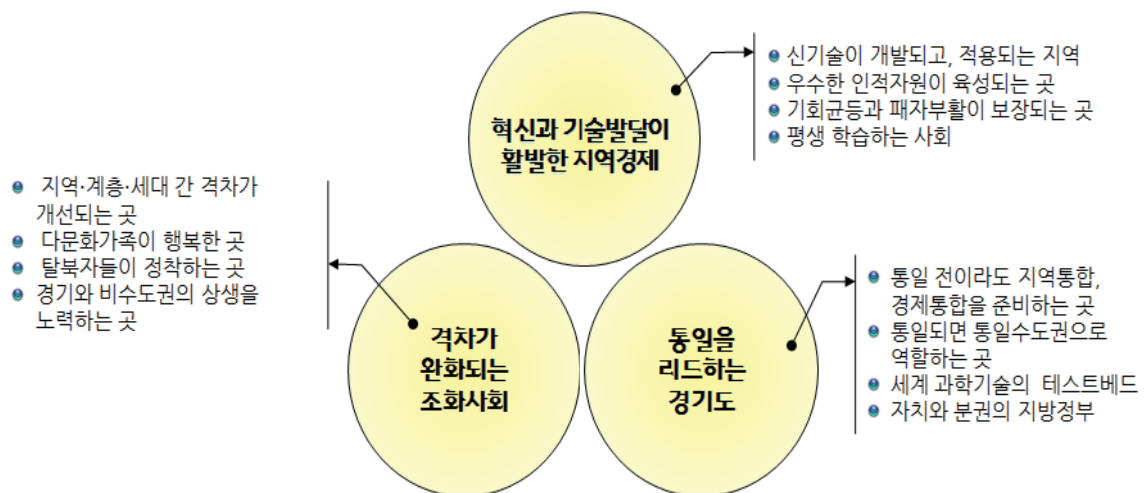
- 잠재성장을 저하, 인구 고령화, 수도권 규제정책 지속이라는 구조적 요인 외에 주력산업의 붕괴 가능성, 대도시의 분리 등과 같은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장기적 접근 필요
- 질적 웰빙 실현사회, 다계층·다문화 포용사회, 물리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균형, 더불어 사는 공동체, 글로벌 협력의 증대 등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는 이전과 다른 미래상과 비전을 요구
- 최근 주요 선진국의 비전들은 일자리를 위한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웰빙 사회, 전지구적 위기문제 대응 등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

■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은 “‘안전’, ‘풍요’, ‘행복’... ” 을 구현

- 도민이 희망하는 미래상과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비전의 기반이 되는 가치를 ‘혁신’ (innovation), ‘공동체주의’, ‘자치와 분권’ 등으로 정립함
- 이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을 △ 혁신과 기술발달이 활발한 지역경제 △ 격차가 완화되는 조화사회 △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의 3가지로 설정

■ 바라는 미래상의 방향? “안전 풍요 행복...” 을 구현

- ▶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 : **질적 웰빙 실현사회, 다계층·다문화 포용사회, 물리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균형, 더불어사는 공동체, 글로벌 협력**
- ▶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비전 설정 : **혁신 (Innovation), 공동체주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미래상**



[그림 2-4-1]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

제2절 총론 비전과 전략

1. 가치와 철학 정립

(가치와 철학) 혁신(innovation), 공동체주의, 자치와 분권

- 미래 2040의 경기도는 혁신 (innovation), 공동체주의, 자치와 분권 등 3가지의 가치와 철학에서 출발
- 혁신 : 경기도가 비전의 실천과 구조적 개혁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것을 의미
- 공동체주의 : 인구가 많고, 이질적인 경기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의미
- 자치와 분권 :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치와 분권형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

2. 미래비전의 설정

민선6기 핵심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변화상

- (2020 변화상) 민선6기 도정의 혁신생태계(start-up city) 조성,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 체제, 공보육 강화, 4대 테마파크 조성, 공정무역, K-디자인 빌리지 등 주요 도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신성장 공식이 구축되고, 균등한 기회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도정의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에너지비전, 물비전, 통일경제특구 통일미래도시가 조성될 경우, 10년 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통일준비 및 북부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민선6기 사업 총 45개 사업 중 사업량이 정해진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반구축 및 10년간 생산·운영효과로 투입되는 22조 9,846억 원은 전국적으로 39조 6,416억 원의 생산, 14조 6,052억 원의 부가가치, 47만 8,443명의 취업(고용+자영), 34만 7,463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보임
 - 또 경기도에서는 생산 28조 6,244억 원(전국 생산유발효과의 72.2%), 부가가치 11조 647억 원 (75.8%), 취업 35만 1,472명(73.5%), 고용 26만 1,651명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

- 경기도에서는 생산 28조 6,244억 원(전국 생산유발효과의 72.2%), 부가가치 11조 647억 원(75.8%), 취업 35만 1,472명(73.5%), 고용 26만 1,651명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
- (2030 변화상)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도시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추진, 저출산 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장수건강시범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30년경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들은 세계 수위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임

(2040 미래비전의 설정)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 도민이 바라고, 경기도가 가진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을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으로 설정
- 활력 있는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경기도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와 국내외 인재들이 모여드는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한 비전
-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는 경기 남·북부, 도시와 농촌, 신·구시가지의 격차가 심하고, 젊은 층의 실업과 노령층의 빈곤이 극심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화합하지 못하는 ‘뿔뿔이 경기도’를 하나로 묶고,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행복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



[그림 2-4-2] 단계별 미래상과 2040 비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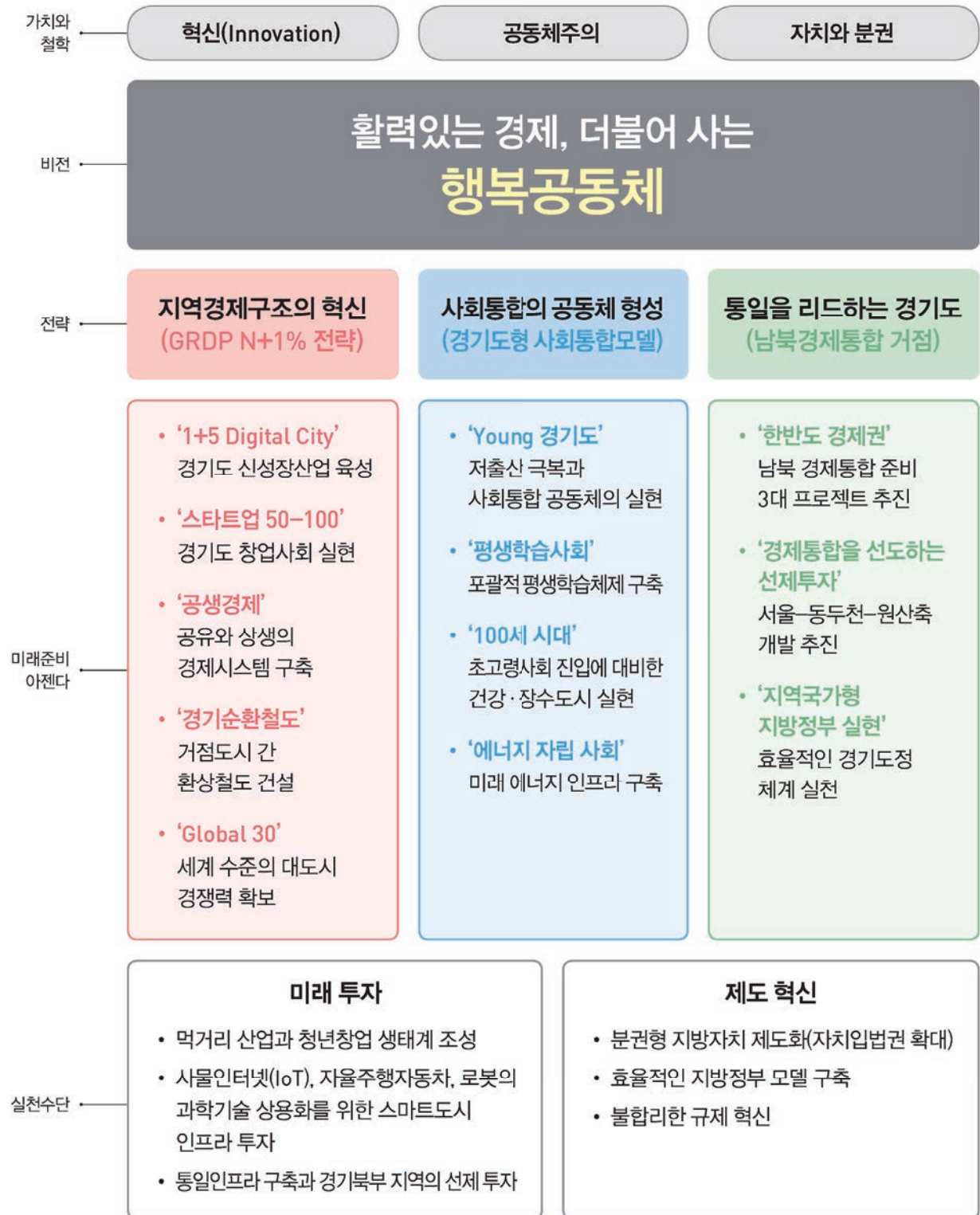
3. 경기비전 2040 미래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3대 전략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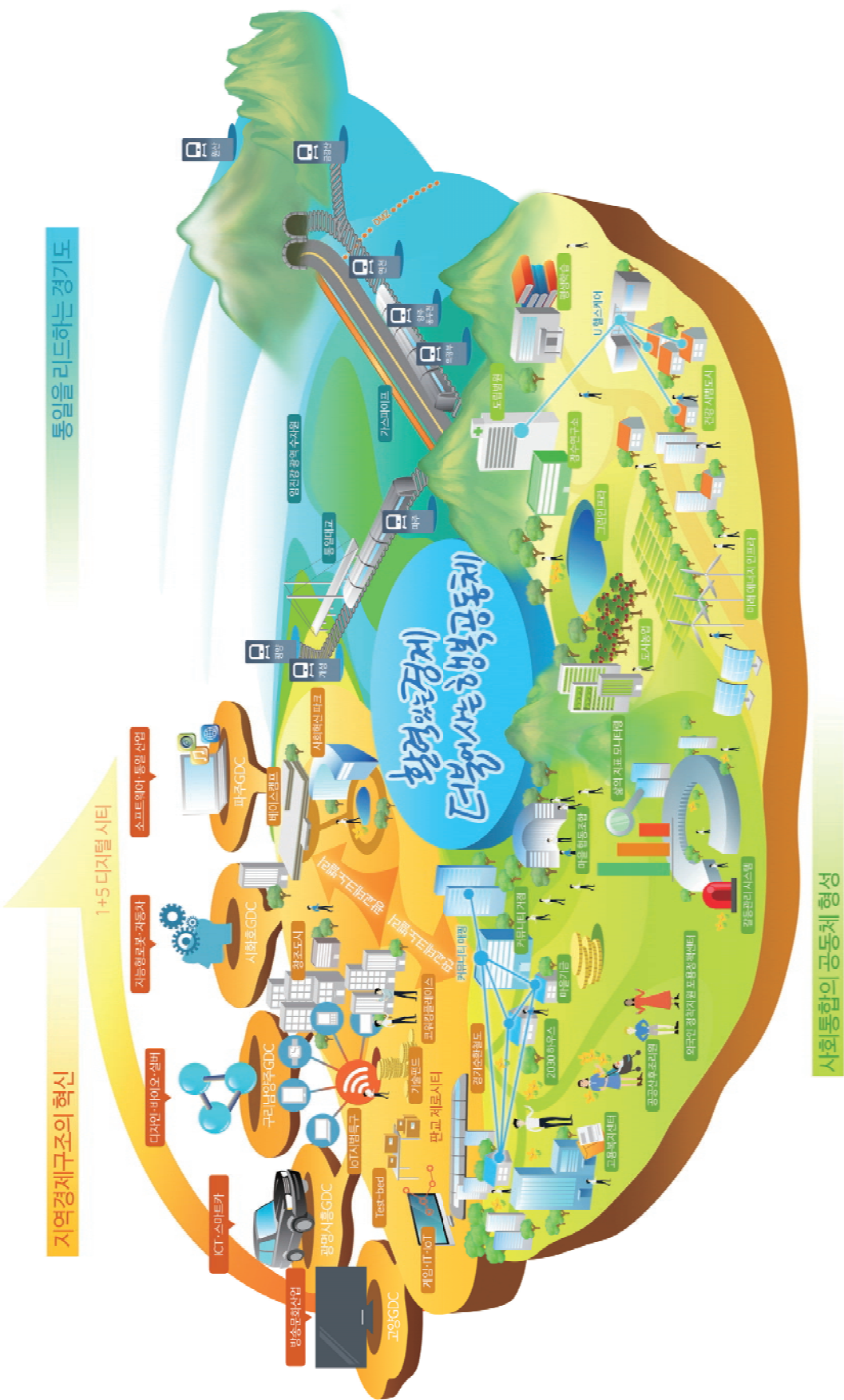
- 지역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한 GRDP N+1% 전략
 -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 ‘공생경제’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 ‘Global 30’ 도내 5대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
-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을 통해 사회통합의 행복공동체를 형성하는 전략
 - ‘Young 경기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
 -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 실현
 - ‘에너지 자립 사회’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하여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 ‘한반도 경제권’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
 -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추진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구축

(실천 수단) 미래 투자와 제도 혁신을 통해 비전을 성취

- 현재 투자가 아닌 미래 투자를 통해 비전을 성취
 -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과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에 선제적 투자
 -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과학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사전 구축
 - 남북한 경제통합을 선도하고,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통일 인프라 구축과 경기북부지역의 선제 투자
- 재정적 소요를 유발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제도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실천
 - 분권형 지방자치 제도화(자치입법권 확대)
 - 효율적인 지방정부 모델 구축
 - 불합리한 규제 혁신



[그림 2-4-3] 경기비전 2040의 총론 비전과 전략



[그림 2-4-4] 총론 비전의 미래상

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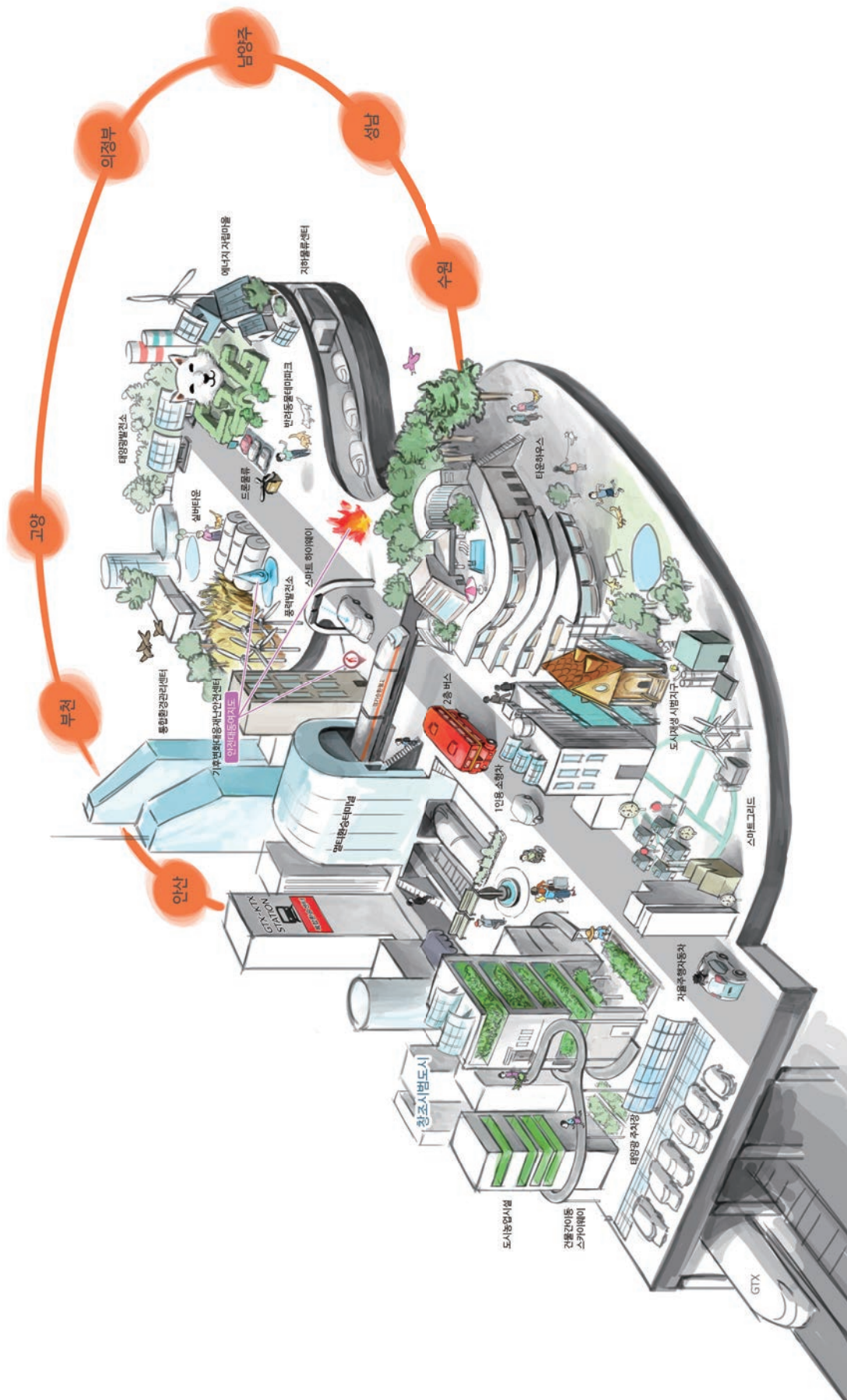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경제 부문,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교육·문화·관광 부문, 공간 부문, 교통 부문, 환경·에너지 부문,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 지방행정 부문으로 나누어 총 58개의 미래지표로 제시

[표 2-4-1]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점과 모니터링 지표로서 미래지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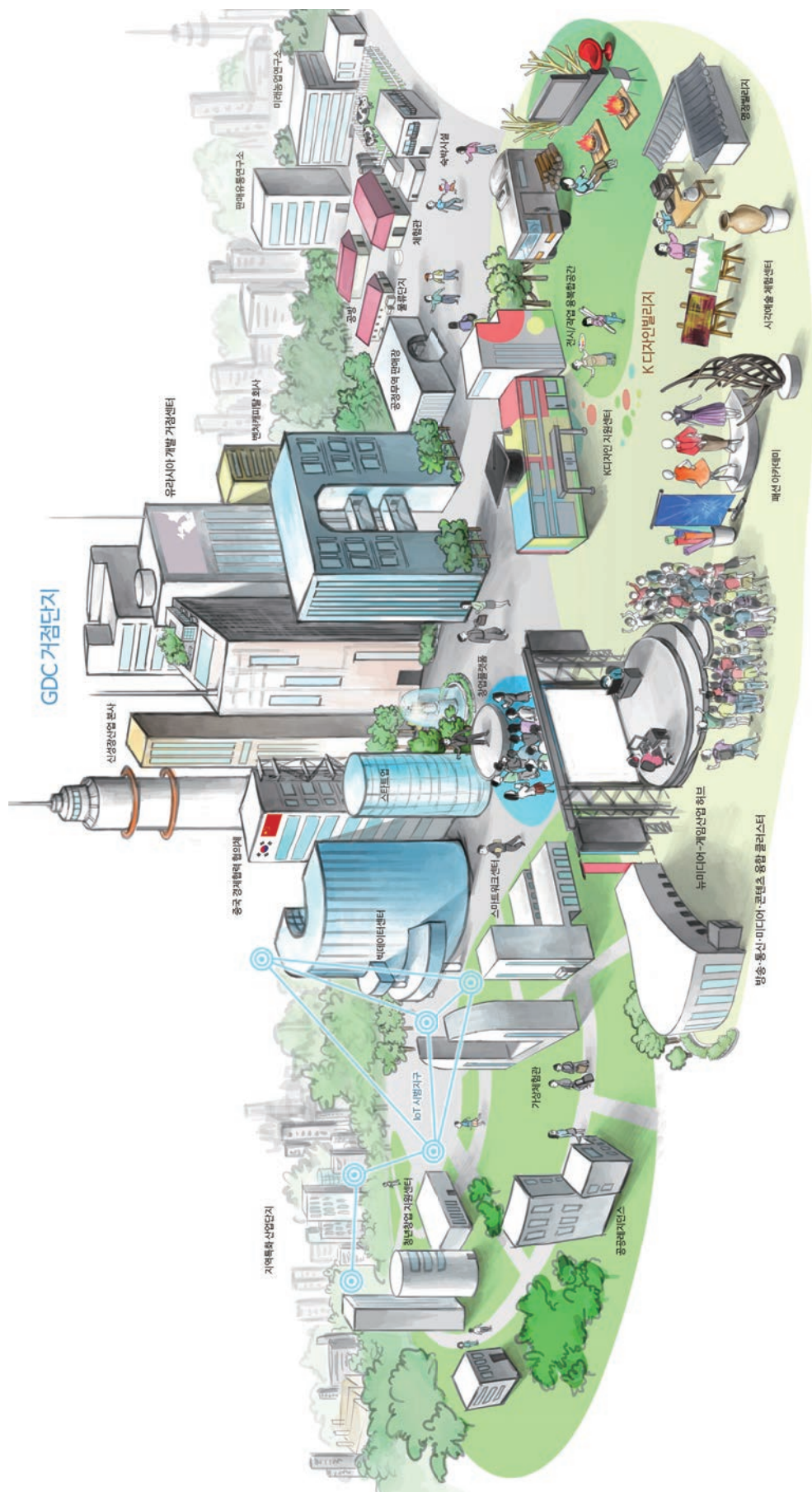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경제 부문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창업플랫폼 수(개)	(2015) 2	7	12	16	2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 성공률(%)	(2013) 47	49	52	56	60
		경기도 소재 벤처캐피탈 수(개)	(2015) 10	20	30	35	40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청년실업률(%)	(2014) 10.4	9	8	7.5	7
		GRDP 성장률(%)	(2013) 4.6	4.4	3.6	3.1	3.0
		고용률(%)	(2014) 56.4	59	62	64	67
		경기도 GRDP 중 북부 비중(%)	(2012) 18.0	20.0	22.0	24.0	25.0
	동북아 경제 거점화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액(억 달러)	(2014) 378	550	850	1,000	2,000
		대러시아 및 대중양아시아 수출액(억 달러)	(2014) 23	37	60	96	250
사회 통합과 복지 부문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빈곤율(%)	(2013) 19.2	17	16.5	16	15
		외국인수(만 명)	(2014) 35	40	57	70	90
		사회적경제기금(조)	(2015) —	—	0.5	1	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지역공동체수(개)	(2013) 863	1,200	1,800	2,600	3,000
		갈등발생 지속기간(일)	(2015) 500	450	350	280	180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015) 0	31개 시·군 전체 실시			
		지역사회 돌봄 자원봉사(천 명)	(2014) 180	241	316	392	639
	보건 의료 체계 강화	공공보건 의료 병상비율(%)	(2014) 10	12	18	22	30
교육·문화·관광 부문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2014) 4.3	20	25	30	50
		평생교육참여율(%)	(2014) 37	45	50	55	70
		스마트 학습센터(개)	(2014) 0	4개 권역 별 1개	4개 권역 별 2개	20	31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문화기반시설 수(개소/10만 명)	(2013) 3.3	4.0	4.5	5.0	5.5
		여가생활만족도(%)	(2014) 24.6	30	40	50	60
		생활체육참여율(%)	(2014) 0	20	30	40	50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개소)	(2014) 0	50	70	100	15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건)	(2015) 3	4	4	5	6
		관광숙박시설(실)	(2013) 13,000	41,304	53,508	65,563	81,238

	구분	미래지표	기준년도	2020	2025	2030	2040
공간 부문	경쟁력 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창조시범도시 수(곳)	(2015) 0	2	8	10	15
		디지털시티 수(곳)	(2015) 1	2	3	4	6
		세계 살기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수(개)	(2015) 0	0	0	2	5
	건강·장수·안전 도시 기반 조성	건강도시지수(지수)	(2009) -0.152	0.0000*	0.2350**	0.5000	0.8164***
	생활도시· 공공주거의 강화	인구 천인당 주택수(호)	(2010) 337	370	375	400	420
		공공임대주택수(천 호)	(2014) 285	350	400	525	650
		주거비부담(RIR, %)	(2010) 25	20	18	17	15
교통 부문	고속 교통서비스 제공	고속철도 확충 연장(km)	(2014) -	70.4	247.7	247.7	340.8
		광역 출퇴근시간(분)	(2014) 60	55	50	40	30
	대중교통의 대전환	대중교통 분담률(%)	(2014) 38	40	42	45	50
		대중교통 이용률(%)	(2015) 38.3	40	42	45	50
		개인 승용차 이용률(%)	(2014) 47	45	40	35	30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률(%)	(2015) -	-	5	10	20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경기북부 신규철도 연장(km)	(2015) -	14.5	83.4	137.6	137.6
	新 교통 도입 선도	카셰어링 분담률(%)	(2015) -	1	5	10	15
		스마트워크 비중(%)	(2015) 0.3	2	5	10	15
		전기자동차 보급률(%)	(2015) -	3	5	10	20
환경· 에너지 부문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대기오염(미세먼지($\mu\text{g}/\text{m}^3$))	(2014) 51	40	38	35	30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014) 33	30	25	20	15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2014) 40	50	55	60	80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도시생물 다양성 지수(CBI)	(2015)	31개 시·군 조사 완료		3년 단위로 평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5) -	67		68	70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량(GWh)	(2013) 1,964	5,300		16,700	33,600
		전력자립도(%)	(2013) 29.6	50	60	70	80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2014) 50	60	70	80	90
통일과 북부 발전 부문	남북통합과 북부발전	통일관련 특구 수(개)	(2015) -	1		2	4
		도민의 북한방문자 수(만 명)	(2014) 12.9	50	250	500	750
		ODA 지원규모 (경기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15) -	-	0.3	0.5	1
		접경지역 시·군의 1인당 GRDP (US\$)	(2013) 14,000	18,000	25,000	30,000	40,000
지방 행정 부문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자치사무비율(%)	(2015) -	10	15	20	40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기능 강화 전략	재정자립도(%)	(2015) 60.7	65	70	75	85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전략	주민참여도(%)	(2015) -	20	25	30	40

주: * 2012년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 ** 서울시 구 평균, *** 강남,서초,송파구 평균 수준을 의미



[그림 2-4-4] 공간 부문, 교통 부문, 환경·에너지 부문의 2040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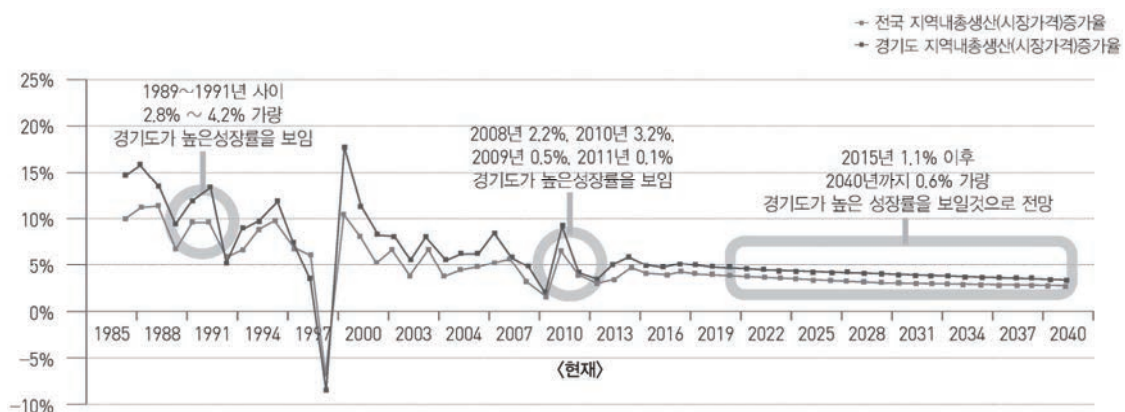
[그림 2-4-5] 경제 부문의 2040 미래상

제5장

미래준비 아젠다 추진전략

제1절 지역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한 GRDP N+1% 전략

- (필요성) 저성장에 대응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함
 - 경기도 지역경제성장률(GRDP 성장률)은 1989~1991년 동안은 전국 평균보다 2.8~4.2%나 높았던 적도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의 외부 쇼크가 오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경우도 발생
 - 자체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는 경기도 GRDP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포인트가 1%를 하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겨우 0.6% 더 성장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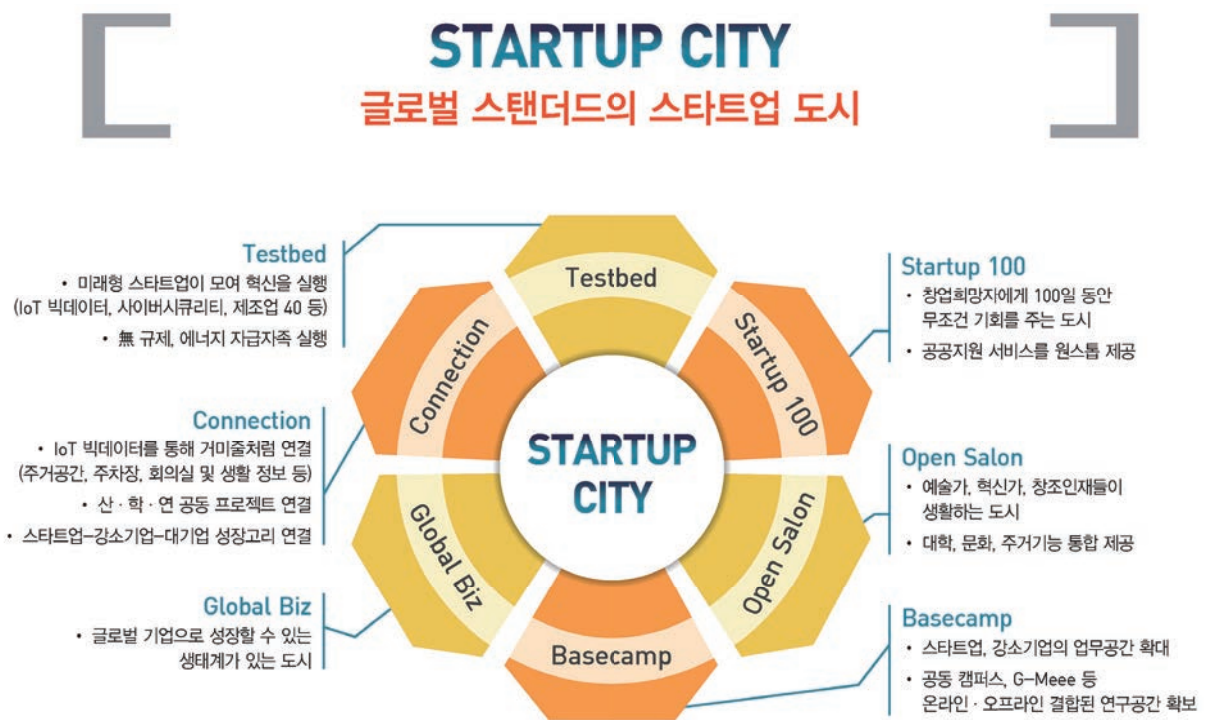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통계청(1985~2013년까지)
국회 예산정책처(2014), 2014~2060 장기 재정전망

[그림 2-5-1]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액 증가율 추이와 전망

- (대응방식) 판교테크노밸리 규모의 신성장산업 거점을 다수 개발하고(노동 자본투입전략), 여성·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로 일자리수를 늘리고(노동투입전략), 스마트 제조업 혁신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기술혁신전략), 경기순환철도 건설과 역세권 공간구조 형성 및 대도시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경제효율성 기반 개선) 경기도가 한국경제를 선도함
- (추진전략) △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 '공생경제'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 'Global 30' 세계 수준의 대도시 경쟁력 확보

🔑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실현

- 경기도를 창업 기회가 가장 많고, 실패도 용인하는 패자부활 창업사회로 전환
 - 판교테크노밸리, 거점도시 등에 창업 지원 시설, 창업 캠퍼스를 시범 조성
 - 2040년까지 스타트업 50만 개, 창업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 플랫폼 조성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확대
 - 기술창업 생태계 주체들의 네트워크 확대
 - 글로벌 스탠더드의 스타트업 시티(start-up city) 건설
 - ‘창업-성장-Exit-재투자’ 환경이 구비된 창업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창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며, 넥스트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스타트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단계임



[그림 2-5-3] 스타트업 시티 건설의 기본방향

‘공생경제’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 공유적 시장경제 시스템 형성

- 공유경제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활용하는 공유적 시장경제 시스템 형성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상생경제 생태계를 구축
- 시장경제 틀 속에서 공유경제를 접목하여 오픈 소스 - 오픈 플랫폼 기반 조성(지식, 정보, 자원 공유)
-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서비스 체제 구축
-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실현
- 경기도의 공유적 시장경제 정책 모델로서 ‘경기도주식회사’ 추진
- 브랜드를 공유하여 각 제품별 브랜드 디자인 및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제품 홍보 마케팅을 추진
- 온라인 장터, 물류, 간편결제 등 공유기능 개발

○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서비스 체제 구축

- 공동체 축진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 형성
 -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센터 구축으로 주민-제3섹터-행정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연계고리 형성
- 지역자산 동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
 - 지역공동체 진단 지표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강화 위한 마을기금, 지역화폐 도입

○ 사회적 경제 금융과 클러스터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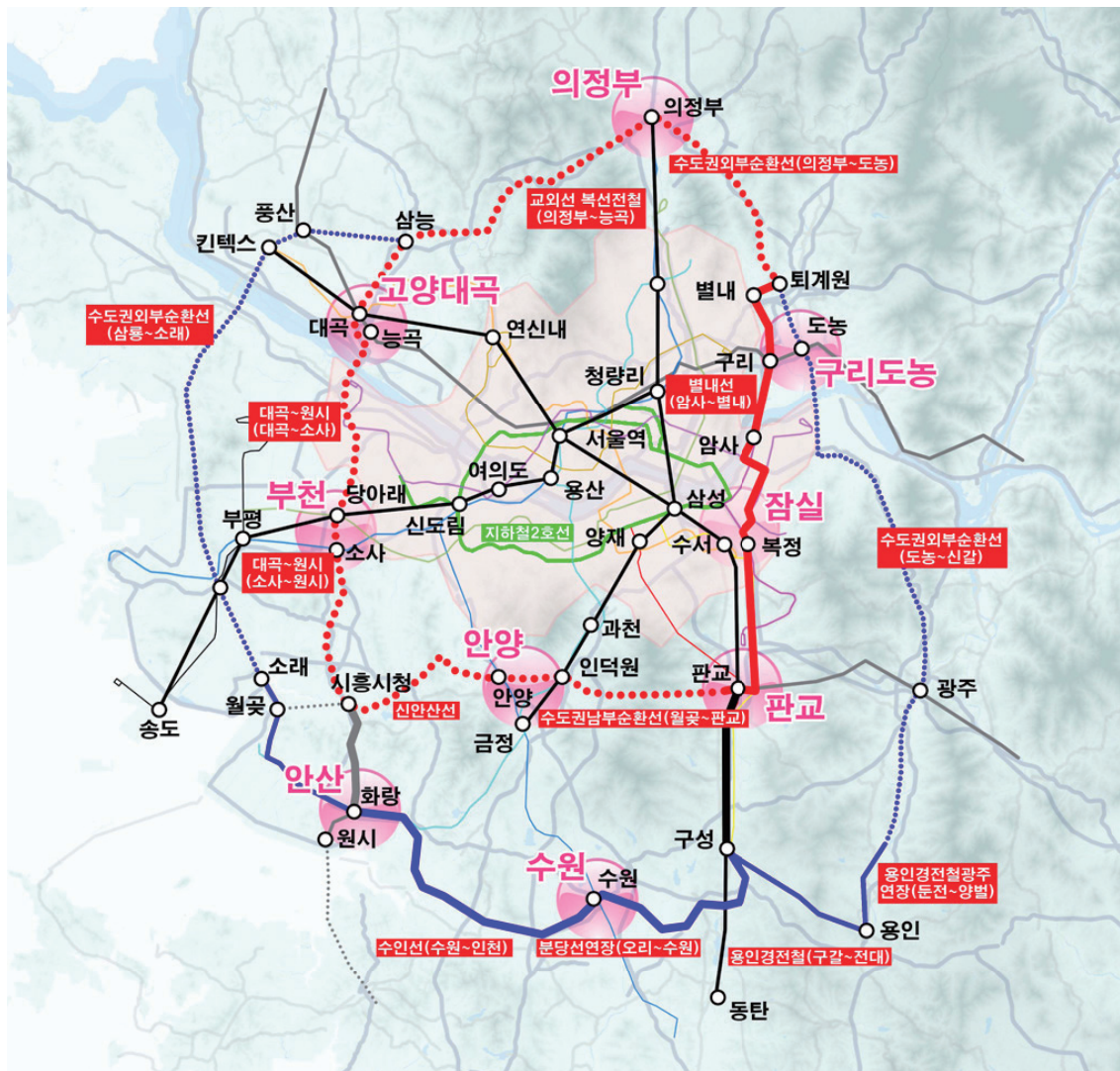
-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운용되는 기금, 보증, 금융의 도입
- 지역단위 협력 촉진 및 혁신 실험의 장으로서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구축
- 1인 창조기업 및 중소기업 수준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형성



[그림 2-5-4] 공유적 시장경제의 접근 방식

☑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 거점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수도권 KTX망 확대
 - 수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인천-수인선 KTX 연결로 경기도의 동서-남북권을 연결하는 구상 필요
 - 수서발 KTX 개통, KTX 의정부 연장, 수원역 KTX 확충 등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건설, 파주 등 경기북부권으로 연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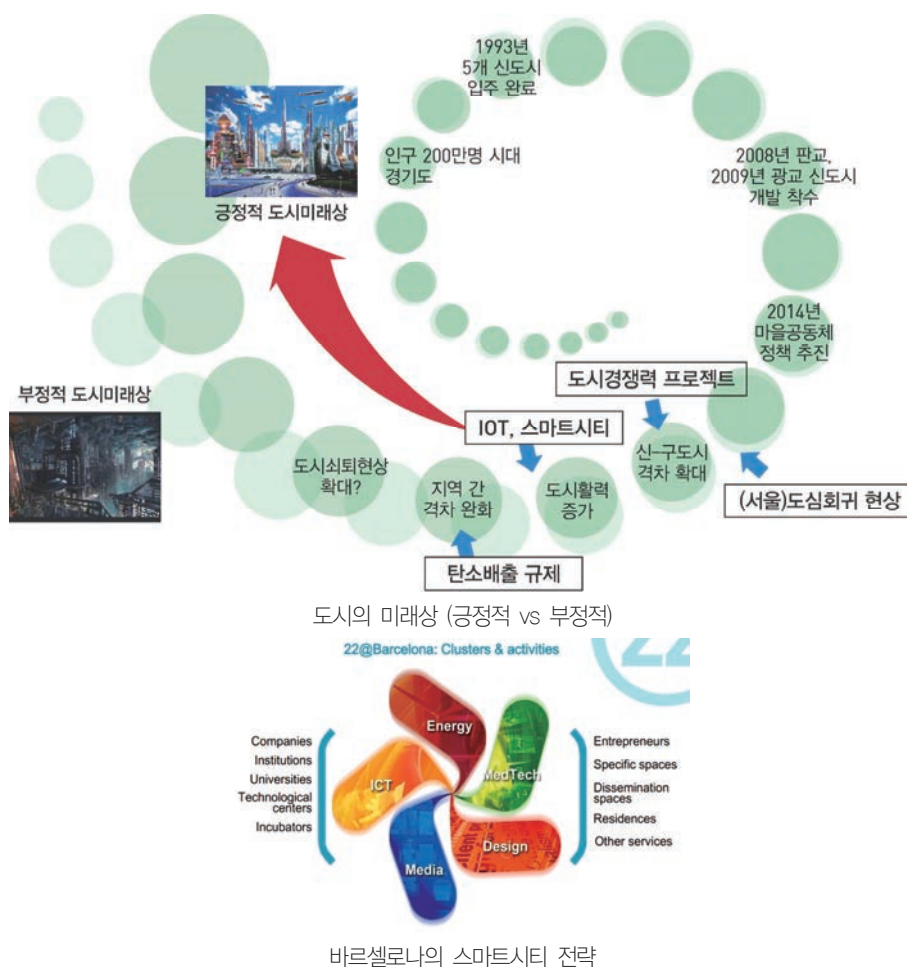


[그림 2-5-5] 경기순환철도망 건설 구상

-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으로 미건설구간(missing link) 연결
 - 신분당선-수인선-소사원시선-교외선 급행화
 - 교외선-별내선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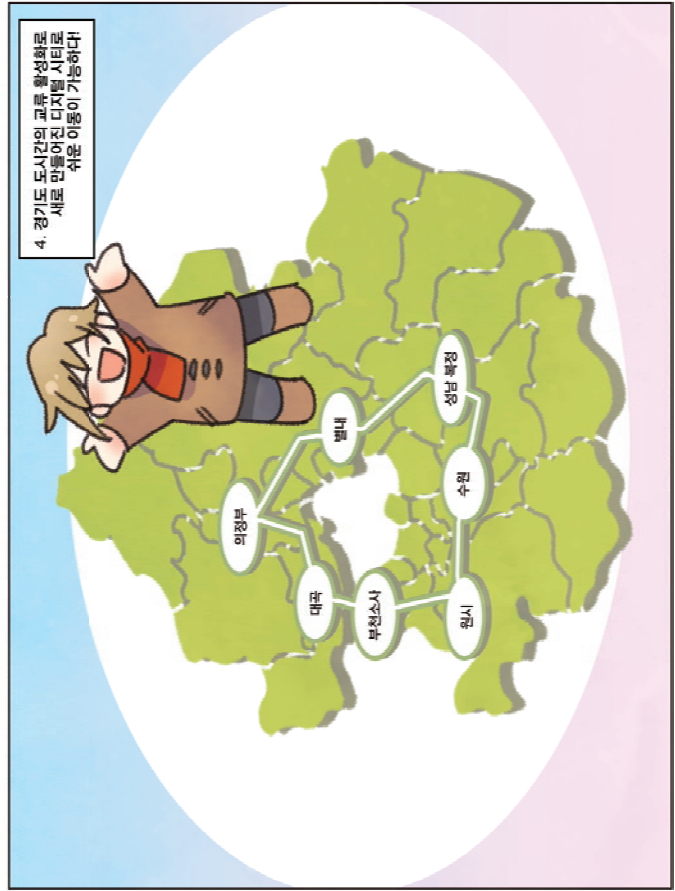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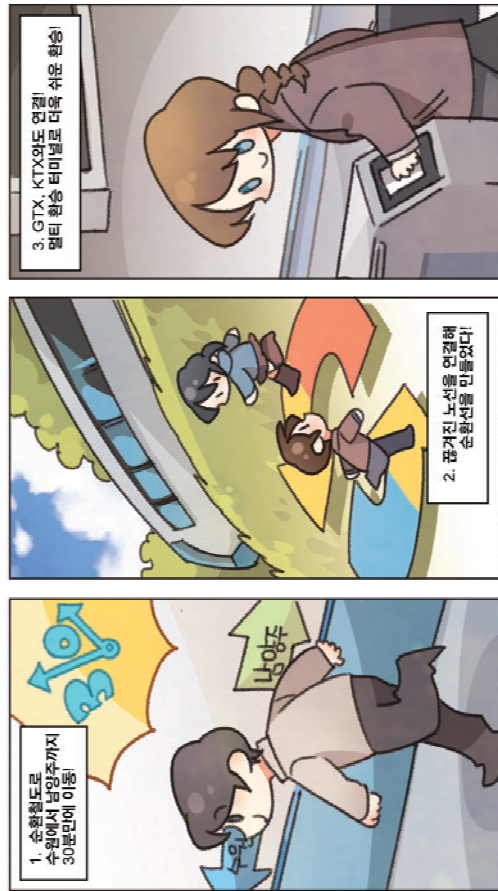
'Global 30' 세계 수준의 대도시 경쟁력 확보

- 물적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중심의 도시정책 추진 필요
 - 도 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등 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프로젝트 추진
 - 삶의 질 제고 프로젝트: 경기도형 '삶의 질 중심' 도시정책 추진과 '경기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 필요
 - '삶의 질 제고'에 관한 경기도조례 제정
 -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기구 '도시혁신센터'(가칭) 설치 운영: 스페인 빌바오시는 도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혁신파크 (SIP: Social Innovation Park)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그 중심 조직은 바스크 혁신센터 '데노킨'(Denokinn)
- 경기 스마트시티 시범지구(가칭) 지정
 -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을 통해 매 5년마다 2개씩의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함
 - 스마트시티의 유형을 문화도시형, 정보통신(ICT) 도시형, 디자인도시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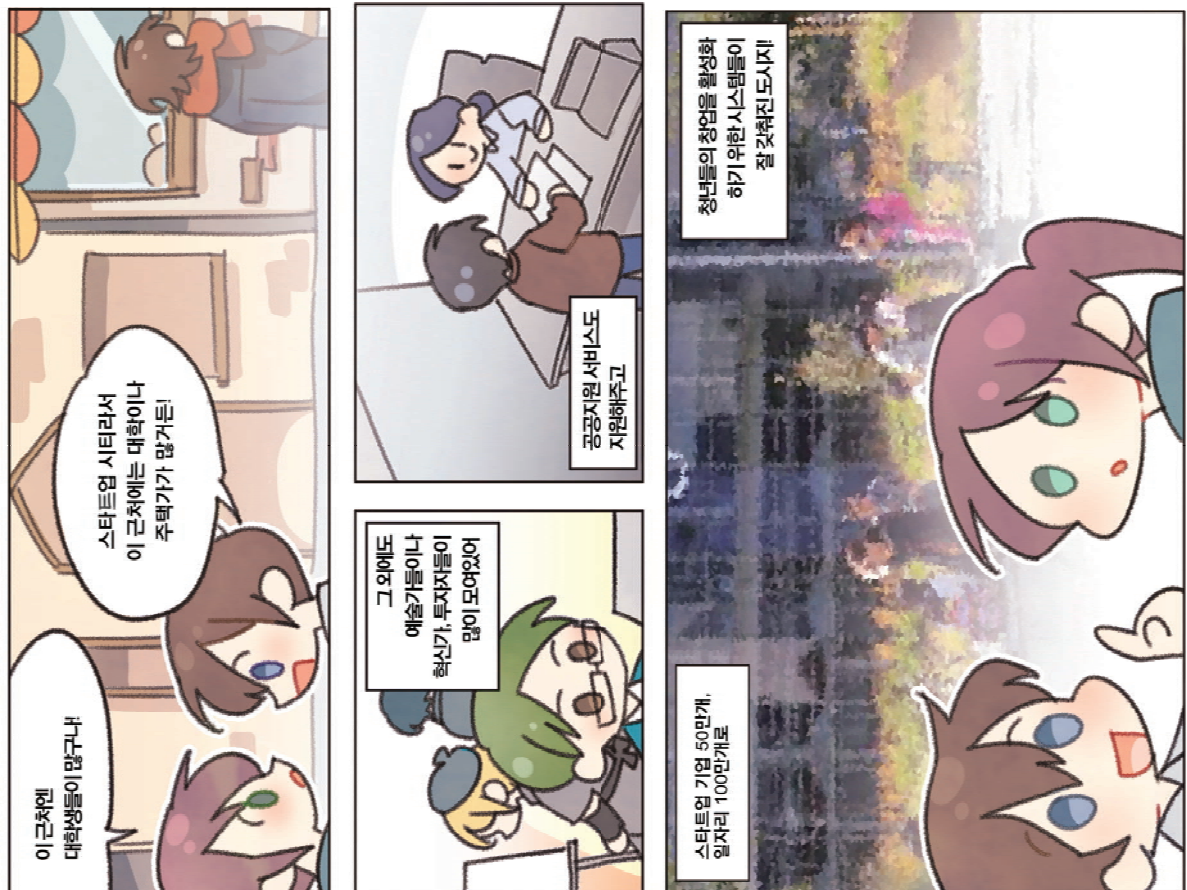


[그림 2-5-6] 도시의 미래상 구상

경기순환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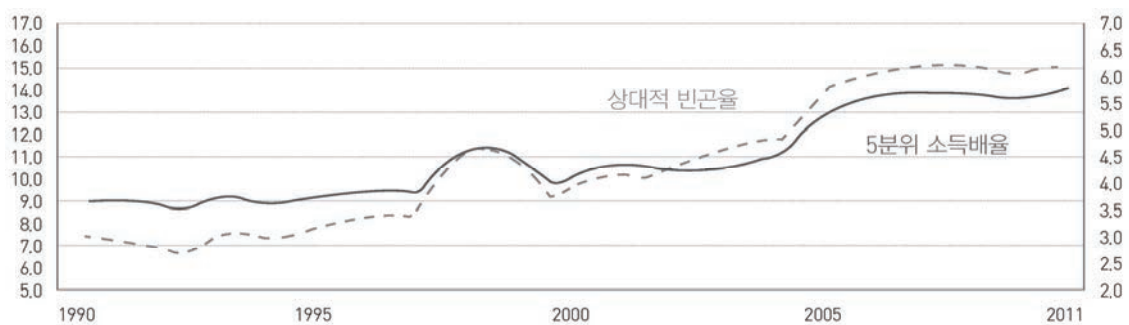
스타트업 50-100



제2절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을 통한 사회통합의 행복공동체 형성 전략

○ (필요성) 격차 개선을 통한 갈등 완화와 경기도민 공동체 의식 제고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커져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됨을 알 수 있음
- 또한 중위소득 50% 미만의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6.6%를 기록했지만 2014년 17.9%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와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5-7] 우리나라의 빈곤율과 소득격차 추이

가구 월평균소득 현황 전국 2인이상, 전체가구 명목소득 기준

단위: 원, %



주: 1) 전체 가구란 가구주(호적상의 호주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모두 포함)한 것임
2) 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소득분배지표



주: 1) 상대적빈곤율(%)은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인구비율을 나타냄
2)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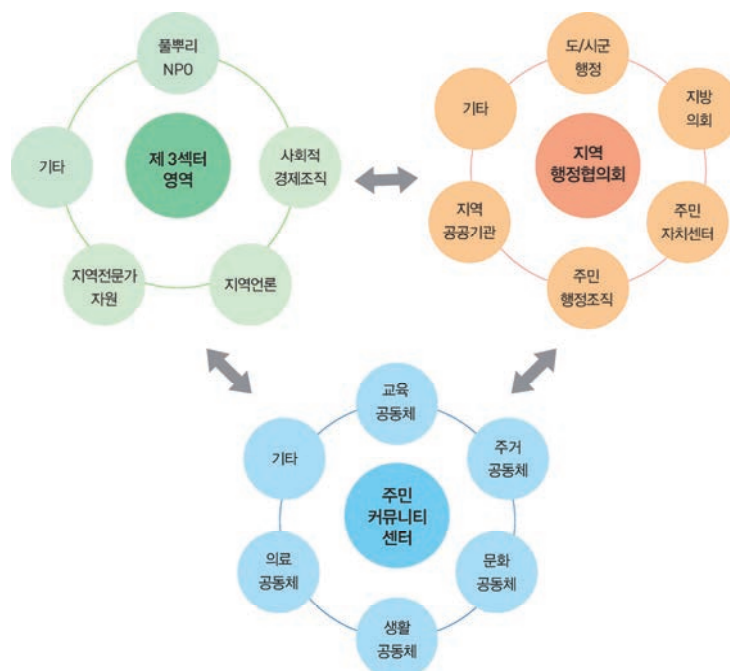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2-5-8] 가구 월평균 소득 현황과 소득 배분지표

- (대응방식)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여 고용복지 실현하고, 포괄적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인력개발과 성인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100세 시대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의 건강성을 높이고 웰 에이징(well aging)을 실현하며,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도내 어디서 살든지 환경가치를 누리는 사회를 실현
- (추진전략) △ 'Young 경기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 △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 실현 △ '에너지 자립 사회'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Young 경기도’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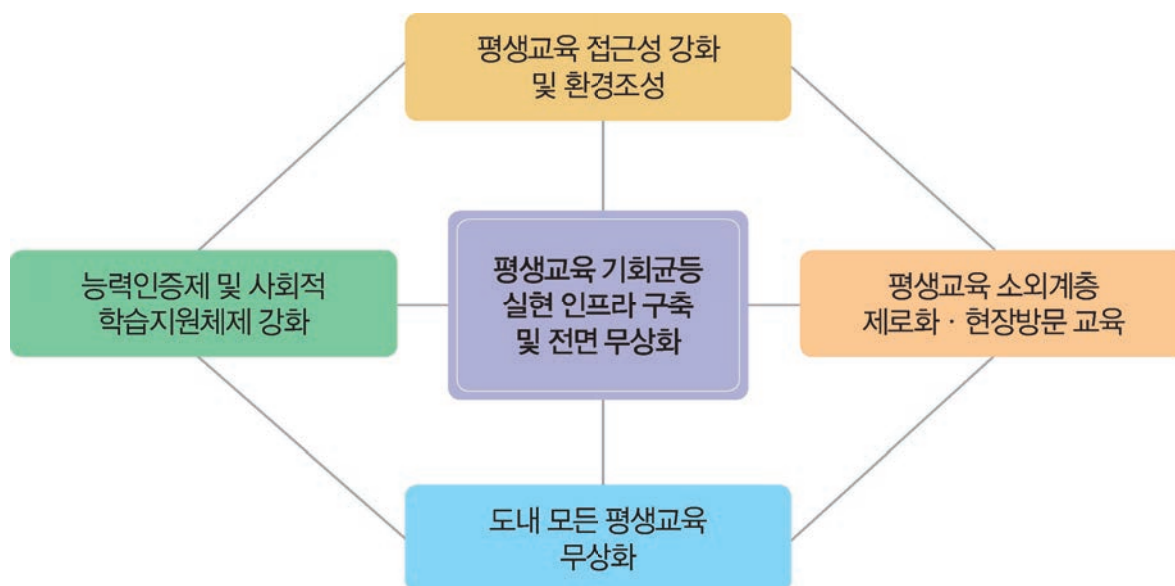
- 저출산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공동체를 만들어 젊은 경기도를 실현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세대의 일자리, 주거문제 해소 전략 추진
 - 청년, 여성, 장애인, 외국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낙후 취약지역 지원사업 확대
-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경기도 저출산 탈피 프로젝트’ 추진
 -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부모수당 도입, 출산장려금의 시·군 간 격차 조정
 - 여성의 사회활동과 가정(육아)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가정 병행’ 기반 마련
 - 육아휴직 아빠할당제, 유연근로제, 직무공유제 도입
 - 사회적 협동조합방식의 아이돌봄센터 추진
 - 청년 및 사회 초년층 주거 걱정 해소 프로젝트 추진
 - 도내 택지지구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서 청년주거용 임대주택, 청년 사회주택 공급 의무화
- 1,300만 도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경기도 공동체 전략 추진
 - 주민 주도의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 도내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장애인, 외국이주민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 구도심, 구시가지, 북부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우대
 - 도립병원을 활용한 취약지역 보건의료체계 개선
 - 경기지역학 진흥과 경기도 지역 스포츠단 활성화
 -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관리시스템 정비



[그림 2-5-9]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모형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 고령화로 인한 성인의 여가활동 증가와 더불어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회의 균등을 위한 무상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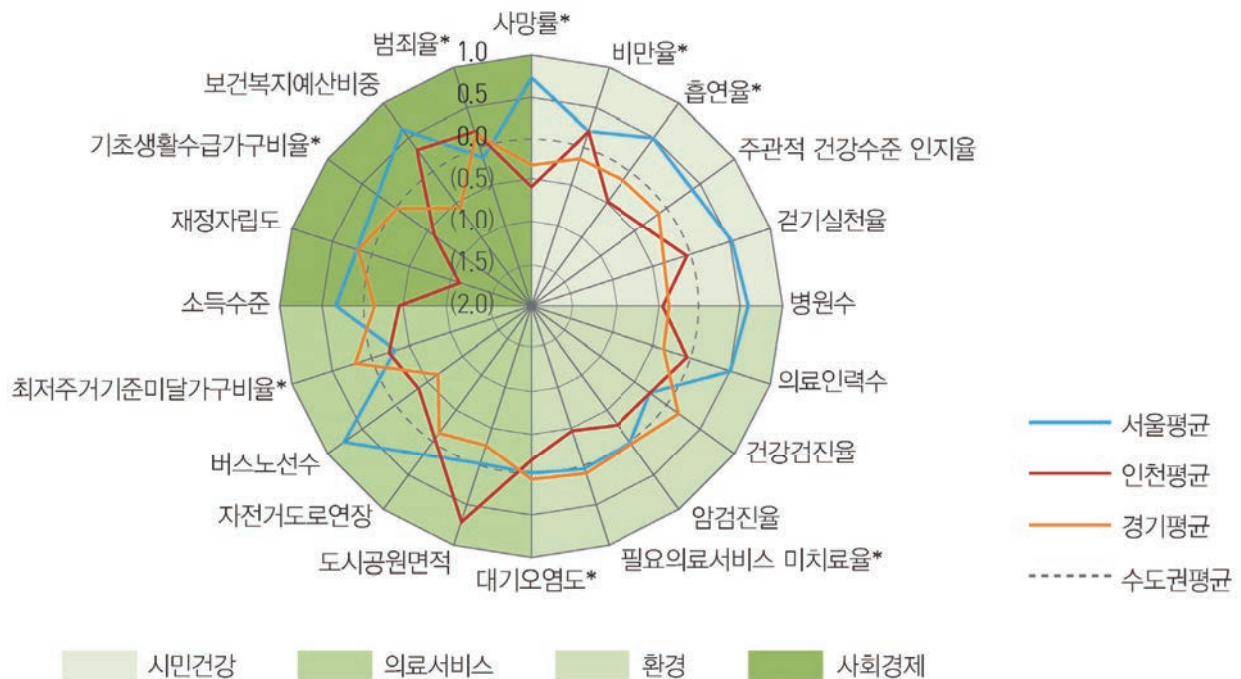


[그림 2-5-10] 평생교육 기회균등 실현 체계

- ‘기회를 다시 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제도화
 - 성인의 고등교육(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회의 확대
 - 성인 입학전형 확대, 학생이동 및 편입의 활성화
 -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구조 안에서 계속교육 및 순환재교육 시스템 구축
 -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연동, 비학위에서 학위로의 전환 확대
 - 대학 교육과정, 학점, 학위, 자격의 연계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 전일제 중심에서 시간제 병행으로의 전환,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의 융합
 - 학점은행제를 폐지하고, 대학 비학위과정 및 시간제 등록 안으로 편입
 - 현재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들은 기존 대학과의 협동과정으로 전환
-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인 기초교양대학 설치
 -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인 기초교양대학 설치
 - 성인 기초교양대학(60학점)을 통한 기초학업수행능력을 보완하고, 이후 3~4학년 전공과정에 편입

☐ '100세 시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 실현

-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친화 환경과 건강·장수 도시 인프라를 확충
 - '100세 인생' 시대에 걸맞은 고령친화 지역 환경 조성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 건강·장수도시 인프라 확충, 이미지 구축, 건강도시 추진 행정적 체계 마련



[그림 2-5-11] 건강장수도시 지표분석 (수도권 3개 시·도 비교)

- '100세 인생' 시대에 걸맞은 고령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 2040년 경기도 노인 자살률을 OECD 평균 이하로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추진
 - 노인 인적 자본 활용을 위해 70세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탄력퇴직제와 시간선택제 도입
 -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활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프로그램과 무장애도시(barrier-free) 시범 조성
 - 70대 초반인 건강수명을 80세 이상으로 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 공공 보건의료 비중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 (현재 10% → 미래 30%)
- 건강장수도시 실현을 위한 6대 과제 추진
 - 6개 도립병원을 활용한 노인건강 u-헬스케어체제 구축
 - 도시계획 수립 시 건강도시 개념 적용을 의무화
 - 건강시범도시 지정과 의(醫)—직(職)—주(住) 복합타운 건설
 - 국립 또는 도립 '장수연구소' 건립
 - 건강도시를 총괄 추진하는 조직 신설
 -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법률 정비 추진

100세시대 건강장수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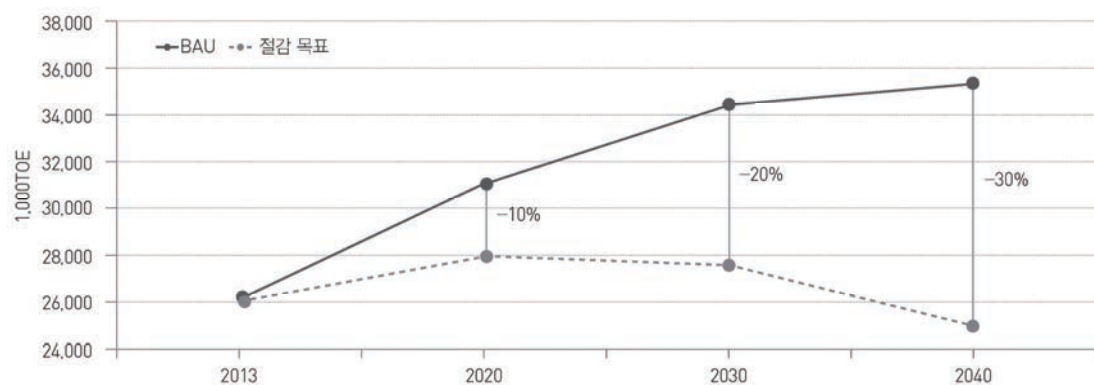


Young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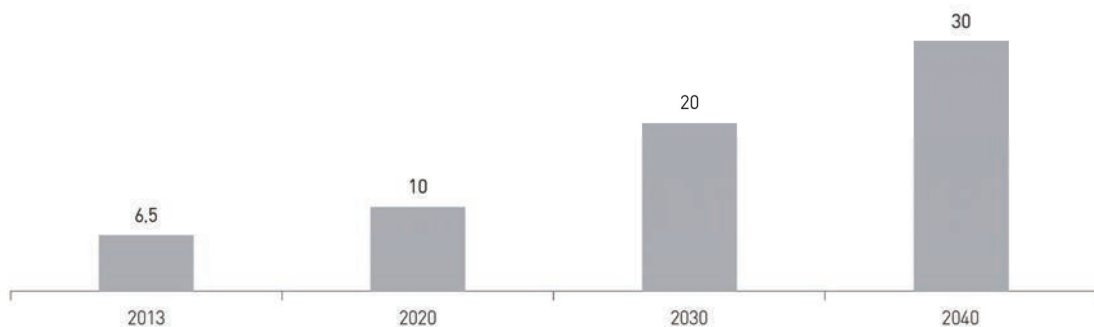
🔋 '에너지 자립 사회'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 타 지역에 소재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깨끗하고 안전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확대
 - 태양광 발전 확대 & 에너지 다소비 구역, 산단에 연료전지 활용
 - 시화호를 중심으로 해양에너지/해상 풍력 확대
 - 바이오 에너지 생산 & 노후열병합 개선, 자가열병합 확대 & 폐기물 연료화
 -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HO)활용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네가와트(negawatt) 발전 전략을 추진
 - 건물에너지 효율화 & 스마트그리드 건설
 -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및 노후산업 그린 리모델링
-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소경제 대비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
 - 사물인터넷(IoT) 기반 개방형 수요관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등 IT와 에너지 융복합 밸류체인 기업이 집적된 신산업 허브 조성
 - 경기북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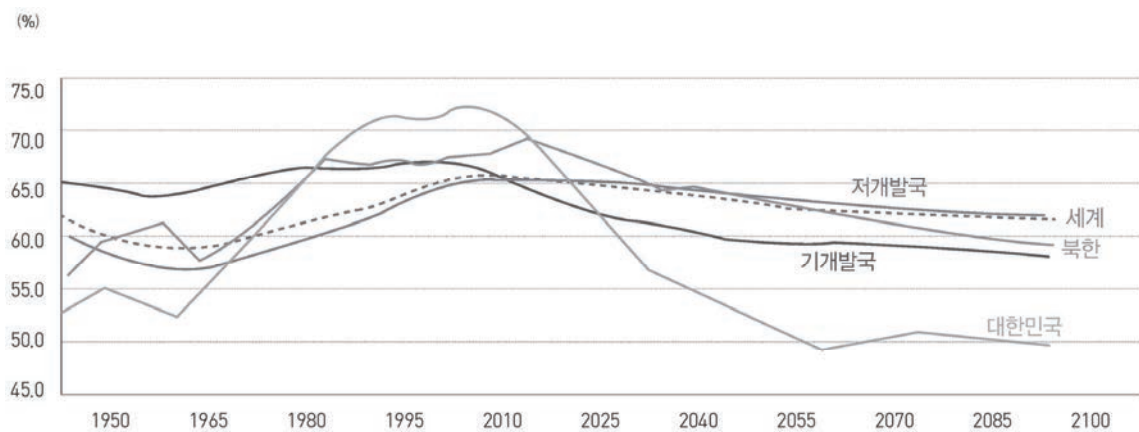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림 2-5-12] 에너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3절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하여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 (필요성) 정치적 통일 논의를 벗어나 경제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선도하고, 경기도정도 효율적인 정책체제를 구축하여 북부접경지역의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 저성장 기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재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남북한 공존 공영의 틀을 마련
 - 지난 20여 년간 추진한 북부접경지역 발전 정책의 부진함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
 - 지방자치와 경영의 시대에 대응하여 경기도정이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과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그림 2-5-13] 고령화 추세 비교(남·북한, 기개발국과 저개발국, 세계)

- (대응방식)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비전(가칭 금강산 프로젝트)을 추진하여 경기도가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이 되어 한반도의 번영을 주도
- (추진전략) △ '한반도 경제권'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추진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를 구축

📌 ‘한반도 경제권’ 남북 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긴장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통합 기반을 조성하며, 남측의 접경지역과 북한의 여행금지지역을 통합한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을 포함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전략 추진
- 남북 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의 추진
 - 남북한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제통합 특별지대 조성
 - DMZ · 임진강 · 서해안 3개축 발전
 - 남북교류와 통일 공공외교 추진

[표 2-5-1] 남북 경제통합 특별지대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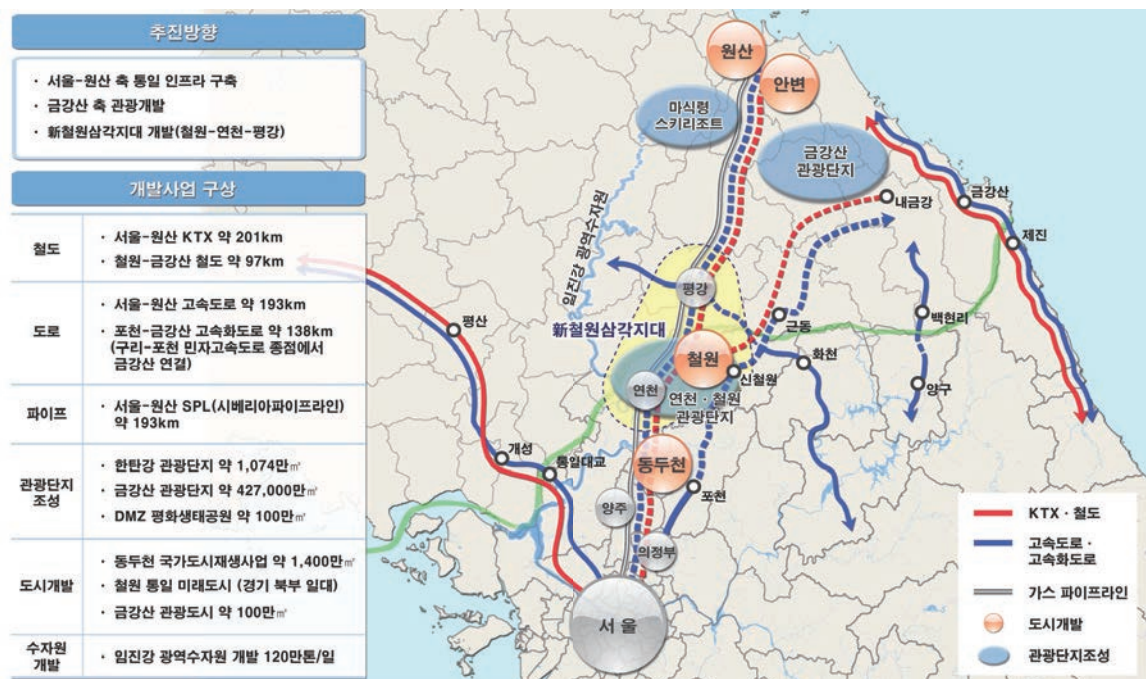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 최대의 자율과 책임, 투명성 - 남북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혹은 한국인 행정장관	
운영체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자치	- 일국양제방식 - 외교, 국방 제외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제도, 사유재산제	
위치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이내	
규모	중국의 푸둥(1.6억평)이나 싱가포르(1.8억평)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면적	개성, 파주, 김포, 강화, 철원 일원
특징	남북한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공동체 실험장	복합형 경제특구



[그림 2-5-14] 임진강 수계 종합 수자원이용체계 구상도

☑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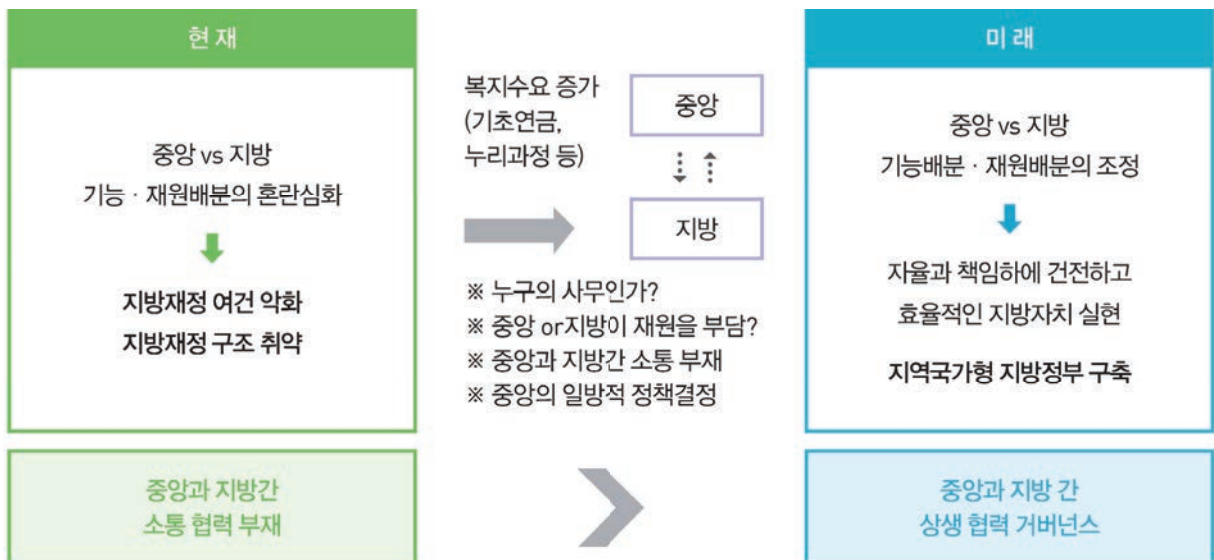
-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비전 (가칭 금강산 프로젝트) 추진
 - 서울-원산축을 잇는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통합을 선도
- 서울-원산 간 철도, 고속도로,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의 일체적 건설, 금강산-마식령-연천 고대산 관광단지 조성, 동두천·철원 도시르네상스 등 추진
- 신철원삼각지대(철원-연천-평강) 개발
 -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KTX 및 도로 건설, 철원-금강산 철도 건설, 포천-금강산에 고속화도로 건설
 - 약 193km에 걸친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건설
 - 한탄강 관광단지, 금강산 관광단지 등 거점이 되는 관광단지 건설,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 1,400만㎡ 규모의 동두천 국가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기북부 중심의 통일미래도시(철원 등), 금강산 관광도시 건설
 - 임진강 광역수자원개발 120만 톤/일



[그림 2-5-15] 금강산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및 개발 구상도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실천

- 지방자치와 경영의 시대 진입에 대응한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도정체계의 구축
 - 지방재정의 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재정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 사회복지비 등 법정무지출 경비 증가, 지방채 규모 증가, 방만한 재정운용 사례 등 재원의 총량보다 재원배분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
- 자치헌법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권한을 재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재정자주권을 중심으로 광역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가능한 자치분권형 지방정부 구현
 - 8개 도(道)의 획일적 구조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광역행정수요 대응
- 인구 규모, 경제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 인구 500만, 1000만 등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차등분권체제를 조성함
 - 예) 연방제형 지방정부(미국, 독일 등), 지역국가형 지방정부(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



[그림 2-5-16]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제 3 편

부문편

- 제1장 |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 제2장 |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
- 제3장 | 교육혁신·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
- 제4장 |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 제5장 |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 제6장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 제7장 |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 제8장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제 1 장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비전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목표 아시아 최고의 혁신역량 보유
(혁신 네트워크 허브)

안정적인 상생 성장체계 실현
(3%대 성장 下 경제적 불평등
Zero)

전략 1-1.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1-2.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1-3. 동북아 경제 거점화



제1절

경제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경제성장률 둔화)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하락세

- 경기도 GR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1~2005년 6.9%, 2006~2010년 5.9%, 2010~2013년 3.6%로 빠른 하락세
- 민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6.5%, 4.4%, 2.9%로 하락하였고, 총고정자본형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1%, 4.1%, -0.8%로 하락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그림 3-1-1] 경기도 경제성장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그림 3-1-2] 경기도 민간소비 및 고정자본형성 추이

- 경기도의 연평균 취업자 수는 2006~2010년 5년간 12만 6천 명 증가에서 2011~2014년 5년간 13만 8천 명 증가로 확대되어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나타남

(ICT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경기도 제조업 부가가치생산의 41.5%를 ICT가 담당

- 경기도 ICT제조업은 전국 점유율(2012년 부가가치생산 기준)이 46.1%이고, 경기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5%로 매우 높은 수준
- 경기도 ICT제조업 종사자수의 전국 점유율은 50.4%, 경기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
- 경기도 제조업 부가가치생산에서 반도체(비중 24.6%), 전자부품(7.7%), 통신·방송장비(7.3%) 등 ICT 제조업종이 상위 1~3위를 차지하고, 이들 3대 산업의 비중이 2002년 24.3%에서 2012년 39.6%로 상승

- 경기도 수출의 10대 품목 중에서 ICT 관련 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품목이 경기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39.9%임.

[표 3-1-1] 경기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10대 업종 변화

순위	2002년		2012년	
	제조업종	비중(%)	제조업종	비중(%)
1	반도체 제조업	15.8	반도체 제조업	24.6
2	컴퓨터·주변장치 제조업	8.0	전자부품 제조업	7.7
3	자동차·엔진 제조업	7.9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	7.3
4	전자부품 제조업	4.6	자동차·엔진 제조업	6.3
5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3	자동차 부품 제조업	4.7
6	의약품 제조업	4.3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1
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가구 제외)	4.0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1
8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	3.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6
9	자동차 부품 제조업	3.4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5
1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2

주: 음영부분은 ICT제조업을 의미

자료: 김정훈(2014), 경기도 산업구조의 특성과 국민경제적 역할, 경기연구원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이 전국 하위권

- 경기도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은 2,969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산업 대비 68.8%, 전국 평균(3,403만 원) 대비 87.2% 수준에 불과
- 경기도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2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7위, 제조업은 6위, 서비스업은 13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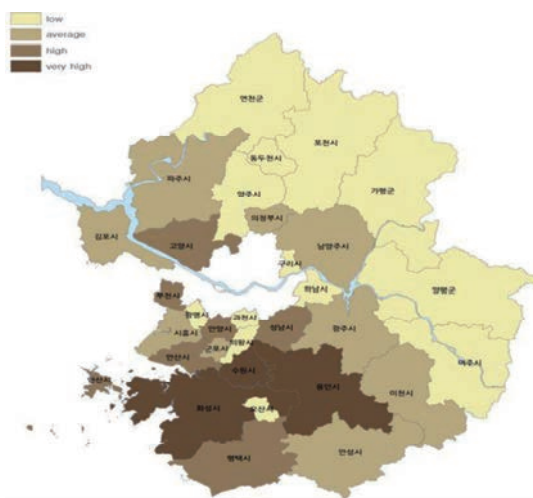
[표 3-1-2] 경기도 산업별 노동생산성 및 전국 순위

산 업	1인당 부가가치생산(만 원)	전국 순위
제조업	8,684	6
ICT제조업	18,487	4
자동차·트레일러	12,692	2
기타 기계·장비	5,725	1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5,040	8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5,100	11
서비스업	2,969	13
부동산업·임대업	14,409	7
도매·소매업	2,120	4
교육서비스업	2,732	1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6,827	9
금융및보험업	7,544	5

자료: 김정훈(2014), 경기도 산업구조의 특성과 국민경제적 역할, 경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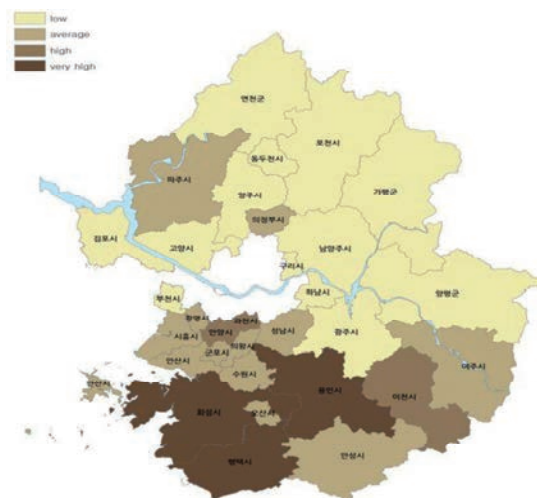
❏ (경기남부-북부 불균형)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간 경제력 격차 여전

- 2010~2012년 경기북부 시·군의 평균 GRDP는 경기남부 시·군 평균의 68.6%에 불과하고 1인당 부가가치생산도 92.2% 수준에 그침
- 1인당 GRDP의 7개 하위 시·군 중 6개가 경기북부지역에 속함
- 경기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나 미약한 수준 (2003~2005년 경기북부 시·군의 평균 GRDP는 경기남부 시·군의 66.6%, 1인당 GRDP는 91.7%)



자료: 김을식 외(2015), 경기 북부 시·군 경제력지수 개발 연구, 경기연구원

[그림 3-1-3] 경기도 시·군별 GRDP(201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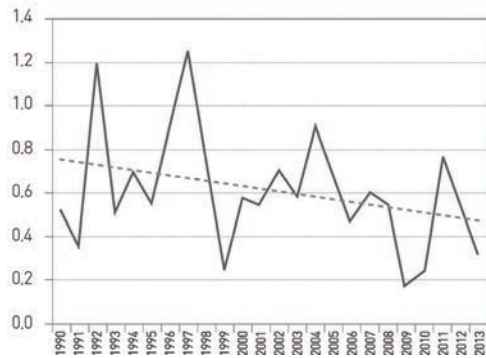
자료: 김을식 외(2015), 경기 북부 시·군 경제력지수 개발 연구, 경기연구원

[그림 3-1-4] 경기도 시·군별 1인당 부가가치생산(2010~2012)

❏ (일자리 창출력 저하) 경기도 고용탄력성 및 청년층 일자리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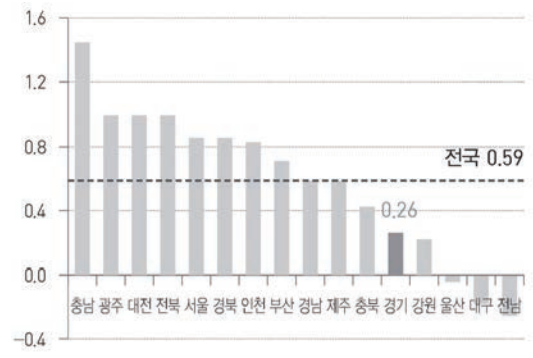
- 경기도 고용탄력성²⁾은 1990년대 연평균 0.69, 2000년대 연평균 0.55, 2010~2013년 연평균 0.45로 지속적인 하락세
- 고용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
- 경기도의 경우,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일자리 수의 증가 둔화(양적인 측면)와 단위 경제 성장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의 증가 둔화(질적인 측면)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 2013년 경기도의 고용탄력성은 0.26으로 전국 0.59(서울 0.86, 인천 0.83)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함

2) 고용탄력성 = 취업자 수 증가율 / GRDP 증가율.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그림 3-1-5] 경기도 고용탄력성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그림 3-1-6] 전국 시·도 고용탄력성 현황(2013년)

- 경기도 청년층(25~29세)의 취업자 수는 2001년 98.9만 명에서 2007년 108.8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4년 98.7만 명까지 감소
- 경기도 청년층 고용률은 2001년 47.4%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42.3%(전국 광역시·도 중 5위)까지 하락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7]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8] 경기도 청년층 고용률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1. 경제 환경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거시경제 측면의 메가트렌드

- 수도권 이점 약화 및 지역경제권역 확대
 - 가택근무 및 유연근무 확대, 물류 혁신 등으로 수도권의 산업입지 장점(집적효과)이 점차 약화
- 고속 대중교통망 확장으로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이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재편
- 노동시장 양분화 가속 및 고령층·여성층 고용 증가
 - 인공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산업에서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중간일자리 영역이 축소되고 감성노동 부문이 크게 확대
- 시장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공유경제 영역 확대
 -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소유’의 시대에서 ‘접근’의 시대로 이행)에 대한 필요성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경제영역이 크게 성장
- 정부-기업-시민 간 긴밀한 경제 거버넌스 강조
 - 공공서비스의 관료적 정책(하향식 계획)이나 시장기제 중시 정책(시장 인센티브)이라는 양극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협력적 경제 거버넌스가 중요 요소로 부각

 산업 측면의 메가트렌드

- 융복합 기술혁신 가속화에 따른 산업간 경계 약화
- IT, BT, NT, CT, MT 간 융합기술혁신(기술혁신의 비결정성)이 전 산업의 생산공정, 제품,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파급되면서 전통적인 산업분류 개념이 와해
- 기술창업 활성화로 산업집중도 약화
- 소비욕구의 다양화, 기술주기 단축,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방, 고급기술의 모듈화, 정부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기술형 창업이 비약적으로 증가
- 쌍방향 플랫폼 산업생태계 확산

- 네트워크의 자가증식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플랫폼 기반 경제영역이 부가가치생산 거점 역할을 확대하고, 플랫폼을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적 거래가 기술 및 자금을 포함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 영역으로 확산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급속한 성장
- 전통에너지 고갈, 지구온난화 심화 등으로 비전통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지역단위 혹은 공장단위의 자급형·분산형 에너지수급체계가 확대
-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기기, 소프트웨어가 비약적으로 발전

2. 2040년의 경제환경 전망

(세계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분업체제 확대 및 세계경제축 다원화

- 동남아 등 신흥경제권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면서 국제분업체제가 재편되고, 세계시장 및 국제무역의 확대
 -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2040년까지 전세계 GDP가 연평균 3.1% 성장하여 2010년에 비해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전세계 GDP 대비 수출 규모는 2010년 22%에서 2040년 26%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글로벌 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중국 중심의 아시아경제권, 미국 중심의 미주경제권, 독일·프랑스·영국 중심의 유럽경제권이 확대·강화되면서 중층적 국제무역질서가 확립

(한국경제 위상 상승) 2040년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국, 일인당 GDP 6만 달러 도달

- 인구증가율 하락, 개발도상국 이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의 하락세가 계속되겠으나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
 -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2011~2020년 4.1%에서 2031~2040년 1.7%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KDI)
- 한국경제의 GDP 규모는 2009년 세계 12위에서 2040년 세계 10위로 도약할 전망
 - 한국의 실질GDP(2005년 미국 달러화 기준)는 2009년 9,570억 달러에서 2040년 2조 7,9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1인당 실질GDP(2005년 미국 달러화 기준)는 2009년 19,804달러에서 2040년 60,0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표 3-1-3]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기간	GDP 성장률 (%)	기여도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2001~2009	4.2	2.0	1.5	0.7
2011~2020	4.1	1.9	0.9	1.3
2021~2030	2.8	1.4	0.2	1.2
2031~2040	1.7	0.9	-0.3	1.2

자료: KDI(2010), 「미래비전 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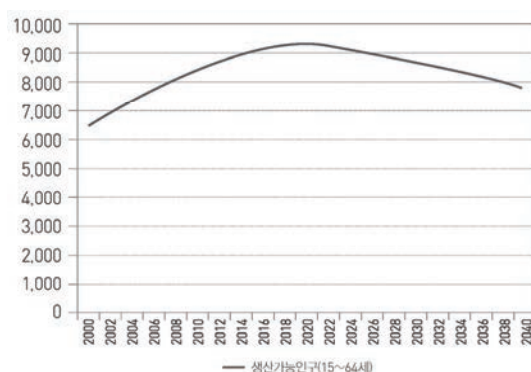
[표 3-1-4] 한국의 GDP 및 1인당 GDP 전망

연도	GDP (10억 US\$)	1인당 GDP (US\$)
2009	957	19,804
2020	1,650	33,000
2040	2,790	60,000

자료: KDI(2010), 「미래비전 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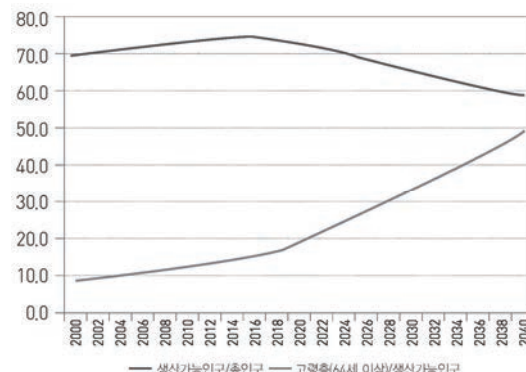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감소) 2020년 전후로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 경기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642만 명에서 2019년 939만 명으로 증가한 후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 77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경기도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0.2%에서 2016년 74.3%로 상승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40년 58.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
-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8.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40년 48.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건강한 고령층의 증가로 생산가능 연령층이 70대 중반으로 확대되어 고령층의 생산활동비중이 점차 확대될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3-1-9]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전망(천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3-1-10]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비중(%)

(잠재성장률 하락) 2040년 경기도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

- 경기도 잠재성장률은 2010~2015년 4%대 후반에서 2035~40년 2%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 같은 기간 전국 잠재성장률은 3%대 후반에서 2%대 초반으로 하락하여, 경기도의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날 전망
 - 경기도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실패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제기
- 경기도 잠재성장률 둔화는 인구구조의 변화, 투입주도형 경제의 한계 등에서 기인하며, 경기도가 성장 중심적 경제에서 안정 중심적 경제로 이행함을 의미

[표 3-1-5] 전국 및 경기도 잠재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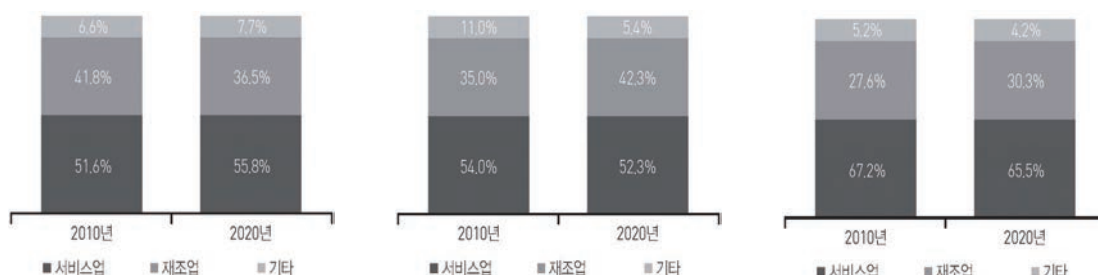
구분	기관	2016~20년	2021~25년	2026~30년	2031~35년	2036~40년
전국	KDI(2010)	4.1	2.8		1.7	
	국회예산정책처(2012)	3.4	3.0	2.5	2.2	2.1
경기도	유영성 외(2014)	3.1	2.2	1.1		
	GRI(2015)	4.5	4.0	3.3	2.9	2.7

(노동시장 양극화) 고급인력 확보 경쟁 및 소득분배 갈등 심화

- 기술혁신으로 인해 중간층 노동시장이 점차 약화되면서 고급인력과 저숙련인력으로 양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감성노동 기반 서비스업에서의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하겠으나 필요로 하는 숙련도가 낮아 저임금계층이 확대될 가능성
- 고급인력의 확보(양성)가 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반면, 저숙련 인력의 과잉으로 실업과 소득분배의 문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조직화, 갈등 요소의 조정 등 융복합 인지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전망
 - ※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 및 통일 시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 노동력의 숙련도가 낮아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
-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와 관련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할 전망

(경제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경계 약화

- 제조업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겠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융복합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의 전통적 특성이 크게 변화(‘제조업의 서비스화’ 혹은 ‘제조업의 소프트화’)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의 부가가치생산액 비중은 2010년 35.0%에서 2020년 42.3%로 상승하고 종사자수 비중도 27.6%에서 30.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그림 3-1-11] 생산구조 전망

[그림 3-1-12] 부가가치생산구조 전망

[그림 3-1-13] 고용구조 전망

자료: 이상훈(2014),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 경기개발연구원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Io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이 제조업의 하드웨어적 요소를 대체하는 과정이 가속화되고, 쌍방향형 플랫폼이 모든 생활·산업부문으로 확산되어 유·무형 플랫폼(수요자·공급자의 분산과 집중)의 운영 및 시스템 안전과 연관된 서비스업 부문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
- 3D 프린터 확산과 소재혁신에 따라 기존 전통 기계·부품산업과 유통부문이 약화되거나 역할/기능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3D 프린터,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공장), 물류, 판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소비(가정) 등 분리된 공간을 연결하는 상품의 유통과정이 일부 생략되거나 대폭 단축될 전망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적절히 조합하여 이용하는 ‘크로스오버 쇼핑’ 등 새로운 쇼핑영역의 도입과 확산이 가속화
 - 스마트 쇼핑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 오프라인 소매업의 위상이 약화되고 아마존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산업의 구조가 재편될 전망
 - 혁신형 기술창업의 활성화는 글로벌 차원의 표준화와 기술적·사회적 연계성의 확대에 힘입어 신성장 산업의 출현을 촉진

🔥 (한-중 경제통합) 한-중 간 산업분업 고도화 및 동북아 경제권 부상

- 세계와 아시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중국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 구조가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
-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경제통합도가 증대하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과의 연계성이 점차 확대되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중심지로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
- 한국이 동북아시아-중앙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남-북 간 인프라 연결, 경제교류 확대, 북한 인력개발 지원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인간친화적 기술혁신) 바이오융합기술(BT · NT · IT)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급성장

- 인공혈액, 인공망막, 뇌질환 원인 규명, 맞춤형 백신 등 바이오기술 발전으로 난치병치료 및 장기재생기술이 보편화되고, 의료용 나노로봇이 등장해 혈관을 청소하고 특정 암세포를 공격해 치료하는 기술이 실현될 전망
- 셰일가스/오일, 샌드오일 등 비전통에너지 부문의 급격한 성장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기후변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대체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고효율화 및 공해저감 기술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표 3-1-6] 2040년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핵심기술

구분	중·단기 (10년간 집중 투자로 기술경쟁력 선점)	장기 (지속적인 투자로 미래를 대비)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 신재생에너지 기술 • 고효율에너지 기술 • 폐자원 재활용 및 광물 자원기술	• 신재생에너지 기술 • 기후변화 감시·대응 기술 • 오염원 발생 방지·관리 및 생태 위해성 평가 기술 • 온실가스 저감 기술
풍요로운 세상	• 첨단기능소재 기술 • 신기술 융합 제조·생산 기술 •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 제조업 생산로봇 기술 • 첨단 농업생명공학 기술	• 첨단기능소재 기술 • 친환경 첨단 물류 기술
건강한 세상	• 신종 전염병 대응 기술 • 유해성 물질 관리 기술 •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기술	• 신개념 의약 기술 • 뇌연구 및 뇌질환 치료 기술 • 실버산업 및 U-health 기술 • 미래전 대비 군사 기술
편리한 세상	•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기술 • 가상현실 기술 • 새로운 운송 기술	•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 •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개발 기술

자료: 박지영(2010),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

3. 2040년의 중장기 과제

초연결·융복합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ICT산업에 기반한 미래 융복합산업의 집중적인 육성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창업클러스터 및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
- 혁신적 기술의 전통산업 적용을 위한 기술확산체계 구축
- 글로벌 중견·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서비스업 및 농업 부문의 산업고도화

-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집중적인 육성
- 스토리와 콘텐츠가 담긴, 감성이 있는 길거리상권 조성
- 농축산업에 첨단기술 융복합 및 서비스화를 통한 6차 산업화 촉진

지속가능한 상생의 개방형 산업생태계 구축

- 성장 중심 경제에서 성장-안정 균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대-중-소 기업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
- 수요자와 공급자 간 쌍방향 플랫폼 구축
- 안정적인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 경제적 복원력 강화 및 공유경제 영역 확대
- 사회적 자본 축적 촉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 접근권(accessibility) 거래 활성화를 위한 P2P, B2P 플랫폼 확대
- 혁신적 아이디어 및 지식 공유를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 공공데이터 및 정보공유를 위한 G2B(Government to Business), G2C(Government to Citizen) 플랫폼 구축

지역 간 균형발전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경제 연계성 강화
- 경기남부: 융복합 기술혁신 허브, 기술혁신형 창업클러스터 조성 등
- 경기북부: 문화·디자인·영상·출판 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 생태계 관광산업 육성, 남북 경험 물류기지화, 환경친화적 휴양도시화 등

일자리 창출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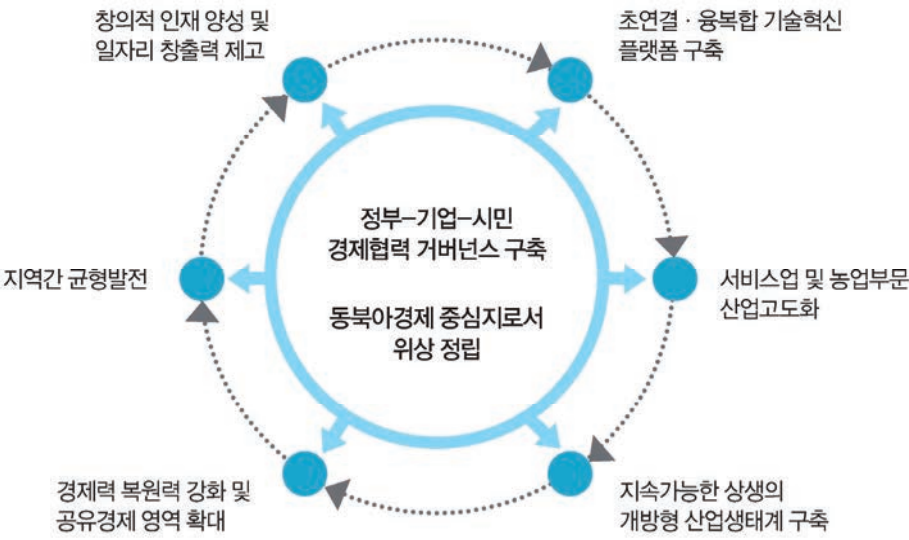
-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정비
- 청년들의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 개선

정부-기업-시민 간 유기적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 중앙-도-시·군 간 산업전략·정책 수립을 위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 민간부문의 자가발견(self-discovery) 과정을 중시하는 산업정책 정립
- 정부-기업-시민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 정립

- 공급사슬(supply chain) 및 가치사슬(value chain)의 국제적 확장
- 경기도 기업의 동북아 진출 지원 강화
- 경기서부권의 국제자유지역화
- 경기북부권의 유라시아 진출 거점화



[그림 3-1-14] 경기도 중장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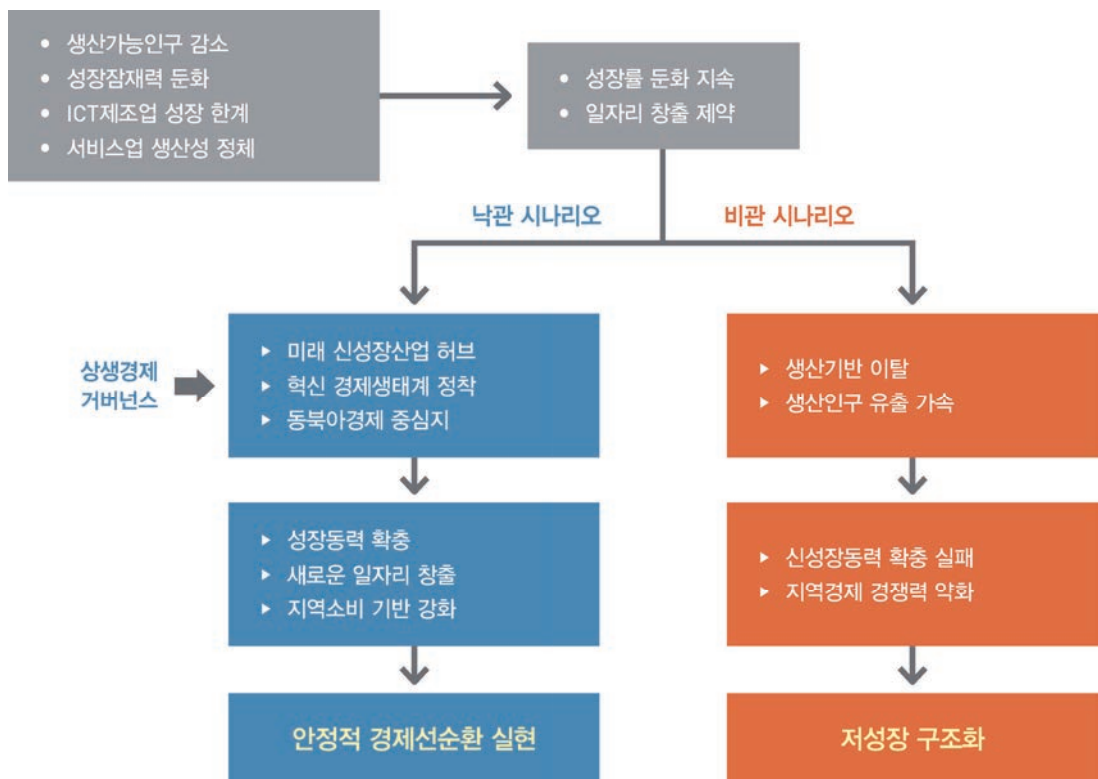
제3절

혁신경제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기존의 패러다임

- 경기도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ICT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한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
- 향후 ICT산업을 활용한 미래 융복합 신성장산업의 육성, 혁신 창업생태계와 상생 산업 생태계의 정착,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등에 성공할 경우, 신성장동력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안정적 경제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가능
-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실패하여 생산기반이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고 생산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경기도의 경쟁력 약화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



[그림 3-1-15] 경제 부문 미래 시나리오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공급 중심의 경제발전 및 소유경제 패러다임에서, 수요 중심의 경제발전 및 공유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창업/벤처 간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 구조로의 전환
- 표준형 인재 양성에서, 창의적이고 복합적 사고력 지닌 소통형 인재 양성 교육·훈련체계로의 전환
-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형 하향식(top-down) 산업정책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간접적인 지원형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
- 국내 중심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동북아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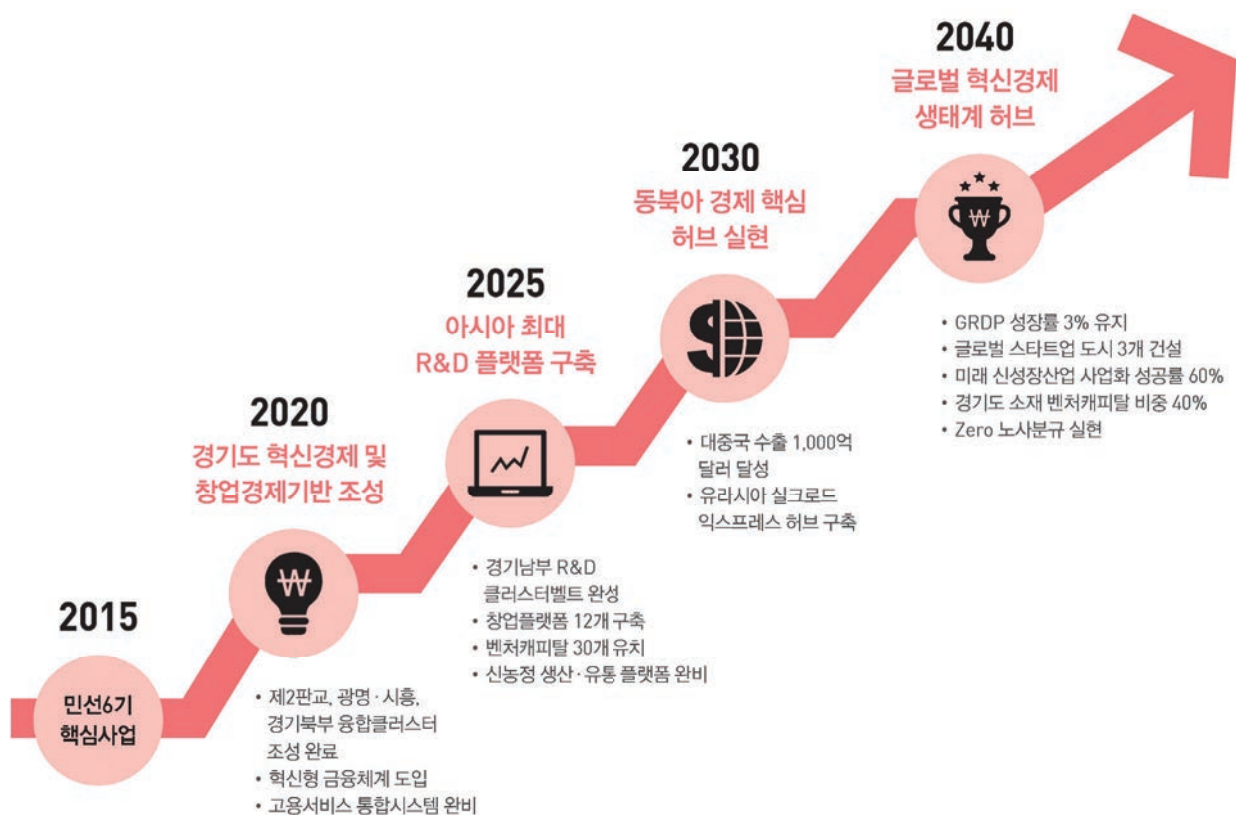


[그림 3-1-16]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광명·시흥 R&D 클러스터 조성, 신농정 플랫폼 구축, 도민은행 설립, 빅데이터 혁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국투자 유치 및 진출, 공정무역(ODA), 동반성장 및 지역사회대타협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경기도의 혁신·창업경제 기반과 지속가능한 상생경제 생태계의 토대가 조성될 것임
 - 제2판교, 광명·시흥, 경기북부 융합 클러스터의 조성이 완료되어 지역 기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

- 혁신형 금융체계 도입,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완비,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 구축 등으로 선순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확대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 사업을 기초로 경기남부권의 첨단기술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클러스터 벨트가 완성되고, 기술창업 플랫폼과 신농정 플랫폼이 완비되어, 아시아 최대의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플랫폼을 갖춘 미래 지향적 개방형 경제로 도약할 것임
- (2030 변화상)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산업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의 허브로서 경기도의 역할이 확대되어, 2030년경에는 경기도가 동북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것임
- (2040 비전) 경기도 내 첨단산업도시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과 함께 신뢰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율적 상생 거버넌스의 실현을 통해 2040년 경기도는 미래 기술과 신성장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TOP 3의 혁신·창업경제권에 진입할 것임
 - GRDP 성장률 3% 유지,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 3개 건설, 미래 신성장산업 사업화 성공률 60%, 경기도 소재 벤처캐피탈 비중 40%, Zero 노사분규 실현



[그림 3-1-17] 경제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경기도 경제를 위한 2040 비전·목표·전략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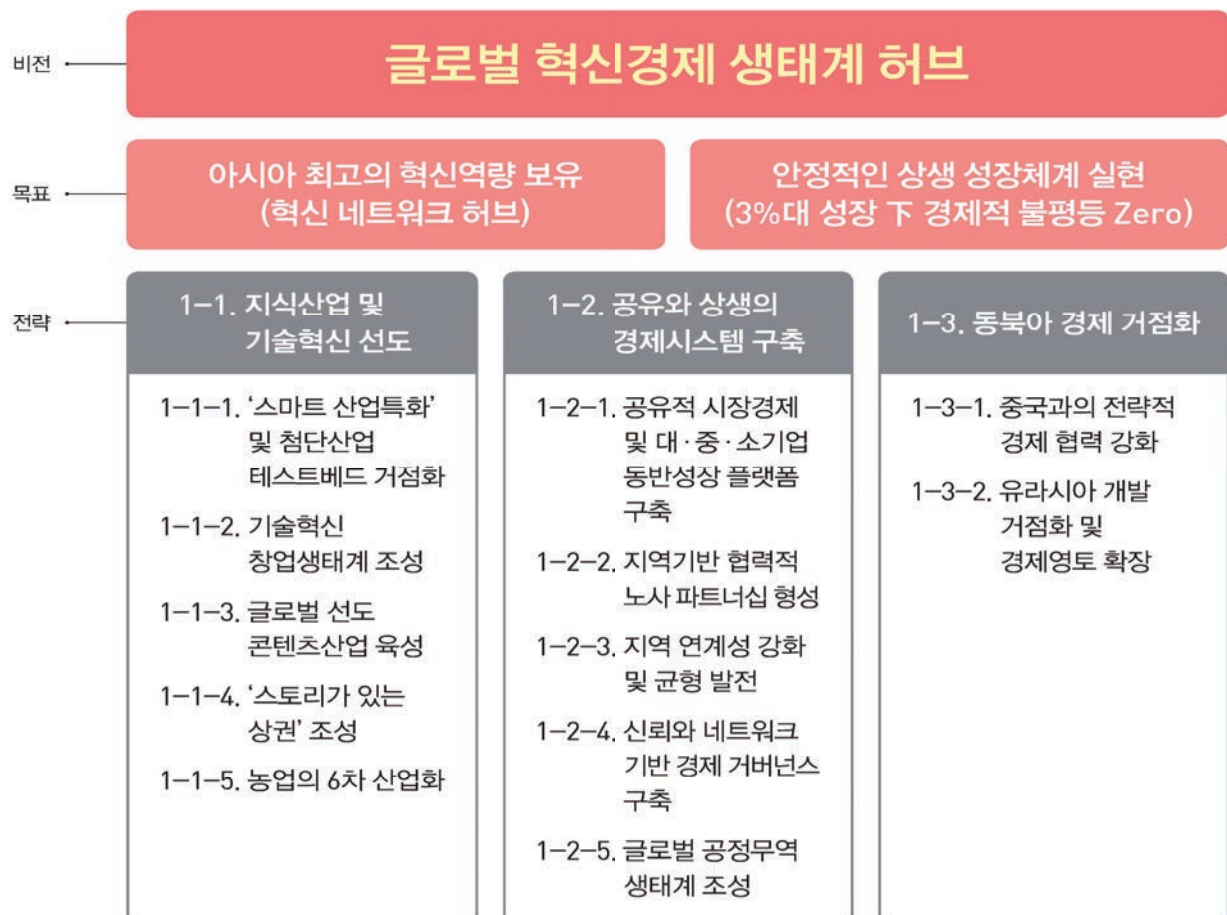
-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로 설정

2대 목표

- 아시아 최고의 혁신역량 보유 / 안정적인 상생 성장체계 실현

3대 전략

-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test-bed) 거점화,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등 5개 아젠다 추진
- 공유와 상생의 경제 시스템 구축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공유적 시장경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지역기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형성 등 5개 아젠다 추진
- 동북아경제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유라시아 개발 거점화 및 경제영토 확장 등 2개 아젠다 추진



[그림 3-1-18] 경제 부문 비전·목표·전략

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전략에서는 창업플랫폼,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 성공률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하고,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전략에서는 GRDP성장률, 고용률 및 실업률을, 동북아 거점화 전략에서는 대중국 수출액, 대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수출액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지식산업 및 기술 혁신 선도	창업플랫폼 수(개)	(2015) 2	7	12	16	2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 성공률(%)	(2013) 47	49	52	56	60
	경기도 소재 벤처캐피탈 수(개)	(2015) 10	20	30	35	40
공유와 상생의 경제 시스템 구축	청년실업률(%)	(2014) 10.4	9.0	8.0	7.5	7.0
	GRDP 성장률(%)	(2013) 4.6	4.4	3.6	3.1	3.0
	고용률(%)	(2014) 56.4	59.0	62.0	64.0	67.0
	경기도 GRDP 중 북부 비중(%)	(2012) 18.0	20.0	22.0	24.0	25.0
동북아 경제 거점화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액(억 달러)	(2014) 378	550	850	1,000	2,000
	대러시아 및 대중앙아시아 수출액(억 달러)	(2014) 23	37	60	96	250

제4절

경제 부문 아젠다별 추진 전략

[1-1]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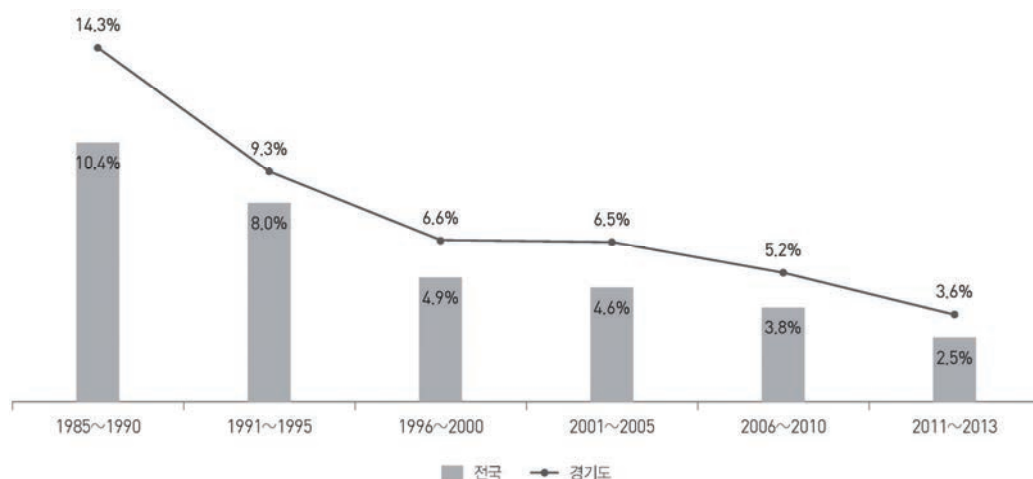
[1-1-1]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

핵심내용

- 2040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요구됨
- 경기도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의 발굴 및 로드맵 작성
- 경기도 미래 신성장산업에 대한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지원 및 창업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별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목표와 지표

-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96조 원(2013년 기준)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21.5%로 서울(22.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그림 3-1-19] 전국 및 경기도 GRDP 성장률

- 경기도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R&D사업 사업화성공률 2040년 60% 달성
- 경기도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해외특허등록 건수 2040년 20만 건 확보

- 경기도 제조업 생산액 대비 미래 신성장산업 생산액 비중을 2040년 50%까지 확대
- 경기도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기술무역수지비 2040년 1.0 이상(흑자) 목표

[표 3-1-7] 미래 신성장산업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현재 수준 또는 추정 근거	2040년 목표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화성공률	2008~2013년 경기도 산업기술개발사업 ³⁾ 사업화성공률 47.7%	6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해외특허등록건수	—	20만 건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생산액 비중	2011년 제조업 중 하이테크산업 생산액 비중 37.7%	5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기술무역수지비	2012년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비 0.48 (51억 달러 적자)	1.0 이상 (흑자)

추진전략

- 경기도형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 경기도 과학기술 전문가, 정책 전문가, 경제 및 인문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부문의 산학연 전문가를 구성하여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발굴 기획
 -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의 개발(R&D), 인프라 구축, 표준화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각 구성요소에 대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표 3-1-8] 경기도 10대 미래 유망산업 및 특화권역

미래 유망산업	우선순위	발전단계	특화권역
생명산업	선순위	성장기	경기 남부
IT융합산업	선순위	성장기	경기 남부
녹색산업	선순위	성장기	경기 서해안
디스플레이산업	선순위	성장기	경기 북부
MICE산업	선순위	성숙기	경기 북부
지능형로봇산업	차순위	성장기	경기 남부
소프트웨어산업	차순위	성숙기	경기 남부
차세대반도체산업	차순위	성장기	경기 남부
고령친화산업	차순위	성장기	경기 동북부
해양레저산업	차순위	성장기	경기 서해안

주: 경기 동북부: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남양주, 구리, 가평
 경기 서해안: 안산, 평택, 시흥, 화성, 김포
 경기 남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용인, 광명, 군포, 안성, 의왕, 오산, 과천
 경기 북부: 고양, 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자료: 유영성(2012),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경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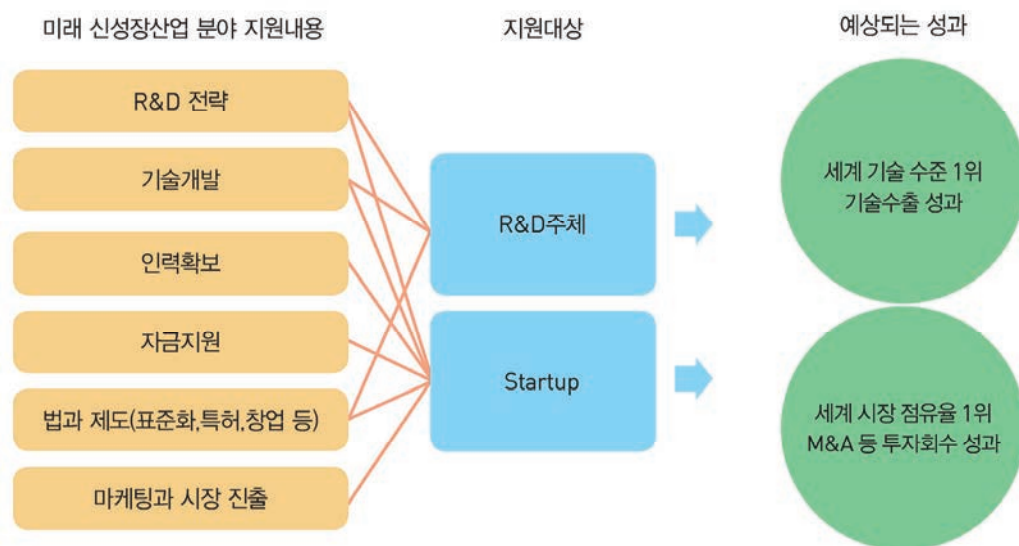
3) 전략산업 14개 부문: LED 부품 및 응용(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디지털컨버전스, 콘텐츠·소프트웨어,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농생명/식품, 친환경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 지식기반서비스, 자동차, 섬유, 가구.

○ 미래 첨단산업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지원 확대 및 효율화

- 미래 첨단산업 부문에 대한 R&BD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미래 신성장산업 로드맵에 부합하도록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지원 계획을 수립
 - 경기도형 미래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R&BD 예산을 별도 배정하고 기술개발과제를 기획
 - R&BD 과제별 필요한 예산과 수행기간을 차별화하여 기획하고 엄격하게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과제 수행과정에 대한 마일스톤 관리를 철저히 하여 R&BD 과제의 효율성을 제고

○ 아시아 최고의 '융복합 기술 테스트베드(test-bed) 특화단지' 조성

- 미래 첨단기술의 상용화 테스트를 위해 '융복합 기술 테스트베드 특화단지'를 구축
 - 미래 첨단기술은 융복합 특성과 빅데이터(big-data)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발전할 것이며, 새로운 혁신기술의 상용화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와 공간이 필요
 - 지역산업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융복합 기술 테스트베드 특화단지'를 경기도 경제권역별로 조성하고 아시아 최고의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지원
 - 세계 최고 수준의 '융복합 기술 테스트베드'는 글로벌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융복합 기술의 확산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그림 3-1-20]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 지원 내용 및 성과

○ 게임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 게임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성남시를 중심으로 ‘게임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
 -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매출 상위 10대 게임기업 중 7개 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 상황
 - 판교테크노밸리 내 게임과 콘텐츠를 결합한 모바일 및 기능성게임 창업 인프라를 구축
- 게임산업 클러스터 내 e-스포츠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여가문화산업으로 정착시키고, 인문사회 과학적 지식과 공공목적에 접목한 기능성게임 개발 지원을 확대

○ 지역산업 특성에 기반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 기존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클러스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첨단기술 부문을 토대로 각 클러스터별 특성화를 강화하고 상호연계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광명·시흥 R&D 클러스터 등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혁신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여 R&BD,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 인력양성, 투자유치, 글로벌 시장진출 등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 관련 부문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을 유치하고 각 주체별 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축함으로써 경기도 특화형 혁신클러스터로 발전
- 혁신클러스터 간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융합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
 - 혁신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협의체 등)하고 융합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을 발굴

○ 첨단산업 부문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기술정보, 인적자원정보, 기업정보, 특허정보, 시장정보, 전문가 네트워크 등 첨단산업별 정보DB를 구축하여 통합시스템으로 관리
 - 혁신주체들이 산업부문별 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연구,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등의 개방형 혁신활동(open innovation)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허성과 중 휴면특허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성과의 활용을 제고
 -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산업의 현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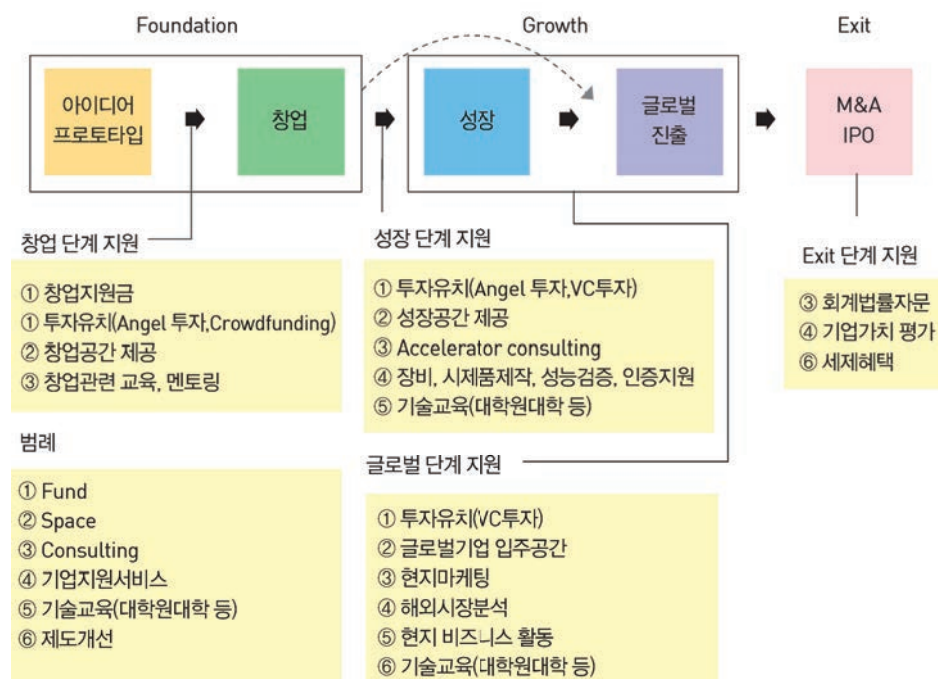
[1-1-2]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핵심내용

- 경기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기술형 창업플랫폼⁴⁾ 구축 및 창업펀드 조성
-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스타트업 도시 구축

목표와 지표

- 경기도의 국내 벤처기업 비중을 2015년 31%에서, 2040년 40%로 확대
- 경기도 소재 창업플랫폼을 2015년 2개에서, 2040년 20개로 확대 구축
-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2015년 2개에서, 2040년 20개로 증가
- 경기도 소재 벤처캐피탈을 2015년 10개에서, 2040년 40개로 증가
- 궁극적으로는 신기술의 테스트베드(Test-bed), 창업생태계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온오프라인 공간 등을 아우르는 스타트업도시 3개 건설(경기남부 2곳, 경기북부 1곳)



[그림 3-1-21] 스타트업 성장단계

4) 기술형 창업생태계는 '아이디어 → 창업 → 성장 → Exit → 재투자'와 같은 선순환 기업환경이 유지되는 상태

추진전략

○ 스타트업 창업플랫폼 조성 및 운영

-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역할을 수행/ 기술기반 기업의 창업공간 제공/ 네트워킹 및 멘토링 제공 / 벤처 캐피털 투자 연결
- 엑셀러레이터 컨설팅 연계/ 협업 공간 제공을 통한 혁신 가속화/ 컨퍼런스 및 지식 교류의 장
- 초기에는 경기도가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플랫폼을 운영할 민간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추후 공간과 운영을 모두 민간기관이 주도하도록 유도



[그림 3-1-22] 창업플랫폼의 기능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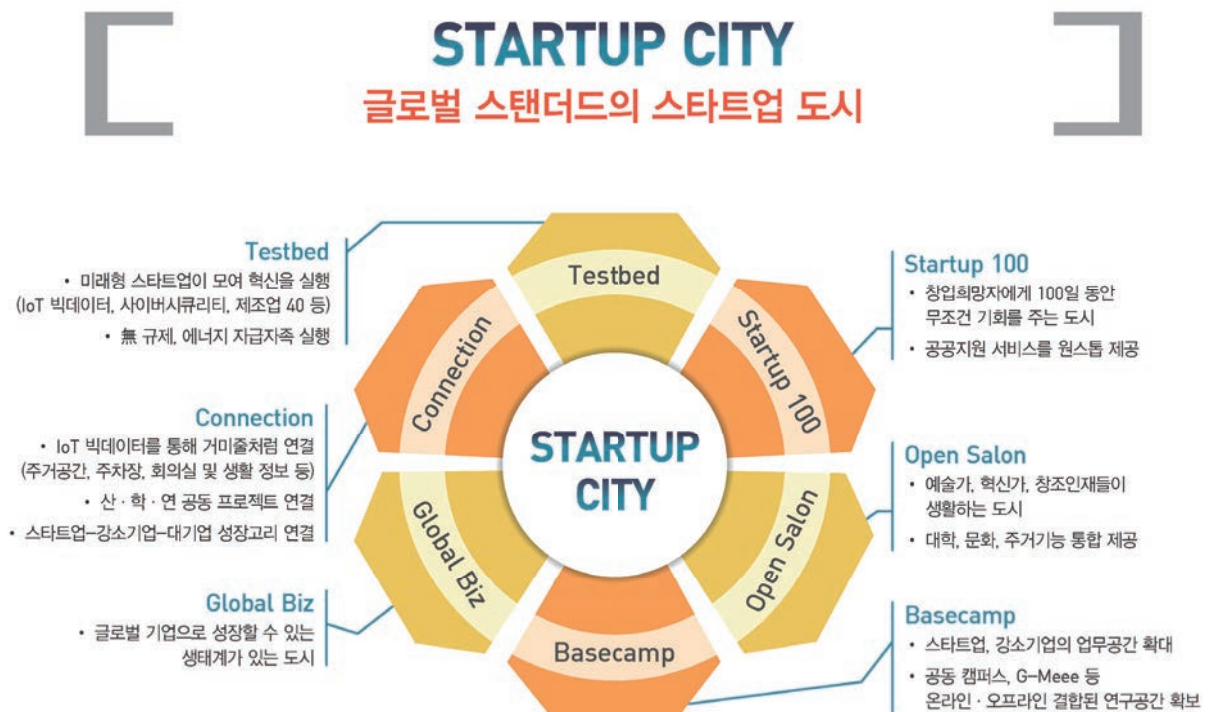
- 수익 발생 시 투자자가 공공부문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상향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갖춘 공공-민간 위험 공유형 직접투자 펀드를 크게 확대하고, 경기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엔젤투자조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슈퍼맨펀드는 의무투자 대상에 오디션 참가 스타트업뿐 아니라 경기도가 운영하는 창업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오디션 참가 스타트업도 포함
- 엔지니어링 창업가 출신의 벤처 캐피탈리스트(venture capitalists)를 대규모로 양성하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실질적 멘토링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창출
-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지향을 갖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의 벤처캐피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해외 투자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
- 도민은행을 설립하여 아이디어 기반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해 저금리 정책금융지원을 확대

○ 기술창업생태계 주체들의 네트워크 확대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스타트업 창업공간에 함께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 확대
-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전략 수립과 컨설팅, 데모데이 피칭을 컨설팅해 줄 스타트업 액셀레이터(Accelerator) 유치
- 정부 지원기관 연계 및 해외 네트워크 활용
- 컨퍼런스, 네트워킹, 코워킹 플레이스 등을 제공하고 데모데이(demo day)를 개최하여 투자자 연결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창업플랫폼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성

○ 글로벌 스탠더드의 스타트업 시티(start-up city) 건설

- 테스트베드(Test-Bed): 미래형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 커넥션(Connection):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된 도시
- 글로벌 비즈니스(global business):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 스타트업(start-up 100): 창업희망자에게 대가없이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도입
- 오픈 살롱(open salon): 예술가, 혁신가, 창조인재들이 함께 생활하는 감성 도시 구현
- 베이스캠프(base camp):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의 업무공간, 온·오프라인 연구공간 제공



[그림 3-1-23] 스타트업시티 개념도

[1-1-3] 글로벌 선도 콘텐츠산업 육성

핵심내용

- 디지털 콘텐츠 R&BD 지원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강화
-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및 섬유·패션·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
- 게임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목표와 지표

- 2040년까지 경기도 콘텐츠산업을 매출 200조 원, 종사자수 30만 명, 수출 350억 달러의 중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
- 아시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섬유·패션·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게임산업 클러스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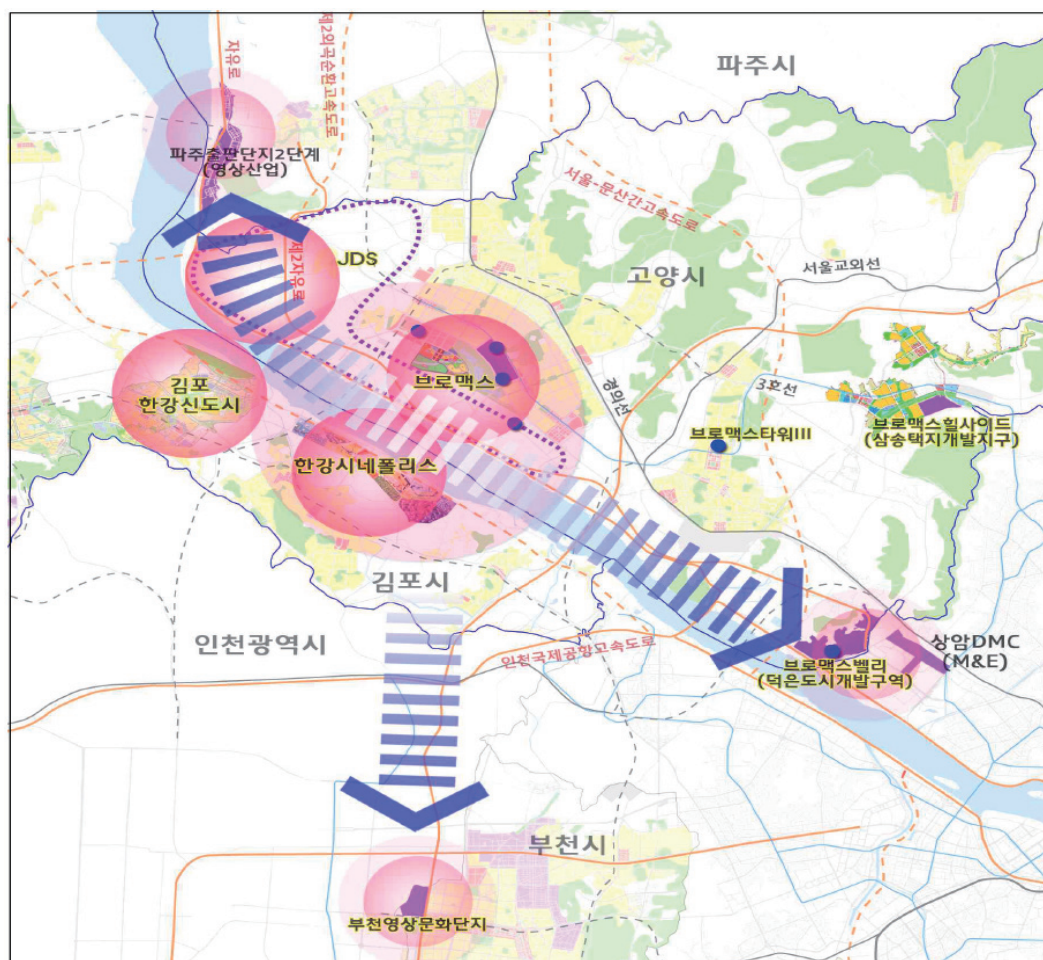
[표 3-1-9]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 목표

구분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매출(조 원)	13	50	140	200
종사자수(천 명)	47	110	240	300
수출(억\$)	25	90	270	350

추진전략

- 디지털 콘텐츠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 지원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강화
 -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융합촉진을 위해 산학연 문화기술 R&BD 지원을 확대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창의적 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 기술력을 갖춘 콘텐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을 개선
-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
 - 고양시와 파주시의 컨벤션 기능과 한강축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영상기능을 연계한 ‘방송·미디어·콘텐츠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 디지털 영상기술과 네트워크, 방송통신 등 ICT 융합매체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경우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의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 부문과 동반성장이 가능

-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일대에 국내 주요 포스트프로덕션 유치 등을 통해 방송영상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고 인접 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 고양 브로맥스,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를 방송, 영상, 문화콘텐츠 제작, 유통, 서비스, 소비의 복합거점으로 육성하고 김포 신도시와 연계
 -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출판, 영상단지), 부천 만화영상 클러스터, 상암 DMC(M&E 특화) 등 관련 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연계성 강화
- 기획, 투자, 제작, 후반작업, 유통의 원스톱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창작, 기획, 연구개발, 마케팅, 홍보 등 창조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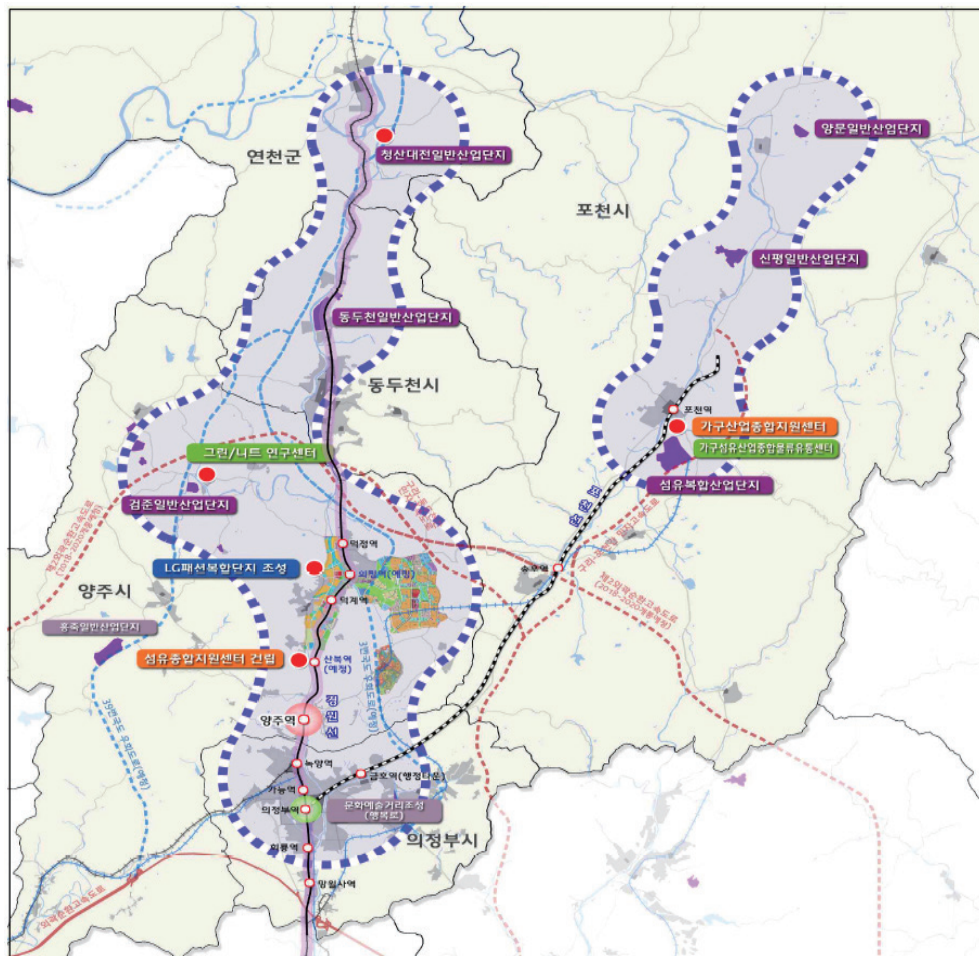
자료: 경기도(2012),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그림 3-1-24] 디지털 방송문화 클러스터 구상도

○ 섬유·패션·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

- 경기북부의 기존 섬유 제조업에 패션 부문과 콘텐츠 부문을 접목하여 '섬유·패션·콘텐츠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 경기북부지역은 서울에 인접하여 패션동향의 반영과 물류·유통 비용 절감이 용이하여 최적의 섬유·패션 산업입지 대상지역

- 의류공장과 아울렛 매장 등을 연계하여 소비자를 위한 생산·판매 등 유통 흐름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류소재 기술개발 정보 제공,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험분석 지원, 애로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는 섬유·패션산업 지원체제를 구축
 - 인근 섬유생산업체, 섬유관련 연구소, 섬유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강화
- 한류월드의 배후 생산기지로서 콘텐츠를 포함한 패션, 대중음악, 디자인 등 예술 중심의 융합 클러스터화를 추진



자료: 경기도(2012),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그림 3-1-25] 섬유·패션 산업클러스터 구상도

○ DMZ 최첨단 자연생태연구단지 조성

- 세계적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DMZ에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연생태 빅데이터 축적 및 자연생태 지도 작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연생태연구단지를 조성
- 초미니 드론(Drone)을 활용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 없이 자연생태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
- 자연생태지도는 환경문제 해결, 바이오기술 개발 등 다양한 미래 신성장부문에 활용이 가능

[1-1-4] ‘스토리가 담긴 상권’ 조성

핵심내용

-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성 스토리’ 상권화
- 전통문화 상품의 한류화 및 구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명장빌리지’ 조성
- 쇼핑과 공연·관광을 연계한 지역문화상권 조성 확대
- 지역상권 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목표와 지표

- 경기도 내 ‘감성 스토리’를 담은 전통시장 100곳을 선정하여 지원
- 명장·명품 집적지인 ‘명장 빌리지’ 특화지구를 10곳 조성
- 지역상권 기반 협동조합 100곳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 전통시장의 ‘감성 스토리’ 상권화
 -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지역·역사·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감성 스토리’ 상권으로 발전시키고 고품질화를 모색
 - 전통시장 간 유통체계를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배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
- 한국의 전통을 잇는 ‘명장 빌리지’ 조성
 - 장인기술을 활용한 전통문화 상품의 한류화와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명장 빌리지’를 지정하고 전통문화 상품의 ‘아시안 명품화’를 추진
 - 비어있는 점포가 많은 구도심상권을 ‘명장 빌리지’로 지정하고 공방·갤러리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특화 마을로 조성
 - 전통적인 장인기술과 세련된 트렌드를 결합시켜 명장 산업의 한류 연계로 명품의 수출과 ‘명장 빌리지’를 새로운 한류 관광코스로 개발 및 유도
 - ‘명장 빌리지’에서 명장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장인기술의 다음 세대로의 전수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지역 문화와 관련된 명장·명품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특색에 기반한 상권을 조성함으로써 감성 마케팅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 쇼핑과 공연·관광을 연계한 지역문화상권 조성
 - 연극, 서커스 등 쇠퇴하고 있는 문화공연을 지역사회로 유치하고 이를 지역상권과 연계시켜 지역 문화상권으로 조성
 - 대학로에 위치한 주요 연극단이었던 ‘대학로극장’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충북 단양의 작은 마을로 이전하였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연극관람과 지역관광을 연계하여 방문하고 있음
 - 지역의 축제 등 관광부문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
- 지역상권 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 업종 또는 사업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대규모화를 유도
 - 사업모델이 우수한 협동조합도 초반 신규 조합원의 유치가 어려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소규모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대규모화가 필요
 - 도 단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교육, 컨설팅, 업무대행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소규모 단위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
 - 유망 신생기업의 자생을 위한 한시적 지원 등 협동조합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확대
 - 공공부문에서 소규모 협동조합에게 가장 필요한 전담인력 및 사업공간의 확보를 지원
 - 기존 창업보육센터, 벤처센터 등에 소규모 협동조합이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경영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규모 협동조합의 안정화를 지원
- SNS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SNS, 위치기반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
 - 개별 점포단위보다는 상권단위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쇼핑 환경을 조성
 -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

[1-1-5] 농업의 6차 산업화

핵심내용

- 2040년 경기도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2014년 대비 39.8% 및 4.8배 증가 목표
-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맞춤형 선진 농업 추진
- 규모화된 선도농 중심의 선진농업 추진 및 농업경쟁력 향상 선도
- 농업/농촌 자원에 기초한 창업 확대 등 6차 산업 활성화

목표와 지표

- 경기도의 농업소득을 2014년 6,974천 원에서, 2040년까지 10,000천 원으로 증가
- 경기도의 농외소득을 2014년 23,073천 원에서, 2040년 110,000천 원으로 증가

[표 3-1-10] 농업의 6차 산업화 목표 지표

목표연도 주요지표	2014	2020	2030	2040
농업소득(천 원)	6,974	7,500	9,000	10,000
농외소득(천 원)	23,073	30,500	70,000	110,000
농가소득(합계, 천 원)	30,047	38,000	79,000	120,000

추진전략

-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경기농업의 맞춤형 선진농업 추진
 - 농가를 선도농가 및 일반농가로 구분하고 맞춤형 농업 R&BD 추진
 - 경기도 농업을 글로벌 경쟁력 구비가 가능한 선도농과 농업의 가치(친환경농업, 체험농업, 도시농업 등) 실현을 추구하는 각종 유형의 일반농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농업 R&BD를 지원
 - 선도농은 규모화된 전업농으로 첨단기술에 기초해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경기농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주력 농업인으로 육성
 - 일반농은 체험 및 관광 농업,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등 농업의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추진
 - 경기도 맞춤형 선진농업 육성을 촉진하는 농업 R&BD 기관 주도의 플랫폼 구축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적인 농업 R&BD 기관이 주도해 선진적인 기술 보급 및 애로사항 해결 위주의 지원체계를 구축
 - 농림진흥재단 등 중간지원조직에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형태의 선진농업 소개 및 지원체계를 구축



[그림 3-1-26]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례



[그림 3-1-27] 관광농원 사례

○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 지역 농업 R&BD 기관 주도의 창조농업 실용화 생태계 조성
- 지역 농업 R&BD 기관은 아이템 개발 및 제조지원, 농가는 판매를 책임지는 창업지원 생태계를 조성

○ 기업, 농민, 수요자가 상생하는 농업 혁신시스템 구축

- 기업은 농업기술 혁신 및 판매, 농민은 생산을 책임지는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농민을 지배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과 농민이 대등한 위치에서 각각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추진
 - 농민은 내부적으로 작목반 형태의 조직을 결성해 기업과 협력을 주도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및 계약 위반 농가 퇴출 등을 엄격하게 시행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시장지배력을 향상시키는 농업브랜드로 성장 추진
- 농업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생산과 소비를 잇는 벨트를 조성하고 다양한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
 - 1단계로 민선6기 내 5대 생산-소비 벨트(수출농업벨트, 생명산업벨트, 푸른뜰벨트, 해양수산벨트, 도시농업벨트)와 8대 플랫폼(기업-농민, 외식-농업, 세계-경기, 학교-생산자, 소비자-생산자, 도시민-도시민, 자본-농업)을 구축
 - 생산, 유통, 소비 벨트 및 플랫폼의 참여 대상과 공간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1-2]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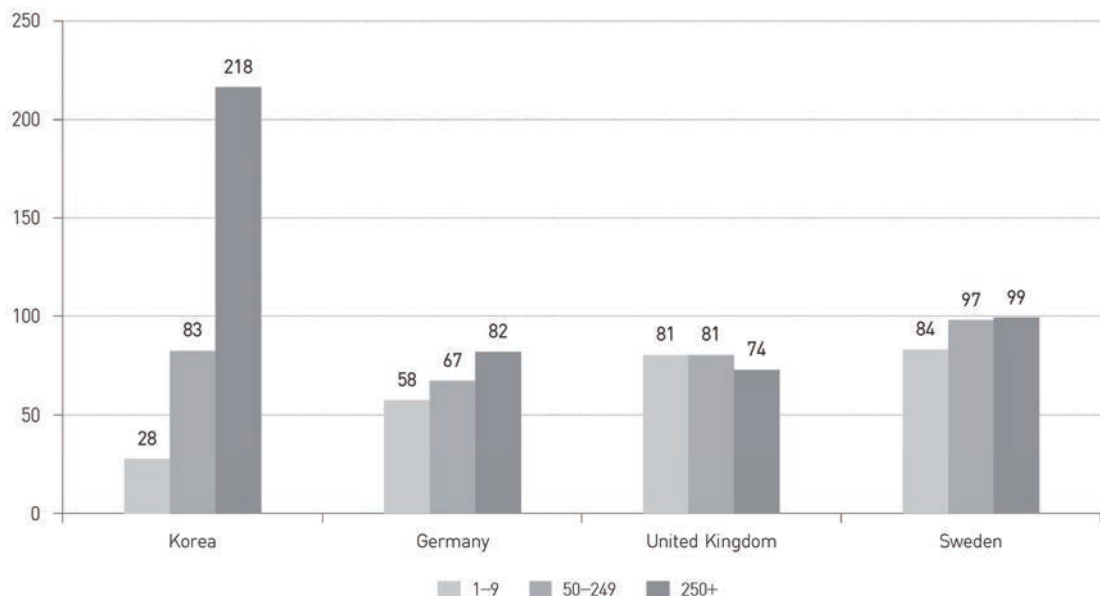
[1-2-1] 공유적 시장경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핵심내용

- 대기업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보완하고, 공유가치 창출 등 기업 간 협력을 증대
- 정보와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간 공유적 시장경제를 활성화
- 지역단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지역주력산업 부문별 동반성장 특화 프로그램 발굴

목표와 지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조건으로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
 - 지표: 불공정거래 발생건수, 중소기업 만족도
- 지역산업생태계 상생발전의 리더로서 대기업의 역할 확대
 - 지표: 동반성장 협의체의 대기업 참여도, 활동성과
-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산성·안정성·확장성 제고
 - 지표: 중소기업 수익률, 노동생산성, R&D 재투자율, 창업 생존율, 기술창업 건수



[그림 3-1-28]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노동생산성 격차(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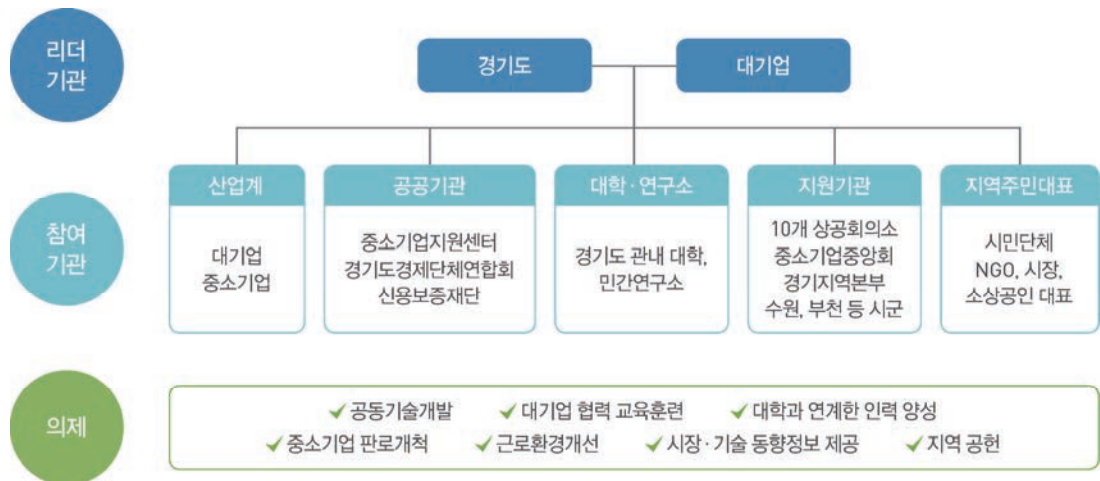
추진전략

○ 경기도형 공유적 시장경제 정책 모델

- 경기도의 공유적 시장경제 정책 모델로서 ‘경기도주식회사’ 추진
 - 브랜드를 공유하여 각 제품별 브랜드 디자인 및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제품 홍보 마케팅을 추진
- 브랜드 이외에 온라인 장터, 물류, 간편 결제 등 공유 기능 개발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입점료가 ‘0’에 가깝고 공신력 있는 온라인 장터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공유물류센터도 건설
 - 결제 수수료가 ‘0’에 가까운 간편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여 서민경제 활동을 지원

○ 지역 단위의 동반성장 민-관 파트너십 구축

- 경기도는 대기업 리더십을 통한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논의와 정책제안 마련 등의 협력시스템 가동
- 경기도의 지역파트너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포함한 지역의 동반성장 및 산업경쟁력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상향식 민관협력 추진체계로 구체화
- 공유가치창출(CVS) 관점에서 기업성장과 지역발전에 모두 기여하는 최대공약수 성격의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동기 부여
- 파트너십에는 경기도 내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행정·공공기관 등 지역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직체의 대표들이 참여
- 동반성장 파트너십의 운영은 산업계가 주도하며, 의장직을 산업계 대표가 맡거나 도지사와 공동으로 맡는 방식을 고려
- 경기도 지역파트너십의 의제는 동반성장과 관련되어 공동기술개발, 교육훈련, 인력양성, 복지 등 근로환경 개선, 지역예의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
- 경기도는 지역파트너십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검토하여 실행방안을 수립,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마련



[그림 3-1-29] 대기업 리더십을 통한 경기도 동반성장 협의체(안)

○ 경기도 주요 산업부문별 동반성장 협의체 운영

- 2040년 경기도는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체의 정착, 제조업 중심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확장
- 기존 제조업 중심의 동반성장을 금융·의료·디자인·문화·물류·유통·IT 등 7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개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주력산업 대상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 조립대기업-1차 협력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 제조업(식료품)과 유통업과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 해외 동반진출 지원 및 사업 부문별 맞춤형 협력사원 지원으로 동반성장 장려

○ 대·중소기업 협력 사업화연계 기술개발(R&BD)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 경기도 제조업부문 중 전자, 자동차 부문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각각 41.5%, 57.3%로 동반성장이 필요한 부문(전자와 자동차 부문 중심의 세밀한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
- 자동차 부문은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2·3차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모범적 '상생협력 모델'을 창출(자동차 부문은 제품 수명주기가 길어 협력관계 형성에 유리)
- 전자부문은 2·3차 협력업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유연한 동반성장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필요(전자부문은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 장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불리)
-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융합부문의 표준준화 및 초경량 추세에 조응하는 플랫폼 방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대·중소기업 공동의 선도적 기술 R&BD 사업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1-2-2] 지역기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형성

핵심내용

-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은 기업 및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
- 향후 저성장이 예측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에서는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 고용과 관련된 쟁점들이 부각될 전망
- 우수 노사관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 지자체의 노동정책 기능 강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는 고용-복지 친화적 노사관계 모델 구축

목표와 지표

- 경기도의 노사분규건수를 2014년 8건에서 2040년까지 0건으로 감소
-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을 2014년 0.53%에서 2040년 0.13% 수준으로 감소
- 근로자 중 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을 2014년 52.5%에서 2040년 75.0%까지 높임
- 우리나라 기업의 훈련투자규모(교육훈련비용/총 노동비용)를 2013년 0.57%에서 2040년 5.0%까지 높임

[표 3-1-11] 노사 파트너십 목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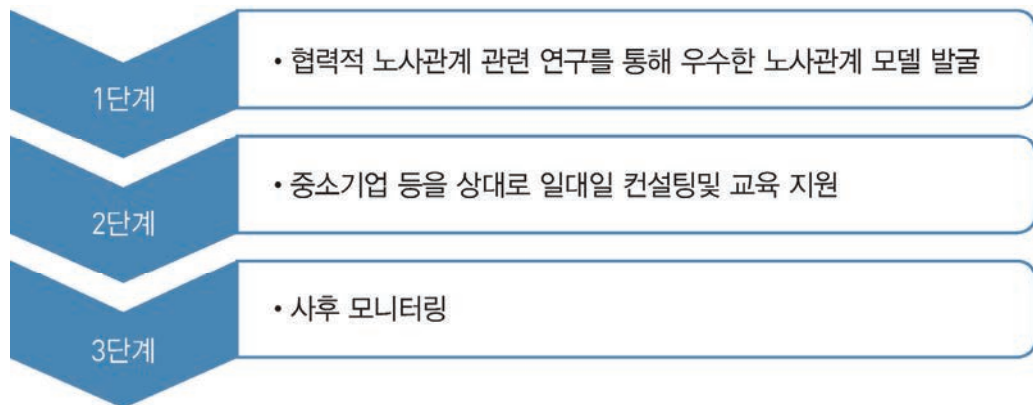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4	2020	2030	2040
노사분규건수(건)	8	5	2	0
산업재해율(%)	0.53	0.40	0.23	0.13
근로자 중 교육훈련 경험비율(%)	52.5	60.0	67.5	75.0
기업 훈련투자규모(%)	0.57	1.0	3.0	5.0

주: 1) 노사분규건수는 경기도 기준, 그 외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전국 기준
2) 기업의 훈련투자규모는 2014년 자료가 없어 2013년 자료로 대체

추진전략

- 우수한 노사관계 모델 구축 및 확산 지원
 -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기업들이 이들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경기도 기업에 적합한 우수 노사관계 모델을 연구·발굴하고 기업들에게 홍보·교육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기업들이 경기도형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 (1단계) 협력적 노사관계 관련 연구를 통해 우수한 노사관계 모델을 발굴

- (2단계) 도 차원에서 우수한 노사관계 모델 구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3단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들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제도화 등의 노력을 하는 지 점검 및 재교육



[그림 3-1-30] 우수 노사관계 모델 구축 및 확산 지원

○ 지자체의 노동정책 기능 강화

- 현재 지방노동행정의 지휘권은 대부분 고용노동부에 귀속되어 있어 기업, 사업장의 노사분규 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나 정책 수단이 미흡
- 기업의 노사관계 갈등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지역 주민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관계 갈등 시 지자체의 중재자 역할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
- 노사와 지자체가 고용지원서비스·사회복지·직업능력개발의 통합서비스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확대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고용-복지 친화적 노사관계 모델 구축

- 향후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율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노사관계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 고용문제가 중심으로 부각될 전망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고용-복지 친화적 노사관계 모델이 안착될 필요
- 기업차원의 노사상생, 지역차원의 노사상생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도 노동시장의 특성과 복지제도에 적합한 고용-복지 친화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 고용-복지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일·가정 양립, 고용·훈련 양립이 가능한 휴가 및 근로시간제도 확립,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시스템 개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1-2-3] 지역 연계성 강화 및 균형 발전

핵심내용

- 2040년 경기북부는 수도권 산업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전망
- 경기북부 성장을 이끌어갈 지역전략특화산업 육성
- 신성장 경제거점 조성(경기북부테크노밸리)
- 경기북부 기반시설 조기 구축

목표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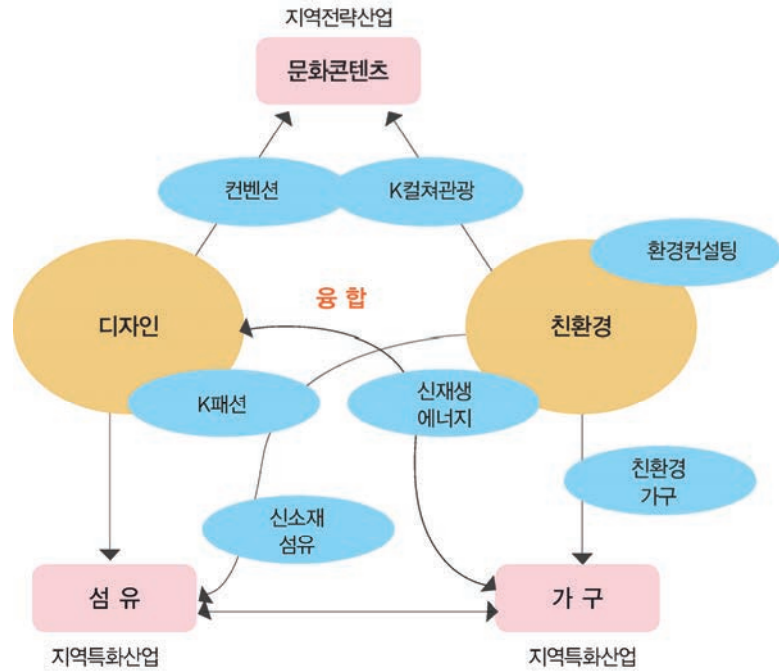
- 경기도 GRDP에서 차지하는 경기북부의 비중을 2012년 18.0%에서 2040년 25% 수준으로 높임
- 경기북부 지식기반산업 비율을 2011년 12.1%에서 2040년 25%로 높임
- 경기북부 고용률을 2014년 56.4%에서 2040년 67%로 높임

[표 3-1-12] 균형발전 목표 지표

목표연도 주요지표	현재	2020	2030	2040
경기북부 GRDP (경기도 비중)	(2012년) 18.0%	20%	23%	25%
지식기반산업 비율	(2011년) 12.1%	15%	21%	25%
고용률 (15세 이상 기준)	(2014년) 56.4%	59%	64%	67%

추진전략

- 경기북부 성장을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친환경-디자인 융합산업)
 - 섬유, 가구산업 등 경기북부의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디자인 및 친환경을 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 기능성섬유 및 신소재기술개발, 텍스타일디자인, 글로벌 섬유유통 등 핵심기능을 발전시키고, 동대문 및 강남의 의류디자인과 결합하여 융복합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
 - 경기북부 섬유 및 가구산업의 발전을 홍보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기술 및 디자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제 수준의 전시회를 개최
 - 오염다발지역(염색, 도금 등)인 경기북부 산업집적지역을 친환경도시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산업, 물산업, 환경엔지니어링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그림 3-1-31] 경기북부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 경기북부 신산업 거점 조성(경기북부테크노밸리 및 넥스트 산단 조성)

- 경기북부지역 산업구조고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산단(넥스트산단)을 조성하고 규모, 업종 등에서 일반 산단과 차별화 도모
-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면적은 남부에 비해 1/9 수준에 불과하며, 10만 평 이하의 소규모 산단 위주로 공급되어 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 미비
- 경기북부 넥스트 산단의 요건: ① 경기북부 앵커기업 유치 공간 ② IT제조 및 첨단부품소재(신재생에너지 등) 등 기존 북부특화산업 외의 업종 유치 ③ 기반시설 재정지원으로 분양가격 인하 ④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중업원 확보 용이) ⑤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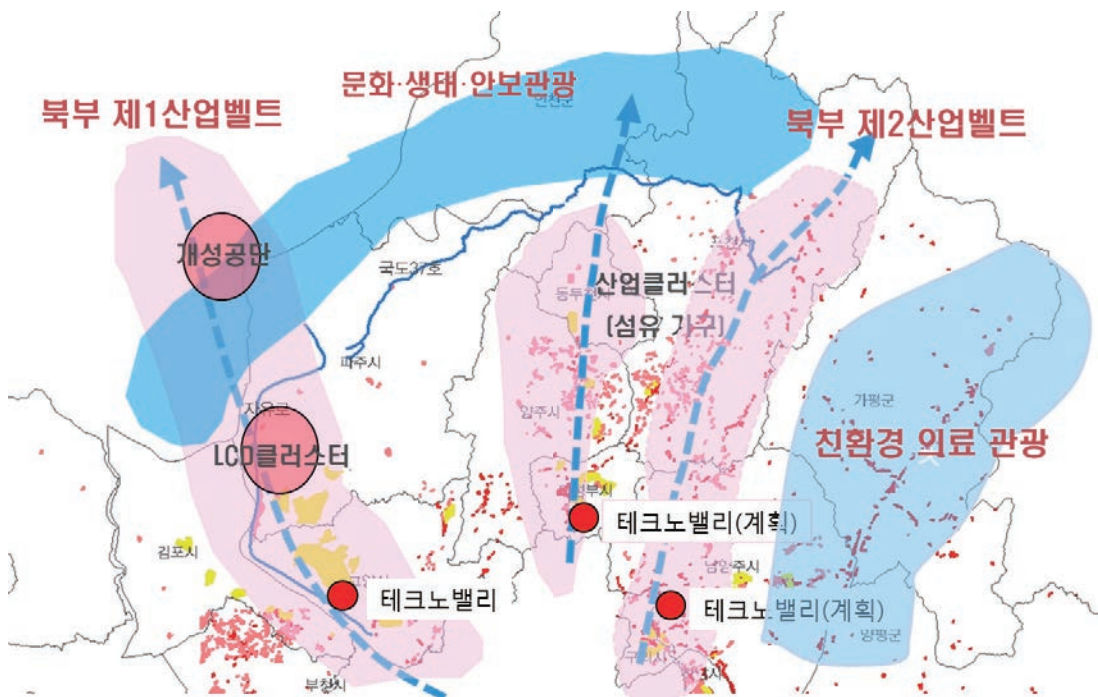
[표 3-1-13] 경기북부 넥스트 산단과 일반 산단 비교

구분	일반 산단	넥스트 산단
수요	단기 수요(-5년)	중장기 수요(-10년)
조성 목적	기업의 현재 수요 대응, 개별입지 정비 등 수요 대응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역개발 등 적극적 측면 강조
주력업종	전통특화산업, 주력산업	+ 지역전략산업, 신성장산업 유치
규모	중소 규모(10만 평 내외)	중대 규모(30만 평 이상)
기반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환경기초시설 등	+ 기업지원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교통접근성 제고

○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

- 서울 및 수도권 기업의 IT 신산업 확장수요를 타깃으로 한 복합업무지구 조성

- 원스톱 비즈니스가 가능한 비즈니스, 연구개발 등은 물론 고급두뇌인력의 취업선호도를 높이는 매력적인 근무환경 요소인 주거, 상업 및 편의시설 일체화
- 지식기반산업 입지변동을 고려하여 고양·과주, 구라·남양주, 의정부·양주 등 권역별로 특화된 테크노밸리 조성
- 사업성(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지역균형발전 기여도)이 우수한 1~2곳을 대상으로 시범 전략사업으로 추진
-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조성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 투입이 소요 되고, 사업 장기화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의 우선 선정 필요



[그림 3-1-32]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안)

[1-2-4] 신뢰와 네트워크 기반 경제 거버넌스 구축

핵심내용

- 상호신뢰와 경제협력의 거버넌스 확립은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
- 경기도와 시·군 간 수평적 경제협력체계 구축
- 경제정책 수립 시 민간부문 참여 프로세스 구축
- 공공-민간부문 연계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발

목표와 지표

- 경기도 권역별 ‘스마트 산업특성화’ 로드맵 작성(5년 단위)
- 경기도-시·군 간 경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수평적 ‘경제전략 협의체’ 운영
- 공공-민간부문 연계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화



[그림 3-1-33] 주요 목표 계획

추진전략

- 경기도-시·군 간 수평적 경제협력 체계 구축
 - 기존의 하향식(top-down)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 전략에서 탈피하여, 경기도, 시·군, 지역기업, 경제단체 등이 중장기 경제목표 및 산업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과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경제전략 협의체계’를 구축
 -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경기도 권역별 중장기 산업전략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스마트 특성화 위원회(smart specialization committee)’를 구성하여 5년 단위로 로드맵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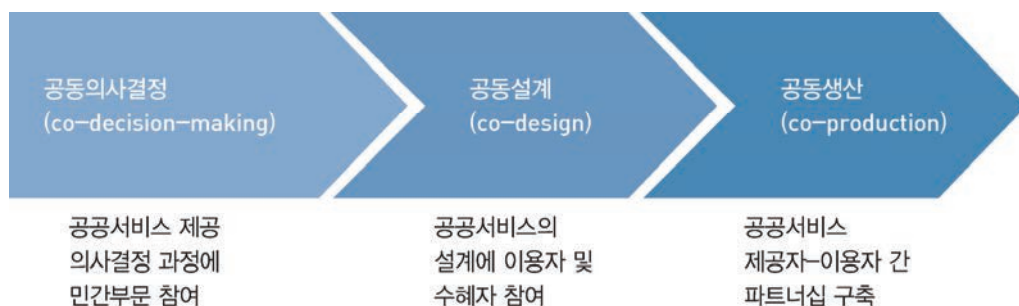
- 경기도 경제 및 산업의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상시협의체를 강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의 경제 지표 및 현황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부문에 정보를 개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확립

○ 경제정책 수립 시 민간부문 참여 프로세스 구축

-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 지원, 보상하고 서로 협력하는 쌍방향 관계의 구축이 필요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아이디어를 수용함으로써 공동창조(co-creation)가 이루어지는 개방형 시스템을 제도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형성된 관계의 현황과 패턴을 분석하고, 기업과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를 형성
- 민간부문과의 일상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무원 평가에 이를 반영

○ 공공-민간부문 연계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발

- 민간부문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자가발견(self-discovery)’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나 아직 시장형성이 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정부부문의 역할을 집중
- 공공서비스 제공에 민간부문을 주요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공공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
- 타임뱅크(time bank)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 협력과 신뢰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긴밀한 관계에 기초한 경기도형 공유가치창출 모델을 개발



[그림 3-1-34] 공공-민간부문의 공공서비스 공동창조 과정

[1-2-5] 글로벌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

핵심내용

-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 공정무역 센터 및 체험판매장 조성
-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및 공공/민간 시장 확대 정책 추진

목표와 지표

- 국제사회에서의 경기도 위상 제고 및 따뜻한 경기도 이미지 강화
- 공정무역 지원과 윤리적 소비 운동 장려를 통한 경제 활성화
-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및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성장의 계기 마련
-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

추진전략

-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 ‘글로벌 공정무역 경기도’ 추진 선언 및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도청, 도의회, 공정무역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정무역 위원회 설립

〈영국 런던의 공정무역 추진 사례〉

- 1) 결의안 발표: 2003년 런던 내 개인과 기관, 기업체, 학교 및 대학, 종교단체와 의회까지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결의 선언
 - 2008년 10월 23일 25개의 공정무역 자치구 달성과 함께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 도시로 발돋움 (런던시민 8백만)
- 2) 공정무역 운영위 구성: 런던 전역의 활동을 조정하고 자치구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캠페인 정보를 공유하는 허브를 구성
 - 아비바(보험회사), 웨이트로즈(슈퍼마켓체인), 바비칸센터(런던의복합예술센터) 등 영향력 있는 기업 및 센터와 디바인초콜릿, 영국공정무역재단 등 순수공정무역단체 출신 인사들로 구성

- 공정무역센터 설립
 - 공정무역 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연구/교육/지원 허브 설립
 - 국내외 공정무역단체들이 교류, 협력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정무역 사업 지원 및 공정무역 체험판매장 등을 운영

○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 경기도 내 공정무역 커뮤니티(도시, 군/ 종교단체/ 대학/ 학교 등) 캠페인 추진
- 공정무역 커뮤니티 지정 및 프로그램 지원

○ 공정무역 사업 성장을 위한 자금 및 정책 지원

- 공정무역 생산지/ 국내 공정무역단체 지원 및 주체 발굴
- 국제 개발과 연계한 저개발국 공정무역 생산지 지원 사업
- 국내 공정무역 사업 인큐베이팅 지원
- 도청·기초단체·산하기관의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수립
- 민간시장의 공정무역제품 유통 및 거래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확대

[1-3] 동북아 경제 거점화

[1-3-1]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핵심내용

- 한·중 FTA로 한·중 간 무역규모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
-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협약체 설립
- 지방정부 간 협력시범지구 설정 및 중소기업 협력 강화
- 지방정부 간 정보통신-과학기술 협력 강화

목표와 지표

-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협약체 설립
 - 2015년 협약을 논의하고 2020년까지 지방정부 참여기관(경기도 예: 경기중기센터·경기TP·경기 과학 기술진흥원, 킨텍스, 코트라 등 참여)을 확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촉진
-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의하여 2020년까지 협력시범지구 지정, 개발하고 2025년부터 지구내 산업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반월시화산업단지를 협력시범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하여 무역투자·산업협력·정보교환 등을 촉진
-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을 2014년 378억 달러에서, 2020년 550억 달러, 2030년 1,000억 달러, 2040년 2,000억 달러로 증가

추진전략

-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협약체 설립 추진
 - 통상협력 증진에 대한 지속적 협의, 투자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참여기관: 경기중기센터·경기TP·경기과학기술진흥원, 킨텍스, 코트라 등
- 지방정부 간 협력시범지구 설정
 - 한·중 FTA 협정문에서는 한·중 산업단지 부문 협력을 위해 양국은 각국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추진기관의 설립, 운영, 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공유, 정보교환, 투자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특히 지방경제 부문 협력을 위해 중국 웨이하이시, 인천자유경제구역을 협력시범지구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시범협력프로젝트는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부문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기로 하였음
- 경기도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반월시화산업단지를 협력시범지구로 설정하여 무역투자, 산업협력, 정보교환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 간 중소기업 협력 강화

- 한·중 FTA 협정문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 부문 협력을 위해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 논의의 정례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정보 교환, 중소기업 교육훈련 증진, 경험 공유를 촉진하도록 함
- 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기관 간 교류협력(예: 경기중기센터)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투자상담회·수출상담회를 개최 지원하며 원산지 증명, 인증 등 정보 교환을 촉진

○ 지방정부 간 정보통신·과학기술 협력

- 한·중 FTA 협정문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정보통신 협력을 위해 양국은 정보기술단지 내 연구·개발·관리, 정보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및 통신의 연구·개발·배치 등을 촉진하기로 함. 또한 과학기술 부문 협력을 위해 양국은 공동연구·개발 및 전문가 등 교류, 과학기술 관련 회의 공동 주최, 공동과학기술 결과로 발생한 제품, 서비스의 상업화 협력 등을 촉진하기로 함
- 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 지방정부 산하의 관련 기관 간 정보통신·과학기술 부문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테크노밸리 간 교류 협력, 기술·사업화 협력 등을 촉진

○ 지방정부 간 관광 협력

- 한·중 FTA 협정문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관광부문 협력을 위해 양국은 관광 당국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관광 관련 정보교환을 촉진하며 양국 간 항공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인 해외관광 영업 신청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함
- 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내 관광공사 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공사에서 관광객 애로사항 해결 창구의 역할을 강화



자료: 동아일보(2015), “굵긴 남북철도 잇는 게 유라시아 시대 출발점”

[그림 3-1-35] 경기도-중국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확대방안 개념도

[1-3-2] 유라시아 개발 거점화 및 경제영토 확장

핵심내용

-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경제권 확장에서 경기도의 핵심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
- 유라시아 개발 거점센터 설립 및 유라시아 진출 마스터플랜 수립
- 유라시아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경기도 중견·중소기업 진출 지원
- 물류·에너지 교역 확대를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 에너지그리드 및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 문화·교육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인적 자원 활성화

목표와 지표

- 경기도 내 유라시아 개발을 위한 거점센터 유치
- 경기도와 유라시아지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경기도의 대러시아 및 대중앙아시아 수출을 2014년 23억 달러에서 2040년 250억 달러(연평균 10% 증가)로 증가

추진전략

- 경기도 내 유라시아 개발 거점 센터 설립
 - 유라시아 대륙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유라시아 개발 거점센터 설립하고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
 - 유라시아 지역은 다양한 역사, 종교, 관습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 관계에 있어 획일화된 체계로 접근하기 보다는 역사, 문화, 종교 등이 유사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유라시아 개발 거점 센터에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각 지역별로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액션플랜을 마련
-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중앙아시아 지역별 중점 산업을 파악하여 해당 나라에 적합한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마련
 - 러시아는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석유화학, 물류, 농수산식품 부문 등을 위주로 육성할 계획이므로, 경기도도 이를 활용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
- 균형 잡힌 상호발전을 위한 유라시아 지역의 기업들을 경기도 내 유치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및 물류·에너지 교역 확대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가장 큰 계획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는 한반도중단철도(TKR)를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결해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구축하는 계획임
- 이를 성공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낙후되어 있는 경기도 내 경원선 및 경의선 철도의 현대화와 북한의 철도망 복구 및 연계를 추진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실현으로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물류 거점화 토대 마련
- 에너지 그리드 구축을 통한 석유·가스·전력 수송망 연결 및 활성화
 - 유라시아 지역과 동북아 지역 간의 에너지 그리드(Energy Grid) 구축을 통해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과도하게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원을 분산



자료: 동아일보(2015), “끊긴 남북철도 잇는 게 유라시아 시대 출발점”

[그림 3-1-36]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방안

○ 효율적인 물류·에너지 교역을 위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정보 불균형은 물류·에너지 교역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강점인 IT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유라시아 지역으로 수출

○ 경기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문화·교육 교류 활성화

- 한류를 이용한 중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연결고리 형성
 - 일산의 ‘한류월드’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류관광 활성화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활용한 국토 횡단 여행 패키지를 통해 내·외국인들의 관광영역 확장
- 유라시아 지역 대학과 경기도 내 대학 간 학위 및 산학 연계로 인적 교류 네트워크 형성
 - 대학간 학점교류, 교환학생, 복수학위 등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
 - 유라시아 지역특성화 학과를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제 2 장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

비전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

목표

미래 성장과 안정을 담보하는
인구정책

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유대 강화

다양한 집단이 상생하는
사회대통합

전략

2-1.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형성

2-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2-3. 보건의료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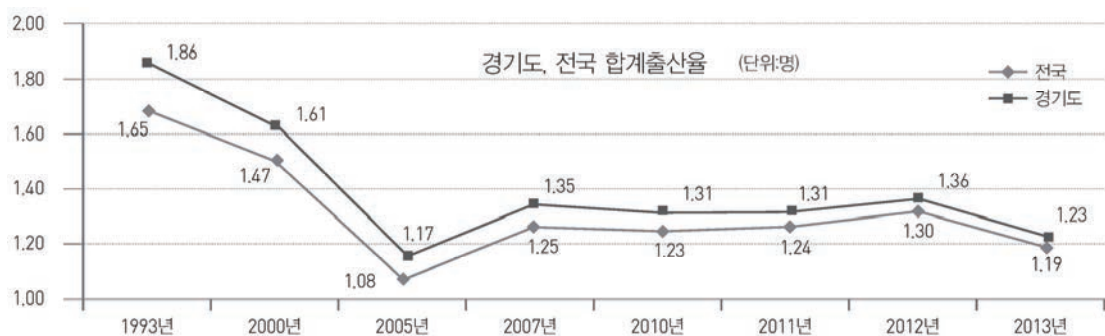
제1절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1. 현재의 여건

 (저출산) 인구대체수준에 한참 밑도는 출산력

- 2014년도 경기도 출생아수는 11만 2천 명이며 전국 출생아수 43만 5천 명의 약 1/4(25.7%)을 차지
- 2010~2012년까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TFR)은 1.3명 이상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3년부터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 미만으로 내려가는 추세⁵⁾
 - 꾸준히 감소해 온 합계출산율은 쌍춘년(2006년)과 황금돼지해(2007년)를 계기로 일시적인 반등을 보였으나 2013년 다시 감소
 -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전국에 비해 다소 높지만 그 차이는 갈수록 좁아지는 추세
 - 2014년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며 전국은 1.21명



자료: 통계청(2013), 「인구동향조사, 1993~2013」

[그림 3-2-1] 경기도 여성의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고령화) 고령인구 규모와 상대적 비중이 동시에 증가

- 2014년도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2만 7천 명으로 도내 인구의 10%를 돌파했으나 아직은 전국(12.7%)에 비해 낮은 수준
 - 도내 노인인구는 매년 약 5.7만여 명씩 늘고 있으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0.35%씩 증가

5)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며, 구하는 공식은 [연령별(5세계급) 출산율의 합/1,000] × 5.

- 특히 의료 및 기초생활보장이 더 필요한 8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oldest-old)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85세 이상 인구는 2009년 6.3만 명, 2011년 7.8만 명, 2013년 9.2만 명, 2015년 5월 말 현재 10.5만 명(남성 2.8만 명, 여성 7.7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기대수명) 고령인구 증가는 기대수명의 꾸준한 증가 때문

- 2011년 경기도민 기대수명은 81.7세이며, 여성(84.7년)이 남성(78.4년)에 비해 6.2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민 기대수명은 남녀 공히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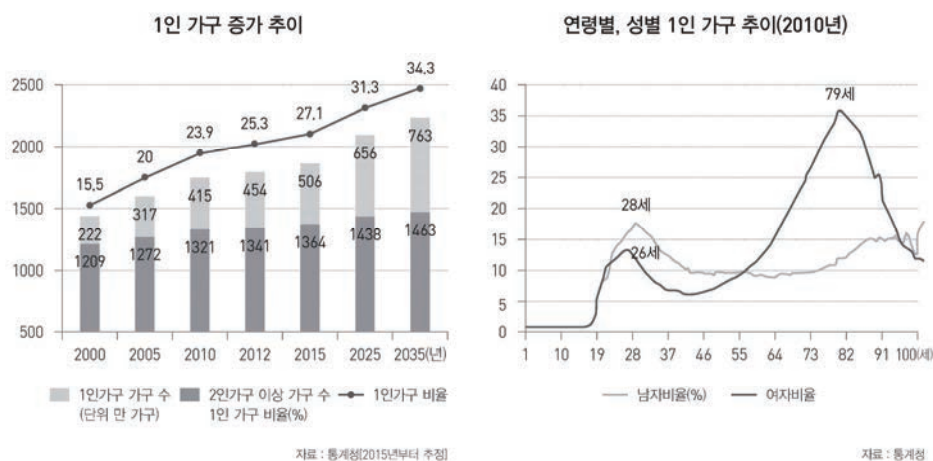
[표 3-2-1] 경기도민의 기대수명, 2005~2011 (단위: 년)

	전 체	여 성(A)	남 성(B)	남녀차(A-B)
2005	79.2	82.2	75.9	6.4
2008	80.7	83.6	77.4	6.1
2011	81.7	84.7	78.4	6.2
(전국) 2011	81.2	84.5	77.6	6.8

자료: 통계청, 「생명표, 시·도별 생명표」,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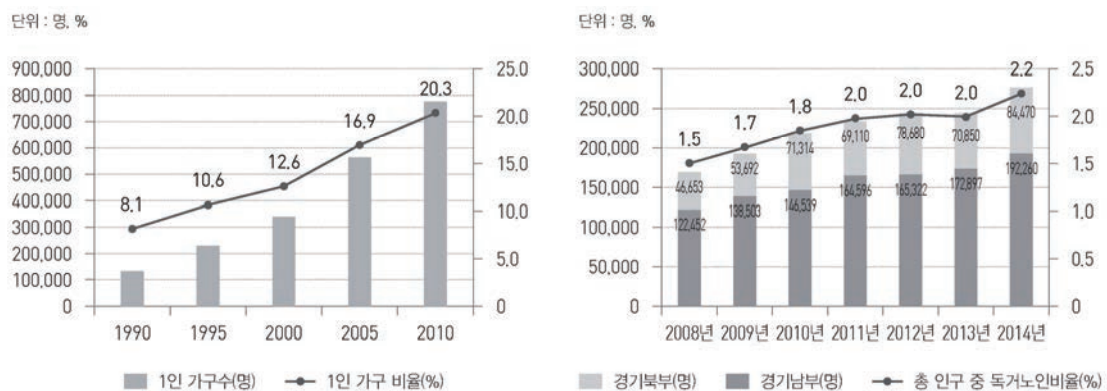
(홀로 사는 시대) 전통적 '가족' 해체에 따른 '고족'(孤族)화 특히 독거노인 인구 급증

-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2015년 500만 가구를 돌파
- 특히 기대수명의 증가와 남녀차로 인한 고령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
 - 80세를 전후해 여성인구 약 40%는 홀로 살고 있는 실정



[그림 3-2-2] 한국의 1인 가구 추이

- 경기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 8.1%에서 2010년 20.3%로 증가
 - 반면,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1990년 78.4%에서 2010년 58.1%로 하락
 - 특히 고령자 1인 가구의 경우 1990년 1.8만 가구(경기도 전체가구의 1.12%)에서 2010년 14.7만 가구(3.85%)로 8.2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1인 가구 증가세 5.9배 보다 더 가파른 수준
- 2014년 경기도에서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7만여 명에 이르며 도민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
 - 2008~2014년 동안 독거노인의 증가속도는 경기북부(1.81배)가 남부(1.57배) 지역에 비해 빠름
 - 현재 총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 역시 경기북부(2.6%)가 경기남부(2.1%)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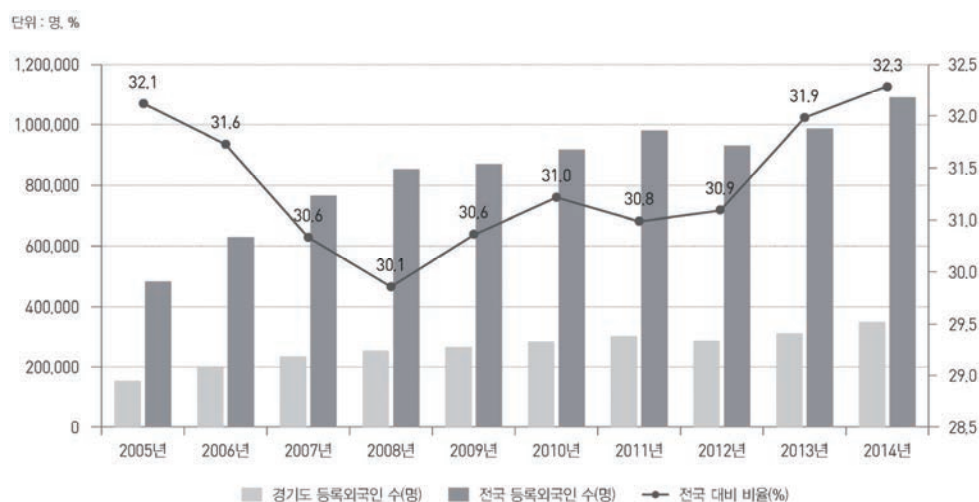


자료: (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우) 경기도 노인복지과, 「경기복지통계」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그림 3-2-3] 경기도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추세

(다문화) 경기도 등록외국인은 전국의 1/3 수준이며, 결혼이민자는 2005년 이후 감소

- 경기도 거주 등록외국인은 2015년 5월말 현재 35.9만여 명이며 전국 111.2만 명 대비 1/3(32.3%)을 차지



[그림 3-2-4] 경기도 거주 등록외국인 추이, 200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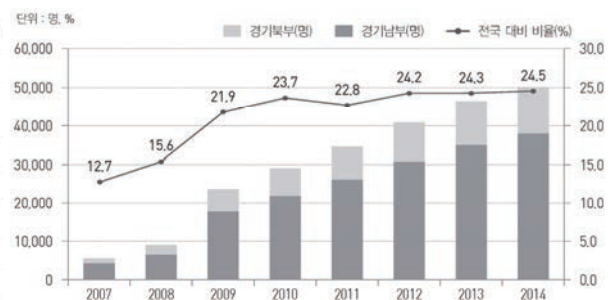
- 경기도 지역 국제결혼은 2013년도 6,216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8.0%(전국 평균과 동일)를 차지하며, 2005년 9,962건(13.8%)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
 - 이는 정부의 국제결혼 요건 강화에 따라 외국인부인의 수가 줄어드는데 있음
 - 경기도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2014년 현재 86,337명으로 전국 295,842명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 기준으로 경기도가 가지는 상대적 비중보다 높은 수준
- 경기도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14년 51,960명으로 2007년 6,617명에 비해 7년 새 8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증가세(4.6배)에 비해 훨씬 높음
 -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4년 204,204명으로 증가
 - 비록 경기도의 국제결혼 추세는 지난 10년간 다소 진정되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급증해 왔으며 향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경기도 국제결혼, 2000~201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연도

[경기도 다문화가정 자녀수, 2007~201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각연도

[그림 3-2-5] 경기도의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정 자녀수 추세

(사회적경제/사회적일자리)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2013년 1,005개소에서 2015년 상반기 현재 1,697개소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협동조합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짐
 - 사회적기업: 385개소(2013) → 430개소(2015.05)
 - 협동조합: 459개소(2013) → 1,105개소(2015.05)
 - 마을기업: 161개소(2013) → 168개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인원 규모는 2013년 8,329명에서 2015년 11,326명으로 26% 증가
- 경기도 내 사회적 일자리를 2014~2018년 기간에 매년 평균 3.6만개씩 창출하여 2018년까지 총 18만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

[표 3-2-2]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유형과 추세

실국	일자리 유형	2014 창출결과	창출목표	예산(억 원)
총계		35,573	38,192	2,783
보건복지국(17)	자활, 노인, 장애인 일자리 등	21,141	22,861	2,074
여성가족국(11)	중장년 여성취업 지원사업 등	10,071	9,574	304
경제실(5)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	2,348	1,889	139
교육협력국(4)	도서관 사서보조 지원 등	200	2,230	93
문화관광국 등 (10)	문화재돌봄, 농가도우미 등	1,813	1,638	173

자료: 경기도청(2015), 「민선6기 1주년 성과와 비전 2018」, p.86



(경기도의 위상) 경기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가 혼재

- 경기도민의 경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인구와 지리 규모가 크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꼽음
 - 나이가 문화재가 풍부한 동시에 최첨단 산업이 발달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다양성을 가진 활기찬 지역이란 이미지도 있음
- 경기도민의 경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교통 인프라 부족, 서울에 비한 열등감, 결속력 부재, 각종 규제 등을 꼽음
 - 서울에 비해 홀대받고 뒤쳐져서 항상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
 - 지역에 대한 자긍심 부족으로 인한 뭉치지 않는 모래알 이미지

[표 3-2-3] 경기도민의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경기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경기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구 분	경기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참석자의 말)	구 분	경기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참석자의 말)
규모	“제일 크다” “규모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 인프라 부족	“심각한 교통” “교통편이 많은 쪽만 좋고요, 나머지는 오락가락 하는 거 같아요”
인구	“인구가 많은 1등 지역” “사람이 많으니까 풍부한 인재가 있죠” “토박이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만큼 많은 인구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각종 규제	“규제가 많아요. 상수원이나 접경지역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있어요”
선두	“경기도는 무엇이든지 최고의, 먼저, 선두에 선다는 느낌이 있어요”	결속력 부재	“경기도는 뭉치지 않는 모래알 같아요” “내가 살고 내가 거주하는 데의 변화라면 관심을 갖죠,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역사, 문화 발달	“역사와 관련된 게 많아요. 수원엔 수원화성이 있고요, 안산에 가면 다문화와 관련된 곳이 있어요” “문화재가 많아서 문화적인 발전이 많아요” “경기도는 꽃 축제도 많이 하고 불거리도 많아요”	실험적 역할	“저희가 먼저 실험을 하니까 힘든 것도 많아요. 9시 등교도 반대했었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힘들고”
융복합 도시	“도시농업과 산업적인 분위기 등이 합쳐져 복합적이예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다양함이 섞인 융복합적인 도시”	서울과 비교한 열등의식	“서울에 비해 항상 경기도가 홀대 받는다는 느낌” “서울을 따라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서울에서 유행하고 난 뒤 한참 후에 경기도로 오는 느낌이 있어요”
젊은, 활기찬	“기업 쪽으로 보면 청년 같은 느낌이에요”	복잡함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군사접경지도 있어 매우 복잡해요.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분권화	“유동적인 분권화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방자치체가 나눠져서 분권화가 될 거 같은데 그때 유동적으로 나눠질 거 같아요”		
중소기업 발달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중소기업이 커지는 지역이 경기도 같아요”		

자료: 경기연구원(2015), 「경기도 미래비전 및 주요 아젠다에 대한 집단심층토의(FGI) 보고서」, 내부자료

2. 제약점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여전히 미흡

- ‘종합선물세트’식으로 진행되어온 출산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된 저출산·고령사회 추세를 반등시키지 못함
 -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66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 예산은 2006년 2.1조에서 2014년 14.9조로 급증하였으나 출생아수는 오히려 2006년 44.8만 명에서 2014년 43.5만 명으로 감소

(비혼 및 만혼 인구 증가) 결혼 및 출산의향을 낮추는 사회경제적 현실

- 20~40대 비혼(非婚) 1인 가구는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2030세대에서는 ‘3포세대’에 이어 ‘5포세대’ 심지어 ‘7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까지 등장⁶⁾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경기도 여성의 15%만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2002년 21%에 비해 6%p가 낮아진 수치임
- 여성의 만혼(晩婚) 추세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며 전체 출생아수를 감소시킴
 - 만혼집단이 생애주기에 걸쳐 가지는 총 자녀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다는 사실은 결혼시기와 출산 간격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2013년도 경기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2세, 여성 29.7세로 여성이 2.5세 적음
 - 경기도 여성의 초혼 연령은 1990년 24.7세에 비해 무려 5세나 높아짐
-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초혼 및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해 경기도 20대 산모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는데 반해, 30대 후반의 고령산모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

6) ‘7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표 3-2-4] 경기도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 출산율, 1997~2013

연도	연령별 출산율*(여성 천 명당) (단위: 명)							합계 출산율***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97	3.6	72.6	172.5	71.7	16.2	2.6	0.2	1.672
1998	3.2	63.5	164.0	72.0	16.1	2.7	0.3	1.585
1999	3.1	56.9	160.1	73.7	15.8	2.7	0.2	1.549
2000	2.8	50.7	165.3	85.5	18.1	2.7	0.2	1.614
2001	2.5	40.5	143.2	79.2	17.7	2.8	0.2	1.424
2002	2.9	34.3	125.7	76.6	17.1	2.6	0.3	1.292
2003	2.8	29.4	127.7	82.6	17.9	2.7	0.3	1.310
2004	2.6	25.5	118.0	87.1	18.9	2.7	0.2	1.268
2005	2.2	21.4	103.6	85.0	19.3	2.7	0.2	1.173
2006	2.2	21.1	101.9	94.4	22.0	2.8	0.2	1.229
2007	2.1	21.4	106.8	107.0	26.9	3.4	0.2	1.350
2008	1.6	19.6	95.8	107.2	27.9	3.2	0.2	1.285
2009	1.5	17.3	88.9	106.1	28.4	3.6	0.2	1.226
2010	1.6	16.9	87.9	118.7	34.4	4.2	0.2	1.309
2011	1.6	16.5	85.4	119.7	36.9	4.9	0.2	1.314
2012	1.5	16.3	83.1	126.4	40.1	5.0	0.2	1.355
2013	1.4	13.6	69.5	115.3	40.1	4.9	0.1	1.226
전국 (2013)	1.7	14.0	65.9	111.4	39.5	4.8	0.1	1.187

주. *연령별 출산율=(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당해연령별 여성인구) × 1,000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인구

***단위: 가임여성 1명당 인구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비혼 및 만혼 경향을 심화시킴

-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욕구와 취업에 대한 욕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이
- 우리나라 여성들은 불안정한 고용을 통해서라도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결혼을 미루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반과 기업문화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혼기피와 만혼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경력단절 여성)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함에 따른 비효율적인 여성 인적자본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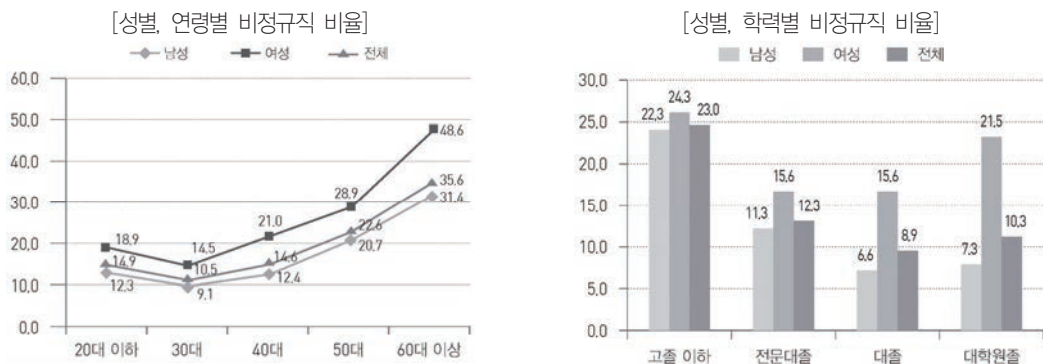
- 2014년 4월 현재 경력단절 여성은 전국적으로 197.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30대가 109.5만 명으로 과반을 차지
 - 30대 기혼 여성의 36.7%는 경력단절 여성이며, 주된 경력단절 이유로는 결혼(41.6%), 육아(31.7%), 임신과 출산(22.0%) 순으로 나타남
 - 육아 인프라가 부족하고 '워킹맘'을 잠재적 경단녀로 바라보는 현실에서 '결혼보다 일'을 택하는 2030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시장에서 남녀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추세⁷⁾



자료: 동아일보(2015), “두 번 우는 경단녀들” (2015.05.01)

[그림 3-2-6]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와 경력단절 요인

- 결혼, 출산, 육아 등의 경력단절 요인 때문에 고학력일수록 남녀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도 커지며, 이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의향 및 혼인비율을 낮추고 있음



자료: 박라인, 황승록(2015), 「사업체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 The HRD Review

[그림 3-2-7] 비정규직 비율의 남녀 차이 (단위: %)

- 2012~2014년간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마친 경기도 내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도 재취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⁸⁾

7) 2015년 5월 8일 한국경영학회·한국사회학회 주최 「결혼문화와 국민의식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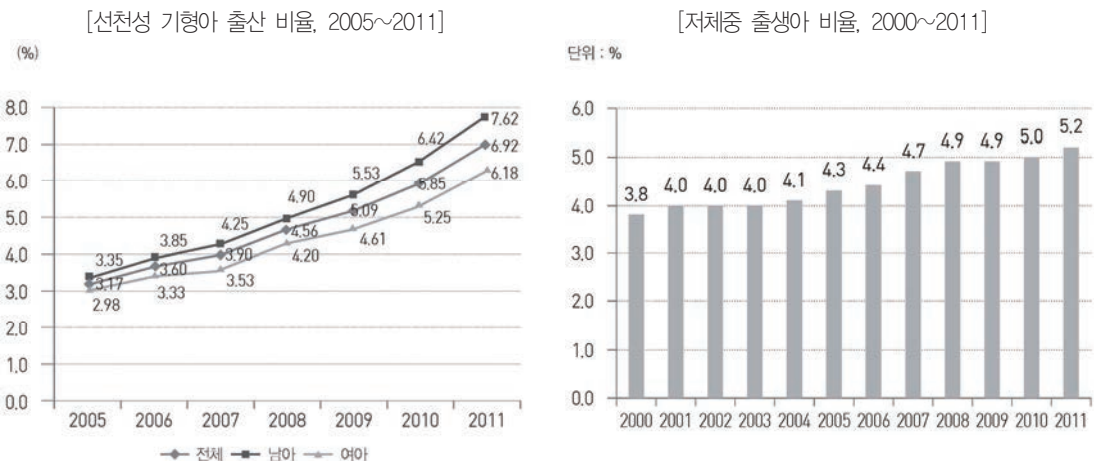
8) 2015년 6월 1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경순 도의원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운영하는 실무간 호인력, 보험총무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취업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음.

- 같은 기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자는 1,132명인데 취업자는 불과 550명으로 48.6%의 취업률을 기록
- 경기도 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률의 지역별 편차도 매우 큼(북부여성비전센터 취업률 67.5%, 남부여성비전센터 35.9%)



(출산의 질 저하) 고위험 고령산모 증가로 인한 정부 부담 증가

- 노산(老産)이 늘면서 기형아 및 저체중 출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위험·고령 임신부 지원 정책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출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⁹⁾
 - 취업 여성의 결혼연령 및 출산연령이 증가할수록 생물학적으로 젊은 여성에 비해 불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및 자궁내발육부진 출산 비율이 높음
 -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선천성기형아 출생률과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계속 늘고 있음
 -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40대가 2011년 1만 7,886명에서 2013년 2만 652명으로 불과 2년 사이 무려 15.5% 증가¹⁰⁾
 - 고령임산부 다수가 병원에서 만35세 이상에게 제안하는 추가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킴¹¹⁾
 - 최근 들어 기형아 및 저체중 출산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출산의 질’과 ‘고령산모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산전(産前)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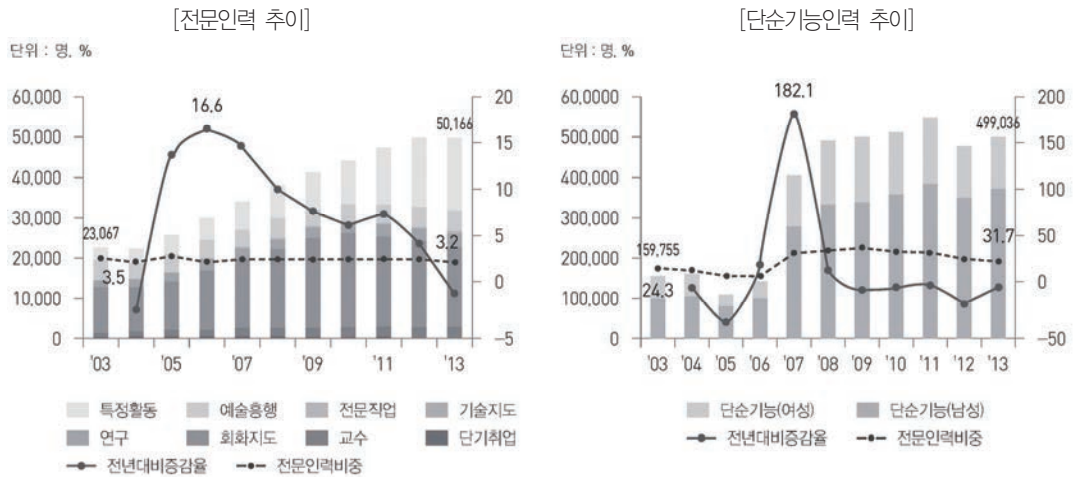
자료: 이소영, 최인선(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2-8] 한국의 기형아 및 저체중 출산 추이

9) 김태홍 외(2011),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외(2013),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자질 향상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 임신부에 대한 FIGO(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의 국제기준은 만35세 이상의 산모를 의미하며, 한국도 일반적으로 이를 따름.

10) 2015년 4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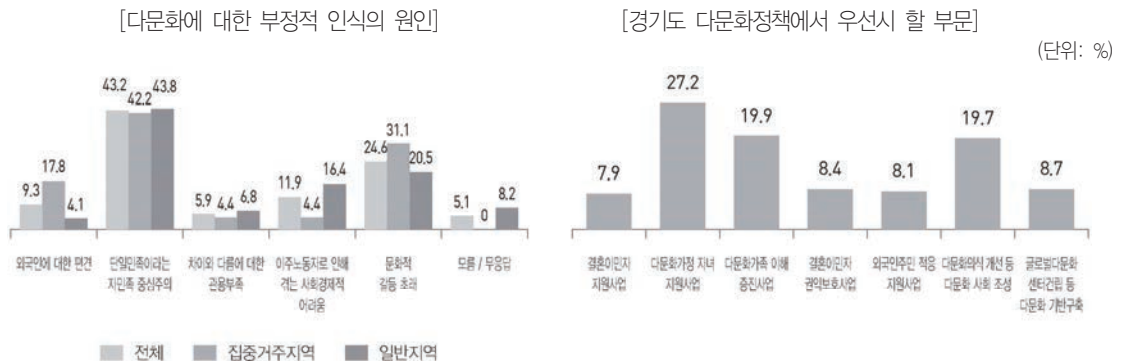
11) 고령 임신부에 특화된 진료로는 고위험 임부 산전검사,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고위험 임부 기형아(양수)검사, 임신을 계획하는 고령 여성에게 임신 전부터 엽산제(folic acid)를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그림 3-2-10]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직업 분포 추세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부족) 이민자와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비전 부재

- 경기도민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원인으로 단일민족이란 자민족 중심주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 외국인에 대한 편견 등을 지적¹²⁾
- 경기도의 외국인 체류자 및 다문화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적 가치가 담긴 정책은 아직 미흡하여, 향후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경기도민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개선을 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만큼 중요하다고 인식
 - 상호 신뢰관계를 높이고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교육 투자와 정책 추진이 필요
 - 기존의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다문화지원 사업을 벗어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오롯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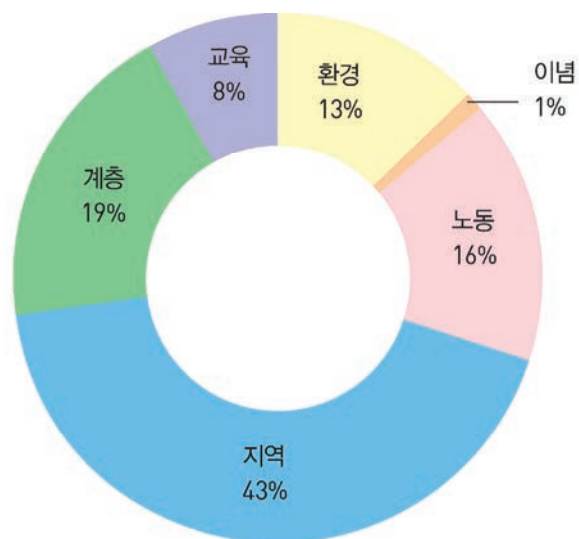
[그림 3-2-11] 경기도민의 다문화의식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태도

1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8월 한국의 혈통주의와 단일성에 대한 강한 신념 그리고 이에 따른 인종차별적인 상황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갈등관리 시스템 미흡) 경기도 내 사회갈등은 낮은 사회통합과 신뢰 수준을 반영

- 1990~2012년 사이 경기도 내 공공갈등은 117건으로 서울(141건)에 이어 2위¹³⁾
 - 경기도는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고, 서울에 있던 비선호시설 상당수가 들어서 있고, 밖으로는 충청 및 강원 지역과 인접해 있어 지역분쟁 소지가 큰 편임
 - 경기도에서 도시성장이 빠른 지역의 공공분쟁 발생비율이 높은 편이며, 다음으로 대규모 시설이 위치하거나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지역이 높게 나타남
 - 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분쟁이 총 50건으로 전체 43%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갈등하는 양쪽 모두 가치 추구보다는 이해 추구로 인해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음

유형	빈도
환경	16
이념	1
노동	19
지역	50
계층	22
교육	9
총계	117



자료: 이재광 외(2014),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p.19

[그림 3-2-12] 경기도 공공분쟁 유형, 1990~2012

- 제도적으로는 2013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갈등 현장과 괴리된 위원회 구성과 목적,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미흡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¹⁴⁾
- 특히 경기도 내 기피시설 관련 입지갈등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사례로는 화성 광역화장장 설치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수원비행장 이전사업, 신경기 변전소 설치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13) 이재광 외(2014),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4) 경기도 해당 조례는 기본적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용해 작성되고 운용되고 있음.

[표 3-2-5] 경기도 주요 입지갈등 사례

연 도	종 류	내 용
2015	군시설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갈등
2015	추모 및 화장장	화성시 광역화장장 설치 갈등
2015	폐기물처리	평택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갈등
2013	전기 및 발전소	안성 신중부변전소 반대 분쟁
2011	군시설	여주시 공군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갈등
2011	임대주택	과천시 보금자리 주택 갈등
2010	추모 및 화장장	안산시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갈등

자료: 이상대(2015),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경기연구원



(공동체 문제) 미시적 수준의 지역사회 연대를 위한 기반 약화

- 외곽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의 편의성은 제고되었지만, 지역사회를 이루는 소규모 마을공동체의 기능은 상실되거나 줄어들고 있음¹⁵⁾
- 경기도민은 공동체 의식 약화를 주요 지역사회문제 중 하나로 지적
 - 가령 2013년 10월 남양주시 FG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소통부족, 주민을 뭉치게 할 구심점 미비, 공동체 의식 약화, 애항심 부족, 아파트와 주택지역 간 주민통합 부족,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이주, 주민조직화 문제 등을 주요 지역사회 문제로 지적

[표 3-2-6] 남양주시의 주요 지역사회 문제

읍면동 (응답자 수)	주로 논의된 지역사회 문제
지금동(87)	안전문제(가로등 설치, 도로정비) 보금자리 사업을 위한 철거로 원주민의 이주 개발 중이라서 주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음(현 시점에서 복지를 논하기 어려움, 개발논리)
와부읍(136)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 간 주민통합이 잘 안됨 기관과 단체 간 대화가 부족함, 네트워크가 약함 빈부 격차가 큼 노인복지관이 없음 복지 대상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진접읍(144)	청소년 문제(공동체 의식의 약화) 행정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속도가 인구급증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속도를 못 쫓아감
화도읍(137)	베드타운 문화 마석시내 거리 정비(도시 정비) 남양주 내 교통문제, 공원이나 광장과 같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나 구심점이 없음
퇴계원면(82)	퇴계원 면 내의 도로정비가 안돼서 상습적으로 교통체증 현상 발생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지역개발이 어려움 청소년문제, 애항심(주민의 관심부족)의 부족
오남읍(70)	오남읍 내 도로정비문제 버스노선 확장 등 교통문제 취약계층 지원 문제
별내면(69)	교통이 불편함 노인시설 문제 학교문제(학생수 감소) एको랜드 복지기금 활용방안, 주민조직화

자료: 남양주시보건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2018년)」, pp.59-60

15) 이재준,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방향성과 경기도의 미래비전 2040계획」, 경기연구원 초청특강(2015.06.04).

- 최근 들어, 공동체 해체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타개할 정책적 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특히 ‘따복마을’과 ‘따복공동체’ 사업)이 활발히 제안되고 추진되는 중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단계는 아님

(경기도의 정체성 부족) 1,200만 도민을 하나로 이어줄 거시적 차원의 결속력 부재

- 경기도 31개 시·군별 각각의 지역특성이 강해 하나의 경기도로 뭉쳐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민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인식
 - 경기도민들은 경기남부/경기북부, 도시/농촌, 군사접경지, 내륙/해안, 신도시/구도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복잡하게 혼재되었다고 느끼고 있음
 - 이로 인한 지역 간 결속력 부족이 경기도 차원의 정체성 부재 현상의 원인이라고 인식
- 광역 차원의 정체성 부재에 따른 자긍심, 소속감, 애향심 부족
 - ‘무정체성’과 ‘서울 백업(back-up)’ 등이 경기도민이 바라본 경기도의 정체성

[표 3-2-7] 경기도의 정체성 부재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경기도민의 의견

구 분	현재 직면 과제 - 정체성 부재 (참석자의 말)
자긍심 부족	“정체성이 없어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반대가 덜해요” “자부심이 없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부당한 상황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지 못해요” “경기도민인 게 딱히 자랑스럽지 않고 내가 사는 거주지일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정체성, 애향심 부족	“경기도민이 1200만이지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인구는 30%도 채 안 될 거예요. 고향 토박이가 많은 곳은 내 고향의 색채가 강하게 나오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않으니깐”
경기도민을 이어주는 결속력 부재	“안성, 수원, 평택 등 경기도 안에서의 또 다른 지역적인 부분이 나뉘지는데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경기도라는 큰 틀로 엮이지는 않아요”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군사접경지도 있고 다양한 부문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서울과의 차별	“경기도가 홀대 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서울이랑 가깝지만 서울시민에 비해서 홀대 받는다” “경기도는 서울과 비교를 당하면서 굳이 경기도민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
경기도가 시골이라는 인식	“사람들은 경기도가 수원 말고 조금 더 들어가는 데는 시골이지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서울에 비해 경기도가 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자료: 경기연구원(2015), 「경기도 미래비전 및 주요 아젠다에 대한 집단심층토의(FGI) 보고서」, 내부자료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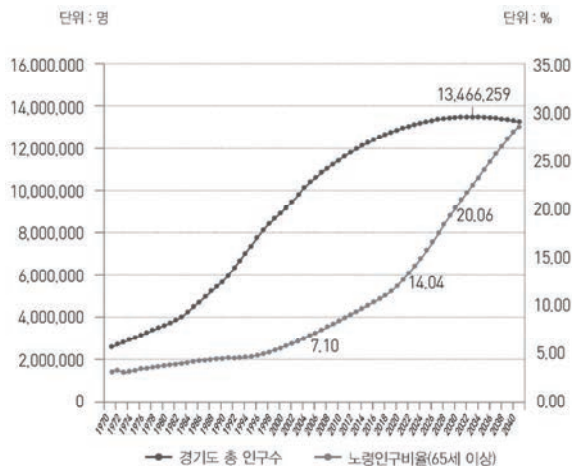
중장기 전망과 과제

1. 경기도 사회변화의 메가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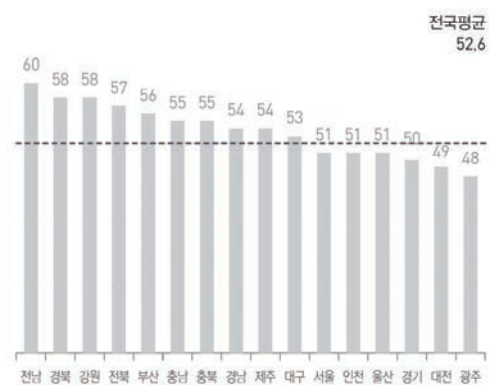
 (인구구조 전망) 2032년 인구 피크에 도달하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경기도 인구 증가율은 2018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2032년 1,324.6만 명(내국인 기준)을 정점으로 감소
- 기대수명 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맞물리면서 2029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를 돌파하고, 2040년에는 28.5%(378.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40년 경기도민의 중위연령은 49.9세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 2014년 현재 전국 평균 연령은 39.8세

[경기도 인구 및 노령인구 비율 추이, 1970~2040]



[2040년 시·도별 중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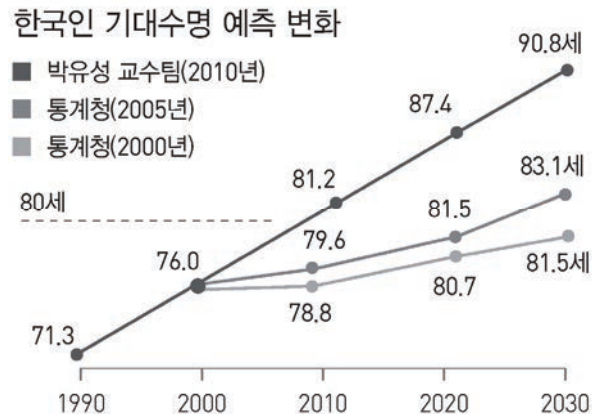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 「장래인구 추계:2010~2060」

[그림 3-2-13] 경기도의 인구구성 변화 및 향후 전망

 (수명 100세 시대)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해 '100세 사회'가 열림

- 현재 기대수명은 82세 수준이지만, 향후 의학과 보건환경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1970년대 태어난 생존인구부터는 사실상 '100세 시대'가 열릴 전망

-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예상보다 빠른 의학 발달’이란 변수까지 고려한 새로운 기대수명은 통계청 예측보다 훨씬 빨리, 더 길게 연장돼 일반인도 상당한 확률로 100세까지 사는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예상
- 1971년생 남성의 경우 현재 생존한 사람의 거의 절반(47.3%)이 94세까지 살 것으로 예견되며 여성의 경우 이보다 높은 48.9%가 96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전망



자료: 조선일보(2011), “71년생 돼지띠 남성들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 (2011.01.03)

[그림 3-2-14] 한국인 기대수명 예측 변화, 1990~2030

- 단순히 수명만 늘는 것이 아닌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건강수명도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
- 현재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약 71세) 차이는 10년 정도이며, 생애동안 10년은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실정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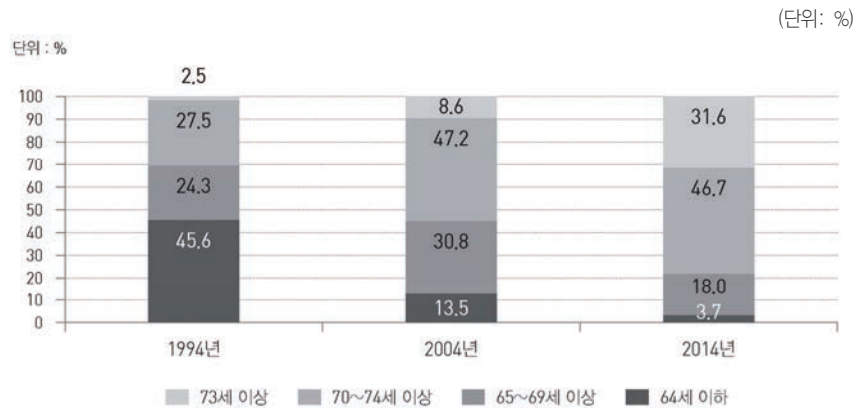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 상승) 현재의 ‘노인’이 미래에는 ‘신중년’으로 변화

- 평균 수명 연장과 더불어 고령 인구가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활동적일 것이며 그만큼 건강 하고 활동적인 ‘신중년’의 이미지가 크게 확산될 전망
- 노인 연령 기준은 통상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현재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향후 60대 후반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상당수 국가들의 연금 받는 연령은 65세 이후임: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노르웨이 등은 67세, 영국, 아일랜드 등은 68세, 체코는 69세
-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과 연령구분이 변함에 따라, 1990년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60대를 ‘노인’이라고 받아들였으나 현재는 대부분(78.3%)이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¹⁷⁾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4」, pp.266-273.

17) 1994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가 받아들이는 평균 노인연령은 71.9세이며 전국 평균값 71.7세에 비해 0.2세 높음
-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17.6%로서 전국 평균 15.3%에 비해 다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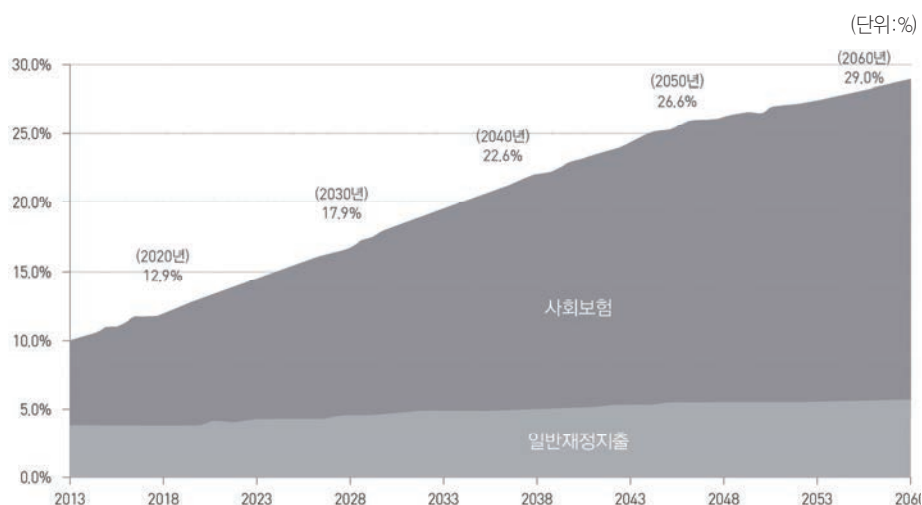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보건복지포럼(2015.5)」, p.10

[그림 3-2-15] 65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

(사회보장 지출증가) 수명연장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증가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고령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 하며 이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도 가중되는 추세
- 한국의 경우, 2014년 예산에 반영된 사회보장 관련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장기재정추계를 해보면 GDP 대비 사회보장 재정지출 비중은 2014년 10.2%에서 2030년 17.9%, 2040년 22.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2040년에는 2009년 기준 OECD 평균인 22.1%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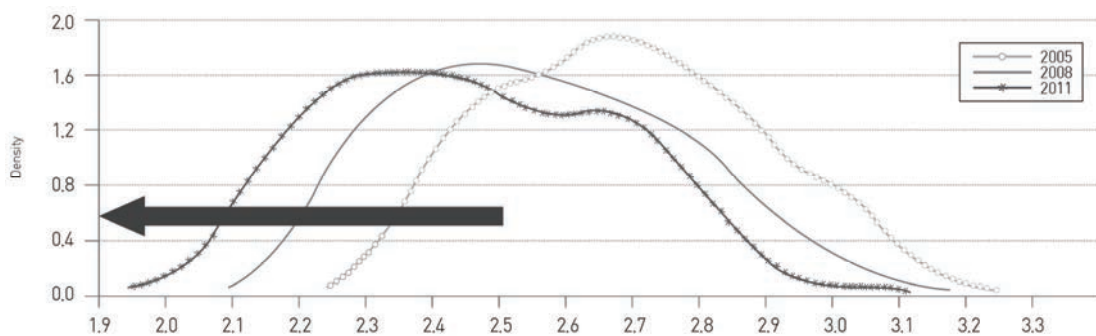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4」, p.20

[그림 3-2-16]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전망

- 사회보장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 지출은 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고령자 의료비 지원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런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보험지출은 2013년 GDP 대비 6.3%에서 2060년에는 23.2%로 증가
 - 사회보장지출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4.6%에서 2060년 80.2%(여기에 기초노령연금 까지 포함하면 89.9%)
- 일반재정지출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이 절반가까이 차지할 것이며, 나머지 부문인 기초생활 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국가보훈급여,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2.2~2.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초노령연금 급여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3%에서 2030년 1.5%, 2060년에는 2.8%
 - 일반재정지출 대비 기초노령연금 규모는 2060년 49%(2013년 8.6%)에 이를 것으로 전망

(가족형태 변화) 생물학적 가족 해체에 대응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도래

-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들고 비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초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1차적 사회집단으로서 혈연가정이 가지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변화



자료: 이현창 외(201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p.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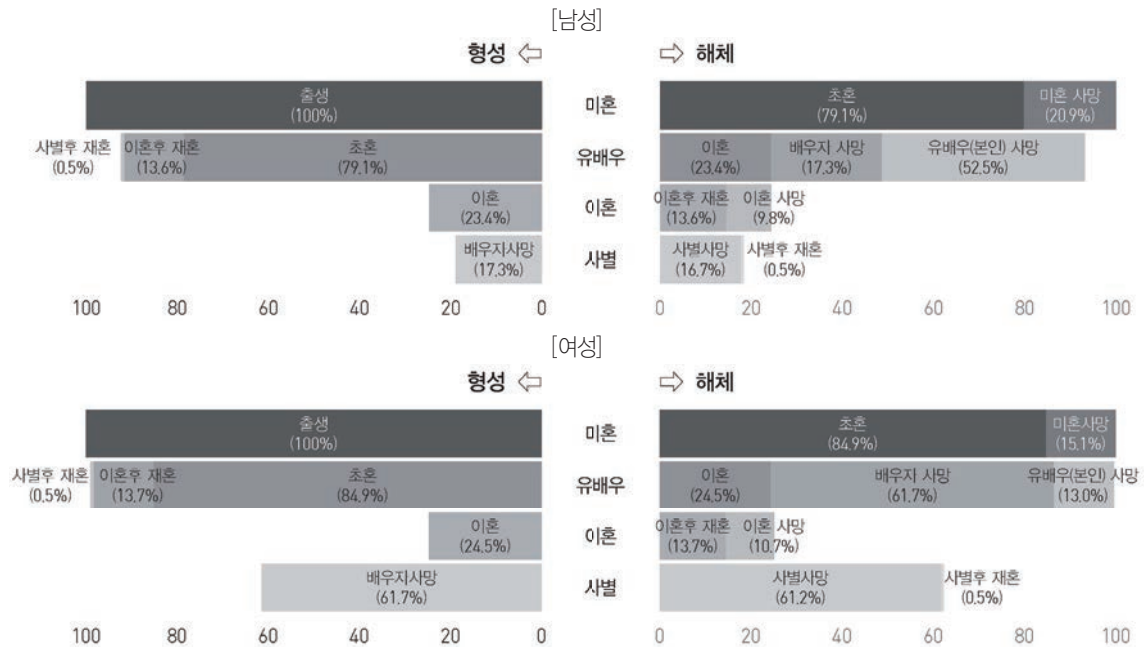
주. * 각 데이터가 특정 구간에 있는 가만을 판별해 상대빈도를 구하는 도수분포를 이용한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와 달리,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 KDF)는 어떤 점 x에 가까운 관측치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주고, 멀리 위치한 관측치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스무딩(smoothing)한 것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소밀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이현창 외, 2012, pp.38-40)

[그림 3-2-17] 시·군·구별 가구당 인구수의 커널밀도함수

- 2010년도 출생인구의 경우, 남성은 약 20%, 여성은 약 15%가 평생 미혼인 상태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이 결혼적령기인 30세가 되는 2040년에는 싱글인구 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¹⁸⁾

18) 이러한 예측은 2010년도 혼인상태별 사망률 및 혼인상태 변동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임.

- 재혼을 포함한 모든 유배우 남성이 겪을 결혼해체 사나리오는 이혼(23.4%), 부인 사망(17.3%), 본인 사망(52.5%)
- 재혼을 포함한 모든 유배우 여성의 경우 이혼(24.5%), 남편 사망(61.7%), 본인 사망(13.0%)



자료: 통계청(2013), 「2000~2010년 혼인상태생명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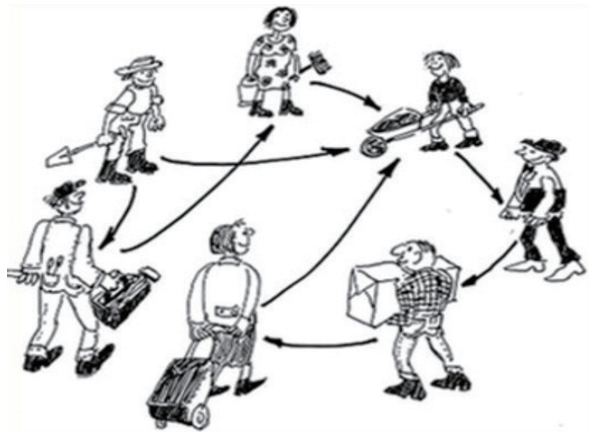
[그림 3-2-18] 2010년 출생자의 예상되는 결혼지위 변화 (단위: %)

- 더불어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에 따른 배우자 사별에 의한 여성 독거노인 규모도 ‘100세 사회’에서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
- 거의 모든 성인 연령대에서 나홀로 사는 인구가 늘게 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구성원끼리 돕고 사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



(공유경제 활성화) 본격적인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대가 도래

- 최근 시장경제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줄 협력적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발달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과 한계비용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유가치로의 인식 전환 및 공유경제 영역이 급속도로 확산 중임
- 향후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생산, 소비, (재)분배가 지속적으로 환류 하는 지역순환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밀착형 공유경제 실현
 - 공동체 안에서 품앗이 교환을 가능케 하는 지역화폐(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LETS)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및 마을공동체 부활
 - 단, 사회적경제 및 공유사회,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정착이 선행되어야함



자료: http://blog.seniorennet.be/waasland_informeert/archief.php?ID=160

[그림 3-2-19] 지역화폐로 연결되는 지역순환체계 모형

(사회적경제의 미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문제

- 향후 경기도 사회적경제는 자체 파복공동체 사업과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의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재 규모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¹⁹⁾
 - 해외의 흐름을 통해 볼 때, 한국의 사회적경제 미래에 대해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며, 사회적경제 증가폭 역시 급증보다는 점증적 형태를 보일 개연성이 높음²⁰⁾
 - 만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2013년 현재 약 1,0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10,000개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기도 전체 고용자의 약 10~15%를 차지할 수 있음
 - 경기도의 정책 결정과 집행 역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다문화사회 전망)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 활성화

-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체류자 증가로 인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고, 이에 따른 경기도의 문화적 다양성도 커짐
 - 경기도 지역 등록외국인수는 2015년 3월 말 현재 35만 5,307명이며 매년 약 2만 명 가량 증가
 -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16~2040년 기간 동안 약 50만 명의 추가유입이 예상되며 최대 85만 명의 외국인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2040년 경기도 인구의 6.4%)
-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실시되면, 외국출신 이민자가 2040년 경기도 인구의 1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19) 다만,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 시행이 10년 이내이고 지속적인 공동체 관련 정책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비중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또한 중앙과 경기도의 정책적 요인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204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율(GDP 대비, GRDP 대비, 고용인구 대비 비율 등)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20) 유럽의 사회적경제 영역은 2009~2010년 기준 GDP의 10%, 고용인구의 6.5%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2~2003년에 비해 0.5%p 증가한 수치임. 사회적경제 종사자 고용 비율로 보면, 스웨덴(11.2%), 벨기에(10.3%), 네덜란드(10.2%), 이탈리아(9.7%), 프랑스(9.0%)로 나타났음.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메카로 불리던 영국은 종사자 비율이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경기도 사회통합과 복지의 2040년 중장기 과제

(미래 성장동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인프라 제고
 - 특히 경기도 북부와 동부의 분만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 고령 산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출산의 질을 높이고 인구재생산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출산정책 마련
- 자녀가치 제고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기업, 지역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육아부담을 분담하는 여성가족정책 마련
 - 일반적으로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 VOC)는 합계출산율(TFR)과 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치를 높여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²¹⁾
 - 현재 35~44세 고학력 여성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고민하는 자녀양육 시간 및 비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줄 정책을 실시해 자녀가치 제고를 도모해야 함
 -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기반 공유경제 특히 지역화폐(LETS)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에 내실을 기해 미래 잠재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
-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고등인력 유치
 -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시행될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기도에 우수 학생과 전문기술자 집단을 유치할 수 있는 다문화기반 구축

(복지시스템)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 2040년까지 진행될 수명 증가는 축복(celebration)일 수도 도전(challenge)일 수도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특히 노인인구 자살률이 높은 현실에서 ‘100세 충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자칫 재앙이 될 수 있음
 - 노인을 ‘사회적 짐’으로 여기는 국민의식과 ‘80세 시대’에 맞춰진 사회제도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
-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노인문제를 풀어낼 가족정책 마련
 - 선진국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의 가장 큰 요인인 낮은 공적 연금 수급률을 메꿔줄 획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정책 마련

21) 자녀가치는 자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며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음. 이 개념은 개인의 출산동기와 출산경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김미숙 외(2014),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가족변화·사회변화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강화와 급증하는 무연고사(無緣故死)에 대한 지역 단위 대응책 마련
 - 또한 독거노인 위주의 복지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부부들이 겪는 ‘노인4중고’(빈곤, 질병, 소외, 무위)를 해결할 방안 마련²²⁾
 - 독거노인과 노인부부를 따지기보다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수준을 고려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
- 2040년까지 진행될 보건 및 복지 관련 사회보장지출 급증에 대비
- 지금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운용 시스템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며, 날로 가중되는 지자체의 복지비용 부담을 줄여줄 재정 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을 확립해 지방정부 세출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함²³⁾
 - 이와 더불어, 공공부분으로는 한계가 있을 상황에서 민간 영역의 가용한 복지자원을 활용할 필요
 - 고용-복지 선순환을 통한 생산적 복지 달성
 - 보건의료비 지출수준을 높이고 있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예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충
- 경기도 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
- 법제도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시스템 마련
 - 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할 골든타임 확보

(사회통합) 경기도 지역공동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 고족화(孤族化)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대감과 소속감 제고
-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시스템 마련
 - 내부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 사회갈등 특히 공공사업 갈등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갈등관리체계 개선
- 이천시 특전사 이전사업, 시화호 간척지 개발사업 등과 같은 성공사례 연구
 -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해결 대신에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
- 경기도 내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정책 비전 마련
- 나와 다른 집단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다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확대
 - 단순한 복지 및 다문화 정책 대상자란 인식을 넘어 경기도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집단으로서의 이주자 이미지 구축
- 경기도 차원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 개방성을 갖춘 열린 경기도

22) 김희연 외(2013), 「한국 노인의 四重苦, 원인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3) 허원제(2013),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한국경제연구원(KERI).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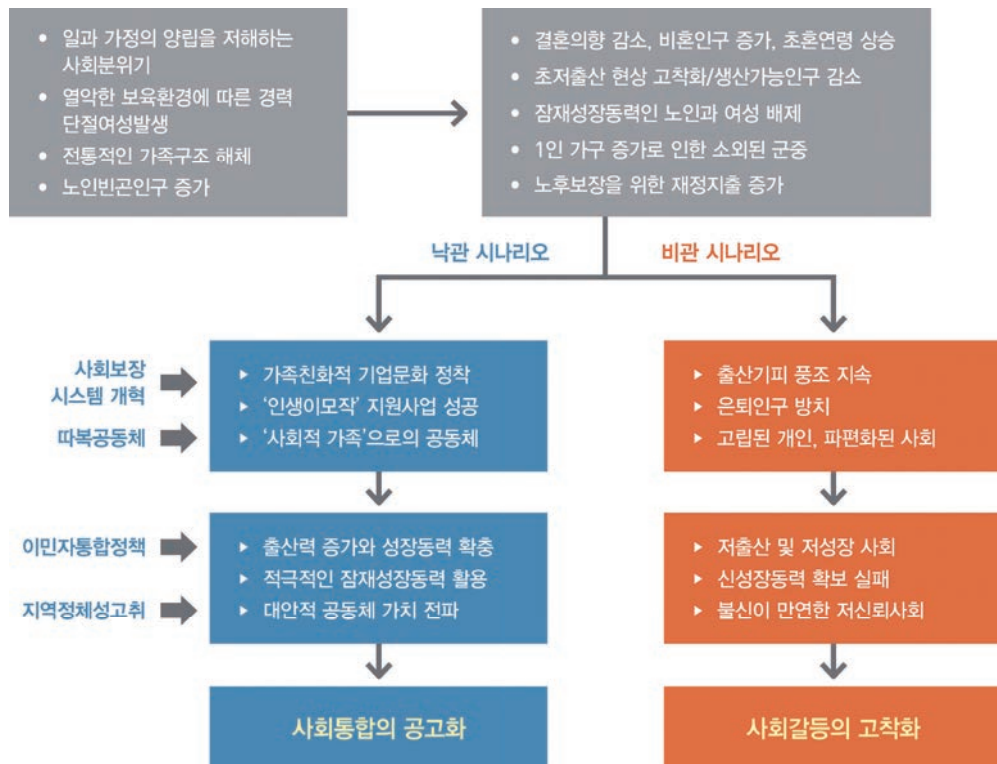
사회통합과 복지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변화 시나리오 분석]

○ 현 추세 (base line)

- 현재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추세를 바탕으로 각각에 대한 중위가정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경기도 인구는 2032년쯤 정점(1,347만 명)에 도달한 뒤 감소(2040년 1,325만 명 수준)
- 경기도의 15~64세 인구 비중은 2015년 74%에서 2025년 69%, 2031년 64%로 하락하고 2040년에는 60%선이 붕괴(59%)될 것으로 예상
-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0%에서 2023년 15%, 2029년 20%를 돌파하고 2040년에는 29%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경기도 내 거주외국인은 매년 2만 명가량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구이동에 대한 중위가정을 적용할 경우 2016~2040년 기간에 해외로부터의 인구유입 규모는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



[그림 3-2-20]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미래 시나리오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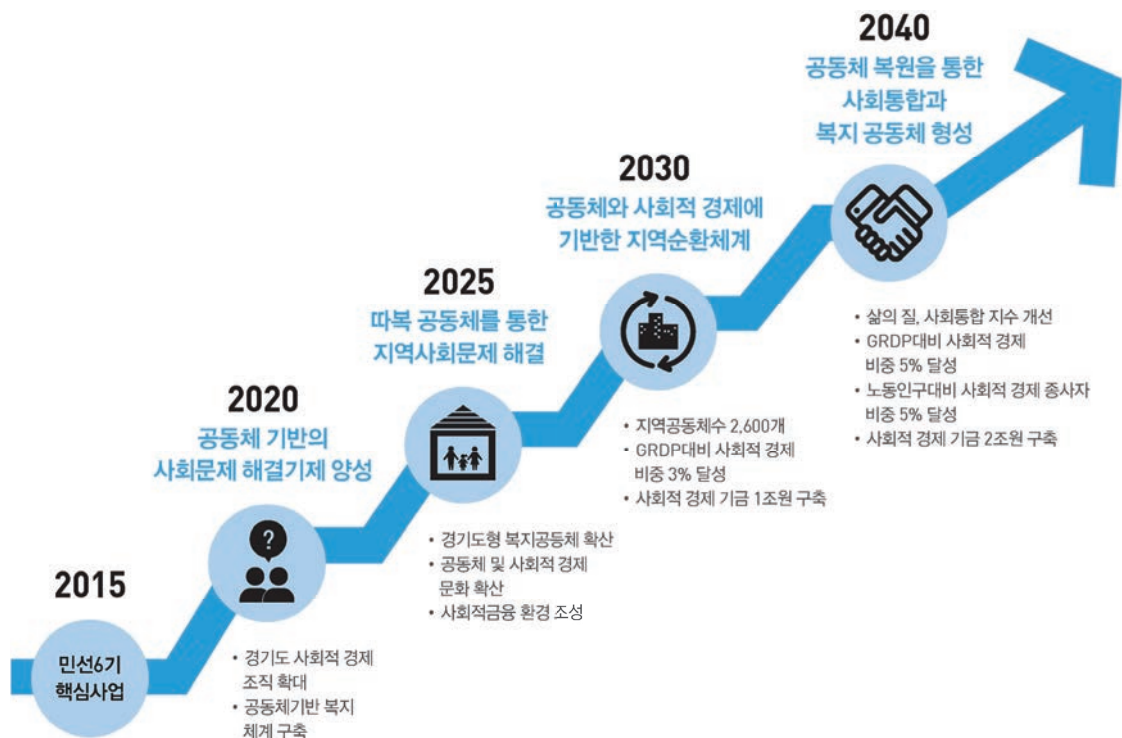
- 인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서 새로운 인구보너스 시대인 ‘제2차 인구배당’(second population dividend)²⁴⁾으로 전환
 - 주요 동인(driving force): 100세 시대 은퇴 후 인생이모작을 위한 고령자 취업프로그램,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 공공 및 공동체 차원의 아이돌봄체계 마련을 통한 여성인적자본 활용,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
- 가족·공동체: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희박해지는 추세에서 주민들을 지역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이어주는 대안적 가족으로 전환
 - 주요 동인: 지역순환경제 구축, 사회적경제, ‘따복공동체’ 사업 확대발전
- 복지: 보건·복지 부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하향식(top-down) 방식의 ‘관 주도’ 복지체계에서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해 활용하는 ‘공동체중심’ 복지체계로 전환
 - 주요 동인: 민간의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해 활용, 공동체에 함께 사는 비슷한 처지의 주민들(가령 독거노인, 미혼모, 탈북자, 결혼이주자 등)을 연결시켜 서로 의지토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 이민: 경기도 외국인 거주민에 대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복지수급자라는 수동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사람들로 보는 인식으로의 전환
 - 주요 동인: 온정주의와 시혜적 편견에 기반을 둔 다문화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비전 설정, 내국인과 이주자가 상호 이해해가고 포용하는 다문화사회 구축
- 사회통합: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위기사회’에서 계층·지역·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한 통합(unity in diversity)이 이루어지는 ‘개방사회’로 전환
 - 주요 동인: 상시적 갈등조절기구와 사회적 협의체 운용,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통한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따복공동체 사업과 플러스복지 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문제해결 기제가 사회적으로 안착할 수 있음
 - 사업추진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2015년 약 2,000여 개에 달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가 확대되고, 기타 사회혁신 주체가 양산됨에 따라 공동체 기반의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가 정착할 것으로 예상됨

24) ‘인구오너스’는 인구구성 변화가 총부양비율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 (2025 변화상) 민선6기 따복공동체, 플러스복지, 사회적일자리 확충 등의 정책은 다양한 부문의 융복합에 기반한 사업들로, 2025년에는 실질적인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사회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효과들로는, 지역고용 및 생산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능동적 복지 환경 조성,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공동체 기반의 복지환경 조성 등을 언급할 수 있음
- (2030 변화상)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합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축적해온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
 - 실질적인 지역순환체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지역공동체 수 2600개, GRDP 대비 사회적경제 비중 3%, 노동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종사자 비중 3%, 사회적경제 기금 1조 원 구축 등의 정량적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음
 - 지역순환체계는 사회적경제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능동적이고 반응적인 지역사회와 복지공동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제시
- (2040 비전) 다양한 공동체가 포용되는 순환적 사회체계 안에서 2040년에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로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구축



[그림 3-2-21]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경기도의 사회통합과 복지를 위한 2040 비전·목표·전략

비전

-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로 설정
 -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포용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가치 지향
 - 공동체에 기반한 능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로서 복지공동체 가치 지향

3대 목표

- 미래 성장과 안정을 담보하는 인구정책
- 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유대 강화
- 다양한 집단이 상생하는 사회대통합

3대 전략

-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출산환경의 제고 등 6개 아젠다 추진
-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등 6개 아젠다 추진
- 보건의료 체계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및 광역거점 도립병원체제 구축이란 2개 아젠다 추진



[그림 3-3-22]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비전·목표·전략

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사회통합과 복지 비전에서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구성원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개방사회를 지양하는 의미에서 공동체, 사회적경제, 갈등관리 및 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빈곤율(%)	(2013) 19.2	17	16.5	16	15
	외국인수만 명)	(2014) 35	40	57	70	90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사회적 경제기금(조)	(2015) -	-	0.5	1	2
	지역공동체수(개)	(2013) 863	1,200	1,800	2,600	3,000
	갈등발생 지속기간(일)	(2015) 500	450	350	280	180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015) 0	31개 시·군 전체 설치			
	지역사회 돌봄 자원봉사(천 명)	(2014) 180	241	316	392	639
보건의료 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 병상비율(%)	(2014) 10	12	18	22	30

제4절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2-1]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2-1-1]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환경 제고

☞ 핵심내용

- 2040년 경기도의 0-14세 인구는 현재 191만 명보다도 낮은 168.1만 명으로 전망
- 가정·직장 병행을 위한 기반 구축
- 가족환경 전반을 고려하는 여성가족정책 수립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출산환경의 지역 격차 해소

👤 목표와 지표

- 2040년까지 경기도 내 신생아 수를 현 11여만 명 수준에서 2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제고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현재 32개소인 경기도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역별 인구규모를 감안해 100개소 이상으로 확충
- 공공보육 혹은 지역공동체보육을 통한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 경기도 어린이집은 2014년 12월 기준 총 13,259개(국공립: 575개, 직장: 151개, 민간: 4,076개, 가정: 8,186개)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불과 4.3%에 그침
 - 공공보육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할 대안으로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가지는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아이돌봄센터 사업 전개
-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및 분만기능 공공병원 설립

👤 추진전략

- 민선6기 플러스복지 사업 기반의 사업영역 강화 및 확산
 - 여성 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 공동육아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복지공동체 사업 확대
 - 플러스복지 추진을 바탕으로 복지부문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가정·직장 병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육아휴직, 아빠할당제, 유연근로제, 직무공유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 내 기업 통계 및 양육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경기도 내 기업과 정부 간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 가족환경 전반을 고려하는 여성가족정책 수립

- 단순히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이 아닌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
 - 문화, 여가,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수준의 아이돌봄 여건을 개선하려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 전개
- 출산을 제고에 성공한 해외의 가족정책 참고
 - 스웨덴의 경우, 자녀 1명당 16개월의 기간을 부(父), 모(母)가 반씩 나눠 쓰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도입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1999년 1.50명에서 2013년 1.89명으로 증가
 - 프랑스의 경우, 가족정책의 기초를 단순한 출산 장려에서 전반적인 가족생활 쪽으로 바꾸었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재원을 분담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1994년 1.65명에서 2011년 2.00명으로 증가
 - 독일의 경우, 임금을 대체할 수준의 실질적인 부모수당(자녀출생 후 매달 최대 1,800 유로까지) 지급과 남성의 자녀양육 휴직 독려 정책시행을 통한 출산을 상승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결손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 해소
-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전개

○ 출산환경의 지역 격차 해소

- 경기도 북부와 동부 분만취약 지역에 출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지원
-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 등에서 나타나는 시·군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가령 지역별 최대 450만 원까지 차이는 출산장려금 조정

[2-1-2] ‘100세 시대’에 따른 고령친화 환경 조성

핵심내용

- 2040 경기도의 65세 이상 주민수는 378만 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28.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공공보건 정책 마련
- 노인 인적자본 활용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개선
- 세분화된 지역 DB구축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와 생활인프라 조성

목표와 지표

- 현재 70세 초반 수준인 건강수명을 2040년까지 80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향상
- 노후소득보장제도(특히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여 2040년까지 노인빈곤율을 현재의 절반이하로 낮춤
-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서 2013년 인구 10만 명당 72.7명 수준(OECD 평균 35명)인 경기도 내 노인자살률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감소
- 기대수명 100세에 맞춘 은퇴 후 ‘제2의 커리어(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확대
- 노인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추진전략

- 플러스복지 등 고령사회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공동체 복지 기반 확대
 - 독거노인 공동생활 기반인 카네이션하우스 등 경기도형 복지공동체 기반 확대
 - 노인, 장애인, 자활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기도 복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
 - 복지 부문 공동체 사업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재정투입 전략을 넘어 사회투자형 복지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마련
-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공공보건 정책 마련
 - 노인인구 연평균 증가율(4.8%)에 비해 노인성 질환자 증가율(14.4%)이 높은 상황이며, 이는 보건의료 부문 지출 부담을 가중시킴
 - 2008~2012년 5년간의 노인의료비 분석 결과,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21.7%로 가장 높음

- 2008~2013년 기간에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질환은 파킨슨병(37.3%), 알츠하이머병(32.7%), 편마비(27.1%) 등과 같은 치매성 질환
-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를 달성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

○ 노인 인적자본 활용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개선

- 70세 이하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탄력퇴직제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여 은퇴 이후 소득 절벽 기간을 줄이는 노력
- G-MOOC 사업 등을 통해 은퇴 이후 제2의 커리어 설계와 관련한 평생교육 커리큘럼 개발
-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 생계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도 노력



자료: 미국 PBS(www.pbs.org)



자료: 고용노동부(2009)

[그림 3-2-23] 노인 경제활동 장려 캠페인

○ 지역 DB구축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 노인이 흔히 직면하는 네 가지 고통(질병, 빈곤, 고독, 무위)과 관련한 경기도 차원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고령화 정책 수립
- 고령층 가운데 특히 취약한 85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질병 및 정신 건강 관련 개인 수준의 미시자료 DB구축
- 독거노인 돌봄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빈곤상태의 부부노인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

○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와 생활인프라 조성

-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노년상(老年像)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홍보 및 교육 캠페인 시행
- 경기도 차원에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내 무장애 도시(barrier-free city) 환경 구축

[2-1-3] 같음과 차이를 인정하는 양성평등 실현

핵심내용

- 여성의 경력이행지원 체계 구축 및 고용환경 혁신
- 여성안전에 대한 범위 확장 및 지역사회 안전망 내실화, 특수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 배려 등을 통한 안전과 인권 보장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민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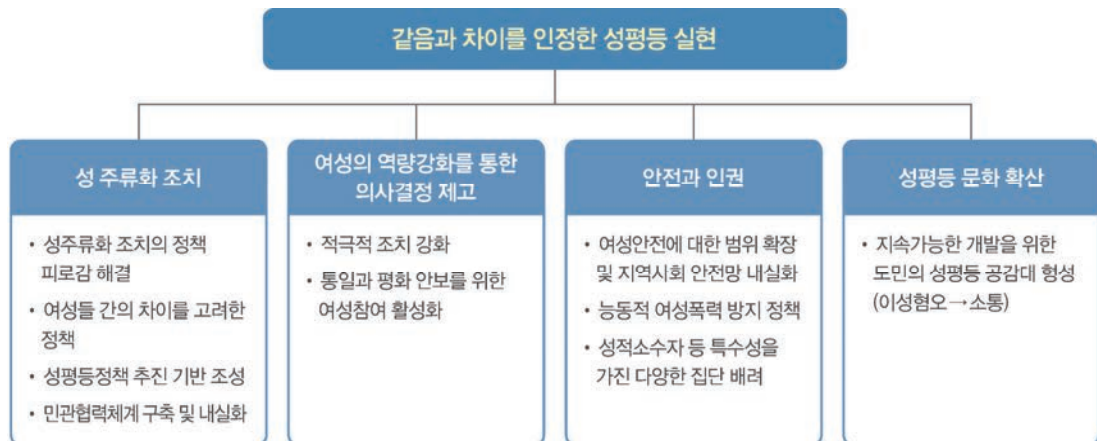
목표와 지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의 질적 내실화 및 정책 피로감 해결을 통한 성평등 강화
- 사회전반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40% 관리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여성 관리자 목표제 실행 등 적극적 조치, 정치적 대표성 강화로 의사결정력 제고
- 여성안전에 대한 범위확장을 통한 능동적 대응 및 성적 소수자 배려 정책으로 경기도민의 인권과 안전 제고
- 이성혐오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 및 성평등에 대한 감성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중장기계획에 따른 성평등문화 확산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성별 고용률 격차 해소 (2013년 말 29.1%p)
- 임금 격차 해소 (2013년 말 남성임금의 58.8% 수준)
- 돌봄 서비스 및 여성친화 일자리에 대한 가치 제고
- 성차별적인 직장 조직문화 해소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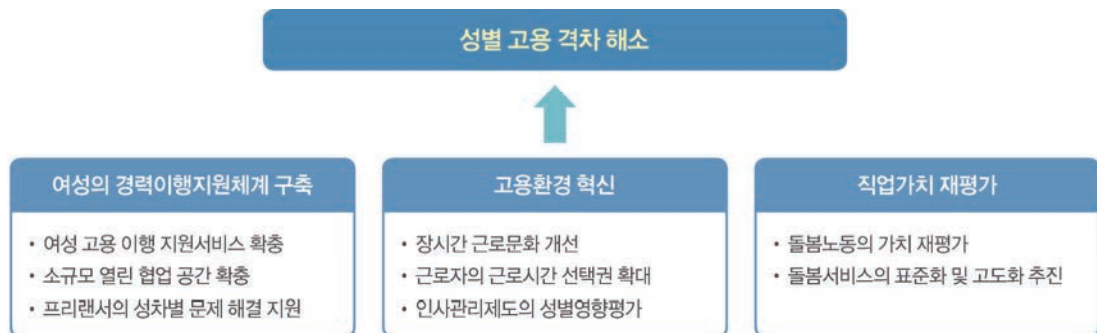
- 성평등 정책추진기반 조성과 성주류화 조치에 따른 정책 피로감 해결
 - 도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고 다른 부서의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 성주류화를 담당하는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조직기반의 내실화가 중요
 - 경기도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정원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 주무부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함
 - 지역여성 정치후보자 양성교육 및 당직자, 당원 성인지교육 실시

-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여성이 정책의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조치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확대해야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질적 수준 제고와 성인지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성주류화 조치의 정책 피로감 해결



[그림 3-2-24] 같은과 차이를 인정한 성평등 실현

-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개발할 필요
- 도민들이 성평등 정책이 왜 필요하고, 성평등 정책이 실시될 경우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은 물론 가족 등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



[그림 3-2-25] 성별 고용 격차 해소

○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내실화

- 1인가구의 증가,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생애주기별 여성들 간의 경험차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추진

○ 성적소수자 등 특수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 배려 프로그램

-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특수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에 대한 배려 정책으로 경기도민의 인권을 제고할 필요

○ 여성고용 이행(이직 및 전직) 지원시스템 확충

- 근로문화 개선 및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는 인사관리제도의 개선을 촉진하고 다양성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일터 확대 지원

○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 및 표준화, 고도화 프로그램 추진

- 미래의 직업 가치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로 여성이 제공해왔던 사회서비스부문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함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돌봄 영역의 노동 가치가 여전히 평가 절하된 측면이 있지만 향후 감정 노동을 수반하는 면대면 돌봄 서비스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돌봄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고도화를 통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적정 가치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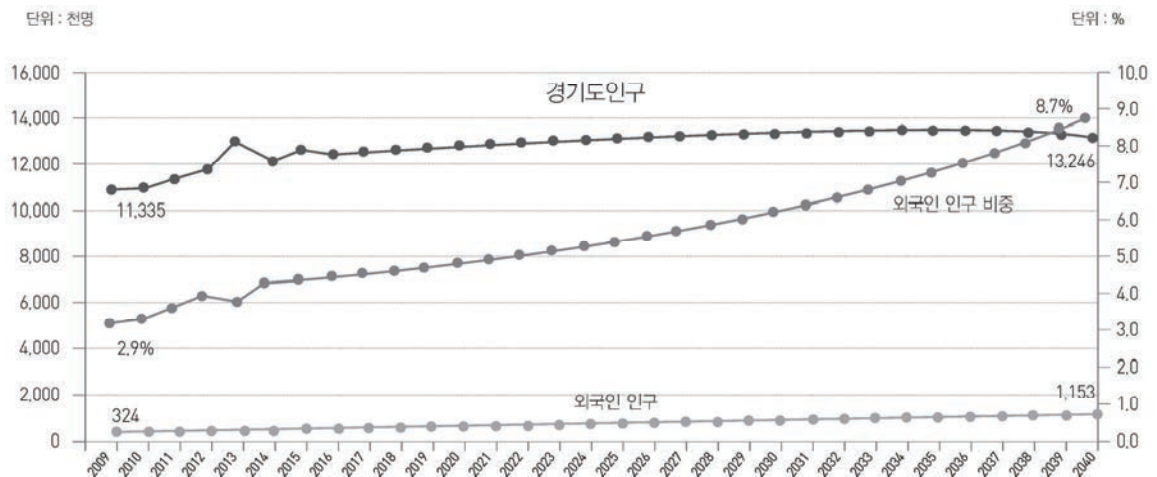
[2-1-4] 경기도 거주외국인 100만 명 시대 대비

핵심내용

- 2040년 경기도는 거주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비한 중장기적 다문화사회 비전과 전략을 세울 필요
- 이주민교육혁신 모델 정립을 통한 ‘이주민-지역주민-지역’의 상생 프로젝트 추진
- 거주외국인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
-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체류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국어 사용 학교 설립

목표와 지표

- 2040년까지 거주외국인 100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반 구축
-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현재 10% 미만에 그치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을 2040년에는 현재 북미, 일본처럼 20~40% 수준까지 제고
- 전문직 고급인력을 장기 혹은 영구 정착시킬 수 있게 경기도 내 국제학교(외국인학교, 글로벌 스쿨 등)를 현재 10여 개소 수준에서 2040년까지 100개소 이상 설치
- 다문화가정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다중언어 기반 학교를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 집중지역에 설치
- 지역 내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협력적 정책 설계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정책 추진
 -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문화 호민관(가칭)’ 제도를 통해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협력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이주민의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인권 보호관(가칭) 설치 운영



[그림 3-2-26] 경기도 외국인 인구 비중 추세와 전망(2009~2040)

추진전략

- 경기도형 이주민교육혁신 모델 정립을 통한 이주민-지역민-지역이 함께 하는 상생프로젝트 추진
 - 이주민의 실생활 정착 촉진, 지역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공동체의 동등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역연계형 이주민교육을 통해 이주민, 지역주민, 지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 발굴과 실천전략 모색
 - 외국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요리문화 배우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참여주체는 연령층이 낮은 아이들부터 연령층이 높은 계층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거주외국인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시혜주의와 온정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 관 주도 다문화 행정을 지양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 연대를 통한 역할 분담 체계 강화(안산시 사례 참고)
 - 외국인을 위한 주민센터, 다문화특구 조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의 이주민지원분과 설치
 -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관이주협의체 구성
 -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법·제도 시스템 마련
 - 사회통합수준은 높이고 문화적 갈등과 충돌 가능성은 낮추기 위한 노력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약 10%가 언어발달장애를 가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언어발달치료사 육성 및 확충(텐마크가 2004년부터 실행하는 언어촉매 교육 참고)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식개선사업 확대



[그림 3-2-27]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해외 전문인력 유치

- 2011년도 수도권 거주 외국인 인력(39.7만 명) 중 전문인력은 8.3%(3.3만 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방문하는 인력을 제외하면 6.0%(2.3만 명) 수준
- 경기도 내 전문직, 연구직, 관리직 이주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이며 첨단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전문기술 및 고숙련 인력 규모를 현재보다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 우수한 유학생 유치

- 해외 인적자원을 유치해 국내에서 개발시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급 인력 확보
- 경기도에는 최첨단기술 관련 고급 일자리가 많은 만큼, 뛰어난 외국유학생을 산·학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마련
- 또한 경기도 소재 대학에 유학 온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및 장기 체류를 장려하는 취업 알선 제도와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 체류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국어 사용 학교 설립

- 외국인 전문인력 집중지역에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확대
 - 해외 고급인력이 한국근무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자녀교육 환경
 - 가령 2005년 경기도 외국인학교 현황 및 교육요구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자녀를 둔 전문인력 64%가 교육여건에 불만족하다고 응답
 - 정주여건을 중시하는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
- 결혼이주자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 해마다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고 이들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기반 수립
 -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지원을 통해 두 가지 이상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우수 인재 양성

[2-1-5] 상생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핵심내용

- 갈등진단 체계 구축 및 정부 신뢰 제고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도입 및 숙련을 통한 역량 강화
- 지역공동체를 통한 완충지대 형성 및 사전적 갈등교육 시행

목표와 지표

- 갈등발생 건수를 경기도 2040년의 목표로 제시하기 보다는 갈등의 성격과 과정을 중심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갈등발생 현황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세부적 예측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갈등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
 - 사회갈등은 사회문제에 내재된 병리현상을 공론화시켜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게 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존재
 - 복잡·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 갈등 자체의 감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갈등이 순기능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갈등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사회갈등 자체를 금기시하기 보다는 발생한 사회갈등이 공동체 파괴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 중요도별 갈등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500일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전체 도 가운데 5번째로 긴 지속기간을 나타내고 있음
 - 2040년까지는 갈등 지속기간을 180일(6개월) 이하로 감소시키고, 전체 갈등 해결 방식에 있어서 행정이나 사법적 개입의 형태가 아닌 갈등 당사자 상호간의 해결기제인 조정이나 중재 방식의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증대시키려는 정책지향 필요

추진전략

- 사회갈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갈등진단 체계 구축
 - 갈등관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사회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체계 필요
 - 사회갈등의 파악에 일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갈등평가(Conflict Assessment)의 정례화가 중요
 - 사회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갈등요인을 미리 데이터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역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 사전적 예방시스템의 경우, 중앙정부 혹은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존재

- 지역단위 공동체, 인접 지역간 행정협의체, 민간 전문가 집단 및 이익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사전 필터링 체계 구축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 구축·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운영 노력이 필요

○ 사회갈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신뢰 제고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제고하고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도구적·대응적 접근을 탈피하고 적극적 관리하려는 노력 필요
- 특정 정책 혹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갈등관리가 아니라 주민의 요구와 사회현상의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갈등관리 접근 필요
-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전략 필요
 - 중앙 혹은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지휘·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강한 연계(strong tie)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점점 확보 및 갈등관계 파악을 위한 약한 연계(weak tie) 전략 검토
 - 사회갈등 문제의 네트워크 형태를 파악하고, 중계자와의 협력 및 관리 행태의 지속적인 담보를 통한 신뢰 제고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도입 및 숙련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 강화

-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은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개발한 의견 수렴 기법으로, 갈등 상황에 대한 숙의과정(deliberation)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여론 및 의견의 파악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짐
- 대표적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으로는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등을 언급할 수 있음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도입 및 숙련과정은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사회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통하여, 행정·사법에 의한 1차적 중재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정·중재 형태의 갈등 해결 비중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갈등 완충지대 형성 및 사전적 갈등교육 시행

- 사회갈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갈등해결을 위한 사전적 조치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사전적 교육체계 구축
- 경기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갈등의 완충지대 조성 및 갈등의 사전적 예방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1-6] 지역통합을 위한 경기도 정체성 확립

핵심내용

- 경기도의 강점과 잠재력을 부각하여 지역 위상을 제고하는 전략
-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경기도의 미래상 수립
- 경기도 내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시스템 개선
- 경기도 내 산재한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광역 차원에서 공유

목표와 지표

- 경기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 개선 사업
- 미래세대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정체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정체성과 정주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험형 문화행사의 정례화: 경기도 향토문화 등의 인문학 강화 개설 사업
- 경기도 내 산재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화재 관리실태의 개선
 - 현재 경기도 문화재 지정·등록 비율은 전국 대비 7.6%에 불과
 - 이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10%까지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 인구비율에 걸맞은 수준인 25%까지 달성
- 경기도 지역통합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
 - 경기 북부지역에 ‘경기도박물관’ 분관 설치
 - 가칭 ‘경기도역사박물관’ 및 ‘경기문화유산활용센터’ 등을 신설하여 지역 내 문화유산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
- 경기도의 강점과 잠재력을 부각하여 지역 위상을 제고
 - 경기도는 꾸준히 인구 순유입과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의미
 - 또한 대한민국의 축소판(한국의 1/4)이란 경기도의 이미지는 다양한 집단이 한데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됨
 - 아울러 폐쇄적이며 배타적일 수 있는 지역색이 희박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집단을 포용하는 ‘열린 경기도’를 의미
 -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과 개방성은 미래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추진전략

-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경기도의 미래상 정립과 이미지 형성 프로그램
 - 2040년 경기도는 통일시대 대한민국의 지리적, 기능적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음
 - 서울과 평양의 중간 지점으로 남북 교류 및 화합의 중심이 되고 미래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될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모색

[표 3-2-8]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미래 경기도의 모습

구 분	미래를 위한 준비 - 대한민국의 중심(참석자의 말)
접근성 향상	"미래 경기도는 세종시와 서울과 맞붙듯이 양쪽에 끼게 됩니다. 그때 되면 정부의 국회뿐 아니라 모든 곳을 쉽게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중심	"통일이 되면 평양과 서울 사이의 길목을 경기도가 차지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과거의 수도와 수도를 이어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

자료: 경기연구원(2015), 「경기도 미래비전 및 주요 아젠다에 대한 집단심층토의(FGI) 보고서」, 내부자료

-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시스템 개선
 - 정신문화 부문과 관련해 경기도 출신으로 의병활동, 독립운동, 사상활동 등을 행한 인물 발굴
 - 향토사 연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상설기구인 가칭 ‘경기도역사편찬위원회’ 설치
 - 시·군 지정문화재는 경기도 지정으로, 도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격상
 -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12개 지역박물관 중 경기도는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박물관 유치
- 역사·문화 콘텐츠의 광역 공유 프로그램 추진
 - 경기도 산하 시·군 단위별로 이뤄지는 문화사업(가령 과천시 ‘추사 김정희’, 수원시 ‘정조대왕과 화성’, 동두천 ‘K-Pop의 고향’)을 광역차원에서 경기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전개
 - 경기 북부와 남부를 이어줄 하나의 정체성을 발굴: 가령 ‘안보’(북부)와 ‘보훈’(남부)이 함께하는 경기도 같은 이미지를 개발
 - 수원의 보훈타운(수원보훈요양원, 보훈교육원, 수원보훈지청, 보훈재활체육센터)과 북부의 군부대를 연계하는 사업 구상
- ‘경기학’을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 정립
 - 경기도의 정신문화,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을 통해 경기도의 정주의식 및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경기도 순례 및 체험 교육 운영
 - ‘도민유산 발굴단(가칭)’ 운영을 통해 경기도 내 산재한 유·무형 유산을 발굴하고, 경기도민이 직접 제작하는 ‘경기도 유산지도(가칭)’를 제작 배포하여 자긍심 고취

[2-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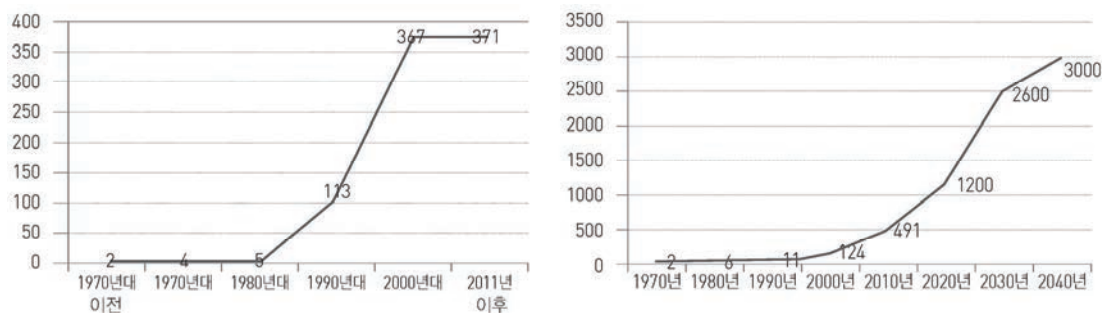
[2-2-1]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핵심내용

- 경제·사회적 위기로인한 완충지대로서 지역공동체의 역할 필요
-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지역공동체 협력 체계 구축
- 주민 수요 및 지역역량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맵핑 추진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강화 및 마을기금 조성

목표와 지표

- 전국의 지역공동체 수는 약 5,885개이며,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863개로 전체의 14.7%를 차지. 연도별 공동체 형성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 그 수가 적다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까지 그 증가속도가 더하고 있음
 - 공동체 정의에 따라 그 절대적 개수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향후 3,000개 내외의 공동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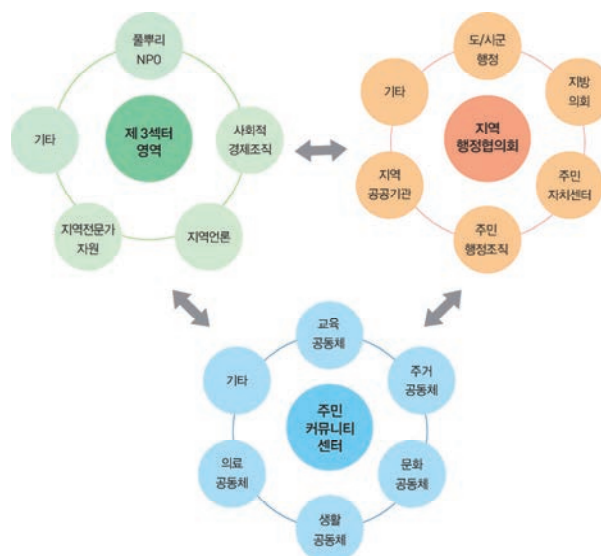
[그림 3-2-28] 경기도 공동체의 설립연도별 현황 및 예상 누적 공동체

추진전략

- 경기도 파복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통한 경기도형 공동체 모형 확립
 -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파복공동체가 추진됨에 따라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경기도형 공동체 확산의 문화 정립
 - 다양한 부문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파복공동체 사업의 추진
 - 시·군 중심의 풀뿌리 공동체 철학이 도정 전반에 흡수될 수 있는 사회통합의 가치 실현
 - 공동체의 다양성 및 일부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융복합 추진

○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 지역공동체는 하나의 테마가 아닌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조성 가능
-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체 간의 유기적 연대와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구심점 필요
-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 주도 혹은 일부 민간자원 주도의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에서 진일보한 형태로, 주민 주도의 자원 연계 기관 지향
 -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성격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행정협의체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주도



[그림 3-2-29] 커뮤니티센터 중심의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모형

○ 지속적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 체계 구축

- 커뮤니티 맵핑(마을지도 만들기)이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한 방식으로 지역단위 정보와 지역의 수요를 연결하여 문제의 진단과 역량의 연결을 도모하는 방식 의미
- 주민 커뮤니티 센터 및 행정단위,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속적 커뮤니티 맵핑과 업데이트 추진

○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및 마을기금 조성

-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혹은 지역공동체 사업은 관주도의 물적 환경개선 성격이 많았으며, 주민의 자발성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하여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마을 단위의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
- 지역 단위 교육사업 및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금의 형성 필요
 - 향후 사회적경제 기금과의 연계 및 지역화폐 수익, 마을공동 사업의 수입 등이 안정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로서 마을기금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2-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체제 구축

핵심내용

- 전 세계적으로 대안적 경제시스템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 증가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다양성 강화
- 사회적경제 금융환경의 조성
- 사회적경제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

목표와 지표

-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은 약 400여 개소, 마을기업 170여 개소, 협동조합 약 1,000개소, 자활기업 160개소 등으로 파악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제 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정책 총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촌복지여성과)
전국 중간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농어촌공사
지역 중간지원	광역지원조직 / 기초지원조직			광역자활센터 기초자활센터	
조직현황	인증 : 1,299개소 (2015. 4) 예비 : 1,537개소 (2014. 12)	1,162개소 (2013. 12)	4,823개소 (2014. 5)	1,340개소 (2013. 8)	720개소 (2012. 5)
2014년 경기도현황 (전국대비 비율)	인증 : 189개소 (14.5%) 예비 : 237개소 (15.4%)	168개소 (14.4%)	914개소 (18.9%)	160개소 (11.9%)	31개소 (4.3%)

[그림 3-2-30]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형태 및 현황

-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는 제도적 차원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부문의 정의는 제도적 차원보다 개념과 속성, 운영원리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40년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제도별로 형성된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공통의 운영원리 위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영향을 중심으로 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지표로는 지역경제비중, 지역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언급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목표를 설정하자면 일차적으로는 정량적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설계하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와 미션 창출 부문을 추가해야 할 것임
 - 정량적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경제규모, 고용인원, 기반환경 등을 언급할 수 있음
 - 경기도 총생산의 5% 달성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인원, 전체 노동인구 대비 5% 달성
 - 사회적경제 기금 2조 원 구축
 - 이외에도 사회적금융 환경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경기도 근로여건 개선, 유통구조 혁신 등의 관련 지표들도 사회적경제 부문의 성과로 연계할 수 있음

추진전략

- 민선6기 따복공동체 정책을 통한 공동체 부문과의 융·복합 강화
 - 지역 및 부문별 공동체와의 융·복합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부문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목적을 강화하는 역량 강화 추진
 - 공동체와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 시장의 확대
 -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화폐 등 사회적경제 실험의 지속적 혁신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다양성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 소셜벤처 자본, 기존 금융자본, 경영 및 혁신 부문 전문가 자원의 프로보노 활동 등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성장과 네트워크 강화
 - 개별적 이해관계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규모가 확장되도록 촉진
 -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가 출현하는 배경으로서 지역공동체 역량의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으로로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 부각
 - 지역공동체는 그 자체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삶터 복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출발점 역할을 수행
- 사회적경제 금융환경의 조성
 - 일차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과 혁신 벤처 활동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경기도 차원에서는 시·군 기금과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기금을 연결하는 중간체계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할 필요 증대
 - 사회적경제 기금의 조성 및 활용방안, 관리 주체 및 발전방향에 대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필요
 - 사회적경제의 목적에 공감하면서 유연한 정책지원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경직된 기존의 금융체계가 아닌 사회적목적에 적합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큐베이팅 및 성장단계 사회적기업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 조성
- 기존의 경제논리에서 진일보한 사회적경제 맞춤형 금융환경 및 지원체계 도출 필요
-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수준(도입기, 도약기, 성장기, 발전기 등)에 맞는 기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 체제보다 접근성이 강화된 사회적경제 금융환경 조성

○ 사회적경제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수요에 기반하여 새로운 실험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인큐베이팅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유치단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안정적 인큐베이팅 환경 조성 및 실험 기반 조성
 - 집적 효과, 공유경제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사이의 효율성 제고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강화, 내부 거래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 차원에서의 부가적 정책효과 산출
- 사회적경제 혁신 클러스터는 사회적경제 조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단위 기업들과의 연계가 가능한 네트워크의 장으로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 강화

- 취약계층 고용 일변도의 사회적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 양성
- 다양한 IT 기업 및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
 - 기술기반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정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다양한 영역과의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육성
- 1인 창조기업에서 중소·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생태계 구축
 - 1인 창조기업 혹은 중소기업 수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네트워크와 협력화 사업 기반 제공
 - 영세한 수준의 사회적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경제 조직도 발굴 및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및 교육, 사회 인프라 환경 등에서도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2-3]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핵심내용

-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 내부거래활성화, 지역화폐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 육성
-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목표와 지표

-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의 파급효과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의미
 - 지역순환경제를 하나의 지표체계로 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2015년 현재 수준에서는 한국사회, 경기도 내부의 공유경제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개념 정의 및 분석기준 미흡
 - 일차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수준을 파악하면, 2013년 경기도의 GRDP 성장률은 4.6%로 충북(7.4), 충남(6.5), 제주(5.1) 등에 이어지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값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연도별로 지역의 차이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으며 지표 자체로 지역내의 순환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따라서 지역순환경제 체제는 지역내총생산, 소비규모 등 지역단위 경제 규모 외에도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기업 현황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추진전략

- 파복공동체 기반의 지역순환경제·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 공유경제 차원에서 지역자산이 공유될 수 있는 지역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
 - 지역 내부 자원에 대해 상호인지가 가능한 지역자산 현황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차원의 커뮤니티 맵핑과 연계
 - 정보기술 기반을 활용한 상호거래 시스템 구축
 - 개인적이고 일시적 공유에서 장기적·선택적 공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공유경제 사례를 육성·발굴
 -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기업 등이 공존하는 내부거래 활성화

- 지역순환경제를 구성하는 소비자 이외에 상호거래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생산기반, 유통기반, 소비기반 등에서 다양성을 구축: 지역경제의 다양성은 지역순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
-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안으로 진입하는 경제 주체에 대한 세금, 인프라 구축, 상호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 지역 내 공동체 목표 구현을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생태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역화폐의 활용 가능성 촉진
 -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역단위의 공동체 목적 달성 및 소규모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보증체계는 태환보조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거래소 기능을 구축하여 지역화폐의 목적 달성을 지원
-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지역고용, 지역 차원의 사회적 목적(소상공인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등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실험을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교육시스템 구축
 - 초기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 차원의 연계망 및 지방정부 단위 지원체계 구축
 - 지역단위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협동화 사업 지원
- 공유경제 플랫폼의 일환으로 지역순환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
 - 다양한 측면에서 실험되는 지역단위 유치기업들의 성장기반 마련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기업, 지역순환을 위한 소셜벤처 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이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실험을 시작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서 초기 사업기반 지원
 - 지역단위 협동화 사업 촉진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 지역단위 혁신 기업들의 집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공유가능한 기반시설의 공유를 통하여 비용절감 효과 달성
 - 기존의 외부 경제시스템과의 교류 협력 창구기능도 담당 가능

[2-2-4] 경기도 1인 가구 150만 명 시대 대응

핵심내용

- 2040년 경기도 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150만 명에 이를 것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일 것으로 전망
- 1인 가구 삶의 질 제고 및 나홀로 노인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 전개
- 마을공동체 연대 강화

목표와 지표

- 저소득 1인 가구 경제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일자리 사업 강화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와 저임금에 머무르고 있는 노인돌보미 처우 개선
-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1인 가구의 수요에 대응한 지역 주거정책 수립
 -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도심형, 전원형 아파트 타운 건설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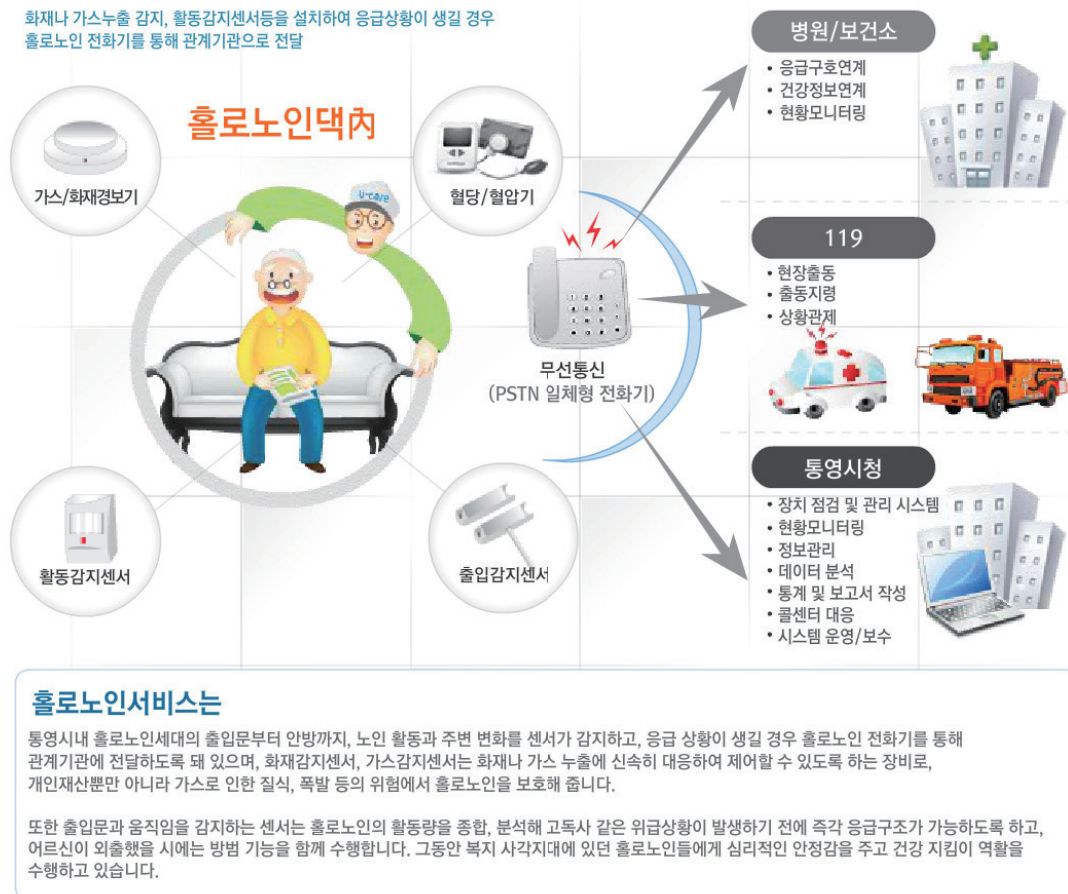
- 카네이션하우스 등 경기도 플러스복지 사업의 확대 및 정착
 - 노인 1인 가구 주거안정성 및 삶의 질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1인 가구 문제 해결
 - 주거 안정성뿐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지속가능성 제고
- 1인 가구 삶의 질 제고
 -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보건 및 안전서비스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으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에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서울시는 2012년 9월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에는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방범서비스 등의 맞춤형 정책을 시행
 - 경기도 차원에서 1인 가구용 소형 임대주택 보급과 같은 주택정책을 강화할 필요
- 나홀로 노인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종으로 노인이 (독거)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사업 활성화
 - 자원봉사 수준의 노노케어 사업(월 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급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보장 효과를 도모

- 반려동·식물을 통한 정서적 만족감 고취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심리치료
 - 독거노인의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한 반려식물 나눠주기 사업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마을단위 장례식
 - 무연고 상태 노인 사망 시 장례 복지를 지원
 - 무연고 사망자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공공장례식장을 공공병원에 설치

○ 마을공동체 연대 강화

- 가족이 담당했던 돌봄 기능을 지역공동체가 분담 시행
- 지역에서 고립된 나홀로 가구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시행
- 지역사회 내 주민센터,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복지관 등 유관기관 사이의 효율적 연계방안 마련
 - 독거노인끼리 함께 돕고 사는 공동거주시설 확충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관심제고

홀로노인서비스



[그림 3-2-31] 통영시 독거노인 대상 지능형 홈 U-건강복지센터

[2-2-5]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역량 강화

핵심내용

- 204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이 같은 수준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동 사회보장협의체 안착화를 통한 마을단위,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자원 발굴
-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와의 연합모금 등 지역밀착형 모금의 활성화
- 동 단위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 지역단위 돌봄활성화

목표와 지표

- 지역사회 차원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돌봄 등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경기도 전체 읍면동에 설치해 활성화(자발적 운영 가능한 생태계 조성)
- 민간자원발굴 채널의 다양화 등을 통해 현재 수준에서 매년 5% 모금액 인상을 목표로 설정
- 자원봉사체계를 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의 체계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실제 자원봉사인력이 매년 5% 추가 확보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표 3-2-9] 복지역량 강화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4	2020	2030	2040
동 사회보장협의체	—	31개 시·군 전체 읍면동 설치		
민간자원 연계 시스템 운영	406억 6,700만 원	544억	887억	1445억 원
	—	구축기	착근기	성숙기
지역사회 돌봄 자원봉사	179,651명(실 활동인원) 897,526명(등록)	240,749명	392,156명	638,780명

자료: 민간자원연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자원봉사인력, 통계청, <http://kosis.kr>

추진전략

- 플러스복지와 따복공동체 기반의 민간 복지역량 확충
 - 민선6기 플러스복지 사업을 통한 복지공동체 역량 기반 강화
 - 사회투자형 복지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및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 플러스복지 등 경기도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민간 주체 양산을 위한 따복공동체 기반의 확대

-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출발한 다양한 민간주체가 경기도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

○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가이드 제공
 -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설립,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해 설립 활성화 지원
 -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교육 실시
 - 동 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아이템 제시
 - 지역단위에서 맞춤형 대상자 발굴 및 자원발굴을 위한 각종 아이템 제시
 -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동 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아이템 공유 및 활성화 지원

○ 읍면동 단위 민간자원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민간모금기관과 읍면동 협의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자원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복지법인과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자원의 체계적 모집 및 관리
 - 민간자원을 읍면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강화

- 지역여건에 맞춰 동 단위 자원봉사운영 강화
-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단체와의 연계강화
 - 복지부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영역 중 복지영역에 대한 중요성 확보
 - 읍면동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내 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생태계 구성
- 동 단위 자원봉사단 구성 및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가 어렵거나 지역사회내 자원봉사 인력 확보가 용이한 지역의 경우 동 단위 자원봉사단 구성
 - 독거노인돌봄관리사, 대한적십자 봉사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역단위 관리 체계 제공

[2-2-6] 경기도 고용복지 선순환체계 구축

핵심내용

- 한국의 복지 확장시기에 편승하여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과 복지 영역의 선순환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기
- 경기도 내 고용·복지 정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 경기도 일자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 도입 강구
- 고용·복지영역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와 장기적인 계획 필요

목표와 지표

-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도입 및 개발
 - 복지제도 등의 개선방향 제시와 더불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부문과 연계한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적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
 - 경기도 및 기초 지자체의 주도로 지역사회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초기업 단위인 산별협상이나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소득 분배의 개선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 마련
 - 또한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장과 청장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중장년 및 노인층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
- (복지)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
 - 다양한 사회적 욕구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이는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반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국가 보조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수반되어야 함
- 고용률은 2015년 61.8%에서 2040년 72% 수준으로 제고
- 경기도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2014년 43개 사업에서 2040년까지 점진적으로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적용



추진전략

- 노동시장 이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 고용복지 차원에서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는 1)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2) 직장과 직장으로 이행, 3) 출산과 보육에서 직장으로의 복귀 이행, 4) 중·고령층의 은퇴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
 - 청년기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청소년이 재학 시 졸업 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1) 빈곤계층 자녀에 대한 보편적 교육 서비스 확대, 2) 진로교육 등을 통한 청소년 경력 개발지도, 3) 졸업 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경력형성 일자리 사업 제공 등이 필요
 -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행 시, 장기 실업 및 반복 실업의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켜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기 전까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정착률이 되도록 지원함
 - 원활한 은퇴로의 이행을 위한 중·고령층 고용지원 사업을 체계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현대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필요
- 경기도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제고 및 지원방식의 차별화
 - 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취약계층의 소득확보와 노동시장 진입인 만큼 사업 참여시, 근로시간 확대 및 시간당 임금수준 인상 혹은 취약계층 인적자원에 대한 숙련도 향상 및 민간 시장 이동성 확대 지원 등의 방안 모색
 - 일자리사업 참여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식에 대한 차별화를 둬으로써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
- 경기도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 출산·보육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보편적 보육체계 확립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 준공영화 등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고용복지를 위한 중앙정부-경기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를 통한 고용-복지 영역의 선순환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공재정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전달체계와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장기적인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3] 보건의료 체계 강화

[2-3-1]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핵심내용

- 공공보건의료 역할 상향
- 경기도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

목표 및 주요지표

-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여 도내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시설을 확충
 -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율을 OECD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 경기도는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점 공공병원 및 농·어촌(읍,면 단위) 보건소를 확충하고, 또 한편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개선하고 확충

추진전략

- 공공보건의료 역할 '30%' 시스템 구축
 -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시설을 확충하여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율을 현재의 1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 미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병원시설 비율은 30%에 달하는 등 OECD 선진국은 공공병원의 역할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보건소—공공보건의료 광역거점 도립병원—국립병원 및 대학병원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도 내 국립대병원은 광역진료권 내에서 공익적 교육 및 연구중심 병원으로 육성. 권역내 의료인력 교육과 표준진료를 선도하고,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 간의 연계를 통한 예방사업 및 연구를 실시
 - 도립병원, 적십자병원 등의 경우 민간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 중장기적 시설개선계획, 국립대병원과 인력교류활성화 방안, 포괄수가제 전환, 경영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

-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안정적 인력확보 방안 마련
 -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의료 인력은 통합 관리기관 소속으로 하여 신분의 안정성 및 기술적 발전 기회를 보장

○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시책 추진

-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접근성을 강화
 - 인구, 생활권역, 교통여건,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서 진료권을 도출하고, 진료권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지역진료권 중심)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
- 거점의료기관에는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부여
 -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실시
 - 예방중심의 건강증진병원 역할 수행
-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진료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별로 확대
-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1차적 안전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
 - 공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복권기금, 기존 의료비지원 사업 재원 통합, 일반 기부금 등과 함께 자체적 재원 발굴 등도 병행
- 공적의료비 지원사업 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장기저리융자사업 등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

[2-3-2] 광역거점 도립병원체제 구축

핵심내용

- 경기도 도립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수행
-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 개선

목표 및 주요지표

- 경기도의 6개 도립병원을 일반 종합병원과 차별화하고, 공공보건의료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6개 권역별로 ‘공공보건의료 광역거점 도립병원’으로 지정하고 기능을 정상화
- 취약지역, 취약계층의 도립병원 이용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100%까지 늘리고, 2040년에는 300%까지 증대

추진전략

- 경기도 도립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광역거점병원 지정
 - 보건소—공공보건의료 광역거점 도립병원—국립병원 및 대학병원의 의료서비스 전달체제 구축
 - 기존 도립병원의 특성화 및 시설 확충 추진
 - 국가적 재난 발생시 거점 치료병원 역할 수행
 -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 도민 100세 건강장수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 지역이 넓은 경기도의 특성에 따라 가평군 등 원거리 취약지역의 u-헬스시범사업에 참여
- 메르스 등 전염병 조사-진단-환자수용-상급병원 이송시스템 정비
 - 메르스 등 전염병 조사-진단-환자수용-상급병원 이송시스템 정비
 - 메르스, 신종플루, 지진 등 국가적·지역적 재난 발생 시 경기도 대책의 효율적 수행
 - 전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응하여 (가칭) ‘긴급 전염병 관리팀’을 구성하여 비상 시 가동

제 3 장

교육혁신 · 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

비전 교육 혁신 · 문화 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

목표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교육 공동체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통한
문화정체성

경기 관광의 세계화

전략 3-1.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3-2.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3-3.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제1절

교육 · 문화 · 관광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1. 현재의 여건

 (학령인구)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및 학급당 학생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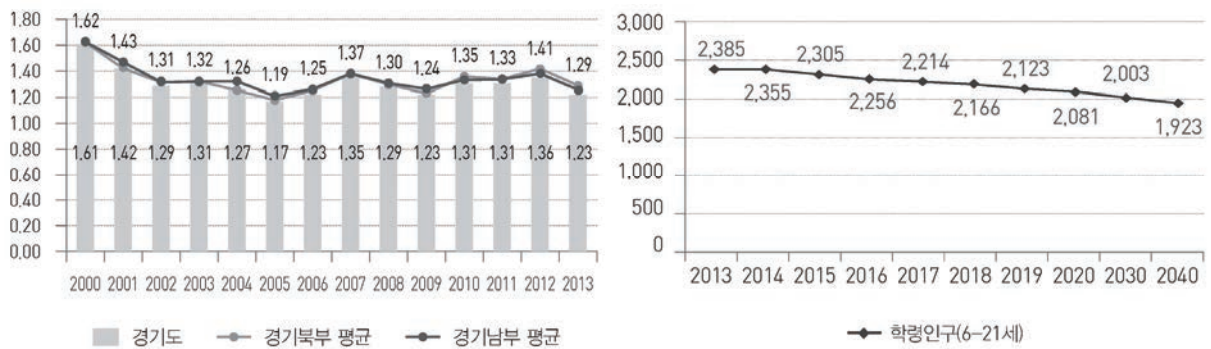
-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전국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30.5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3.5명보다 많은 과밀학급으로 나타남
- 2015년 경기지역 총인구 중 학령인구(초등~대학교, 만6~21세) 비중은 18.6%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14.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2040년 전국 학령인구는 총인구의 13.1%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

[표 3-3-1] 전국 학령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총인구	총학령인구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전국	2000	47,008(100.0)	11,383(24.2)	4,073(8.7)	1,869(4.0)	2,166(4.6)	3,275(7.0)
	2010	49,410(100.0)	10,012(20.3)	3,276(6.6)	1,974(4.0)	2,090(4.2)	2,672(5.4)
	2015	50,617(100.0)	8,874(17.5)	2,736(5.4)	1,563(3.1)	1,846(3.6)	2,730(5.4)
	2020	51,435(100.0)	7,757(15.1)	2,719(5.3)	1,359(2.6)	1,370(2.7)	2,308(4.5)
	2040	51,091(100.0)	6,698(13.1)	2,378(4.7)	1,271(2.5)	1,298(2.5)	1,751(3.4)
경기	2000	9,146(100.0)	2,244(24.5)	908(9.9)	389(4.3)	382(4.2)	565(6.2)
	2010	11,576(100.0)	2,453(21.2)	855(7.4)	489(4.2)	503(4.3)	605(5.2)
	2015	12,398(100.0)	2,305(18.6)	750(6.1)	411(3.3)	470(3.8)	674(5.4)
	2020	12,928(100.0)	2,081(16.1)	750(5.8)	371(2.9)	364(2.8)	596(4.6)
	2030	13,448(100.0)	2,003(14.9)	778(5.8)	380(2.8)	364(2.7)	481(3.6)

자료: 통계청, 2014, 장래인구추계

- 경기도의 학령인구는 2013년 약 238만 명이며, 2030년 200만 명, 2040년 192만 명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 2013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 미만으로 내려가는 추세
 - 경기남부의 합계 출산율은 1.27명이며, 경기북부는 1.29명으로 경기남부·북부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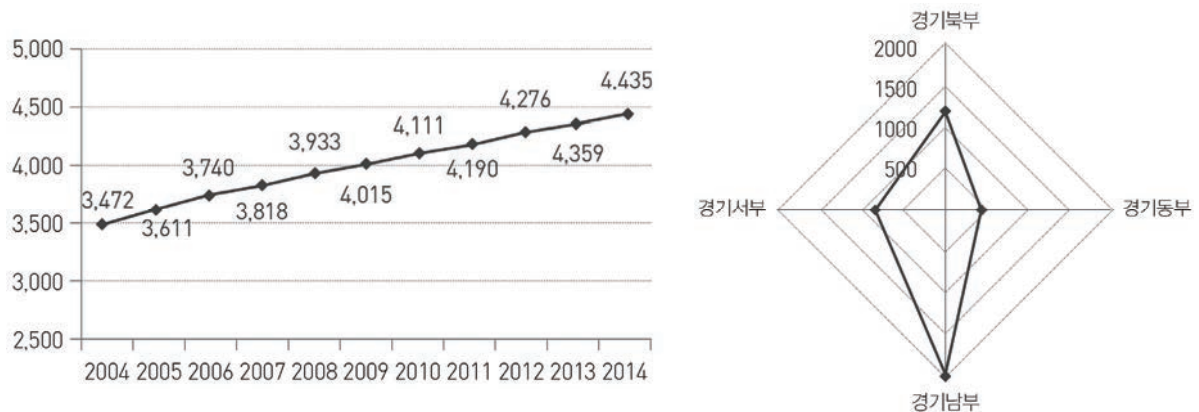


자료: 경기통계연보, 각 연도, 경기도 합계출산율 및 학령인구

[그림 3-3-1] 경기도 합계출산율 및 학령인구 변화 추이

(학교시설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지역간 학교시설의 격차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는 2014년 4,435개소로 2004년 대비 27.7% 상승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경기북부는 26.8%, 경기동부 9.7%, 경기남부 44.7%, 경기서부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는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경기동부 지역이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경기도교육청(각 연도)

[그림 3-3-2]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현황(좌), 권역별 현황(우)

- 2014년 경기지역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17.1명), 중학교(15.9명), 고등학교(13.9명) 순이며 경기지역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치보다 모두 많게 나타남

[표 3-3-2] 교원 1인당 학생 수

연도	경기			전국			(단위: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21.0	18.9	16.2	18.7	18.2	15.5	
2011	19.6	17.9	15.4	17.3	17.3	14.8	
2012	18.4	17.3	14.8	16.3	16.7	14.4	
2013	17.6	16.8	14.5	15.3	16.0	14.2	
2014	17.1	15.9	13.9	14.9	15.2	13.7	
'14년 증감률	'13년 대비	-2.8	-5.4	-4.1	-2.6	-5.0	-3.5
	'10년 대비	-18.6	-15.9	-14.2	-20.3	-16.5	-11.6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어린이집 설치 현황) 보육서비스의 높은 민간 의존도

-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3,259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57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4.3%에 불과
- 경기도 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12,262개소(92.4%)로 전체 어린이집의 90%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음
-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시설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3-3] 어린이집 설치현황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전국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100.0	5.7	3.2	1.9	33.9	53.3	0.3	1.6
경기도	13,259	575	70	137	4,076	8,186	64	151
	100.0	4.3	0.5	1.0	30.7	61.7	0.5	1.1

자료: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보육통계

(초·중고 학생 사교육) 높은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과다지출

- 경기지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음
 - 2014년 경기지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이며, 초등학교(85.3%), 중학교(72.0%), 고등학교(53.5%)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경기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6만 원이며, 중학교(29만 1천 원), 고등학교(25만 3천 원), 초등학교(24만 5천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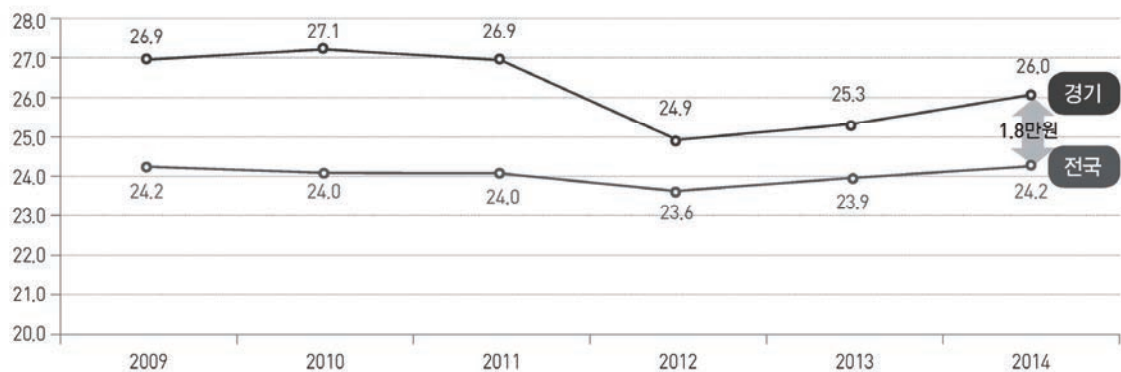
[표 3-3-4]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단위: %)

	연도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경기	2010	76.5	89.7	74.0	54.8	64.3
	2011	75.4	88.8	72.8	54.3	61.1
	2012	70.9	79.1	73.3	54.8	60.9
	2013	72.0	85.3	71.2	51.4	56.6
	2014	72.8	85.3	72.0	53.5	58.6
전국	2010	73.6	86.8	72.2	52.8	61.1
	2011	71.7	84.6	71.0	51.6	58.7
	2012	69.4	80.9	70.6	50.7	57.6
	2013	68.8	81.8	69.5	49.2	55.9
	2014	68.6	81.1	69.1	49.5	56.2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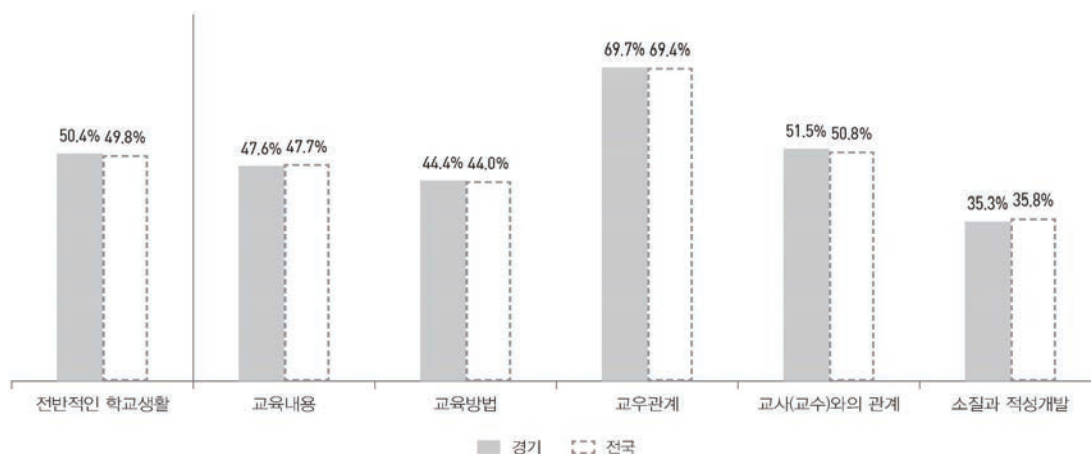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그림 3-3-3] 경기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생활 만족도) 소질과 적성개발에 대한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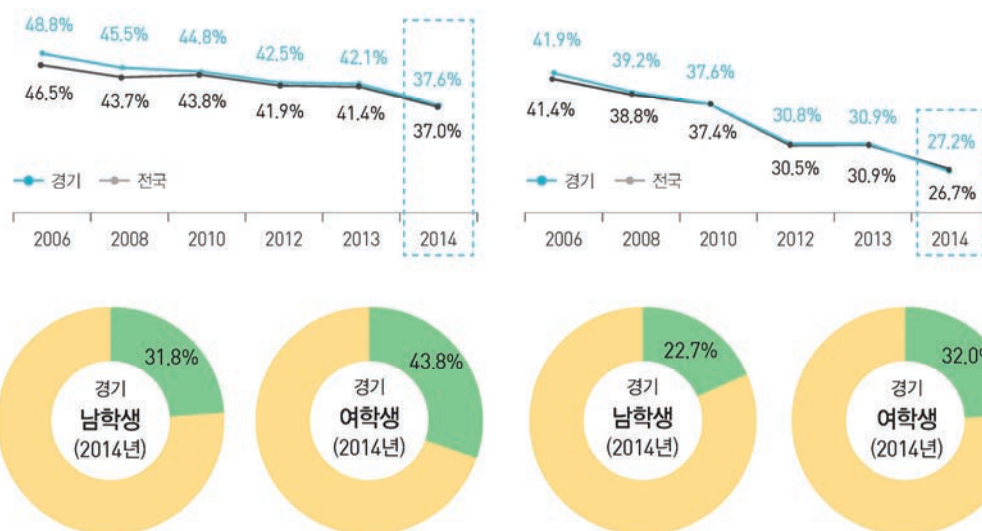
- 학교생활 만족도는 전국 49.8%에 비해 경기도는 50.4%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 학교생활 만족도는 '교우관계'가 69.7%로 가장 높았고, '소질과 적성개발'이 35.3%로 가장 낮았음



자료: 통계청, 2014, 사회조사

[그림 3-3-4] 2014년 경기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중고등 학생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자살률은 높은 수치
 - 2014년 경기지역 중고생의 37.6%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고, 27.2%는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각각 12.0%, 9.3% 높게 나타남
 - 2014년 경기지역 중고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7.6%이며, 남학생은 31.8%, 여학생은 43.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 높게 나타났음
 - 2014년 경기도 중고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2%이며, 남학생은 22.7%, 여학생은 32.0%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9.3% 높게 나타남
 - 2014년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에 대한 13~24세의 비중은 7.9%로 높은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그림 3-3-5] 중고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가정 내 소통 부족) 부모-자녀, 배우자 간 적은 대화 시간 및 소통

-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이 57.5%로 과반수를 차지함. 배우자와 적은 시간을 함께 지내다보니 가정 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가정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음
- '2시간 이상'은 16.5%에 불과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배우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의사소통만족도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에 이름
- 헤럴드 경제 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가 하루 중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답변함. 가정의 내부적인 문제와 함께 긴 근로시간, 과도한 학업시간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3-3-5]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단위: %)

구분	대화 없음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0.9	16.6	40	26.2	16.5
남편	0.5	15.2	39.6	28	16.7
아내	1.2	18	40.3	24.2	16.2

자료: 여성가족부, 2010 「가족실태조사」

[표 3-3-6]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의사소통만족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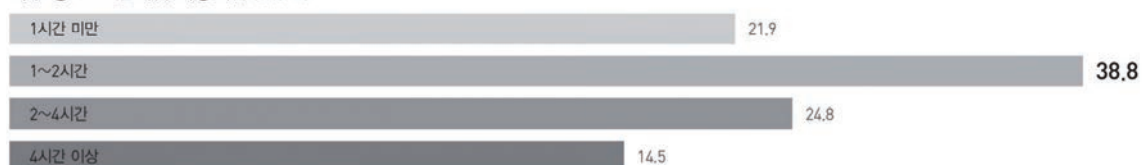
자녀관점별	계	매우 부족	조금 부족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아버지	426	65	191	135	35
어머니	468	14	121	237	96

자료: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하루 중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단위: %)



하루 중 TV·인터넷 사용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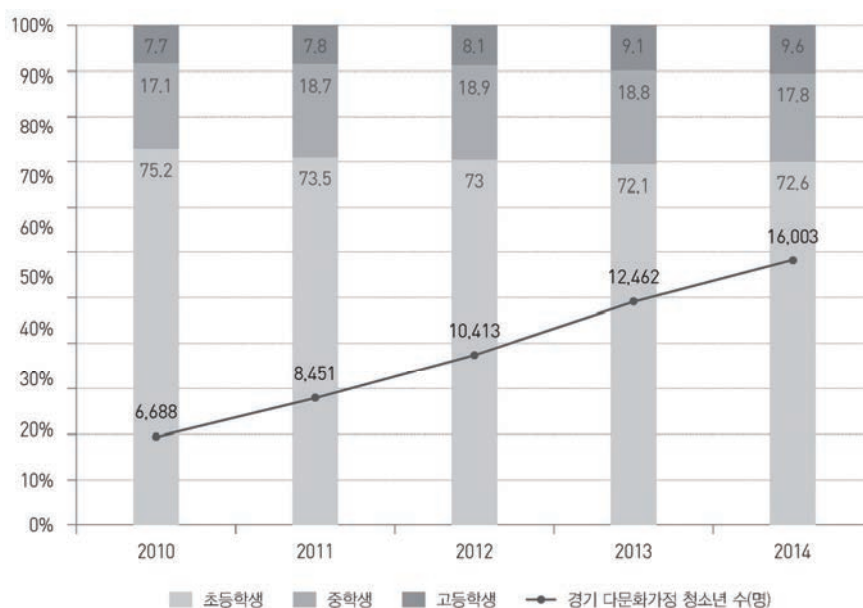


자료: 헤럴드경제, “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 25%”

[그림 3-3-6]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자녀수 증가

- 세계화로 인한 국제 인구이동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 기타 인적자원 교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인구구성이 다양해져 다문화사회의 심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2014년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수의 23.7%이며, 고등학생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6,003명이며, 2013년 대비 28.4%, 2010년 대비 139.3% 증가
-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저조한 언어발달로 인해 학업 부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결손이 많이 일어나며, 언어의 영향력이 높은 국어와 사회과목 등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임
- 학업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며, 정체성의 혼란 및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으로 낮은 자존감 형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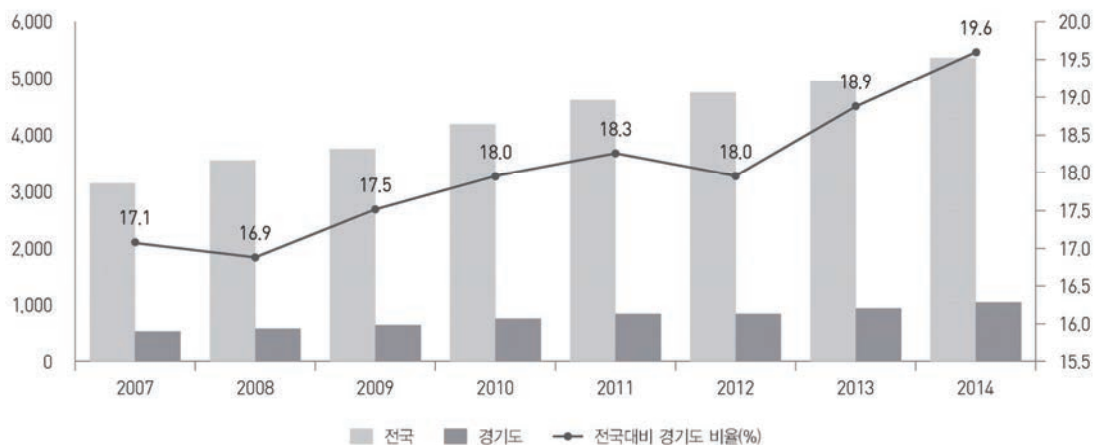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5, 경기지역 청소년 통계

[그림 3-3-7]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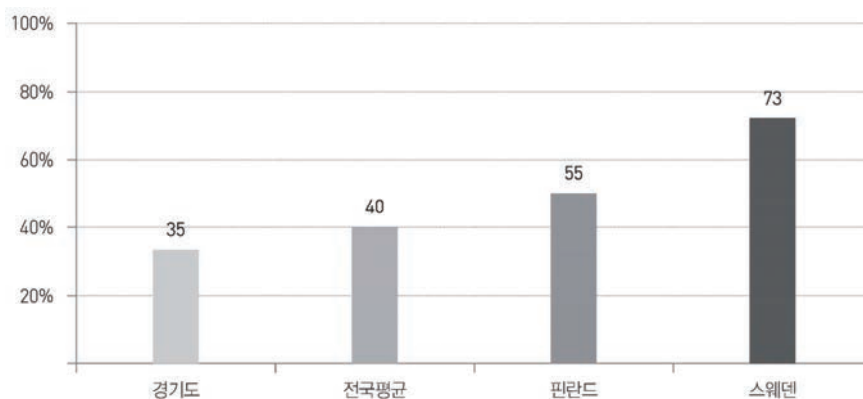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낮은 평생교육참여율)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참여도 상대적으로 낮음

- 2014년 전국 평생교육기관은 5,376개로 2007년 대비 70.1% 증가
- 2014년 경기도의 평생교육기관은 1,053개로 2007년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19.6% 차지



[그림 3-3-8] 경기도 평생교육기관 현황

- 경기도민의 평생교육참여율이 전국평균(40%)보다 낮고(35%) 선진국의 시민 평생교육참여율보다 매우 낮은 편임(스웨덴 73%, 스위스 57%, 핀란드 55%)
 - 평생교육참여율이 낮은 것은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평생교육실태조사 참조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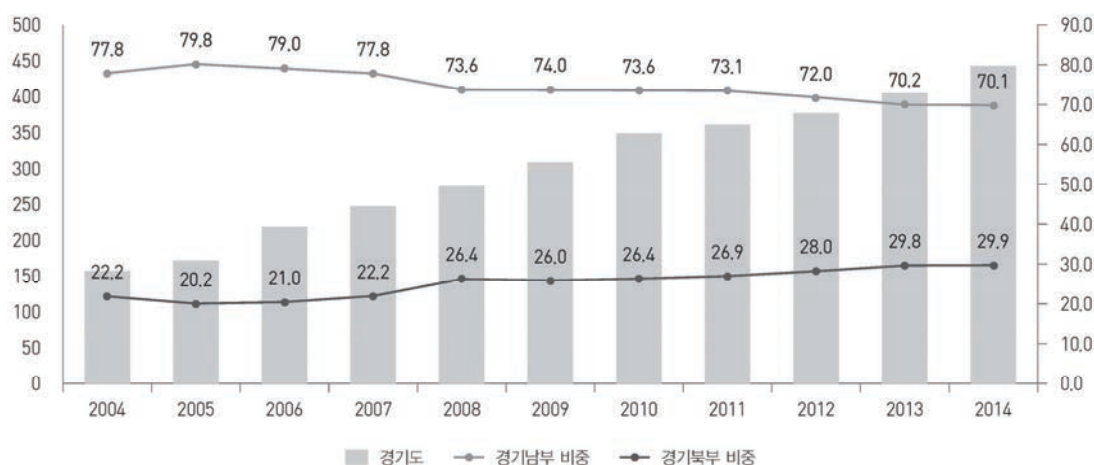
[그림 3-3-9] 평생교육참여율 비교

- 불균등한 평생교육참여 기회: 저소득층 및 근로자층의 평생교육참여율이 낮음
 - 소득하위 20%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참여율은 전체평균보다 13% 정도 낮고, 근로자층의 평생교육 참여율도 전체평균보다 15% 정도 낮음

- 평생학습생태계 형성 미흡: 도내 평생교육자원 및 인프라간 연계성 부족
 - 경기도의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하며, 평생교육과 연관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연계성도 미흡한 상태임
- 대학들의 평생교육기능 미흡: 대학의 기능이 성인대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재학생중심 교육에 머무르고 있음
 - 경기도에는 4년제 대학 46개(캠퍼스 중심 개수), 전문대학 40개(캠퍼스중심 개수)가 자리잡고 있으나, 성인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거나 공개하고 있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함
 -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도민 평생학습대학' 지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13개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산업현장수요 반영 미흡: 직업훈련기관의 산업수요 반영 미흡
-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직접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대학이 현재는 도내 2개임

(문화시설) 경기도 문화시설 격차 심화

- 경기도 주요 문화시설수는 2004년 158개소에서 2014년 442개소로 2배 이상 증가
- 그러나, 경기남부에 문화 인프라의 70.1%가 집중되어 남북부 간 격차 심화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지수 결과를 보면 수원(1위), 부천(2위), 성남(3위), 고양시(9위) 등 4개 지역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나, 외곽지역은 하위수준이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각 연도)

[그림 3-3-10] 경기도 주요 문화시설 현황

(생활 문화 · 체육) 생활 문화 · 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

- 경기도는 2010년 대비 2012년 문화예술 행사가 26.4%(215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악(39건, 31% 증가), 시각예술(226건, 29.6% 증가), 연극(119건, 55.4% 증가), 무용(4건, 3.5% 증가)이 증가
- 우리나라 국민의 체육 참여율은 1990년 1만 9천 명에서 2014년 4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4년 경기도 문화공간 이용률은 51.6%, 평균 0.21회를 차지

(경기도 정체성) 경기도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 증대

- 경기도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31개 시·군의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기 위해 경기지역학 육성이 필요
- 경기도는 신도시의 개발과 인구의 유입으로 정체성과 정주의식이 미흡하고,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발생
-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학 강좌 개설
- 2010년 3월 한국외대(용인 글로벌캠퍼스)와 강남대 2학점 교양과목으로 〈용인학입문〉 강좌 개설 이후, 단국대·명지대(2011년), 송담대(2012년) 등으로 확대 됨
- 경희대·경기대·아주대·한신대(2012), 협성대(2013) 등에 ‘수원학 강의’ 개설
- 수원대는 2013년부터 화성학(강좌명: 〈화성으로의 초대〉)을 개설

(국내외 관광여건) 글로벌화에 따른 관광여건 변화 및 소비자맞춤형 상품에 대한 관심

- 중국, 해외관광의 빠른 성장세 및 해외관광 최대 소비국으로 급부상
 - 2020년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1억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UNWTO(1999)의 예측은 2015년에 이미 5년 이상 앞당겨져 달성됨
 -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의 해외지출은 전 세계 목적지 국가/지역 관광수입의 약 11% 형성(UNWTO, 2014)
 - 2012년 해외관광 지출규모에 있어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1위 도약, 2013년에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약 1,290억 달러 기록(UNWTO, 2014)
-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 혼혈가정 증가로 ‘멀티컬처’에 대한 관심 확대
 -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나라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다문화 혼혈인’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멀티컬처’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중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의 중요한 트렌드가 될 전망
-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50대 중장년층이 앞으로 새로운 최대소비층으로 부상할 전망
 - 신체적 수명이 늘어나면서 주요 관심사가 자아실현과 건강한 노후대비에 모아지고 있으며, 사회활동의 참여가 줄어드는 대신 여가시간 증가로 ‘관광’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

(레저문화 현황)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 증가

- 수동적 여가에서 적극적 여가 형태로의 전환
- TV시청이나 영화감상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형태에서 벗어나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결실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레크레이션 전문화(recreational specializ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일과 여가의 경계 모호화
 - 기술의 발달은 휴가지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지역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무대로 일과 여가를 즐기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탄생
 - 무너진 업무시간과 공간의 경계로 인해 일과 여가, 놀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하려는 트렌드가 부상

2. 제약점

(구조적인 한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조적인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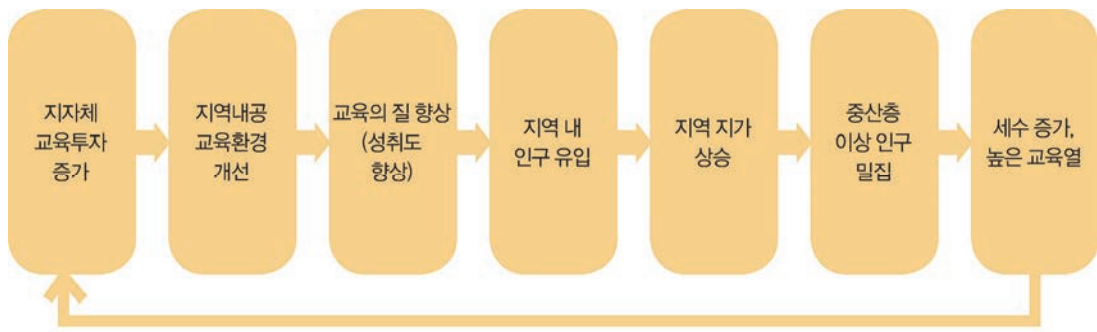
-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제도하에 원칙적으로 일반자치 사무의 대상인데 그 사무 집행을 시·도청이 아닌 별도의 기관인 시·도교육청을 두어 교육행정의 집행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고 있음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자치제도라는 점에서는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법적으로 독립된 자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자면 상호 독립적인 주체로 의무적인 상호 관계는 매우 약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은 시·도교육청과의 상호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아래에서만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미래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제도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함

(보육정책의 한계) 다양한 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여전한

- 최근 보육예산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양육지원 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무상보육지원 확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례가 발생
 - 차량 안전, 이동학대 등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일부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영유아를 믿고 맡길 만한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주거 안정성이 낮고 소득이 높지 않은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임신과 출산은 큰 경제적인 부담
 - 젊은 세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함
 - 보육정책의 성공여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얼마나 잘 추진하는가에 달려있음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보육교사 본연의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과 전문성 증진의 기회 및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행해야 함

(지역 간 교육격차)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거주지 분화 가속화

-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는 지방교육자치제와 거주지 분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지역별로 공교육 환경이 현저히 달라진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의 인구 밀집과 거주지 분화로 이어질 수 있음. 과거 명문고 진학과 풍부한 사교육 인프라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대도시로 진학했던 것처럼 향후에도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환경에 따라 이동할 수 있음
 - 특히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은 주택가격이 인상되어 이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공급(가용자원)을 늘려서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학교의 교육 여건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
-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된다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여건이 좋은 지역의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과밀학급 문제나 학교 신설로 인해 교육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3-3-11] 지역 간 교육격차 전개 과정

📖 (평생교육의 기회불균등) 평생교육 기회불균등 해소의 어려움

- 평생교육참여율에서 지역 간에 많게는 15% 이상 격차가 나고 있으며, 계층 간에도 15%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평생교육에서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못한 상태임
- 지역 간 불균등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계층 간의 격차는 평생교육비에 대한 무상화와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필요함
 - 특히,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반경 1km, 농촌지역은 반경 3km내 평생교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의 한계)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실행체계구축의 한계

- 경기도 내 직업훈련기관(인정훈련기관 포함)은 379개에 달하지만, 몇몇 공공훈련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편임
 - 직업훈련기관이 영세하다보니 산업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훈련장비를 구비하는 것이나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훈련교사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들에 대한 산업현장의 불만은 높은 편임. 직업훈련기관 출신이지만 산업현장에 적응하는 데에는 1.6년이 소요되며, 1년 내 이직률이 50%에 달한다는 점에서 직업훈련기관의 현장수요연계에 대한 수준 향상이 필요함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부족) 문화예술에 대한 미흡한 투자 및 마케팅

- 경기도 문화행사의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 상당수가 서울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음
- 2014년 경기문화재단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지역 예술인은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40.9%)에서 활동하고, 예술단체는 거주 시·군(40.4%)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들의 지역에 대한 활동 강화 유인책이 필요함
- 특히, 문화시설 방문의 주된 결정요인은 지역문화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및 출연진/작가의 영향은 성남아트센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 문화시설의 육성과 함께 프로그램 요인 및 마케팅 강화가 필요함
- 기초문화재단 종사자들은 재단의 주요한 미션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기초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최우선적인 과제는 예산확보로 나타나, 안정적 예산확보, 재단의 자율성 강화와 인력의 전문성을 위한 예술경영인력 확충이 필요함

(지역간 관광객 및 기반시설 격차) 미흡한 외래관광객 관광수용태세

- 외래관광객 1,400만 명 시대, 정부는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육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전망
- 외래관광객의 방한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가격차별 및 불친절 등의 불편함이 접수되며 환대 태도의 문제점과 부당행위 등이 지적되고 있음

[표 3-3-7] 외래 관광객의 한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만족	88.1	78.4	90.2	91.4	94.0
보통	10.3	18.3	8.6	8.1	5.6
불만족	0.8	0.4	0.4	0.5	0.3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특히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불친절, 미흡한 외국어 안내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관광지 바가지요금 및 가격 시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 표시 의무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꾸준한 모니터링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
 - 안내의 경우, 외국어로 마련된 안내서적, 안내 방송, 교통 운행 노선도, 경유지 안내 등 제공이 특히 열악하고, 외국어 해설사의 경우 사전 예약 및 특정 시간 서비스 제공 등의 제약이 뒤따름

[표 3-3-8] 외래 관광객의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입국절차	81.9	73.4	77.7	82.4	87.7
대중교통	70.5	69.3	78.9	82.3	87.0
숙박	77.6	70.0	81.6	83.1	88.6
음식	78.0	77.8	82.0	81.1	85.5
쇼핑	76.8	77.6	81.0	81.8	86.6
관광지매력도	66.1	61.4	73.4	75.9	82.1
관광안내서비스	61.7	56.0	69.0	69.3	75.9
언어소통	-	44.7	57.7	55.4	62.4
여행경비	-	61.0	72.0	70.8	73.9
치안(안전성)	-	74.2	86.2	87.2	90.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또한 관광객 수용에 있어, 도시국가 형태의 관광이 집중적으로 발전되어,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대부분이 서울 방문에 편중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외래 관광객의 약 80%가 서울에 몰리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중심인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와 수용태세 구축을 통해 외래 관광객의 지방 방문 및 분산화를 촉진할 필요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숙박, 안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마련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이 필요

(장기전략 부재) 고부가가치성 관광이 아닌 일회성 콘텐츠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관광

-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 따르면, 141개국 중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이 2013년 25위에서 하락한 29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지속성(90위), 가격 경쟁력(109위) 부문의 취약성이 부각됨
-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방안이 다소 근시안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광객의 재방문을 위한 차별성 있는 질적 관광 경험 제공보다는,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행사 및 서비스 제공이 문제로 나타남
 - 실제로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6.7%(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질적 체험 관광보다는, 쇼핑관광 및 유명 관광지 일회성 방문 위주인 현 관광환경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줌
- 관광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있어 한시적 수입증가 및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마련이라는 인식 변화를 토대로 꾸준한 품질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

25) 제주관광공사(2015), 『2014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1. 경기도 교육·문화·관광 변화의 메가트렌드

(저출산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저출산과 학생수 감소, 학급당 학생수 감소에 따른 새로운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

- 저출산, 싱글족(1인 가족) 증가는 학생수 감소 및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이어져 이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대응이 필요함
 - 2015년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 : 초 25.3명, 중 30.8명
 - 2015년 경기도 학급당 평균 학생수 : 초 22.6명, 중 29명
 - 2020년까지 교육부 목표 : 학급당 초등학교 21명, 중 23명
 - OECD 상위국 수준 학급당 학생수 : 초등 21.2명, 중·고 23.4명
- 경기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교육최적화 수준(OECD 상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최근 서울 근교 전세난으로 인한 경기도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학급 과밀화, 교원 수급 적정화 대책 시급
-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교수 방법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함. 즉, 기존의 경쟁과 서열 위주, 대학입시 위주 교육풍토를 과감히 탈피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흥미, 재능, 진로에 초점을 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학습공간 및 교육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교육의 관점이 기존의 '공교육(학교 교육)-교사-가르침' 중심에서 '학교 밖 교육주체-학생-배움'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
- 교육 내용이 기존 혹은 과거 지식의 습득을 통한 현실 이해력 중심에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
- 공교육 기관인 학교 내 교육에서 이론 및 지식 중심의 학습 비중이 급격히 감소되고, 인문학에 기초한 인성, 예술, 스포츠 및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비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사이버 무료 강좌(KHAN ACADEMY, MOOC, TED 등)의 증가로 공교육기관(학교)의 역할 조정과 교육과정 변화가 불가피함
- 교사의 역할이 기존의 강의, 지시, 통제 위주에서 조력자, 안내자, 촉진자, 에듀테이너(교육을 통한 즐거운 경험의 연출자)로 변화
- 정부의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교육, 융합인재 교육의 추진 및 확대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사고력과 창의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3-9]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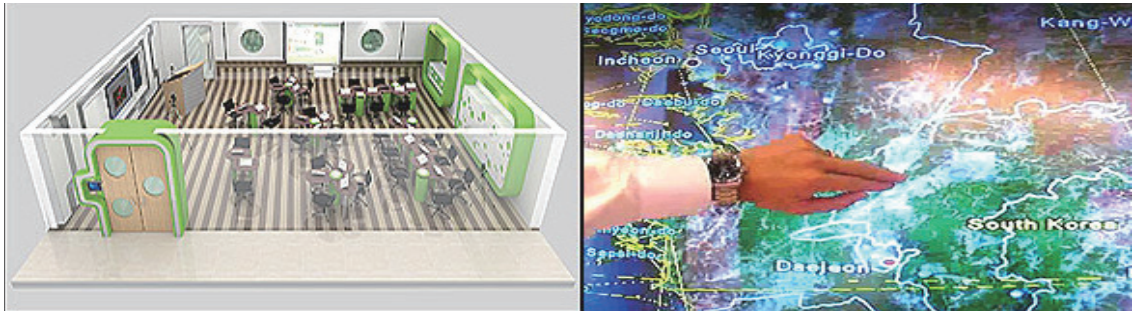
구분 기준	기존의 교육체제	새로운 교육체제
교육의 성격	폐쇄적	개방적
교육 개념	학교교육	평생교육
교육 대상	학령기 학생	모든 국민
교육 장소	학교	모든 교육 사회
교육 방법	획일적 집단 수업(오프라인 중심)	개별화 수업, 원격(온·오프라인연계학습)
교육 내용	전통적 교과내용(지식중심)	다원적 교육내용(핵심역량 중심)
운영주체	교육공급자 중심	교육소비자 중심
교육통제	획일적 위계적 통제	수평적, 자율적 통제

(교육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 IT혁명, 세계화, 다문화, 분권화, 지역화, 개인화의 가속화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

- NBICS²⁶⁾ 등 첨단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면서 생활 및 교육공간에서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
- 과학·정보통신의 발달은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어 스마트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수법, 학생 중심의 실험 및 접근 등을 가능하게 함
- 가상 이미지와 정보를 이용하여 관찰대상과 연계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디지털교과서, 동작기반 컴퓨터의 발달에 따른 시뮬레이션 같은 학습형태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
- 인터넷과 SNS 사용의 일반화로 정보화, 세계화가 더욱 촉진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정보 습득 및 간접 교육 경험의 기회가 증대되어 이들의 높은 교육열과 수요에 대응할 교사들의 탁월한 정보력과 지도력이 요구됨

26) NBICS: 나노공학(NT),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CT), 합성생물학(Synthetic Bio Technology).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평생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 시대, e-러닝 시스템이 일반화됨.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대가 가능해짐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그림 3-3-12] 미래형 교실 및 전자칠판

-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경기도 내 조기정착 및 안정적 공존이 가능한 교육시스템 확립
- 교육의 지방분권이 더욱 가속화되어 재정적 안정과 지역 특성 및 강점에 기초한 모범적이고 독립적인 교육 성공 및 우수사례들의 발굴과 지역 확산이 요구됨
- 미혼, 이혼, 1인 가족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생활풍조의 증대는 개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지쳐가야 할 규범 및 시대적 사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도외시하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함

(보육환경의 변화) 저출산에 따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공적 관심과 지원 확대

- 2013년부터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되어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음
 - 2008년 12월부터 임신부는 고운맘카드 발급을 통해 산전 검사비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08) 2015년 5월부터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산전 검사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되었음
- 보건소에서 신혼부부 대상 산전검사, 임신부 대상 임신초기 혈액검사, 엽산·철분제 지급,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모자보건실 운영과 같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서 제공하는 혜택이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기본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 다양한 지원 및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체감에 따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됨

(인성교육 및 소통역량강화) 공교육 인성교육 및 소통역량강화교육 활성화

- 소통역량강화를 위해 자아존중감 형성 및 존중력 증진 수업을 개설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생들의 인성 및 소통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학교에서만 국한되지 않는 학생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진정한 인성 함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기존의 교사-학생 간의 일방향적인 수업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방식으로 계획하고 추진
-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함. 이미 각 도청이나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통 부문에서 전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 생활문화·체육의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문화도시·문화지구지정 등을 통해 특정지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가는 정책추진이 증가하고 있음
-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주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여가활용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 경기도 문화자원의 세계적 명소화를 통해 경기지역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
- 문화를 활용한 도시관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도시의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발굴
- 경기도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31개 시·군의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기 위해 경기지역학 육성이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방문비중 및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한 화해협력과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타 부문과의 융복합화) 창조·융합관광의 활성화

- 부문 간 다양한 융복합화가 추진되며, 관광산업은 종합서비스산업으로 간주되어 건축물, 자연환경자원 등을 위주로 한 전통적인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다양한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색다른 융복합관광이 활성화되는 추세
- 역시 의료관광(메디컬 경기), MICE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대량관광이 아닌 개개인의 관심사와 체험에 주력한 SIT(Special Interest Tourism)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스마트와 감성화의 조화) 정보화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을 충족시키는 감성관광

- 정보화시대에 휴먼터치와 옛것을 그리워하는 아날로그 감성과 인문학적 가치가 제고되며, 이와 관련된 감성관광이 주목받고 있음
- 바쁜 현대사회 속 관광객들은 직접 참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관광에 관심을 가지며, 농어촌 생태관광, 녹색관광, 공정관광, 웰빙관광 등을 통해 개개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경기도의 각 시·군은 슬로라이프 프로그램, 힐링 트래킹 관광, 수확체험, 숲축제 등을 기획하며 감성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2. 경기도 교육·문화·관광의 2040년 중장기 과제

(인성교육 강화) 핵심역량 발달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 회복 탄력성 교육 강화
- GRIT(성취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초, 중, 고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취역량을 테스트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대응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 즉, 마음근력을 강화해 나감
- 세종식 토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세종식 토론: 토론을 통해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구성원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예) 경연(經筵)
- 경기도 인성교육 평가 방식 및 평가시스템 도입
 - 경기도 교육 전반 및 인성교육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 및 평가 시스템 도입

(스마트 교육 실현) 미래형 학습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구축

- 스마트교육을 위한 e-러닝 시스템 구축
- 생태교육 내실화와 생체에 맞는 환경 조성
- 경기도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전환
- 학교 교육과정에서 “생태교육”을 적극 도입하고 실시
- 학생들의 몸과 마을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공보육의 실현) 보육의 공공성 및 질적 향상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공보육 실현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어린이집 질 관리를 통해 누구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직장어린이집 확충
-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질적 수준이 높고,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가 필요함.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를 강화하여 보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문화예술 중심의 보육인프라 구축
- 유아를 위한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여 부모와 영유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유아와 부모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건강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 어린이집의 환경 및 급식 등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된 보육과정
- 경기도형 창의탐구 보육과정 개발 및 실시
- 보육활동의 지역사회 연계강화
- 경기도형 창의탐구 보육과정을 위한 교사역량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
- 가정의 육아부담경감 및 부모역량 강화
- 신혼부부 10평 공공주택 반값 공급

-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논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
- 육아품앗이,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의 운영 지원: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 보육인력뱅크 운영 및 우수교사 포상
-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윤리의식 제고
-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향조정 및 근무 여건 개선

(학교의 기능 및 포괄적 평생학습) 학교의 사회적 기능 강화 및 포괄적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 학교의 이미지 변신 및 교사들의 소통 및 교류역량 강화
- 지역 은퇴자 활용 시스템 구축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은퇴한 교사나 지역 인사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재능을 기부하고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체계적인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인력풀 활용 시스템 구축
-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및 고등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인기초교양대학 설치

(문화시설의 세계화) 문화시설의 세계화·아시아 문화교류 허브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자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기존 문화시설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차별화된 역사문화콘텐츠, 예술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문화교류 허브 조성
- MICE 사업과 연계한 경기도 역사문화자원의 안내 및 방문을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생활문화) 생활문화공동체 교육 및 문화도시 조성

- 경기도의 전 생활권역에서 생활문화공동체 조직이 구성되고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센터 조성
- 창작공간과 교류형 레지던시, 장기 입주형 창작공간 등 다양한 방식의 창작 공간 조성

📖 (경기도 정체성 확립) 경기지역학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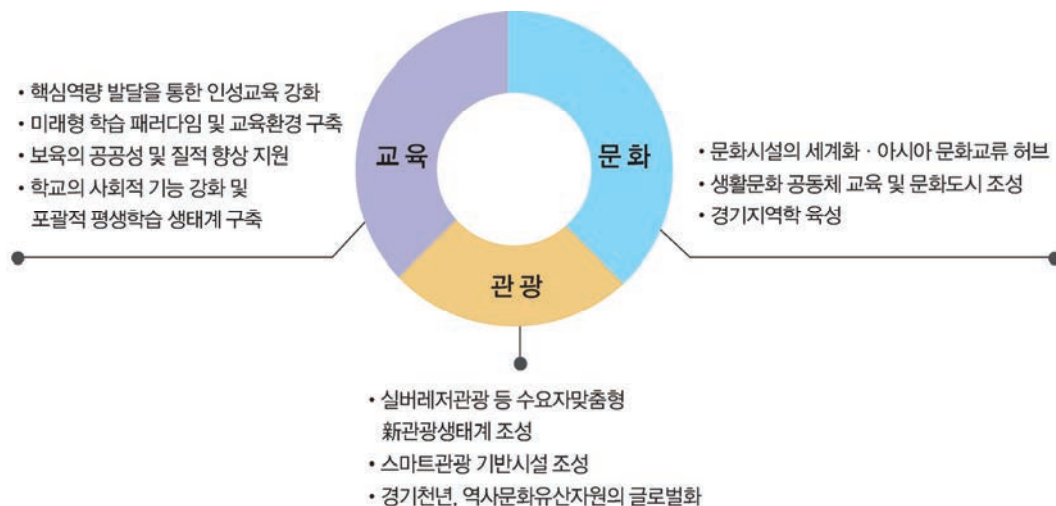
- 경기지역학 육성을 위한 연구 기반 강화, 대학 및 학회와의 연계
- 경기도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문화 진흥 기반 마련

📖 (맞춤형 관광생태계 조성)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관광생태계 조성

- 중장년층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실버관광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 실버관광 및 관련 융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 문화관광시설들과 네트워크 구축
- 실버관광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관광)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조성

- 경기도 ‘지역 이야기꾼’ 발굴 공모사업 및 브랜드화
- 도내 증강현실 기반의 문화관광서비스 체제 구축
- ‘3D 프린팅센터’, ‘가상현실체험관’ 등 스마트 新체험관광명소 조성



[그림 3-3-13] 교육·문화·관광 부문 중장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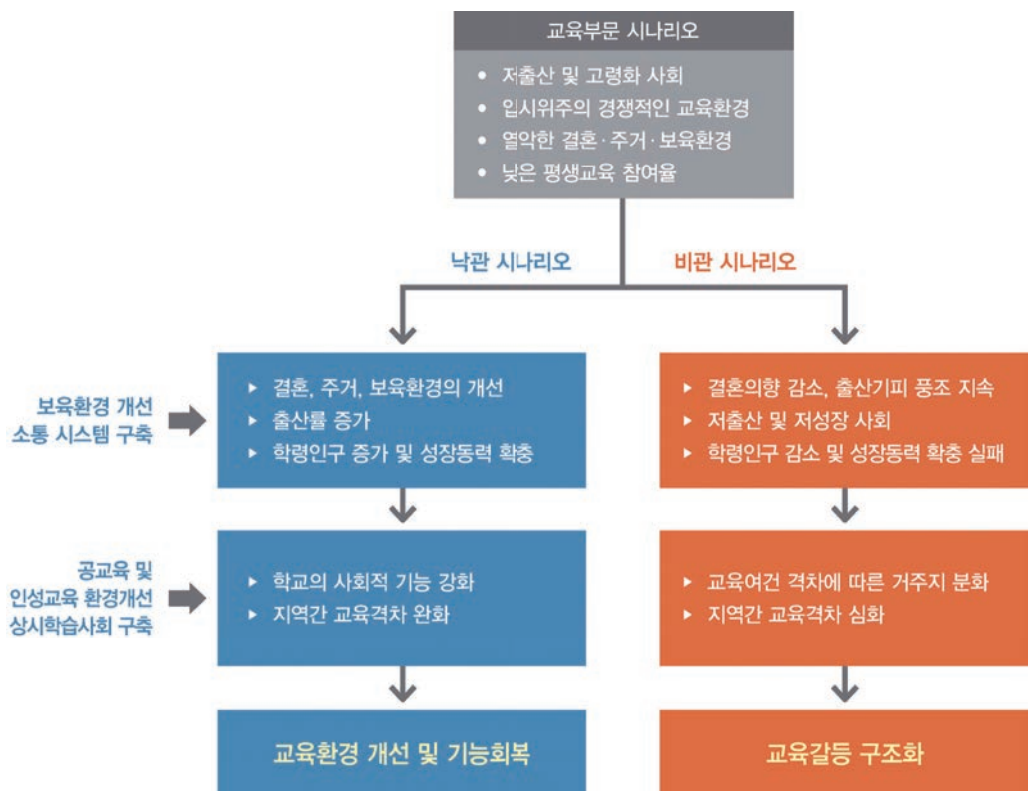
제3절

교육·문화·관광의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변화 시나리오

- 교육부문에서의 보육환경 개선, 소통 시스템 구축, 공교육을 비롯한 학습 환경의 개선,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등의 변수 간의 조합을 통하여 미래에 변화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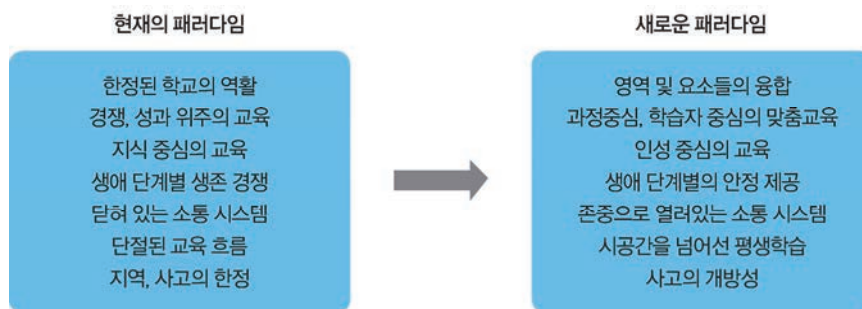


[그림 3-3-14] 교육 부문 미래변화 시나리오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미래사회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 노인 경제활동참여 증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교육 활용 증가 및 지식 수명의 단축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에 따라 교육의 내용, 질, 역할, 규모, 장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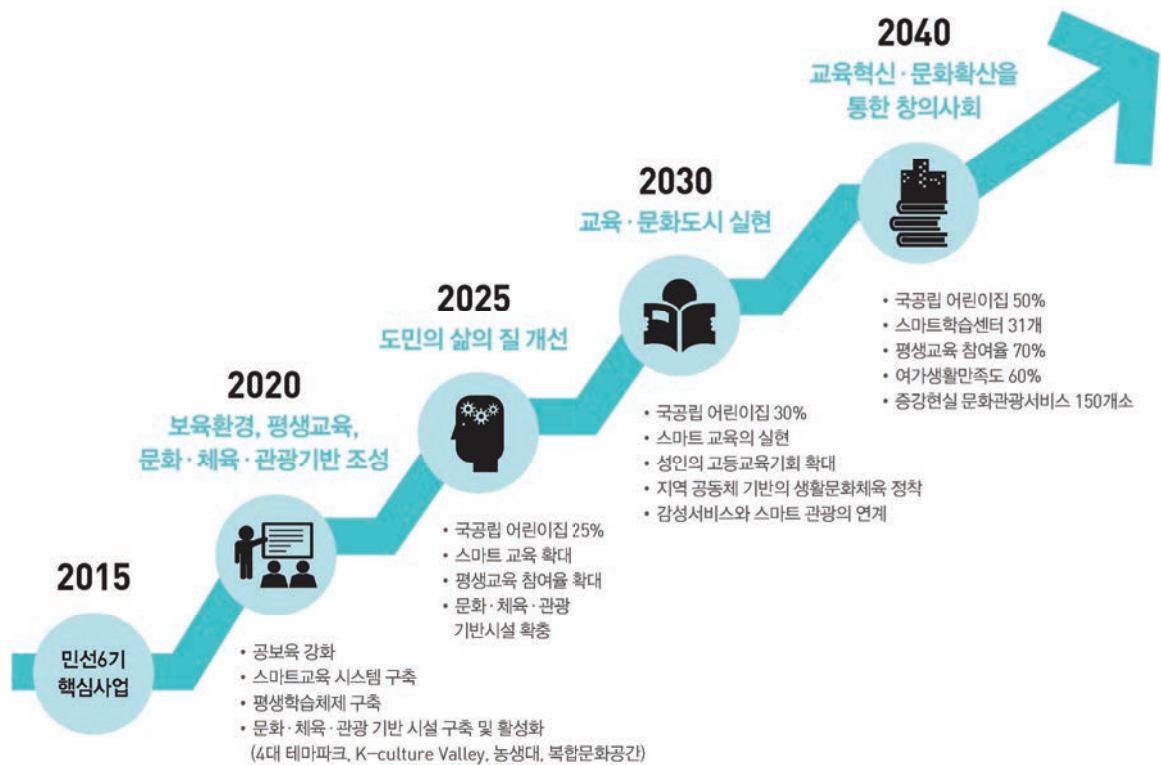
-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교육 부문, 보육 부문, 평생교육 부문 등에서 경기도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됨. 사회 변화가 빠를수록 미래예측은 더 어려워지지만, 그 중요성 역시 증대됨. 긍정적인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 부문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그림 3-3-15] 패러다임 변화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공보육 강화, G-MOOC, 4대 테마파크(창의·인성, 스포츠, 반려동물), K-Culture Valley, 농생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보육환경의 개선과 평생교육 참여율의 확대,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의 공보육 및 G-MOOC 사업과 문화·체육·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10년 후에는 보육환경 개선에 따른 저출산 및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문화·체육·관광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 방문비중 및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2030 변화상) 교육혁신을 위한 공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스마트교육,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30년경에는 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 (2040 비전) 공보육 강화, 스마트교육의 확대,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으로 2040년의 미래비전상은 교육혁신과 문화 확산을 통한 창의사회가 실현될 것임



[그림 3-3-16] 교육·문화·관광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교육·문화·관광을 위한 2040 비전·목표·전략

📖 비전

- “교육혁신·문화확산을 통한 창의사회 실현”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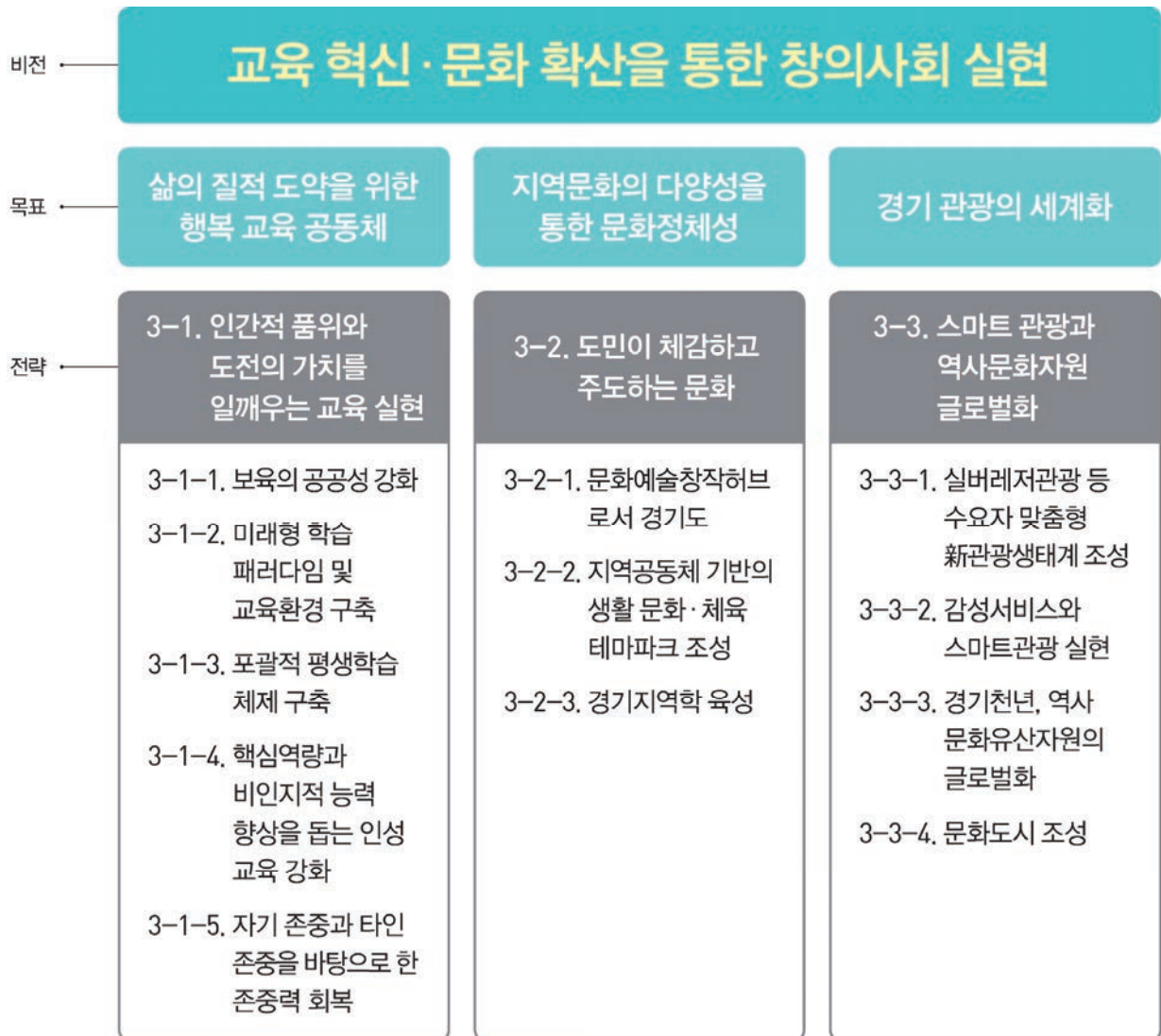
📖 3대 목표

- 삶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복 교육 공동체 /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통한 문화정체성 / 경기관광의 세계화

📖 3대 전략

-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실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5개 아젠다 추진

-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문화예술창작허브로서 경기도,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경기지역학 육성 등 3개 아젠다 추진
- 스마트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 등 4개 아젠다 추진



[그림 3-3-17] 교육 · 문화 · 관광 부문의 비전 · 목표 · 전략

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실현을 위한 지표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평생교육 참여율 등을 선정
-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문화기반시설 수, 여가생활만족도 등을 선정
-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수 등을 선정

미래지표의 설정

[표 3-3-10] 교육 · 문화 · 관광 부문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2014) 4.3	20	25	30	50
	평생교육참여율(%)	(2014) 37	45	50	55	70
	스마트 학습센터(개)	(2014) 0	4(4개 권역별 1개)	8(4개 권역별 2개)	20	31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문화기반시설수(개소/10만 명)	(2013) 3.3	4.0	4.5	5.0	5.5
	여가생활만족도(%)	(2014) 24.6	30	40	50	60
	생활체육참여율(%)	(2014) 0	20	30	40	50
스마트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개소)	(2014) 0	50	70	100	15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건)	(2015) 3	4	4	5	6
	관광숙박시설(실)	(2013) 13,000	41,304	53,508	65,563	81,238

제4절

교육 · 문화 · 관광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3-1]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3-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핵심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확대
- 문화예술 중심의 보육인프라 구축

목표와 지표

- 경기도의 공보육 실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현재 4.3%를 2040년 50%로 확대
-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특히 어린이집의 직접 설치 의무 이행을 90% 이상을 목표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역할확대와 기능보강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률을 70% 이상으로 확대
- 공공키즈카페(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및 운영: 2040년까지 총 300여 개 읍면동에 설치를 목표
- 생태건강 지정 어린이집 비율을 2040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

[표 3-3-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표

구분	2014	2020	2025	2030	2040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	4.3	20	25	30	50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의무 이행률(%)	52.1	70	75	80	90이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률(%)	20	40	50	60	70 이상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및 운영(개소)	30여 개	150여 개	200여 개	250여 개	300여 개
생태건강 지정 어린이집 비율(%)	-	30	40	50	70 이상

추진전략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
 -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적서비스가 시장 지배력을 갖기 위한 최소기준이 30~40% 수준임이며, 이상적으로는 50% 이상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균형 배치 및 보육수요 등의 파악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외에 리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재원부담을 완화
 -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화: 도내 12,000여 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절반을 공영화 할 경우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의 50%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할 수 있음. 민간어린이집 공영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
 - 기존 공공건물 내 유휴공간(학교, 도서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신축 공공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우선 검토 등 관련 조례 개정
 - 직장어린이집과는 별도로 기업의 사회 공헌 어린이집 설치 유도

○ 경기도형 보육 모델의 개발 및 운영

- 체계적이고 강화된 보육품질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또는 종합육아지원센터 내 전담부서 설치
-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파트너십 강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행

-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
- 맞춤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1 산업단지 1 직장어린이집 확보 전략

○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기능 보강
- 영유아 대상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어린이집의 생태건강성 증진 프로그램 추진

- 경기도 어린이집 유해환경 제로(Zero) 프로젝트 실시
-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활성화
- 자연환경의 보육시스템 접목

[3-1-2] 미래형 학습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구축

핵심내용

- 성찰적 학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하이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의 혁신
- 생태·생체 친화적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 구축

목표와 지표

- 생태교육원 조성 및 생태친화형 학교를 2040년까지 60%로 확대
- 생체친화형 교실을 2040년까지 80%로 확대

[표 3-3-12]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지표

구분	2014	2020	2025	2030	2040
경기 '생태교육원' 조성(억 원)	—	2,000	2,000	—	—
생태친화형 학교 보급 비율(%)	—	10	30	40	60
생체친화형 교실 보급 비율(%)	—	20	30	50	80
생체시계 보급(억 원)	—	800	400	300	100

추진전략

- 지역사회 문제해결 학습을 위한 경기 시티즌십 프로젝트 활동
 -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견, 탐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습 활동 전개를 통해 자기주도적, 생활밀접형 학습 실현
 - '팀 혹은 개인 단위의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 그리고 많은 질문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학생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탐구형 학습'을 유도하는 교육 방법들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 문제를 중심으로 융·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문적 체제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삶의 실제 문제 중심의 실용적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므로, 학년·학교 급(초·중·고)에 제한 받지 않는 생활중심의 융통성 있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유도해야 함.

○ 학습환경 및 인프라 개선

- 전자 교과서 및 다양한 매체 활용, 그리고 앞으로 일상화 될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게임기반 수업 도입

- 게임은 학습을 보다 흥미롭게 만들어 주며, 각종 놀이를 통한 교육 콘텐츠는 학습자의 오감을 자극
- 게임에 내재된 요소들로 인하여 교실수업 현장에서도 에듀테인먼트라는 이름하에 게임을 학습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음

○ 시뮬레이션 기반 과학탐구 학습

-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안정성이 높고,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 목적을 위하여 복잡한 학습상황을 조정할 수 있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Alessi & Trollip, 2001).

○ 생체친화적 교육 및 교실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교실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방사능 수치 등 상시 체크 자동제어시스템 도입을 통해 경기도 모든 초·중·고 교실에 에코스쿨시스템(가칭) 도입
- 학생과 교사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최적화된 교실환경 조성

○ 가칭 ‘경기 생태원’(혹은 ‘경기 생태공원’, ‘경기 생태교육원’, ‘경기 에코랜드’) 조성

- ‘국립생태원’을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에 신개념 친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함
- 일본과 독일 등 생태선진국의 기관과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 생태교육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화롭게 연계할 것
- 생태교육 전문가 양성 및 생태(환경) 전문 은퇴자들의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비무장지대 근처, 그린벨트 지역에 ‘생태공원’이나 ‘생태교육원’으로 조성, 활용

[3-1-3]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 핵심내용

-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성인기초교양대학 설치
- 도민의 평생교육참여율 증진을 위한 접근성 강화 및 무상화
- 평생교육 소외계층 제로화를 위한 집중지원 및 현장 방문형 교육
- 스마트학습센터 조성(G-MOOC 시스템 구축 등)

☞ 목표와 지표

-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기회균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2014년 37%인 평생교육참여율을 2040년 70%로 확대
 - 중졸 이하 저학력 성인의 평생교육참여율 2014년 22%, 2040년 70%로 확대
 - 근로자의 평생교육참여율 2014년 20%, 2040년 50%로 확대
- 평생교육기관 확충
 - 2014년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7.5개로 2040년에는 30개로 확충
 - 2014년 평생교육기관 근접거리는 반경 5~10km로서 2040년에는 반경 1km 이내로 확충
 - 평생교육기능 전담 도립대학 신설, 도내 모든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평생교육 전면 무상화, 현재 프로그램 당 3~10만 원, 2040년 전면 무상화
- 스마트학습센터 조성 및 단계적 확대

[표 3-3-13] 평생교육 지표

구분	2014	2020	2025	2030	2040
평생교육참여율(%)	37	45	50	55	70
중졸 이하 저학력 평생교육참여율(%)	22	40	45	50	70
근로자 평생교육참여율(%)	20	30	35	40	50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개)	7.5	10	15	20	30
평생교육기관 근접거리(km)	5~10	3~7	3~3	2~4	1~3
평생교육전담 도립대학 신설	0	0	1	1	2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비중(%)	5	10	20	35	50
평생교육 무상화(만 원)	3~10	2~5	2~3	1~2	0
스마트학습센터(개)	0	4 (4개권역 권역별1개)	8 (4개권역 권역별2개)	2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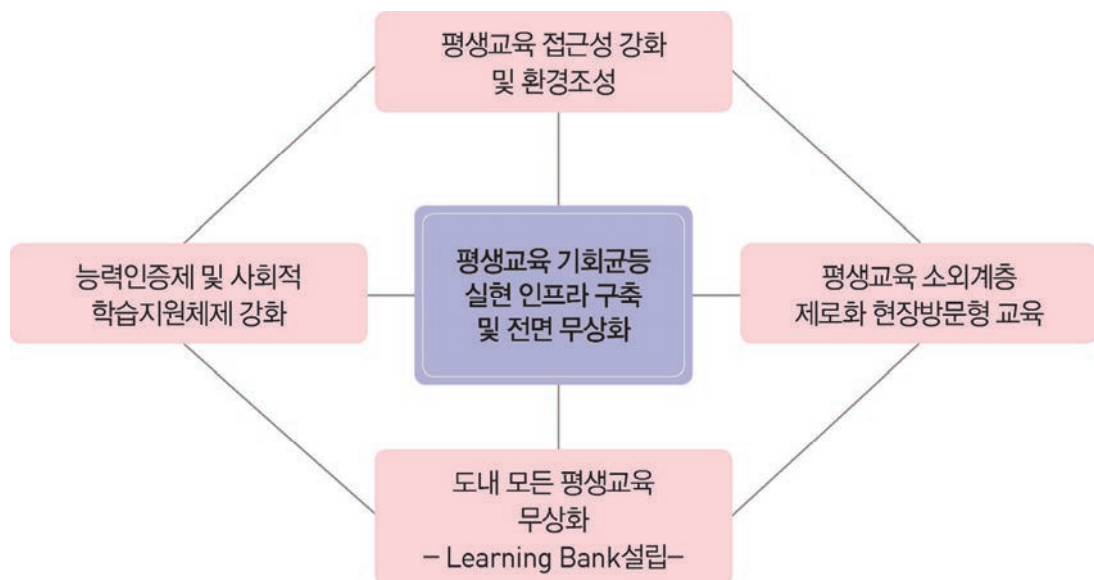
추진전략

-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성인기초교양대학 설치
 - 성인의 고등교육(일반대학, 전문대학) 기회의 확대
 - 성인입학전형 확대, 학생이동 및 편입의 활성화
 -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구조 안에서 계속 교육 및 순환재교육시스템 구축
 - 비 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연동, 비 학위에서 학위로의 전환 확대
 - 대학 교육과정, 학점, 학위, 자격의 연계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 전일제 중심에서 시간제 병행으로의 전환
 - 원격대학과 일반대학의 융합
 - 학점은행제를 폐지하고, 대학 비학위과정 및 시간제등록 안으로 편입
 - 현재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들은 평가를 통해 기존 대학과의 협동과정으로 전환
 -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성인기초교양대학 설치
 - 성인기초교양대학(60학점)을 통한 기초학업수행 능력을 보완하고, 이후 3~4학년 전공과정에 편입
 - 평생교육기능 전담 도립대학 신설 및 도내 대학의 주중, 주말 개방 및 노인평생교육 강화
- 도민의 평생교육참여율 증진을 위한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를 현재 7.5개에서 2040년 30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접근성을 현재보다 4배 이상 확대 및 강화해야 함
 - 도시지역: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 평생교육/학습기관 구축
 - 농어촌지역: 거주지 반경 3km 이내에 평생교육/학습기관 구축
- 스마트학습센터 구축 및 실행
 - 스마트학습센터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여 전체포털개념으로 구축하되, 권역별 또는 시·군별로 오프라인(off-line)상의 멀티미디어 학습지원기능, 혼합(blended)학습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평생 학습센터와 연동 실시
 - 도민의 상시 사이버교육지원, 모바일 학습콘텐츠 제작, 지원, SNS학습의 체계적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이 연계된 혼합학습지원
 - G-MOOC 시스템 구축
 - 방송, IPTV, 모바일, 패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창조학교 콘텐츠를 세계화하는 계획과 지식 프로슈머를 위한 다차원(multi-way)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또한, G-아고라형 토론방 운영, 실생활 중심(교통불편, 생활불편 등) 스마트 지식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cMOOC(xMOOC의 일종인 현재의 G-MOOC에서 발전된 오픈소스) 활성화: 도민 상호 간의 콘텐츠 생성·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cMOOC 강화, 산업현장의 실무콘텐츠,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운영, 산업내 직종별 역량개발, 핵심콘텐츠 연계, 수준별 모듈화콘텐츠 개발, 콘텐츠 제공, 과정운영,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 소외계층 제로화를 위한 집중지원 및 현장 방문형 교육

- 근로자 방문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방문형 평생교육 확대
- 영세자영업자의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강화
- 고령자 대상 평생교육 강화
- 도내 모든 평생교육 무상화
 - 도내 평생교육시설 및 대학 연계 무상화
 - 경기도 내 통용되는 학습 바우처 또는 마일리지부여 발행
 - (가칭) “GL-Account”(경기도 학습-계좌) 브랜드
 - 도내학습계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학습은행(learning bank)설립
 - 경기도 학습은행(G-Learning Bank) 설립
 - 학습계좌/바우처 충전
 - 도내 모든 평생교육시설, 연계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무상 이용
 - 학습 마일리지 제공 등



[그림 3-3-18] 평생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및 전면 무상화 구축전략

[3-1-4] 핵심역량과 비인지적 능력 향상을 돕는 인성교육 강화

핵심내용

- 창의·인성 테마파크 조성
- 세종식 토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생애 단계별 인성함양 체화 프로그램 활성화

목표와 지표

- 회복탄력성(GRIT) 교육프로그램을 2040년까지 50%로 확대
- 프로젝트 시티즌프로그램교육 및 생애단계별 인성교육프로그램 확대
- 양적 평가 위주에서 질적 평가방식으로 평가방법을 개선
- 인성교육 평가방식 및 평가시스템 도입
- 세종식 토론교육 프로그램을 2040년까지 70%로 확대

[표 3-3-14] 인성교육 강화 지표

구분	2014	2020	2025	2030	2040
회복탄력성(GRIT) 교육프로그램 보급 비율(%)	—	10	20	30	50
프로젝트 시티즌프로그램교육 보급 비율(%)	—	50	100	100	100
생애단계별 인성교육프로그램 보급 비율(%)	—	20	35	40	70
양적 평가 위주에서 질적 평가 방식 위주로 평가 방법 개선 비율(%)	—	20	40	80	100
경기도 인성평가 방식 및 시스템 도입 비율(%)	—	30	70	100	100
세종식 토론교육 보급비율(%)	—	10	30	50	70

추진전략

- 창의·인성 테마파크 조성
 - 신규추진: 창의·인성 테마파크
 - 창의·인성 테마파크는 원칙과 기본의 습득을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좋은 시민 양성을 위한 테마파크로 조성
 -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좋은 시민 양성

-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인성교육 체험과 학교의 교과과정 연계를 통해 좋은 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
- 현재의 영어마을을 다용도로 변경 및 활용하여 창의·인성 함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 가능

○ 세종식 토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서양식 “debate”: 토론의 궁극적 가치는 상호이해(역지사지), 배려, 소통능력, 겸손 등과 같은 것을 배워 인격을 도야하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가치에 이르지 못하고, 공격적 언사, 언쟁전략(전술 및 기술)과 말재주 또는 과장된 몸짓이나 제스처와 같은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을 습득하여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만 더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세종식 토론: 토론을 통해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구성원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예) 경연(經筵)
- 경기도와 세종 관련 단체 합동으로 “세종식 토론대회(가칭)” 정례화 추진 필요
- 개별학습에서 팀 기반 문제해결학습으로의 전환

○ 마음근력(또는 회복탄력성) 교육을 위한 교수요원교육 및 현장교육 지원

- 경기도 교육지원청 별로 교수요원 및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간 계획 수립
- 경기도 초·중·고교 전체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교육 실시
- 경기도 관내 학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에 마음근력(또는 회복탄력성) 교육 포함
- 세계 시민으로서 글로벌 문제에 참여하는 기회 확대
- 학교단위 모의UN총회 혹은 모의 국제회의를 조직, 활동하도록 교육 지원 강화

○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의 교육과정 속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일관되게 제시
- 고교 졸업 성인기(대학, 군대, 직장, 사회), 은퇴기, 노년기,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의 중점 사항을 시민교육 및 공동체 교육차원에서 접근
- 지역사회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 제시 기회 및 능력 배양
- 경기도 인성교육 평가 방식 및 평가시스템 도입
- 다문화·다가치 및 공동체교육 강화
-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교육
 - 성취역량 인성검사(GRIT) 및 개인별 교육 대안 제시
 - 학생 유형별 성취 역량 강화 인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결핍감’을 적극 극복할 수 있는 ‘나눔 교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 교육

[3-1-5]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을 바탕으로 한 존중력 회복

핵심내용

- 소통능력 향상의 근간인 자기존중력 및 타인존중력 향상 추구
- 존중력 향상 및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교사 양성
- 존중력 교육 실천학교 선발 및 활성화

목표와 지표

- 존중력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 존중력 교육을 위한 교사 및 교육기간 양성
- 학생들의 존중력 향상 측정도구 개발

[표 3-3-15] 존중력 교육 지표

구분	2014	2020	2025	2030	2040
존중력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추진	타 교재개발 비용 참고 2.5	—	—	—	—
존중력 교육을 위한 교사 및 교육기간 양성 (%)	추진	3	10	25	50
존중력 교육 시범학교 확대(%)	추진	10	25	50	전면시행
학생들의 존중력 향상 측정도구 개발	타 측정도구 개발 예상 비용 참고 0.3	0.3	0.3	0.3	0.3

추진전략

- 존중력 교육을 위한 교사 및 교육기관 양성
 - 각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존중력 향상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 학습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존중력 향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양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
 - 각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
 - 향후 존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전교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전방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 양성
- 존중력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 초, 중, 고등학교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학교 내 존중력 향상 교육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
 -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커리큘럼 구성

○ 존중력 교육교재 및 측정도구 개발

- 국내 존중력 향상을 위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교육 프로그램 및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교재 개발 및 다양화를 촉진
- 각 지역 및 학교별 다양한 존중력 교육 교재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주기적으로 사례 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교육교재에 대한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
- 존중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하여 존중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
-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주기적으로 학생별로 존중력 정도를 측정하고 개별 학생들에게 검사결과를 제공
- 존중력 측정 결과에 따른 맞춤형 존중력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존중력 교육 집중학교 선발 및 실천학교 추진

- 존중력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존중력 교육 집중학교를 선발하고 다양한 존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존중력 교육 집중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례 발표 및 세미나 등을 개최, 인근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기타 학교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양성. 타 학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 확립

[3-2]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3-2-1] 문화예술창작허브로서 경기도

핵심내용

- 서울농생대 부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 문화기반시설을 인구 10만 명당 5.5개 이상으로 확충
- 전문가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인 1% 이상 확보 및 지원확대
- 도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율을 월1회에서 주1회 이상으로 확대

목표와 지표

- 2013년 경기도 문화기반시설 수는 인구 10만 명당 3.3개이며, 2040년까지 5.5개 이상으로 확충
- 현재 경기도 인구에서 문화예술인은 약 0.4%로 추산되며, 2040년 경기도민 대비 약 1% 이상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목표
- 도민들의 문화예술참여율을 월1회에서 주1회 이상으로 확대

[표 3-3-16] 문화예술 지표

목표연도 주요지표	2013	2020	2025	2030	2040
문화기반시설 수* (개소/10만 명)	3.3	4.0	4.5	5.0	5.5
문화예술인(%)	0.4	0.6	0.8	1	1% 이상
문화예술참여율	—	월1회	월2회	월3회	주1회

주: * 문화기반시설 수=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총수/경기도 총인구*100,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 2013

추진전략

- 융복합 문화기반시설 확충
 - 신규추진: 서울농생대 부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대상지: 3개동(농공학관, 농화학관, 임학임산학관)
 - 서울농생대 복합문화공간은 창조공방, 전시공간, 교육공간, 쉼터(카페, 기념품판매점), 상상놀이터 등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2040년 까지 인구 10만 명 당 5.5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의 문화기반 시설 확대
- 지역주민 참여 문화활동 강화
 - 지역 단위의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마을예술창작소 등 다양한 지역 마을 문화기반시설 확충
 - 공원이나 빈터 등 다양한 유휴시설을 문화시설로의 재활용은 창작공간 활용을 넘어 지역재생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접근기회 확대에 기여
 - 순수 예술부문 및 목공, 건축설계 등 다양한 부문이 한 공간에 입주하여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 전문가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인 1% 이상 확보 및 지원 확대
 - 현재 약 5만 명(0.4%)에서 2040년 약 13만 명(약1%) 이상의 문화예술인 확보
 -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 및 지원시스템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인 확보에 기여
 -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 개발
 - 지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공예술가 및 기획자 육성
 - 지역 공간-인력-프로그램을 매칭할 수 있는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국내외 예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 지역 내 물적·인적 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참여율 제고
 - 지역 내 자원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주민센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목공소, 제과점, 커피전문점, 페브릭 공방 등의 지역자원과 함께 실용교과 목 확대 편성
 - 예술가, 퇴직자,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들과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각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교육재 능 나눔 확산
 -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문화예술 참여율을 주1회로 확장하여 일상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3-2-2]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핵심내용

-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의 거점을 조성
- 지역거점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 경기도 여가생활 만족도를 2040년까지 60% 이상으로 확대

목표 및 주요지표

-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
- 2014년 경기도 여가생활 만족도는 24.6%이며, 2040년까지 경기도민 여가생활 만족도를 60% 이상으로 확대
- 2014년 경기도 문화공간 이용률은 51.6%로서 평균 0.21회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90%이상으로 확대. 즉 평균 4회 이상 증가를 목표
- 2040년까지 도민의 주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50%이상 확대

[표 3-3-17] 생활·문화·체육 지표

목표연도 주요지표	2014	2020	2025	2030	2040
여가생활 만족도(%)	24.6	30	40	50	60
문화공간 이용률(%)	51.6	60	70	80	90
생활체육 참여율(%)	—	20	30	40	50
지역거점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개)	—	2	4	6	8

추진전략

- 지역거점 생활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 곤지암 스포츠밸리(246,202㎡),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391,522㎡)
 - 곤지암 스포츠밸리는 야구장, 다목적 구장, 스포츠 산업 아울렛, 벤처타운 등이 융합된 스포츠 커뮤니티로 조성
 -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보호, 리조트형 관광, 연계산업이 융합된 클러스터 조성

○ 세종테마파크 조성

- ‘세종학’ 연구를 통해서 국가경영과 정치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속가능한 한국적 가치의 발전 모델을 제시
- 주요 시설로는 세종인문도시 공간 조성, 문화 교육 시설 건립, 세종학술문화재단 설립 등



[그림 3-3-19] 세종테마파크 구상

○ 생활문화체육 교류프로그램 및 협력체계 구축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 내 생활문화체육 단체 지원사업 및 공간정보 제공
- 토론회, 동호회, 협의회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시·군별 거점축제 활성화(장르별 연합동호회 참여)
-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 공동체 의식 역량 강화

○ 주민 중심형 체육활동시설 확충

- 움직이는 체육관(찾아가는 서비스), 작은 체육관(농·어촌 중심) 조성
- 생활체육지도자 파견을 통한 체육프로그램 365일 제공
- 시·도립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개방하여 시민 참여 유도
- 방과 후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통하여 체육 참여율 확대
- ‘스마트 앱(APP) 서비스’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및 시설 정보 제공
- ‘생활체육 콜센터’를 통한 체육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 제공

[3-2-3] 경기지역학 육성

핵심내용

- 경기지역학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협력 네트워크 체제 구축
- 경기천년 미래상 제시
- 남북관계 개선 및 국제 교류 활성화

목표와 지표

- 21세기 신 실학
 - 경기학은 지역민들의 삶을 위한 학문적 봉사라는 실천적 프로젝트에 동참
 - 경기학은 경기를 장으로 삼아 지역학의 실천적 지향을 확장함
 - 경기학의 실천은 방향 설정 제안에 머물지 않고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산물을 산출하는 실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21세기 신 실학으로 자리매김
- 지역문화 진흥 기반 마련
 - 용인학, 수원학, 화성학 이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학 강좌를 20개 대학 이상에 개설
 - 경기도 내 대학 경기학연구소 10개 설치
 - 경기도 내 경기지역학회와 연계하여 학술지 및 연구서 200권 발간
 -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재구성 및 기구 상설화로 편찬사업 재개
 - 경기학 연구를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재생사업기반 조사 연구
- 통합학문으로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경기학으로 발전
 - 문학, 사학, 철학, 민속학, 종교학, 예술학 등 인문학 부문, 경제학, 지리학, 사회학, 정책학 등 사회과학 부문, 도시학, 조경학, 문화콘텐츠 학 등 복합학 부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공학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 지향
 - 중국 및 북한과의 문화학술 교류추진
 - 경기도, 아시아 및 세계 여러 지역학과 연계한 공동학술대회 등 마련

추진전략

- 연구 및 교육 협력 네트워크 체제 구축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 연구센터를 '경기학 연구소'로 격상
 - 경기학 연구소, 경기학회, 대학내 지역학연구소,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구 및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와 협력하여 시민 경기학자(향토사학자) 양성 학교개설 운영

- 경기학 시민 학습동아리 결성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강사, 교재 등 지원
- 경기천년 미래상 정립 및 경기천년사업 추진
 - 경기 새천년 미래비전 선포 및 경기 천년사업 추진
 - 경기천년 기념 역사문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경기천년 상징조형물 건립 및 유적 복원 정비 등
 - 경기천년 미래비전위원회 조직
 - 경기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강화, 경기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재경기 외국인을 위한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경기학 관련 남북관계 개선 및 국제교류 활성화
 - 남북 실학 학술교류 등 북한과의 문화, 학술 교류 추진
 - DMZ 내 생태보존과 활용 및 평화대학교 설립과 운영
 - 재중 경기인 프로젝트 및 경기학 국제심포지엄
 - 천년 해상 역사문화탐방로를 위한 경기 해상로 개발
 - 실학을 중심으로 한, 중, 일,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 결성 및 교류

[3-3]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3-3-1]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핵심내용

- 관광의 新소비층으로 부상하는 중장년층
- 중장년층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실버관광 프로그램 및 인프라 마련
-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욕구에 따라 점차 관광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융합관광의 가속화

목표와 지표

- 경기도 내 실버관광 전문인력 양성
- 실버관광 및 관련 융합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화관광시설들과 네트워크 구축
- 도내 실버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안내하는 경기도 실버관광센터(가칭) 구축
- 질적 서비스를 위한 실버관광 인증제도 도입

[표 3-3-18] 실버관광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5	2020	2025	2030	2040
경기도 내 실버관광 전문인력(명)	*	25% ↑	35% ↑	50% ↑	100% ↑
중장년층 관광객(명)	*	15% ↑	25% ↑	40% ↑	60% ↑
실버관광 관련 글로벌 문화관광시설 네트워크 구축 (개)	*	20	30	50	100
실버관광 인증 프로그램 및 시설(개, 개소)	*	20	30	50	100

주: * 현시점 개별적 추정 불가

추진전략

- 중장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자원 중 실버관광 환경에 적합한 자원을 위주로 개발
 - 과거의 감성과 가치 향유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라 추억여행 및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자기계발 학습형, 교육 여행 등 상품 개발
 - 액티브 시니어들의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활동, 자원봉사 관광 등 마련
 - 유형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관광 형태 제공

- 예: 증가하고 있는 소그룹/개별관광객을 위한 부티크 호텔관광, 활동에 무리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고령자 전용관광(휠체어 이용), 경제적 여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골프관광 및 장기휴양관광 등
- 중장년층의 신체적 열악함을 고려한 이동 및 편의시설 및 서비스 구축

○ 실버관광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경기도 실버관광센터(가칭) 설립
 - 경기도 실버관광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며, 다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
 - 국내외 다양한 관련 커뮤니티, 문화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 협업하여 경기도 실버관광을 홍보하고 활성화
- 중장년층의 온/오프라인(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노인휴양소 등) 커뮤니티를 통하여, 다양한 실버관광상품을 홍보
- 중장년층을 위한 안내책자/홍보간행물 마련 및 발송
- 복지적 차원에서 실버관광을 위한 보조금 및 할인제 도입 고려

○ 실버관광 전문인력 양성

- 실버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 은퇴 후 활동적이며 근로의욕을 가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도전의 기회 및 '제2의 직업' 제공
- 의료·간호 업계와 협업하여, 중장년층의 관광을 돕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실버관광 관련 융합관광 영역 발굴 프로젝트

- 실버관광과 관련 있는 산업 및 콘텐츠 분석을 통해 융합관광 가능성과 실현성을 타진 후, 적극적으로 추진
 - 의료산업, 미용산업, 식품산업, 한방산업, 의류산업, 교육산업 등
-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밀집하여 한 곳에서 웰빙체험을 할 수 있는 윈스톱 고령친화 복합휴양단지 구축 고려
 - 온천, 사우나, 고령친화 미용(노화방지, 주름개선, 탈모 방지 등) 체험소, 스포츠 및 헬스센터, 웰빙 식품(건강기능 식품 등) 체험소, 간단한 의료 관련시설, 도서관 등이 입주하여, 광범위한 타 산업부문의 서비스·콘텐츠 요소가 관광서비스와 융합하여 제공되는 시설 마련

[3-3-2]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

☞ 핵심내용

- 융합 기술발달로 인하여 관광양식 변화 및 체험의 다양화 등 스마트 관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경기도 1인 스마트(창조)관광기업 혁신사례 지원 확대
- 경기도 내 '3D프린팅센터', '가상현실체험관' 등 조성을 통한 스마트 新체험관광 명소화

📊 목표와 지표

- 스마트관광은 관광산업에서 아직 신생단계인 경우가 많아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관련 데이터가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지표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에는 있어 다소 어려움이 존재

[표 3-3-19] 감성 서비스와 스마트 관광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4	2020	2025	2030	2040
G-창업프로젝트 지원(명)	15	30	40	50	100
'지역 이야기꾼' 발굴(명)	0	50	120	200	300
증강현실 문화관광서비스(개소)	—*	50	70	100	150
'찾아가는 경기도' 가상체험전(개)	0	10	12	15	20
스마트 新체험관광명소(개소)	0	5	7	10	20

주: * 현시점 개별적 추정 불가 및 경기도 내 관련 데이터 전무(소수일거라 예측), 추후 우선적으로 관련 DB 구축 필요

📊 추진전략

- 1인 스마트(창조)관광기업 혁신사례 지원
 - 1인 기업 인큐베이팅 행·재정적 지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의 G-창업프로젝트 사업 확장(2015년 현재 15명 내외 선정, 최대 1,500만 원 창업지원금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스마트(창조)관광기업 창업에 있어 기금과 컨설팅 서비스 등의 지원 강화
 - 지자체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활성화
 - 스마트(창조)관광 혁신아이디어 상품화, 시연 등 상용화를 위한 프로세스 지원
- '지역 이야기꾼' 발굴 및 지원
 - 경기도 '지역 이야기꾼' 발굴 공모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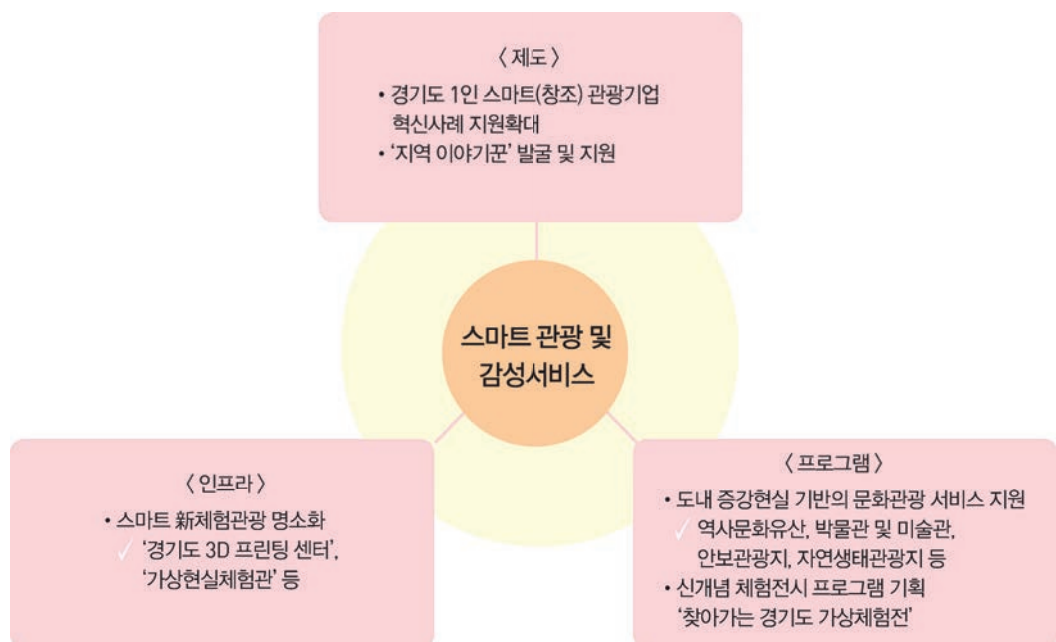
- '지역 이야기꾼'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 '지역 이야기꾼' 브랜드화

○ 증강현실 기반의 문화관광서비스 지원

- (역사문화유산관광지)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 문화유산 관광서비스 구축
- (미술관, 박물관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3D, 4D 형식의 스마트 전시 기획
- (안보관광지) 증강현실을 통해 역사 가상체험 및 대북 가상투어 기회를 제공
- (자연·생태관광지) 경기도 자연·생태관광지 가상체험 프로그램 구축

○ '3D프린팅센터', '가상현실체험관' 등 조성을 통한 스마트 新체험관광 명소화

- 신개념 체험전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경기도 가상체험전' 기획
- 新체험관광으로서 시뮬레이션 관광(과거 재현, 상상 스토리 등)의 현실화 공간 제공
 -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新체험관광지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경기도 내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고, 더불어 관광지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의 경우, 증강현실 및 4D 기술을 활용한 가상체험관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에게 제주 해양생태계를 오감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3D프린터 활용한 관광기념품 제작·생산
 - 3D프린터의 상용화는 관광기념품산업 성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시범적으로 경기도 유명 관광지에 3D프린팅센터를 구축하여, 맞춤형 관광기념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 3-3-20] 감성서비스 및 스마트 관광 지원 강화 추진전략

[3-3-3] 경기천년, 역사문화유산자원의 글로벌화

☞ 핵심내용

- 문화유산의 사회적 · 역사적 가치 증진을 위한 발굴 및 보존관리의 체계화
- 경기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활용방안 다양화
- 경기도 문화유산의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 목표와 지표

- 2015년 경기도 문화재는 997점(국가 · 도 934건, 등록 63건)으로 2040년 30% 증가를 목표
- 2014년 남한산성에 이어 고양 북한산성, 광주 도자유적지, DMZ지역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목표
- 문화유산 안내 및 보호를 위한 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관련 인력 확대
- 해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등 문화재 제자리 찾아주기 활동에 협업하며 꾸준히 역사적 유산의 보호 및 교육 활성화
 - 유출 및 약탈된 경기도의 문화재 현황 파악
 -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협업

[표 3-3-20] 문화유산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5	2020	2025	2030	2040
경기도 문화재(건)	997	1050	1,100	1,200	1,30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건)	3	4	4	5	6
문화유산센터/관리소(개소)	*	10% ↑	15% ↑	25% ↑	35% ↑
문화유산 관련 인력(명)	*	20% ↑	25% ↑	30% ↑	40% ↑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 대상문화재(개소)	532	600	750	900	1,200
‘한 가족 한 문화재’ 인연맺기 사업(가족)	39	70	120	200	500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개소)	13	30	45	60	150

주: * 현시점 개별적 추정 불가

☞ 추진전략

- 정기적인 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와 활용 프로그램 마련
 -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소외된 문화재를 발굴
 - 문화유산 연구, 활용프로그램의 특성화를 통해 박제된 유적지가 아닌 살아 숨쉬는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

- 각 문화재별 특징적인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사회 계층의 관심과 만족 유도
-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문화재 활용에서 탈피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방안” 지역민 아이디어 모집
-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지역민 공감대 유도, 보존과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활용에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유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내 고장 문화유산 알기’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유산 적극 무료 개방 및 할인 서비스
 - 문화재 보호 참여 및 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 경기도 내 다양한 문화재 관련 기관 및 단체들 간 협업 권장
 - 문화예술공간(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 전시시설 등)과 협업한 문화재 알리기 프로젝트 개발
- 경기문화 방문객들의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
 -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 관련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고 문화재에 풍성한 내용을 담아 전파
 - 다양한 언어로 안내 체계 마련,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및 배치 활성화
- 문화유산의 국제 홍보를 통한 해외 관심 유도 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다국어 홍보 추진
 - 경기문화유산 관련 다국어 홈페이지, 앱 개발
 -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경기 각 시·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홍보
 - 경기문화유산 관련 미디어 보도 유도
 - MICE 사업과 협업하여 경기도 문화유산 안내 및 방문을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해외 문화재단과 MOU 체결을 통해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교류 기회 마련

[3-3-4] 문화도시 조성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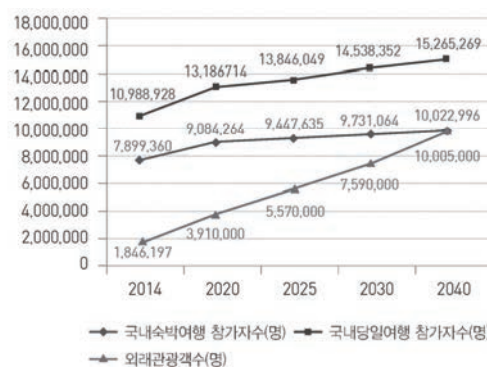
- K-Culture Valley 조성 및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 도시의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개발
-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목표와 지표 설정

- 경기도의 2014년 국내 숙박여행 참가자수는 789만 명(매년 11%성장)이고, 2040년까지 1,002만 명(3% 성장) 유치를 목표
- 경기도의 2014년 국내 당일여행 참가자수는 1,098만 명(매년 13%성장)이고, 2040년까지 1,526만 명(5%성장) 유치를 목표
- 외래관광객의 2014년 경기도 방문비중은 13%(185만 명)으로, 2040년까지 25%(1,000만) 수준으로 높이고, 관광호텔 객실이용률을 현 63%에서 75%(현 서울수준)로 확대

목표연도 주요지표		2014	2020	2025	2030	2040
국내여행 참가자수 (명)	숙박	7,899,360	9,084,264	9,447,635	9,731,064	10,022,996
	당일	10,988,928	13,186,714	13,846,049	14,538,352	15,265,269
외래관광객수 (명)		1,846,197	3,910,000	5,750,000	7,590,000	10,005,000

주: 2020년 전체외래관광객 2,300만 명(현대경제연구원, 2015),
2030년 3,450만 명(50% 증가), 2040년 4,000만 명(16% 증가) 전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4 국민여행 실태조사』,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그림 3-3-21] 국내·외 관광객 목표현황

-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을 2014년 10개에서 2040년 31개 조성을 목표
- 내·외국인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2013년 13,000여 실에서 2040년 8만 1천 실 확보를 목표
- 지역의 대표 역사인물(36명)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2040년까지 각 시·군별 5개 이상 개발하고, 문화·관광부문 인력을 2013년 113,493명에서 2040년 20만 명 수준으로 확충

[표 3-3-21] 문화 및 관광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4	2020	2025	2030	2040
문화예술공간(개소)	10	16	20	23	31
관광숙박시설(실)	13,000 (2013년 기준)	41,304	53,508	65,563	81,238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개)	105	108	126	144	180
문화·관광부문 고용(명)	113,493 (2013년 기준)	140,000	155,000	170,000	200,000

주: 관광숙박시설=((국내숙박여행참가자수×호텔이용률(75%)÷365)×(체재일수(1.8일)÷객실당투숙인원(2인)))
 +(외래관광객수×호텔이용률(75%)÷365)×(체재일수(6.1일)÷객실당 투숙인원(2인)))

추진전략

○ K-Culture Valley 조성

- 한류콘텐츠의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이 연계된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조성
- 대규모 공연장, 숙박 및 상업시설, 콘텐츠 파크 등이 연계된 랜드마크로 육성
- 주변 인프라(킨텍스, 일산 호수공원 등)에 대한 연계방안 구축
-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그림 3-3-22] K-Culture Valley 조성 기본전략

○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 경기도 내 유희공간 및 시설을 문화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
- 국내·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관광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의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개발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시관광 프로그램으로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 구축
 -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으로 도시의 역사성과 특징을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관광 프로그램 개발
- 경기도 각 시·군의 대표 역사인물을 선정 후 OSMU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미진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대표 역사인물 당 5개 이상의 문화콘텐츠를 확보
-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축제 및 이벤트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관광과 융·복합된 문화콘텐츠 창출
- 지역 주민에게는 지속적인 문화향유 기회 제공, 경기도 방문객에게는 체류형 관광의 장소로서 문화도시의 이미지 구축

○ 휴먼웨어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문화관광 네트워크 구축
-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조성
- 문화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 경기도 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로 문화를 접목한 도시관광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 확충
 -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을 담당할 효율적인 인력양성 환경 구축 및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를 통한 역량 강화



[그림 3-3-23] 휴먼웨어 인프라 구축 기본전략

제 4 장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비전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 형성

목표

도시경쟁력 높이기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인본주의적 도-농 공동체 실현

전략

4-1. 경쟁력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4-2.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 조성

4-3. 생활도시·공공주거의 강화



제1절

공간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인구 증가와 인구 이동) 경기도 인구의 순증시대 지속과 인구이동구조 변화

- 인구 피크는 수도권이 2030년 2,669만 명, 경기도는 2033년 1,346만 명으로 전망되어 수도권과 경기도의 인구 보너스도 소멸하게 되고, 소비와 주택 수요도 정점에 도달
 - 수도권 인구는 1970년 이래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유입되었지만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처음으로 8천 명이 순유출
 - 수도권과 경기도가 지난 50년 동안 도시화, 광역화 단계의 급격한 인구 성장 시대에서 인구 안정화 혹은 인구 유출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구조변화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냄
- 수도권의 인구이동은 중심도시인 서울시로부터 대도시권 주변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거점도시 및 중소형 교외도시들을 향하는 이동구조가 특징
- 경기도는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어 2022년경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2029년경에 초고령사회(20% 상회)로 진입할 전망

[표 3-4-1] 경기도 인구 및 연령별 구조 전망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노인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2010	11,379,459(100.0)	999,763(8.8)	2,035,020(17.9)	8,344,676(73.3)
2015	12,220,718(100.0)	1,278,939(10.5)	1,915,026(15.6)	9,026,753(73.9)
2020	12,702,844(100.0)	1,620,509(12.8)	1,838,152(14.4)	9,244,183(72.8)
2025	13,031,604(100.0)	2,186,863(16.8)	1,731,100(13.3)	9,113,641(69.9)
2030	13,198,865(100.0)	2,831,979(21.5)	1,667,722(12.6)	8,699,164(65.9)

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 및 당시 출산율을 토대로 각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계함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내부 추계 자료

(구도심, 구시가지 쇠퇴) 일부 도시와 중소도시는 쇠퇴현상 나타남

- 인구가 계속 성장해온 수도권에서도 일부 서울 도심 및 강북지역과 경기도 구도심 및 중소도시에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현상이 보임
 - (전)건설교통부 국가재생사업단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쇠퇴현상분석(2010)에서 성남, 고양, 부천, 시흥, 평택, 군포, 오산, 하남시는 비록 성장도시이지만, 구시가지가 쇠퇴한 것으로 나타남
 - 김포는 구시가지와 주변부의 면지역들이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안산, 광명, 의정부, 의왕, 구리는 안정-정체된 도시로서 구시가지가 쇠퇴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표 3-4-2] 도시재생사업단(2010)의 도시규모별 쇠퇴 유형 분석 결과

도시전체	도시내부	유형	대상 도시 (인구규모)						도시수
			100만미만	80-100만	40-80만	20-40만	10-20만	10만미만	
성장 도시	구시가지 쇠퇴	A-1 형	서울	성남, 고양, 부천	창원	시흥, 평택, 군포	오산, 하남		11
	구시가지와 주변부의 면들이 쇠퇴	A-2 형	수원		용인, 남양주, 천안, 김해, 안양	구미, 아산	거제, 김포		10
	주변부 면들이 쇠퇴	A-3 형				화성, 파주, 광주	이천		
안정 / 정체 도시	구시가지 쇠퇴	B-1 형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포항, 안산, 청주, 전주	광명, 의정부, 제주	의왕, 구리, 진해		16
	구시가지와 주변부의 면들이 쇠퇴	B-2 형				순천, 진주, 경주, 강릉, 원주, 경산, 춘천	사천, 안성, 서산, 광양, 통영	태백	13
	주변부 면들이 쇠퇴	B-3 형				양산	양주, 포천	보령	4
쇠퇴 도시	구시가지 쇠퇴	C-1 형			마산	목포, 군산		속초, 동두천, 동해, 서귀포	7
	구시가지와 주변부의 면들이 쇠퇴	C-2 형				익산, 여수, 충주	정읍, 공주, 밀양, 논산, 김천, 안동, 영주	나주, 남원	12
	주변부 면들이 쇠퇴	C-3 형					상주, 제천, 영천	삼척, 김제, 문경	6

자료: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1-1. 도시쇠퇴 실태자료 구축”

- 쇠퇴현상은 도시뿐 아니라 인접한 지역 전체가 동반해서 쇠퇴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남

🏠 (주택 유형) 아파트 건설의 지속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중 확대

- 아파트는 중산층의 생활을 담는 편리한 주택이자, 자산 가치를 늘려주는 투자재적인 성격이 한층 부각되면서 2010년에는 59.0%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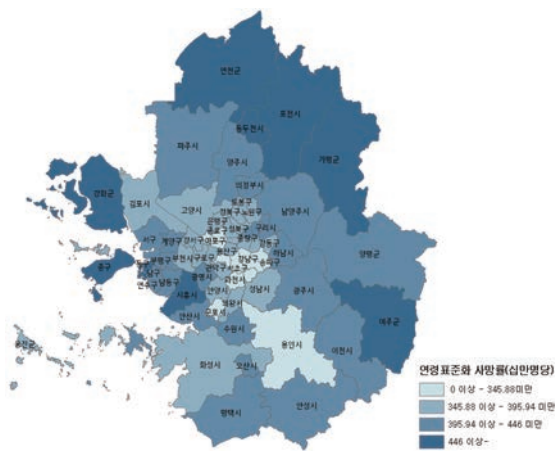
[표 3-4-3] 지역별 주택유형비율 추세

구분	주택유형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경기도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독주택	73.1	55.1	32.5	23.8	18.8	15.5
	아파트	14.5	26.1	45.7	56.6	62.9	68.3
	연립주택	8.9	12.0	12.9	11.8	5.5	4.6
	다세대주택	0.0	4.0	5.8	5.2	11.7	10.8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3.4	2.8	3.1	2.7	1.1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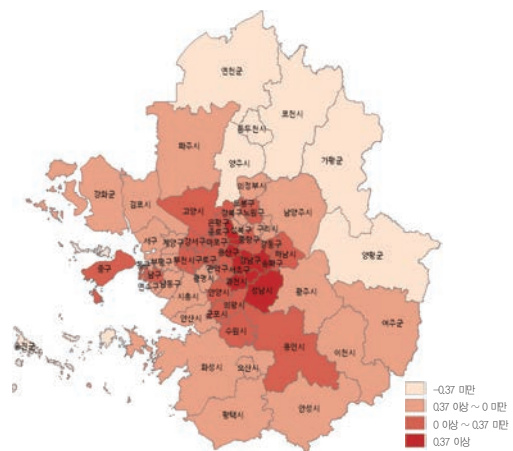
-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은 285,415호이고, 이는 경기도 주택재고의 5% 수준임
-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율은 40%에 달함

(저발전 낙후지역) 저발전 낙후지역과 삶의 질 열악한 지역은 중복지역

- 경기도 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은 경기북부지역과 한강 팔당호 주변 동부지역이며,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분석 결과는 낙후지역과 삶의 질이 열악한 지역이 같은 지역임을 나타냄
-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사망률과 건강도시 지수가 대표 지표인데,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은 삶의 질이 낮게 나옴
 - 수도권 내 시·군·구별로 표준화된 사망률 분석 및 건강장수도시 지표분석 결과, 동부지역인 양주, 포천,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남



[그림 3-4-1] 표준화된 사망률



[그림 3-4-2] 건강도시 지수

주: 범례에서 구간은 표준편차로 구분

자료: 이상대 외(2012), 100세 시대: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앤진단 제63호

(도시품격과 디자인) 품격 없는 도시건축물

-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그동안 양적 공급 위주의 건축도시 건설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건축도시 조형미와 건축문화의 형성을 담아내지 못하였음
- 아울러 한류 등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발맞추는 건축환경과 건축문화를 내·외국인에게 보여주지도 못하였음

〈가로의 간판〉



〈도시 내 건축물〉



[그림 3-4-3] 간판 및 도시건축물

🏠 (도시공동체와 도시문화) 시민 없는 도시, 공동체 없는 공간

- 사람보다 부동산 가치가 중시된 개발시대에서 도시개발은 자본이익 실현의 토대, 즉 재테크의 수단 가치가 중시되어 옴. 향후 도시개발과 관리는 교환가치에 더하여 사용가치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점점 증대할 것임
- 앞으로 사람이 살면서, 일하면서 필요에 의해 나머지 공간을 만들어가는 열려 있는 도시 만들기 방식이 필요
 - 도시 건축물의 물리적 공간과 함께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과 공동체적 가치가 점점 중요해져서 도시공간을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
 - 도시공간 디자인과 조성은 미리 만들어져 사람이 공간에 적응하는 방식에서 공간이 사람에 맞춰 변화하는 방식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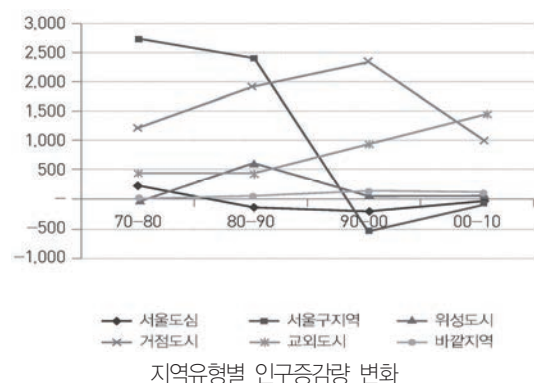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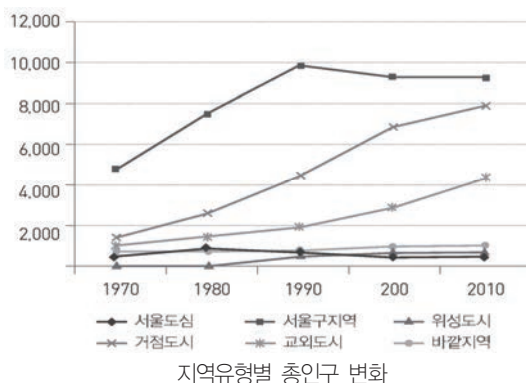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1. 공간 차원의 트렌드와 전망

(광역화 도시화의 추세) 수도권 교외화·광역화는 진정단계로 진행

- 2034년 경기도 인구피크 도달과 2029년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경기도 도시개발수요를 견인했던 교외 광역화 추세가 진정
 - 서울시 바깥인 수도권 외부도시권의 인구는 지속적인 인구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도시권 주변 지역인 외곽지역은 인구증가가 완만히 이뤄지고 있음
- 주요 고속도로 및 철도 축을 따라 교외 확장추세는 계속 진행
 - 인구와 지역경제의 성장과 활동권의 광역화, KTX 등 초고속교통망 발달, 충청권과 강원권 그리고 개성공단의 성장으로 교통축을 따라서 수도권의 기능적 영역이 확대
- ‘절대적 분산 단계의 교외화’가 진행 중이며, 2030년대 초에는 교외확장이 멈출 것임
 - 대도시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중심부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절대적 분산 단계의 교외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구피크기 도달과 공간소비를 위한 투자액이 피크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
 -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를 진단하기 위해 전체 지역을 서울 도심 3구, 도심 제외 구, 서울인접 위성도시, 거점도시, 교외도시, 대도시권 주변지역 등 6개 지역으로 구분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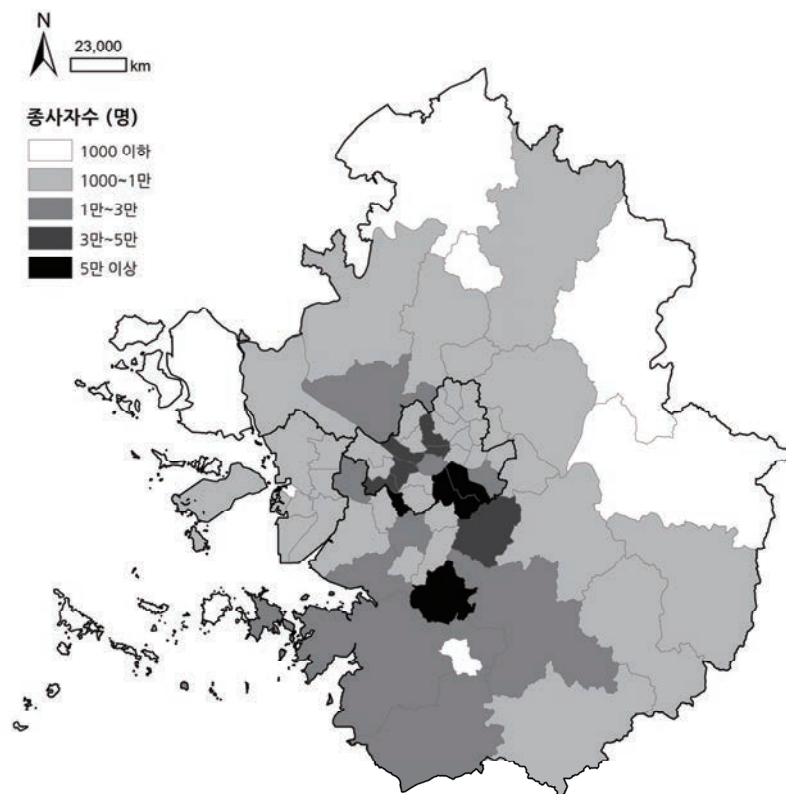
자료: 이상대 외(2013),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 pp.48-49

[그림 3-4-4] 지역유형별 인구 변화

27)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를 진단하기 위해 전체 지역을 서울 도심 3구, 도심 제외 구, 서울인접 위성도시, 거점도시, 교외도시, 대도시권 주변지역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권 공간적 발전모델로 분석하였음. Berg and Classen의 대도시권 공간적 발전 모델로 분석한 결과. 이상대 외(2013),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 pp.47-48 참조.

(도시쇠퇴 현상) 대도시 내 구도심과 중소도시의 쇠퇴 가속화

- 최근의 도시쇠퇴 현상은 물리적 장소의 쇠퇴가 아닌 사람과 경제의 쇠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복합 쇠퇴’ 현상
- 수도권과 경기도 내 도시라 하더라도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약한 도시는 쇠퇴 불가피
 - 도시의 미래는 산업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있는데, 첨단지식산업에 속하는 창조산업²⁸⁾ 업종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시·군·구별 집적도를 분석한 결과, 창조산업 종사자들은 경기도의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용인, 화성 등에 집중
 - 세종시와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 귀농귀촌 인구의 유출로 경기도 도시라 하더라도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약한 도시는 쇠퇴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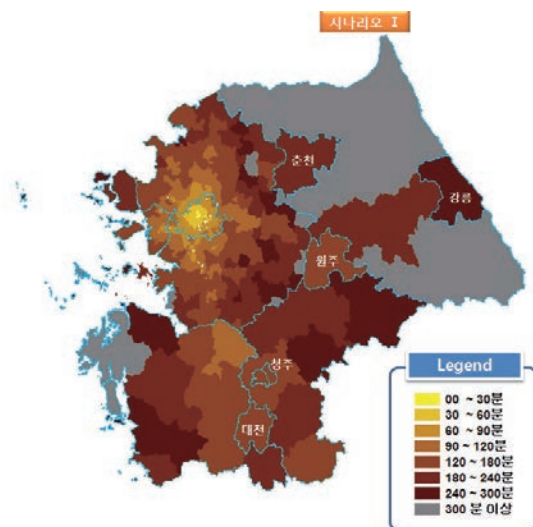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국토연구원 박경현 연구팀이 제공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자료: 이상대(2014.7), "도시경쟁력과 창조도시,"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앤진단, p.9

[그림 3-4-5] 수도권의 시·군·구별 창조산업 종사자수의 집적 현황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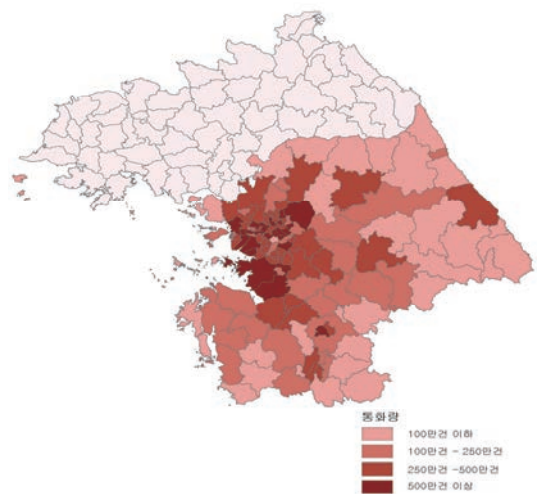
28) 창조산업을 ① 문화적 장소 산업 ② 시각예술산업 ③ 행위예술산업 ④ 출판 및 인쇄업 ⑥ 오디오 비주얼산업 ⑦ 디자인산업 ⑧ 뉴미디어산업 ⑧ 창조 서비스산업 ⑨ ICT 통신서비스산업 ⑩ ICT 디바이스 산업등 10가지로 분류하였음.

(교통 변화와 교통축 지역의 성장) 고속교통 확산과 자율주행 등 신교통수단의 성장

- 도 내 주요 거점도시들 간에 KTX, GTX, 스마트 하이웨이 등 초고속교통수단으로 연결되어 도시 간 접근성이 대폭 확대
 - KTX 역이 있는 광명역, 동탄역 주변 택지지구, GTX 역 주변 주택지구가 주택개발과 도시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됨
- 자율주행, 전기, 수소 자동차 등 새로운 자동차가 상용화되어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변화가 시작됨
 - 자율주행 · 전기차 · 연료전지차의 상용화로 교통시간, 교통비용, 교통 피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장거리 통근의 어려움이 개선
- 수도권의 기능적 영역 확대로 수도권과 인근 충청, 강원, 개성공단과의 2시간 통행권 형성
 - 현재 및 계획된 도로, 철도 노선이 개통된다는 가정 하에 서울시청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천안, 대전, 청주 등의 경부축과 원주 등 영동고속도로축은 2시간 이내 도달하여 2시간 통행권이 형성



[그림 3-4-6] 2020 서울시청 출발 도착시간 분포



[그림 3-4-7] 전화 통화량

(성장하는 미래공간) 과학기술도시, 스마트 도시의 확산

-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여 판교테크노밸리 등에 스마트 도시공간이 실재화하는 단계로 진입
 - 현재 과학기술산업이 밀집해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구리 월드 디자인센터 등은 스마트도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음
- 과학기술거점은 고층 고밀화와 초고층빌딩 건설이 증가
 - 과학기술거점과 고층화 · 복합화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아파트 문화와 전월세 구조) 아파트의 비중은 계속 유지되고, 월세 시대가 본격 도래

- 아파트의 상대적인 인기와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한 선호조사결과에서는 아파트로의 이사를 희망하는 응답이 61.3%이며, 특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87.4%가 다시 아파트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일반 단독주택거주자도 30.7%가 아파트로의 이사를 희망

[표 3-4-4] 경기도 이사 희망 주택유형

구분			이사 희망 주택유형 (단위: 가구, %)									
			전체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현 재 거 주 주 택 유 형	전체	빈도	763,052	70,089	81,003	0	467,996	50,333	41,962	0	40,102	11,567
		(%)	100	9.2	10.6	—	61.3	6.6	5.5	—	5.3	1.5
	다가구 단독주택	빈도	174,591	10,674	72,428	0	69,283	7,728	7,863	0	3,272	3,343
		(%)	100	6.1	41.5	—	39.7	4.4	4.5	—	1.9	1.9
	영업겸용 단독주택	빈도	13,247	7,262	2,884	0	1,869	0	0	0	0	1,232
		(%)	100	54.8	21.8	—	14.1	—	—	—	—	9.3
	기타	빈도	3,203	0	0	0	581	2,623	0	0	0	0
		(%)	100	—	—	—	18.1	81.9	—	—	—	—
	연립주택	빈도	54,816	7,847	0	0	25,593	14,782	3,956	0	1,275	1,363
		(%)	100	14.3	—	—	46.7	27.0	7.2	—	2.3	2.5
	오피스텔	빈도	59,208	9,139	0	0	20,617	0	0	0	29,452	0
		(%)	100	15.4	—	—	34.8	—	—	—	49.7	—
	다세대 주택	빈도	67,753	6,385	1,779	0	26,582	6,078	25,582	0	837	508
		(%)	100	9.4	2.6	—	39.2	9.0	37.8	—	1.2	0.8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빈도	3,523	0	944	0	857	0	1,722	0	0	0
		(%)	100	—	26.8	—	24.3	—	48.9	—	—	—
	일반단독주 택	빈도	26,925	14,024	0	0	8,260	4,641	0	0	0	0
		(%)	100	52.1	—	—	30.7	17.2	—	—	—	—
	아파트	빈도	359,787	14,757	2,969	0	314,355	14,480	2,838	0	5,267	5,121
		(%)	100	4.1	0.8	—	87.4	4.0	0.8	—	1.5	1.4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누리(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국토교통부나 경기도 주택당국의 대략적인 공유점임
- 전세 제도는 소멸 과정을 걷게 되고,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주류로 등장

2. 2040년의 공간 부문 중장기 과제

경기도 도시들의 도시경쟁력 제고

- 도내 대도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들은 인구 규모에 비해 도시기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시경쟁력 선도역할 결여
 -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인구 100만 도시는 국제교류시설, 세계수준 대학, 국제공항 등 도시경쟁력 우위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기도 도시들은 매우 낮은 수준
- 정부가 창조경제 전략을 추진 중이나 창조도시 전략 등으로 공간화되지 못하고 있음
 - 창조시범도시, 건강시범도시, 안전시범도시 조성
- 도시 내 산업 및 일자리 거점의 조성 및 문화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 내 일자리, 문화경쟁력 제고가 필요

구도심, 구시가지의 쇠퇴를 반전시킬 도시재생 추진

- 인구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국토의 전반적 지역쇠퇴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구도심, 구시가지, 중소도시 지역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 물리적 쇠퇴 뿐만 아니라 도시경제, 도시공동체의 침체를 극복할 일체적 도시재생전략이 필요
- 경기도 도시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중심도시 회귀(regeneration, reurbanization)에 대한 대응이 중요
 - 경기도 도시의 자체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
 - 교외형 신개발사업은 축소하고, 기존 도심이나 중심시가지 내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됨

고령사회에 대응한 컴팩트 공간구조와 공공시설의 노인이용 편의도 증진

- 노령인구의 증가에 발맞추어 노인친화적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할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기법 적용이 요구됨
- 새로운 주거양식, 소프트한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도심형 주거시설, 실버타운의 확대가 필요
- 저출산을 극복할 출산친화, 여성편의적 생활인프라 확충이 중요

과학기술발달에 부응하고, 미래 도시문화를 수용하는 미래 도시건축물 건설

- 사물인터넷(IoT),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과학기술 상용화에 따른 공간 대응이 필요
- 경기도 도시들도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도시에너지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데 플랫폼을 제공
- 도시가 단순히 일하고, 먹는 공간만이 아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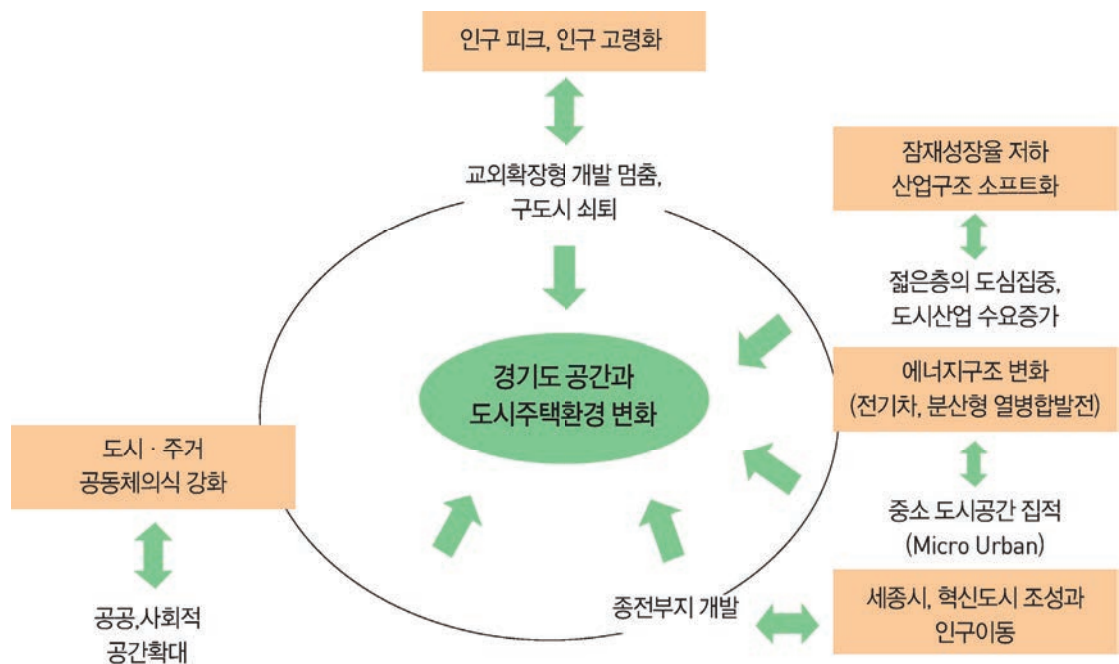
인본주의에 기반한 공동체 도시계획 실현

- 장소와 건물 중심의 도시에서 시민이 중심적 가치를 가지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도시계획을 실천
-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복지인프라, 문화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조성

3. 공간 변화의 주요 동인

중장기 공간 전망과 미래공간 형성의 동인들

- 앞서 살펴본 중장기 공간변화 전망을 토대로 미래공간 형성의 영향변수를 추출
 - 광역화 도시화의 추세인 수도권 교외화·광역화의 진정단계로 진행, 도시쇠퇴 현상인 대도시 내 구도심과 중소도시의 쇠퇴가 가속화, 교통 변화와 교통축 지역의 성장인 고속교통 확산과 자율주행 등 신교통수단의 성장, 성장하는 미래공간으로서 과학기술도시 및 스마트도시의 확산, 아파트 문화와 전월세 구조 측면의 아파트의 비중 계속 유지와 함께, 월세 시대의 본격 도래 등은 미래공간 형성의 주요 동인(driving forces)들로 해석 가능
- 공간 변화의 주요 동인들
 - 인구이동과 인구고령화
 - 저성장기조의 정착
 - 전기차, 분산형 에너지 구조 등 구조 변화
 - 세종시,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유출과 귀농귀촌현상



[그림 3-4-8] 미래공간 형성의 영향변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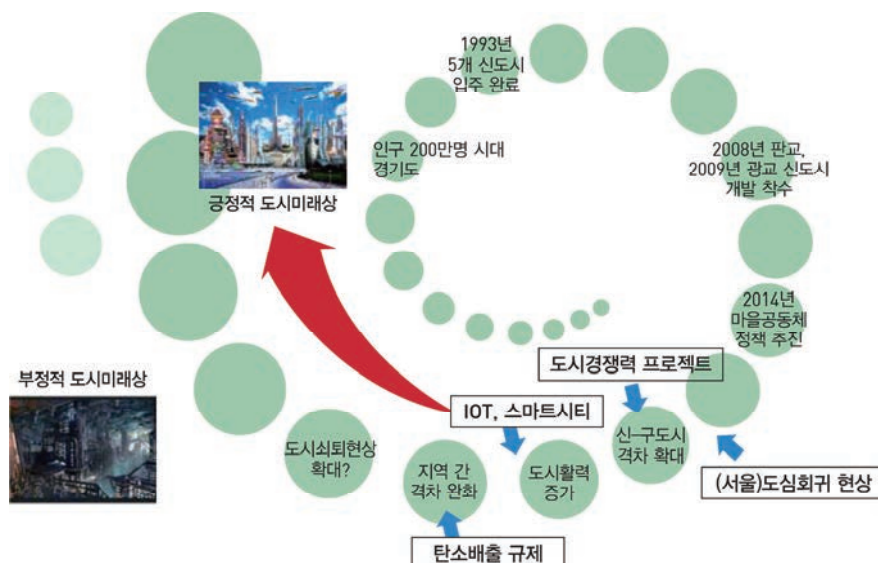
4. 경기도 공간의 미래변화 시나리오

경로의존성과 미래변화

- 과거 경기도 공간을 결정지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1990년 전후의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1980년대의 KTX 건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판교 및 광교 테크노밸리 조성 등은 경기도 도시공간 확장의 경로의존성 공간구조를 형성
- 향후 경기도 공간의 미래는 이전의 철도 및 도로 건설이나 신도시 건설 보다는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상용화와 테크노밸리 등 일자리 거점 개발, 탄소배출 규제 등 환경요인이 큰 작용을 하게 될 것임

공간 측면의 미래변화 시나리오

- 수요 수용형 공간전략과 미래 시나리오
 - 개발수요가 진정되어 시가지 외부 확산추세는 꺾이며, 구도심·구시가지지를 중심으로 경제가 쇠락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이른바 “복합 쇠퇴” 현상이 경기도 도시들에서도 나타남
- 공간 창출형 공간전략과 미래 시나리오
 -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도시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어 구도심과 구시가지내 역세권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남
 -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어 상가와 문화시설의 경기가 살아나고, 외국인 이주자들도 증가하여 다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음



[그림 3-4-9] 경기도 공간의 미래변화 시나리오

- 이러한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경기도 도시들은 긍정적인 미래상과 부정적인 미래상의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
 - 긍정적 도시 미래상을 가져올 긍정적 변화 시나리오를 지향하는 비전 수립

〈긍정적인 도시 미래상〉



〈비관적인 도시 미래상〉



자료: (좌) Novi magazin 홈페이지(<http://www.novimagazin.rs/opusteno/buducnost-dizajna-u-proslosti>)
 (우) “모두의 동방프로젝트”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anemia/23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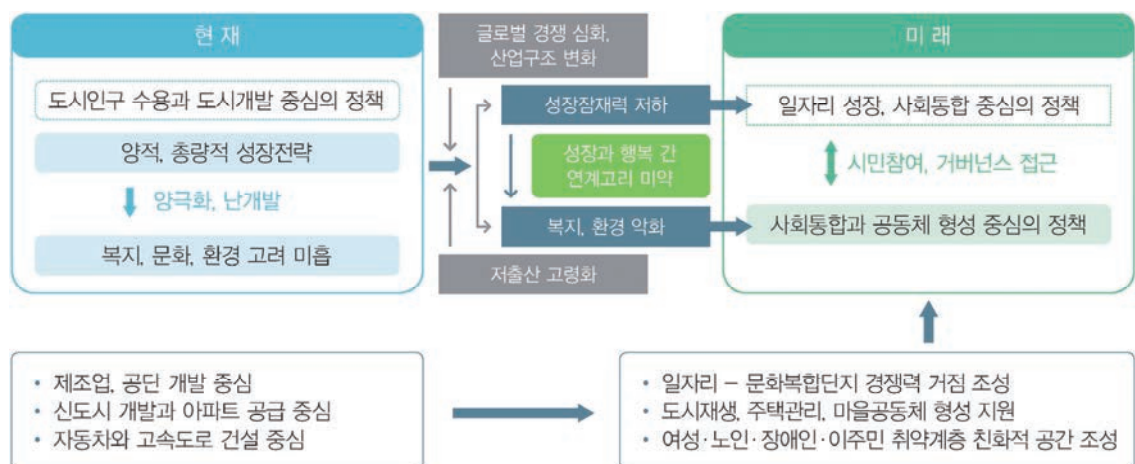
[그림 3-4-10] 긍정적인 도시미래상과 비관적인 도시미래상

제3절

공간 비전과 전략

1. 공간 패러다임의 전환

- 저성장 안정성장시대의 도시개발과 관리전략을 추진
 - 개발시대 도시의 양적 성장에서 저성장 안정성장시대 진입에 따라 개발수요가 점점 축소,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기반에 맞는 도시개발과 관리전략이 요구됨
-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정책을 추진
 - 물적, 경제적 공간 중심의 도시주택정책과 피로도 증가
 - 인본주의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도시 만들기 전략이 요구됨
- 도시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을 구현하는 과학기술 도시의 조성
 - 20세기 도시문명과 전통기술인 철도, 도로, 자동차 기반의 도시공간을 탈피
 - 초연결사회와 사물인터넷 범용화를 활용하는 도시공간구조와 인프라 조성
-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주택공간 구현
 - 자연공간을 파괴하고, 잠식하는 도시개발을 지양
 -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주택공간 조성
 -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도시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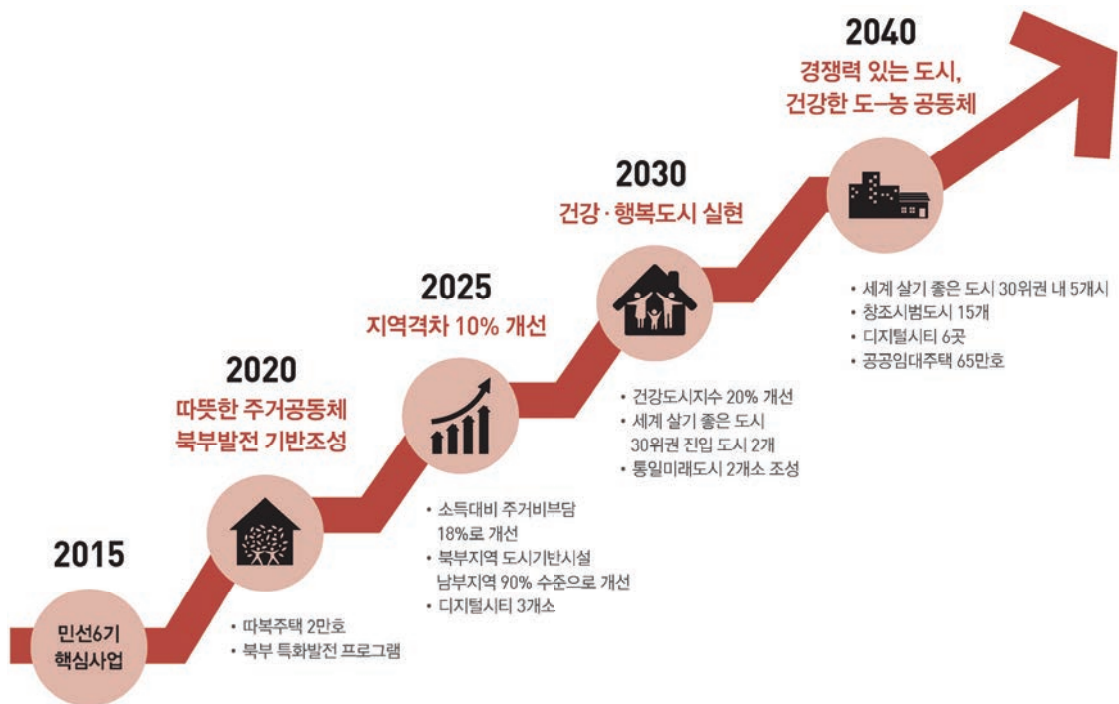


[그림 3-4-11]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과 미래비전 설정

민선6기 핵심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변화상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따복주택·기숙사 공급, 동북부 오디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따뜻한 주거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북부 균형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의 주거복지사업과 북부10개년 계획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10년 후에는 지역격차가 완화되고, 북부지역의 소득과 도시기반시설 수준도 경기남부지역의 90% 선까지 올라갈 것임
- (2030 변화상)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도시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추진, 저출산 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장수건강시범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30년경에는 경기도 도시들이 건강장수도시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도-농 격차도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 (2040 미래상) 주거복지 강화, 지역격차 감소, 통일미래도시 건설,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2040년의 미래상은 도시경쟁력이 확보되고,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임



[그림 3-4-12] 공간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경기도 공간을 위한 2040 비전·목표·전략

🏠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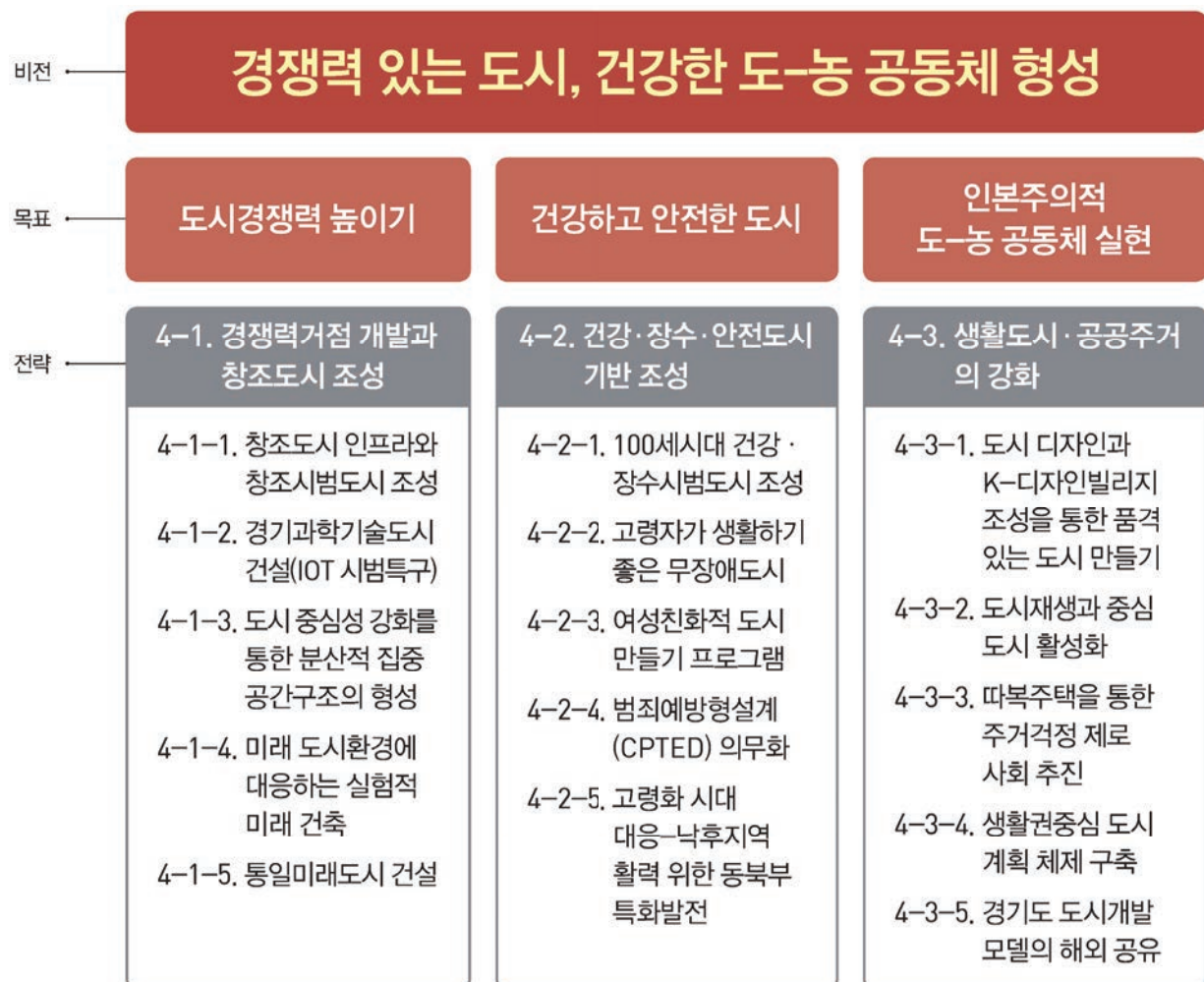
- “경쟁력 있는 도시, 건강한 도-농 공동체”로 설정

🏠 3대 목표

- 도시경쟁력 높이기 /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 인본주의 도-농 공동체 실현

🏠 3대 전략

- (도시경쟁력 전략) 도시경쟁력 거점의 개발과 창조도시를 조성하는 전략
- (건강·장수·안전도시 전략)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
- (생활과 주거 전략) 생활도시와 공공주거 강화 전략



[그림 3-4-13] 공간 부문 비전·목표·전략

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도시경쟁력 높이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디지털시티 지정 수, 세계 살기 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수 등을 선정
-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서 건강도시지수를 선정
- 인본주의 도-농공동체 실현 목표를 달성할 지표로서 인구 천인당 주택수, 공공임대주택호수, 주거비 부담(RIR, rent income ratio) 등을 선정

미래지표의 설정

[표 3-4-5] 공간 부문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경쟁력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창조시범도시 조성 수(곳)	(2015) 0	2	8	10	15
	디지털시티 수(곳)	(2015) 1	2	3	4	6
	세계 살기좋은 도시 30위권 진입 도시수(개)	(2015) 0	0	0	2	5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 조성	건강도시지수	(2009) -0.152	0.0000*	0.2350**	0.5000	0.8164***
생활도시·공공주거의 강화	인구 천인당 주택수(호)	(2010) 337	370	375	400	420
	공공임대주택수(천 호)	(2014) 285	350	400	525	650
	주거비 부담(RIR, %)	(2010) 25	20	18	17	15

주: * 2012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 ** 서울시 구 평균, *** 강남, 서초, 송파구 평균 수준을 의미

제4절

공간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4-1] 경쟁력 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4-1-1] 창조도시 인프라와 창조시범도시 조성

☞ 핵심내용

-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기능과 시설이 필요
- 창조산업 육성 및 창조계급 유입 전략 도입
- 창조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내 창조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조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함

🏠 목표와 지표

- 창조산업의 비중 확대
 - 경기도 종사자수 기준 창조산업의 비중을 2010년 7.0%에서 2040년 13.0% 수준으로 제고
 - 경기도 총사업체수 기준 창조산업의 비중을 2010년 2.7%에서 2040년 10.0% 수준으로 제고
- 창조시범도시 지정
 - 홍대거리, 가로수길, 분당의 정자동 카페촌과 같이 창조계급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개방적 환경과 시설을 조성
 - 공모 사업을 통해 창조시범도시를 지정하여 2040년까지 15개의 창조도시를 조성

[표 3-4-6] 창조도시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0	2020	2025	2030	2040
창조산업 비중 (종사자수 기준)	7.0%	9.0%		11.0%	13.0%
창조산업 비중 (사업체수 기준)	2.7%	4.0%		7.0%	10.0%
창조시범도시 조성	—	2		10	15

추진전략

○ 경기도 창조도시지수 분석 발표 및 창조도시 인프라 확충

- 창조경제 실현과 창조도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국가 및 도 차원의 지역자원 조사·발굴과 (가칭) ‘창조도시 추진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
- 경기도 도시들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 획득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창조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고, 창조성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창조도시 육성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이전 종전부지 등에 창조산업 유치를 위한 (가칭)‘창조산업 육성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입주기업 및 창업자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치법규를 제정
- 추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미군반환공여지,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 KTX·GTX 역세권 개발지 등 (예: 군포역 주변 공업지역 등) 가능
- 민선6기 공약인 7대 특성화벨트 전략을 창조산업과 창조도시 발전전략과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가능

[표 3-4-7] 창조산업 허브 개념을 통한 창조도시 육성 전략

창조도시	허브	연계지구	주요 창조산업
수원 ICT산업 허브	수원	성남, 용인, 화성, 평택, 안성	ICT 통신서비스, ICT 디바이스 산업
성남 뉴미디어·게임산업 허브	성남	안양, 과천, 광주, 고양	뉴미디어, 오디오 비주얼, ICT 통신서비스산업
고양 미디어산업 허브	고양	파주, 부천, 성남, 김포	미디어, 행위예술, 출판 인쇄산업
부천 오디오비주얼산업 허브	부천	성남, 부천, 성남, 안양	오디오 비주얼, 디자인산업
안양 창조서비스산업 허브	안양	성남, 용인, 화성, 고양, 의정부, 남양주	창조 서비스산업
파주 출판·인쇄산업 허브	파주	고양, 김포	출판 및 인쇄산업
여주 시각예술산업 허브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시각예술산업(도자기산업 등)

자료: 이상대(2014.7), “도시경쟁력과 창조도시,”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앤진단, p.22

○ (가칭) 창조도시 시범사업 추진

- 창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산업이나 시설의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시·군 여건에 맞는 창조산업 육성 및 창조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 경기도는 매 2년 내지 4년마다 창조혁신도시(유형: 문화도시형, ICT 도시형, 도시디자인형 중 선택)를 지정하고, 지원체제를 구축
- 쇠퇴하는 구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활용도가 낮은 공장, 창고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의 ‘마을만들기’식 창조도시 인프라 확충사업도 추진

[4-1-3] 도시 중심성 강화를 통한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의 형성

핵심내용

- 경기도 도시지역 공간의 중심성과 기능 제고를 위해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를 형성
- 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이동 필요성을 줄이고, 교통에너지 사용 수준을 줄이는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 형성을 지향
- 글로벌 경쟁력의 메가경제권, 생활인프라 확보의 생활도시권의 이차원적 공간구조 형성

목표와 지표

- 대도시권 주변부 성격을 탈피하여 경기도 대도시들은 도시거점으로서의 중심 기능과 고차원적 역할 수행을 높임
- 대도시권 경쟁력과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수용하는 공간구조 형성
- 경기도민의 평균적 통근통행, 업무통행, 쇼핑통행의 시간과 거리를 2030년까지 20% 축소

추진전략

- 교통시간과 교통에너지를 줄이는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 형성
 - “다중심 거점화와 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전략 추진: 서울 중심의 집중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주요 성장축 상에 생산, 소비, 생활거점을 형성시켜 공간구조의 다중심화를 지향하고, 권역별 광역생활권을 형성
 - KTX, GTX와 광역철도 중심의 역세권 공간구조로 전환: KTX, GTX, 광역철도의 입체적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 밀도를 높이고(compact city), 스마트오피스 건설 등으로 직주근접을 지향
 - 전 지구적 환경 보호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 지구적 환경 보호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VKT(vehicle km travel)를 10% 줄이고, 탄소배출량을 10% 줄이는 등 도시의 환경성, 지속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광역생활권을 형성시킴
 - 경기도 도시체계를 ‘8광역거점 - 8전략거점 - 17지역거점’으로 재구조화

[표 3-4-8]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 형성전략 추진

구 분	내 용
중심지 체계	8광역거점 - 8전략거점 - 17지역거점
거점	8광역거점: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 8전략거점: 용인, 안양, 오산·동탄, 화성남양, 김포, 파주문산, 의정부, 이천 17지역거점: 안성,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하남, 파주, 여주, 안중, 구리, 광주, 동두천, 가평, 양평, 포천, 연천
발 전 축	- 경부축 (성남~수원~평택~(천안)) - 서해안축 (광명~안산~화성~평택항~(서산·당진)) - 경의축 (고양~파주~(개성)) - 경원축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원산)) - 경춘축 (구리~남양주~가평~(춘천)) - 동부내륙축 1축 (남양주~양평~여주~(원주)), 동부내륙 2축 (성남~광주~0 천~(충주)) - 북부동서축 (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가평) - 남부동서축 (안산~수원~용인~이천) - 남부축 (안중~평택~안성) - 경인비즈니스축((서울)~부천~(인천))
공간구조 전략	“다중심화 전략과 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 전략” 추진 ‘서울의 주변’을 탈피하여 “초광역권의 활동중심 지역”으로 역할 전환 - 성장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 형성 전략 - GTX, 광역·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완성과 TOD 역세권 개발 5+2 광역경제권 충청권, 강원권, 개성권과 연계 강화

자료: 경기도(2012),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p.69

○ 메가경제권과 생활도시권의 이차원적 공간구조 형성

- 대도시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1,350만 명 도민이 살기 편한 도시-농촌 생활권을 형성하는 이차원적 공간구조 형성을 지향
- 생활도시권 형성과 직주 균형 달성으로 생활도시권 내 통근거리, 시간, 비용을 저감하고 지역성을 강화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콤팩트한 도시공간구조로 모든 계층의 주거생활의 편의성을 증진
- 충청, 강원, 개성황해권과의 연계축 강화를 위해 충청, 강원, 황해도 지역까지 대중교통 1시간 통행권 형성. 경기-충남 서해안 철도, 충청권 전철망(천안-세종-대전-청주)을 건설하여 메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을 형성시키고, 경기-평창축, 경기-경춘축, 경기-금강산축 등 3대 여가체육관광 벨리를 형성
- 서울-과천-세종시-대전 국가중추행정축의 효율성을 제고

[4-1-4] 미래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실험적 미래건축

핵심내용

- 미래의 환경, 인구, 재난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실험적 건축대안
- 기술개발에 따른 실험적 건축대안
- 도농복합 생태도시 및 컨테이너 임시주택 실험사업 제안

목표와 지표

- 건축물 탄소저감 효과분석 지표 및 인센티브
 - 전국 산업의 30%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지표설정을 위해서 건축물의 냉난방을 중심으로 한 전력사용량뿐 아니라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 부문의 탄소저감을 위한 지표도 함께 설정되어 평가되어야 함
- 친환경 도시평가 및 시상제도
 - 녹색성장위원회 생생도시는 2009년에 도입되어 매년 평가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리브컴어워즈(Livecom Awards) 환경도시 응모지원, 공무원 해외연수, 개인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²⁹⁾
 - 경기도 자체적으로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적 생태도시와 친환경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해가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경기도 자체적인 친환경 도시평가제도를 개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

추진전략

- 신소재 및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반성장형 창조적 건축산업 클러스터 육성
 - 건설산업, 건축디자인산업, 소재산업, IT산업, 화학 및 환경산업 등의 기업 인재들이 상호 교류하고 지식 연계를 통한 융합적 건축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
 - 미래의 건축 산업을 변화시킬 큰 매개체로 각광을 받는 핵심기술을 지원하고 독립적인 자본으로 기술개발이 불가능한 경기도 내 건설 관련 지역 소규모 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융합 부문 협력형 설계 및 건설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

29) 국토교통부 도시대상은 2001년에 도입되어 매년 평가되고 있으며, 지역특성화 발전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정책사업 공모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또한 환경부 그린시티는 2002년에 도입되어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고, 환경관리 계획 및 투자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원.

○ 도농혼합형 생태도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례들에서 친환경 디자인, 식량부족에 대응하는 수직농장, 실버세대를 위한 커뮤니티 등의 컨셉들이 도시와 농촌을 혼합한 생태도시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국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농업의 커뮤니티 및 근대시기 이후 농업이 융성했던 경기도의 특성상 도농혼합형 생태도시 건설은 장기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
- 경기도의 지리적, 지형적, 커뮤니티적 특성을 분석하여 생태도시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지역의 인구구성에 맞는 차별화된 도농혼합형 생태도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함
-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버타운 계획을 위하여 도농혼합형 및 무장애(barrier-free) 디자인이 적용된 시범단지 공모 사업을 지원

○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주거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 컨테이너 하우스 기술은 현재에도 각광받고 있으나 미래에는 대규모의 슬럼도시를 저렴하고 시공성이 높은 컨테이너 하우스로 대체하는 계획안들이 나타남
- 경기도 내 컨테이너 하우스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업체들과의 혁신산업 아이টে으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주거 설계 기술개발을 지원
- 북한과 인접해있는 적정 지역을 물색하여 갑작스런 북한의 도발 및 재난에 따른 대량 난민 발생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주거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함

○ 경기도 '지역혁신 건축디자인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건축의 산업 생태계를 활용하여 지역의 개성 있는 독창적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공모,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 및 컨설팅, 에너지 저감형 실험적 녹색건축지원 등이 가능한 '지역혁신 건축디자인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
- 미래지향적 건축설계를 위한 디자인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4-1-5] 통일미래도시 건설

핵심내용

-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고, 저발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 필요
-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는 ‘점(點)-선(線)-면(面)의 전략’ 추진
- 통일미래도시 건설의 선제적 추진과 대상지 제안

목표와 지표

- 통일 후 남북한 접경지역은 서울-평양-원산 간 대삼각(大三角)의 중심을 형성하는 소삼각(小三角)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통일미래도시 건설,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경제통합을 견인하고, 통일수도권의 공간구조 형성
 - (정치) 통일보다는 경제통합·사회통합·지역개발로 접근하는 전략을 추진
 - 5.24 조치 해제와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 환경의 개선에 좌우되는 경제특구 조성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통일미래도시 조성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는 전략을 추진
- 2030년까지 통일미래도시 2개소를 조성

추진전략

-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으로 ‘점(點)-선(線)-면(面)의 전략’ 추진과 경원축 종합개발 추진
 - ‘점(點)의 전략’: 남한의 통일경제특구와 통일미래도시,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특구, 남북한 공동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 ‘선(線)의 전략’: 위의 특구의 네트워크 추진, 남북한 공동 임진강수자원 종합개발, 경원선 철도연결, 금강산선 철도 복원
 - ‘면(面)의 전략’: 남한 접경지역과 북한 여행금지지역을 아예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하여 남북한 전체의 경제통합 전 공동번영 거점으로 개발
 - 서울-동두천-철원-원산 축을 정주, 산업, 교통물류, 관광 벨트화하는 종합개발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사업화 방안 추진
- 남북한 경제통합시대 핵심거점으로 통일미래도시 건설
 - 남북한 관계 정상화, 통일경제특구법의 국회 통과 이전이라도 미리 비전을 구상하고, 현행 개발법을 활용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미리 착수 가능
 - 통일미래도시는 단순한 경제특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개성-평양, 서울-원산 축 상에서 광역도시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권 공간구조 설계작업임을 확실히 하여 접근해야 함

- 건설 대상지역으로는 파주문산지역, 동두천 미군반환공여지 등을 검토. 제1안으로는 남북한 연결 통로인 파주문산지역에 남북교류협력도시 기능으로 순차적으로 건설
- 제2안으로 동두천 미군반환기지를 활용하여 생명과학휴양 복합도시 기능으로 건설. 전체 반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환공여지에 국유지의 30년 임대를 통해 바이오제약, 안전용품, 휴양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음



[그림 3-4-15]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도시거점과 통일미래도시 건설 제안

[4-2]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 조성

[4-2-1] 100세 건강·장수시범도시 조성

핵심내용

-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위한 사회적 투자 필요
- 100세 시대에 대응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장수도시 환경 조성이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지름길

목표와 지표

- 부동산 개발과 교환가치 중심의 경기도 도시들을 건강하고, 장수하는 생활 도시로 개선
- 지역맞춤형 건강장수도시 10개 지정
 -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정기적으로 건강장수도시를 지정하고, 시책사업비 지원

추진전략

- 경기도 건강장수도시 추진을 위한 6대 과제 추진
 - 질병은 노동력 상실과 이웃과 친지간 교류를 감소시켜 노인 행복을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노인 건강관리와 예방의 지역사회 보건의체계 구축은 삶의 질 개선 정책의 핵심
 - 노인 건강비용 지출을 도시환경이라는 사회적, 공공적 인프라 투자로 연결시켜 안정적인 내수 진작책으로 발전시킬 필요
 - ‘경기도 노인의 건강장수에 대한 조사’ 결과, 경기도 노인이 건강에 쓰는 돈은 현재 연간 1조 원이며, 2020년에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1년 더 장수한다면, 연간 152만 원 씩 총 연간 1조 4,653억 원을 기꺼이 지출할 용의
 - 금연 등 보건소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형 사업에서 더 나아가 건강장수도시 환경개선 시책프로그램으로 추진
 - 경기도 건강장수도시 추진을 위한 6대 과제 추진 제안

■ 과제 1. 경기도 내 6개 도립병원의 노인건강 u-헬스 케어 체계 구축

- 도시가 아닌 지역인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함과 함께 투자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u-헬스 기술을 활용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도립병원의 u-헬스 시스템을 통해 원격진료하고 그 결과는 보건소에 전달되어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
- 보건소는 지역사회 환자를 발굴하여 u-헬스 시스템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u-헬스를 통한 쌍방향 보건의료체계 구축

■ 과제 2. 도 및 시·군의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수립 시 건강장수도시 개념 적용 의무화

- 건강장수도시 시책 및 사업 방식의 반영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 예산 자원과 연계

■ 과제 3. 건강장수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사업 추진

- 의(醫)—직(職)—주(住) 복합타운 조성, 건강주택 공급 등을 담는 시·군 공모사업 추진
- 사업예산 지원

■ 과제 4. (가칭) ‘도립 장수연구소’ 건립

- 또는 국가에 (가칭) ‘국립노화방지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 내 (일본국립장수과학연구소 사례 참조)

■ 과제 5. 경기도에 건강장수도시를 총괄 추진하는 조직 신설

- 건강장수도시 정책을 총괄기획하고, 추진 내지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

■ 과제 6. 건강장수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법률 정비 추진

- 건강장수도시 관련 시책이나 사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조례 제정 (도의회 협력)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건강장수도시 지정 및 지원

- 수원, 성남, 고양시 등은 대도시가 가진 종합병원 등 보건의료 인프라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공간시설 개선형 사업을 추진
- 화성, 부천시 등 건강 헬스 연관 산업이 발달하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건강산업 혁신형 사업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로 활용
- 양평, 여주, 연천군 등 농촌지역에서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활용한 u-헬스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일본 고베시의 ‘행복촌’

출처 : 푸르메재단홈페이지(<http://www.purme.org/>)



노인 및 장애인 이동수단의 진화

출처 : 환경건강기업스마클홈페이지(<http://smacle.co.kr/>)

[그림 3-4-16] 건강·장수도시 인프라의 구축

[4-2-2] 고령자가 생활하기 좋은 무장애도시 조성

핵심내용

- 고령자의 활동중심지역에 무장애 공원 인증 및 편의시설 확충
- 고령자 주택의 건설 확대
- 노인편의 증진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 및 노인관련 정보전달체계 개선

목표와 지표

-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소공원(220개소), 근린공원(718개소) 등 도시공원이 약 3,000개소에 이르며, 이 공원을 선별하여 진입 주요 구간에 무장애 원리를 적용
- 도시공원의 약 5%를 대상으로 무장애 원리를 적용하여 개선하고 무장애 공원에 대한 인증 추진
- 노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편의시설 중 약 650개소를 선별적으로 무장애 원리를 적용

추진전략

- 고령자의 활동중심지역에 무장애 공원 인증 및 편의시설 확충
 - 무장애 공원 개선 및 인증: 고령자의 이용가능성이 높고 접근성이 양호한 공원을 선정하여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개선하고 무장애 인증을 획득함
 - 노인집중지역 및 편의시설에 무장애 방법으로 개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집중지역이나 많이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접근 장애물이나 장애구간을 조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를 적용하여 개선함
- 고령자 주택의 건설 확대
 - 취약계층의 고령자 자택 이동동선 개량
 - 소득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거동이 불편이 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택의 내부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가택 내 이동동선을 기준으로 계단, 문턱,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개량
- 노인편의 증진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 및 노인관련 정보전달체계 개선
 - 고령자 이동편의 개선 앱 개발 및 보급: 고령자가 산책, 운동, 공원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민원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앱을 개발하고 보급
 - 인터넷에서 노인 관련 각종 정보, 홍보사항 오디오북 제작: 노인관련 각종 정보, 홍보사항 등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고 보급하며, 노인 관련 인터넷사이트와 정보 음성매체화

[4-2-3] 여성친화적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핵심내용

- 여성·가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강화
- 지역정책추진에 여성의 참여활성화

목표와 지표

- 경기도의 여성친화도시는 2014년 9개 시·군에서 단계별로 2030년까지는 31개 시·군 모두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표 3-4-9] 2014년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구분	계	'09 지정	'10 지정	'11 지정	'12 지정	'13 지정	'14 지정
전체	57	2	8	20	9	11	7
경기	9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주) 여성친화도시 중 가족친화인증 받은 지자체는 밑줄로 표시

- 2030년 이후에도 경기도 내 여성친화도시는 단기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화형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발전체계 구축

추진전략

- 여성·가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도시계획과 개발, 공원조성 등 도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요구를 파악, 여성·가족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
 - 일·돌봄·문화여가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간 인프라 조성
 - 지역 내 돌봄 인프라 확충

[표 3-4-10] 여성친화 공간조성 사업표

영역		사업 구성(예)
단위 시설	신규 공간 설치	공 종합센터, 각종 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 각종 체험학습관(자연 체험, 웰빙, 향토음식, 다문화체험 등), 여성센터, 범죄예방형 원룸주택 등
	단위 시설 출산양육지원	각종 공공기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수유실 등 여성편의시설, 임신부전용 관람구역 지정, 공공시설(체육) 유모차 대여 서비스 등
	시장	전통시장 고객 안심 쉼터, 수유 및 놀이시설, 여성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	여성 여성편의시설과 가족시설 등 공원 정비사업, 숲길 조성, 소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
	주차장 및 화장실	여성배려·여성친화 등 공공기관 주차장 구축선 폭과 넓이 확장, 각종 화장실 시설 개선
구역 단위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운동시설, 휴게 공간 등의 섀티드 디자인 적용, 공동밥상이나 마을돌봄센터 만들기
	도심재생	각종 공공디자인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마을정비 및 종합개발 사업
	지구단위 계획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보육중심거리, 여성특화거리 조성계획
이동	이동 안전	골목 지킴이 집, 안심택시 및 안심귀가 알림이, 어린이 안심구역 확대, 보행환경 개선(보도 단차제거, 보도 개선), 공개(폐가)정비 등
	특화 거리 조성	각종 '걷고 싶은 길' 사업에서 경관 개선, 보행여건 개선, 근대여성역사거리 조성

자료: 최유진 외 2인,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사업 발전 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정책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증대로 매년 지정 도시가 확대되어 지역 여성정책 활성화 및 여성친화적 관점 도시조성 확산에 기여
-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공간관련 사업부서, 지역 여성과 전문가 간의 상호 이해와 조율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

○ 여성친화적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여성 참여 프로그램 강화

- 공간조성 사업은 구체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공간 전문가 그룹이 직접 설계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공간 개선의 현실적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또는 협의체, 시민참여단 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기구 구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
- 지역 여성 요구와 행정활동의 연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시민참여단, 행정의 안전 모니터링 사업에 근거하여 지역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죄예방형설계(CPTED)를 적용한 학교 주변 통행로 확보와 공원 개선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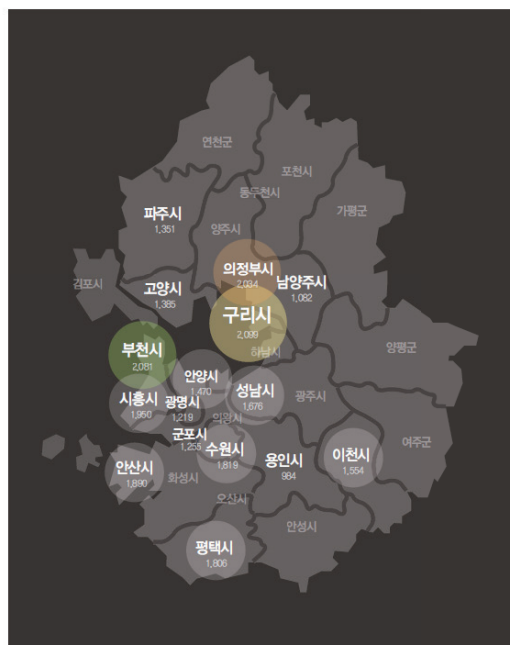
[4-2-4] 범죄예방형설계(CPTED) 의무화

핵심내용

- 지역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형설계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지속적인 범죄예방형설계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 확립
- 하드웨어적 설계와 함께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활성화
- 민·관·학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범죄예방형설계 사업 추진

목표와 지표

- 경기도 범죄예방형설계 평가기준과 지침에 따라 범죄예방형설계 인증제 도입
- 범죄예방설계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형설계 관련 범죄건수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 범죄예방형설계 기법 및 방범시설 설치 후 교통사고 40%, 범죄율 20% 감소
 - 범죄예방형설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범죄불안감 30% 감소



① 전체 범죄건수

순위	지역	발생건수
1	평택	4,695
2	시흥	4,418
3	안산	3,833
4	구리	3,828
5	부천	3,827
6	의정부	3,759
7	수원	3,527
8	이천	3,441
9	파주	3,372
10	성남	3,164
11	안양	2,979
12	고양	2,965
13	남양주	2,481
14	군포	2,395
15	광명	2,332
16	용인	2,230

② CPTED관련 범죄건수

-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폭력)

순위	지역	발생건수
1	구리	2,099
2	부천	2,081
3	의정부	2,034
4	시흥	1,950
5	안산	1,890
6	수원	1,819
7	평택	1,803
8	성남	1,676
9	이천	1,554
10	안양	1,470
11	고양	1,385
12	파주	1,385
13	군포	1,255
14	광명	1,219
15	남양주	1,082
16	용인	984

※31개 시군 중 자료분석 가능한 16개 지역에 한함

10만명당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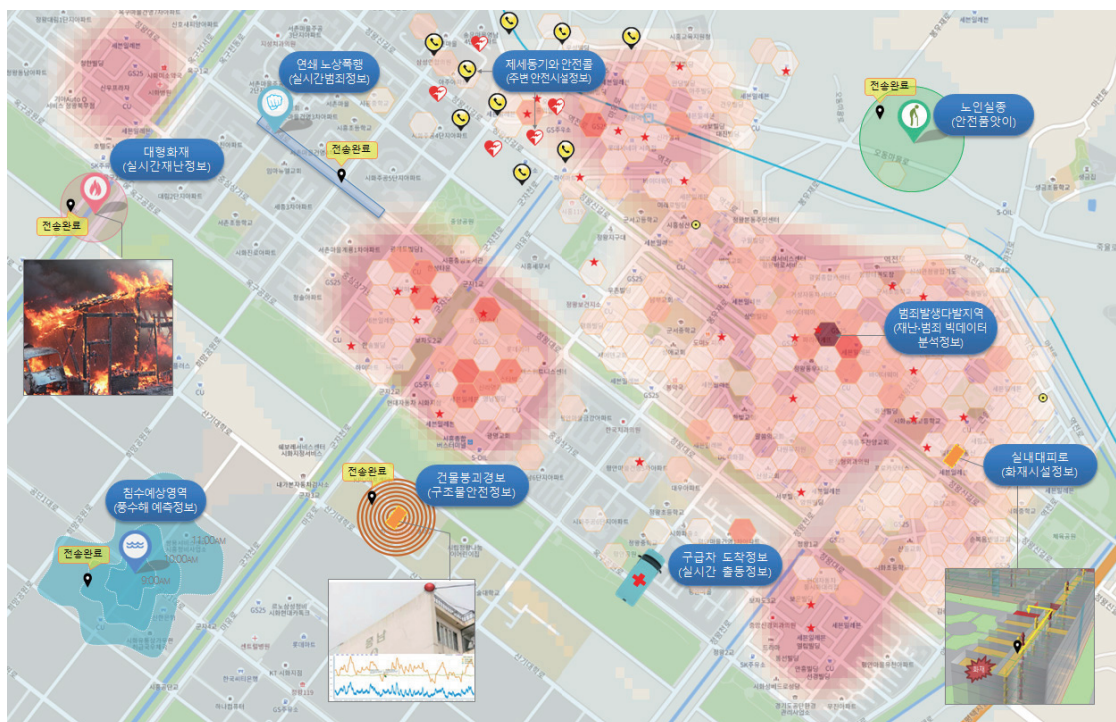
자료: 유한옥, 도시 안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성과 발표자료, 2013.11, 한국세테드 학회

[그림 3-4-17] 경기도 범죄 발생지와 전체 범죄 및 범죄예방형설계 관련 범죄 건수

추진전략

○ 재난안전센터 설치(안전대동여지도 추진)

- 안전대동여지도 개념정립 및 도민용 안전서비스 설계: 9개 카테고리의 안전 레이어 및 16개 종류의 서비스 설계,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재난발생 알림
- 시스템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안전대동여지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반 요건 구축 추진
- 재난안전정보 민간활용협약체 출범('15. 10. 27, 카카오 / 현대엠엔소프트 / 엠아이웍스 / SK플래닛)과 관계기관 MOU 체결('15.11월 중 경기지방경찰청, 국토지리정보원, (사)커뮤니티 매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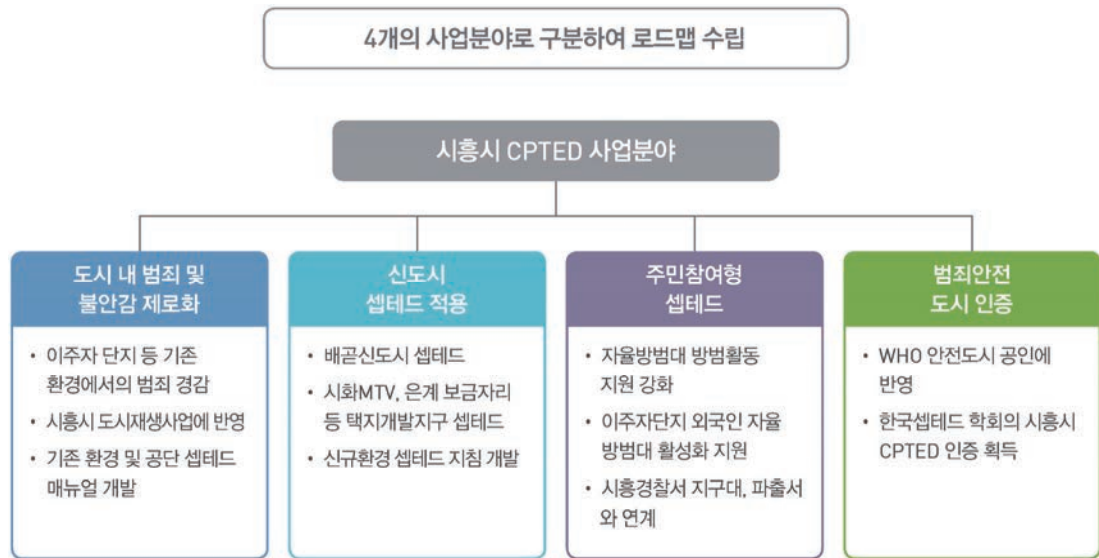


주. 안전레이어의 예: 주변안전시설 카테고리 ⇒ 제세동기, 안전물, 안전버튼, 응급구조함, 피해여성의약품 등 20개 레이어로 구성

[그림 3-4-18] 안전대동여지도의 개념도

○ 범죄예방형설계(CPTED) 가이드라인과 로드맵 수립

- 지역별 범죄취약 요인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 지역의 범죄유형과 지역적 인문·사회적,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셉테드 로드맵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차원에서 활용할 공간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마련
- 범죄발생 우려지역임에도 범죄예방형설계 적용 주체가 불확실한 지역, 공원, 상가밀집지역, 근린생활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형설계 적용방안 마련
- 범죄취약지 및 불안장소를 고려한 표준화된 범죄예방형설계 설계지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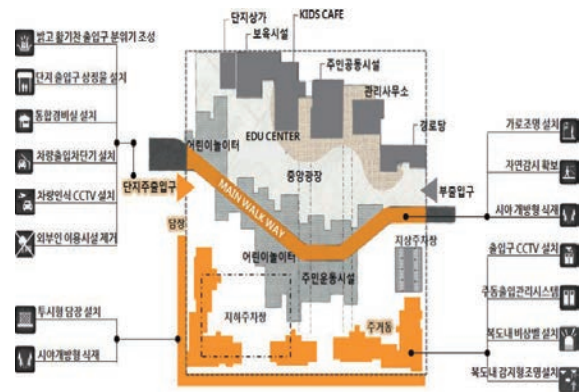


자료: 한국셉테드학회 추계발표자료(2013)

[그림 3-4-19] 시흥시 셉테드 로드맵(예시)



자료: 김남정, 안전신도시 조성방안 발제자료, 2014.8, LH 토지주택연구원



자료: 김남정, 안전신도시 조성방안 발제자료, 2014.8, LH 토지주택연구원

[그림 3-4-20] 거주민의 범죄예방시설 인식도 조사

[그림 3-4-21] 주동 및 보행로 표준설계(안)

○ 경기도 범죄예방형설계 인증센터 설립·운영

- 국내외 범죄예방형설계 사례 기법의 축적과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건설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범죄예방형설계가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과 아이디어를 제공
- 객관적 범죄예방형설계평가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수준에 따라 평가를 등급화
- 민·관·학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범죄예방형설계 전략 마련

[4-2-5] 고령화시대 대응-낙후지역 활력 위한 동북부 특화발전

📋 핵심내용

- 중소도시 및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낙후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지역특성 맞춤형 발전전략 필요
-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복합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 중심지를 거점으로 도농교류확대 프로그램 추진
- 경기도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중심을 이루는 동북부 특화발전 전략 발굴과 사업화방안 추진

🏠 목표와 지표

- 2014년 경기도 농가소득은 30,047천 원이고, 2040년 122,623천 원 수준으로의 증가를 목표
- 2013년 경기도 인구에서 귀농귀촌인구는 0.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0년 10% 증가를 목표
- 동북부 특화발전을 위해 2040년까지 총 100대 사업을 추진

[표 3-4-11] 동북부 특화발전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3	2020	2030	2040
농가소득(천 원)	30,047	35,862	59,536	122,623
귀농귀촌(가구수)*	9,435 (0.08%)	38,000 (3%)	100,000 (8%)	130,000 (10%)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추진 수(개)		20	50	100

주: * ()안에 %는 경기도 인구에서 귀농귀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추진전략

- 도-농 복합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 중심지 형성과 도-농 교류확대 프로그램 추진
 - 농촌중심지는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 서비스거점으로 육성
 - ‘배후마을 - 농어촌 중심지 - 도시’의 연계체계 구축
 - 농촌중심지에 주말방문자, 은퇴자, 귀농귀촌인 등 수요지향적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
 - 도농교류의 매개, 농촌체험휴양 공간 조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농촌 활성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4-22] 도-농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 농촌 중심지를 거점으로 도-농교류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농촌사랑운동과 같은 교류 활동을 통해 상생 관계를 형성

○ 동북부 특화발전 시책 추진

- 대상지역은 북·동부 지역 시·군이며, 시·군 제안사업 공모(창조 오디션)로 지원사업 선정
- 지역산업경제기반 조성형으로 도시재생, 산업단지 및 융복합·벤처단지,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육성 연계 사업, 생활경제 육성형으로 골목상권(테마거리 조성, 전통시장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체류형 문화·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지원
- 2015년 선정 사업을 보면,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양평 산림헬스케어밸리 조성, 양주 불곡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동두천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 고양 신한류 관광문화벨트 구축,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 여주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건립 등 7개 시·군 7개 사업

[4-3] 생활도시·공공주거의 강화

[4-3-1] 도시 디자인과 K-디자인 빌리지 조성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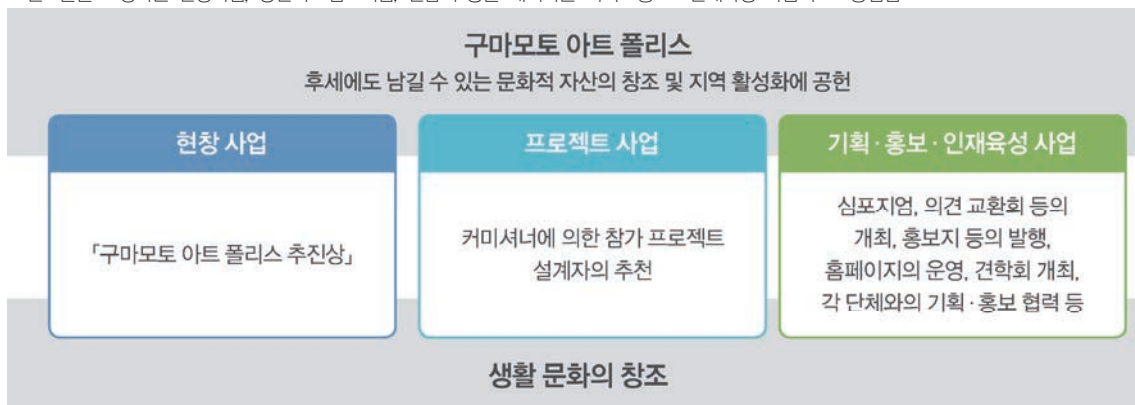
☞ 핵심내용

- 경관, 건축 등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대
- 계획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화

🏠 목표와 지표

- 제도 정착, 지자체의 관리능력 향상 시까지 경기도 주도-시·군 협력관계 형성
- 경관, 건축 등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 시행방안 마련
- 경관관리제도 미구축 시·군의 제도·계획수립 추진
- 지역특성을 반영,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계획 지원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뛰어난 건조물을 창조하는 프로젝트 사업임. 현대의 뛰어난 건조물을 표창하는 현창사업, 강연회·심포지엄, 전람회 등을 개최하는 기획·홍보·인재육성 사업이 그 중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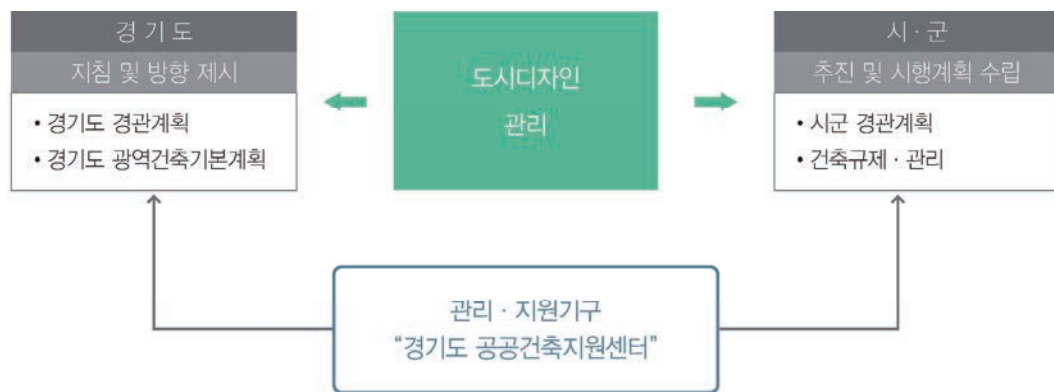


[그림 3-4-23]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 사례

추진전략

○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 경기도가 주도하여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군 간 협조체계 구축
- 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된 법정계획이 관리제도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경기도 차원의 공공건축 지원을 위해 “(가칭)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업무 공유, 경기도 공공건축 관리를 위한 지원



[그림 3-4-24] 경기도 도시디자인 관리 기본방향

- 지역 건축문화유산을 창조해 나가는 ‘건축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지역주민에게 도시문화,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독자적이고 풍부한 생활공간 창조 사업 추진
- 현재 년 1회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건축정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신규자 및 기존 공무원들의 교육 기회 확대
- 선진국 공공건축가제도의 벤치마킹 및 연구를 통한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건축문화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개선방안 마련
- 시·군 건축문화제와의 연계 및 통합 운영방안
- ‘경기건축문화제’를 ‘경기국제건축문화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 경기도 ‘지역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 2014년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대한 지원 업무, 녹색건축 및 건축문화 관련 교육 및 행사, 도민 대상 건축민원 컨설팅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도탈 지역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 K-디자인 빌리지 조성

- 섬유+가구+디자인+문화의 융합으로 아시아 패션섬유 선도, 디자인 미래 창출
- 사업량) 융복합공간, 디자이너들의 창작공간, 지원센터 등 조성
 - ① 융복합 공간(Design Culture Net): 디자이너들의 생활+전시+작업공간, 패션문화 거리조성 등
 - ② 창작공간(Fashion Design Work): 디자인 공방, 패션아카데미 설립, 프로그램 운영 등
 - ③ 지원센터(Fashion Textile Biz Hub): 지원공간 마련, 국제행사 유치, R&D 추진 등
- 사업비

[표 3-4-12] K-디자인 빌리지 조성 사업비

(단위: 억 원)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계	7,103	3	100	3,000	4,000
국비	-	-	-	-	-
도비	3,103	3	100	2,000	1,000
시비	-	-	-	-	-
민자	4,000	-	-	1,000	3,000

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확정

[4-3-2] 도시 재생과 중심도시 활성화

핵심내용

- 현재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주도의 도시재생정책을 유지 확대 발전
- 단순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의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 도시경쟁력 확보와 연결시키는 중심도시 활성화 전략을 추진

목표와 지표

- 쇠퇴문제는 도시 내 일부 지구 차원보다 지역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의 도시 내 지구 중심, 공간 정비 중심의 재생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함
 - 쇠퇴현상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쇠퇴현상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재생정책도 포함
 - 복합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종합적 패키지 정책을 추진
- 물리적 공간 정비 차원보다 공간과 주민의 경제사회적 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추진해야 지역발전의 선순환 가능
 - 주민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공간 조성이 중심이 되는 재생정책을 추진
 - 장소가 아닌 사람의 번영을 위한 재생정책 추진
 - 개량된 도시정비사업만이 아닌 일자리, 의료보건, 문화 등 공공시설 설치 및 서비스 공급, 근원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 추진
 -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도래 및 가속화에 따라 공동체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의 복합쇠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점.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상황은 현재 보다는 향후에 보다 가시화, 현실화된 위협에 해당
- 국토교통부의 하나의 부처 차원보다는 재생과 관련된 범부처 차원의 정책추진이 필요
 - 범부처적으로 지역활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재생정책을 추진
 - 국토교통부 소관의 정책 탈피
 - 청와대 또는 총리실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 검토

추진전략

- 중심도시 활성화 지원법 또는 지역재생법 제정
 - 중심도시 활성화 지원법 또는 지역재생법을 제정하여 지역 차원의 쇠퇴에 대응: 현재 시행중인 도시재생법과 함께 지역재생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지역재생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 법에 근거하여 중심도시 활성화 지역을 지정: 기본적으로 지역발전의 분권적 차원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횡단면적, 시계열적으로 지역재생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 경제, 고용, 발전도 등에 대한 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 지역 재생정책이 안정화되는 초기에는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추진하는 전자의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재생 정책이 안정화되고 난 이후에는 광역 단위를 경유하거나 나아가 광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재생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중심도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과 지구 지정

- 복합쇠퇴에 의해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재생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 수립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해당되며, 필요한 경우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의회의 구성이 가능
- 지역재생이 일단의 시가지 개발이나 구획된 지역이 재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
- 지역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은 기본적으로 3년을 단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의 변경도 가능
- 계획의 내용에는 물리적 주거환경 뿐 아니라, 인구 유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문화 및 복지, 인프라 등을 망라하되 시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정한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도 가능
- 해당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재생 관련 재원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재량에 따라 시책을 추진

○ 지역특화-지역맞춤형 중심도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쇠퇴지역들은 고립되어 나타나기 보다는 인근 시·군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서 한 시·군을 대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쇠퇴지역들을 묶어서 지역재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 지역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지역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산업을 유치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간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보다 중요
- 지역과 도시의 어메니티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적 장소환경에 대한 지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교통 및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창업 지원과 인력양성, 대학의 지역산업 인력양성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지역재생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
- 지역재생 시범사업이라도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 역할에 충실하는 구조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

[4-3-3] 따복주택을 통한 주거걱정 제로사회 추진

핵심내용

- 주택보급률 100%시대에 진입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에 집중
- 다층적 주거안정망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추진
- 따복주택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

목표와 지표

- 경기도 인구 천 명당 주택수는 2010년 337호에서 2040년 420호 목표
- 공공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가구비율은 2010년 7.3%에서 2040년 15% 수준으로 증가 목표
- 따복주택, 따복기숙사 등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만 호 공급
-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은 2010년 25%에서 2040년 15% 수준으로 낮추도록 노력

[표 3-4-13] 주거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0	2020	2030	2040
인구 천 명당 주택수(호)	337	370	400	420
공공지원가구비율(%)	7.3	11	13	15
따복주택·따복기숙사 등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	10	20	—
주거비 부담(RR, %)	25	20	17	15

주: 농업소득률: ((농업 총 수입-농업경영비)/농업 총 수입)×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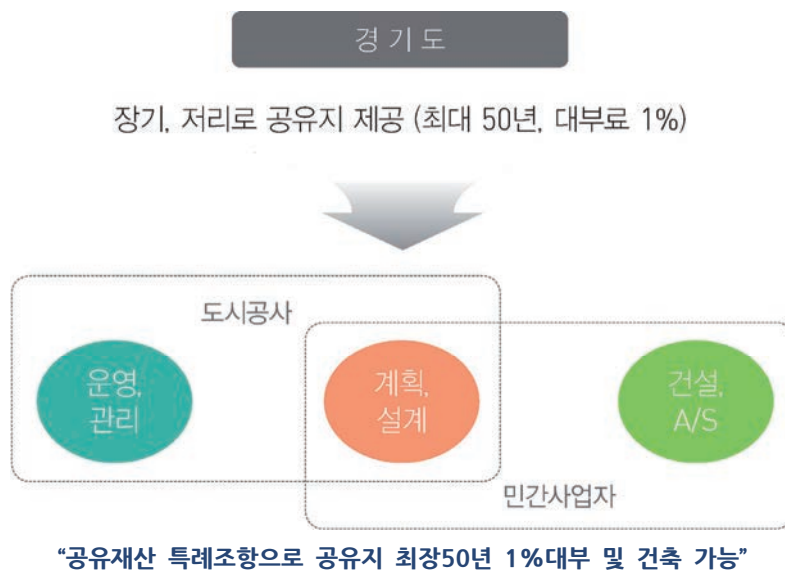
추진전략

-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 제도화
 -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신규 개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여 공급중심의 하향식 계획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계획유도
 - 국가 혹은 상위계획의 대규모 사업과 민간개발사업이 시·군의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수요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양적 안정기에는 수요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로 전환

- 대규모 개발에서 도시골격을 보존하는 소규모 맞춤형 주거지 정비 전환과 기존 시가지 토지이용 고도화를 통한 적정주택 공급
-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주택의 개량과 신·증축지원 등을 묶는 생활중심형 주거환경개선 추진

○ 저소득, 고령자,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따복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시외곽 신규건설에서 기존 도심 내 매입, 개량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 주거급여 확대와 사회주택 공급: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완화와 공공지원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
-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추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시행자로 민간사업자 공동 시행
- 경기도 내 미이용, 저이용 공공용지나 택지지구 내 주택용지를 활용한 따복 주택 공급 확대
- 공유지 활용하여 도와 민간사업자 공동시행방식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80%), 취약·노인층(20%)에 저렴하게 공급



[그림 3-4-25] 따복마을 공급 체계도

- 전·월세 거주비중이 높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따복기숙사를 공급
- 판교테크노밸리 등의 공유지에 청년세대를 위한 2030 하우스를 공급

○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주택유형 공급 확대

[4-3-4]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체제 구축

핵심내용

- 경기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제시
- 광역생활권 중심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제도 기반 조성
- 광역생활권의 공동시설 현황파악과 공동이용 장려
- 광역시설의 건설 및 운영 지원

목표와 지표

- 광역생활권을 이루는 시·군을 중심으로 광역협의체 구성건수
- 광역계획 수립 건수
- 광역생활권의 전략사업 및 광역시설 공동 추진 건수

[표 3-4-14] 광역생활권 지표

	2014	2020	2030	2040
구성된 광역협의체 수	0	3	5	7
수립된 광역계획 수	0	2	4	6
광역생활권 사업 수	0	1	3	5

추진전략

- 광역생활권 단위의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시
 - 2~4개 시·군 단위의 광역생활권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계획,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같이 제안
 - 과도한 목표 인구설정 및 토지수요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광역생활권 단위의 주택수요, 교통정책, 일자리 등 지역 특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침 제시
 - 광역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으로 시·군에 정보제공과 공동이용 장려
- 광역생활권의 시·군의 계획 수립 지원
 - 초기에는 광역생활권 단위의 시·군이 전략계획과 필요 광역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며 계획체계를 지원
 - 광역생활권 시·군 협의체구성 등 제도 기반 조성 지원

- 광역생활권 단위의 광역시설의 공동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재원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혐오시설의 경우 입지 기피로 시설의 설치가 어려우며, 선호시설은 유치경쟁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들의 연계 배분 고려
 - 광역생활권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표 3-4-15] 생활권별 필요시설의 배치 기준 사례

중심지 범주		소중심지	하위중심지	중위중심지	상위중심지
공급권역(배후지)		근린	기초자치단체	인접한 복수의 자치단체	광역생활권
접근성(시간거리)		약 20분 이내	약 30분	약 60분	약 90분
교육		· 초등학교 · 유치원 · 유소년센터	· 중·고등학교 · 유소년 여가시설	· 장애인 학교 · 평생교육시설 · 교육보조센터 · 청소년 센터	· 대학 · 전문대학 · 직업학교
의료/복지		· 의사(의원) · 약국	· 다수의 의사(의원)	· 병원 · 다수의 전문의(의원) · 양로원 · 각종 장애인 시설	· 중환자 진료 가능 종합병원 · 특수병원
문화	문화		· 강당 · 도서관 · 노인복지 시설	· 다목적 강당 · 영화관 · 박물관 · 중규모 도서관	· 극장 · 회의장 또는 공연장 · 다수의 박물관 · 학술 도서관
	체육	· 소규모 운동장 · 소규모 체육시설	· 체육관 · 대소의 운동장	· 대운동장 및 육상 가능 시설 · 관중석을 구비한 체육관 · 수영장	· 관중석 구비 스타디움 · 종합 체육시설 등
교통		· 주요 도로와 연계 · 대중교통과 연계	· 주요 국도와 직접 연계 · 버스터미널	·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 · 철도역	· 고속도로와 연계 ·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상업 및 기타 서비스		· 소매점 · 우체국 지소 · 은행 출장소 · 음식점	· 양질의 기초수요를 위한 소매점 · 우체국 · 은행 지소	· 고차 구매 및 서비스 시설 · 호텔 · 금융기관 지점	· 백화점, 대형마트 · 고차 전문수요를 위한 대형 소매점 · 은행 및 금융기관

주) 상위 중심지에 공급되어야 하는 서비스 시설에는 하위 중심지 계층에 공급되는 서비스시설들이 당연히 포함되나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행정안전부, 2008, 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추진 기본계획 마련연구

[4-3-5] 경기도 도시개발모델의 해외 공유

핵심내용

- 공적개발원조(ODA) 외에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다자은행(MDB) 등을 통한 해외개발협력방안 모색
- 해외 로컬 파트너십(Local Partnership) 구축을 통한 경기도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모색
- 해외개발과 관련된 우수정책 발굴·관리를 위한 플랫폼 조성

목표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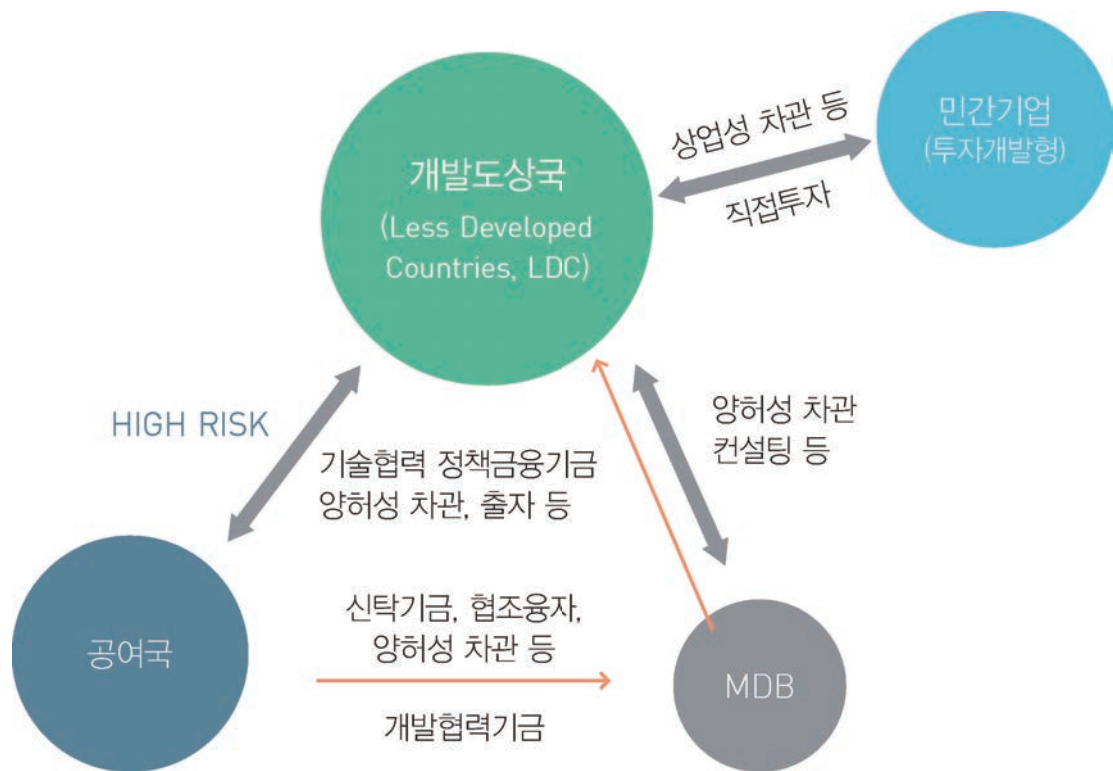
- 2020년까지 현재 가장 활발히 해외개발협력을 추진 중인 서울의 평균 해외개발협력 투입수준인 10억~20억 수준을 목표로 설정
- 이후 2030년과 2040년에는 2020년 목표치의 2배 수준인 30억, 60억 수준을 목표로 설정 (2012년 기준, 경북의 경우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60억 원 이상 투입)

[표 3-4-16] 해외개발협력 지표

목표연도 주요지표	2012	2020	2025	2030	2040
경기도 해외개발협력 투입비용	0.52백만 불	1.5백만 불		3.0백만 불	6.0백만 불

추진전략

- 해외 지역 파트너십(local partnership) 구축
 - 개도국 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절실함
 -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WB, ADB, AfDB 등 다자은행(MDB)와의 협력을 통한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함
 - 다자은행과의 효율적인 해외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금(research fund)을 투입하여 다자은행에 멤버십을 확보하고, 수원국에 대한 컨설팅 및 후속사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 외부재정지원금(EFO), 프로젝트 재정지원사업(PSG), 도시 간 연합(Cities Alliance), 아시아도시개발 이니셔티브(CDIA, Cities Development Initiative for Asia) 등의 연구 기금에 투자 가능



[그림 3-4-26] MDB 조달사업 구조

○ 개발협력부문 우수정책 발굴

- 경기도 개발 부문의 우수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자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동반진출 및 비즈니스 모델 특화 필요
- 경기도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우수정책을 발굴·관리하여 개도국에 대한 해외개발협력사업 진출을 추진

○ 개발협력부문 홍보시스템 구축

- 경기도의 위상 및 노하우를 알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영문 홈페이지 구축, 외신기자 대상 조정홍보, KOTRA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채널 확보
- 성장률이 높지만, 도시 인프라 및 사회적 시스템 정비가 미흡한 지역의 도시를 타겟팅(targeting)하여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경험 및 노하우 전수 필요

○ KOICA 개발컨설팅사업(DEEP)의 수요조사 반영과 민간기업 간 파트너십 구상

- 경기도 내 민간기업들의 특정 국가, 도시에 대한 해외개발수요를 선제적,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KOICA의 개발컨설팅사업에 반영하여 컨설팅사업 및 후속사업에 대한 경기도와 도 내 민간기업간 정부-민간 파트너십 구성

제 5 장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비전 이동이 즐거운 미래교통 허브

목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30분내
이동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고급화된
교통서비스

통일 대비한 선도적
교통 인프라 구축

전략 5-1. 고속교통서비스 제공

5-2. 대중교통의 대전환

5-3.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5-4. 新 교통도입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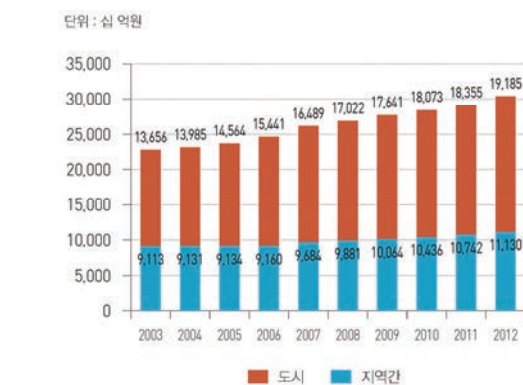
제1절

교통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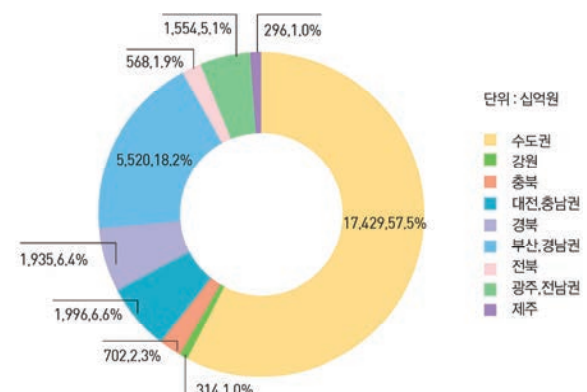
1. 현재의 여건

 (출퇴근 혼잡) 출퇴근 서울 집중 통행으로 교통혼잡 발생

-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약 17조 4천억 원으로 전국 교통혼잡비용의 57.5% 차지
 - 2012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0조 3,146억 원으로 GDP 대비 2.2%, 이는 미국의 GDP대비 교통혼잡비용 0.83%의 2.6배 수준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4), "교통," Vol.194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4), 『2011, 201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그림 3-5-1]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 승용차에 비해 질 낮은 대중교통 서비스

-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필수적이거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저조한 상황
 - 서울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60.4%인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38.3%로, 서울에 비해 대중교통 분담률은 낮고 승용차 분담률이 높은 상황
- 첨두시와 비첨두시 이용자 격차로 수도권 광역 통행자는 아침마다 콩나물 광역버스에서 극심한 차내 혼잡교통 경험
 - 오전 출퇴근 시('15년 3월) 광역버스 이용객 113,655명 중 14,149명(12.4%)가 입석

[표 3-5-1] 수도권 교통수단별 분담률(2013)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승용차		25.5%	43.9%	49.3%
대중교통	버스	33.4%	31.2%	30.8%
	철도	27.0%	9.9%	7.5%
	소계	60.4%	41.1%	38.3%
택시		9.1%	8.6%	6.2%
기타		5.0%	6.5%	6.2%
합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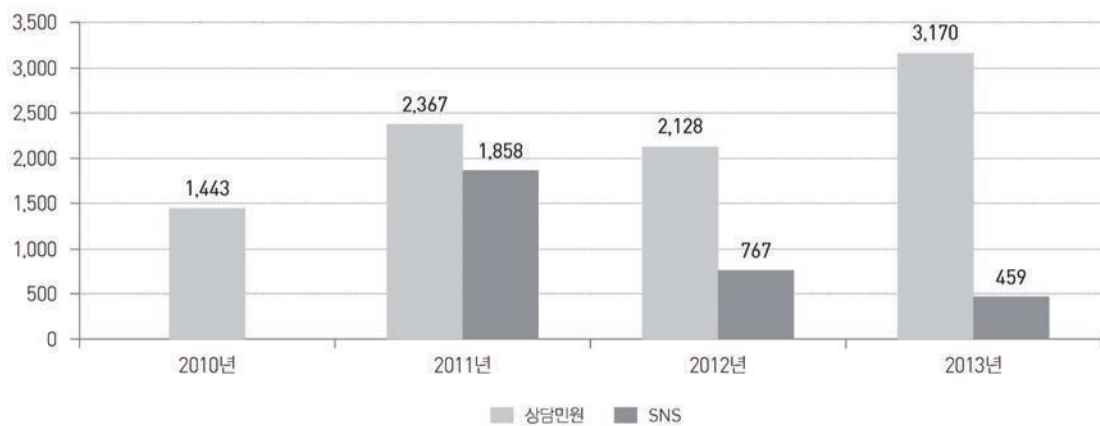
자료: 수도권교통본부(2013), 『2013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그림 3-5-2] 광역버스 차내 혼잡 현황



자료: “공나물시루 같은 출근길 광역버스, 수지 주민은 괴로워”
한국정책신문(2012.07.26)

- 경기도 버스 관련 불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되는 것으로 조사
 - 버스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버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하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로 연결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각 연도)

[그림 3-5-3] 버스관련 민원 건수 추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부족)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저조한 보급 현황

- 경기도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163대로, 서울의 1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
 - 평균적으로 국내 자동차 10만대 중 21대가 전기차인 것을 감안할 때, 경기도 전기차 보급 수준 4대는 평균 이하

[표 3-5-2] 전기차 보급 현황(2014년 9월)

구분	자동차 (대)	전기차(대)		구분	자동차 (대)	전기차 대수(대)	
		대수	차량 십만대당 전기차 대수			대수	차량 십만대당 전기차 대수
합계	12,858,634	2,760	21	세종	60,720	4	7
서울	3,006,781	937	31	강원	662,881	43	6
부산	1,206,869	33	3	충북	694,648	20	3
대구	1,062,550	19	2	충남	916,703	100	11
인천	1,224,539	56	5	전북	801,449	17	2
광주	584,998	96	16	전남	829,476	162	20
대전	618,480	16	3	경북	1,247,893	106	8
울산	499,550	17	3	경남	1,504,212	261	17
경기	4,654,867	163	4	제주	375,194	710	189

자료: 환경부(2014), 2014 교통환경 관리 현황

- 천연가스 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83.5%로 서울 127.1%, 인천 112.6%에 비해 낮은 상태
 -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디젤 버스를 운행 중

[표 3-5-3] 2013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

구분	시내버스 면허대수(A)	'00~'13.12 누계대수(B)	누적보급률 (B/A)	구분	시내버스 면허대수(A)	'00~'13.12 누계대수(B)	누적보급률 (B/A)
합계	33,017	34,297	103.9	경기도	10,158	8,482	83.5
서울시	7,522	9,557	127.1	강원도	566	395	69.8
부산시	2,511	2,515	100.2	충북	542	465	85.8
대구시	1,658	2,114	127.5	충남	847	477	56.3
인천시	2,341	2,636	112.6	전북	824	866	105.1
광주시	930	1,361	146.3	전남	687	723	105.2
대전시	965	1,477	153.1	경북	1,132	752	66.4
울산시	686	931	135.7	경남	1,648	1,546	93.8

자료: 환경부(2014), 2014 교통환경 관리 현황

2. 제약점

(부족한 교통 인프라) 유사한 지역에 비해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부족

- 경기도 국토계수당 도로밀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인구나 행정구역 면적에 비해 도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
 - 경기도 국토계수는 0.0326으로 서울의 1/3 수준으로 광역도에서도 가장 낮은 상태
 - 서울에 비해 도로 교통에의 의존 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낮은 도로 인프라는 교통 혼잡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원인

[표 3-5-4] 지역별 도로 인프라 현황

구 분	도로 연장(m)						국토계수 ($\sqrt{\text{km}^2} \times \text{천명}$)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합 계	89,701,030	4,138,760	13,650,728	20,088,542	15,250,913	36,572,087	0.0395
경기도	11,569,560	669,590	1,560,808		2,329,680	7,009,482	0.0326
서울시	8,239,435	24,960	173,120	8,041,355			0.1054
부산시	3,206,047	52,530	102,362	2,905,335	29,730	116,090	0.0616
대구시	2,665,450	97,560	144,793	2,268,193	11,604	143,300	0.0568
인천시	2,636,646	100,330	74,853	2,092,828	19,405	349,230	0.0478
광주시	1,802,141	26,370	86,569	1,673,142	16,060		0.0663
대전시	2,066,888	76,140	83,887	1,876,415	30,446		0.0719
울산시	1,750,208	62,090	156,784	1,231,274	17,260	282,800	0.0498
강원도	323,976	18,530	66,991		14,690	223,765	0.0380
충청북도	7,310,161	348,840	1,907,264		1,456,681	3,597,376	0.0453
충청남도	5,545,310	360,540	948,607		1,391,086	2,845,077	0.0513
전라북도	5,873,016	429,990	1,210,315		1,435,103	2,797,608	0.0451
전라남도	6,215,847	423,360	1,395,774		1,560,753	2,835,960	0.0506
경상북도	8,321,973	414,600	1,955,626		1,762,020	4,189,727	0.0543
경상남도	9,780,752	535,550	2,261,472		2,529,540	4,454,190	0.0431
제주도	9,671,285	497,780	1,521,503		1,964,450	5,687,552	0.0515

자료: 국토교통부(2015), 도로현황조사

- 경기도 면적당 철도연장은 서울의 1/1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
 - 수도권 철도연장도 인구 1만 명당 0.24km로 런던, 파리, 도쿄 등 국외 대도시권과 비교하여 14~32% 수준에 불과

[표 3-5-5] 국외 대도시권과 국내 수도권 철도시설 비교

구분	런던대도시권 (2007년)	일드프랑스 (2007년)	도쿄대도시권 (2009년)	수도권(2009년)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
면적 (km ²)	1,579	12,011	16,605	11,743	605	10,182
인구 (만 명)	751	1,160	3,602	2,465	1,021	1,173
철도연장 (km)	1,253	1,665	2,650.1	592.3	340.9	214
인구당연장 (km/만 명)	1.67	1.43	0.74	0.24	0.33	0.18
면적당연장 (km/km ²)	0.79	0.14	0.16	0.05	0.56	0.02

자료: 김재만(2010), 급행광역철도의 기능 정립 및 효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남북 교통 서비스 격차) 경기남부에 비해 북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 경기북부지역의 국토계수는 경기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남부지역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못한 상황
 -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연장은 75km로 남부지역 고속도로 연장 535km의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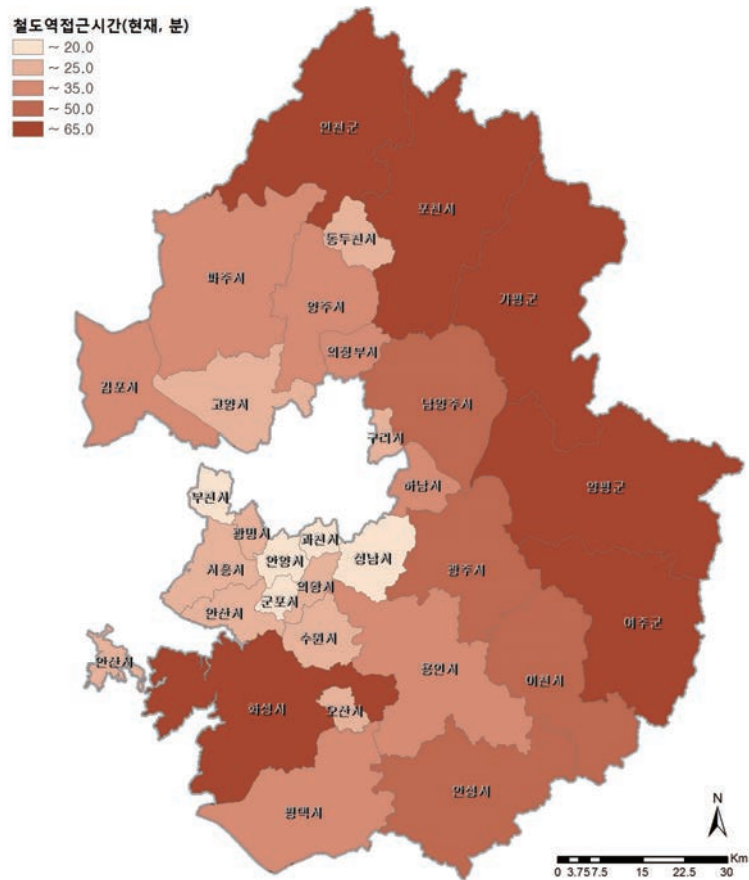
[표 3-5-6] 경기도 지역별 도로 연장

구분	도로 연장(m)					국토계수 ($\sqrt{\text{km}^2 \times \text{천명}}$)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전체	11,569,560	669,590	1,560,808	2,329,680	7,009,482	0.0326
북부	3,049,127	75,330	664,234	855,858	1,453,705	0.0260
남부	8,520,433	594,260	896,574	1,473,822	5,555,777	0.0367

자료: 국토교통부(2015), 도로현황조사

- 경기북부의 철도역 접근시간의 경우, 약 39분으로 경기남부 접근시간인 약 28분 보다 1.4배가 더 걸리는 것으로 분석
 - 경기북부 주민들은 철도역에 접근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통행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통을 일상생활에서 매일 느끼고 있는 상태
 - 경기북부와 남부의 철도 인프라 차이는 이용객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남부의 일일 철도이용객은 약 167만 명인데 비해 북부의 경우는 약 55만 명으로 절반 이하

구분	시·군	접근시간 (분)	구분	시·군	접근시간 (분)
경 기 남 부	과천시	16.4	경 기 북 부	가평군	59.5
	광명시	21.4		고양시	23.2
	광주시	41.5		구리시	24.5
	군포시	17.9		김포시	31.8
	부천시	17.7		남양주시	35.5
	성남시	19.9		동두천시	23.6
	수원시	21.9		양주시	28.8
	시흥시	22.5		양평군	55.5
	안산시	23.3		여주시	61.3
	안성시	46.2		연천군	52.6
	안양시	18.4		의정부시	25.1
	오산시	22.8		파주시	29.1
	용인시	29.0		포천시	51.8
	의왕시	23.0		평 균	38.6
	이천시	49.8	전체평균		33.2
	평택시	27.3			
	하남시	30.5			
	화성시	51.5			
	평 균	27.8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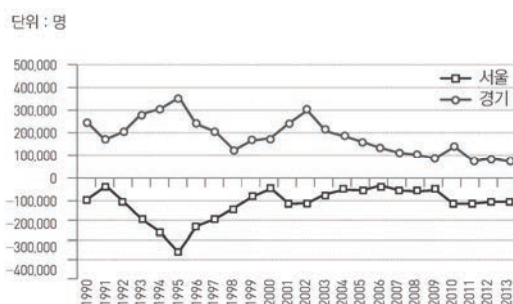
[그림 3-5-4] 경기도 철도역 접근시간(분) 비교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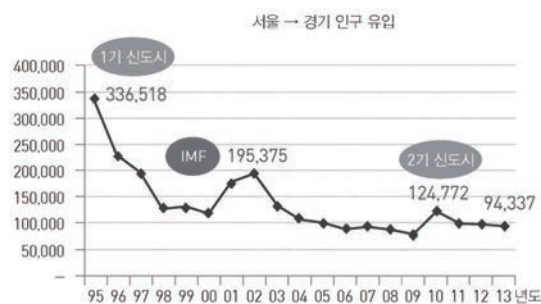
1. 경기도 교통의 메가트렌드

 통행량의 꾸준한 증가

- 서울시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 예상
 - 2013년 기준 서울시는 100,550명 순유출, 경기도는 74,131명 순유입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5-5] 서울시와 경기도의 순이동인구수 변화

- 도로와 철도망의 확충에 따라 수도권 중심생활권이 외연적으로 확장되고 그에 따라 수도권의 광역통행수요도 꾸준히 증가
 - 수도권 광역통행은 2012년 8,030,908통행/일로 2006년 6,760,022통행/일에 비해 연평균 2.91% 증가

[표 3-5-7] 수도권 광역통행 현황

(단위: 통행/일)

구분	2006년	2010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경기도 ↔ 서울	5,294,543	5,759,272	6,087,363	2.35%
경기도 ↔ 인천	781,191	950,749	1,080,225	5.55%
인천 ↔ 서울	684,288	778,074	863,320	3.95%
합계	6,760,022	7,488,095	8,030,908	2.91%

자료: 수도권교통본부(2007),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수도권교통본부(2012),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
 수도권교통본부(2013), 2013년도 수도권 기·종점통행량(O/D) 현황화 공동사업

-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로 여가 등의 통행 발생빈도가 높아져 장래 통행량 증가는 계속 될 전망
 - 미국 사례에 의하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통행 발생률과 평균 통행거리가 모두 증가함
 -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통행량과 통행거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장래 인구가 줄어도 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

[표 3-5-8] 미국 가구소득별 통행발생 현황

소득수준	통행발생률 (통행/인/일)	통행거리 (mile)	소득수준	통행발생률 (통행/인/일)	통행거리 (km)
\$2,500 이하	3.5	8.2	100만 원 미만	1.674	8.26
\$25,000~\$50,000	4.1	9.5	100만 원~200만 원	1.760	8.66
\$50,000~\$75,000	4.3	10.4	200만 원~300만 원	1.887	8.67
\$75,000~\$100,000	4.4	11.1	300만 원~500만 원	2.014	9.02
\$100,000 이상	4.6	11.8	500만 원~1,000만 원	2.102	9.67
전체	4.1	10.1	1,000만 원 이상	2.122	9.33
			전체	1.879	8.84

자료: US DOT, 2001 NHTS 조사자료

자료: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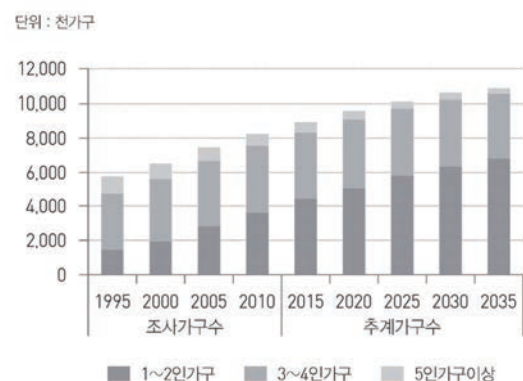
- 1인 또는 2인 소형가구의 상대적 증가는 통행발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까지만 해도 9.0%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23.9%로 높아져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의 통행량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의 1.5배 수준
 - 소득수준과 별도로 소형 가구수 증가는 장래 교통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3-5-9] 수도권 인구와 통행발생량 비교

연도	인구수(천 명)			통행량(천 통행)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1997년	10,389	2,460	8,514	22,206	4,251	15,943
2002년	10,280	2,596	10,000	22,405	4,978	18,402
2006년	10,356	2,663	11,106	22,911	5,143	21,605
2010년	10,575	2,808	12,071	25,248	5,826	24,337
평균 증가율	0.1%	1.0%	2.7%	1.0%	2.5%	3.3%

자료: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재가공

[그림 3-5-6] 수도권 가구 구성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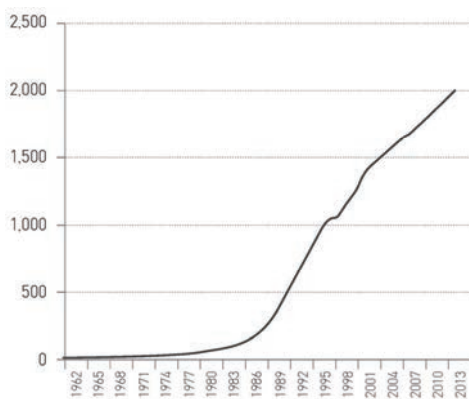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조사관리국(2013) 재작성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 지속

- 우리나라의 자동차대수는 1945년 최초 등록 이후 70년간 2,700배가 증가하여 2천만 대를 돌파하였으며,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
 - 우리나라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6명으로 미국 1.3명, 일본 1.7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
 - 자동차 1대당 인구수를 '1.5명'으로 전제하고 인구가 정체되면, 자동차는 약 3,348만 대에 이를 전망

[그림 3-5-7]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만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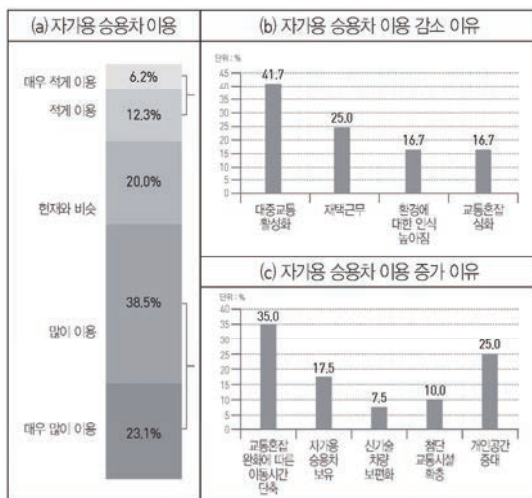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표 3-5-10] 자동차 보유대수 비교('13년 12월)

국가	자동차 (대)	인구수 (천 명)	자동차1대당 인구수	2천만 대 돌파시점
미국	252,714,696	320,051	1.3	1925년
호주	16,381,763	23,343	1.4	-
이탈리아	41,829,934	60,990	1.5	1981년
캐나다	22,333,794	35,182	1.6	2007년
일본	76,619,066	127,144	1.7	1972년
폴란드	22,734,000	38,217	1.7	2010년
프랑스	38,200,000	64,291	1.7	1978년
스페인	27,154,604	46,927	1.7	1999년
영국	36,282,603	63,136	1.7	1982년
독일	47,014,699	82,727	1.8	1976년
한국	19,400,864	50,220	2.6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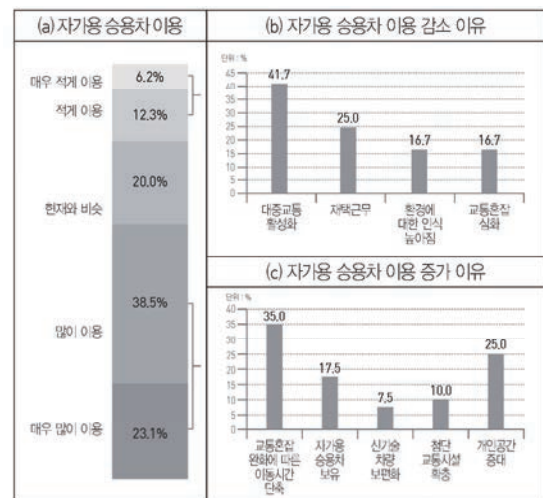
자료: 국토부(2014), 자동차등록대수 2,000만 대 돌파, 세계 15번째

- 대중교통의 발달은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는 역할이 기대되나 '여가 및 관광 통행'이 증가하고, 이동 중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욕구로 인해 승용차 이용은 지속될 전망



[그림 3-5-8] 자가용 이용 전망(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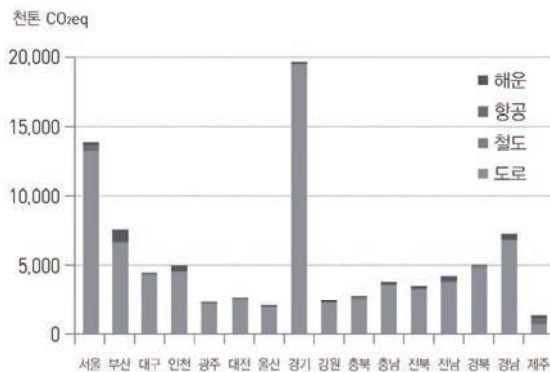
자료: 이용우 외(2010), 국토대예측 연구(II),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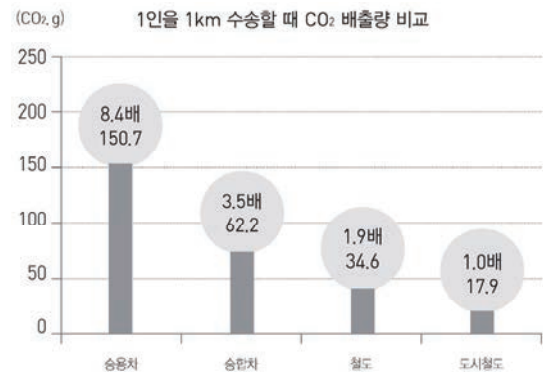
[그림 3-5-9] 자가용 이용 전망(전문가)

대중교통 중심 정책의 지속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철도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필수
 - 2011년 수송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661만 톤으로, 경기도는 이 중 22.8%를 점유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자료: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공청회 자료집(2013)

[그림 3-5-10] 수송 부문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자료: GTX 공식 홈페이지

[그림 3-5-11] 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정책
 -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의 교통부문 목표의 첫번째는 철도 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
 - 국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에서도 대중교통활성화를 목표로 2026년 수도권 대도시권 수단분담률을 60.0%로 설정

[그림 3-5-12] 경기도 종합계획의 교통부문 목표

비전	수도권 광역·녹색 교통체계 완성
목표	- 선진 교통체계 확충 - 편리한 철도기반시설 확충으로 승용차 의존도 대폭 저감 - 수도권 항공교통수단 이용 편의 향상 - 녹색교통환경 구축 - 경기도형 교통수요관리의 개발 및 도입 -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물류체계의 녹색화 - 복지교통체계의 마련 - 교통안전 우선의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방안 추진 - 선진교통문화 정착

자료: 경기도(2012), 경기도종합계획(2012~2020)

[표 3-5-11]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목표치

구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2005년	51.8%	42.5%	37.4%	43.7%	28.5%
2026년	60.0%	47.1%	44.7%	44.6%	42.2%

자료: 국토부(2007), 대도시권 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 교통복지 차원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 ‘이동권’은 사회참여의 통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동권 보장 = 교통복지’ 개념 가능

- 대중교통 이용자 중 저소득층은 19.6%, 중산층은 47.1%로 분석되어 10명 중 7명은 서민들이 이용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통비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할 때, 질 높은 대중교통 수단 제공은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 부여

[표 3-5-12] 도시 근로가구 소득수준별 대중교통 이용 현황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점유 비율 (%)	가구소득 (원/월)	공공교통 지출비용 (원/월)	가구점유 비율을 가중한 전체 공공교통비 점유비율(%)	
				공공교통비 점유비율(%)	소득계층별
100만 원 미만	1.60	765,649	32,319	0.7%	저소득층 19.6%
100~200만 원	8.82	1,571,243	50,214	6.2%	
200~300만 원	14.96	2,534,424	60,748	12.7%	
300~400만 원	20.04	3,507,660	60,064	16.8%	중산층 47.1%
400~500만 원	17.53	4,478,708	65,805	16.1%	
500~600만 원	12.60	5,490,169	81,196	14.3%	
600만 원 이상	24.45	8,292,920	97,660	33.3%	고소득층 33.3%
전체 평균	100.00	4,737,353	71,715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13년 3/4분기 가구 소득 지출 자료 재작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수요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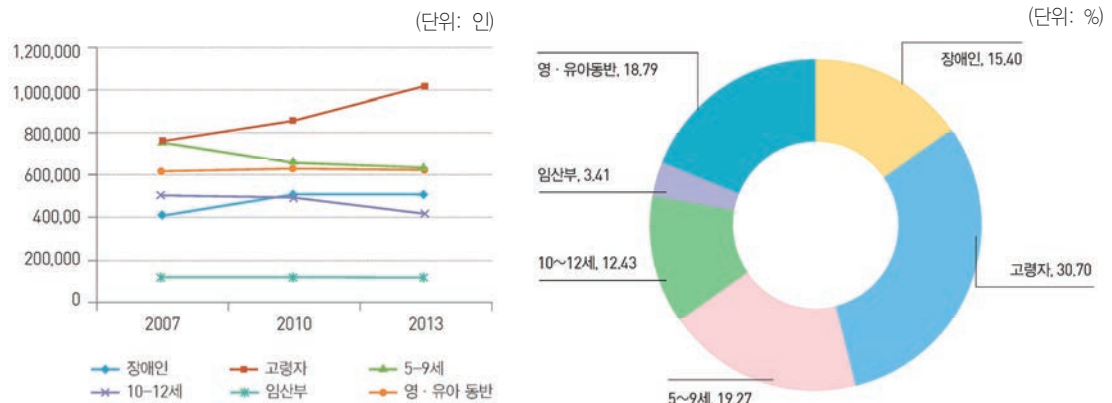
- 교통약자는 교통수단 이용불편으로 이동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전 국민의 28% 수준
 -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장애인과 노인의 증가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교통약자는 증가 추세

[표 3-5-13] 전국 교통약자 현황

구 분		2007년	2010년	2013년	(단위: 인) 연평균 증가율 (%)
교통 약자	장애인	2,104,889	2,517,312	2,501,112	2.92
	고령자	4,172,592	4,571,718	5,241,115	3.87
	어린이(5세~12세)	4,954,146	4,359,942	3,871,546	-4.03
	임산부	465,892	471,265	436,455	-1.08
	영·유아 동반한 자	2,315,766	2,299,695	2,301,320	-0.10
	소 계	14,013,285	14,219,932	14,351,548	0.40
전국 총 인구		49,268,928	50,515,666	51,141,463	0.62

자료: 통계청(각 연도)

- 경기도 내에서도 어린이와 임신부는 감소 추세지만 고령자는 2007년 이후 연평균 5.1%씩 전국 평균(3.8%/연)을 상회하여 증가
 - 장애인도 전국 연평균 증가율(2.9%) 보다 높은 연평균 3.7%씩 증가
 -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시설적 배려가 더 시급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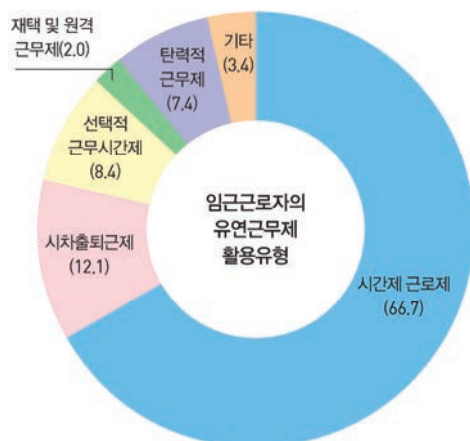


자료: 2010년 이전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2010년 이후 자료는 안전행정부

[그림 3-5-13] 경기도 교통약자 추세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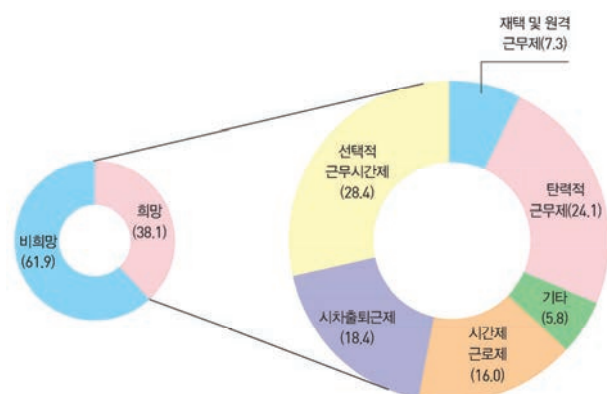
출근통행의 감소, 쇼핑 및 여가 통행의 증가

- 모바일 오피스,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 확대로 통근통행 수요의 감소 및 첨두시간 분산
 - 2013년 10월, 임금근로자 1,848.9만 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297만 명(16.1%)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 중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38.1% 수준
 - 국토교통부(2012)에 의하면, 10% 원격근무 시 통근통행수요 4.2% 감소 전망



자료: 통계청(2014), 2013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그림 3-5-14]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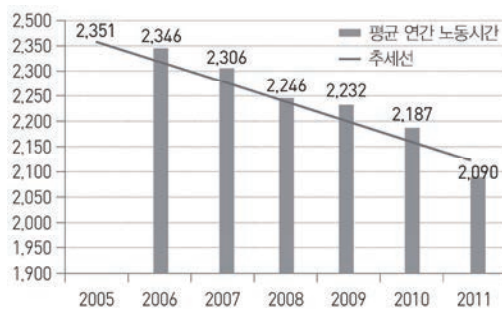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4), 2013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그림 3-5-15]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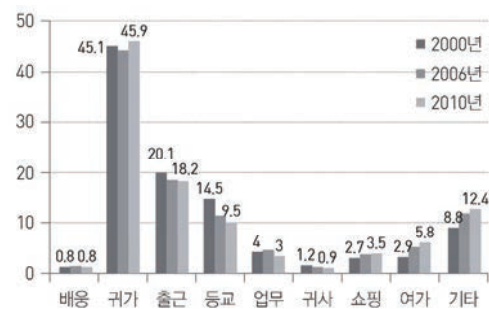
○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여가 통행의 지속 증가

-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2,351시간에서 2011년 2,090시간으로 매년 감소
-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중 교통관련 부분은 2009년 약 19조 정도의 규모로 연간 7.3%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통행목적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출근 통행은 감소하나 쇼핑이나 여가 통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자료: OECD 홈페이지(www.oecd-ilibrary.org)

[그림 3-5-16]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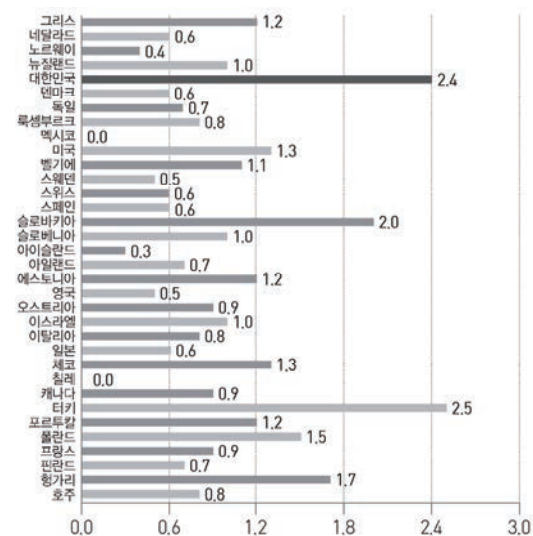


자료: 가구통행실태조사 재가공(각 연도)

[그림 3-5-17] 통행목적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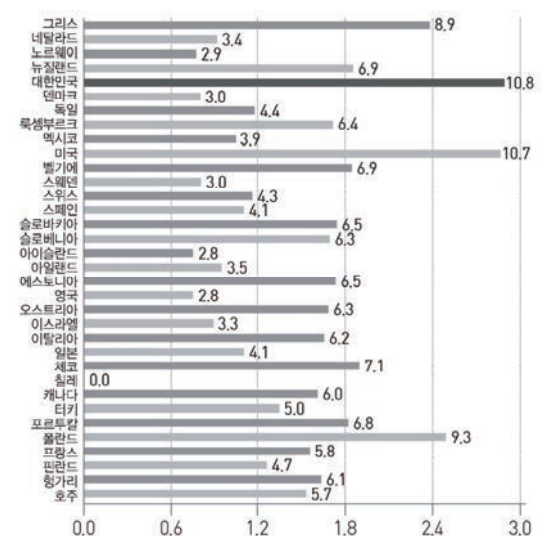
교통안전에 대한 욕구 증진

- 국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



주: 각국 데이터는 2012년 기준
자료: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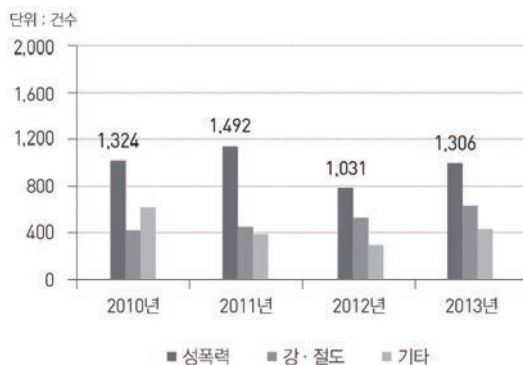
[그림 3-5-18]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주: 각국 데이터는 2012년 기준
자료: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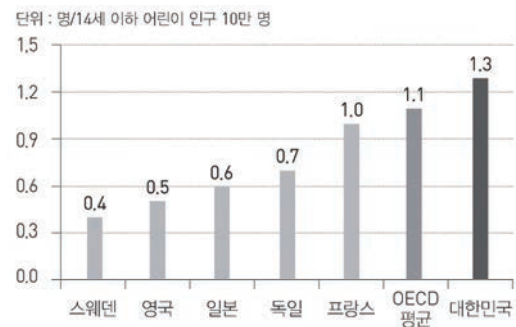
[그림 3-5-19]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물리적인 불편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노출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족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은 성추행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심야에는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어 편안한 이동에 상당한 제약 발생
-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 평균 보다 아직 높은 수준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자료: 경찰청 국회 제출자료(2014)

[그림 3-5-20] 연도별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현황



주: 각국 데이터는 2012년 기준

자료: 도로교통공단(2014),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재가공

[그림 3-5-21] OECD 주요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IT 기술과 융합된 편리한 교통수단의 출현

- 최근 ICT기술 발달은 자율주행차량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편리한 이동 보장
 - 승용차 자율주행차량뿐만 아니라 1인용 소형 자율주행차량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심지어 먼허가 없는 어린이도 이용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2013)의 'ICT R&D 중장기 전략'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서비스로 교통약자의 사회적 활동기회 확대를 15대 미래서비스에 포함



자료: "무인차 속도내는 현대차" "2020년 상용화...스마트카 시장 이끈다", 한국경제(2015.03.31)

[그림 3-5-22] 현대·기아차의 무인자동차

○ 환경문제로 인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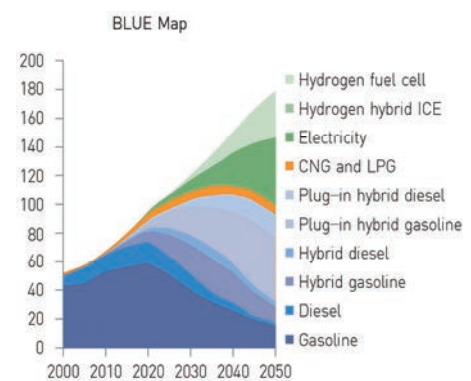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존의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량이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시장점유율이 1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는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는 2025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표 3-5-14] 자율주행차 시장 예측

예측기관/업체	개 요
Daimler (2014.01.13)	●핸들조차도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2025년에 시장에 등장
Navigant (2013.12.10)	●2023년에 자율주행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75%를 차지할 전망
Nissan(2013.08.27)	●Nissan은 도시 교통환경에서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시장에 출시
Insurance Information (2013.02.14)	●완전자율주행차가 미국 도로에 출현하기까지는 15~20년 거릴 것으로 예측
Intel(2012.10.22)	●자율주행차는 10년내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 ●자율주행차에 Intel의 Atom and Core 프로세서를 장착할 것으로 기대
Google(2012.10.02)	●2018년 내 자율주행차 시장 출시 계획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자율주행차 최근 동향 및 도입 이슈

[그림 3-5-23] 세계 자동차 판매대수 전망



자료: IEA(2010),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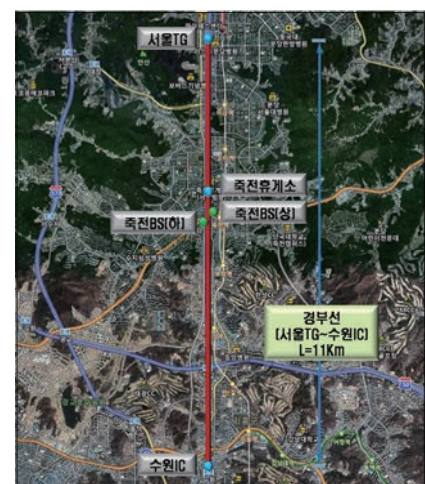
○ 스마트 하이웨이 건설로 도로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

- 스마트 하이웨이가 되면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초고속 고용량의 고속도로 구현 가능



자료: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smarthighway.or.kr>)

[그림 3-5-24] 스마트 하이웨이 구상도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그림 3-5-25] 스마트 하이웨이 시범구간

2. 경기도 교통의 2040년 중장기 과제

도민들의 출근 스트레스 해소 필요

- 주거비용 증가로 서울에서 밀려난 경기도민들의 긴 통근 거리와 시간은 풀어야 될 숙제
 - 전세가 급격히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울지역의 주거비용 급증으로 경기도로의 유입인구 증가
- 긴 출근시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행복지수를 낮춰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한국의 출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 중 1위(미국 21분, 프랑스 23분, 독일 27분, 일본 40분)
 - 경기도민은 출근 시간으로 평균 30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의 경우 평균 1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냄

[표 3-5-15] 경기도민 지역별 평균 출근 시간

(단위: 분)

구 분	평균 소요 시간	거주 시·군내	경기도 내 타 시·군	서울	인천	타 시·도
2013년	34.6	18.9	42.0	61.6	54.4	74.8
2014년	36.2	20.0	44.2	61.6	55.1	80.1

자료: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각 연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출근시간이 더 길어지며 차내 혼잡 등으로 더욱 많은 불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 필요
 - 승용차에 비해 버스는 약 10분, 전철·지하철은 약 30분 정도의 출근시간이 덜 걸리는 것으로 분석

[표 3-5-16] 경기도민 수단별 평균 출근 시간

(단위: 분)

구 분	승용차	버스	전철·지하철	택시	기차	걸어서	자전거	승합차	기타
2013년	31.7	41.7	65.4	17.7	56.8	12.3	21.3	31.6	24.9
2014년	33.6	42.2	63.1	26.0	64.5	13.1	22.6	35.0	29.0

자료: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각 연도)

- 최근 경기도 버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31점으로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됨
 - 2012년 6.345점에 비해 0.11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향상 노력 필요

[표 3-5-17] 이용자 버스서비스 평가결과

구분		표본수	만족도	충성도	추천도
2015년	평균(A)	3,012명	6,231	3,588	3,492
	표준편차	-	1,612	1,051	0,975
2012년	평균(B)	3,062명	6,345	3,721	3,564
	표준편차	-	1,569	0,966	1,350
증감(A-B)		-50명	-0,114	-0,133	-0,072

주: 2012년 자료는 경기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한 조사결과이며, 2015년은 경기연구원 조사결과임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공공 서비스 강화 필요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필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인 저상버스의 경우도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보급률이 가장 낮은 상태

[표 3-5-18] 전국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2013년 말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내 버스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상 버스	5,338	2,147	329	203	240	116	168	80	1,179	158	101	52	72	54	45	384	10
보급률 (%)	16.4	28.5	13.1	12.2	10.4	12.5	17.4	11.9	12.0	27.9	18.7	6.9	8.5	7.9	4.1	25.1	6.0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4)

- 경기도 특별교통은 도입률이 낮고, 지역별 격차가 큰 상태로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 필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율은 73.2%로 법정기준 미달, 서울 95.4%, 인천 95.7%에 비해 열악

[표 3-5-19] 전국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2013년 말 기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법정 대수	2,748	454	187	131	141	77	80	50	9	548	110	106	136	139	154	189	198	39
도입 대수	2,026	433	117	92	135	68	39	29	4	401	17	91	46	110	50	58	309	27
도입율 (%)	73.7	95.4	62.6	70.2	95.7	88.3	48.8	58.0	44.4	73.2	15.5	85.8	33.8	79.1	32.5	30.7	156.1	69.2

자료: “에이블 뉴스 지역마다 도입율 오라카락 장애인콜택시,” 에이블뉴스(2014.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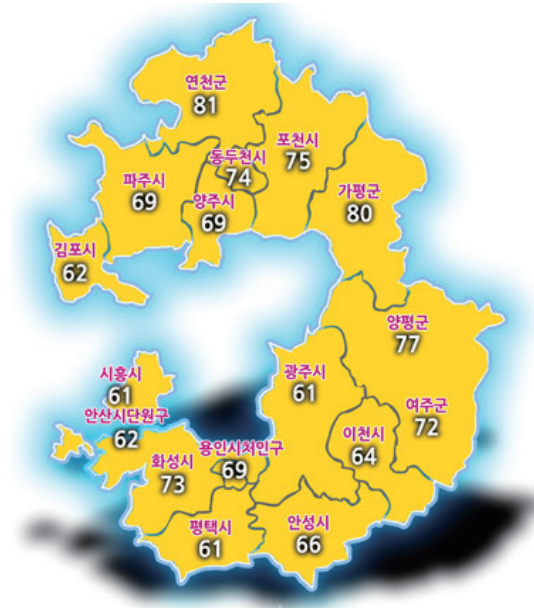
- 교통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약 600여 개의 공영/벽지노선을 운영 중이지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은 힘든 상황
 - 버스운송사업자는 수요부족과 적자운행을 이유로 교통소외지역 버스 운행 기피

- 경기도 17개 시·군은 하루에 버스가 5회 미만이 다니는 도로가 60%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표 3-5-20] 경기도 공영 및 벽지노선 운행손실액
보전비율(201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공영버스	67.2%	12.8%	100.0%	50.0%
벽지노선	71.6%	14.9%	100.0%	59.3%

자료: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 자료
(2008~2012) 재분석



대중교통 소외지역 현황
- 소외지역 자수 60 이상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필요
-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정책 필요
 -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충전소 인프라 확장과 같은 시설 개선 병행 필요
 - 경기도 전기차 충전소는 27개로 서울의 약 1/10 수준

[표 3-5-21] 충전인프라 지역별 현황(2014년 9월 말 기준)

(단위: 개)

구분	합계	급속	완속	구분	합계	급속	완속
합계	898	-	898	경기	27	-	27
서울	254	-	254	강원	18	-	18
부산	12	-	12	충북	3	-	3
대구	3	-	3	충남	-	-	-
인천	7	-	7	전북	4	-	4
광주	30	-	30	전남	50	-	50
대전	-	-	-	경북	19	-	19
울산	5	-	5	경남	106	-	106
세종	-	-	-	제주	360	-	360

자료: 환경부(2014), 2014 교통환경 관리 현황

 통일 대비한 남북 교통 네트워크와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필요

-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고속 및 광역 접근교통망 부재로 개발사업 부진 및 지역경제 침체
 - 철도: 동서 간 철도망 전무
 - 도로: 왕복 2차선의 국도 및 지방도가 대부분
- 향후 통일 비용을 낮추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적인 교통인프라 투자 필요



자료: 윤장호 발표자료(2013),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도로」 왜 필요한가?

[그림 3-5-26] 접경지역 도로망 현황

제3절

교통 비전과 전략

1. 미래 변화 시나리오

- 교통 부문 시나리오는 어떤 교통수단이 도입되고 어떤 기술이 확산되고, 남북교류 등의 대내외적인 사회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 가능
 - 따라서 하나의 단일 시나리오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 경기도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함

[표 3-5-22] 교통 부문 미래 시나리오 전망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전체 통행량	증가여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근 거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욕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인구 감소 •재택근무 활성화 •IT 기술 발달
	교통정책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장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정보, 통신, ICT등)
대중 교통 수요	증가여부	•감소한다	•증가한다
	근 거	•개인 이동수단의 편리성 •값싼 개인 이동수단의 보급 •고연비, 무인자동차 등	•철도 및 버스 용량 확대 •친환경 교통정책 지속 •서민의 발(복지교통)
	교통정책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위한 정책	•철도 인프라 확충, 버스 서비스 개선
자율 주행 자동차	증가여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근 거	•구글, 애플 등 IT기업의 무인차 시장 진출 •BMW 등 전통 자동차 회사의 기술 발달	•급발진 사고 등 IT 기술에 대한 불안감
	교통정책	•법령, 제도 등 정비	•법령, 제도 등 정비
전기차	증가여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근 거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기술발달	•충전소 문제 해결 •높은 구입비용 •수소차로점프
	교통정책	•충전 인프라 설치 •전기차에 맞는 세제 개편	•이동편의공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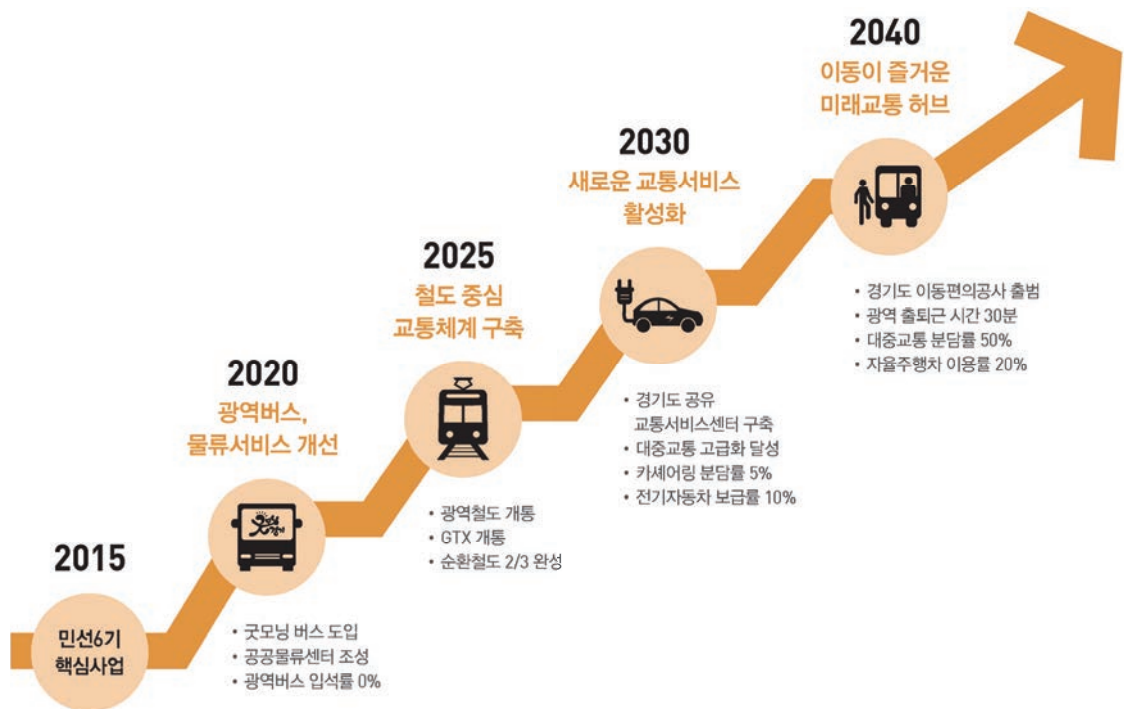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 인구구조: 전체 인구 감소, 고령자 인구 증가, 교통약자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 주요 동인(driving force): 대중교통 정책 지속, 공공 교통 서비스 강화
- 소득수준: 전반적인 소득수준 증가, 시간가치 상승 등
 - 주요 동인: 고급 교통수단 도입, 고속 교통수단 도입 등

- 차량기술: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개인이동수단 등
 - 주요 동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사업 도입, 개인이동수단 도입 활성화
- 사회적 변화: 남북 변화, 공유 개념 확산 등
 - 주요 동인: 공유 교통 확산, 남북 교통망의 선도적 투자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핵심 사업인 굿모닝 버스 정책의 성공으로 광역버스 입석이 사라지고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유통·물류센터 조성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 가능
 - 광역버스 오전 침두시 입석률: 2015년 12.4% → 2020년 0%
- (2025 변화상)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고속철도 노선의 개통으로 경기도 철도 서비스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개선될 것임
 - 2021년 GTX A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B, C 노선 순차적 개통
 - 경기순환철도의 2/3 완성: 수인선,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하남선, 별내선 개통
- (2030 변화상)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개인 이동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과 함께 스마트워크, 공유 교통 등 사회 여건의 변화가 가속되어 교통 서비스의 큰 변화가 이뤄짐
 - 택시부문에 자율주행자동차 등장, 물류부문에 드론 등장
 - 경기도 공유 교통서비스 센터 구축으로 공유 교통 확대
- (2040 변화상) 경기도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원하는 목적지에 30분 내에 도달하는 교통 서비스 달성과 복지교통정책 달성
 - (가칭)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으로 경기도민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



[그림 3-5-27] 교통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이동이 즐거운 경기도를 위한 2040 비전·목표·전략

비전

- 경기도 교통 부문 비전은 “이동이 즐거운 경기도”로 설정
 - 출퇴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존 철도와 도로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도입을 선도함

2대 목표

- 이동이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냐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
- 30분 내 이동은 단순히 빠른 이동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고급화된 서비스가 되어야 즐거운 이동 보장 가능

4대 전략

- 고속 교통서비스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등 3개 아젠다 추진
- 대중교통의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대용량 대중교통의 리모델링, 무인자동차를 활용한 개인고속이동(PRT, Personal Rapid Transit) 도입에 대한 아젠다 추진
-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실현 전략을 추진하며, (가칭)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 등 3개 아젠다 추진
- 新 교통도입 선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공유교통서비스 도입 등 3개 아젠다 추진



[그림 3-5-28] 교통 부문 비전 · 목표 · 전략

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교통 부문에서는 고속교통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고속철도 확충 연장, 광역출퇴근시간을 지표로 선정함
- 대중교통의 대중교통의 대전환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분담률 및 이용률,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률을 대표 지표로 선정
- 이동차별없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가칭)이동편의공사의 사업 대상범위 및 경기북부의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지표를 대표 지표로 선정함
- 미래교통과 관련한 新 교통도입 선도에 대해서는 카셰어링 분담률, 스마트워크 비중,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대표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고속 교통서비스 제공	고속철도 확충 연장(km)	(2014) -	70.4	247.7	247.7	340.8
	광역 출퇴근시간(분)	(2014) 60	55	50	40	30
대중교통의 대전환	대중교통 분담률(%)	(2014) 38	40	42	45	50
	대중교통 이용률(%)	(2015) 38.3	40	42	45	50
	개인 승용차 이용률(%)	(2014) 47	45	40	35	30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률(%)	(2015) -	-	5	10	20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경기북부 신규철도 연장(km)	(2015) -	14.5	83.4	137.6	137.6
新 교통도입 선도	카셰어링 분담률(%)	(2015) -	1	5	10	15
	스마트워크 비중(%)	(2015) 0.3	2	5	10	15
	전기자동차 보급률(%)	(2015) -	3	5	10	20

[5-1] 고속교통서비스 제공

[5-1-1]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핵심내용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완공과 연장 추진
- 수도권 KTX 서비스 확대: 수서발 KTX 개통과 연장, 기존 철도와 KTX 연결



목표와 지표

- 경기도 내 추진 중인 고속철도사업의 조속한 개통 도모
- 고속철도사업은 KTX와 GTX 연계 사업이 있으며, 각 노선연장을 지표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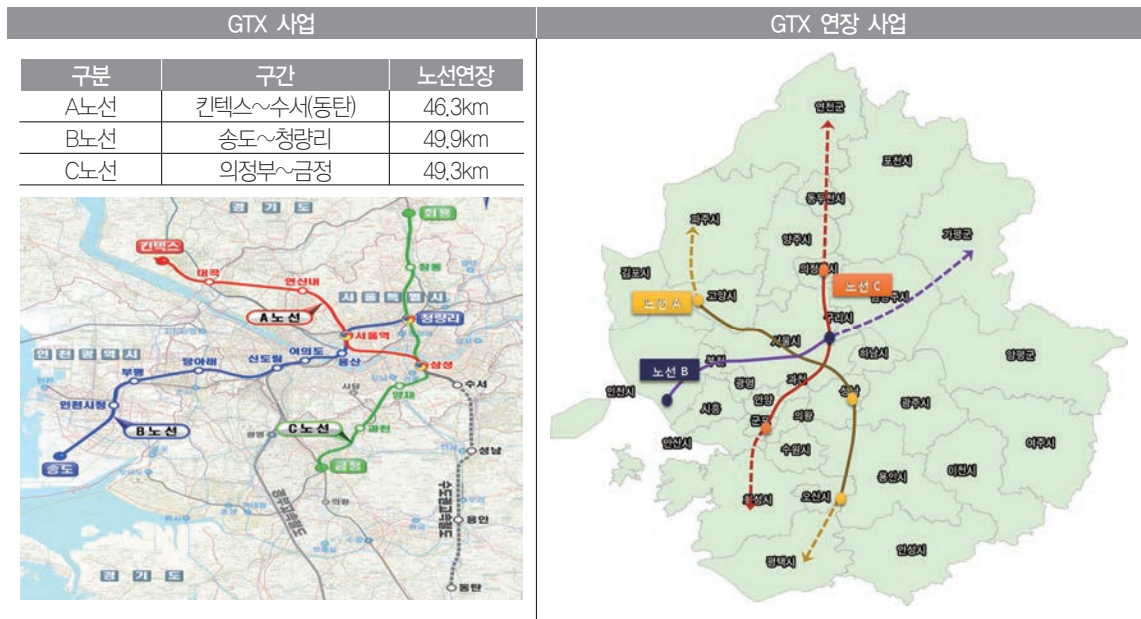
[표 3-5-23] 연도별 고속철도 개통사업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고속철도 개통노선	수서발 KTX 노선 KTX 연결선 사업	GTX 3개 노선 GTX 파주 연장 KTX 의정부 연장	-	GTX B, C노선 연장
고속철도 확충 연장	70.4km	247.7km	247.7km	340.8km



추진전략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완공
 - 다양한 GTX 노선 연장으로 경기도 전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 GTX A 노선 연장: 파주 연장으로 경기 북서부권 서비스 개선
 - GTX C 노선 북부 연장: 양주, 동두천 연장으로 경기 북부권 서비스 개선
 - GTX C 노선 남부 연장: 군포, 안산, 화성 연장으로 경기 남서부권 서비스 개선
 - GTX B 노선 연장: 남양주시 연장으로 경기 북동부권 서비스 개선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그림 3-5-2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및 연장(안)

- 수서발 KTX 노선 개통 및 의정부 KTX 연장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고속철도 2.0시대 출범
 - 2016년 개통, 연장 61.08km, 총사업비 3조 1,181억 원
 - 의정부 KTX 30km 연장 사업 추진으로 경기 북동부의 KTX 서비스 제공, 총사업비 2조 5,100억 원
- 기존 철도선과 KTX 전용선 연결을 통한 KTX 서비스 확대
 - 경부선-수서발 KTX 연결선 추진: 4.5km, 총사업비 2.87억 원, 수원역을 KTX의 새로운 출발역으로 육성
 - 수인선-경부고속철도 연결선 추진: 2.4km, 총사업비 2,300억 원



[그림 3-5-30] 수도권 KTX 서비스 확대 사업

[5-1-2]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

핵심내용

-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순환철도망 구축

목표와 지표

- 경기도 순환철도망의 미건설구간(missing link) 우선으로 순환철도망 구축
 - 서울 집중 완화 및 경기도 지역 개발을 위해 이제는 철도에도 순환선을 적극 준비해야 될 시점
 - 변화하고 있는 수도권 공간구조에 맞게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사형 수도권 광역철도를 보완하는 순환선 필수
 - 2000년대 이전에는 경기 순환철도의 필요성이 낮았지만, 앞으로는 순환철도의 필요성이 증가될 전망(도로의 경우 제2외곽순환선까지 추진 중)
- 2030년까지 순환철도망의 2/3을 완성하고 이후 의정부~남양주 구간 구축

[표 3-5-24] 연도별 순환철도망 관련 노선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관련 노선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원 수인선 분당선연장	교외선 별내선 별내선~진접선 연결선	-	의정부~남양주선
철도 확충 연장	110.7km	156.4km	156.4km	175.0km

추진전략

- 교외선 운행 재개를 통해 경기 서북지역의 연결 강화
 - 교외선은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지나는 일반철도로 이용승객 부족 등의 이유로 2004년부터 운행이 중단
 - 교외선 주변 지역에서는 교외선 복선전철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
 - 단기적으로 시설개선 비용과 운영비용을 최소화를 위해 기존 교외선 선로를 활용하여 무가선 트램 운행
 - 장기적으로는 복선전철화 추진으로 경기북서부 철도 서비스 개선 도모
- 남양주, 광주, 용인을 연결하는 장기방안 추진
 - 동측 구간은 단기적으로 의정부역과 별내역 약 13.6km를 연결한다면 동측 구간의 순환선 완성 가능

- 남양주, 광주, 용인 등 경기 동부지역까지 크게 순환하는 대안은 장기안으로 추진



자료: 경기연구원(2015), 경기순환철도망, 이제는 필요하다

[그림 3-5-31] 경기 순환철도망 개념도

- 무가선 트램을 활용한 교외선 복원사업 추진
 - 이를 바탕으로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방안 강구
- 경기도 광역철도 노선 간 연계 환승체계 개선
 - 경기도 광역철도 노선 간 연계 환승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경기도 거점을 연결할 수 있는 경기순환철도망 사업의 필요성 홍보

[5-1-3] 수도권 고속도로 사업 완성

핵심내용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목표와 지표

- 수도권 내 추진 중인 고속도로 사업 조기 구축
- 제2영동고속도로는 2016년에 개통, 2030년까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

[표 3-5-25] 연도별 고속도로 관련 노선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관련 노선	제2영동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
고속도로 확충 연장	56.9km	320.3km	449.1km	449.1km

추진전략

-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 제2영동고속도로로 명칭된 광주~원주고속도로 59.6km는 2016년 개통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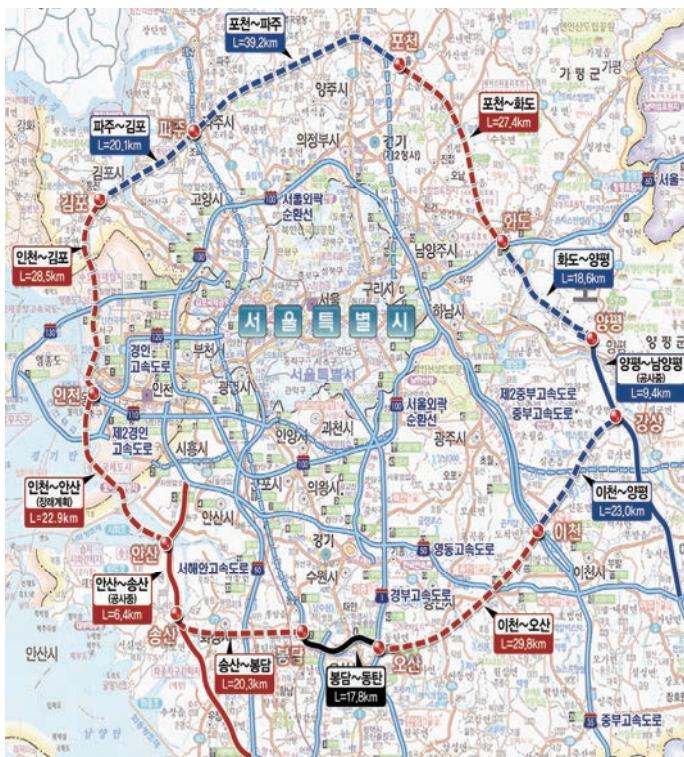
[그림 3-5-32]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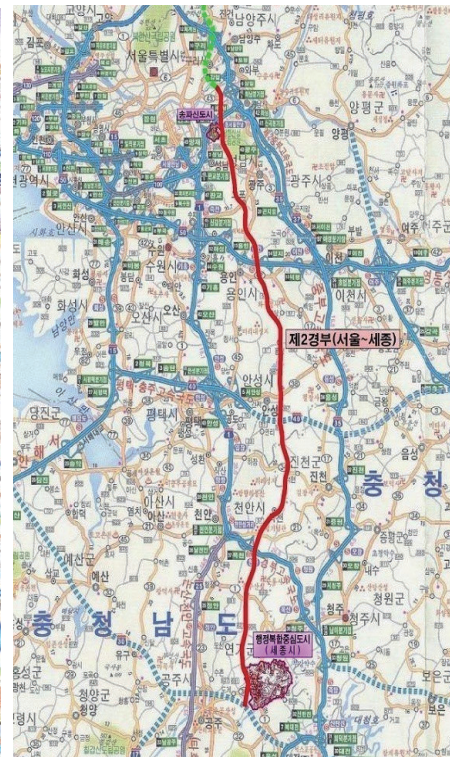
- 수도권 발전목표인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 수도권 통행량 증가로 인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혼잡 개선과 경기도 지역 간 거점을 신속히 연결하기 위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 서울~세종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 해소와 수도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기능 분산을 위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 수도권과 세종특별시의 광역교통의 원활한 연계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그림 3-5-3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그림 3-5-34]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사업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 고속도로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로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사업 등의 체계적인 관리 수행

[5-2] 대중교통의 대전환

[5-2-1] 대용량 대중교통의 리모델링

핵심내용

-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시민들은 보다 쾌적한 수단에 대한 욕구 증가
- 대중교통 고급화 추진

목표와 지표

- 단기적으로는 굿모닝 버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버스 고급화를 추진함
- 대중교통 고급화를 통해 현재 38%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장래 50%까지 증가시킴

[표 3-5-26]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대중교통 분담률	40%	42%	45%	50%

추진전략

- 굿모닝 버스 정책 추진
 - 굿모닝 버스가 출발하는 멀티환승터미널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
 - 버스 이용객이 집중하는 정류소에는 편의점, 자판기, 충전소 등이 설치된 멀티환승거점정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수원 3곳, 용인 2곳, 김포 2곳, 오산 1곳의 시범사업 추진 중

바로타고 앓아가는 굿모닝버스
출근길 걱정없는 맞춤형 굿모닝버스 도입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14,000명 → 0명
●출발 8분 → 2분

멀티 환승터미널

- 개요
굿모닝 버스는 도민들의 최우선 과제인 출퇴근길 안전과 교통 복지를 위한 과제이다. 현재 14,000여명의 입석 승객을 완전히 없애고 평균 버스 출발 시간을 8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14년 추경 예산에 연구용역비 편성했다. 우선적으로 대용량 버스(49인승, 2층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속도로 IC부근에 멀티환승터미널을 구축해 광역버스와 지선노선을 연계하기로 했다.
- 추진방향
 - 출근 입석 ZERO화, 2분마다 출발하는 굿모닝버스 정책실천
 -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멀티 환승터미널 · 환승거점정류소 설치
 - 버스의 공공성,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자료: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그림 3-5-35] 경기도 굿모닝 버스 정책

○ 대중교통 고급화정책 추진

- 1인당 이동의 효율성만 강조하던 용량 중심의 '대중교통'을 이동의 서비스를 높여 누구나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인기 있는 대중교통으로 전환
 - 고연비 자동차와 전기차, 무인자동차 등의 등장은 1인당 운송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춤
 - 운송원가의 절감만큼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개선 가능
- 낮은 요금 경쟁력이 아닌 고급화를 통한 이용 증진 도모
 - '대중교통 = 낮은 요금&낮은 서비스'가 아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수단 도입
 - 승용차만큼 쾌적한 서비스 제공으로 승용차 보유와 운전 스트레스를 지양하는 이용자 유인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통급여 제공과 함께 '가칭' 경기도 이동편의공사'에서 복지 서비스 제공

[표 3-5-27] 대중교통의 패러다임 전환

구 분	현재의 대중교통	미래의 대중교통
이용자 계층	• 승용차가 없는 사람 등의 서민 중심	•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요금	• 값싼 요금 정책	• 서비스 중심의 자유 요금 정책
서비스 질	• 운송원가를 맞추기 위해 낮음 • 차내 혼잡, 운전자 불친절 등	• 서비스 고급화 지향
수송 용량	• 대용량 지향 • 40인승 이상 버스 중심	• 다양한 용량 도입 • 소형, 중형, 대형 버스 도입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그림 3-5-36] 미래의 대중교통 모습

[5-2-2]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개인고속이동(PRT) 도입

핵심내용

-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제도 마련
-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물류 서비스 도입
-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 도입

목표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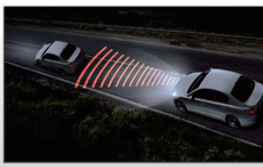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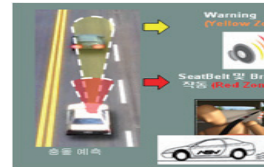
- 경기도를 국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 자율주행차 비율을 2040년까지 전체 차량의 20%까지 달성함
 - 맥킨지(2015)에 따르면, 운전자는 하루 50분, 연간 12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400억 달러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함

[표 3-5-28] 자율주행차 비율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자율주행자동차 비율	-	5%	10%	20%

추진전략

-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 현대차는 차간거리유지(ACCS) 및 차로유지지원 시스템(LKAS) 등 핵심기술들은 상당부분 개발 완료하고, 2단계 상용화 예정
 -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ACCS+LKAS+AEBS+네비게이션) 양산 계획

차간거리유지 장치(ACCS)	차로유지 지원장치(LKAS)	자동제동장치(AEBS)	주차조향보조장치(ASPAS)
			
차간거리 및 정속주행 유지	차선이탈 시 조향제어	전방차량 인식, 제동 제어	주차공간 인식, 자동주차

자료: 국토교통부(2015),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그림 3-5-37] 현대차 자율자동차 기술동향

- 맥킨지 보고서(2015): 무인 자동차 기술이 실제로 공공 도로에서 상용화되는 것은 2040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인 자동차 기술의 혜택을 받게 되는 2050년 예상

- 무인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 등의 제도적 정비와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
- 무인자동차는 승용차보다는 트럭이나 택시 등의 상용차에 우선 추진
- 자율주행 발전단계(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NHTSA) 분류): 1단계(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 2단계(조향과 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 3단계(부분적 자율주행·돌발상황 수동전환) → 4단계(완전 자율주행)

○ 자율자동차를 활용한 물류 서비스 도입

- 트럭 제조사들은 화물 운송 특성상 장거리 운전이 많은 화물 운전사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운행하는 트럭 개발 중
- 미국 네바다주는 '15년 5월, 독일 다임러사의 '인스피레이션 트럭'에 대해 상업용 대형 트럭으로는 최초로 자동 운전 운행허가 발급

○ 자율자동차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 도입

- 기존 PRT는 무인운행을 위한 가이드 시설로 궤도가 필요했지만, 무인자동차는 궤도 없이도 무인운행이 가능
- 택시 공유서비스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계한다면 궤도가 없는 PRT 형태의 무인택시 도입 가능

구분	현재	미래
무인 차량 화물 운송	[화물연대파업]	
	출 처	기사제목
	아시아뉴스통신 (2011.05.31)	광주 '불법 지입차량' 운행 여전
	뉴스한국 (2010.07.30)	안전 뚫린 도급택시...강도·강간 전과자 기사로 채용
	강원일보 (2009.11.23)	무자격 운전기사 채용 도급택시 운영 과징금
	한겨레 (2008.08.18)	불법 도급택시 210여대 면허취소
무인 차량 택시	주간한국 매거진 (2007.09.10)	홍대 앞 살인사건... 택시 운영 '안전 불감증'은 정부 때문?
	자료: 연합뉴스 홈페이지	
	[독일의 무인 트럭]	
		
	자료: 다임러	
	[택시 이용 중 사건·사고]	
	출 처	기사제목
	아시아뉴스통신 (2011.05.31)	광주 '불법 지입차량' 운행 여전
	뉴스한국 (2010.07.30)	안전 뚫린 도급택시...강도·강간 전과자 기사로 채용
	강원일보 (2009.11.23)	무자격 운전기사 채용 도급택시 운영 과징금
	한겨레 (2008.08.18)	불법 도급택시 210여대 면허취소
	주간한국 매거진 (2007.09.10)	홍대 앞 살인사건... 택시 운영 '안전 불감증'은 정부 때문?
	자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궤도가 있는 PRT]	
		
	자료: http://www.prtproject.com	

[그림 3-5-38] 무인자동차로 인한 미래

[5-3]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5-3-1] (가칭)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

☞ 핵심내용

- 경기도 내 저소득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저소득층을 위한 공사 출범

🚗 목표와 지표

- 경기도 내 저소득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경기도는 2018년까지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를 달성하고 저상버스와 따복택시까지 도입 예정



35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는
매년 100대씩, 2018년에는
50대 등 총 350대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다복공동체 정책 일환으로
1,2급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따복택시 200대 도입 지원



2018년까지 콜택시
법정대수인 558대를 도입
각 시군의 운영비도
지원할 방침

[그림 3-5-39] 경기도 저상버스, 장애인 택시 도입 계획

-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으로 2040년에는 경기도민이 누구나 공공 교통서비스를 누리게 함

[표 3-5-29] 이동편의공사 사업 대상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이동편의공사 이용 대상 범위	교통약자	교통약자 저소득층 50%	교통약자 저소득층 100%	경기도민

추진전략

○ (가칭)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

- ‘교통복지’라는 관점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은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의 공공 교통서비스는 코레일이나 각 지역의 도시철도 공사가 담당하는 철도와 함께 일부 공영 버스 등이 존재함
- 국내에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마련된 이후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 신체적인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빈곤하여 교통수단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칭)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
 - 경기도 이동편의공사는 특별교통수단의 기능과 대중교통수단의 기능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능이 복합한 기관으로 설립
 - 경기도 이동편의공사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량 등 친환경·첨단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그림 3-5-40] 경기도 이동편의공사 개념도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 버스 준공영제, 공영제 등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한 도입 검토

[5-3-2] 경기북부와 남부의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

핵심내용

- 경기 북부 고속도로망 확충
- 경기 북부 철도망 구축

목표와 지표

- 경기 북부의 교통 인프라를 최소한 남부 수준까지 확대
- 계획된 도로와 철도 노선의 단계별 개통으로 인프라 확충 도모
- 경기북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첫 번째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단순 경제성 평가로 사업추진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인 고려 사항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 필요
 - 계획된 도로와 철도 사업이 적기에 완공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경기도 자체 사업에서 대해서는 경기북부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 시행

[표 3-5-30] 경기 북부 신규 철도 및 도로 연장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철도 노선 확충	14.5km	83.4km	137.6km	137.6km
도로 노선 확충	85.2km	348.6km	348.6km	348.6km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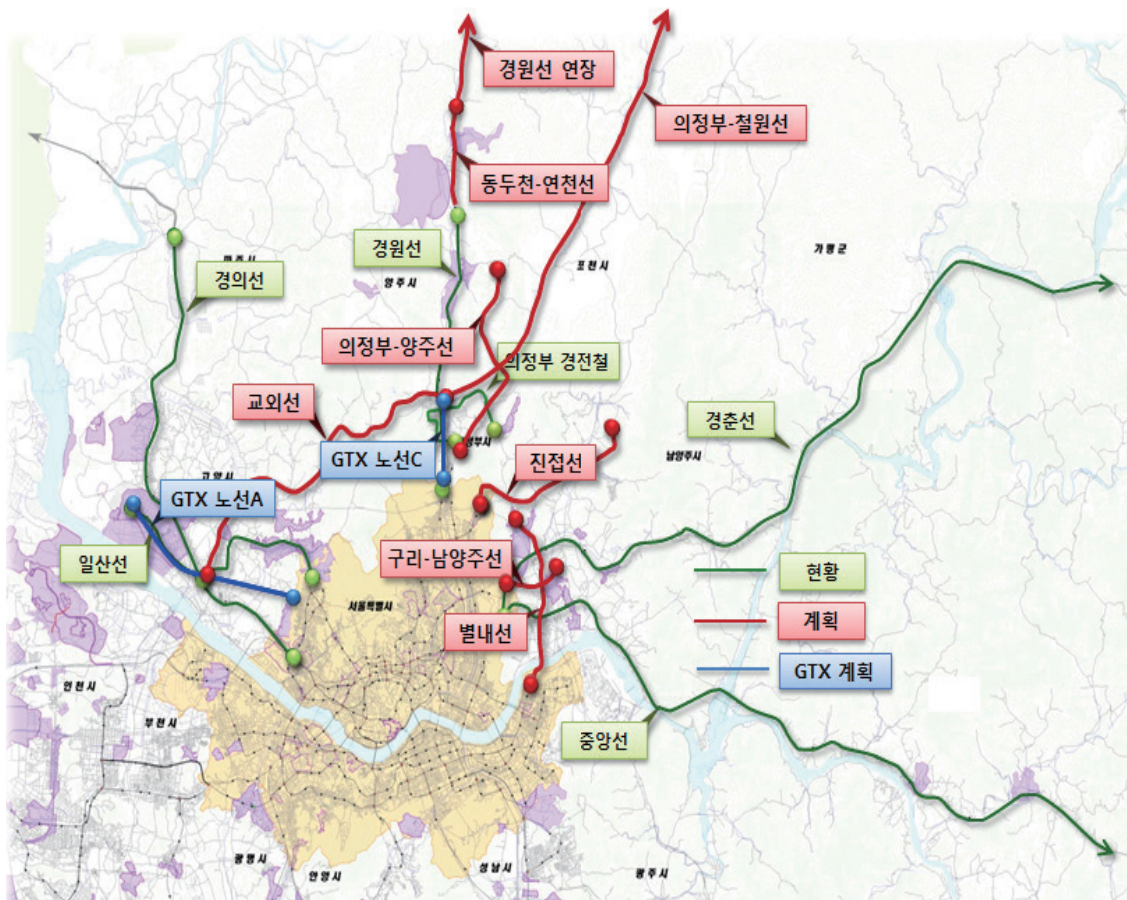
- 경기 신규 북부 고속도로망 확충
 - 원형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방사형의 서울-문산 고속도로, 구라-포천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 고속도로망과 연계된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의 적기 추진
 - 사업추진 일정이 불명확한 강화~간성간 고속도로(동서 9축)와 송추~동두천~연천간 고속도로(남북 3축)는 간선도로(국도사업)사업으로 전환해서 타당성 확보 가능성 제고



[그림 3-5-41] 경기도 북부 고속도로망 사업

○ 경기 신규 북부 철도망 구축

- 진접선, 별내선, 별내-진접선 연결선, 구리-남양주선, 의정부-철원선, 도봉산-옥정선, 교외선 등



[그림 3-5-42] 경기도 북부 철도망 사업

[5-3-3] 남북 교통 인프라 연계

핵심내용

- 남북 철도 인프라 연계
- 남북 도로 인프라 연계

목표와 지표

- 통일을 대비한 선도적인 교통 연계 인프라 확보
- 계획 중인 도로망과 철도망 사업 완성

[표 3-5-31] 통일 대비 교통 인프라 확보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철도 노선	경원선 연결	—	—	—
도로 노선	—	—	문산-남방한계선 연결	—

추진전략

-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 남북 경색 완화에 따른 DMZ 관광이나 접경지역 개발 지원
 -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노선도	사업 개요
	■ 최초 노선(2012년) • 명칭: 동서평화 고속도로 • 연장: 고성~강화 230km 신설 • 비용: 7조 2,852억 원 • 경제성 분석: B/C=0.39(타당성 미확보) ■ 변경 노선(2015년) • 명칭: 동서평화 고속화 도로 • 연장: 기존도로 활용 125km 확포장 + 신설 105km • 비용: 3조 3,803억 원 • 변경 내용: 사업비 절감을 위해 사업방식을 신설 고속도로계획에서 기존 국도개량 고속화 도로 사업으로 변경

자료: 윤창호 발표자료(2013), 접경지역「동서평화고속도로」왜 필요한가?

[그림 3-5-43] 동서 평화고속화도로 건설

○ 유라시아 철도 연결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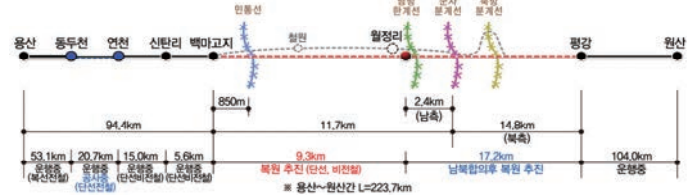
- 복원 중인 남북한 연결 철도사업을 시작으로 경원선 복원: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간 11.7km 단선철도 건설, 1천 508억 원 소요

남북철도 연결 노선



자료: 나희승(2015), 북한철도 인프라시설 발표자료

경원선 복원



자료: 통일부



자료: 경기연구원작성

[그림 3-5-44] 경기도 남북철도 네트워크 연결

○ 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남북간 도로 네트워크 연결 추진

- 한강평화로 연계 도로 추진: 김포~개성 16km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4)

[그림 3-5-45] 김포~개성 도로 연결 사업

[5-4] 신 교통도입 선도

[5-4-1] 공유교통 서비스 도입

핵심내용

- 카셰어링 및 공공자전거 도입
- 주차장셰어링 도입
- 경기도 교통서비스 센터 설립

목표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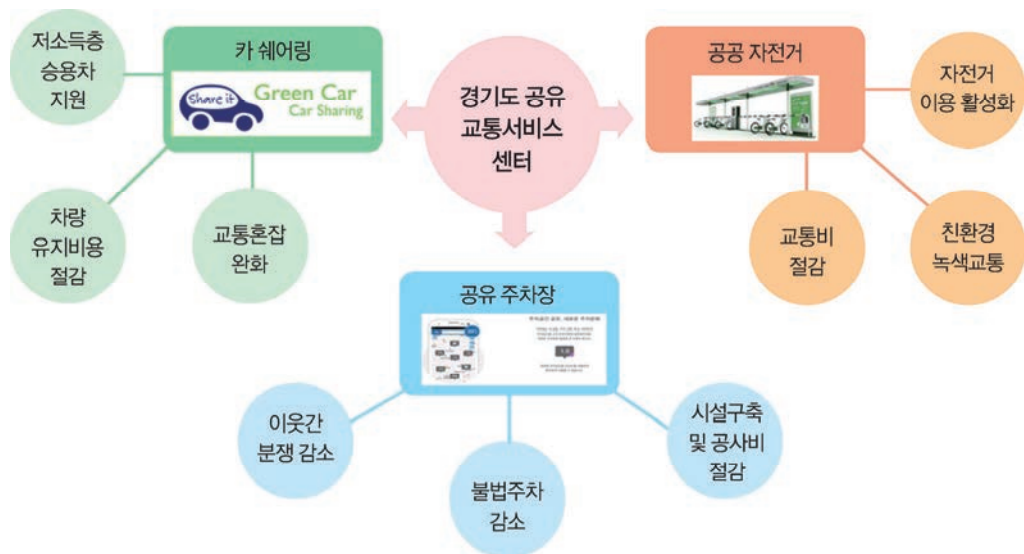
- 경기도 공유교통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유교통 서비스 제공 노력
- 공유교통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이용 비율을 2040년에 15%까지 달성

[표 3-5-32] 카셰어링 분담률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카셰어링 분담률	1%	5%	10%	15%

추진전략

- 카셰어링 도입
 - 카셰어링은 경기도의 고밀도 지역에서 자가용 증가를 억제하고, 저밀도 지역에서 주민의 통행편의 증진 기대
 - 카셰어링 차량을 전기차로 도입하여 환경문제 해결
- 공공 자전거 도입으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증가
 -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공공 자전거 도입
- 주차장 셰어링
 - 주차장 공동이용제는 건물 용도에 따라 침투시간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주차공간을 시간대별로 공유하는 방안
 - 건물용도에 따라 주차장 이용 패턴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시간대별로 공동이용제 실시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그림 3-5-46] 경기도 공유 교통 서비스의 도입

○ 경기도 공유도시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

- 경기도 공유도시 선언 등에 이어 각 시·군이 지역단위 공유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도민 체감형 공유경제 기반 구축 및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역사, 시설물 등의 정보화 사업으로 공유경제의 자원 확대
-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를 발굴하고, 행정정보의 존재여부 및 소재를 안내, 검색을 통해 원천데이터를 다운로드 가능토록 추진
- 시·군에 흩어져 있는 지역정보의 통합(공영주차장 등), 각종 문화, 역사, 시설물 (한옥 등)의 전수조사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유경제의 자원 확대

[5-4-2] 스마트워크 활성화

핵심내용

- 스마트워킹센터 확충을 통해 스마트워크 이용비율을 2040년에는 30% 달성
- 출·퇴근 시간 절약과 자유로운 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여가 시간 등의 증가, 친가족적 사회환경 조성

목표와 지표

- 경기도민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확대
- 스마트워킹센터 확충을 통해 스마트워크 이용비율을 2040년에는 30% 달성

[표 3-5-33] 스마트워크 비중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스마트워크 비중	2%	5%	10%	15%

추진전략

- 스마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 출·퇴근 거리 감소 및 화상회의를 통한 원거리 출장 대체로 교통·환경·에너지 등 비용 절감 가능
 - 종이 없는(Paperless) 근무환경, 변동좌석제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전기소모량 및 출장 감소 등을 통해 사무실 운영경비 절감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0. 7.): 1인당 사무공간은 22m²(6.655평)에서 13m²(3.9325평)로 41%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전기소모량도 연간 550kwh에서 330kwh로 40% 감소(40% 원격근무 기준)
 - 출·퇴근 시간 절약과 자유로운 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여가 시간 등의 증가, 친가족적인 사회 환경 조성
 - 영국: 출퇴근 시간 1일 42분 절약으로 연간 8.5일 여유시간 확보(주 2회 기준)
 - 저출산·고령화 해소,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복지향상에 기여
- 주민자치센터와 주요 철도역 주변에 스마트워크센터 건설 추진
 - 경기도의 스마트워크센터는 2015년 기준 총 36개가 등록되어 운영 중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조직문화 혁신 노력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그림 3-5-47] 경기도 스마트워크의 미래 모습

-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들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해서는 초기 관련 비용과 운영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투자 필요

[5-4-3] 소형 개인 이동수단 및 물류 서비스 혁신

핵심내용

- 소형 개인 이동수단 도입
- 물류 서비스 혁신

목표와 지표

- 교통 부문의 신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활성화 하여 교통문제 해결과 개인의 이동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택배사업을 도입하여 물류 문제 해결

[표 3-5-34]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연 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개인 이동수단 비중	5%	10%	15%	20%
드론 택배 비중	—	2%	5%	10%

추진전략

- 소형 개인 이동수단 도입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 중장거리 이동은 철도 등 대용량 교통수단을 선호하나 단거리 이동은 개인교통수단 선호 지속
 - 고령자를 위한 의료와 이동을 접목한 이동수단과 세그웨이 등 재미와 이동을 접목한 이동수단 증가
 - 소형 개인 이동수단 도입을 위한 전용도로와 같은 인프라 정비 필요
 - 경기도 내 개인이동수단 활용에 대한 현황 파악과 등록제 등을 도입하여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관리함
 - 국가 차원의 개인이동수단 제도 개선에 참여



고령자를 위한 교통수단(도요타 아이리얼)
자료: <http://jalopnik.com>



2인승 전기차 트위지
자료: www.globalbrandsmagazine.com



호주의 세그웨이 관광
자료: SEGWAY TOURS AUSTRALIA
(<http://www.segwaytours.com>)

[그림 3-5-48] 소형 개인 이동수단 도입

○ 지하 물류를 통한 물류 서비스 혁신

- 지하물류 도입으로 화물로 인한 도로 혼잡 개선

- 만성적인 물류작업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첨단 물류시스템 구축

- 드론을 활용한 무인 택배 도입

- 무인항공기인 드론을 활용한 택배 부문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
- 도심의 드론 도입은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도시와 비도시가 공존하는 경기도는 보다 자유롭게 드론 활용 가능



자료: <http://www.lowtechmagazine.com>



자료: Amazon.com

[그림 3-5-49] 물류 서비스의 미래

제 6 장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비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목표

환경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

생태계 서비스의 공평한 향유와
가치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순환경제 실현

환경 거버넌스 역량 제고

전략

6-1.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6-2.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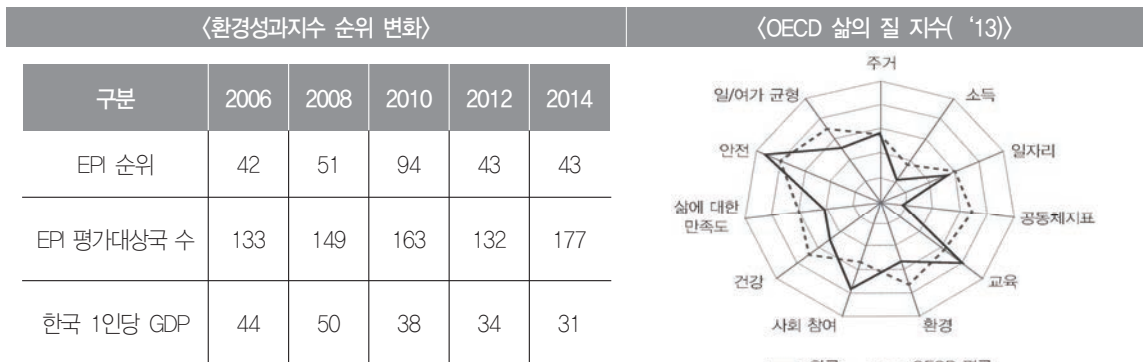
6-3.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현재의 여건

☞ (선진국 대비 환경질) 환경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격차 존재

- 대기, 물,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초시설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 환경질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선진국에 비추어 아직 미흡한 실정
 -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약 50~65ppm으로 선진국 대비 상당한 차이(도쿄 22ppm, 뉴욕, 23ppm)³⁰⁾
- 환경성과지수(EPI) 순위로 본 우리나라 환경성과는 1인당 부가가치 순위에 못 미치며,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도 환경은 낮은 것으로 평가



[그림 3-6-1] 우리나라 환경성과지수 및 삶의 질 지수

-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 3위, 독일의 1.3배, 미국의 7.8배, 호주의 99.5배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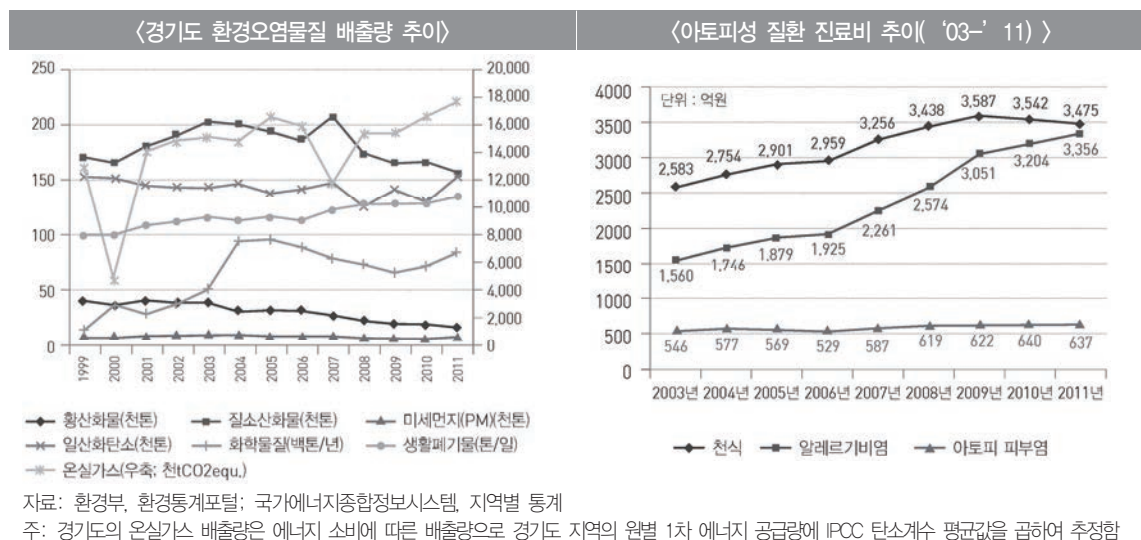
☞ (새로운 환경위험 및 오염) 대기 · 수질 등은 개선, 반면 새로운 오염원과 위험 증가

- 대기, 수질 등 전통적인 환경오염원은 안정적인 관리 상태이나 소음 · 진동, 유해화학물질, 악취, 라돈, 초미세먼지, 석면 등 새로운 환경오염원 노출 피해 증가

30) WHO(2014), "Ambient Air Pollution Database."

31) OECD, Stat Extract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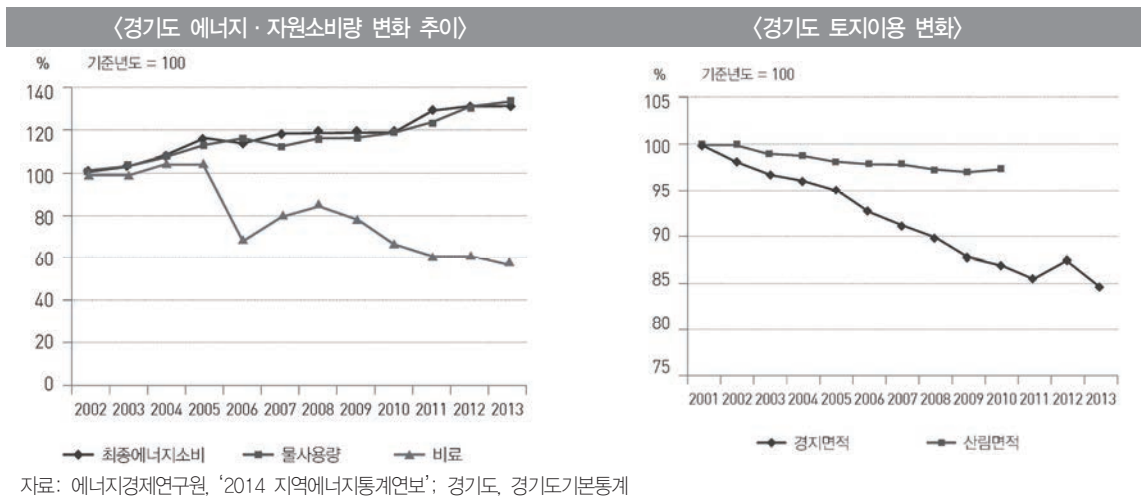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단위당 폐수 방류량 등은 감소 추세인 반면, 유기화합물질(VOCs), 화학물질 배출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미세먼지(PM10) 배출량 증가
-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시행된 1999년에 비하여 BOD는 30% 정도 개선되어 2014년 연평균 BOD 농도가 1.2mg/L인 반면, COD는 3.5mg/L로 증가 추세
- 생활환경의 변화, 면역체계 불균형,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환경성 질환 증가
 - 2011년 전국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아토피성 질환 진료환자는 818.7만 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16.08%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208.9만 명(25.5%)을 차지하고 있음
 - 양방병원 진료비만 2011년 약 7,468억 원으로 2003년 대비 59.3%, 연평균 6.0%씩 증가



[그림 3-6-2]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환경성 질환

(경기도 에너지·자원 소비) 에너지·자원 효율성은 향상 추세이나 소비 총량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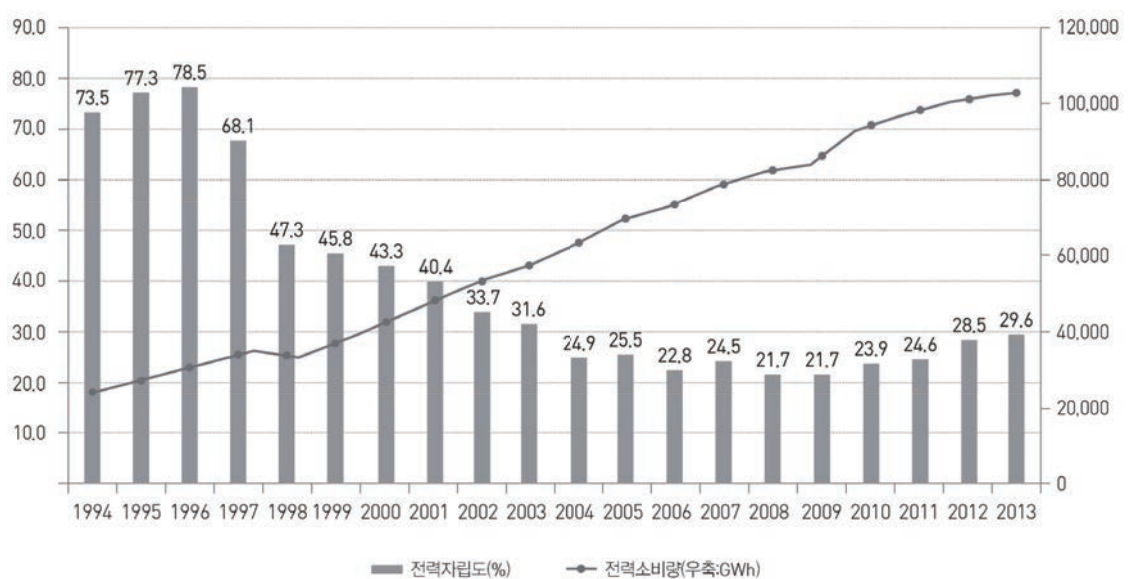
- 물, 폐기물, 에너지 등 1인당 자원소비량은 감소 추세이며, 자원효율성도 향상되고 있으나 인구 증가, 도시화 등에 따른 에너지·자원소비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인구 증가, 도시화에 따른 개발압력으로 산림, 농지, 습지 등 생물서식처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파편화되는 등 환경용량과 생물서식 환경 악화



[그림 3-6-3] 경기도의 환경자원 소비량

(전력공급의 높은 외부 의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나 전력자립도는 29.6%에 불과

- 최종에너지 소비 중 석유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도시가스, 전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최종에너지 대비 4.2%에 불과,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
- 경기도 전력 소비의 70%를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에 의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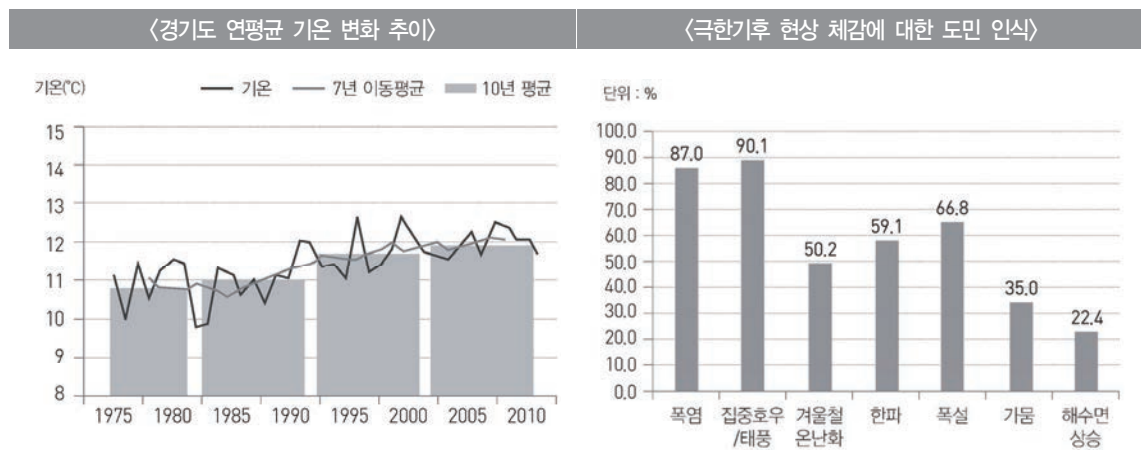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각연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그림 3-6-4] 경기도의 전력자립도와 전력소비량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건강, 경제적 피해 우려 증가

- 경기 지역은 지난 37년간(1973~2010년) 연평균 0.044℃씩 기온이 상승하였으며, 평균 기온은 2001~2010년에 11.9℃로 최고치 기록
- 기후변화에 따른 열파와 이상고온, 여름철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
 - 경기도의 지난 3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3.5조 원이며, 사망실종자 594명, 이재민은 216,104명으로 추정
-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도민 대부분은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약 9명은 폭염,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극한기후 현상 체감



자료: 대전지방기상청(2011), p.74

자료: 경기도(2012), p.25(요약본)

[그림 3-6-5] 경기도 연평균 기온 변화 추이 및 극한기후 현상 체감 인식

2. 제약점

(환경 문제의 복합성) 환경 문제의 복합화, 환경위험의 불확실성은 문제해결 방식의 변화 요구

- 환경오염 원인 및 문제 양상의 다양화와 복합화, 기후변화 등 환경위험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문제해결에 있어 사전예방적, 적응적 접근 및 도시, 복지, 건강, 경제 등 타 영역과의 상호협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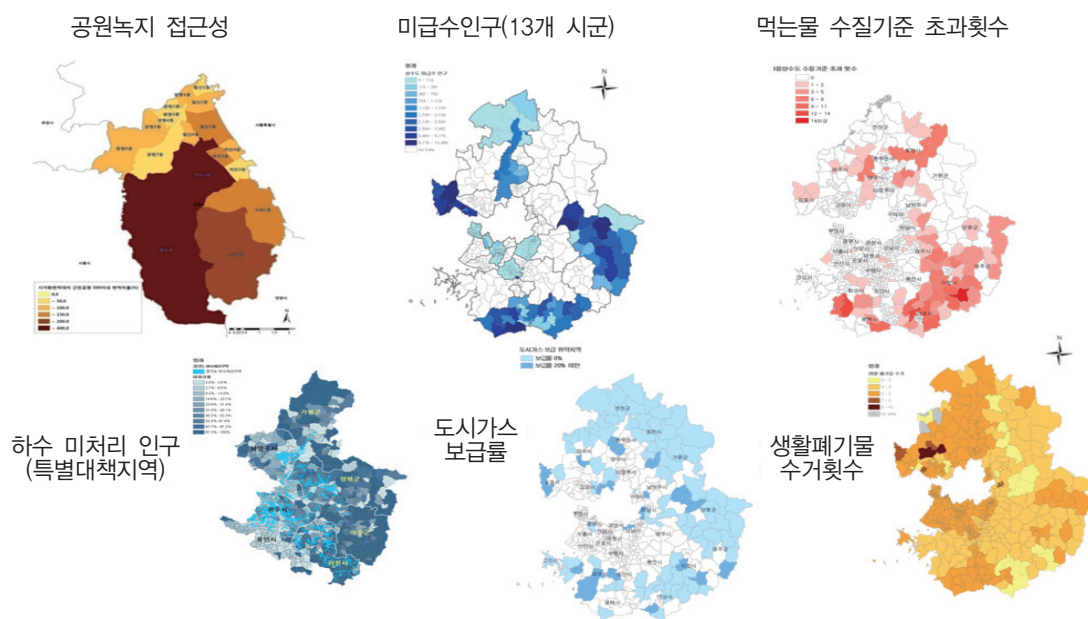
- 매체별 관리에서 건강 위해성, 생태계 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하드웨어 공급 위주의 기존 대책으로는 한계

(지방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수단 제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설계의 한계

- 수질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 등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도입으로 선진적인 환경관리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여기에는 환경분권화가 환경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작용
- 커뮤니티 단위의 생활체감형 다양한 환경서비스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과학적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나 지역의 정책 인프라는 부족
 - 경기도는 대도시, 산업도시, 도농복합형 도시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 평균 자료를 통한 일괄적 정책 수립의 효과성 감소

(지역 간 환경서비스 격차) 경제적 격차가 환경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는 환경불평등 존재

- 전반적인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대기질 개선, 공원접근성 등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혜택이 지역 간, 계층 간 불균등하게 분포
- 환경규제 및 입지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동부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 격차가 환경·에너지 서비스 및 인프라 격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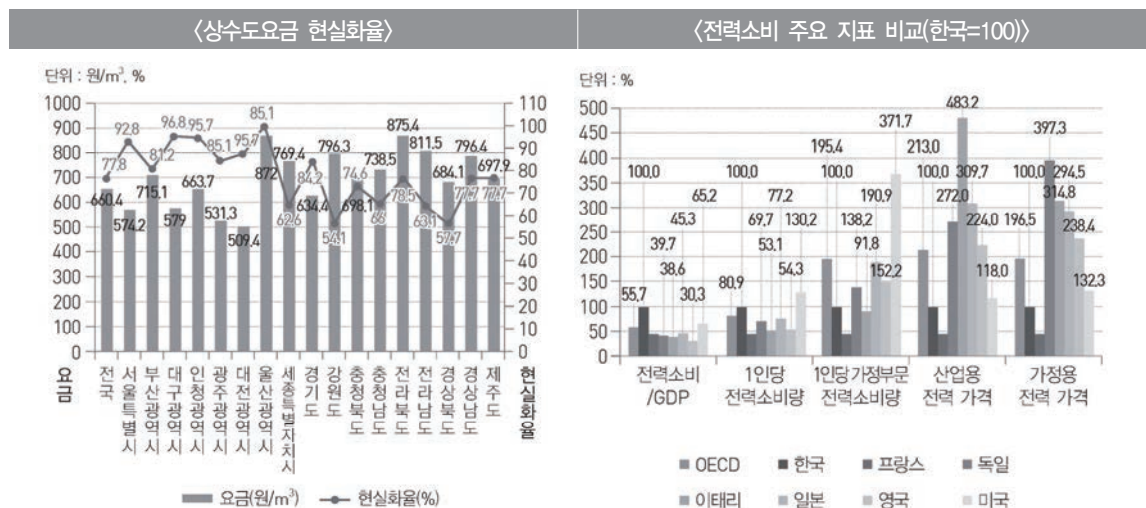
[그림 3-6-6] 경기도 환경서비스의 지역 간 분포

(환경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외부성) 환경서비스 공급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는 사회 갈등의 원인

- 환경규제,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편익은 다른 지역이 향유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유발
-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발전소, 환경기초시설 등 서비스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증가³²⁾
- 지역 간 수자원의 불균형 및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물 분쟁 문제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저해하는 가격 체계)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은 자원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 환경재와 환경서비스는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재이나 낮은 에너지 가격, 상하수도 요금 등은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 환경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 부담의 가중과 관리 비용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감소로 이어져 환경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 발생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5), “우리나라의 물사용 현황과 시사점”

자료: OECD(2013),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그림 3-6-7] 경기도 환경서비스의 지역 간 분포

32) 선호·비선호시설 입지 등을 둘러싼 지역갈등, 개발과 보전에 관한 환경 갈등이 공공갈등(90~08년) 전체(624건)의 33.3%를 차지하며, 환경갈등 지속 일수가 829일로 전체 평균(590일)보다 훨씬 길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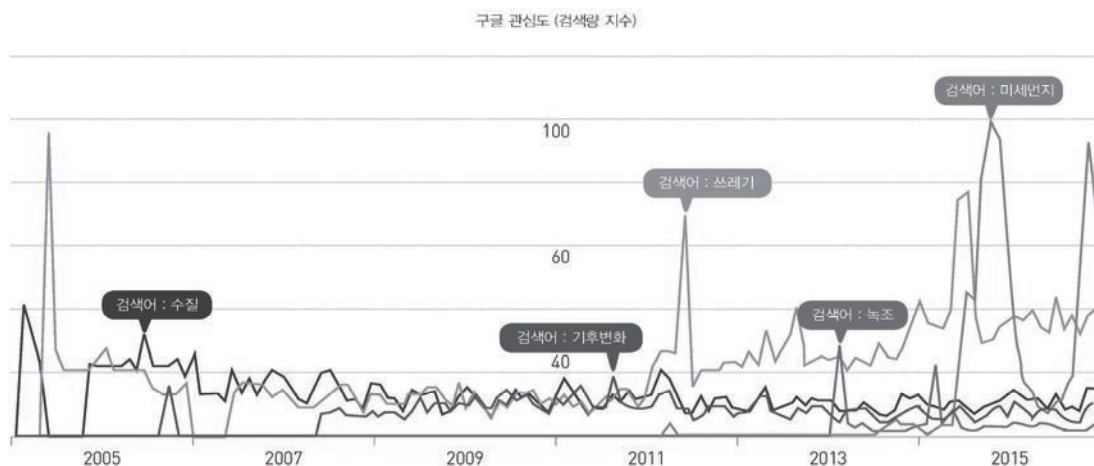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1. 중장기 환경·에너지 부문 전망

(환경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변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더 나은 환경질에 대한 요구 증가

-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환경기준도 점차 강화될 전망
-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커뮤니티 단위의 환경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양적 환경관리에서 수요자 맞춤형, 매체별 접근에서 통합환경관리로 전환
 -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2013년 주요 환경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의 관심도 크게 증가
 - 친수환경,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녹지, 오픈스페이스, 정온한 환경 등에 대한 요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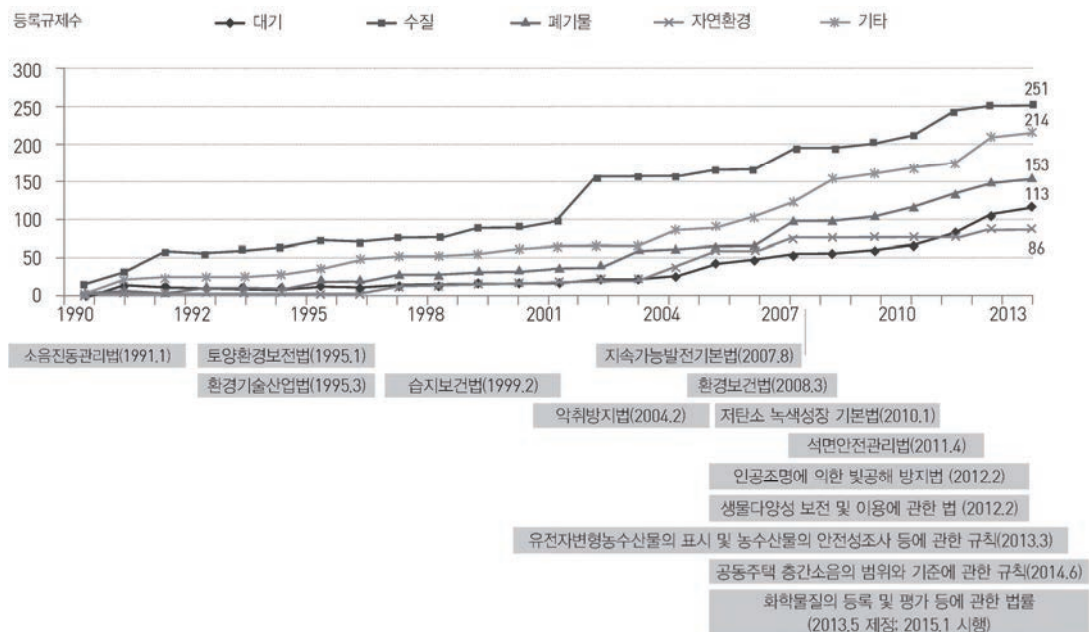
[그림 3-6-8] 구글 검색어 통계로 본 대한민국 환경 관심도

(새로운 환경이슈의 등장) 새로운 환경오염원과 위험 노출과 정책 융복합

- 나노기술 등 기술발전에 따른 안전성과 건강 위해성 문제와 함께, 라돈,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PM 2.5), 빛 공해, 생활주변 방사성 물질 등 새로운 환경오염의 등장,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뜻하지 않은 질병의 돌발적 출현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 환경보건 및 환경안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정책과 건강, 복지, 식품 등의 정책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

- 로컬푸드, GMO 등 식생활 안전 문제도 환경·생태와의 연관성이 강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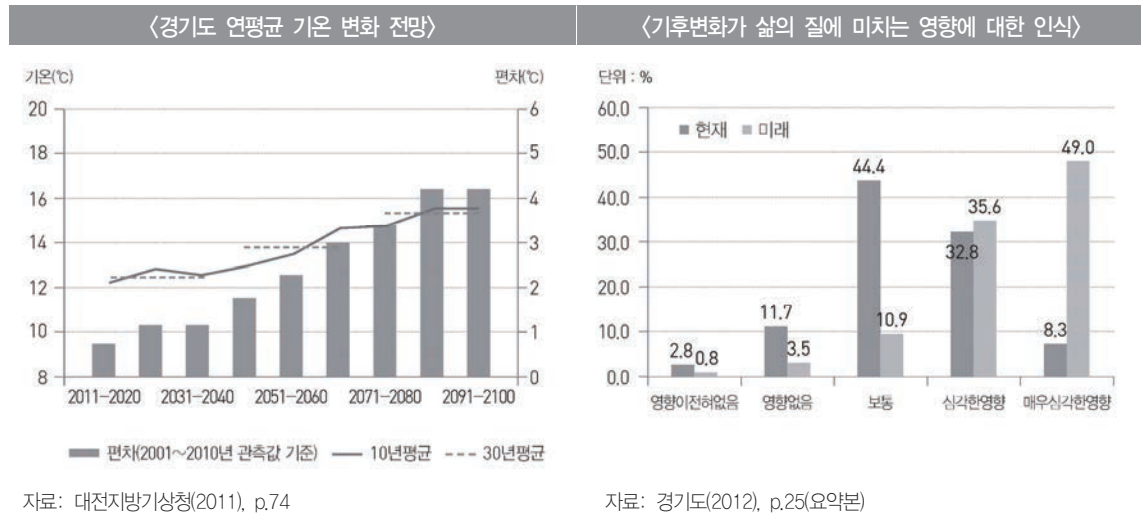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그림 3-6-9] 증가하는 환경 규제의 수와 다변화하는 환경 관심사

☞ (기후변화의 영향 심화) 기후변화는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관리의 중요성 대두

- IPCC 5차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 2℃ 상승시 2030년부터 식량 생산량 감소, 육상 및 담수종 멸종 위험 증가 등 전 부문에 걸쳐 위험 수준이 증가하여 세계 경제 총 손실액이 소득의 0.2%~2.0%(1,400억~1조 4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홍수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 폭염 관련 사망, 물과 식량 부족이 미래의 주요한 기후변화 위험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부는 2℃ 상승 시 우리나라의 2100년 누적 피해비용을 580조 원으로 추정
- 기상청이 제공하는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자료 분석 결과 경기도 연평균 기온은 2020년 12.8℃, 2050년 14.0℃, 2100년 16.0℃로 2000년(11.0℃) 대비 2100년 약 5℃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나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교통, 산업, 도시, 식량 등 주요 인프라 위험 관리 문제가 대두될 전망
 - 위험은 위험한 사건의 발생가능성 혹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파급효과에 의해 가중되는 추세로 표현되며, IPCC 5차 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의 중요성 강조

- 도민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는 현재보다 미래 삶의 질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44.4%), 재해·재난(41.1%) 부문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



[그림 3-6-10] 경기도 기후변화 전망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도민 인식

(기후변화 위험과 고령화·양극화) 기후변화 위험은 기존의 양극화 구조 심화 우려

- 경기도 인구는 2034년 1,35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경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2029년경 초고령사회(20% 상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기후변화 위험과 맞물려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 우리나라 삶의 질 저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34개국 중 1위인 47.2%로 나타남(최진웅, 2014:4)³³⁾
-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는 적응능력이 낮은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집중됨으로써 기후변화 위험이 기존의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세대의 자원 사용 기회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33) 최진웅(2014), “‘삶의 질’로 평가한 우리나라 위상,” KB 지식비타민 14-10호(2014. 02. 06),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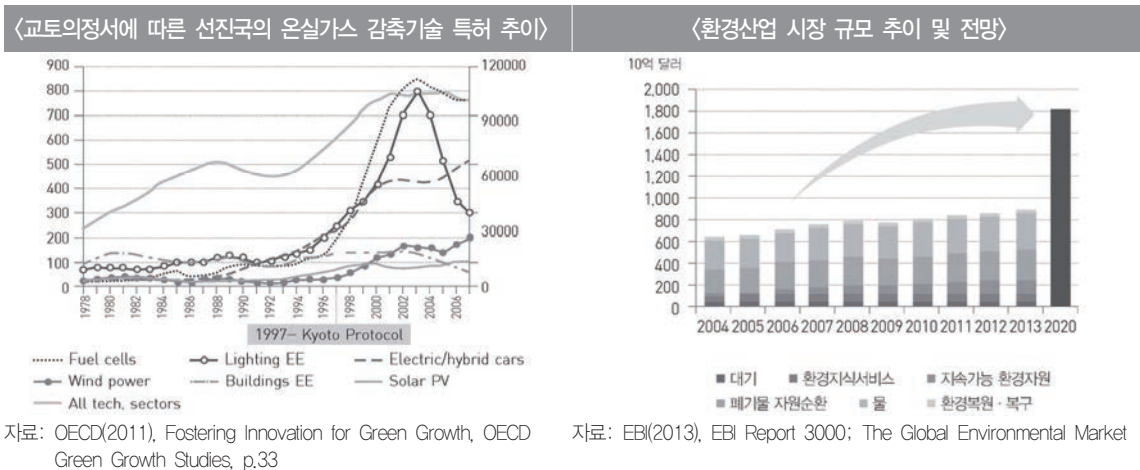
(생태계서비스 중요성 부각)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 증가

- 생태계는 식량, 수자원 등의 공급 기능, 기후, 홍수, 대기 등의 조절기능, 교육, 휴양, 심미적 비물질적 편익, 부양 기능 등 건강, 안전, 경제성장 등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으로 인한 한계효용은 감소하나, 환경에 대한 수요와 한계효용은 증가하며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환경의 중요성 증가(이정전, 2012).
-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으로 ‘자원’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부각
- 휴양, 여가,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기반으로서 산림, 하천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요구

(IT 기술과 환경정책의 융합 및 녹색산업) 환경 융복합 기술 발전이 환경 문제 완화에 기여

-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와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자원고갈 위기 대응으로 녹색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녹색산업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
 - 1997년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연료전지, 대체에너지, 에너지 효율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건수 및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
 - 미래 유망환경산업으로 환경지식서비스, 환경안전보건, 지속가능환경자원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렌탈,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계획
- 환경기술의 발전에 따라 환경 문제가 완화되고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현상 가속화 전망
- 특히 ICT,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 기술은 환경질 감시와 측정, 생물종다양성 모니터링, 자료의 공유와 수집, 환경위험의 사전 예방,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 효과
 - 지능형 교통시스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 등 IT를 활용할 경우 2008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2.33%를 줄일 수 있으며, 보급이 확대될 경우 2012년까지 약 10% 이상 감축 가능한 것으로 추정³⁴⁾
 -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실시간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 보다 정확한 세액 설정이 가능해지는 등 환경 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실제 운용 측면 모두 개선 가능

34) 박상현(2010), “IT 기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IT 대항해 시대 미래 트렌드와 국가전략』, 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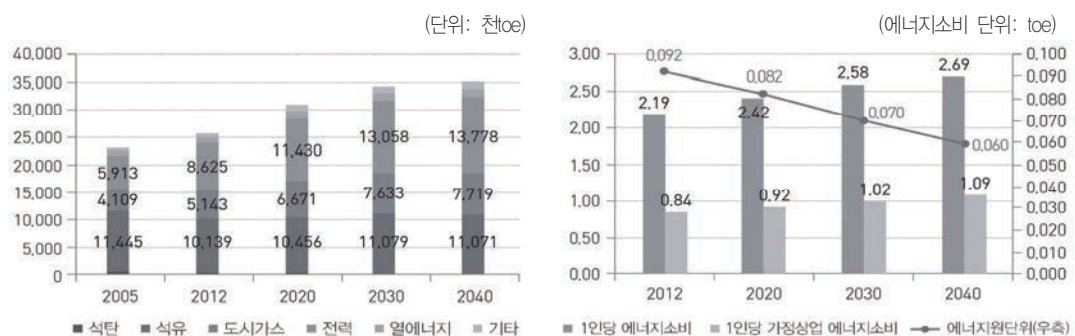
[그림 3-6-11] 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시장 규모 전망

■ (저성장과 환경인프라 투자) 환경개선 비용 대비 효용은 감소할 전망이며 저성장 영향은 불확실

- 환경위험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기존의 하드웨어 공급에 의한 환경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며, 환경질이 좋아지면서 환경개선의 한계비용 대비 효용 가치는 줄어들 전망
- 중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는 환경부하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상하수도, 에너지, 폐기물 시설 등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환경오염 처리의 효율성 저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
- 매립시설의 입지 제한으로 순환형 매립지, 소각시설 대보수 및 연명화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입지 제한에 따른 시설의 순환이용, 자원재활용과 업사이클링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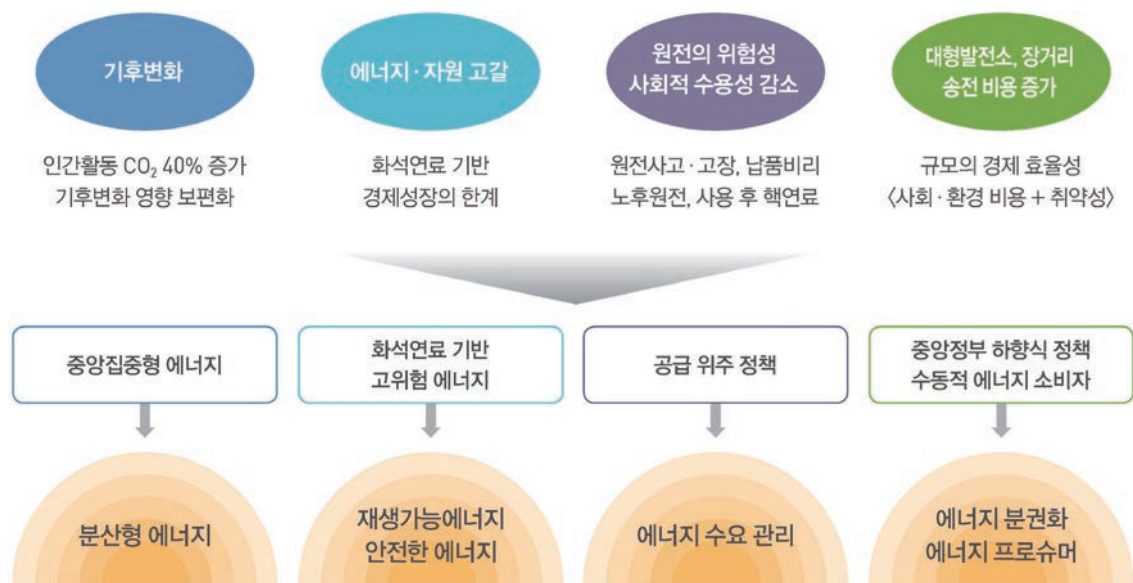
■ (에너지 분권화와 에너지 시스템 변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수소경제로의 전환

- 경기도 최종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2040년 35.6백만toe로 증가할 전망이며, 전력과 도시가스 비중이 증가하고 석유는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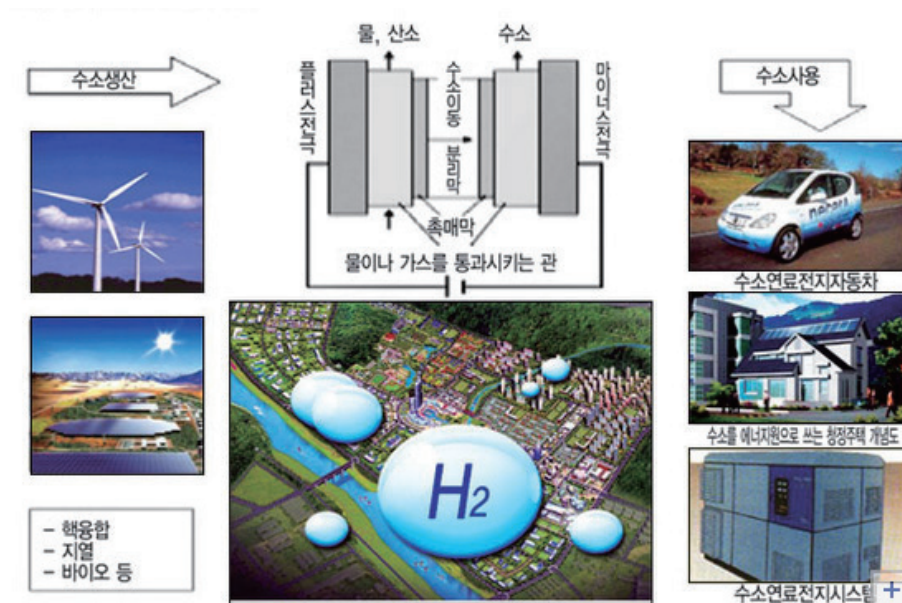
[그림 3-6-12] 경기도 에너지 수요 전망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하고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피크 타임 수요관리를 위한 재생에너지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
- 정부는 분산형 전원 비중을 5%에서 2035년 15%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2% (12)에서 11%로 확대할 계획으로 분산형 에너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는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분권 및 관련 인프라 변화 요구



[그림 3-6-13]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수소는 자체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풍부한 물을 원료로 하고 있어 자원 고갈의 제약이 없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원으로 평가
- 과도기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 연료전지 활용이 증가할 전망이나 궁극적으로 수소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료전지 발전소가 보편화되고 승용차와 버스가 연료전지 차량으로 대체되며 주유소 등 인프라도 수소 기반으로 전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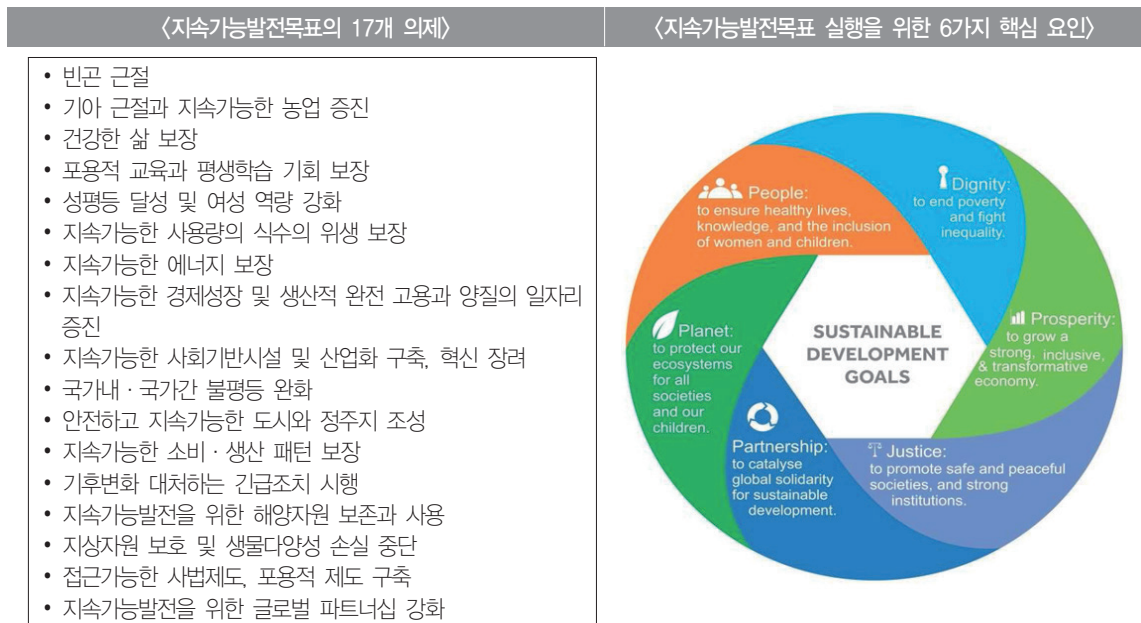


자료: 가스신문(2012), "[2012 신년특집]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수소경제사회 도래, 유가상승 등 외부요인 영향 커"(2012.1.4)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50>

[그림 3-6-14] 수소경제사회의 패러다임

☞ (지속가능발전 목표) 2015년 이후 향후 15년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는 지속가능발전

- 유엔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새로운 '포스트 2015 개발 의제' 17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에너지, 식량, 금융, 기후변화 등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고, 빈곤 문제의 해결책도 경제성장 위주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 즉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해법 추구
- 의제에 대한 각국의 '이행 책임성' 강조, 의무적으로 이행 과정과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를 통해 의제 이행에 대한 표준화된 보고 체계와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국내총생산 등 양적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를 대체하기 위해 삶의 질 등 질적 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할 예정
- 국내 지속가능발전 실천과 함께 선진국으로서 개발원조 확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도 주요 과제로 등장할 전망



자료: UN(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p.20

[그림 3-6-15]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의제와 실행을 위한 핵심 요인

2. 중장기 대응 과제

환경기본권 충족과 환경복지의 강화

- 환경질의 지속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환경기준과 정책으로는 환경기본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므로 환경약자에 대한 인프라 투자, 생활환경 개선 등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및 분배 효과 고려 필요
- 무엇보다 건강한 환경은 예방적 복지 측면에서 의료비용 및 삶의 질 저하로 인한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환경정책과 건강·복지 정책의 연계 필요
 - 환경과 복지를 별개로 접근할 경우 환경정책이 저소득층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에너지, 물 등에 대한 복지차원의 보조금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통합적 관점 중요
 - 환경위험으로부터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피해보상과 환경규제가 동시에 필요
-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환경질과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질과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환경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유해화학물질 사용 증가, 새로운 환경오염 및 위험 대두에 따른 건강 위해성 문제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와 인프라 위험 관리

-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 지역사회의 적응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피해의 사전예방과 저감을 위한 적응 투자 확대
-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설계와 운영에 기후변화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 필요
 - 미래 기후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건물 설계, 홍수 방어 구조물을 설치할 때 설계 빈도 기준을 강화하는 대안,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를 개선하는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의 불확실성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거버넌스 및 과학적 환경관리 기반 구축

- 기후변화, 기술발전으로 예측하지 못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이슈에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필요
- 다양한 환경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정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관 거버넌스 및 사회적 자본 투자 확대
- 통합환경관리, 환경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규제, 정책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 환경분권화에 따른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및 환경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환경관리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및 저탄소 사회 조성

- 중앙집중형 대규모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대응하여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한 태양광, 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 공급 확대
- 에너지 절감, 효율향상 등 수요관리 투자를 확대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줄인 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하며, ICT,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활용 수요관리 기반 구축
- 미래에 도래할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하여 연료전지 발전소, 연료전지 차량, 충전소 등 단계별 인프라 구축
- 교통, 녹지, 주택, 에너지 시스템 등 저탄소형 공간구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순환사회 조성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광역행정의 효율화, 자원순환 산업 지원 등 자원순환 사회로의 촉진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 등 녹색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 녹색생활 실천 및 소비 확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생태계 서비스 가치 증진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휴양 수요의 증가로 환경자원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희소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생물유전자원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건강한 토양 조성과 환경복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제3절

환경 · 에너지 비전과 전략

1. 기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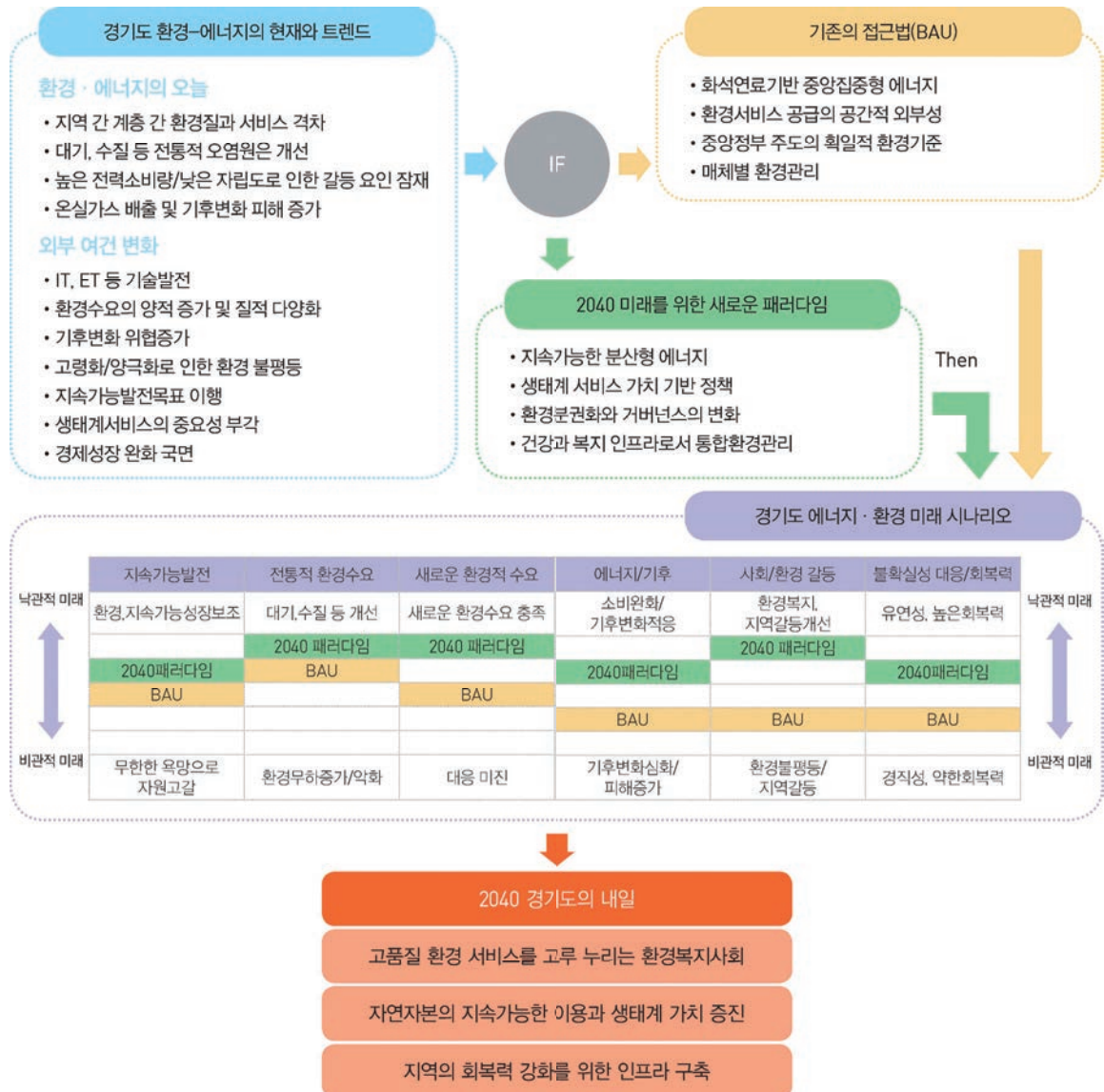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환경질과 서비스 수요 증가, 휴양 및 여가 활동 증가로 하천, 산림 등 환경자산의 이용 및 개발 압력 증가 → 환경부하 증가, 생물서식처 파괴에 의한 생물다양성 감소 → 생태계 서비스 저하 → 복지 감소 ↔ 기술발전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이용 효율화, 환경투자 효과 상쇄 (어떤 효과가 더 클지는 불확실)
-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기상 이변의 심화 및 빈도 증가 → 물 부족(물 부족,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 물수요 및 경쟁 증가, 물재분배 문제, 홍수위험인구 증가), 생물다양성 저하 → 삶의 질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위협 → 건강 등 복지비용 증가 → 환경투자 재원 감소 → 인류 및 생태계 시스템의 적응 능력 저하
- 고령화 · 양극화에 의한 취약인구 증가 → 기후변화 위험, 새로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발현, 대기 중 오존에 의한 사망률 증가 → 지역사회 취약성 증가, 건강 피해
-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 추세 → 화석연료 사용 비중 증가 → 온실가스 배출 증가, 다른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도 심화, 기후변화 심화, 대기오염 증가, 건강 악화 ↔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 효과와의 상쇄
- 기후변화 위험의 불확실성,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면서 위험의 패턴도 변화할 전망 → 인프라 기능 저하 →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
- 매체별 접근 →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은 개선, 새로운 환경위험,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합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미흡, 정책 간 외부성으로 인한 상충 문제 → 환경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존재
- 기후변화 →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 → 지역의 취약성 증대



새로운 패러다임

- 매체별 환경관리에 의한 개별적 환경기준 달성 ⇒ 건강 보호, 복지, 생태적 통합성 유지를 위한 통합적 환경관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통한 환경 · 사회 · 경제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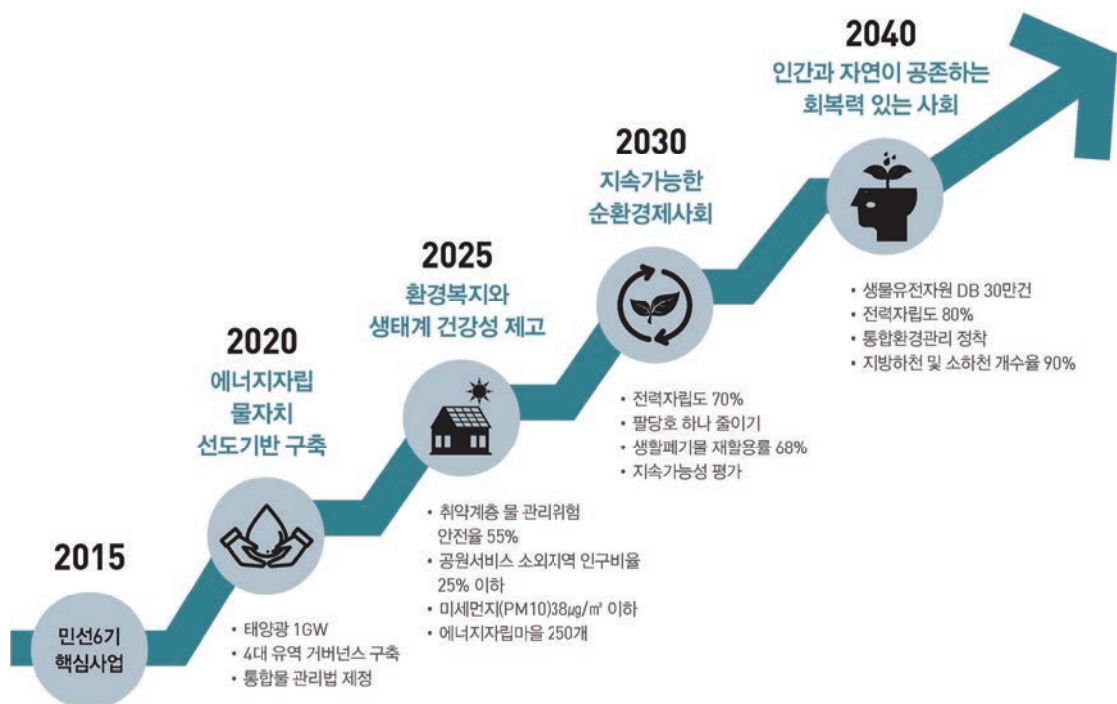
- 건강, 복지와 환경정책의 융복합, 각 정책영역에 환경목표 결합, 정책의 시너지와 공동편익 제고, 거버넌스의 변화, 과학적 지식기반 마련 등
- 화석연료 기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하고 깨끗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 확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자연자원 보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환경보전과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자본 관리, 토지·환경·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 주도의 환경·에너지 정책 결정, 획일적인 환경기준과 서비스 제공 ⇒ 분권화에 따른 환경관리 거버넌스의 변화, 지역 환경기준 설정,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



[그림 3-6-16] 환경·에너지 부문 미래변화 시나리오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비전 및 물 비전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지역 간 환경·에너지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고 에너지 자립, 물 자치를 선도하는 기반과 역량이 확보될 전망
- (2025 변화상) 에너지 자립, 통합물관리, Zero-Waste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리는 환경복지를 실현하며, 생태계 다양성과 건강성 확보
 - 에너지 자립 실현으로 12조 6천억 원의 시장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약 10만 명
 -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55%,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5% 이하, 미세먼지(PM 10) $38\mu\text{g}/\text{m}^3$ 이하, 에너지 자립마을 250개
- (2030 변화상) 물, 에너지, 자연자원의 통합관리와 순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순환경제 경로로의 진입과, 그 지속가능성이 모든 도정에 최우선 가치로 적용
 - 에너지 자립 실현으로 20조 원의 시장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15만 명, 노후원전 7기 대체 효과
 - 전력자립도 70%, 물 수요관리로 팔당호 하나 줄이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8%, 정책 지속가능성평가
- (2040 비전)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역량을 토대로 기후변화 위험 등 외부의 충격과 불확실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춘 사회로 전환
 - 생물유전자원 DB 30만 건, 전력자립도 80%, 통합환경관리 정착,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90%



[그림 3-6-17] 환경·에너지 부문의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경기도 환경을 위한 2040 비전·목표·전략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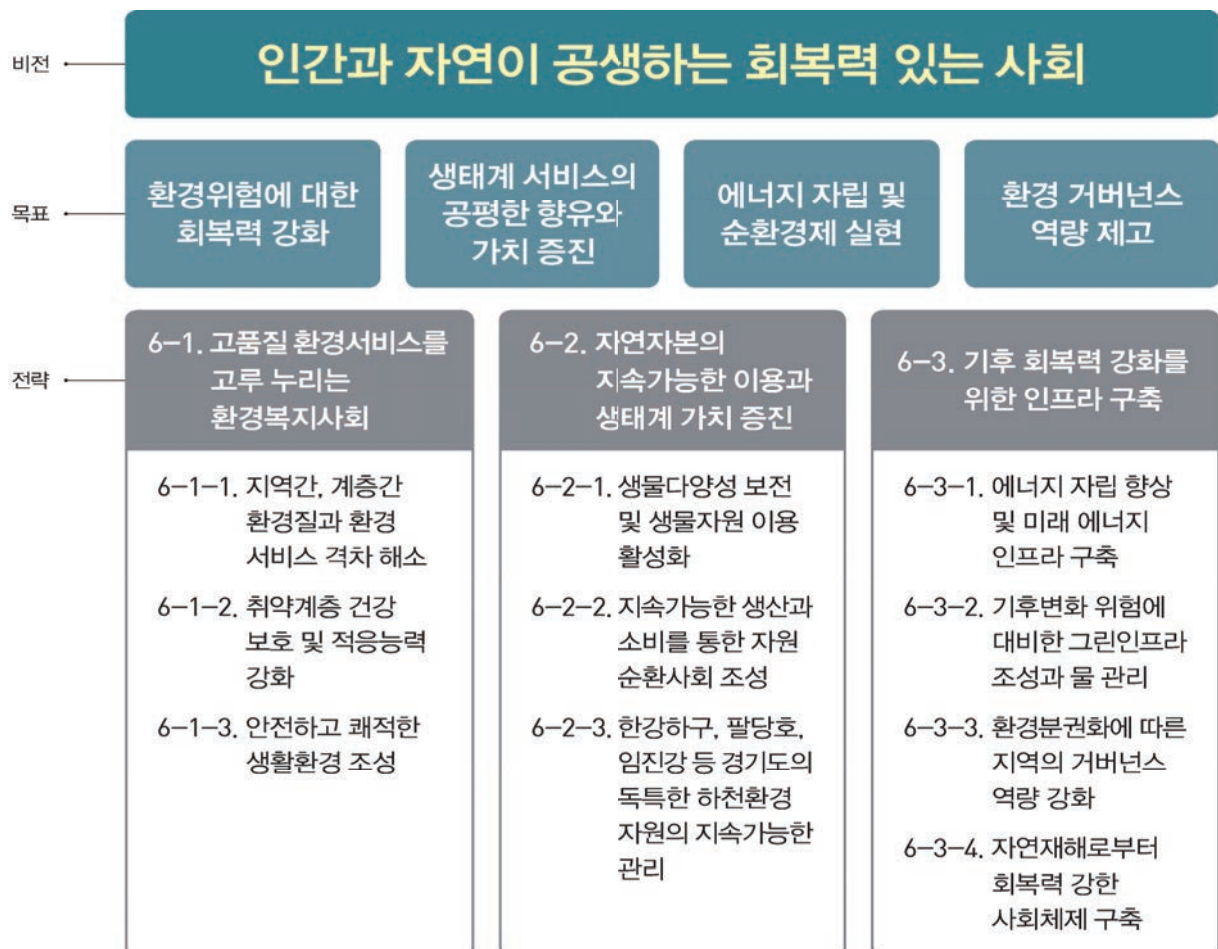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로 설정

4대 목표

- 환경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
- 생태계서비스의 공평한 향유와 가치 증진
- 에너지 자립 및 순환경제 실현
- 환경 거버넌스 역량 구축

3대 전략

-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 사회 조성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지역 간, 계층 간 환경질과 서비스 격차 해소, 취약계층 건강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3개 아젠다 추진



[그림 3-6-18] 환경·에너지 부문 비전·목표·전략

-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경기도의 독특한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3개 아젠다 추진
-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에너지 자립 향상, 그린인프라 조성 및 물관리, 환경분권화에 따른 거버넌스 역량 강화,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강한 사회체제 구축 등 4개 아젠다 추진

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에 대해서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등을 선정함
-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부문에서는 도시생물의 다양성지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는 경기도 에너지비전의 수준에 상응하는 전력자립도(에너지 자립도)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대기오염(미세먼지($\mu\text{g}/\text{m}^3$))	(2014) 51	40	38	35	30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비율(%)	(2014) 33	30	25	20	15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2014) 40	50	55	60	80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도시 생물다양성 지수(CBI)	(2015) 31개시·군 조사 완료	3년 단위로 평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5) -	67	67	68	70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량(GWh)	(2013) 1,964	5,300	9,600	16,700	33,600
	전력자립도(%)	(2013) 29.6	50	60	70	80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2014) 50	60	70	80	90

제4절

환경 · 에너지 부문 아젠다별 추진전략

[6-1]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6-1-1] 지역 간, 계층 간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핵심내용

- 교외지역 생물성 연소 관리 및 중소 배출시설 관리 강화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을 고려한 수질관리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 구도심지역 공원 및 녹지 조성을 통한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
- 도 · 농 간 폐기물 수거서비스 격차 및 에너지 서비스 격차 해소

목표와 지표

- 경기 북부지역 미세먼지 농도 $30\mu\text{g}/\text{m}^3$ 로 저감
- 정수고도처리율 95%, 팔당상수원의 COD농도 $2.5\text{mg}/\text{L}$ 달성
- 공원조성률 87.1%,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 비율 15%
- 농촌 폐기물 수거횟수 주 3회 실시
- 에너지 자립마을 1,000개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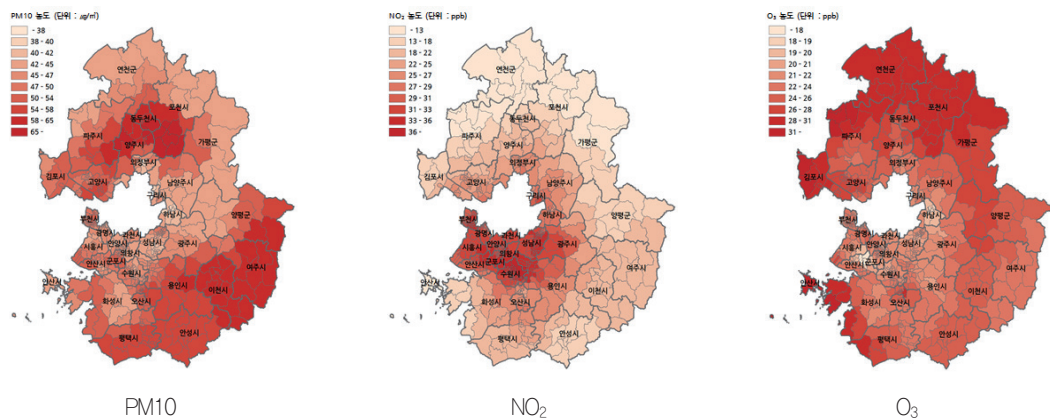
[표 3-6-1] 환경서비스 지표

주요지표		목표연도	2014	2020	2025	2030	2040
대기오염(미세먼지)($\mu\text{g}/\text{m}^3$)			51	40	38	35	30
상하수도	정수고도처리율		13.8%	70%	80%	90%	100%
	팔당상수원 COD 농도		$3.5\text{mg}/\text{L}$	$3.3\text{mg}/\text{L}$	$3.2\text{mg}/\text{L}$	$3.0\text{mg}/\text{L}$	$2.5\text{mg}/\text{L}$
	하수도 설치율		75.1%	80%	85%	90%	95%
공원서비스	공원 조성률(%)		40.7%	50.8%	60.9%	73.4%	87.1%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인구 비율		33%	30%	25%	20%	15%
농촌폐기물 수거횟수			1~2주 1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3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100개	250개	500개	1,000개

추진전략

○ 대기오염 취약지역 관리 강화

-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무단소각 행위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마을단위 종량제' 등 제도정착을 통해 노천소각 관리
- 교외지역 중소 배출시설 관리 강화: 교외지역의 경우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중·소규모 배출시설들이 산재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집산화 유도, 기준이하 시설에 대한 폐쇄 유도, 관리지원 대책 등 필요



[그림 3-6~19] 대기오염 취약지역

○ 상하수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품질 향상

- 팔당상수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관리 정책에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관리 정책으로 전환: 팔당상수원 내의 호르몬제, 항생제 등 미량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전환 필요
-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신속한 도입: 오염원 관리정책으로 팔당상수원은 일정 부문 관리가 되고는 있으나, 오염발생원의 관리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 정수처리시설로 단시간 내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 불가
- 하수도 설치율 제고: 201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하수도 보급률은 93.4%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경기북부 지역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하수도 설치율이 낮아 침수 및 공공수역의 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설치율 제고 정책 필요

○ 구도심 지역 대체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

-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공원소외지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지역 중심의 공원녹지 조성

○ 에너지 서비스의 도농 간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 에너지 취약계층 기준 마련 및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실시

[6-1-2]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적응능력 강화

핵심내용

- 폭염, 홍수 등에 대비한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제공
- 유해물질, 대기오염 등에 의한 건강위해성 저감
- 녹조, 가뭄과 홍수 등 물관리 위험, 도시화 진행에 따른 지반침하 등 대응

목표와 지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화학물질 누출사고 ZERO 경기도' 달성
-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30\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20\mu\text{g}/\text{m}^3$), 이산화질소 21ppb 달성
- 물 관리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안전율을 2040년까지 80% 달성

[표 3-6-2] 환경 안전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4	2020	2025	2030	2040
화학물질 누출사고(건)	321)	20	15	10	5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mu\text{g}/\text{m}^3$)	51	40	38	35	30
취약계층 물 관리 위험 안전율(%)	401)	50	55	60	80

주 1) 녹조, 가뭄, 홍수, 지반침하 등 물 관리 위험에 대한 2014년 취약계층 안전율을 40%로 가정

추진전략

- 환경약자 건강보호 및 복지 향상
 - 환경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조사 및 지원체계 마련: 취약계층 DB를 활용하여 예·경보 사항, 행동요령 등 맞춤형 전파체계 등 서비스 확대
 -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초점을 맞추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개발
 - 재해 취약가구 안전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교육홍보 강화: 커뮤니티 단위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적응능력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환경약자의 인식 증진과 건강 보호 제고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4대 전략 사업 추진

-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줄이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1) 사고대응체계 선진화, 2)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사회 조성, 3) 지역사회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4) 과학적 관리기반조성과 행정역량 강화 등 4개 부문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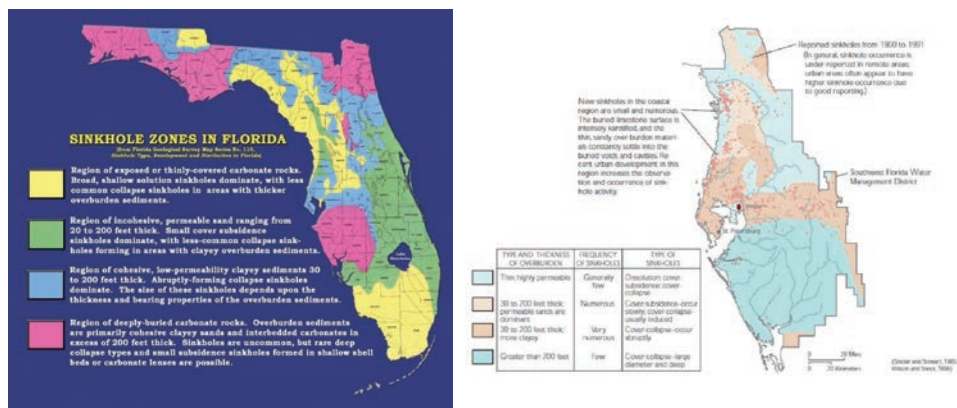
[그림 3-6-20]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략

○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시대 구현’을 위한 대기질 개선 5대 전략사업 추진

- 대기질 개선을 위해 1) 배출시설 관리의 선진화, 2) 친환경 교통체계의 구축, 3)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4) 친환경 도시 및 에너지체계 구축, 5)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및 추진체계 강화 등 5개 부문 전략을 수립하고 부분별로 개선 사업 추진

○ 녹조, 가뭄, 홍수 등 물 관리 위험 및 도시화 진행에 따른 지반침하 대응사업 추진

- 물 관리 위험으로부터의 취약계층 보호
- 도시화 진행에 따른 지반침하 대응
 - 도시지역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여 투수층 증가, 지하수 이용 관리,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사업 등을 추진



자료: 플로리다 지질조사국(Florida Geological Survey) 홈페이지

[그림 3-6-21] 미국 플로리다주 지반침하 위험지도

[6-1-3]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핵심내용

- 오픈스페이스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
- 사회 문제 해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 재해, 재난에도 적응 가능한 경기도형 방재공원 조성
- 산사태 취약지역 지속적 관리

목표와 지표

-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7.5m²/인으로 2040년 15.0m²를 목표
- 경기도 가로수 연장길이는 2040년 8,000km를 목표로 하며, 이 중 2열 가로수 연장 비율을 10% 수준으로 향상
- 도시농업 현황은 2014년 4,550개소(258.8ha)로 2040년 8,200개소(500ha)를 목표
-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4년 15개소에서 2040년 140개소 수준으로 확대
- 500여 개 지방하천 중 20%의 하천이 시작점(발원지)을 중심으로 도랑 및 소하천 등을 발굴, 복원하고 녹지, 공원 등과 연계하여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표 3-6-3] 생활환경 조성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4	2020	2025	2030	2040
1인당 공원 조성 면적(m ² /인)	7.5	9.0	10.5	12.5	15.0
Barrier-Free 도시공원(개소)	—	10	15	20	30
가로수 연장 길이(km)	5,333	6,000	6,500	7,000	8,000
하천 발원지 옛물길 복원(개소)	—	30	50	75	100
2열 가로수 연장 비율(%)	—	3	4	5	10
도시농업 현황	4,550개소 (258.8ha)	5,500개소 (300ha)	6,000개소 (350ha)	7,000개소 (400ha)	8,200개소 (500ha)
로컬푸드 직매장(개소)	15	60	80	100	140

주1: 2014년 기준 1인당 공원 조성 면적 산정 시 외국인수 제외한 경기도 주민등록인구수 적용
 자료(2014년 기준):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경기도(2015),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추진전략

○ 도민의 오픈스페이스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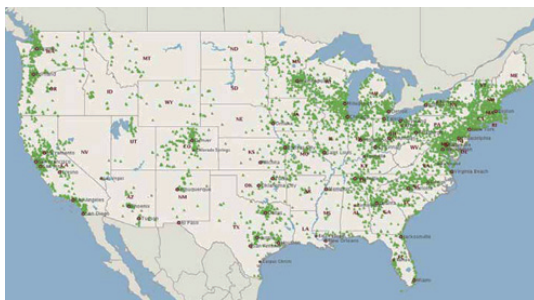
- 미조성 도시공원의 적극적 조성을 통해 1인당 공원 조성 면적 확대
- 공원녹지에 한정되어 있는 오픈스페이스의 개념을 산, 하천, 옥상, 건물 주변 찻두리땅, 텃밭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
 - 다양한 유형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생활권 내 녹화공간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환경 개선 및 친밀도 향상
- 무장애(barrier-free) 도시공원³⁵⁾ 조성
 - 주변 환경 및 공간 구조를 고려하여 접근성 높은 공원을 조성하여 심리적 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이용성 증대

○ 녹지연결성 강화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녹지연결성 및 기능 강화: 저관리 녹지 및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녹지 연결성 확보, 중앙분리대 녹지의 경우 하부식생 보완, 토양 개선을 통한 생육환경 개선, 아교목, 하부관목층 보완식재 등을 통한 다층림 구조 형성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수종 갱신

○ 도시농업 활성화 및 로컬푸드 확대

-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다양한 유형의 도시농업 활성화, 학교폭력, 고령화 사회 등 사회적 문제와 연계하여 치유텃밭과 같은 힐링프로그램 진행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활용
- 생산된 농산물은 저소득층에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그린푸드존 지정 개소 및 범위 확대,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 확대 및 인증제도 도입, 학교급식의 지역 농산물 이용, 경기도 파머스마켓 도입 등 생산자-소비자 간 공간적·물리적 거리 축소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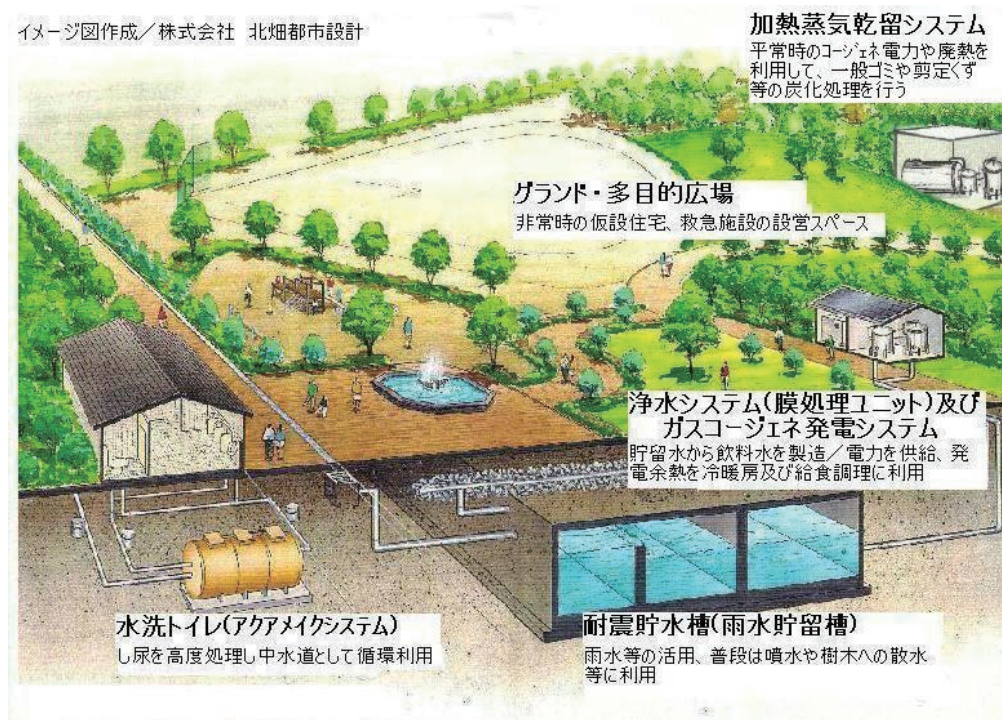
자료: 경기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박은진 외(2013), “안심 식탁을 위한 먹거리 정책 방향,” 이슈&진단 82호, 경기개발연구원

[그림 3-6-22] 미국 커뮤니티 지원 농업 분포, 영국 쿡링 버스(cooking bus)

35) 일본에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임산부, 아이, 노인 등 모든 사람들이 운동이나 놀이의 장소,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공원길이나 화장실도 배리어프리 추진하고 있음.

○ 전원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활용 및 관리

- 재해, 재난에 대비한 경기도형 방재공원 조성
-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자료: 동경도 공원 협회 홈페이지(<http://www.tokyo-park.or.jp/>)

[그림 3-6-23] 일본 방재공원 조성 개념도

[6-2]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6-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핵심내용

- 경기도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생물산업 지원 기관 조성
- 도시생물다양성지수와 바이오톱지도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가치평가



목표와 지표

- 경기도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 LBSAP) 수립
- 경기도 생물유전자원 관리 체계구축 및 생물산업 활성화 지원 기관 설립
-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관련 국제회의 유치
- 도시생물다양성지수(City Biodiversity Index: CBI)를 활용한 관리
- 경기도 바이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도) 통합 구축

[표 3-6-4]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지표

주요지표	목표연도	2015	2020	2025	2030	2040
LBSAP		2016년 수립 후 이행계획의 수행 여부 지속적 평가				
생물유전자원 DB		-	10만 건	15만 건	20만 건	30만 건
생물자원 특성화 기관		-	5개소 지정 (대학, 산업체) 1개소 조성 (생물자원관)	5개소 지정 (대학, 산업체)	10개소 지정 (대학, 산업체)	20개소 지정 (대학, 산업체)
국제회의 유치		생물다양성 관련회의 개최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		-	31개 시·군 분석완료	3년 주기로 평가		
경기도 바이오톱지도 구축		-	31개 시·군 구축완료	5년 주기로 지도 갱신		

추진전략

○ 경기도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이행

-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참여가 생물다양성 보호에 큰 기여를 함
-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유용한 계획
- 경기도에서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

○ 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 지역의 유용 생물자원의 발굴과 토종자원의 보전
 -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현황, 유용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토종 자원에 대한 조사와 DB화
 - 정부가 계획하는 생물종 및 전통지식의 신규 발굴(특히 전통지식, 2만 건 추가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발굴사업 추진
- 환경이슈는 글로벌 협력 대응과 함께 지역적 실천이 중요하므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역량 강화
 - 국제협력 대응 및 국제동향 파악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확보, 국제동향과 선도적 사업의 이해와 그에 따른 정책반영
 -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관련 국제회의를 경기도가 유치하여 국제 동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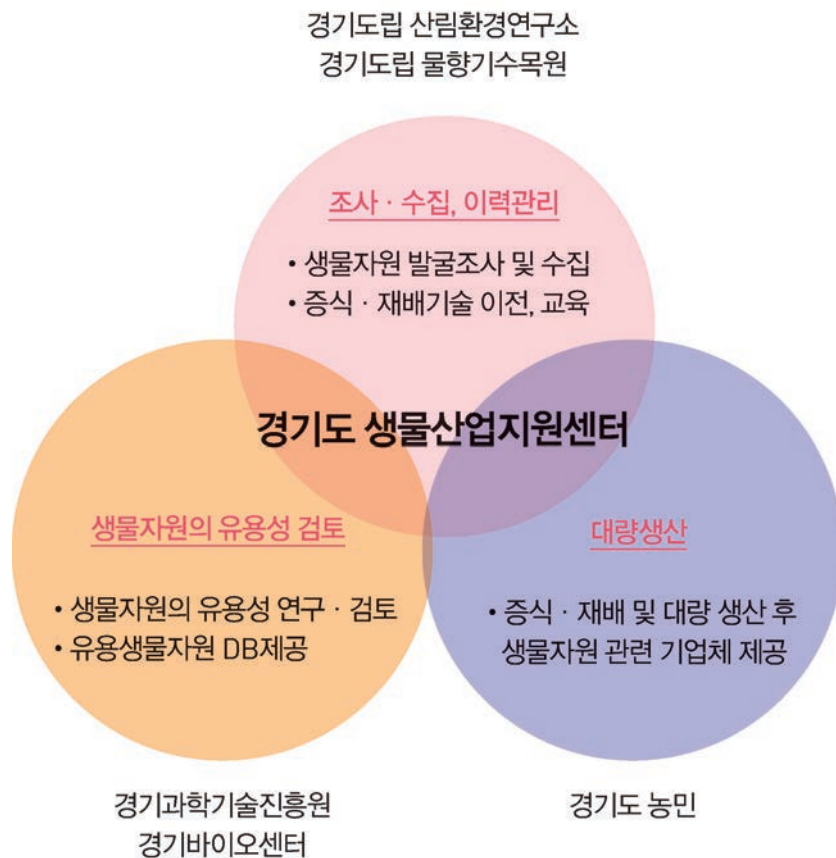
[표 3-6-5]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국내 생물자원산업 파급효과 (환경부 발표)

연도	2009년				2014년			
	시장규모	생물자원 이용비율	파급효과(억 원)		시장규모	생물자원 이용비율	파급효과(억 원)	
구분			0.1% 이익공유 시	5% 이익공유 시			0.1% 이익공유 시	5% 이익공유 시
바이오의약	14조 7,879억 원	10%	583	809	18조 2,868억 원	10%	707	980
바이오화학 (화학품)	5조 1,686억 원	100%	1,945	2,695	7조 379억 원	100%	2,758	3,822
		20%	407	564		20%	654	907
		10%	194	270		10%	318	441
바이오식품	1조 2,000억 원	100%	477	662	3조 176억 원	100%	1,185	1,642
		20%	94	130		20%	375	519
		10%	48	66		10%	187	260

자료: 환경부(2011), 『나고야의정서(ABS) 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물자원 활용 지원 기관 조성

- 경기도 생물자원 관련 산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생물자원 산업을 지원할 기관의 필요성 높음
- 생물자원의 수집 및 유용성 평가 진행하고, 유용생물자원으로 확인된 생물자원에 대해 확실한 이력관리를 통해 재배·증식 후 대량생산하여 산업체에 제공하는 역할 중요
- 생물자원 활용 지원 기관 조성을 통해 생물산업부문에서의 선제적 대응
- 경기도 생물자원 활용지원 기관의 역할
- 기존 기관을 활용한 '경기도 생물자원활용지원센터' 건립 추진: 경기도가 기존에 갖추고 있는 기능과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수립



[그림 3-6-24] 경기도 생물산업지원센터 조성방안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생태계 가치평가 기반마련

-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 구축 및 활용
- 경기도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도) 통합 구축

[6-2-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핵심내용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활성화
- 경기도 폐기물 제로(zero waste) 실현 및 시·군 목표관리제 도입
- 산업의 자원·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녹색산업 육성

목표와 지표

-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70%, 소각률 28%, 매립률 2%를 목표
- 녹색 생산·소비실천계획을 10년마다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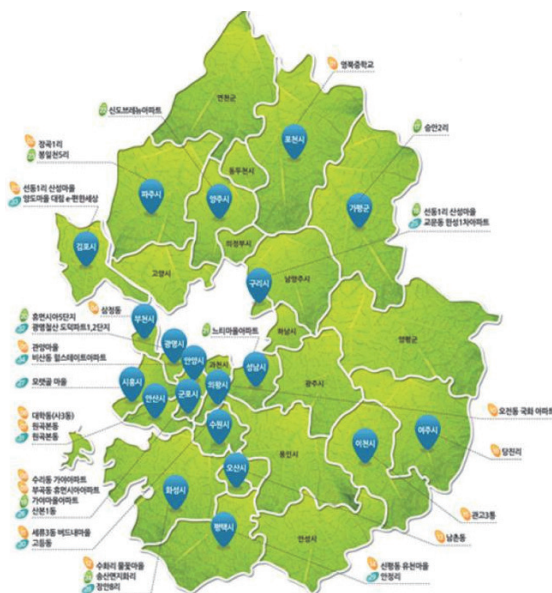
[그림 3-6-25] 주요지표 목표현황

[표 3-6-6] 자원순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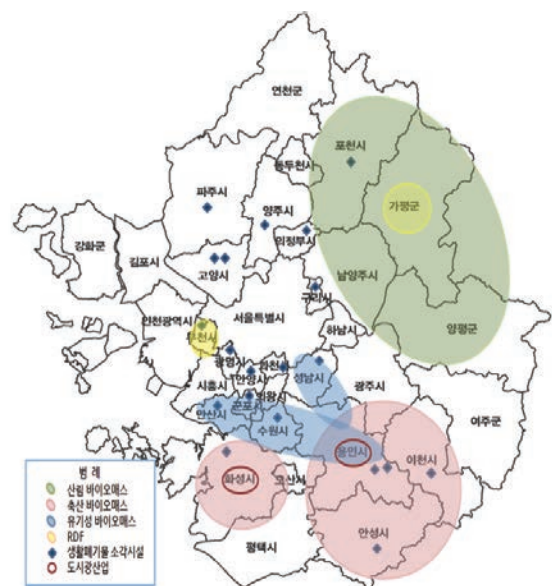
주요지표	목표연도	2013	2020	2025	2030	2040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7	67	68	70
생활폐기물 매립률(%)			6	5	4	2
녹색 생산·소비실천계획 수립(개)		—	32	32	32	32

추진전략

- 경기도 폐기물제로계획(zero waste plan) 수립 및 자원순환 조례 제정
 - 지역단위의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의 제정
 -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순환형 사회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지역단위의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의 제정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목표 설정 및 시·군 목표관리제 추진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시·군 목표관리제 추진, 공공청사, 그린캠퍼스, 학교 등 폐기물 배출 제로화 추진, 자원순환 On-Off 라인 포털 운영(모바일App개발, 사회적 일자리 연계)
- 친환경 생산·소비의 지역사회 확산 및 제도화
 - 친환경 생산·소비의 지역사회 확산
 - 현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구매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민간으로의 확대전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재활용(up-cycle)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 자원 재활용 관련 종합시설(업사이클센터) 구축으로 관련 산업 및 재활용 문화 확산을 견인하는 거점을 조성하고, 재사용 및 재 제조 관련 산업군의 인큐베이터 및 엔진 동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그림 3-6-26] 자원순환 초록마을 현황도



자료: 이정임(2008), 『경기도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그림 3-6-27] 경기도 폐자원 에너지 활용도

○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산업지원체계 확산

- 세계 폐기물배출량은 연간 50억 톤, 약 457조 원 거대시장(CyclOpe, '09)으로 폐기물이 새로운 가치창출과 성장 원천으로 주목되면서, 정맥산업인 자원순환산업 발전 필요³⁶⁾
- 기업의 청정생산(Clean Production)을 통한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감량 및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하고 자율적 에코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³⁷⁾하며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제로화 사업을 추진

- 자원순환마을 조성과 사회적 일자리 연계

- 지역의 자원·에너지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NGO, 행정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순환마을의 조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경기도의 지역별 폐자원 발생량, 에너지 이용 가능량 분석 등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별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전략 마련
- 특히 지역별 특화된 폐자원 에너지단지(북부—산림바이오매스, 남부—유기성 바이오매스) 조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자원순환사회 형성

36) 환경부 외(2009.1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 정맥산업: 폐자원 수집·분류 → 3R(재활용·재사용·자원화) → 소각열회수 → 처리 → 생산 등 자원순환의 전 과정(Life Cycle)을 관리하는 폐기물 산업.

37) 일본 동경도 포함 주변 8개 도현시의 포장재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조(<http://www.diet-youki.jp/>).

[6-2-3] 한강하구, 팔당호, 임진강 등 경기도의 독특한 하천·호소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핵심내용

- 하천관리를 이·치수 중심에서 친수, 문화 등 유역공동체 개념으로 전환
-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등 유역과 DMZ 평화생태공원을 연계하여 통일과 미래 준비
- 한강하구, 팔당호 등 수생태계가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활용 확산 및 가치 증진 중심의 관리 지속

목표와 지표

[표 3-6-7] 수생태계 관리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4	2020	2025	2030	2040
대표지점 총인 농도(ppm), 팔당댐 2지점	0.036	0.032	0.030	0.029	0.025
수생태계 건강성 ³⁸⁾ 경기도 측정망 (개소수) ³⁹⁾	0	50	75	100	150
유역공동체 구축 및 운영(개소)	—	1	2	3	4 ⁴⁰⁾
한강하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서울시 구간 ⁴¹⁾	계획 수립	이행계획	사업 추진	지속
하천관리 조직 통합	—	시범운영 ⁴²⁾	도 조직 통합	시·군과 연계 통합	통합완료

추진전략

- 유역공동체 관리정책 도입
 - 총량관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다 질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보완 지속
 - 점오염원은 공공 중심, 비점오염은 민관협동으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
 - 수질관리의 이슈인 부영양화와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 그 원인물질인 총인을 저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대표적 유역공동체의 구축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경기도형 모범사례로 정착
 - 대표적 사례로 통일 대비 DMZ 생태평화공원과 연계한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공동체 기반 구축
 - DMZ 평화공원을 임남댐, 평화의 댐까지 확장하고 장래에는 임진강 수계까지 연결하여 관리 시도

38) 전국단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지점, '07년 540개소 → '09년 720개소, '11년 880개소, '12/'13년 960개소로 확장 중 (환경부, 2013), 경기도 차원의 조사 지점은 현재 전무.

39) 경기도 소재 지방하천 501개소 중 현재 국가 측정망 75개.

40) DMZ-임진강 공동체를 시작으로 팔당상하류 한강공동체, 평택호/시화호 공동체 등 다양한 유역공동체 운영 고려.

41)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계획, 서울시, 국토부 합동 연구, 2015.

42) 총량과 하수, 치수와 재난 통합 시범 운영.

○ 하천관리 공공조직 통합과 일원화 시도

- 물 관리 수요맞춤형 조직구조 전환 및 보완: 물 이용, 지속가능성, 수생태 등 새로운 서비스 테마로 전환, 시·군은 지역현안을 토대로 유연한 조직 운영을 장려하는 정책 수단 도입
- 이치수와 환경, 방재 등 하천관리 부서의 점진적 기능 통합
 - 분산된 업무의 조직간 업무 연계 우선 통합, 실질적 조직 통합은 2단계로 유도
 - 점진적 조직 통합 조정을 통한 일원화 체계 운영, 도 조직 통합 후 시·군 조직과의 연계, 일원화 정착
- 관리 관점을 이치수 중심에서 생태계, 친수, 경관 등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 전환
 - 하천이 제공하는 다양한 수생태계 서비스 유형 진단 및 조사,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 시도
- 유역공동체 실현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관리대책’ 제도화 및 정착
 - 참여형 비점저감대책 시도: 1) 도심형: 도로, 맨홀 및 빗물받이 청소 등 실천활동 강조, 2) 농촌형: 침식, 유실 방지 중심의 표토관리, 건강한 흙을 가꾸는 활동 강조

○ 생태성과 자연성을 고려한 친수와 문화관광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

-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도 관내 지자체와 함께 서울, 인천과의 협의를 주도하고 보다 적극적인 한강하구 활용 방안 추진

〈유럽의 폭넓은 수생태건강성 모니터링 사업 사례〉

- 영국(면적 242,900km²)은 8,300여 개, 아일랜드(면적 70,273km²)는 3,000여 개 구간을 선정하여 조사, 독일(면적 357,022km²)은 약 7,900여 개, 덴마크(면적 43,094km²)도 10,000여 개 정도 지점 조사 중⁴³⁾
- 유럽물관리지침의 지점 선정기준으로 유역면적 2,500km²당 1개소 제시 중

[표 3-6-8] 유럽물관리지침(WFD)의 지표수 감시모니터링 주기 규정

평가요소		강(하천)	호수	전이역(기수역)	연안
생물학적	식물플랑크톤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다른 수생식물	3년	3년	3년	3년
	대형무척추동물상	3년	3년	3년	3년
	어류	3년	3년	3년	NA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망 운영 정보 지속 추진하면서 추진 실적 평가
- 경기도형 환경정보시스템 운영-수질/수생태계 조사 자료 DB 구축 및 공개
- 한강하구 자연성 회복 및 하구연안 이용방안(안) 수립 및 이행
- 시화호, 화성호의 하천 생태성, 친수 활용성 강화 전략 추진
- 경기도 및 시·군 물 관리 조직의 점진적 통합화 유도

43) 우리나라 면적은 100,210km².

[6-3]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3-1] 에너지 자립 향상 및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핵심내용

- 분산형 에너지 확대, 수요관리 강화 등을 통한 경기도 에너지 시스템 전환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향상을 위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 공급 확대
- 산업, 가정, 상업 부문 에너지 효율을 30% 높여 에너지 소비 절감
- 에너지 투자를 ICT, IoT 기반 신산업과 연계하여 성장동력 창출 및 수소경제 대비 인프라 구축

목표와 지표

- 경기도 전력자립도를 2013년 29.6%에서 '40년 80%로 향상
- 2013년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3년 6.5%에서 '40년 30%로 확대
- 2040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35.6백만toe로 추정되며, 에너지 효율 향상 30% 목표

[표 3-6-9] 에너지 자립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3	2020	2025	2030	2040
전력소비(GWh)	102,227	132,907	142,372	151,837	160,209
에너지 절감에 의한 목표 수요(GWh)	—	119,616	121,016	121,469	112,146
신재생에너지 발전량(GWh)	6.5% (1,964)	10% (5,316)	15% (9,610)	20% (16,702)	30% (33,643)
전력자립도(%)	29.6	50	60	70	80

추진전략

- 에너지 효율 혁신
 - 공공기관과 아파트 전체 조명을 100% LED로 교체
 - 모든 신축 공공청사는 에너지자립 건물로!
 - 신축 도청사를 경기도 에너지비전의 상징물로 설계
 - 노후산단 중심 그린 리모델링 및 생태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IC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전력수요관리

- 열에너지 재활용, 공정개선, 고효율 설비 등 산업단지 그린리모델링 및 생태산업단지 조성
- 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
- 대기업-중소기업 에너지상생 협력 프로그램
- 컨설팅에서 사후관리까지 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 가정 에너지 진단-에너지 장터-에너지 행복마켓 운영
 - 상가 및 빌딩 계약전력 컨설팅 및 커뮤니티 조성 지원
 -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린홈 네트워크 구축 및 스마트 에너지고지서 확대



자료: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6415196>

[그림 3-6-28] 네덜란드 태양광 자전거 도로



자료: 수자원공사 내부자료

[그림 3-6-29] 시화호 에너지 클러스터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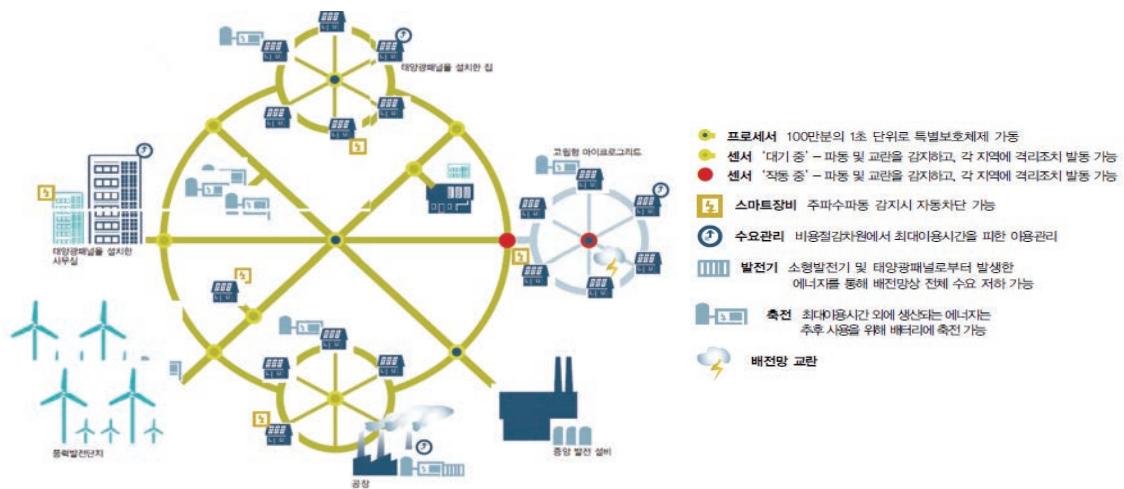
○ 에너지 생산 혁신

- 공공청사, 공장, 주택, 학교, 농장을 발전소로! 태양광 1GW 프로젝트
 -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설치가능 장소 타당성 조사 및 정보공개
 - 경기도 발전차액지원 50MW로 확대
 - 시민햇빛발전소 및 협동조합 100개 조성, 경기도 태양광 예비아파트 시범사업 및 의무화
-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에너지타운 조성
 - 시화호 에너지클러스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에너지 자립마을 100개소 조성

○ 에너지 신산업 혁신

- 넥스트판교(제2판교)를 사물인터넷(IoT)과 에너지가 융합된 혁신허브로!
 - 사물인터넷, 에너지, 핀테크(FinTech) 등 융복합 기술이 결합된 Flagship 혁신 프로젝트 적용
 - 미래 에너지 기술의 쇼케이스로서 건물, 교통, 공공서비스 설계
- 경기도 북부에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생산, 제조, 실증단지 클러스터 조성
 - 통일에 대비한 에너지 생산 기지 활용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심으로 에너지자립 스마트시티 조성
 -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기술과 정책을 구현한 에너지자립 스마트시티 조성(대부도 등)
- ICT 융합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데이터 수집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ICT와 에너지 기술 조합 실용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해외수출형 에너지 신산업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자료: 그린피스 국제본부 · 유럽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2012), 『에너지[혁명]: 한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망(한글 요약판)』, p.21

[그림 3-6-30] 스마트그리드

○ 수소경제 대비 에너지 인프라 구축

-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 정부 로드맵에 의하면 2013년 18개의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813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CNG 충전소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경우 과도기적 가교 역할 수행 가능

[6-3-2]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한 그린인프라 조성 및 물 관리

핵심내용

-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⁴⁴⁾
- 저영향개발 등 기후친화적 도시계획⁴⁵⁾
- 환경서비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토지이용, 도시계획과 연동된 통합 물관리

목표와 지표

-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개수율을 2020년 60%, 2030년 80%, 2040년 90% 달성 목표
- 도시계획의 기후변화 반영 비율 5%로 가정, 2040년 40% 달성 목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물관리 관련 법안 제정·개정을 2040년까지 2회 실시

[표 3-6-10] 기후변화 대비 지표

주요지표 \ 목표연도	2014	2020	2025	2030	2040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50	60	70	80	90
도시계획에 기후변화 사전 고려비(%)	51)	15	25	30	40
통합물관리 관련 법안 제정 누적 횟수	0	1	2	2	2

주 1: 2014년 도시계획에 기후변화 고려 정도를 5%로 가정

추진전략

-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홍수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국가하천 개수율은 90%로 높은 편이지만 지방하천과 소하천 개수율은 약 50% 정도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홍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피해예상 지역에 대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약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나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생태하천 관리 사업과 연계 필요
 - 물 순환적 측면에서의 가뭄대책 수립과 가뭄발생시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 대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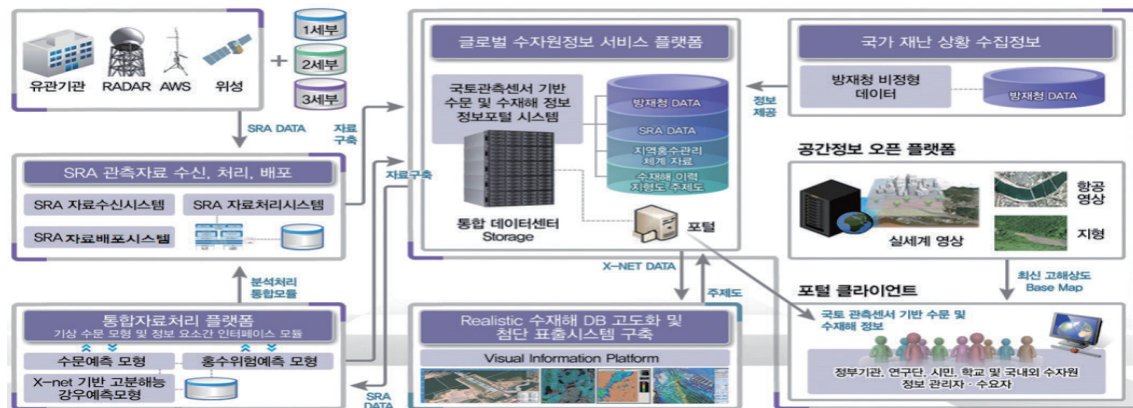
44) 폭염, 홍수 등 극한기후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 도로, 공원녹지, 물순환체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인프라 설계 및 위험관리.

45) 도시계획, 도시개발에 기후변화 영향 사전 고려.

- 경기도 통합물관리기본조례에 근거를 둔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가뭄발생 시 대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여 가뭄상황 파악 및 대책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 경기도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인프라 수준도 높은 편이므로 필요 시 시설을 확충하고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극한 상황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시설 이용의 최적화 실현
- 인프라 유지관리의 선진화
 -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육성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필요



자료: 황의호 외 (2014), “빅데이터 기반 Glocal(global+local) 수자원 정보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 소개,” 『물과미래』, 47(11), pp.38-46

[그림 3-6-31] ICT 기술기반 수재해 대응체계

- 물부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물수요관리 사업 추진
- 경기도 1인 1일 수돗물 사용량은 281L로 특·광역시나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양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생활용수량의 25% 정도를 수세식변기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물값이 저렴하여 물절약에 소홀한 것이 사실
- 경기도에서는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수도요금 정책을 수립하여 물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물부족으로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물수요관리 정책이 필요

○ 저영향개발 등 기후 친화적 도시계획 지침 수립

-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기후 변화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 지침 마련
-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 도시재생, 유형별 단위 개발사업 추진 등에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적 적용기법을 개발하여 보편화시킴

○ 환경서비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 기후변화에 대비한 치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수질개선 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및 보수 체계 구축
- 시설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정보화 및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 임진강 유역 물-에너지 Nexus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에너지 자원 공동대응 체계 구축
-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및 개성 중심의 물수요 증대, 북한의 에너지 부족 등을 연계시켜 공동 자원 이용 방안 모색
- 임진강의 대규모 댐 시설 설치, 남북 물-에너지의 효율적 연계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토지이용, 도시계획과 연동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

- 20개의 물 관련 법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물관리 체제의 통합을 위해 물기본법 제정
-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물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수, 치수, 환경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물 관리 업무의 통합 여건 조성
- 유역단위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물 관련 예산도 유역별로 통합하여 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역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체제 구축
- 물기본법의 실천 전략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의 세부내용 개정
- 유역 내 개발계획과 각종 개발 사업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제도화시킴
- 수질관리만 다루고 있는 기존의 수질오염총량제를 수량에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모색

[6-3-3] 환경분권화에 따른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핵심내용

- 환경분권화에 따른 경기도와 시·군의 행정기능 조정 및 관리 역량 제고
- 환경오염 정보 공개 및 커뮤니티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환경오염 통합정보시스템 등 과학적 환경관리 기반 구축
- 경기도와 시·군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목표와 지표

-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 경기도 환경통합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티 단위 맵핑 툴 구축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속가능성 평가 및 31개 시·군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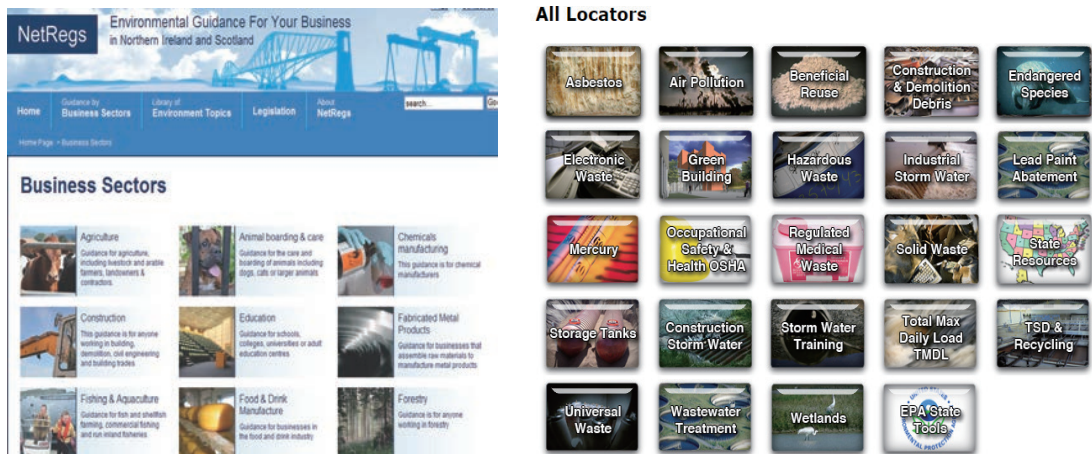
[표 3-6-11] 환경관리 지표

목표연도 주요지표	2013	2020	2025	2030	2040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	1, 2종 사업장	3, 4, 5종 사업장 기반구축	3, 4, 5종 사업장	3, 4, 5종 사업장
경기도 환경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환경정보통계센터 설치·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빅데이터 활용	통합 정보시스템 고도화
커뮤니티 맵핑 툴 구축	—	환경관련 커뮤니티 맵핑 툴 개발	커뮤니티 맵핑 툴의 정책적 활용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맵핑 툴	시스템 고도화
지속가능성 평가	경기도	31개 시·군 평가 및 조례 제정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 구축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지속가능성 평가 고도화 및 환류체계 강화

추진전략

- 경기도와 시·군의 환경관리 권한 조정 및 규제의 효율성 제고
 -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최상가용기술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하는 환경통합관리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 제고
 - 정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배출시설 인·허가권을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이양하고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나 지자체 중심의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세분화된 환경기준 설정 및 규제 집행 능력 확보
 - 오염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고려한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관리 사각지대 해소
 - ICT 기술을 환경질 감시와 측정, 생물종다양성 모니터링, 자료의 공유와 수집, 환경위험의 사전 예방 등 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



자료: (좌) NetRegs 홈페이지(<http://www.netregs.org.uk>), (우) EPA 홈페이지 <http://www.epa.gov/statetools/index.cfm>

[그림 3-6-32] 규제 준수를 위한 인터넷 기반 지원시스템

- 경기도·시·군 환경관리 기능을 재배분하여 현장 중심 환경관리 기능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대신 경기도의 지역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정책 개발 기능 강화
 - 배출시설 지도단속권한을 시·군으로 일원화하고 광역 단위의 감시 기능 강화
 - 환경관리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기능 확대
-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환경오염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 환경오염 정보, 배출시설 정보, 유해물질 취급정보 등 환경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환경정보 제공
 -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 환경오염 및 위험에 대한 커뮤니티 맵핑 툴 제공
 - 환경위해시설, 독성물질, 환경서비스,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기상자료 등 환경관련 공간 정보와 인구적 특성, 환경성질환 및 건강, 주거 환경, 노출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통합한 정보 시스템 구축
 - 취약계층, 커뮤니티 단위 환경위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맵핑 도구 제공
 -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및 인프라 투자 확대
 -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및 사업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 획일적인 첨단기술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분산형 자원관리 시스템, 적정기술 개발 및 적용
-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을 활용한 환경관리 Living Lab 활성화

○ 환경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환경관리 기반 구축

- 환경오염 측정망 고도화
 - 공단, 대도시 주거 밀집 지역 등 대표 측정소를 선정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수질 부문 건강 위해성 관련 모니터링 보완 및 측정망 고도화
 - 라돈, 빛 공해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오염 물질 관측망 확충
- 환경오염예보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고 건강위해도가 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예·경보제를 확대 보완하고, 예·경보 등급에 따른 대응체계 효율성 제고
 - 녹조예보제 운영을 통한 상수원 보호와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
- 배출시설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환경관리 도입에 따른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료를 일원화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정보통계센터를 설치하여 환경정보와 통계 생산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담당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모니터링

- 경기도와 시·군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평가
 - 경기도와 시·군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공표
 - 국제사회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한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기도 ODA 규모 확대 및 개발원조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6-3-4]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강한 사회체제 구축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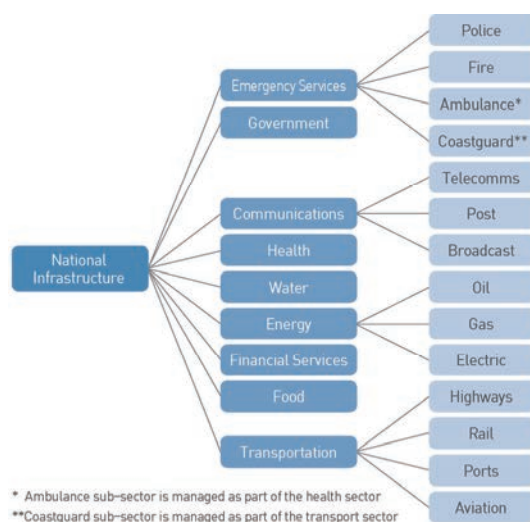
- 자연재해와 관련한 주요 국가 기반시설 및 지역사회의 대체재 발굴 및 시스템 운영
- 자연재해로부터의 사회 회복력 측정을 위한 정량화 기법 개발
- 신규산업단지 대상 유해물질 및 소방수 저류조 설치 시범사업 추진
- 자연재해에 취약한 유해물질 저장소 안전성 확보

목표와 지표

-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체재 발굴 및 시스템 마련이 매우 중요
 - 우리사회 많은 부분에서 대체 가능성을 알고 준비한다면 어떠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자연재해 관련법과 제도를 재해 유형이 아닌 프로세스 중심의 재난관리 체제로 개편
 - 기존의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등의 유형별 구분보다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자연재해를 해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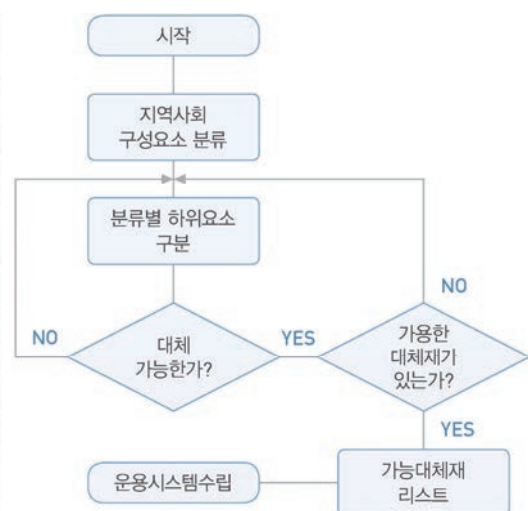
추진전략

- 가뭄, 홍수, 지진, 태풍, 화재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한 주요 국가 기반시설 및 지역사회에서의 대체재 발굴 및 시스템 운영 필요



자료: 강상준 외(2013),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도입방안, 경기연구원

[그림 3-6-33] 국가 기반시설과 하위부문 (예)



자료: 강상준 외(2013),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도입방안, 경기연구원

[그림 3-6-34] 대체재 시스템 수립방안(안)

- 대체재 발굴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인적자본을 비롯하여 전력, 용수, 기반시설의 물리적 자본 등 우리사회시스템 부문별 검토가 필요하며 각 부문별로 자원의 풍족성, 대체 가능성 등을 파악해야 함
- 다양한 대체재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대체가능성이 검토되면 최종적으로 지역화(localization) 등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재를 운용할 것인지 시스템 수립이 필요

○ 자연재해로부터의 사회 회복력 측정을 위한 정량화 기법 개발

- 회복력 정량화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신뢰도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며 미국 국토안보부는 2005년 TF를 구성하고 국가기반시설 회복력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2011년 미시시피 홍수로 교통량이 많은 철도 교량이 물에 잠기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회복력 비용을 최소화하는 철도시스템 복구 순서를 검토하였음
- 즉 제한된 복구자원과 능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다리를 가장 먼저 복구하는 것이 사회의 정상적 기능유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측정을 하였음

○ 신규산업단지 대상 유해물질 및 소방수 저류조 설치 시범사업 추진

- 경기도에는 여러 유형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관련 사업장 침수 시 대형 오염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화재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유출사고 시 유해물질이나 소방수를 저류하여 하천 또는 토지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저류 시설 마련이 필요하며 부지확보 어려움 등 지역 여건상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산업단지나 단독공장에 대하여는 개별업체별로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유해물질 저류조 유형, 대상지 선정, 규모 등과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
- 경기도 내 주요 2차 환경피해 관련시설인 축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경기도 내 축사의 38%,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49%, 폐수배출시설의 42%가 저지대에 입지하여 확률강우 이상 집중강우 시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

○ 자연재해에 취약한 유해물질 저장소 안전성 확보

- 저지대 또는 상수침수지역 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침수되지 않도록 저장소를 일정 높이 이상에 입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하화 또는 침수에 취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옥외 지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저지대 일대 지하화 시설의 경우, 설계빈도 이상 집중강우 시 침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안정적인 저장 및 보관을 위한 검토가 필요

제 7 장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비전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목표 통일한국의 중심

통일 전진기지

전략 7-1.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

7-2.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7-3. 통일시대 경기북부
공간 관리

7-4.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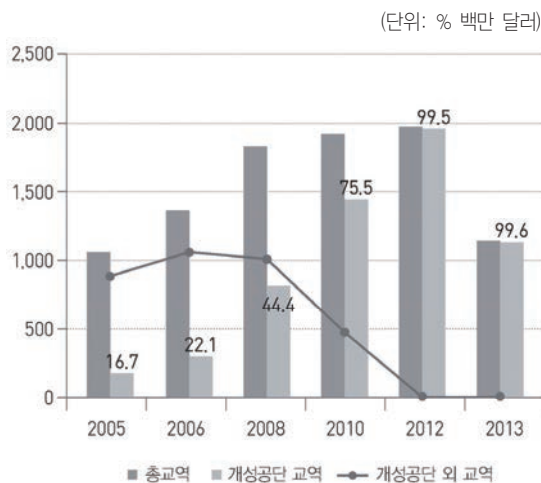


제1절

남북관계 및 북부접경지역의 여건과 제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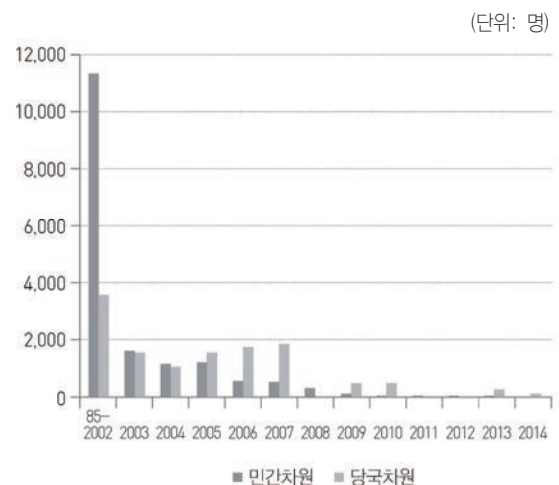
1 (남북관계의 현실) 경색과 개선을 반복하는 남북관계

- 진보와 보수 정부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남북관계 역시 경색과 개선을 반복
 - 남북 모두 표면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momentum)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된 '5.24조치' 해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남한
 -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는 북한은 대북전단살포, 한미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



자료: 통일부

[그림 3-7-1] 남북교역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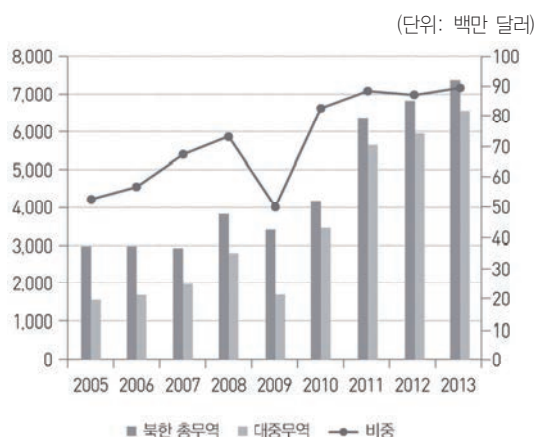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그림 3-7-2]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 규모 추이

- 2015년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는 크게 위축
 - 한국의 정권 성격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으나, 남북 관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개선과 경색을 반복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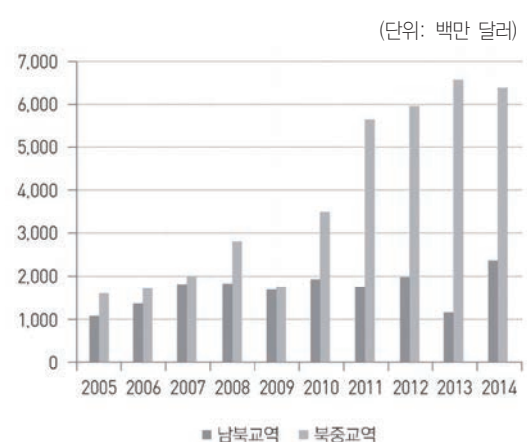
1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은 단기 안정, 장기 불안정

-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 김일성·김정일 시기의 군사국가적 국가운영의 틀을 유지
 - 김정은 시대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일성 시대의 경제·군사 병진노선,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와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장애가 조성될 것임. 경제성장의 동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북한 체제의 장기 불안정 요인은 지속
-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수령(김정은)의 카르텔이 유지되는 한 북한체제는 단기적으로 안정
 - 북한 정치체제의 일부로서 수령은 모든 권력의 핵심에 존재하지만, 수령의 재생산(권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권력 승계시 항상 불안정 요인이 존재
 - 하지만 수령과 엘리트의 공동 이해(정권의 유지)가 존재하고, 이들 간 연대가 유지되면서 북한 정권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대외적 고립과 대내적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북한 체제의 장기 안정성은 항상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외에도 북한은 인권, 외국인 납치, 밀수, 화폐 위조 등 다양한 이슈에서 국제사회의 우려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 극복에 지속적으로 장애로 작용
- 대외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증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하나,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에서의 대중의존도 증가는 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증가 우려
 -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끈다면 긍정적이라는 입장과, 북한이 중국의 사실상 동북 4성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교차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한국무역협회

[그림 3-7-3] 남북교역과 북중교역 규모 비교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한국무역협회

[그림 3-7-4]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 증거가 파편적이지만 북한 내부의 시장화 추세 및 외부 정보의 유입은 뚜렷하게 강화·증가 경향을 보임
 - 경제난으로 인한 배급체계의 붕괴는 북한 체제 내부의 시장화 경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이동의 증가 및 핸드폰 보급 추세의 증가 등으로 인한 외부 정보의 유입 추세도 증가

[표 3-7-1]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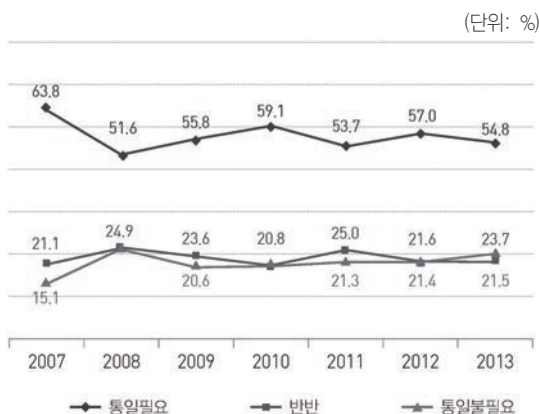
(단위: 명)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입자 수	69,261	431,919	1,000,000	1,700,000	2,420,000	2,800,000

주: 2009년과 2010년 통계는 고려링크(Koryolink) 통계, 2011년 이후는 ITU 자체 추정치임
 자료: ITU statistics <<http://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stat/default.aspx>>(검색일: 2015.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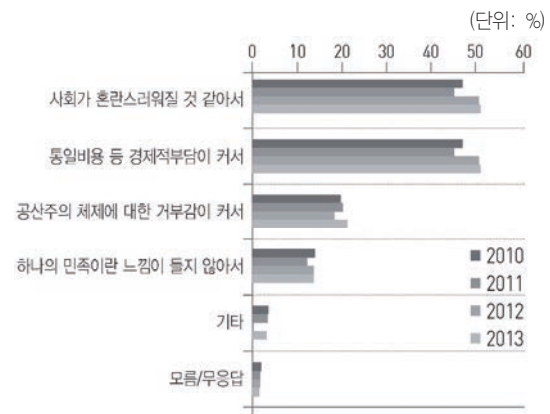
1 한국 국민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통일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도 증가

-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
 - 국민들의 통일 불필요 인식 증가는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부담과 혼란은 너무나 분명한 반면,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의 반증



자료: 박명규 외(2013), 『2013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27

[그림 3-7-5]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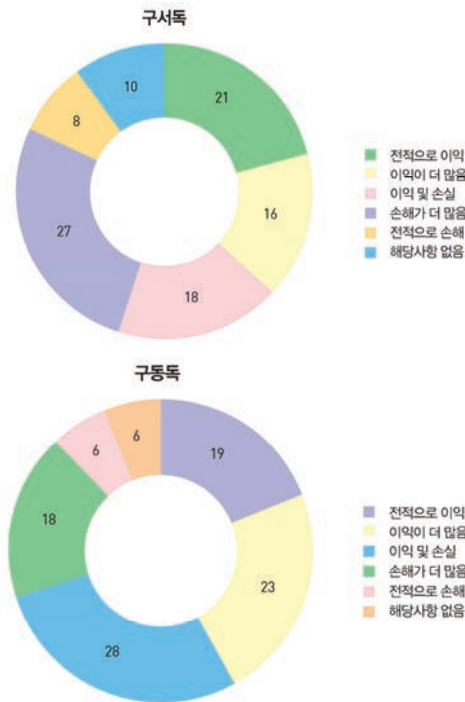
자료: 통일교육협의회(2013), 『2013청소년통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p.10

[그림 3-7-6]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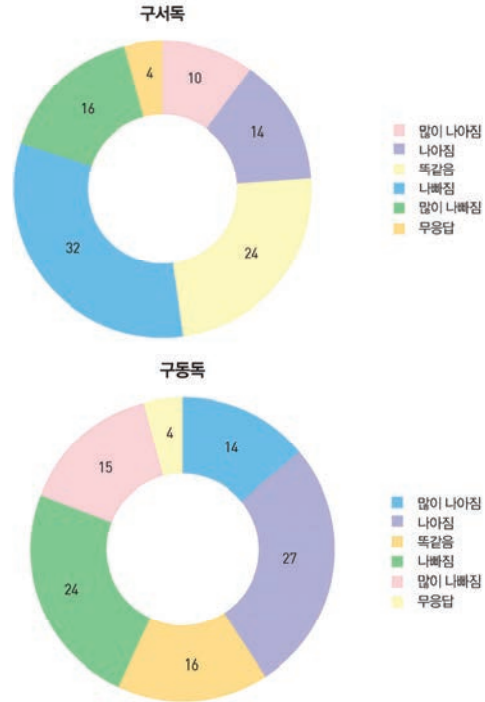
1 통일 후 20여년이 지났어도 독일 통일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 통일독일은 통합된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한반도 통일의 선행 사례로 인용될 만큼 성공적 사례로 평가
 - 통일 20년에 대한 독일 주민들의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
 - 동서독 주민 모두 통일 20년에 대해 이익이 더 많았다고 평가. 동독 지역 주민들이 서독지역 주민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전체가 아닌 자신들의 개별적 경제 상황이 더 나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

(단위: %)



(단위: %)



[그림 3-7-7] 독일주민의 독일통일 20년 평가

[그림 3-7-8] 독일주민의 통일 이후 개별적 경제 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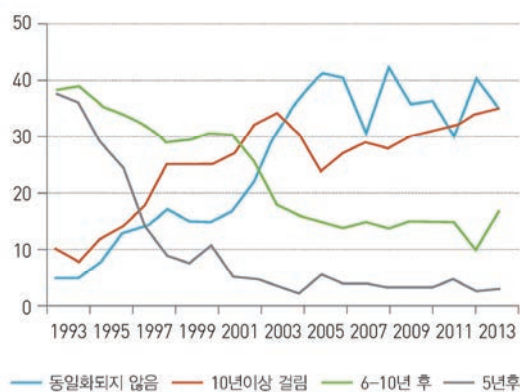
자료: (좌)·(우)통일부(2013),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의식변화 분석』, pp.103-104

○ 독일의 진정한 통일이 언제 현실화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독 주민들은 경제활동 제도와 소득, 연금 등 사회·경제적 조건의 동일화를 기대

- 동서독 간 소득 동일화에 대한 기대는 1990년대 말 사회복지 개혁 도입 이후 명백하게 감소

-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던 1990년대 초반 이후 독일 주민들이 생각하는 동서독 주민들의 소득 동일화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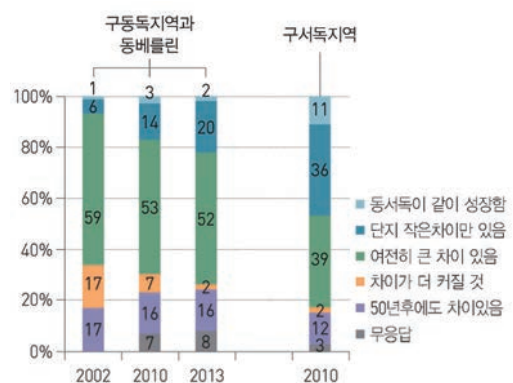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일부(2013),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의식변화 분석』, p.115

[그림 3-7-9] 독일 주민의 소득동일화 시점 예상

(단위: %)



자료: 통일부(2013),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의식변화 분석』, p.115

[그림 3-7-10] 독일 주민이 보는 통일 이후 독일

- 통일 독일에 대한 평가 역시 동서독 주민들 간에 차이가 발생
 - 2010년 서독인의 절반이 동서독 간 차이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비해 동독인들의 시각은 좀 더 회의적

1 (통일의 필요성) 남북관계의 현실과 무관하게 통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증가

- 분단으로 인해 '섬 아닌 섬'으로 살아온 현실을 극복하고 대륙과의 육상 연계를 통해 한반도의 반도적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 정부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계 구상,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대륙과의 육상연계를 통한 미래전략 구상이라는 점에서 결국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



[그림 3-7-11] 대륙과의 육상연계 및 에너지망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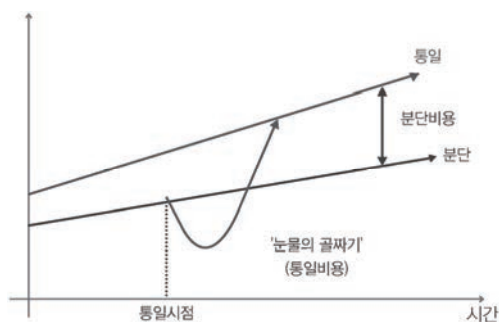
1 (통일의 예측 불가능성) 통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미리 예측 불가능

- 통일은 특정한 경향성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음
 - 미래사회 전망에 있어서 통일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시기와 방식을 미리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극적인 사건(extreme event)’
- 동서독의 경우에도 통일 직전까지도 통일을 예상하지 못하였음
 - 동유럽에서 북한과 가장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루마니아의 경우에도 체제 붕괴 직전까지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음

- 1989년 11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67번의 기립박수 끝에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되고, 개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나, 12월 티미소아라에서 시작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그해 성탄절에 차우세스쿠는 처형됨
- 하지만 통일은 국가,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막대한 것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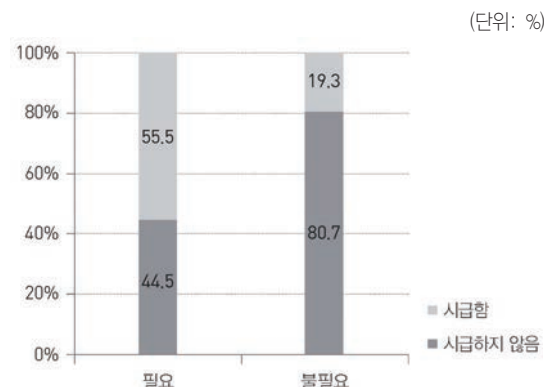
1 통일비용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지만, 통일의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일은 이익

- 단기적이라고 하지만 통일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막대한 경제적 지출은 물론이고 심각한 사회혼란 예상
 - 하지만 소위 '남남갈등'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이념대립과 막대한 군사비 지출 등 분단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점진적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도 상당수



자료: 필자 작성

[그림 3-7-1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자료: 아산정책연구원(2015), “한국인의 대북·통일인식변화,” p.31

[그림 3-7-13] 통일의 시급성

[표 3-7-2] 기관별 통일비용 추정

기관	추정시기	예상 통일시기	추정비용
한국개발연구원	1991	2000	2,632~2,736억 달러
골드만삭스	2000	2005~2015	1조 700억~3조 5,500억 달러
삼성경제연구소	2005	2015	5,460억 달러
한국조세연구원	2009	2011	한국 GDP의 12%
현대경제연구원	2010	2010	4,710억 달러
통일부	2011	2030	813~2,836조 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3	2025	3,111~4,746조 원
통일연구원	2013	2031	3,621조 원(민간투자 포함)

자료: 각 기관별 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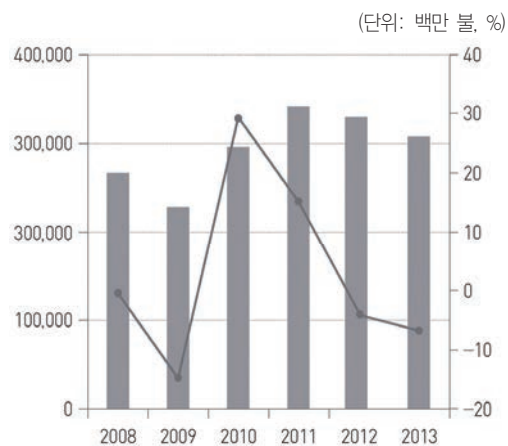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1. 국제 환경의 변화와 통일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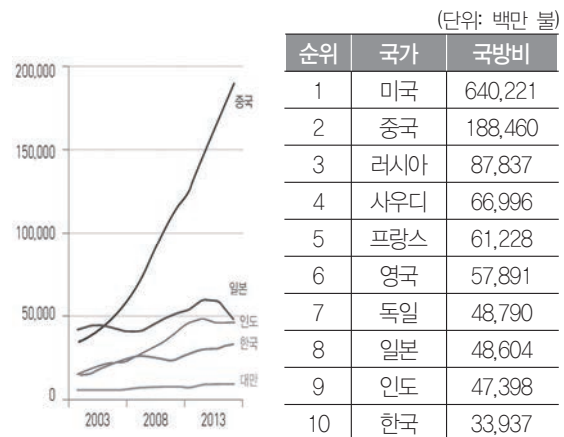
1. 근대로 회귀하는 동아시아 질서

- 성장한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지위를 원하는 중국은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적극적 대외정책을 추진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화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육상 신 실크로드(一帶)와 해상 신 실크로드(一路)를 의미
 - 중국은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뒷받침할 금융기구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설립. 이는 중국의 성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금융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 가능
 -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은 기존 질서의 수용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 나설 것이라는 의지의 실천계획
-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를 둘러싼 갈등으로 발전
 - 동아시아의 갈등은 역사 문제 등과 결합하면서 각 국가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 중일 간 영토 및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시적이지만 양국 무역규모 감소에까지 영향
 -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동 지역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어 위기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7-14] 중·일 무역규모 추이



아시아 국가 국방비 추이

자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3년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

[그림 3-7-15] 아시아 국가 국방비 추이

-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한 미국은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을 강화
 - 미국은 해군 전력(戰力)의 60%를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 배치할 것을 천명
 - 미국과 일본은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환태평양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을 통한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
-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역내 주요 국가들 간의 관계가 미묘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 회복 필요

1 중·러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 증대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상승

- 중국은 동북진흥 계획을 추진하면서 동해로의 출해(出海) 통로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창춘(長春)-지린(吉林)-두만(圖們, 두먼)강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동해로 나갈 수 있는 항구 마련이 필수적인 바,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항구 확보에 적극적
 - 이와 맞물려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동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
 -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극동의 자루비노 항을 동북아 최대 규모 항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



자료: “중 ‘동해 길 뚫어라’... 나진행 도로·철도 개발 ‘울인’,” 중앙선데이(2010.8.1)

[그림 3-7-16] 중국 동북진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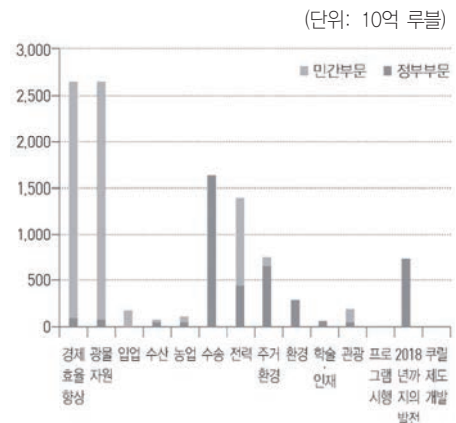
자료: “中, 나진 통해 동해안 진출 임박...일까지 운송, 12일시 1일로 단축,” 한국경제(2012.8.21)

[그림 3-7-17]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진출전략

-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극동발전전략 2025를 만들어 극동발전 문제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행 중
 - 푸틴 시기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회의를 개최하는 등 극동개발에 주력
 - 향후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중러, 북러, 북중러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

관할부서	극동개발성
총투자액	10조 7,094억 루블
- 연방정부	- 358,169억 루블
- 지방정부	- 3,477억 루블
- 민간부문	- 6조 5,447억 루블
수행기간	2014년~2025년
대상지역	극동연방 관할 구역 9개 연방 구성 주체 및 이르쿠츠크주, 브리야트공화국, 자바이칼지방
프로그램 구성	12개 부속 프로그램과 2개의 연방 목적 프로그램
주요 프로젝트	시베리아 철도와 바이칼아무르 철도 정비, 지방공항 정비, LNG플랜트 등 각종 플랜트, 발전소의 건설 등
주요 목표	2025년까지 2011년 대비 국내 총생산 2.2배 향상 국내 인구는 1,200만 명으로 증대 2011년 대비 수출 3배 확대

자료: WS CONSTRUCTION(www.wsengc.com)



[그림 3-7-18] 2025 극동개발계획 개요 및 부문별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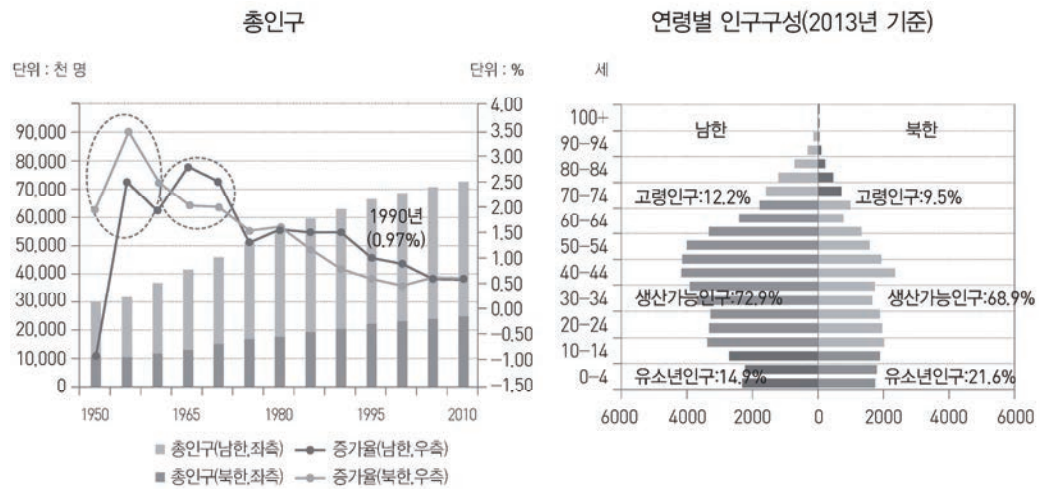
- 시스템 의존성이 높은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투자 증가는 북한 인프라의 대중, 대러 의존성 심화로 이어져, 통일비용 증가 우려

1 (인구 구조의 변화)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남북한 인구 구조의 변화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남북 통일을 통한 북한 노동력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
 - 2011년 통계청은 남한인구 추계를 수정 발표함. 동 발표에 따르면 남한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 이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 명(1992년 수준)에 이를 전망⁴⁶⁾
 - 2013년 기준 북한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남한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에 비해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음.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남한이 72.9%, 북한이 68.9%. 고령인구 비중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12.2%와 9.5%로 남북한 모두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북한이 2020년, 남한은 2015년. 북한은 현재 유소년 인구 비중과 합계출산율이 남한에 비해 높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남한에 비해 높고 2055년경까지 세계 평균 및 저개발국 평균보다 높은 추세를 보일 전망
 - 남북한은 각각 2000년과 2004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 중위출산율 가정 시 남한은 2018년, 북한은 2034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 진입 예상
 - 남북한 통합시 고령화 속도는 남한에 비해 다소 늦어져 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4년 정도 지연될(2018년 → 2022년)것으로 예상⁴⁷⁾
 - 남북한 통합 시 고령인구 비중의 감소폭이 커져 2030년에는 3.7%, 2045~2070년 기간 중에는 5%p 이상 고령화 완화 효과 발생 예상

46)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을 가정한 인구성장 고위가정에 따르면, 총인구는 2041년 5,71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60년에 5,478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낮은 수준의 인구성장을 가정한 저위가정에 따르면 인구정점은 2016년(5,002만 명)으로 당겨지고, 2060년 총인구는 3,447만 명(1974년 수준)까지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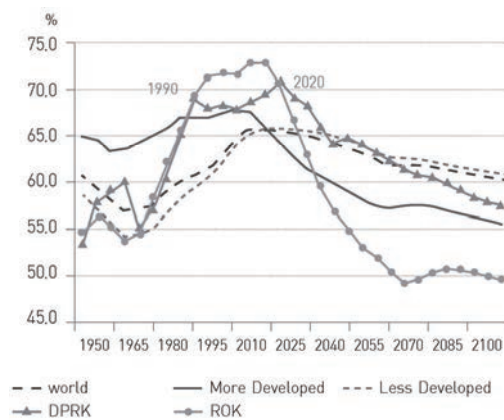
47) 최지영(2015),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한국은행, pp.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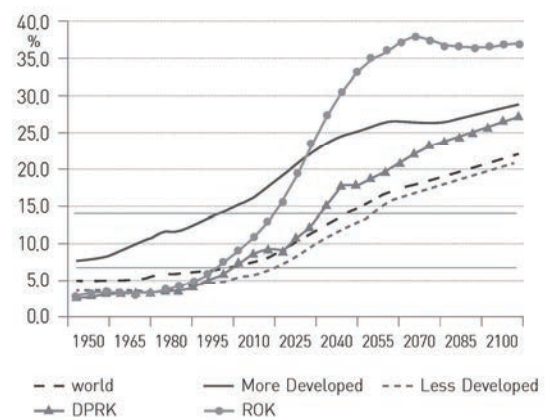
자료: 최지영(2015), “북한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의 시사점,” 한국은행, p.9

[그림 3-7-19] 남북한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구성(2013년)

- 남북한 통합 시 인구구조는 남한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젊어지지만, 남한의 총인구가 북한의 2배에 달하고 북한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이행단계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 패턴 자체는 크지 않을 것



[그림 3-7-20] 생산가능인구 비중



[그림 3-7-21] 65세 이상 인구 비중

[표 3-7-3] 고령화 속도 비교

	시작년도		소요기간
저개발국	2050	2090	40년
개발도상국	2015	2040	25년
선진국	1950 이전	1995	45년 이상
남한	2000	2018	18년
북한	2004	2034	30년
남북한	2001	2022	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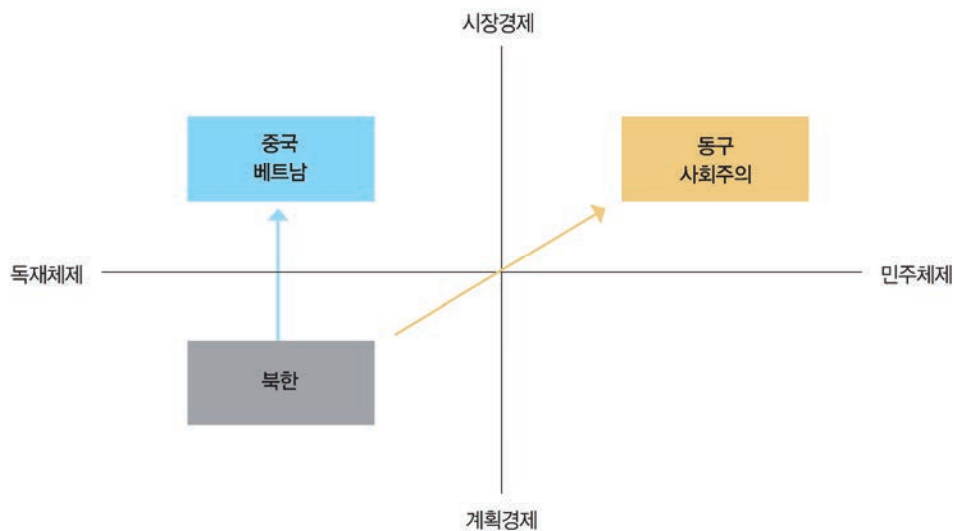
주: 2010년 이후는 중위출산율을 가정한 예상치임

자료: (좌)·(중)·(우) 최지영(2015), “북한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의 시사점,” 한국은행, pp.10-11

- 통일은 통일한국의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선의 계기가 되는 데는 한계
 -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통일뿐만 아니라, 이민정책 등의 개선을 통한 개방적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됨
 - 또한 복지, 교육 등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특히 통일 이후 사회복지 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

1 통일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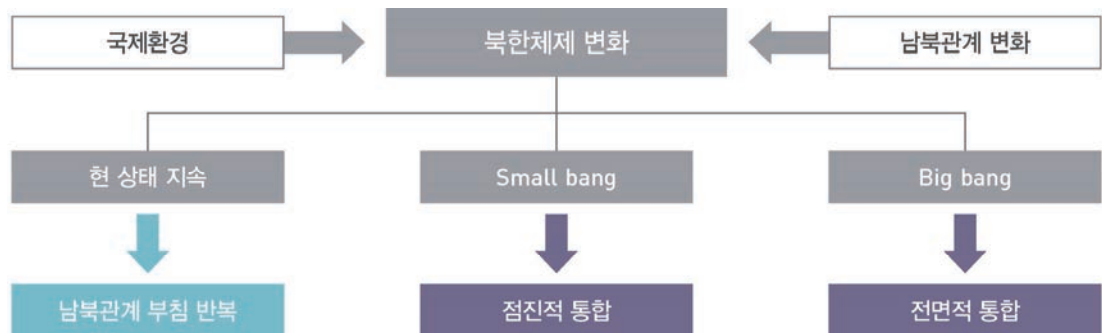
- 평화적 통일은 현재와 다른 변화된 북한을 가정할 때 가능
 - 북한이 동구 사회주의와 같은 전면적 변화(big bang)의 길을 걸을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와 같은 제한적 변화(small bang)의 길을 걸을지는 알 수 없음
 - 북한이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따라 통일 시나리오는 달라질 것임



[그림 3-7-22]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유형과 북한

- 향후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정권의 교체와 국가 혹은 체제의 붕괴를 구분할 필요
 - 루마니아의 경우에도 차우세스쿠 사망 이후 이른바 ‘궁정쿠데타’를 통해 또 다른 권위주의 정부로 이행. 2010년 이후 중동을 휩쓴 ‘아랍의 봄’은 중동의 군사 권위주의 정권들을 붕괴시켰으나, 바로 민주화로 이행하지 못하고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 북한 역시 과거 민주화의 경험이 없어 현재의 독재정권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권위주의 정권으로 이행할 가능성 상존
 -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거나, 북한 국가는 유지될 수 있음

-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추동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변화였음. 하지만 북한의 배후에는 쇠퇴하는 후견자가 아닌 성장하는 동맹국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외부충격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 하지만 모든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의 전면적 전환(big bang)을 통한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와 제한적 변화(small bang)를 통한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등으로 구분 가능
- 문제는 북한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
 - 따라서 여기서는 2040년 이전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논의를 진행
 -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과 개선이 반복되는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음



[그림 3-7-23] 통일 시나리오

○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 점진적 통합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존재하지만 남북 간 협력이 확대된 상황을 상정함
- 자본의 이동은 매우 자유롭지만, 인력의 이동은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는 상황

○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

-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북한 체제가 변화하여 남북 간의 전면적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
- 남북 간의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

2. 통일 이후의 한반도 공간 구상

1 (대륙연계) 통일은 대륙과의 육상 연계를 의미

- 통일 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대륙과의 육상 연계가 실현된다는 것
 -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망 및 에너지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통일 한국의 속제는 대륙과 연결된 육상 교통망과 해상의 연계 등 육-해-공 교통망의 입체적 연계
 - 배와 철도는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배와 철도를 연계하는 것은 교통연계의 핵심
- 대륙과 연계된 인프라망의 일차적 종착지는 한반도 내 가장 강력한 중심인 서울
 - 남북한의 중심도시인 서울과 평양은 통일 한국의 양대 구심이 될 것이며, 서울에서 평양에 이르는 한반도 중심부는 번영의 핵심지역으로 기능할 것
 - 통일 이후 교통·물류 및 에너지 망은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질 가능성



자료: 이상준 외(2011), 『통일한반도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p.123

[그림 3-7-24]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



자료: 이상준 외(2011), 『동일한반도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p.124.

[그림 3-7-25] 아시아 고속도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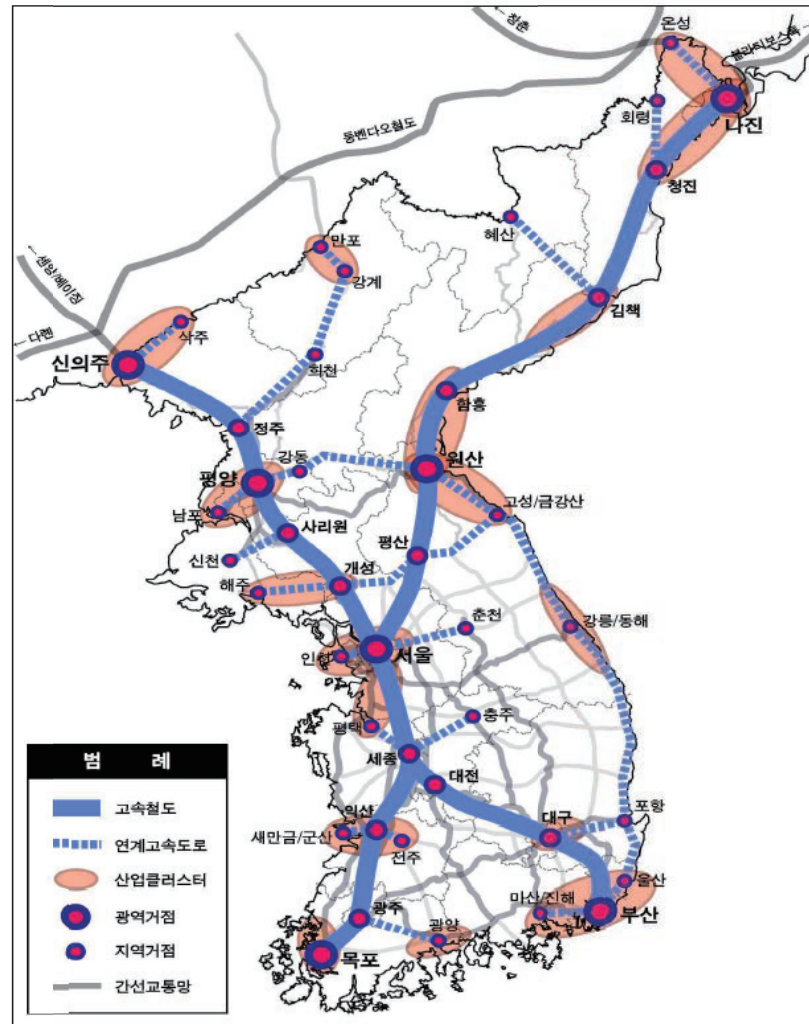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2009),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의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p.7

[그림 3-7-26]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노선도

1 (통합된 국토의 인프라 구상) 남북 간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인프라망 연계

- 통일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경의선과 경원선 축, 남쪽으로는 경의선과 경부선 축을 따라 X자형 인프라망 구축 예상



자료: 이상준 외(2011), 『통일한반도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p.112

[그림 3-7-27] 한반도 초고속 간선교통망 구축 개념

- 경의축은 TCR 등을 통한 중국과 연계망을 구성할 것이며, 여객과 물류 수송을 겸하게 될 것
- 경원축은 TSR 등을 통해 러시아 및 유럽과의 연계망을 구성할 것이며, 여객보다는 물류와 에너지망 연계의 축으로 기능할 것



자료: 이상준 외(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총괄보고서』, p.113

[그림 3-7-28]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 경기 북부는 서울에서 경의선과 경원선 축을 통해 연결되는 한반도 인프라 회랑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전망
 - 현재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경기북부와 연계되는 핵심 도시들은 개성, 해주 등 교통 및 물류 연계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지역이 될 것
 -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접경지역 남북 도시들 간의 연계 및 동 지역의 위상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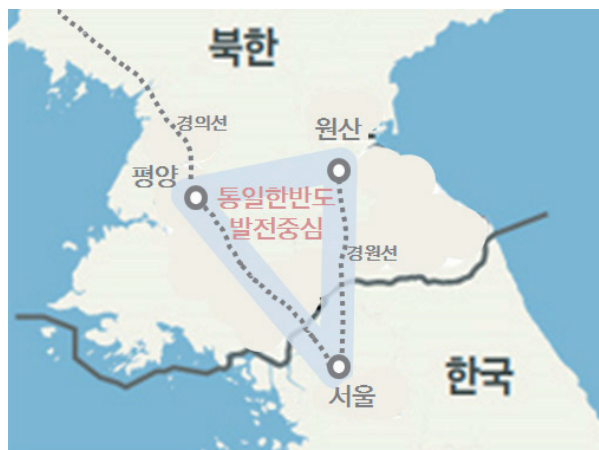


자료: 이상준 외(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총괄보고서』, p.115, 116, 118

[그림 3-7-29] 한반도 인프라 회랑 예상도 및 경기 북부 연계(개성-해주 프로젝트) 구상도

1 (한반도 중심부 발전 구상) 서울-평양-원산 등을 포함하는 중부권 발전 구상

- 남북한의 중심 도시인 서울과 평양, 그리고 동해안의 원산을 연결하는 삼각형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심부 발전 예상
 - 일차적으로는 서울-평양축이 발전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며, 동 지역은 서해에 면하고 있어서 중국 경제의 핵심지역인 동부해안과 한반도 서해안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경제권의 확대·발전 예상
- 개성 지역의 경우 서울과 평양의 중간 지점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남북이 공유하는 고려(Korea)문화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통일한국의 수도로 부상 가능성
 - 개성은 서울-평양 발전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통일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새로운 통일수도권 입지를 모색한다면 최우선 검토 대상
 - 개성은 과거 고려의 도읍으로 문화적 잠재력이 크고, 남북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통합 차원에서 통일 한국의 수도 입지 가능



[그림 3-7-30] 한반도 중심부 발전 구상

1 환 황해 경제권의 핵심지역, 경기만

- 경기도가 포함된 서해안권은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특징과 대륙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확대하여 진정한 환황해 경제권 형성 예상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만권은 외부와의 연계성이 극대화되어 보다 범위를 확대한 범경기만 경제권으로 확대·재편될 필요
 - 특히 성장하는 중국 및 경제 대국인 일본과 연계되는 동아시아 발전 축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경기만 지역은 통일시대 한반도 경제번영의 핵심 지역으로 기능할 것



[그림 3-7-31] 한반도 서해안권 공간적 발전구도



[그림 3-7-32] 동북아 발전축

자료: (좌) 이상준 외(2011), 『통일한반도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p.39
(우) 한반도평화포럼(20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실행방안 연구』, p.202

3. 통일시대 경기 북부의 과제

1 대륙진출 및 대륙으로부터 유입되는 인프라의 시작이자 종착지

- 남북한의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용하게 될 서울과 평양의 중간 지역에 놓이는 경기북부는 북한 및 대륙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변모
 - 점진적·전면적 통합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남북 간 전면적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대륙과의 육상 연계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경기 북부 지역은 이에 대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하지만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북부는 단순한 통과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
 - 전면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경기 북부지역은 단순 통과지역이 될 가능성
 - 점진적 통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경선에서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경기북부 지역의 위상을 가름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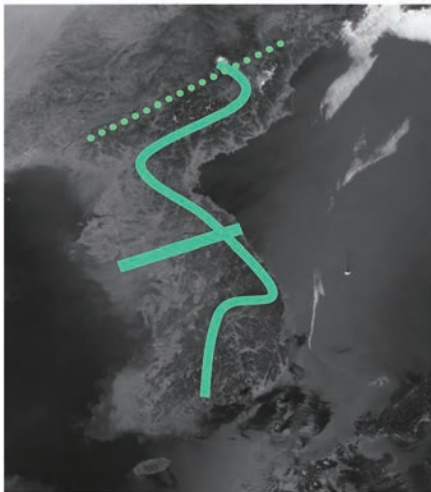
1 DMZ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계획 필요

- 통일 한국의 허리를 가르는 녹지축이 될 수 있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계획 필요
 -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는 백두대간이라는 남북 녹지축에 대응하는 한반도 중심부의 동서 녹지축이 될 것
 - 서부 접경지역의 경우 통일 한반도 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므로 동부 지역에 비해 높은 개발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 결과 비무장지대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요구가 교차하는 지역이 될 것

-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인간의 발길이 끊기면서 생성된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이중적 과제 해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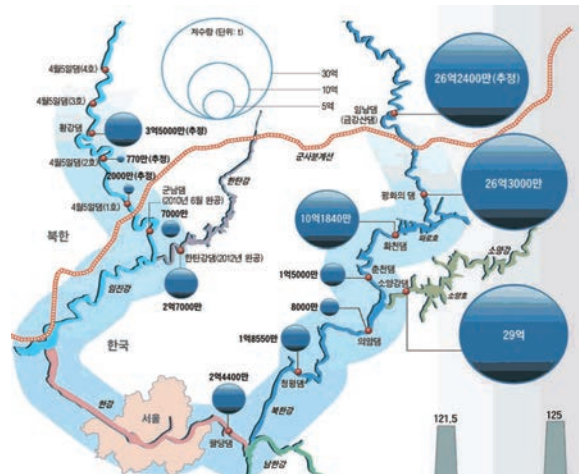
1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내륙 수계 활용 문제

- 한강 하구는 분단 이전까지 주요한 내륙 주운 통로로 기능하여 왔음. 통일 이후 그동안 남북 공동 수계를 이루던 지역의 활용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 현재의 북한 지역에서 발원하여 남한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특성상, 북한 지역이 개발되면 환경오염 문제 등 발생 가능
 - 또한 남북한 지역의 수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이미 건설된 황강댐, 금강산댐 등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도 쟁점



자료: (좌) 최용환 외(2009), 앞의 책, p.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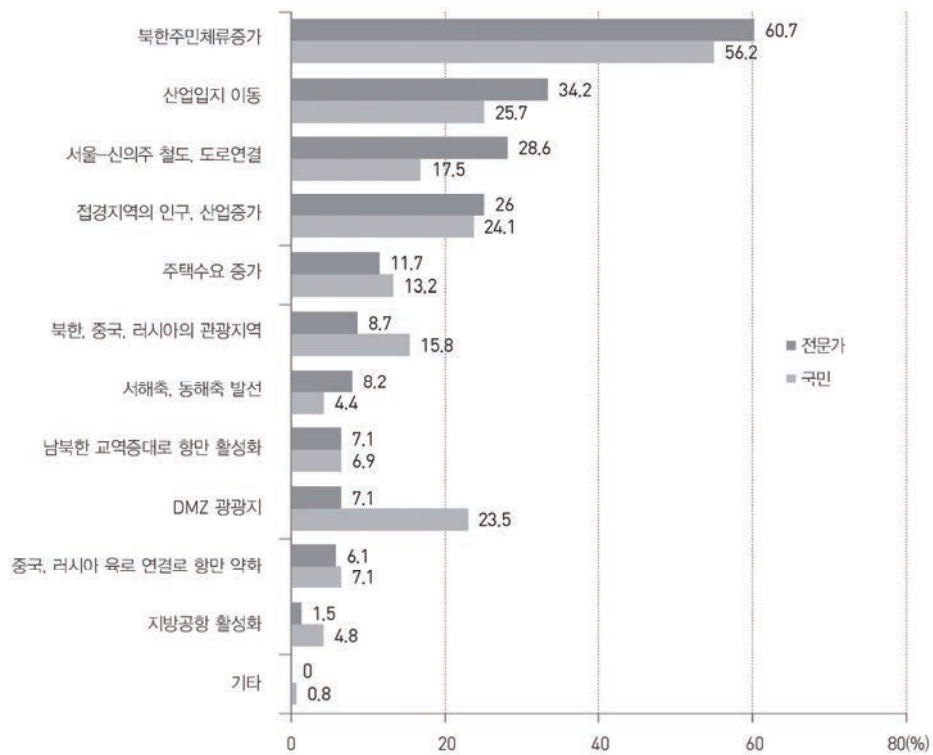
[그림 3-7-33] 통일시대 한반도 환경골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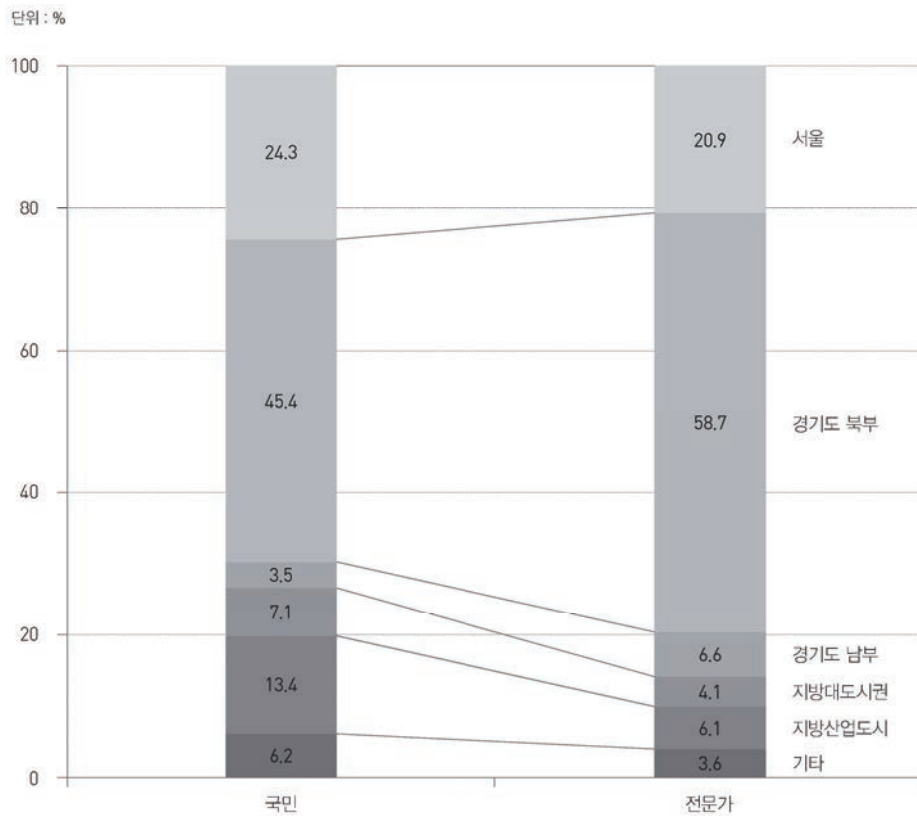
[그림 3-7-34] 남북 한강·임진강댐

1 남북 통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 대비

- 통일과정 혹은 통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남쪽으로의 강력한 인구 이동 압력 발생이 예상됨
 - 문제는 북쪽으로부터 이동하는 인구의 주요 거주 예상지역이 경기북부지역이 될 가능성
 - 전면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규모 인구 이동의 가능성이 높음.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운 인구 이동이 집중된다면 경기도로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3-7-35] 한반도경제통합으로 인한 국토 변화 전망



자료: (좌) 이용우(2010), 『국토 대예측 연구Ⅱ』, p.242; (우) 위의 책, p.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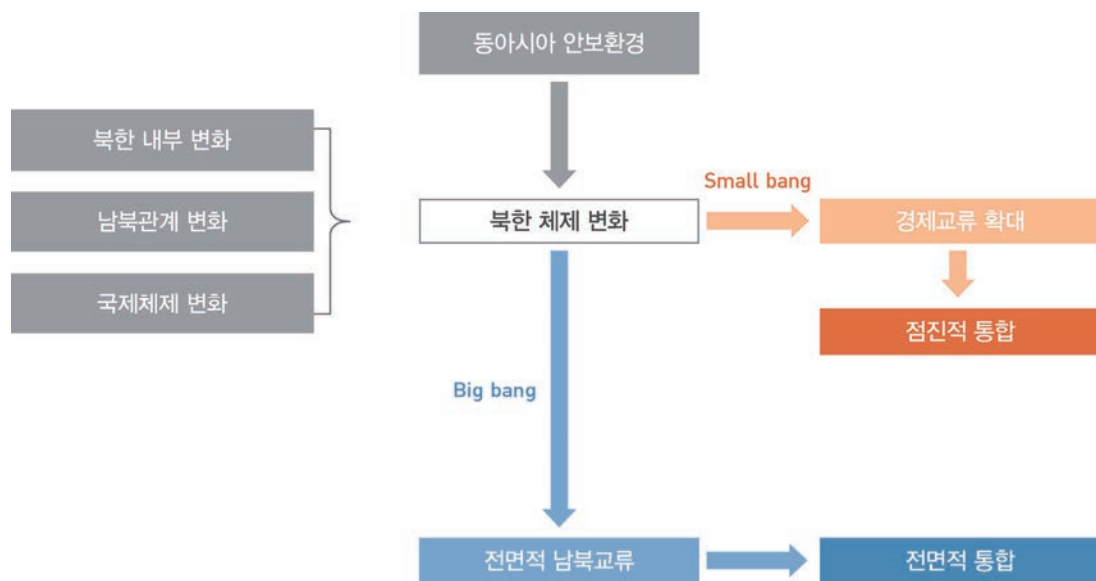
[그림 3-7-36] 한반도경제통합 시 북한주민 체류 예상지역 전망

제3절

통일과 북부발전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변화 시나리오



[그림 3-7-37] 통일 부문 미래변화 시나리오

1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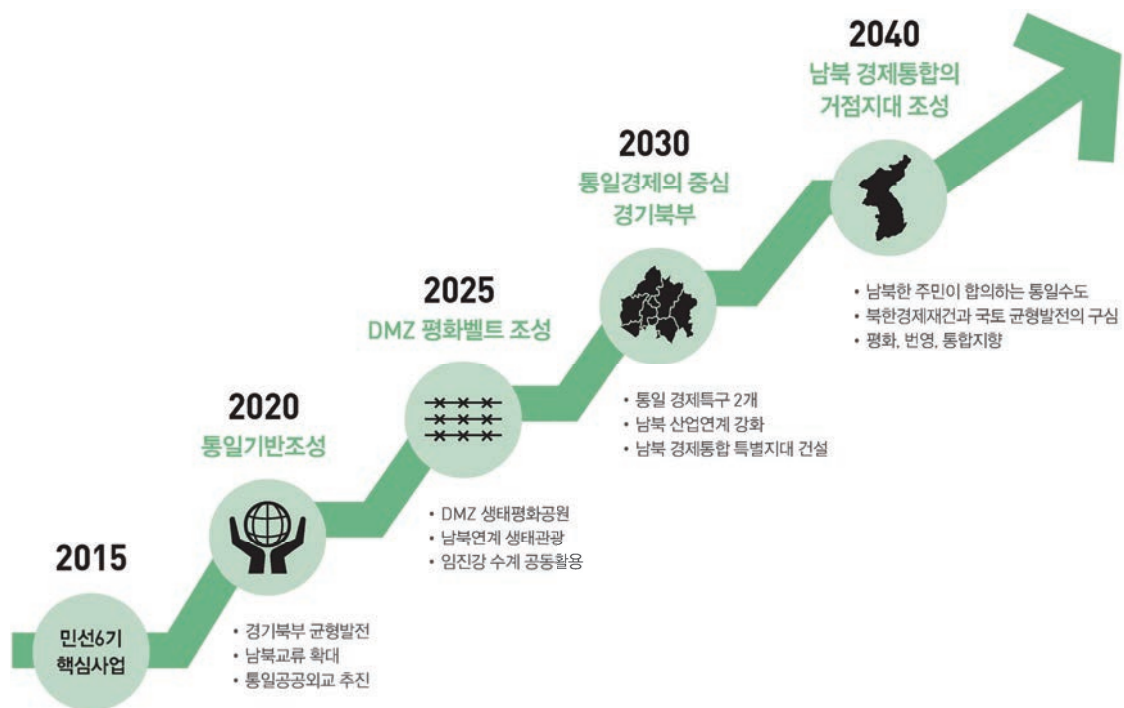
- 남북 간 불가역적 협력의 경험 축적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 긴장과 개선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의 악순환 구조 극복
- 단절과 대립의 상징이 된 DMZ 및 접경지역을 통일시대 중심지역으로 변모
 - 생명과 평화를 중심으로 DMZ의 새로운 가치를 활용하고, 통일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변모
 -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은 대륙 연계에 대비한 북방진출의 전초기지화
- 국가적 대응 중심의 통일 준비에서 지방의 참여를 통한 통일 준비로 확대
 - 통일 이후 북쪽으로부터의 인구 압력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인프라 투자와 사회갈등 대비 프로그램 마련



[그림 3-7-38]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 준비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단기간에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6기 경기도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하며, 통일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 주요사업 추진으로 경기도는 지자체의 남북교류를 주도하며, 남북교류를 통한 경기북부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임
- (2025 변화상) DMZ생태평화공원 등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핵심사업을 경기도에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연계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DMZ생태평화벨트를 건설. 또한 남북 공동 수계를 형성하고 있는 임진강 유역의 남북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
 - 주요사업 추진으로 DMZ의 가치를 활용한 남북접경지역의 변화를 추동하고, 남북 간 경계를 넘어 공동의 이익이 발생하는 남북협력사업을 추진
- (2030 변화상) 그동안 추진된 남북협력사업의 경험을 확대하여, 남북 간 산업연계를 강화하고, 통일경제특구를 포함한 남북경제통합특별지대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북부를 통일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킴
 - 남북경협 확대는 남북 간 실질적 통일을 앞당기며,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감소시켜 남북통일에 기여
- (2040 비전)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2040년 이전 특정 시기에 실질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북부를 포함한 지역을 통일 수도권으로 건설함
 - 통일수도권은 평화와 번영, 통합을 지향하며, 북한 경제의 재건과 통일 한국의 국토균형발전의 구심이 될 것임. 또한 통일수도권은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대륙 진출의 거점, 대외개방의 핵심지역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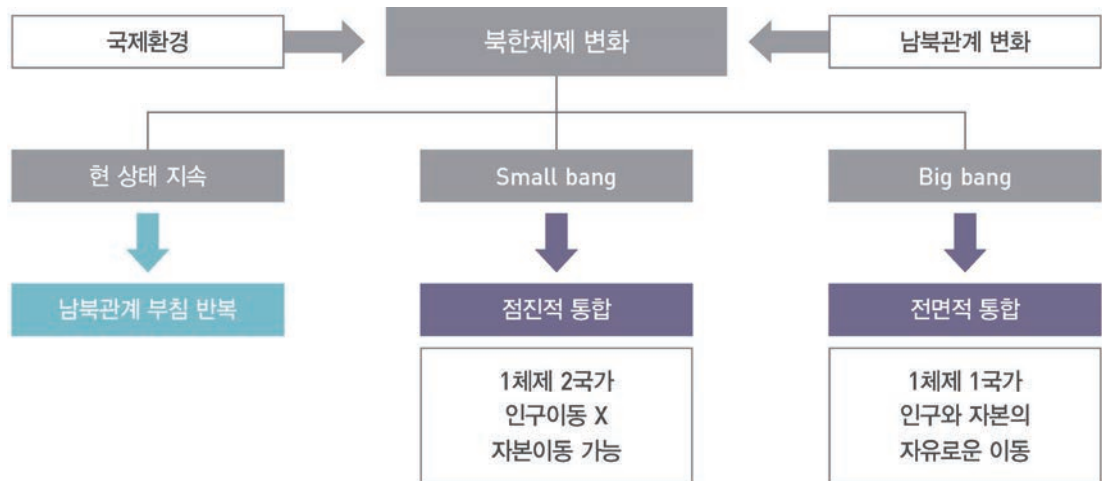


[그림 3-7-39] 통일 부문 미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통일시대 경기도의 2040 비전·목표·전략

1 통일 시나리오와 비전·전략 수립의 전제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가정하는 통일 시나리오는 점진적 통합과 전면적 통합의 두 가지 사례에 국한
 - 점진적 통합: 북한이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경제적 개혁개방의 길을 걷는 경우. 남북 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교류협력이 확대된 상태를 상징. 하지만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존재함으로써, 인력의 전면적 이동은 제한된 상태
 - 전면적 통합: 북한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정치,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체제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남북 간의 전면적 교류와 실질적인 통일 논의가 가능한 상황을 상징
 -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가 경쟁과 개선을 반복하는 상황은 검토하지 않음



[그림 3-7-40] 통일 시나리오와 비전·전략 수립의 전제

1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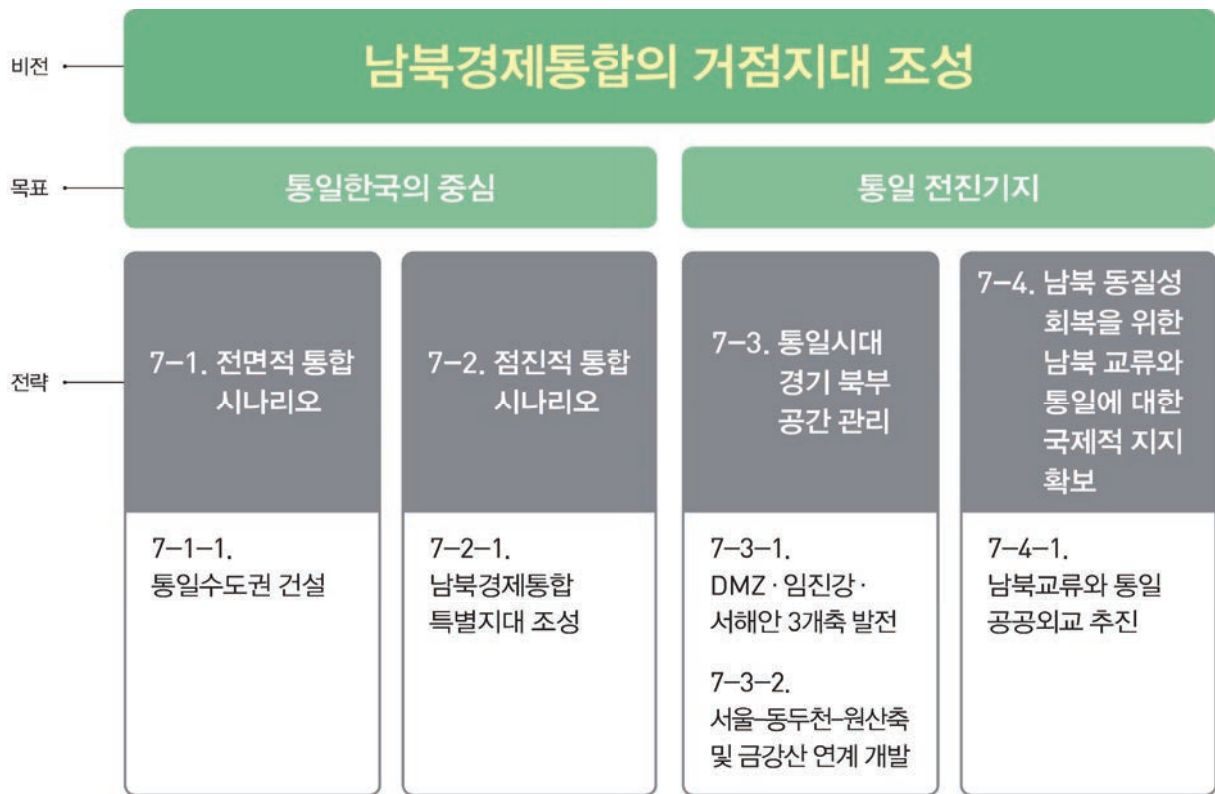
- 경기도가 향후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

2 2대 목표

- 통일 준비과정에서 “통일 전진기지”를,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중심”을 목표로 설정

3 4대 전략

-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 수도권은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적고, 남한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여야 하며, 평화와 번영, 통합의 상징 지역이 될 것임
-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 통일경제특구 건설, 남북 산업연계 강화 등 남북 경협을 확대하여 남북 접경지역에 남북 경제통합 특별지대를 조성함
- 통일시대 경기 북부 공간 관리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DMZ 평화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임진강 수계에서의 남북 협력을 강화함. 또한 중국과 면하고 있는 서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3개축 발전 방안을 추진
-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남북교류를 적극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문제를 남북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한 접경지역 관리협의회 등 남북교류의 제도화를 지향하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결성 및 주변국 국민 대상의 통일공공외교를 추진



[그림 3-7-41] 통일준비를 위한 시나리오와 경기도의 비전·목표·전략

4. 미래지표의 설정

1 미래지표의 선정

- 통일은 예측불가능성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 또는 점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통일의 준비과정에서 ‘통일의 전진기지’를,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중심지’를 목표로 함
-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 북부발전 비전에서는 통일관련 특구 선정 개수, 북한 방문자, ODA 지원 규모, 북부 GRDP 비중 등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2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남북통합과 북부발전	통일 관련 특구 수(개)	(2015) -	1		2	4
	도민의 북한방문자 수(만 명)	(2014) 12.9	50	250	500	750
	ODA 지원규모(경기 GNI 대비 / %)	(2015) -	-	0.3	0.5	1
	접경지역 시·군의 1인당 GRDP (US\$)	(2013) 14,000	18,000	25,000	30,000	40,000

제4절

통일과 북부발전 부문의 아젠다별 추진전략

[7-1]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⁴⁸⁾

[7-1-1] 통일수도권 건설

☞ 핵심내용

- 개성 지역에 통일수도권 건설
- 남북 접경지역에 산업과 일자리를 집중 배치, 통일 충격의 안전판으로 기능
- 남북한 주민의 동시 거주에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 북한 지역 인프라 재건을 위한 물류의 중심지

📌 목표와 지표

- 통일 충격을 흡수하고, 남북통합 시대 개막을 위한 통일수도권 건설
 - 남북에 존재하는 두개의 경제 중심(서울과 평양)과 그 중간 지역에 위치하는 통일수도권(개성)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수도
 - 남북 간 실질적 격차를 고려할 때, 통일 이후에도 경제적 중심은 서울이 될 수밖에 없으나, 통일 한반도의 행정수도는 남북 사회통합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정
 - 특히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적고, 남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
 - 따라서 통일 한국의 수도는 이를 위한 최적지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
- 북한 인프라와 경제 재건의 중심지이자 완충지대
 - 개성은 서울 반경 5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 수도권의 발달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북한의 수도권인 평양-남포권과도 연계가 가능함
 - 북에서 남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 흡수
 - 통일한국의 대륙 진출과 대외 개방의 거점
- 통일 한국의 새로운 문화 창달
 -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남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보유하여야 함

48) 남북 간 전면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정책이 국가 주도로 진행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여기서는 전면통합 시나리오 시 경기도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 개성은 고려의 수도이자, 조선시대에는 상업의 중심, 한국전쟁 당시에는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곳, 분단 시기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도시

1 추진전략

○ 통일한국과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통일 수도권 건설

- 국가의 형태와 수도의 성격
 - 국가연합 혹은 연방정부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서울에서 세종시로의 이전과 같은 방식의 신행정수도 건설의 형태가 유력. 즉, 남한과 북한에 서울과 평양이라는 중심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제3의 지역에 수도를 건설하고, 어떤 기능을 배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추가될 필요
 - 통일수도권의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와 무관하게 새로운 수도가 논의될 가능성
- 세계 각국의 수도 입지
 - 세계 각국에는 수도와 경제중심도시, 인구최대도시가 일치하지 않는 국가 다수 존재

[표 3-7-4] 수도와 경제중심지, 인구최대도시의 다양한 형태

국가	수도명				경제중심도시	인구최대도시
		국회	행정부	최고재판소		
칠레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산티아고	산티아고	산티아고	산티아고
브라질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상파울루	상파울루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DC	워싱턴 DC	워싱턴 DC	뉴욕	뉴욕
캐나다	오타와	오타와	오타와	오타와	토론토	토론토
이탈리아	로마	로마	로마	로마	밀라노	로마
스위스	베른	베른	베른	로잔	취리히	취리히
독일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 본	칼스루에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헤이그	헤이그	헤이그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호주	캔버라	캔버라	캔버라	캔버라	시드니	시드니
남아공	프레토리아	케이프타운	프레토리아	블룸폰테인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터키	앙카라	앙카라	앙카라	앙카라	이스탄불	이스탄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이슬라마바드	이슬라마바드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카라치
인도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मुंबई	मुंबई
중국	북경	북경	북경	북경	상하이	상하이

자료: National Land Agency (Japan), 2000, Metropolitan Areas Development

- 독일의 경우 분단과 재통일, 그리고 유럽통합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베를린으로의 환도(還都) 성격의 수도이전을 시행한 사례
-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 수립과 국가 통합을 위한 상징적 측면에서 수도를 이전한 사례
- 말레이시아와 일본 등의 국가는 기존 수도의 과밀화와 이에 따른 불경제 탈피를 위한 수도 이전 혹은 수도 이전을 검토한 사례

- 통일 한국의 경우 기존 수도권의 과밀화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새로운 통일국가의 수립과 국가 통합을 위한 상징적 차원에서도 수도의 입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통일 한반도 도시 구조
 - 통일 한반도는 일극 중심이 아니라 다핵 중심의 특성화된 도시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
 -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분산형·네트워크형 도시 구조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 추구 필요
- 통일 수도권의 규모
 - 통일 수도권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통일 수도권과 배후도시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건설할 필요
 - 통일 수도권의 규모는 도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서울과 개성의 거리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서울의 구심력을 고려할 때 서울과 경기북부 그리고 통일 수도권으로서 개성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 통일 수도권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 통일 수도권은 동아시아 주요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
- 통일 수도권의 특성과 주요 기능
 - [평화]: 통일 한국의 수도는 분단 시대의 분쟁과 단절의 역사를 넘어, 통일 한국과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의 상징적인 도시
 - [번영]: 통일 수도권은 통일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의 중심지로서,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발전 그리고 생태와 환경이 살아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
 - [통합]: 통일 수도권은 북한 주민 간의 '사람의 통일'을 이룩하는 진정한 통합의 모범적 도시로서, 도시 공간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개방적인 도시

[7-2]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7-2-1]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특별지대’ 건설

핵심내용

- 남북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제통합특별지대 건설
- 특별지대와 남북 접경지역 배후 지역과의 경제 연계 강화
- 접경지역 남북협력사업 확대 추진

목표

- 남북 경제통합특별지대의 의미
 -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남북한 당국으로부터 입법·사법·행정의 독자적 권한을 가진 제3지대로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험장
 - 홍콩이나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의 특별지대
 - 동아시아 주요 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

[표 3-7-5] 남북 경제통합 특별지대(안)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 최대의 자율과 책임, 투명성 • 남북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혹은 한국인 행정장관	
운영체제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자치	• 일국양제 방식 • 외교, 국방 제외
경제체제	• 자본주의 경제제도, 사유재산제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이내	
규모	• 중국의 푸둥(1.6억 평)이나 싱가포르(1.8억 평)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면적	• 개성, 파주, 김포, 강화 일원
특징	• 남북한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공동체 실험장	• 복합형 경제특구

자료: 최용환 외(2007), 『개성공단과 경기북부지역 연계발전 방안』, p.1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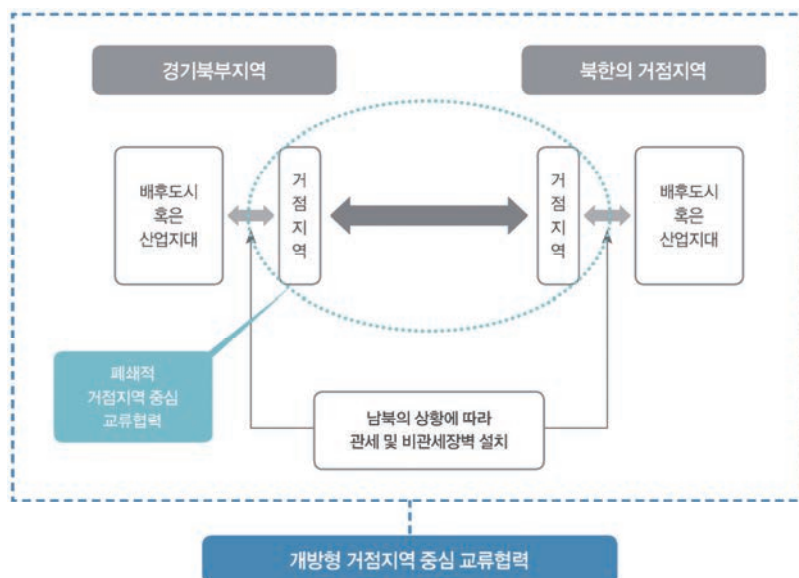
- 경제통합특별지대의 기능과 역할
 - 경제통합특별지대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후지와의 연계를 통해서 남북한 내부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 경제통합특별지대가 남북접경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북 양측과의 연계가 긴요하기 때문임

- 둘째, 경제통합특별지대가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류 및 상업교류의 거점으로 개발되어야 함.⁴⁹⁾ 단순 제조업 기지에 그치거나 교통,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어려운 지역은 물류와 상업교류의 거점으로 개발이 어려움. 통일 이후를 고려한다면 대륙 연계를 통한 동북아 및 유럽지역으로의 육로수송에 용이한 교통과 물류의 중심 기능이 수반될 필요
- 셋째, 경제통합특별지대는 남북한이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는 전진기지이자 남북한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이 보장되는 교류의 거점이 되어야 함
- 넷째, 경제통합특별지대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넘어,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제통합특별지대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험장인 동시에 통일과정과 그 이후에 동북아 주요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적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함

1 추진전략

○ 통일경제특구 추진

-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인접한 남측 거점지역을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통일경제특구의 이론적 기반은 거점지역 중심의 교류협력론으로, 초기에는 폐쇄적 거점지역 중심의 교류협력으로 시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배후도시 및 산업지대가 연계된 개방형 교류협력으로 확대하는 구상
-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의 완전한 통일 이전 단계에서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짐



[그림 3-7-42] 경기북부-북한 거점지역 연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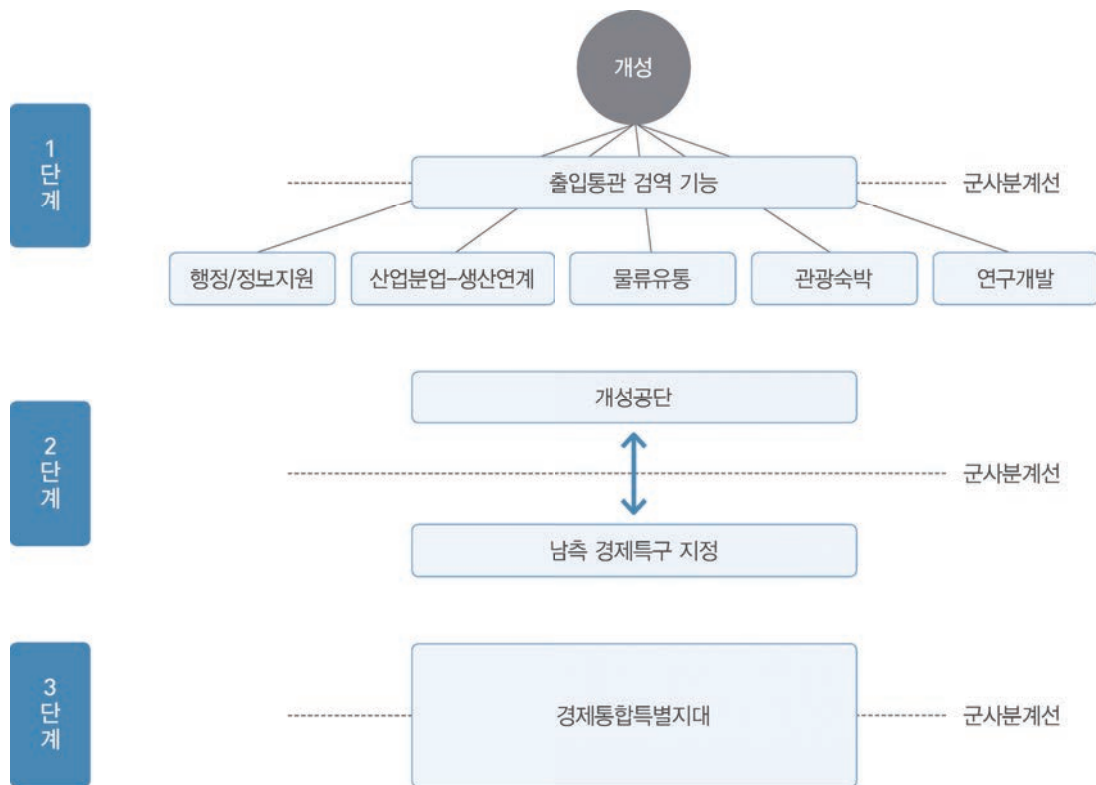
49) 세계의 유명한 물류 중심지(logistic center)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 벨기에의 앤트워프 싱가포르, 중국의 홍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도시는 해운, 항공, 육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심지이다. 그래서 물류중심지라 하면 단순히 사람과 물건의 집산지(集散地)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현대의 이른바 로지스틱 센터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다. 해운, 항공, 육운의 중심지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통관, 하역, 보세 창고, 보험, 택배, 금융 등 관련된 다양한 경제활동이 전개되고 거기에서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된다(남덕우(2003), 『한국경제 생존프로젝트 경제특구』, p.18).

○ 통일경제특구의 단계별 발전을 통한 경제통합특별지대 건설

-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조응하여, 남북 간 산업연계 → 통일경제특구 건설 → 경제통합 특별지대로의 발전 등을 추구

[표 3-7-6] 시기 구분에 따른 단계 설정

	남북관계 개선 정도	통일경제특구
1단계	개성공단 확대 개발	- 개성공단과 남북 배후지역 연계 - 통일경제특구 추진 제도 마련
2단계	- 화해협력 단계 진입 - 남북경협 본격화	한국 지역 대상 특구 추진
3단계	남북 교류 전면화	경제통합특별지대 건설



[그림 3-7-43] 통일경제특구에서 경제통합특별지대로의 발전모형

○ 1단계 개성공단과 남북 배후지역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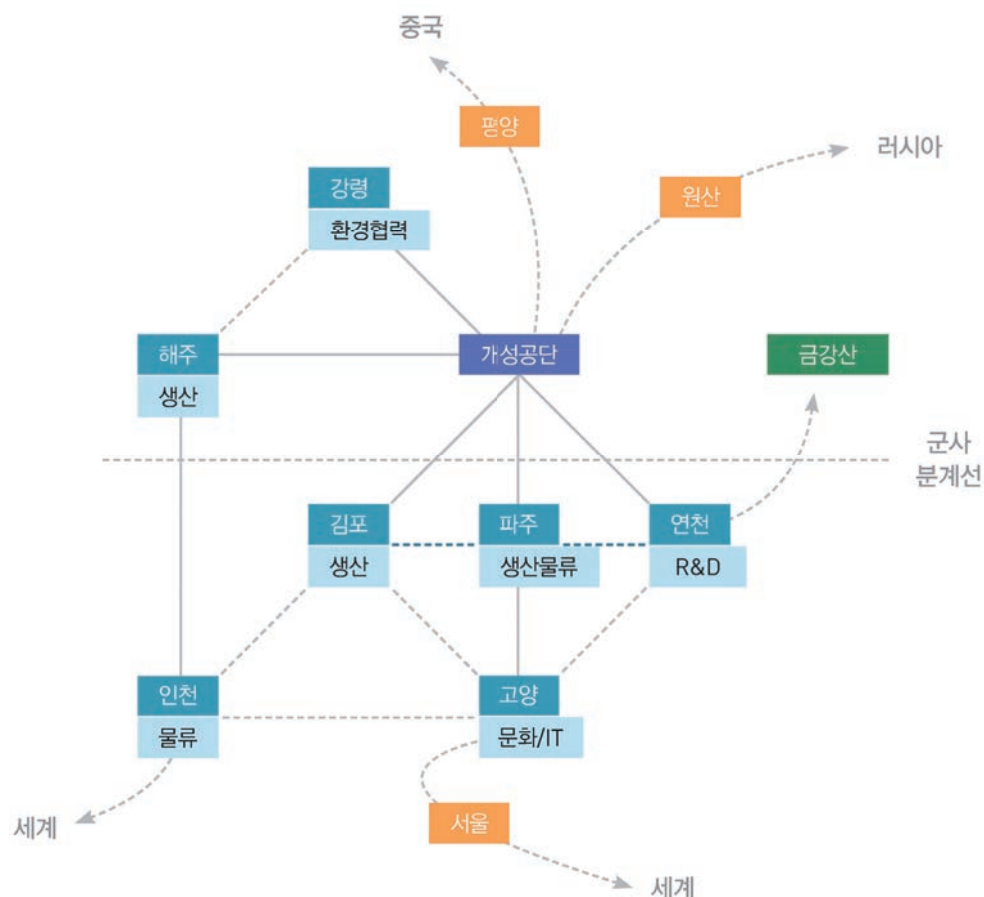
- 1단계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 개성공단 사업에도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 이 경우 개성공단이 일부 확대될 수도 있으나, 최초 계획인 2,000만 평 규모의 공단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 따라서 자족적 도시로서 기능할 수 없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과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남북 경제 연계성 제고에 주력할 필요. 또한 개성공단과 북한 배후 지역과의 연계를 병행함으로써, 북한 내부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 2단계 지역대상 특구 추진

- 2단계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가정. 이 단계에서는 남북경제연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일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지정·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접경지역에 다수의 특구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음. 예컨대, 서부 접경지역에는 통일경제특구, 동북 접경지역에는 통일관광특구, 중부 접경지역에는 생태평화특구 등 추진 가능
- 이외에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해주특구 등 북한 내부에서의 제2개성공단, 한강하구 개발 등도 본격적 협의가 이루어질 것임
- 특히 산업분업에 의한 생산연계 기능은 여러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남북경협벨트 형태로의 발전을 지향

○ 3단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 남북협력을 위한 장애물들이 사실상 제거된 상태로 본격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치들이 시작될 것임
- 최종단계에서 통일경제특구의 형태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식의 본격적인 경제특구형태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형태의 경제특구는 일국양제에 기반하여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행정·사법에 대한 권한의 독자성을 인정받는 별도의 구역
- 이는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적용하고자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구상은 아님



[그림 3-7-44] 접경지역 남북 산업연계 개념도

[7-3] 통일시대 경기북부 공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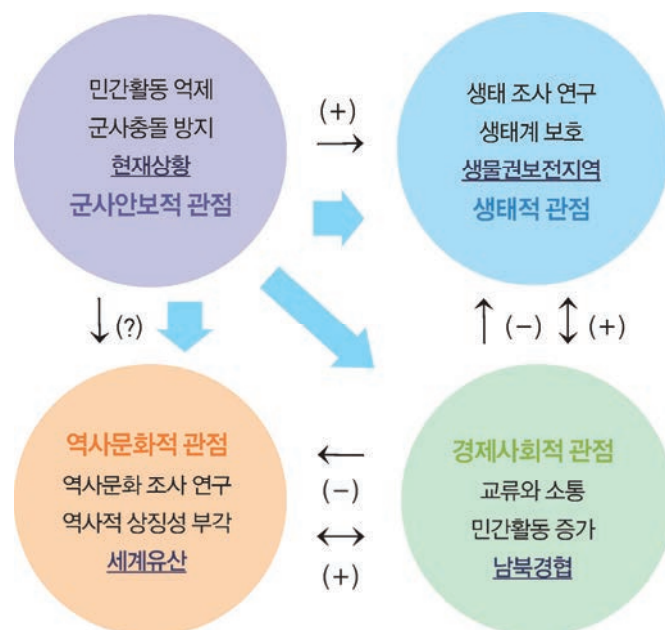
[7-3-1] DMZ·임진강·서해안 3개축 발전

핵심내용

- 통일 이후 DMZ는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는 녹지축으로 기능
- 임진강 수변 관리 및 임진강 축을 통한 발전 추구
- 서해안 축을 통한 임해·국제적 발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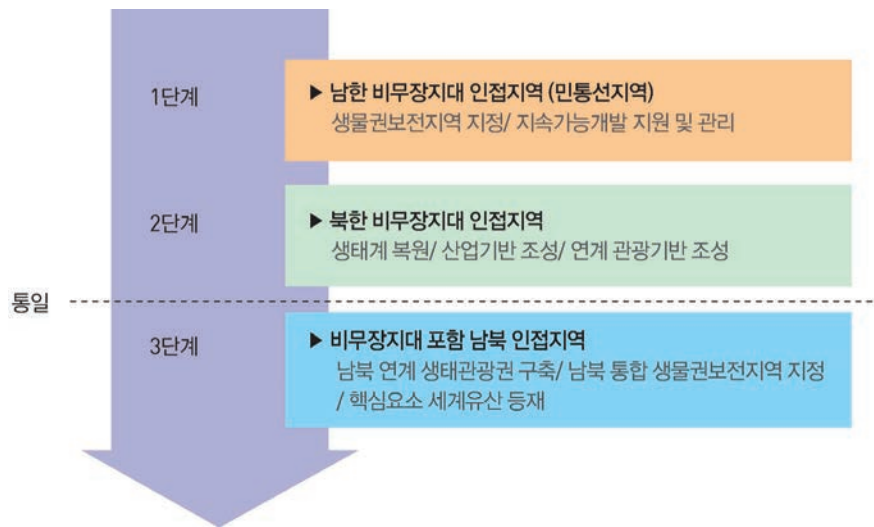
목표와 지표

- 통일시대 DMZ 일원은 과거의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적·역사문화적·경제사회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게 될 것임
- 임진강 축은 단순한 물류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통일 한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기능할 필요
- 서해안 축은 중국과의 직접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한반도 발전의 핵심축이 될 것



[그림 3-7-45] DMZ 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요구와 전망

○ 통일시대를 대비한 단계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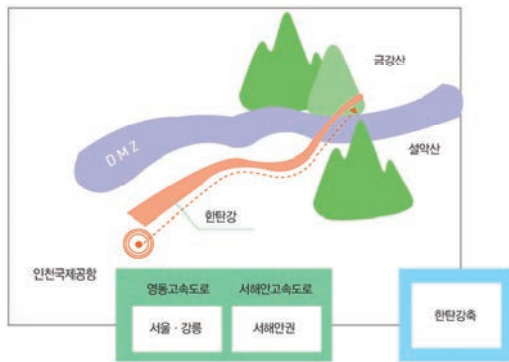
[그림 3-7-46] 비무장지대 활용을 위한 통일 전후의 단계적 접근

- 우선 국내법의 관리 하에 있는 민통선지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며(1단계)
-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의 DMZ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 사업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 후(2단계)
- DMZ 내부를 포함하여 남북을 하나로 묶어 남북평화생태관광 벨트로 발전시키는(3단계) 접근이 필요

1 추진전략

○ 한반도 휴양통로(RC, Recreation Corridor) 조성

- 통일시대 한반도는 DMZ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한반도 휴양축이 이동할 것임.
즉, 과거의 영동선 → 현재의 서해안선 → 통일시대 DMZ 축
- 통일이 되면 겨울스포츠의 메카인 스키장의 축이 이동할 것임.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확고해질 것임.
즉, 현재의 영동선 → 금강산 백두대간 축. 따라서 한탄강 축은 여름과 겨울 휴양이 모두 가능하여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중심축이 될 것임
- 서부 접경지역 임진각에서 임진강, 한탄강을 거쳐 금강산에 이르는 회랑지역에 골프장, 자전거로, 청소년 수련장, 휴양시설, 스포츠시설, 송림 등 생태계 복원, 연계도로 등을 배치하여 휴양통로를 조성하는 것임
- 즉, 한반도 중부 지역의 허리를 관통하는 약 260km를 연계하는 휴양·관광·생태·체험 벨트를 조성



[그림 3-7-47] 휴양·관광·생태·체험 벨트



[그림 3-7-48] 인천 태풍전망대 일원의 철조망과 순찰로

○ 휴전선 155마일 Ko-Nat(Korean National Trail) 조성

- 휴전선 155마일은 우리의 큰 역사 현장임. 역사이면서 자연체험의 통로
-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은 적을 관찰하기 위해 DMZ를 가장 잘 관찰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음. 이러한 구조의 특성상 적을 관찰하는 전망대는 조류 등 동물을 관찰하는 관찰소로 적지라고 할 수 있음
-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순찰로, 전망대 등)이 평화적인 용도의 국가 자연탐방로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이는 비무장지대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순찰로, 전망대 등이 자연관찰을 위한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어 별도의 공사도 전혀 필요 없으며 그대로 두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 비무장지대 남측 남방한계선 철책선을 따라 군사적인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순찰로 및 전망대를 활용한 자연탐방 및 관찰로 개설
- 새로운 시설의 추가적인 설치를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자연파괴 없이, 접근을 지원하는 연계도로 정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 DMZ 북방 북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의 복원·복구

- 생태·환경에 대한 북한의 낮은 관심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산재한 역사 문화자원은 물론이고 훼손된 생태·환경 자원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복구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의 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대경기만 종합발전 비전 추진

- 경기도 시화호, 화성호, 평택항, 영종도 개발 추세를 북한 해주권까지 확장시켜 종합 개발 추진
- NLL 관련 분쟁상황을 평화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서해도서 개발 및 해주권 개발을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
- 서해안 고속도로를 김포-연백, 인천 영종도- 교통도- 해주권으로 연장시키는 도로망 건설
- 평택항과 인천항을 거점항으로 하고, 해주항을 신규 거점항으로 개발

[7-3-2] 서울-동두천-원산 축 및 금강산 연계 개발

핵심내용

-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비전(가칭 금강산 프로젝트)을 추진
- 연천-철원-(북한)평강을 ‘新 철의 삼각지대’로 개발하는 의제를 정부와 북한 당국에 제안
- 금강산선 철도 등 연계 교통망을 연결하여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새로운 관광휴양지로 활용

목표와 지표

- 남북한 정부 공동으로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비전(가칭 금강산 프로젝트)을 2020년까지 수립
- 연천-철원-(북한)평강을 ‘新 철의 삼각지대’ 개발을 남북한 지자체 의제화 추진
- 금강산 연계 철도망을 2030년까지 복원

추진전략

- 서울-동두천-원산 축 개발 비전(가칭 금강산 프로젝트) 추진
 - 서울-원산 축을 잇는 인프라 구축과 ‘新 철의 삼각지대’(철원-연천-평강) 개발
 - 금강산 연계 철도망 복원
 - 금강산-마식령-연천 고대산 관광단지 조성과 한탄강 관광단지, 금강산 관광단지 건설
 - 동두천·철원 도시르네상스 등 추진 (1,400만㎡ 규모의 동두천 국가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기북부 중심의 통일미래도시 건설)
 - 임진강 광역수자원 120만 톤/일 개발
- 서울-원산 간 철도-고속도-가스파이프라인 일체적 건설
 -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KTX 및 도로 건설
 - 철원-금강산 철도 건설, 포천-금강산에 고속화도로 건설
 - 시베리아 가스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가스파이프라인 약 193km 건설

[7-4]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7-4-1] 남북교류와 통일공공외교 추진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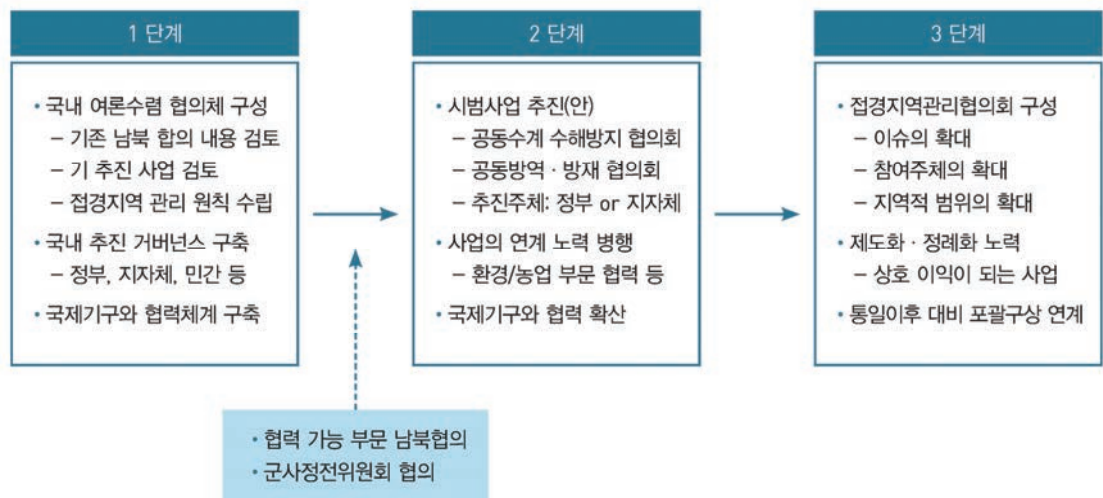
- 남북 공동 접경지역 관리 협의회 추진
- 주변국 국민 대상의 한반도 통일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확산
-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추진

목표와 지표

- 남북교류의 제도적 접근
 - 단기적으로 남북교류는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를 위한 남북한 정례적 협의 체제 및 제도적 협의틀을 구축
- 전략적, 체계적 국제교류
 - 국제교류 대상지역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국제교류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류의 추진과 평가, 평가에 기반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정비
 - 일회성, 전시성 국제교류가 아닌 전략적 교류를 위한 경기도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서 경기도가 주도하는 핵심적 국제행사 혹은 국제기구 건설
 - 지방 간 국제교류를 위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통일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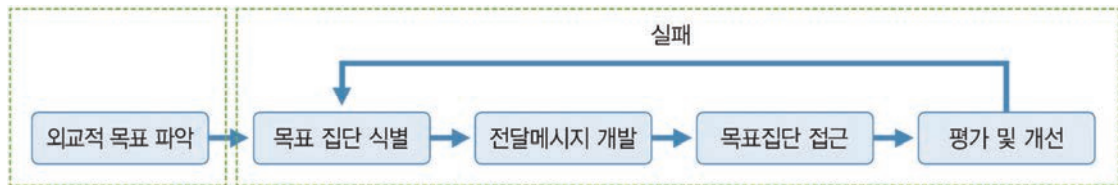
- 남북한 지자체도 참여하는 접경지역관리협의회 설립 추진
 - 국내적 정책 협의체 구성 및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중앙정부 관련 부처, 관련 지자체, 민간 등 접경지역 관련 주요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 파주, 연천 지역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임진강 문제 해결을 위한 ‘임진강 수계 공동활용을 위한 실무 협의회’ 추진을 우선 검토
 - 사업의 연계 및 확장
 - 개별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 간 연계 및 확장성 제고를 통해 접경지역관리협의체로 발전 지향



[그림 3-7-49] 접경지역관리협의회 단계적 발전 구상

○ 통일 공공외교 추진

- 일반적으로 공공외교가 진행되는 과정은 ‘외교적 목표 설정 → 목표 집단(Target audience) 식별 → 전달 메시지 개발 → 목표 집단(Target audience) 접근 → 평가 및 개선’의 단계를 거침



자료: 김규륜 외(201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망과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분석틀』, p.160의 그림을 수정

[그림 3-7-50] 공공외교의 진행과정

- 경기도 국제교류가 공공외교적 성격을 가진다면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기존 교류 검토. 즉, 국제교류의 목표는 얼마나 분명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지역과 목표 집단을 잘 설정하고 있는지, 또한 목표 집단을 설득하기 위한 경기도의 자산과 전달 메시지를 잘 개발해 왔는지 검토 필요
- 동북아 주요 국가들 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은 당국 차원보다는 구체적·실질적인 비정부 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실용적·효과적

○ 경기도가 주도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설립 및 운영

- 중단기적으로는 경기도가 주도하는 정기적인 국제회의를 추진
 - 통일·공공외교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칭) ‘초국경협력 포럼’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환경, 질병, 테러, 마약 등 초국경 이슈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정기적 국제회의 추진
- 장기적으로는 (가칭)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 간 국제기구로 발전

제 8 장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비전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목표 지방정부 기능 강화
지방정부 재정 강화

전략 8-1.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8-2. 자원확충을 통한
재정자주권 강화
8-3.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제1절

지방행정 부문의 여건과 제약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앙 편중적인 기능배분, 지방정부의 기능 통제 및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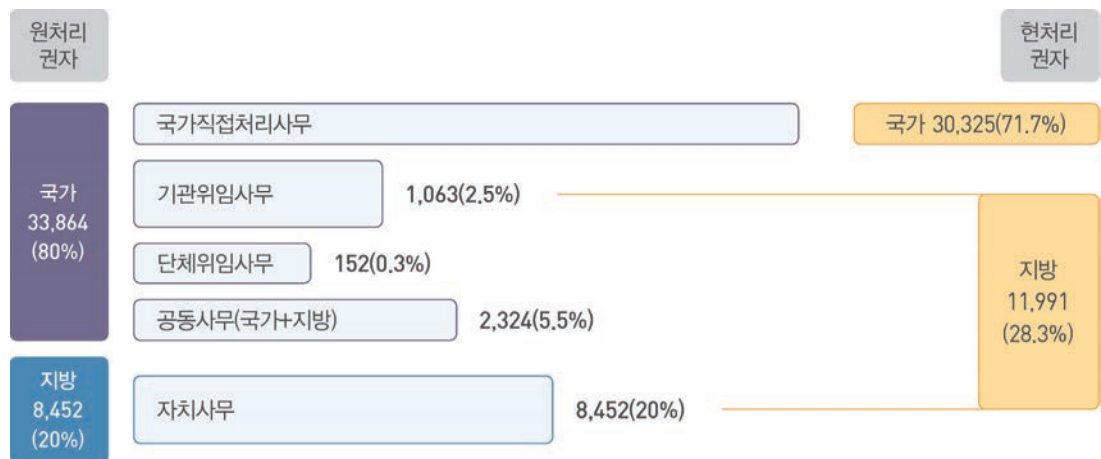
- 중앙과 지방의 국가사무 배분 비율이 71:29로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의 불평등
 - 중앙사무 대 지방사무의 비율은 1994년 75%:25%에서 2002년 73%:27%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09년에는 72%:28%로 감소되어 지방자치에 역행

[표 3-8-1] 중앙과 지방사무의 비율

구분	1994년 총무처 조사	2002년 행정자치부 조사	2009년 행정안전부 조사
대상법령	3,169개	3,353개	4,038개
총 사무수	15,774개	41,603개	42,320개
부문별 사무수	· 국가사무: 11,744개(75%) · 지방사무: 4,030개(25%)	· 국가사무: 30,240개(73%) · 지방사무: 11,363개(27%)	· 국가사무: 30,215개(71.4%) · 지방사무: 12,105개(28.6%)

자료: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2), 행정안전부(2009a)

- 많은 업무와 권한이 중앙에서 시·도나 시·군·구로 위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통제 형태
 - 국가와 지방 간 사무구분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현 처리권자를 기준으로 분류 시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중이 71.7%: 28.3%
- 현재 지방의 사무이양은 중앙적 시각에서 집권화·전문화 등의 이유로 지방으로의 분권화·지방화가 외면되는 경향
 - 특히, 동일한 기능이나 유사한 기능 등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이중적 배분, 법률상 기초와 광역 간 기능배분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능배분은 시행령(위임명령)에 위임
 - 또한 지방자치사무의 형식으로 기능을 배분하지 않고, 위임사무 형식(기관위임사무)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 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자치를 제약하고 있는 현실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림 3-8-1] 국가와 지방의 사무 구분

○ 사무관할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

- 공동사무나 위임사무의 경우 여러 계층의 정부형태가 이양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음
-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에 대해 권한은 이양하지 않고 책임만 부과하는 경향

○ 사무종류별 특성 불명확

-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 같은 경우 정부 간 책임을 회피하게 되거나 이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후관리가 어려움
- 지방이양에 있어 비용부담의 주체, 감독수단, 기준, 조례제정 여부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지방분권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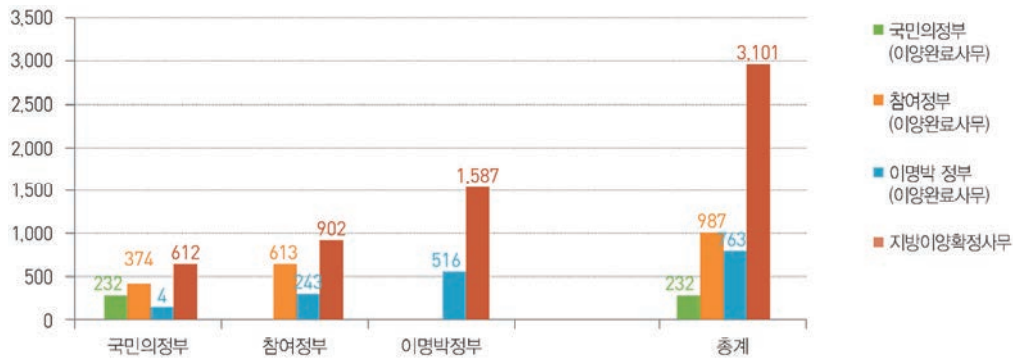
- 현재 총 3,101건의 지방이양 확정, 이 중 1,982건이 지방이양 완료, 지방이양의 성과가 미흡한 실정

○ 지방이양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는 사무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업무만 가중

[표 3-8-2] 중앙정부의 사무이양 추이

구 분	총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소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00	'01	'02	'03	'04	'05	'06	'07	소계	'08	'09	'10	'11	'12	
이양확정	3,101	1,514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1,587	54	697	481	277	78	
이양완료	1,982	1,466	185	175	250	466	53	191	68	78	516	45	336	110	23	2	
추진 중	1,119	48	－	1	1	12	－	12	12	10	1,071	9	361	371	254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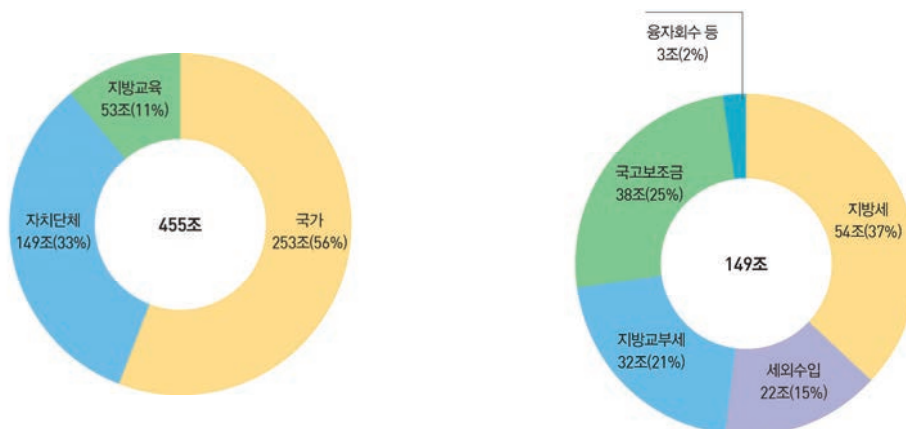
- 이양사무의 특성상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이양이 완료되므로 단기간(1~2년)에 사무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양이 되고 있음



[그림 3-8-2] 지방이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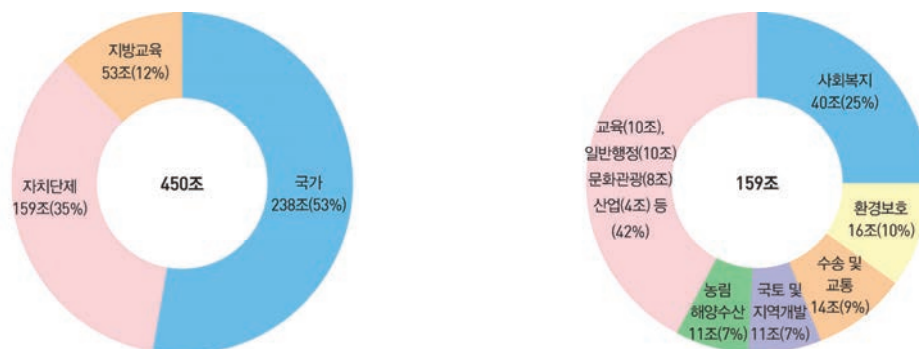
☛ (지방재정 현황) 자치단체 수입은 전체 수입의 33%, 지출은 35%

- 세입 항목별로는 지방세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순



[그림 3-8-3] 통합재정 수입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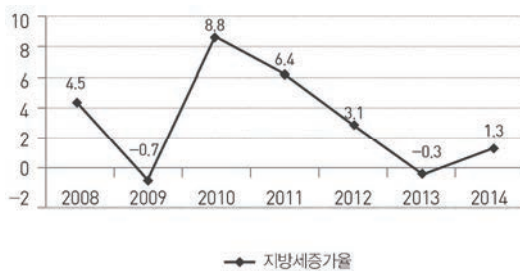
- 지출 항목별로는 사회복지 > 환경보호 > 수송 및 교통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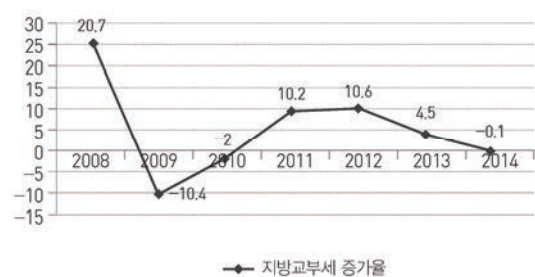
[그림 3-8-4] 통합재정 지출 현황(2014년)

(세입 여건) 지방세 증가율 감소, 지방교부세 증가율 감소로 세입 여건 악화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
-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43%)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신장성이 낮음
 - 2010년~2014년 평균 증가율, 국세 5.1%, 지방세 2.6%
- 2009, 2010년에는 경제위기와 국가의 법인세, 소득세 등 감세정책으로 교부세 급감(△3조 원), 2012년 이후 지방교부세 감소로 세입 여건 악화



[그림 3-8-5] 지방세 증가율(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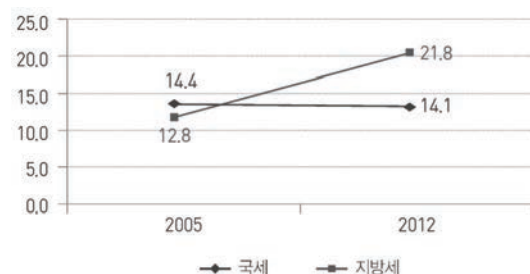


[그림 3-8-6] 지방교부세 증가율(전년 대비)

-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국세 (216.5조) 대 지방세(54.5조) = 8 대 2로 20년 넘게 20% 수준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율, 감면 등을 모두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미약한 상황
-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속 감축 중이나, 국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
- 국가 정책적 목적의 감면 신설
 - 전월세 시장 안전 대책(2011년 0.11조 원), 서민주거안정(2013년 0.7조), 임대시장 활성화(2014년 0.02조 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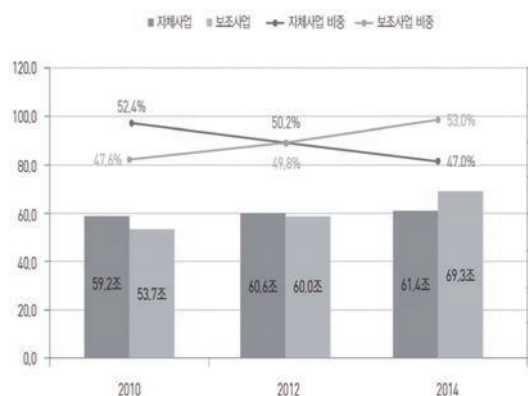
[그림 3-8-7]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각 연도 결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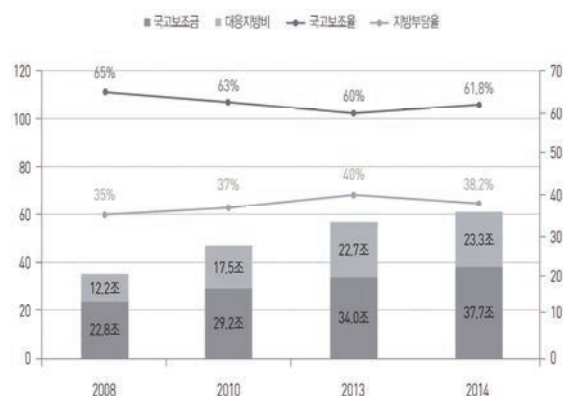
[그림 3-8-8] 국세,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지출현황)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대

- 국고보조금이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에서 2014년 37.3%로 매년 증가
- 반면, 국고보조율은 매년 하락 추세로 지방부담 증가
 -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26개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방부담이 2,608억 원 이상 증가
-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의 비중이 매년 하락하여, 2013년에는 최초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비중이 역전
- 2014년은 보조사업의 비중이 53%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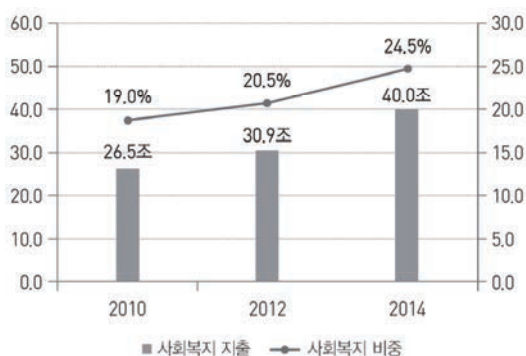


[그림 3-8-9]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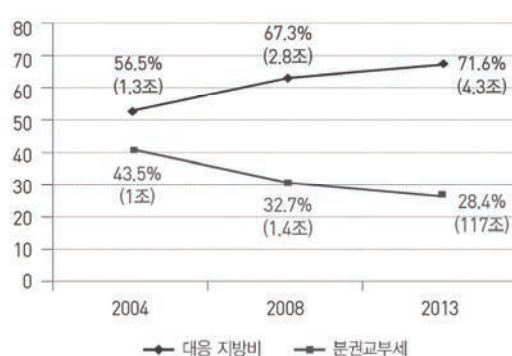


[그림 3-8-10] 자체사업 대 보조사업 비중

-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방예산의 1/4 차지
-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으로 신규 복지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
- 지방이양 이후 지방비 부담 급증
 - 2004년~2013년 연평균 분권교부세 6.3% ↑, 대응지방비 14.4% ↑
 - 지방이양 이후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액 약 2조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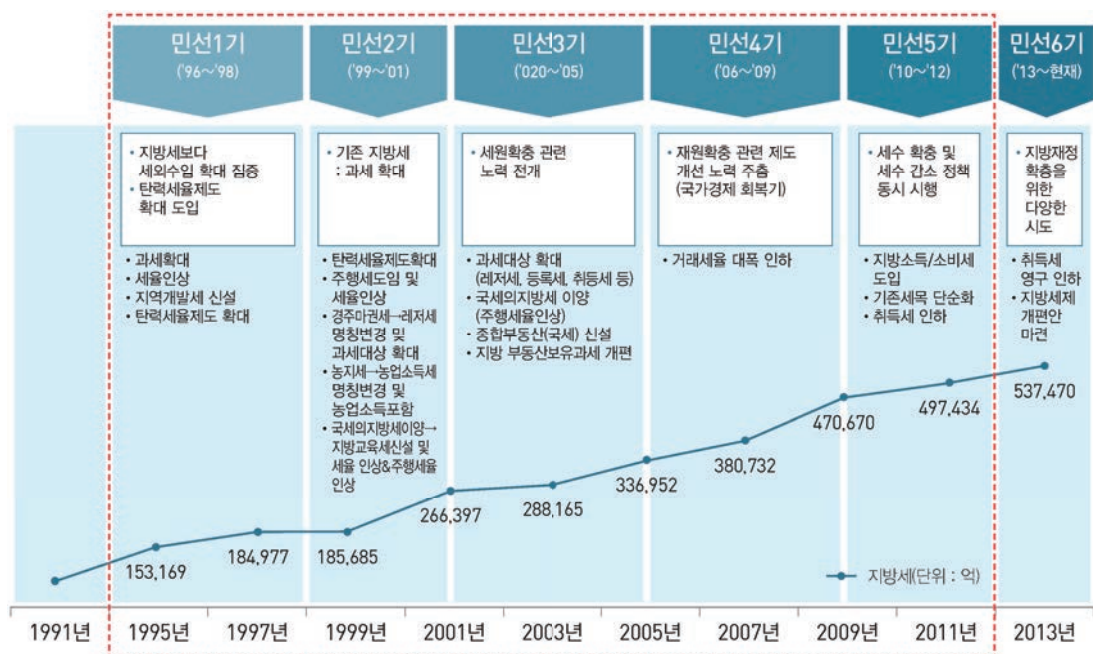
[그림 3-8-11] 사회복지 비중



[그림 3-8-12] 분권교부세 사업 지방부담

(지방세제 개편)

-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방세 체계 개편이 논의
- 개편 결과, 전체 지방재정 규모는 증가된 반면, 지방세 비중 측면에서 지방세 비중은 축소되고 국고보조금 비중이 급증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노력이 부족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 미흡
 -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와의 관계 미고려 → 세제개편으로 인한 순증효과 차이 발생



[그림 3-8-13] 지방세제 개편 추이

- 지방세 체계의 합리성 추구보다는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중장기 전망과 과제

1. 상생을 위한 중앙과 지방 역할 분담(지방정부 권한 강화)

■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이 아닌 기능배분의 원칙 정립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 간 역할 재조정을 통해 중앙사무의 기능 배분 추진 필요
-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재배분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와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기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도록 제도 구축
- 동시에 지방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

■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론적인 접근 보장: 차등적, 포괄적 이양

- 지방자치의 장점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 극복,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성의 창출, 탄력적·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개편
- 차등적 이양은 지방행정체계를 다양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같은 계층의 지자체 간에도 특성, 능력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
- 기능위주의 포괄적 일괄 이양방식으로 전환
 - 현재는 기능에 대한 완전한 권한과 기능이양보다는 기능 내 단위사무 중심의 이양의 비중이 더 많이 이양되고 있는 실정
 - 이는 부수적인 집행사무만 이양되는 결과를 초래, 행·재정적 지원의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개별사무가 아닌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

■ 미이양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그동안 이양확정 후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 사무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 추진
 - 이양이 확정된 사무의 경우, 일정 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 이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항 신설

- 기능이양에 대한 주체와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법령개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 사무이양 시 권한의 소재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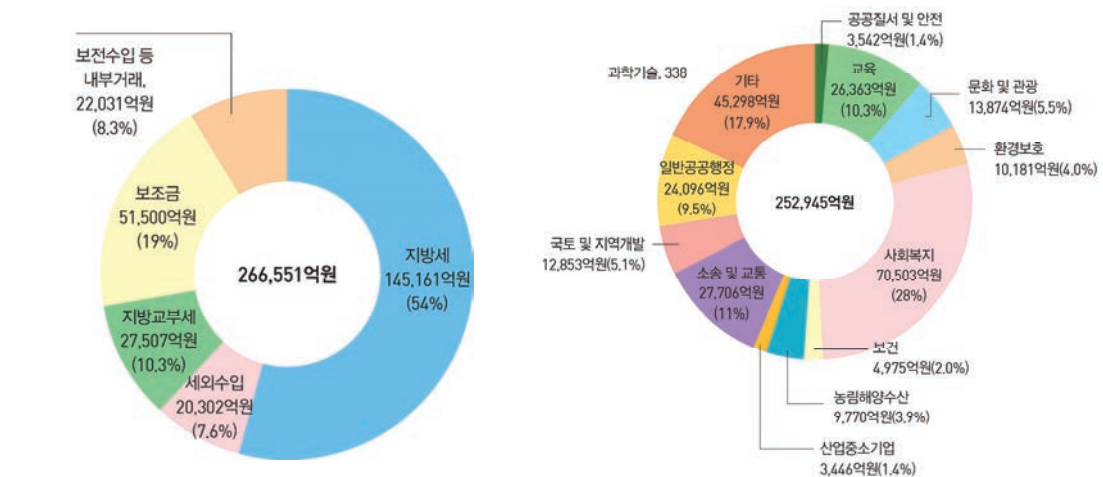
☛ 지방이양 사후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병행

- 중앙에서 지방으로 기능이양 시, 해당 기능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도 동시에 이양
-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과 이양사무처리의 원활화, 자치역량의 제고 도모

2. 2040년의 경기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

☛ 경기도 재정 수입 및 지출 현황

- 세입 항목별로는 지방세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순
- 지출 항목별로는 사회복지 > 수송 및 교통 > 교육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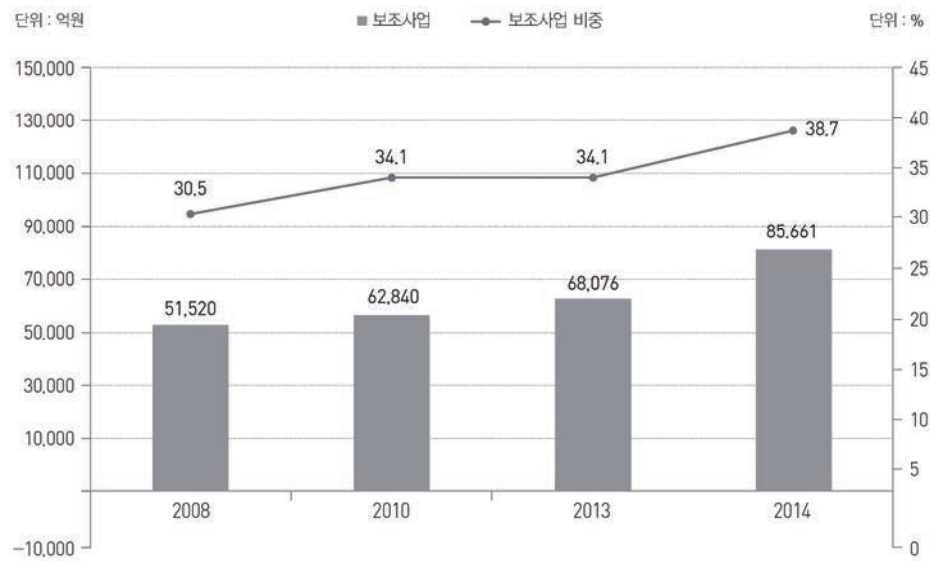


주: 일반회계 순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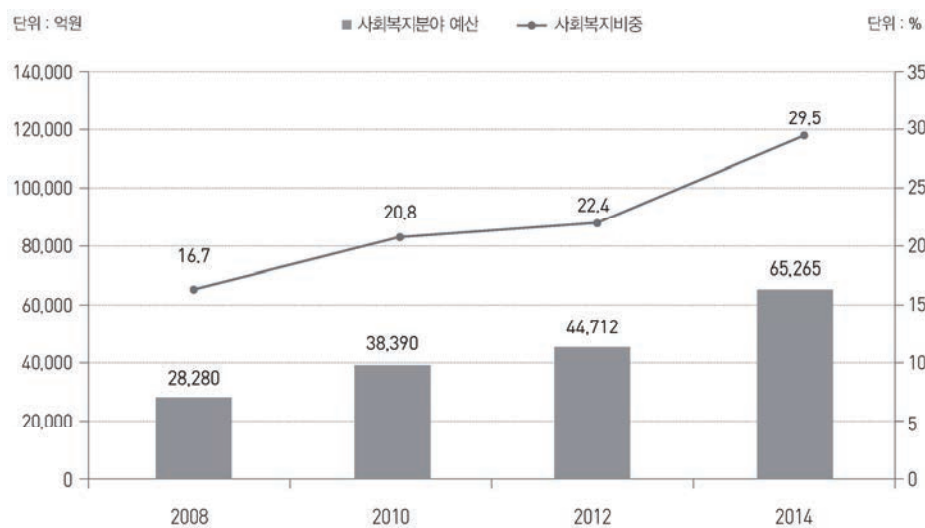
[그림 3-8-14] 경기도 재정 수입 지출 현황(2014년)

☛ (재정 여건 및 수요)

-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액 등의 지속적 증가
- 무상보육·무상급식 실시, 기초연금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사회복지인력 충원, 분권교부세 사업비 등 지방비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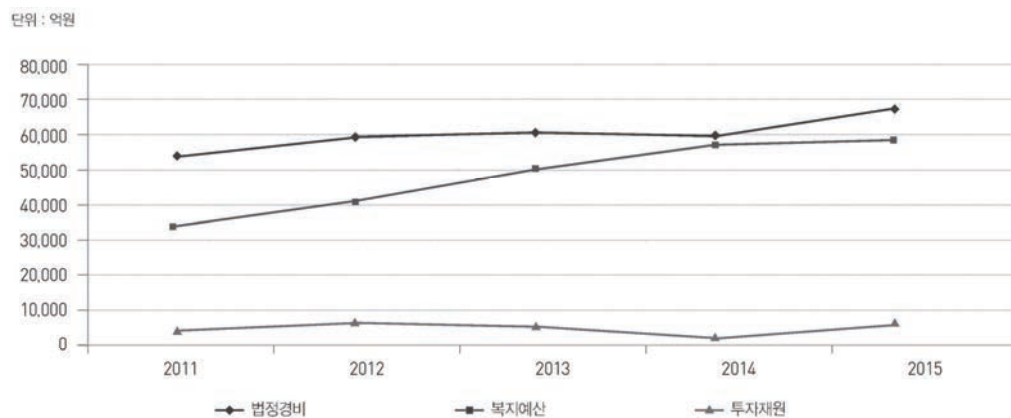


[그림 3-8-15] 경기도 보조사업 비중



[그림 3-8-16] 경기도 사회복지사업 비중

○ 경기도 세출의 주요 변화요인으로서는 복지예산 증가, 투자재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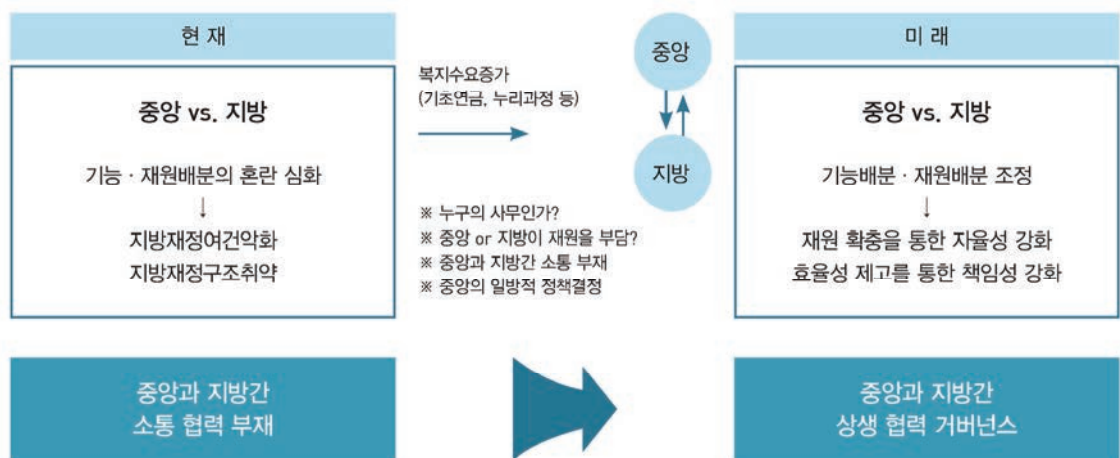
[그림 3-8-17] 경기도 세출요인 변화 추이

제3절

지방행정 부문의 비전과 전략

1.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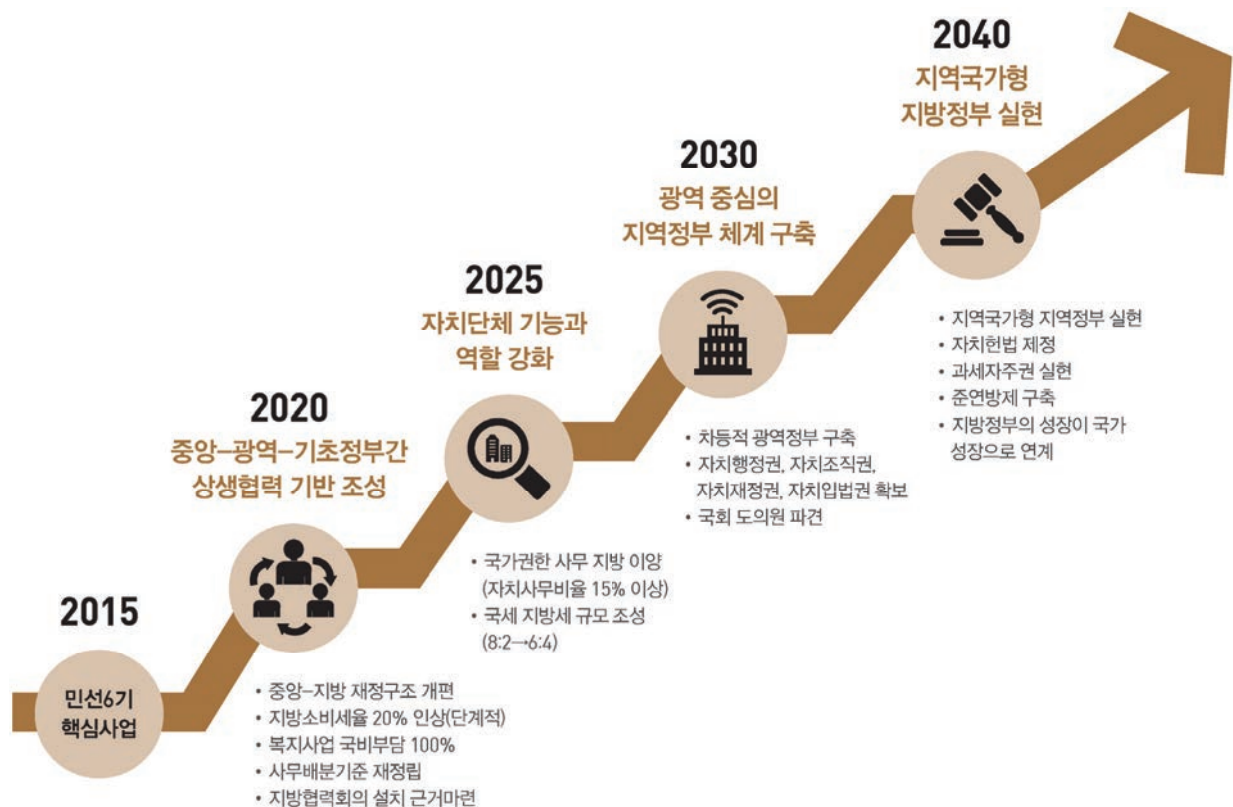
- 중앙과 지방 간 이분법적 기능 배분 ⇒ 중앙과 지방 간 사무·재원기능 조정
- 지방재정 여건 악화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자율성 강화
 - 지방예산 증가 둔화, 지방세수 신장 둔화, 지방재정 자립도 악화
- 지방재정 구조의 취약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 책임성 강화
 -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지출 경비 증가, 지방채 규모 증가, 방만한 재정운용 사례 등 재원의 총량보다 재원배분 관리방식의 비효율성 야기
- 중앙과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 부재 ⇒ 중앙과 지방 간 상생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림 3-8-18] 중앙과 지방 간 협의기구

2.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변화상과 2040 비전 설정

- (2020 변화상) 민선6기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경기연정의 일환으로 국가-지방 세원공유 및 상생기금 마련, 연정과 협치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년 후에는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상생협력 체계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고보조율 인상,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부담분 사전협의, 신규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체계 개편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구조 개편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기준·방식 재정립
 - 지역내 파트너십 체제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 상생협력 체계 기반 조성
- (2025 변화상) 민선6기 핵심시책의 연정과 협치, 정부 간 상생협력 사업과 지방의 재정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속적 실천을 통해 10년 후에는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임
 - 자치경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양(자치사무 비율 40% 이상으로 확대)으로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
 -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배분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기준으로 지방세 규모 조정(8:2→6:4)
- (2030 변화상)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정부 구축을 통해 2030년경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정부 체계를 구축해 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 인구규모, 면적, 재정력 등 지자체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적 광역정부 구축
 -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보
 - 국회에 도의원 파견 등
- (2040 비전) 차등분권 강화, 재정자주권 강화, 정부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으로 2040년의 미래비전상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며, 지방자치 통치원리 및 지방자치권이 보장될 것임
 - 지역국가형 지역정부 실현
 - 자치헌법 제정, 과세자주권 실현, 준연방제 구축
 - 중앙과 지방 간, 정부 간 상생을 통해 지방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형성



[그림 3-8-19] 지방행정 부문의 변화상과 2040 비전의 설정

3. 2040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

■ 비전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으로 설정

■ 2대 목표

- 지방정부 기능 강화 / 지방정부 재정 강화

■ 전략

-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규모별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 특례 등 3개 아젠다 추진
-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자주권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 기능조정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합리적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등 3개 아젠다 추진
-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전략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 행·재정 협의기제 구축, 지역 내 파트너십 체제 구축 2개 아젠다 추진



[그림 3-8-20] 지방행정 부문 비전·목표·전략

4. 미래지표의 설정

미래지표의 선정

-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비전에서는 중앙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로서의 자립도를 높이는 경기도를 목표로 하여 지표를 설정함
- 주요 지표는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부문에서는 지방정부 자치사무비율을 주요 지표로 선정함
-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기능 강화 전략에서는 재정자립도를 주요 지표로 선정함
-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전략에서는 주민참여도를 주요 지표로 선정함

미래지표의 설정

구분	미래지표	기준연도	2020	2025	2030	2040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자치사무비율(%)	(2015) -	10	15	20	40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기능 강화 전략	재정자립도(%)	(2015) 60.7	65.0	70.0	75.0	85.0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전략	주민참여도(%)	(2015) -	20	25	30	40

제4절

지방행정 부문의 아젠다별 추진전략

[8-1]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8-1-1]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 핵심내용

- 광역자치단체 중심 지방분권 추진에 의한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체제 구축
- 자치역량 강화 및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광역지방행정체제 개편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준연방체제(semi-federal system) 확립

☞ 목표와 지표

-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권(자치행정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확대 필요
 -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위한 배분기준·방식 재정립, 국가위임사무 폐지 등 자치행정권 확대
 - 국고보조율 등 지방부담분 사전협의 및 과세자주권 확립을 통한 자치재정권 보장
 - 부단체장 정수·사무 및 조직(실·국·본부) 운영을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확보
 - 조례제정 범위 확대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다양화 등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등
- 「헌법」을 비롯한 지방분권·지방자치 관련법률 일괄 제·개정 도모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분권형 개헌 등 필요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시·도)를 5~7개의 초광역자치단체로 통합·재편
 - 예) 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②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 ③ 호남권(광주+전북+전남), ④ 대경권(대구+경북), ⑤ 부경권(부산+울산+경남), ⑥ 강원특별권(강원), ⑦ 제주특별권(제주)

☞ 추진전략

-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세 자율제정권 확립을 통한 과세자주권 확립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조례제정범위 확대,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확대·다양화

- 무단체장 정수·사무 및 조직(실·국·본부) 운영권한 법령 → 조례로 결정 등

[표 3-8-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예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추진사항(2015)

쟁점	현행	개정안
자치입법권 강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 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시 법률위임 요구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 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법률위임조항 삭제
	○ 조례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등 벌칙 다양화
의회의 법률의견 제출권	—	○ 의회는 조례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
법정수임사무 신설	—	○ 위임사무 폐지, 자치사무/법정수임사무로 단순화
자치조직권 강화	○ 법령에 의해 제약	○ 무단체장 정수 확대 ○ 부속기관 설치 등 조직권과 무단체장 업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
일반행정-교육행정 통합	○ 교육을 위한 별도 기관 설치	○ 지방의 일반사무로 관장
자치경찰제 신설	○ 제주에 한정 운영	○ 자치경찰제 실시 근거 명시 ○ 시·도 자치경찰-시·군·구 자치경찰 도입
자주재정권	○ 국가의 자주재정 조장 의무	○ 자주재정권 명시, 사무이양 시 재정지원 의무
	○ 국고보조율, 지방부담률 법령으로 제정	○ 사전에 지방협의체와 협의 의무
	○ 지방세(조세) 법률주의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부과·징수
국가감독권의 한계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모두 감독	○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국가 감독
중앙-지방 상하표현 수정	○ ‘보고’ 등 용어 사용	○ ‘보고’ → ‘통지’ 또는 ‘통보’ 등으로 용어 변경
중앙-지방 협력 강화	—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 준연방체제 확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검토)

- 전문 등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방자치 통치원리 및 지방자치권 보장
- 지방정부로 표현 전환 및 지방정부의 종류(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명확히 규정
- (자치행정권) 행정권한의 지방분권화,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입법으로 지방정부조직 결정, (자치재정권)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세자율제정권 등 명시
-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국회 양원제(민의원·참의원) 도입 등

[표 3-8-4] 지방분권형 개헌안 예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 연구용역 결과(2015)

쟁점	현행	개정안
지방분권 지향	—	○ 전문 및 제1조 3항 신설, 지방분권 국가 지향함 명시
자치권 명시	—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보장
지방자치 통치원리 신설	—	○ 통치기구는 권력분립과 보충성 원리를 기초로 구성
지방자치단체 종류	○ 법률에 위임	○ 중앙정부-자치정부로 구분 ○ 자치정부는 기초·광역으로 구분
지방의회 권한 강화	○ 국회 입법권만 명시	○ 국회 입법권과 지방의회 입법권으로 분권화 명시
자치행정권 명시	—	○ 행정권의 지방분권화 명시
자치조직권 명시	—	○ 지방의회가 입법으로 지방조직 결정
지방재정 강화	○ 조세법률주의(국회 결정)	○ 국세는 국회에서 ○ 지방세는 지방의회에서 결정
국회 양원제 도입 (민의원-참의원)	○ 단원제 국회	○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분 ○ 지역대표성 반영하여 광역·기초의회에서 참의원 선출
자치분권평의회 신설	—	○ 중앙-자치정부 간 협의 목적 ○ 대통령, 각 광역자치정부의 장, 기초자치정부의 장의 협의회가 광역자치정부의 장의 숫자와 동수로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
지방자치 강화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외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법률에 위임	○ 광역과 기초 역할 명시, 지방의회 구성, 입법권 보장 등 내용 강화

○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광역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 관련 특별법 제·개정안 국회 입법발의 추진(親지방성향 국회의원 섭외 및 입법발의 지원)
- 현재 정치권자 및 향후 정치후보자 오해불식을 위한 토론회·세미나 수시 개최 등 공문화 추진

[8-1-2] 규모별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 특례

핵심내용

- 인구규모, 재정력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 규모별 대도시 특례 모델 개발
- 각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공유하여 배분 기준 마련
- 사무특례 확정 후 사무의 이양규모 및 성격, 도 재정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세부적인 행정·재정 운영특례 마련
- 포괄적인 지역동질성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

목표와 지표

- 인구규모, 면적, 재정력 등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
 - 인구 100만, 50만, 30만, 20만 등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무에 차등 배분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 규모별 대도시 특례 모델 개발
 - 인구 5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등 인구,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실질적 특례 발굴
- 사무특례 규모를 기준으로 행정·재정운영특례를 마련하되, 도 및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표 3-8-5] 우리나라 대도시 행정특례의 기준

도시 구분 특례 인정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50만 이상 시	100만 이상 시			
특별인정 범위	법적 지위	-	-	광역시	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구조	행정구	행정구	자치구, 기구	자치구, 기구, 인사	행정구
	행정 운영	사무배분, 감독범위	사무배분, 감독범위	사무배분, 감독범위, 재원배분	사무배분, 감독범위, 재원배분	사무배분, 감독범위, 재원배분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자료: 고경훈(2014), 대도시 사무특례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추진전략

- (사무 특례) 50만·100만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 대도시 사무특례 대폭 확대
 - 인구 외 도시 특징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모델 개발
 - 사무특례 확정 후 사무의 이양규모 및 성격, 도 재정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세부적인 행정·재정 운영특례 마련
 - 전문부문에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는 “책임부지사” 제도를 도입하고, 인구수를 고려하여 책임부지사를 1~2명 확대(지방자치법 제110조)하는 방안 검토

- (행정운영 특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반영
 - 기존 총액인건비제는 50만 이상·미만으로 구분·운영(100만 이상 미구분)
- (재정운영 특례) 100만 이상 대도시 재정자율성 확대
 - 지방채 발행비율 확대: 현행 5% → 8%
 - 재정투융자 심사 완화: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신규 사업 자체심사(100억 원 이상 사업은 중앙 의뢰 심사 유지)
 - (현행)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신규 사업은 시 자체심사,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도 의뢰 심사, 100억 원 이상은 중앙 의뢰 심사

[8-1-3]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 체계 정비

핵심내용

- 전국적 통일성, 국가정책 등 필요에 따라 국가/지방 사무·재원배분 기준 마련
-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에 따른 효율적 사무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상호협력
- 중앙사무 중에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 필요, 지방사무 중에서도 전국적 정책, 통일의 필요성이 있는 중앙의 협조 필요

목표와 지표

- 현행 법령상 기준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사무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합리적인 재배분 추진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중복 배분 금지,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
- 단편적이고 포괄적인 현행 사무배분 기준을 주민의 접근성 및 주민 편익성 증진, 사무처리의 편의성 도모 등 사무배분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표 3-8-6] 사무배분기준 보완

구분	사무배분기준 보완
국가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7개 기준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종합적·통일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 등 6개 기준 보완
시·도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6개 기준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등 5개 기준 보완
시·군·구 사무	현행 지방자치법상 1개 기준에 “현지성이 강하여 시·군·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등 4개 기준 보완

추진전략

- 자치사무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포괄적, 일괄적 이양 및 법적 조치 마련
 - 자치사무 비율 40%를 목표로 「지방일괄이양법(가칭)」의 단계별 제정 추진
 - 지방일괄이양법: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을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1단계) 그동안 이양확정 후 법률개정이 되지 않은 미이양 사무(기관위임사무 중심)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 추진

- 대상: 총 20개 부처, 111개 법률, 649개 사무(지난 정부 위원회(지방이양추진위, 지방분권촉진위) 이양 결정(3단계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부처에 통보했으나, 해당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미이양 상태로 남아 있는 사무)
 - 사무: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 386개(59%), 일반사무 263개(41%)
 -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무이양을 위한 조치 등 규정
 (2단계) 국가총사무 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 법제화 추진
 (3단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일괄 법제화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 사무와 대도시 특례사무
 -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
- 신규 이양사무 발굴 및 지속 이양 추진
- 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 중심의 사무 발굴 및 이양 추진
 -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8-2]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기능 강화 전략

[8-2-1] 중앙과 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

핵심내용

- 지역실정에 맞는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 현실화 등으로 지방세수 결정권 강화
- 지방세원 발굴 등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목표와 지표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
 - 세입분권을 통해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해 세율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세자주권 강화
 - 세출분권을 통해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재원을 이전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자주재원을 기초로 재정을 운영
- 단순히 “지방재정의 규모 확대”가 아니라,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 결국, 이는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노력과 기능배분 수준을 고려하여 지방세 규모의 조정
-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배분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결정된 중앙과 지방 간 예산규모는 60: 40이므로 지방세 규모가 총 세수의 40% 정도 되도록 개편

추진전략

-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비율 확대
 - 국가·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 조정
 - 국세수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13년 23% → '17년 15% 이하),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의 현실화 등 지방세제 개편
 - 지방세제 개편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세 확충
 - 행정수요 변화 등과 연계한 교부세 제도 개선(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 등)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
- 권한 및 재원 이양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투명한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8-2-2]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보조금 확대

핵심내용

-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역할 분담체계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지방이양, 통폐합 등)
- 정부 간 사무 배분에 따른 기준보조율 재설계, 포괄보조금 확대 등 자원분담 체계 구축
- 유사 중복 사업을 포괄보조사업화,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 심사 강화 등

목표와 지표

-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역할 분담체계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지방이양, 통폐합 등)
 - 국고보조사업: 2005년 359개(지방비 부담 7조, 32%) → 2013년 956개(23조, 40%)
- 정부 간 사무 배분에 따른 자원분담 체계 구축
 - 기준보조율 재설계, 포괄 보조금 확대

추진전략

-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
 - 국고보조사업 중 전국 공통적이면서 국가사무적 성격의 사업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구분
 - 국가 사무적 성격,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적 성격,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과 지역밀착형, 지역특수적 사업 등으로 구분
 - 중앙정부의 역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지방정부의 역할 등으로 역할 설정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 자원분담비율 기준 결정
 - 국고보조사업의 사회적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재량에 따라 보조사업을 구분한 다음, 이에 따른 자원분담 비율 결정
 - 국고보조사업 중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국가적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보조율을 기본적으로 상향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재량에 따라 보조사업을 구분한 후 각 특성별로 기준보조율 적용
-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
 - 보조사업 중 지역특수적 사업, 파급효과가 없거나 적은 사업 등은 구분하여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는 한편,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지방세 신설 및 신세원 개발 등 지방세 확충을 통해 재원을 조달 필요
 -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가능한 사업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지원 필요

[8-2-3]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핵심내용

- 지방재정관리제도에서 재정위기관리제도까지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운영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재정위기단체의 선정 기준 및 지표의 개발

목표와 지표

-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권리인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둘째, 지방재정위기를 발생시킨 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지울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국제적·국가적 경제위기의 발생 및 국가정책적 세입구조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재정 위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재정위기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재정위기를 발생시킨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제도의 개선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의견 반영
 - 재정관리단체 지정, 국가개입, 재정관리관 파견 등 제도의 모든 내용이 신중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해당사자 간 상호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필요
 - 넷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지방자금이 아닌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필요
 - 지방재정의 위기 발생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돌릴 수 없으며 중앙정부 역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국고 지원 내용이 반드시 포함
 - 다섯째, 사법적 과정을 통한 재정관리단체 지정
 - 재정관리단체 지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행정법 관련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
 - 여섯째,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재정관리제도와와의 연계·통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추진전략

○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7단계론)

① 1단계: 지방재정 위기로 가는 단계

- 지방재정위기단체를 모니터링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의회에서 수시로 즉각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모색

② 2단계: 재정관리단체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단계

- 시·군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의 예산담당공무원, 재정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최종적으로 재정관리단체에 지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역량 지원

③ 3단계: 재정관리단체 신청 단계

- 행정자치부 직권에 따르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정관리단체를 신청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신청으로 일원화

④ 4단계: 재정관리단체 지정 단계

- 재정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결정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논리 정교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에서 재정관리단체 지정을 논의하는 것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지역특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적극 대변, 이를 위한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의 양성, 파산 관련 전문 변호사의 적극 활용

⑤ 5단계: 재정관리관 파견, 재정관리계획 수립 단계

- 시·군에 재정관리관이 파견될 때 도의 예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와 관내 시·군과 긴밀한 연계고리를 형성하고 다양한 도의 지원 모색
-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할 때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이때 지방의회는 반드시 참여, 재정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승인 필요

⑥ 6단계: 재정관리계획 집행 단계

- 계획의 정확한 집행 및 주기적인 점검

⑦ 7단계: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해제 단계

- 재정관리단체 지정 해제 후 지방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노력 및 꾸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적인 재정관리제도 및 재정위기제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DB 구축 및 재정 관련 전문가 양성

[8-3]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전략

[8-3-1] 중앙과 지방 간 행·재정 협의기제 구축

핵심내용

- 중앙의 대표와 지방의 대표가 참여하여 상호협력 강화 및 상생발전방안 논의
- 지방행·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 간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정례화
- 중앙·지방 협의체가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방안 마련, 설치 법제화

목표와 지표

-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중앙과 지방의 협의기제가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 기구 및 법제화 방안 마련
- 지방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지방 합의와 이행 의무화
 -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제 등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에 따른 재원분담의 구속력 담보를 위한 협의기제 마련
 - 지방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 간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지방세 관련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대안 마련

추진전략

-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운영((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 (구성) 의장(대통령), 부의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중앙정부(4):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정부(17):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포함 시·도지사
 - (기능)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비율 조정 등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새로 부과하거나 재정부담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제도 관련 의장이 부의한 사항 등 심의
 - (정기회의) 격월 개최(매 짝수 월)
 -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도지사 위원의 1/4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 (회의진행) 회의 안건은 의장과 부의장이 각각 제안
- (결과조치) 회의의 심의사항 및 논의결과 국무회의 통보
- (보조기구) 국무총리 소속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국무총리실국무차장,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각 2명씩 지명하는 실무협의회 설치(구체적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협의체 설치·운영, 중앙과 지방이 협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 이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기획·입안 및 실시에 대하여, 국정운영의 대표인 대통령과 지방운영의 대표인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관련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적 연합 조직 대표자가 협의를 실시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 「(가칭)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8-3-2] 지역 내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핵심내용

- 공공부문에서의 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대화의 장(場)” 구축
- 도민, 도의회, 집행기관 상호간 지방자치의 인식을 함께하는 “공유의 장(場)” 구축
- 내·외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관계 강화하는 “참여의 장(場)” 구축

목표와 지표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최대 고객으로 하는 행·재정 운용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공공(정부)부문과 민간(비정부)부문의 공동의 참여와 조정 및 수평적 협치(governance)를 통한 효율성과 민주성의 확보
 - 공공부문(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 민간부문(도민) 간의 관계를 상호간의 소통(communication)을 기반으로,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서의 행정조직의 ‘슬림(slim)화’, 행정정보의 ‘공개(open)화’, 행정제도의 ‘규칙(rule)화’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의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추진전략

- 대화의 장(場) 파트너십
 - ① 기본방향
 - 공공부문에서의 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대화의 장(場)” 구축을 통하여 상호 대립과 갈등 등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생산적 책무와 권한을 행사토록 함
 - ② 추진목표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갈등 해소 및 정책 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도정에 대한 도의회와의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의사소통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
 - ③ 추진사례
 - 기관분립형인 기관구성형태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구조의 경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연정(연합정치: coalition politics)과 같은 정치적 실험사례
- 공유의 장(場) 파트너십
 - ① 기본방향
 -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과 경쟁”, “분권과 합의”의 정치구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민, 도의회, 집행기관 상호간 지방자치의 인식을 함께하는 “공유의 장(場)” 구축을 통하여 정부 간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토록 함

② 추진목표

-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 과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간의 정부 간 관계(지방분권) 대응의 공조체제를 모색

③ 추진사례

- 지역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기-제주의 상생협력체제구축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와 기업, 조직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따복 공동체의 구축

○ 참여의 장(場) 파트너십

①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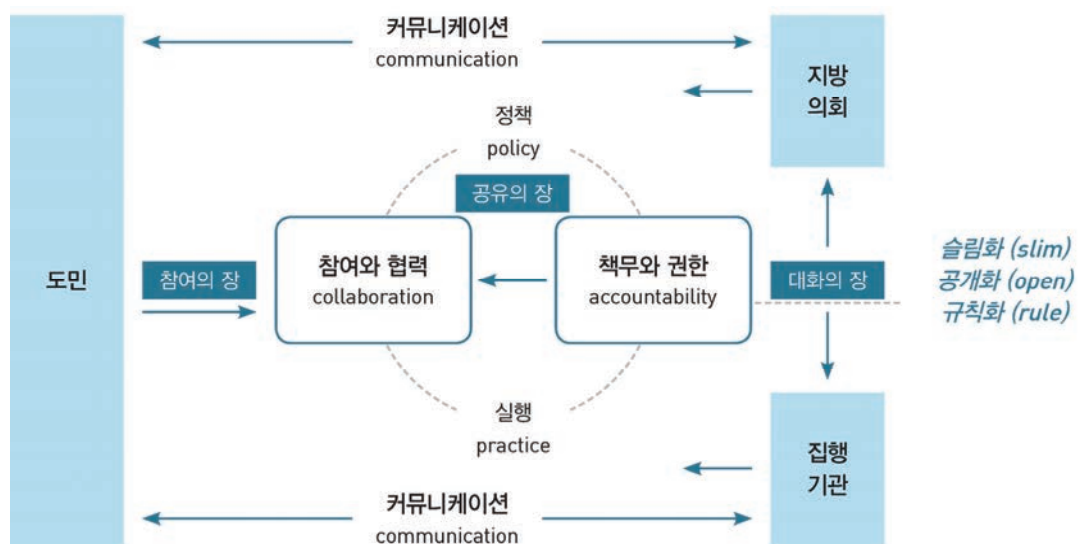
- 내·외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관계 강화하는 “참여의 장(場)” 구축을 통하여 지역민의 호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함

② 추진목표

-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의 확대로 집행과정에서의 마찰과 오해를 불식하고 지역 리더(leader)와의 정책 형성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여론의 통합과 확산

③ 추진사례

- 도민의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G뉴스 “굿모닝 경기빛의 운영”, 도민이 원하는 정책아이디어를 도민이 직접 선정토록 하는 “경기도 제안 창조 오디션”의 운영



[그림 3-8-21] 도민-지방의회-집행기관의 상생모델

제 4 편 실천전략

제1장 | 비전의 실행체제 구축

제2장 | 추진 일정

제3장 | 소요자원 추계

제1절 2040 비전의 실행을 위한 추진방향

미래비전 실천의 시스템화

- 미래전략 주무부서의 상시적 관리체제 구축
 - 상시적 모니터링과 연차별 이행보고서 발간
- 실·국의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비전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각 실국의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실행계획 수립·시행
 - 실국별로 비전 실행과 관리를 담당할 주무과장 지정
 - 참고로 핀란드는 정권 수립 후 의회와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정책과 사업을 추진

(정책기획관실) 미래비전 실천의 모니터링 및 평가

- 비전 실천에 관련된 문제 진단/평가/대안을 상시적으로 모색하고 관리
- 경기도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미래전략 정책연구 컨설팅 강화
 - GRI,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

(관련 실·국)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 부문계획의 수정 시 반영

- 2016년에 실·국별 실행계획 수립, 시행
 - 각 실국의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비전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표 4-1-1] 비전 2040 실천을 위한 실·국별 실행계획 수립 예

부문	전략	아젠다명	지표	추진기간			근거 /비교지역
				단기 (~2020)	중기(2021 ~2025)	장기(2026 ~2040)	
경제	1-1.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전략	1-1-1.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	■ R&D사업 사업화 성공률 (%)	50	55	60	2013년 기준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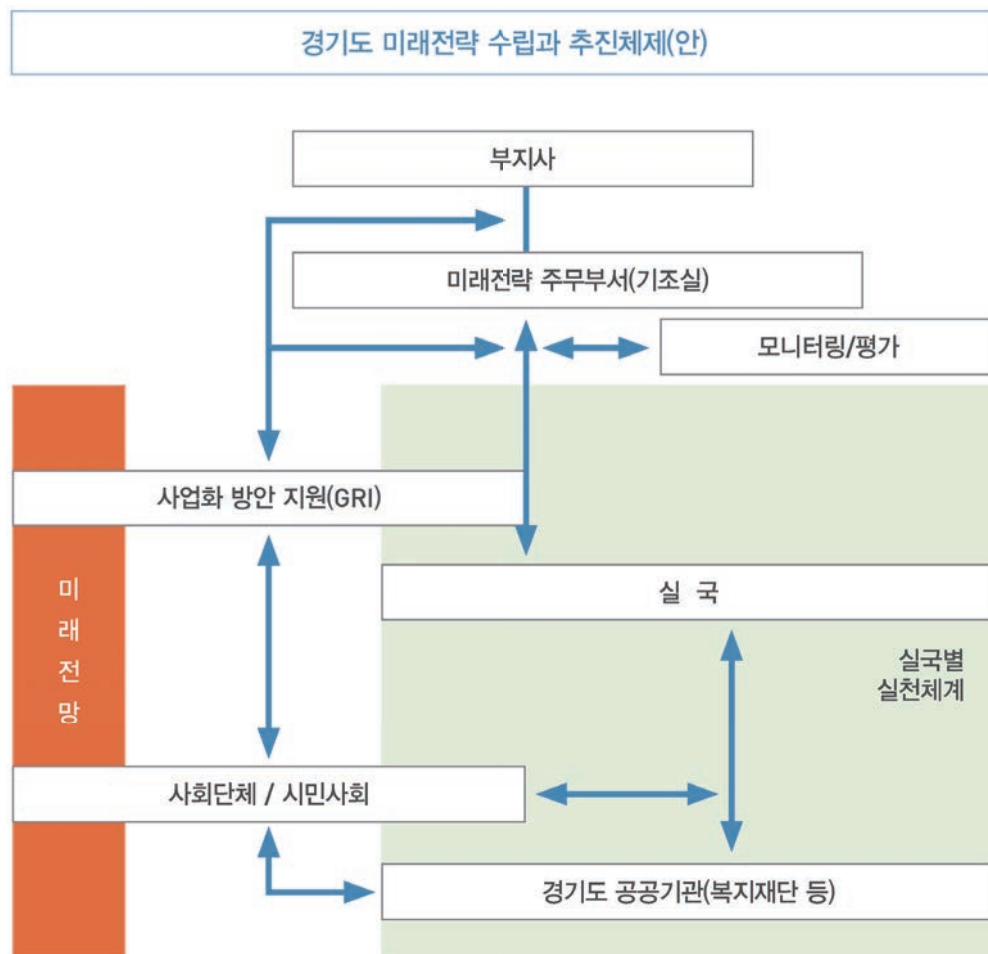
- 개별법에 의해 수립하는 실·국의 각종 법정계획과 행정계획 변경 시 비전 2040 내용을 반영

■ 중앙정부 및 인근 시·도와의 협력체제 구축

- 비전 2040의 아젠다 전략을 사업화하여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 관련부처와의 사전 협의 강화와 협력적 사업추진체제 구축
- 특히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와 장기 전략에 대한 논의 채널 마련
- 아젠다 별로 서울시, 인천시와의 협력체제 강화

■ 도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비전 실행 상황을 보고
- 실·국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시민사회단체(NGO)를 참여시킴



[그림 4-1-1] 미래전략 수립과 추진체제 구축 프레임

제2절 비전의 실행을 위한 조직 및 평가체제 구축

비전의 실행을 위한 조직체제 정비

- 비전 2040에 포함된 아젠다 전략 구상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국의 실행계획 수립 → 사업 또는 프로그램화 → 예산 반영 → 시책 및 사업 시행 → 결과 모니터링 → 평가의 실행프로세스를 구축
- 비전 실행에 관한 총괄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상시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지표에 의한 관리: 비전의 미래지표를 토대로 매년 달성할 달성지표를 사전 제시하고, 매년 운용방향과 기법을 개선하여 시행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적 모니터링: 총괄부서는 전년도 10월까지 연간 실행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회람하여, 협조를 요청

비전 실행의 성과관리체제 구축

- 성과관리는 조직의 임무를 제시한 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과정임
-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가지게 되며, 우리나라는 근무성적평정제, 목표관리제, 균형성과표(BSC), 자체평가, 다면평가제, 팀제 등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가지고 있음
 - 비전 2040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균형성과표(BSC), 자체평가, 다면평가, 성과상여금, 직무 성과계약제, 목표관리제, 근무성적평정제도 등 7가지 평가제도 대안들이 있음

비전 2040 관련 실·국 내 관련 계획의 조정

- 도내 부문별 계획, 지침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각종 법정 계획 수립 시 반영
- 도내 시·군의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로교통정비계획 등에 사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주문하고, 시·군 계획의 내용을 사전 조정
- 비전 2040과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상호수용’ 방식으로 추진하고, 실행은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제2장

추진 일정

 미래준비 아젠다

○ 미래준비 아젠다 12개 추진전략의 추진일정

- ‘GRDP N+1% 전략’에서 ‘1+5 Digital City’ 신성장산업 육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단기·중기에 집중적으로 완성하며, 마찬가지로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도 단기·중기적으로 마칩
-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Young 경기도’ 저출산 초고령사회 극복 전략도 단기·중기에 집중하여 추진 필요
- 환경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에너지 자립’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략도 단기·중기에 집중하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정, 부지사 등 행정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구축도 단기·중기에 집중하여 육성

아젠다 구분	추진기간			비고
	단기 2016~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지역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한 GRDP N+1% 전략				
‘1+5 Digital City’ 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				
‘스타트업 50-100’ 경기도 창업사회				
‘Young 경기도’ 저출산 초고령사회 극복				
‘경기순환철도’ 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				
‘Global 30’ 도내 5대 대도시의 경쟁력 제고 추진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을 통해 사회 통합의 행복공동체 형성				
‘경기 공동체’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 실현				
‘평생학습사회’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100세 시대’ 건강·장수도시				
‘에너지 자립’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하여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한반도 경제권’ 남북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구축				

경제 부문 총 12개 아젠다

- 민선6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업특화,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창업생태계, 경제민주화, 공정무역,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의 사업을 2025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함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지역기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형성은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인 경기도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추진함
- 스토리가 담긴 상권조성, 신뢰와 네트워크 기반 경제 거버넌스 구축,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 등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발돋움을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
- 이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을 선도하는 콘텐츠사업 육성, 균형발전, 중국과의 경제협력강화와 유라시아 개발 거점화 및 경제영토 확장 등 대외적인 성장 전략을 2040년까지 꾸준히 추진함

아젠다 구분	추진기간			비고
	단기 2016~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1-1] 지식산업 및 기술혁신 선도				
[1-1-1] '스마트 산업특화' 및 첨단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				
[1-1-2]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1-1-3] 글로벌 선도 콘텐츠사업 육성				
[1-1-4] '스토리가 담긴 상권' 조성				
[1-1-5] 농업의 6차 산업화				
[1-2]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1-2-1] 공유적 시장경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1-2-2] 지역기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형성				
[1-2-3] 지역 연계성 강화 및 균형 발전				
[1-2-4] 신뢰와 네트워크 기반 경제 거버넌스 구축				
[1-2-5] 글로벌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				
[1-3] 동북아 경제 거점화				
[1-3-1]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1-3-2] 유라시아 개발 거점화 및 경제영토 확장				

사회통합과 복지 부문 총 14개 아젠다

- 민선6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복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은 단기·중기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사회통합과 경기공동체 육성의 기반으로 다짐
- 갈등관리, 공동체 문화의 확산,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역량강화 등은 단기·중기에 집중 육성하고,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추진
- 2040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실현, 외국인 유입에 대한 대비, 지역통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과 복지 수준을 양적, 질적으로 높이는 전략 추진

아젠다 구분	추진기간			비고
	단기 2016~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2-1] 포용과 배려의 열린사회				
[2-1-1]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환경 제고				
[2-1-2] '100세 시대'에 따른 고령친화 환경 조성				
[2-1-3] 같음과 차이를 인정하는 양성평등 실현				
[2-1-4] 경기도 거주외국인 100만 명 시대 대비				
[2-1-5] 상생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2-1-6] 지역통합을 위한 경기도 정체성 확립				
[2-2] 지속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복지				
[2-2-1]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				
[2-2-2]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체제 구축				
[2-2-3]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2-2-4] 경기도 1인 가구 150만 명 시대 대응				
[2-2-5]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역량 강화				
[2-2-6] 경기도 고용복지 선순환체계 구축				
[2-3] 보건의료 체계 강화				
[2-3-1]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2-3-2] 광역거점 도립병원체제 구축				

교육·문화·관광 부문 총 12개 아젠다

- 교육 분야에 있어, 보육의 공공성강화, 포괄적 평생학습체계 구축, 인성교육 강화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추진
- 문화 분야에 있어, 생활 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농생대 부지를 활용한 예술창작허브 육성은 경기도 정체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단기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경기지역학은 단기적으로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육성하는 전략으로 추진
- 관광 분야에 있어,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 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과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조성은 단기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스마트관광 실현, 역사문화자원의 글로벌화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의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

아젠다 구분	추진기간			비고
	단기 2016~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3-1] 인간적 품위와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실현				
[3-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3-1-2] 미래형 학습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구축				
[3-1-3] 포괄적 평생학습체계 구축				
[3-1-4] 핵심역량과 비인지적 능력 향상을 돕는 인성교육 강화				
[3-1-5]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을 바탕으로 한 존중력 회복				
[3-2] 도민이 체감하고 주도하는 문화				
[3-2-1] 문화예술창작허브로서 경기도				
[3-2-2]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 문화·체육 테마파크 조성				
[3-2-3] 경기지역학 육성				
[3-3] 스마트 관광과 역사문화자원 글로벌화				
[3-3-1] 실버레저관광 등 수요자맞춤형 新관광생태계 조성				
[3-3-2] 감성서비스와 스마트관광 실현				
[3-3-3] 경기천년, 역사문화유산자원의 글로벌화				
[3-3-4] 문화도시 조성				

공간 부문 총 15개 아젠다

- 창조도시 인프라와 창조시범도시 조성, 사물인터넷(IoT) 시범특구, 100세 건강·장수시범도시 조성은 단기적으로 조성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발전·유지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전략 추진
- 통일미래도시 건설, 고령자가 생활하기 좋은 무장애도시 조성, 고령화시대 대응, 따복주택을 통한 주거걱정 제로사회 추진, 도시 디자인과 K-디자인 빌리지 조성등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보완·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추진전략 필요
- 경기도의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 형성,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도시재생과 중심도시 활성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아젠다 구분	추진기간			비고
	단기 2016~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4-1] 경쟁력 거점 개발과 창조도시 조성				
[4-1-1] 창조도시 인프라와 창조시범도시 조성				
[4-1-2] 경기과학기술도시 건설(사물인터넷(IOT) 시범특구)				
[4-1-3] 도시 중심성 강화를 통한 분산적 집중 공간구조의 형성				
[4-1-4] 미래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실험적 미래건축				
[4-1-5] 통일 미래도시 건설				
[4-2] 건강·장수·안전도시 기반 조성				
[4-2-1] 100세 건강·장수시범도시 조성				
[4-2-2] 고령자가 생활하기 좋은 무장애도시 조성				
[4-2-3] 여성친화적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4-2-4] 범죄예방형설계(CPTED) 의무화				
[4-2-5] 고령화시대 대응-낙후지역 활력 위한 동북부 특화발전				
[4-3] 생활도시·공공주거의 강화				
[4-3-1] 도시 디자인과 K-디자인 빌리지 조성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				
[4-3-2] 도시 재생과 중심도시 활성화				
[4-3-3] 따복주택을 통한 주거걱정 제로사회 추진				
[4-3-4]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체제 구축				
[4-3-5] 경기도 도시개발모델의 해외 공유				

교통 부문 총 11개 아젠다

- 굿모닝 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서비스 육성, 대중교통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순환철도망 구축, (가칭)경기도 이동편의공사 출범, 경기북부와 남부의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 등은 단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추진전략 필요
- 수도권 고속도로 사업 완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개인고속이동(PRT) 도입, 스마트워크 활성화, 물류서비스 혁신 등은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전략필요

아젠다 구분	추진기간			비고
	단기 2016~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5-1] 고속 교통서비스 제공				
[5-1-1]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5-1-2]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				
[5-1-3] 수도권 고속도로 사업 완성				
[5-2] 대중교통의 대전환				
[5-2-1] 대용량 대중교통의 리모델링				
[5-2-2]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개인고속이동(PRT) 도입				
[5-3] 이동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				
[5-3-1] (가칭)경기도 이동편의 공사 출범				
[5-3-2] 경기북부와 남부의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				
[5-3-3] 남북 교통 인프라 연계				
[5-4] 신 교통도입 선도				
[5-4-1] 공유교통 서비스 도입				
[5-4-2] 스마트워크 활성화				
[5-4-3] 소형 개인 이동수단 및 물류 서비스 혁신				

환경·에너지 부문 총 10개 아젠다

- 지역 간, 계층 간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에너지 자립 향상 및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략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한강하구, 팔당호, 임진강 등 하천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도 우선적으로 단기에 추진함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적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한 그린인프라 조성 및 물 관리, 환경분권화에 따른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강한 사회체제 구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아젠다 구분	추진기간			비고
	단기 2016~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6-1]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고루 누리는 환경복지사회				
[6-1-1] 지역 간, 계층 간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6-1-2]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적응능력 강화				
[6-1-3]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6-2]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가치 증진				
[6-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6-2-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6-2-3] 한강하구, 팔당호, 임진강 등 경기도의 독특한 하천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6-3]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3-1] 에너지 자립 향상 및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				
[6-3-2]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한 그린인프라 조성 및 물 관리				
[6-3-3] 환경분권화에 따른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6-3-4]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강한 사회체제 구축				

통일 부문 총 5개 아젠다

- 전면적인 통합 시나리오에 의하여, 단기적 관점에서 통일 수도권 건설을 추진하고,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에 의하여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특별지대’ 건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함
- DMZ평화공원 등을 구축하여, DMZ·임진강·서해안 3개축 발전은 단기적으로 집중하여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남북관계의 완화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와 통일공공외교 추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함

아젠다 구분	추진기간			비고
	단기 2016~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7-1] 전면적 통합 시나리오				
[7-1-1] 통일수도권 건설				
[7-2]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				
[7-2-1]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특별지대’ 건설				
[7-3] 통일시대 경기북부 공간 관리				
[7-3-1] DMZ·임진강·서해안 3개축 발전				
[7-3-2] 서울-동두천-원산축 및 금강산 연계 개발				
[7-4]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7-4-1] 남북교류와 통일공공외교 추진				

지방행정 부문 총 8개 아젠다

- 규모별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 특례확대를 통한 부지사 정수 확대, 연정을 통한 지역 내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재정위기관리 제도 개선, 중앙과 지방 간 행 재정 협의기제 구축은 단계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육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중앙과 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지방정부로서의 경기도의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아젠다 구분	추진기간			비고
	단기 2016~ 2020	중기 2021~ 2025	장기 2026~ 2040	
[8-1]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 강화				
[8-1-1]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구축				
[8-1-2] 규모별 대도시 및 광역자치단체 특례				
[8-1-3]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 체계 정비				
[8-2] 재원확충을 통한 재정기능 강화 전략				
[8-2-1] 중앙과 지방 기능 조정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				
[8-2-2]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보조금 확대				
[8-2-3] 재정위기관리 제도 개선				
[8-3] 중앙과 지방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전략				
[8-3-1] 중앙과 지방간 행 재정 협의기제 구축				
[8-3-2] 지역내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제3장

소요자원 추계

추계의 방식과 원칙

- 비전 2040의 개략적인 소요자원을 추계함으로써 비전의 실천에 따른 투입과 효과를 예측하고, 비전의 실천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다만, 비전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고, 정책 방향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구상까지만 진행하므로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계할 수는 없음
- 이에 따라 소요자원 추정은 단계별 목표와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이에 달성하기 위한 소요투자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추계함
- 성과지표는 목표로 하는 유사지역(선진국 대도시권 또는 서울시)의 현재 또는 장래 지표를 경기도가 달성하는 것을 준거로 삼고, 또 투자 소요액은 지표 달성을 위한 원단위 소요투자액으로 같음함
- 아울러 비전 2040에서 제시한 미래준비 아젠다와 부문별 아젠다 전략 중 예산사업에 한정하고, 성과지표가 나오는 아젠다에 한해서 소요자원을 추계함

소요자원 추계

- 총 소요자원 추계
 - 2025년까지의 민선6기 주요 도정사업의 투자로 기반구축 투자비 약 5조 4,862억 원, 기반구축 이후 10년간 22조 1,390억 원의 생산·운영효과 발생하여 총 27조 6,252억 원을 투자
 - OECD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는 비전 2040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〇〇〇조 원의 투자를 추진
- 소요자원의 분담
 - 국비, 도비, 시·군비 외에 민간자본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롭게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여 재정 절감과 사회적 부문의 역할을 강화

참여 연구진

연구총괄	연구책임			선임연구위원		이상대	
	연구총괄지원			연구위원		김병석	
				연구위원		정유선	
공동연구진							
	경제부문 부문책임	연구위원		김정훈			
		선임연구위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		문미성					
연구위원		신기동					
연구위원		이수행					
연구위원		성영조					
연구위원		김을식					
연구위원		민병길					
연구위원		배영임					
교통부문 부문책임	연구위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연구위원		김점산				
	연구위원		빈미영				
사회통합·복지부문 부문책임	연구위원		이병호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		최석현				
교육·문화·관광부문	연구위원		김성하				
	연구위원		이수진				
	비상임연구위원		이은정				
공간부문	선임연구위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		김흥식				
	선임연구위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		강식				
	연구위원		황금회				
	연구위원		봉인식				
	연구위원		김태경				
	연구위원		옥진아				

				연구위원	남지현	
환경부	문	부	문	연구위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이기영	
				연구위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김동영	
통일과 북부발전	부	문	문	연구위원	최용환	
				선임연구위원	김동성	
지방행정부	문	부	문	연구위원	이현우	
				선임연구위원	신원득	
				선임연구위원	송상훈	
				선임연구위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	박충훈	
공동연구진(외부위탁)				교육문화소통부		
서울대	학	교	부	연구위원	정창우	
				연구위원	이순형	
연세대	학	교		연구위원	김주환	
서울대	학	교		겸임교수	박영하	
고려대	학	교		겸임교수	신범석	
서울대	학	교		박사과정	김하연	
공동연구(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도	가	족	여	성	연구위원	전경숙
경기도	가	족	여	성	연구위원	최윤선
경기도	가	족	여	성	연구위원	정혜원
경기	복	지	재	단		김희연
경기	복	지	재	단		최조순
경기	문	화	재	단		김지욱
공동연구(원고 집필)						
한국	보	건	사	회	연구위원	오영호
경기	대	학	교		교수	하봉운
충북	대	학	교			성현곤
경기	대	학	교			강진갑
강원	대	학	교			지해명

상임자문위원										
총괄비전포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 병 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우 천 식				
	한국노동연구원					허 재 준				
	국토연구원					이 용 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 홍 렬				
	한국행정연구원					서 용 석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실	실	장	황성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재철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기획조정실	미래전략팀장				정덕채				
	기획조정실	주무관				김영애				

경기비전 2040 도민·사회단체참여단

강 상 섭	이 종 만	김 광 수	김 승 지	윤 장 용
구 성 진	임 성 아	김 기 홍	김 영 환	윤 준 현
권 경 패	임 희 철	김 민 승	김 재 영	이 근 호
권 영 일	장 애 숙	김 예 지	김 정 대	이 근 희
김 가 화	정 구 문	남 석 찬	김 종 욱	이 대 중
김 동 혁	정 기 중	문 종 오	김 태 진	이 부 윤
김 양 옥	정 후 교	박 상 아	김 태 호	이 석 환
김 영 설	정 흥 채	박 상 우	김 형 남	이 연 우
김 영 숙	조 규 만	박 서 우	김 혜 경	이 재 우
김 영 제	조 기 호	변 남 순	김 효 성	이 종 훈
김 원 주	조 미 향	신 남 균	김 희 병	이 준 희
김 재 희	조 향 원	원 기 석	남 상 효	이 하 림
김 정 욱	차 성 환	이 다 은	류 봉 열	임 재 만
김 종 안	차 윤 주	이 서 현	민 채 은	전 유 환
김 효 임	현 영 효	이 소 영	박 동 빈	정 은 영
남 경 완	황 선 정	이 슬 기	박 상 효	정 재 숙
박 계 태	구 재 강	이 윤 빈	박 재 순	정 창 욱
박 재 경	김 남 호	이 윤 재	박 진 흥	정 혜 인
배 문 정	김 상 훈	이 은 정	박 춘 보	정 혜 임
백 병 업	김 영 광	이 희	배 수 문	조 미 란
손 병 덕	김 희 용	임 병 호	백 광 현	조 성 일
송 은 희	안 영 란	임 수 현	서 은 진	조 아 라
신 동 순	이 강 수	정 연 주	손 기 용	조 철 호
안 형 균	이 명 래	정 재 현	송 윤 나	진 철 희
양 태 호	이 정 순	정 혜 인	송 재 형	차 승 업
엄 성 은	이 채 영	조 명 숙	송 채 화	최 민 경
유 석 윤	임 시 윤	최 서 온	안 수 현	최 유 각
유 애 형	정 성 원	한 덕 호	안 혜 영	최 재 훈
이 경 호	정 인 경	한 재 훈	양 광 선	한 규 희
이 몽 덕	한 은 자	강 현 모	양 현 준	한 상 철
이 영 신	김 명 숙	권 윤 정	오 석 영	한 종 갑
이 영 애	강 태 준	김 경 환	오 영 레	한 준 희
이 영 중	고 대 영	김 민 호	유 석 영	홍 영 표
이 옥 란	김 경 호	김 성 훈	윤 유 림	황 서 연
이 정 한				

[경기비전2040]도민참여단에 참여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 담대한 비전

경 기 비 전

2040

발 간 | 경기도청

연 구 | 경기연구원

디자인 | 아이콘커뮤니케이션

인 쇄 | 디자인 펌킨

